StPO

독일 형사소송법

발간사

법무부는 280만명에 이르는 재외국민에게 해당국의 형사법 번역 자료를 제공하여 범죄 처벌 규정, 수사 및 재판 절차 등 실생활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외국형사법을 번역, 발간하고 이를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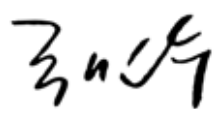
그리하여, 2007년부터 지금까지 다수의 재외국민이 거주하는 중국, 일본, 프랑스 형법 및 형사소송법 번역을 완료하였고, 이번에는 독일 형사소송법을 번역하여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독일 형사소송법은 직권주의 소송구조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보조기소, 배상명령 등 피해자의 소송참가와 피해회복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피의자의 인권보호와 피해자의 권리보호 이념을 조화롭게 구현하고자 하는 독일 형사소송법을 번역함으로써 독일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의 실생활에서만이 아니라, 선진 형사사법제도 도입을 위한 우리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시간을 할애하여 이번 번역 작업에 임해주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배종대 교수님과 윤재왕 교수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자료집 발간을 위해 노력해 주신 법무부 형사법제과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2012. 6.

법무부 검찰국장 

목차

서 문 **독일 형사소송법 개관** · 1

본 문 **독일 형사소송법** · 13

제1편 **총 칙** · 15

제1편 총 칙 ····· 15
제1장 법원의 사물관할 ····· 15
제2장 토지관할 ····· 16
제3장 법관의 제척과 기피 ····· 20
제4장 재판 및 그 고지 ····· 24
제5장 기간 및 실기의 회복 ····· 28
제6장 증 인 ····· 30
제7장 감정인과 검증 ····· 43
제8장 압수, 전신전화의 검열, 데이터 비교조사를 통한 수사,
기술수단의 투입, 비공개수사관의 투입, 수색 ····· 57
제9장 구속 및 일시 체포 ····· 103
제9장a 형사소추 및 형벌집행을 보장하기 위한 기타 처분 ·· 124
제9장b 일시적 직업금지 ····· 127
제10장 피의자신문 ····· 127
제11장 변 호 ····· 129

제2편 제1심 · 142

제1장 공 소 ····· 142
제2장 공소의 준비 ····· 153
제3장 (삭 제) ····· 172
제4장 공판절차개시에 관한 재판 ····· 172
제5장 공판의 준비 ····· 177
제6장 공 판 ····· 183
제7장 유보부 내지 사후적 보호감호명령에 대한 판결 ····· 210
제8장 부재자에 대한 절차 ····· 212

제3편 상 소 · 215

제1장 총 칙 ····· 215
제2장 항 고 ····· 216
제3장 항 소 ····· 220
제4장 상 고 ····· 227

제4편 확정판결에 의해 종결된 절차에 대한 재심 · 237

제5편 피해자의 소송참가 · 244

제1장 사인기소 ····· 244
제2장 보조기소 ····· 252
제3장 피해자에 대한 배상 ····· 258
제4장 피해자의 여타의 권한 ····· 262

제6편 **특별절차** · 267

제1장 약식명령절차 ····· 267
제2장 보안처분절차 ····· 271
제2장a 신속절차 ····· 273
제3장 몰수 및 재산압수절차 ····· 275
제4장 법인 및 단체에 대한 과태료확정절차 ····· 283

제7편 **형집행 및 소송비용** · 285

제1장 형집행 ····· 285
제2장 소송비용 ····· 305

제8편 **절차 전반에 요구되는 목적을 위한 정보의 교부 및 기록열람과 기타 정보이용, 데이터에 대한 규정들, 개별 주를 포괄하는 검사의 소송등록부** · 315

제1장 절차 전반에 요구되는 목적을 위한 정보의 교부 및 기록열람과 기타 정보이용 ····· 315
제2장 데이터에 대한 규정 ····· 323
제3장 개별 주를 포괄하는 검사의 소송등록부 ····· 331

부 록 **독일 형사소송법 원문** · 335

독일 형사소송법 개관

독일 형사소송법 개관

「형법전(Strafgesetzbuch)」과 함께 독일 형법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형사소송법(Strafprozeßordnung)」은 형법전이 발효되고 약 6년이 지난 1887년 2월 1일 발효되었다. 피의자와 피고인의 권리보장을 기치로 내세운 형사소송법은 이념사적으로 계몽철학과 자유주의의 산물이었다. 전통적인 규문주의절차(Inquitionsprozeß)는 비밀주의와 서면주의를 기본으로 했기 때문에, 형사절차에 대한 공적 통제가 불가능했고 법관이 형사소추와 재판 모두를 한 손에 장악하여 법관의 자의가 횡행했을 뿐만 아니라, 행정권력이 독자적인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도 인정되어 피고인은 국가의 자의와 폭력에 대항할 수 있는 어떠한 권리도 갖지 못한 존재였다. 인간의 근원적 자유와 기본적 권리를 이념으로 표방하는 계몽의 정신이 시대를 압도하면서 국가권력의 절대적 우위를 전제하는 전통적인 형사절차는 피고인의 권리보장을 우선시하고 국가권력을 통제하기 위한 새로운 형사절차로 대체된다. 이 점에서 독일 「형사소송법」은 법치국가가 이룩해 낸 중요한 성과 가운데 하나이다. 즉, 효율적인 형사소추를 이유로 피고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노력은 전체 형사소송법의 근간을 이루고, 검찰과 법원 사이의 권한을 분배하는 세세한 규정들이나 피고인의 소송상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반 규정들은 모두 그러한 노력의 산물이다.

이러한 「형사소송법」은 1933년 나치가 집권하면서 최대의 시련을 맞이한다. 형사소송법 제정 직후부터 이미 조금씩 붕괴되기 시작한 법치국가 이념은 나치 폭력정권에 들어서면서 개별 규정들에 대한 개정을 통해 피고인을 다시 소송의 단순한 객체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그 때문에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의 입법자로서는 1933년 이전의 법적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 나치 형사소송법을 전면적으로 수정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특히 법적 청문권, 이중처벌금지 등과 같은 몇몇 중요한 형사소송상의 원칙들을 1949년에 제정된 「기본법(Grundgesetz)」에 명시함으로써 그 헌법적 의미까지 확인하고, "헌법의 지진계"로서의 형사소송법이 전체 법질서에서 갖는 중요성을 강조하게 되었다. 더 나아가 헌법재판제도의 도입과 함께 모든 권리구제수단을 행사한 이후에도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피고인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1950년 10월 1일에 「형사소송법」 전면개정의 법적 기초였던 이른바 「통일화법률(Vereineheitlichungsgesetz)」은 형사소송과 관련된 기본법규정을 구체화하여, 예컨대 구속(「형사소송법」 제114조 이하)과 체포(제127조 이하)에 대한 법관의 심사를 면밀하게 규율하여, 자유박탈과 관련해서는 오로지 법관만이 결정권을 갖는다는 헌법원칙을 실현하도록 했다. 또한 제136조a에는 가혹행위, 혹사, 신체침해, 투약, 학대, 기망 또는 최면 등 금지되는 신문방법을 명시적으로 규율하여 피의자신문과 관련해서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했다. 이러한 법률개정은 판례, 특히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통해 더욱 구체화되었고 또한 1958년에는 「유럽인권협약」에 가입, 비준함으로써 이 조약에 규정된 형사소송상의 기본적 인권보장(제2조 내지 제8조)도 구속력을 갖게 되어 국제적 차원에서도 형사소송법의 기본이념이 확대, 보장되는 결과를 낳았다.

「형사사송법」은 1964년부터 지속적인 개정을 통해 변화를 겪게 된다. 특히 1964년 12월 19일의 형사소송개정법률은 미결구금(제112조 내지 제126조a)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 기록열람권 및 피의자와의 교통권 확대를 통한 변호인의 지위강화(제147조, 제148조) 그리고 피의자의 묵비권에 대한 고지의무의 도입(제136조, 제164조a, 제243조 제3항) 등을 통해 형사소송법이

피의자/피고인의 권리보장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에 반해 1968년 6월 25일에 이루어진 제8차 형법개정에 따라 국사범에 대해서는 기소법정주의를 배제(현행 형사소송법 제153조c)하고 통신감청(제100조a, 제100조b)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게 되었다(1968년 10월 1일 발효). 이와 함께 국사범에 대해서는 상소를 허용하지 않았던 과거의 문제점을 제거하기 위해 1969년 9월 8일의 개정을 통해 국사범에 대한 제2심 재판이 가능하도록 했다. 1972년에는 제112조a를 신설하여 재범의 위험이라는 구속사유를 몇몇 폭력범죄와 재산범죄 그리고 공공에 위해가 되는 범죄에까지 확대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 「형사소송법」에서 이루어진 가장 커다란 변화는 1974년에 「신 형법총칙에 대한 시행법(EGStGB; 1974sus 3월 2일)」, 「형사절차법개정을 위한 제1차 법률(1. StVRG; 1974년 12월 9일)」, 「제1차 법률보충법률(1974년 12월 20일)」 등 세 개의 법률을 통해 이루어졌고, 해당 법률들은 모두 1975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시행법」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형사소송법이 새로운 실체형법에 부합하여 개정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압수 또는 몰수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 및 목적에 대한 보전(형사소송법 제111조b 이하), 경미범죄에 대한 기소중지 범위의 확대(제153조a), 불출석재판을 증거보전절차에만 한정하여 피고인 불출석상태의 공판절차의 배제(제285조 이하) 등이 그 중요한 내용들이다. 「제1차법률」은 무엇보다 신속한 형사절차를 위하여 특히 법원의 사전수사절차 및 검찰의 종결청문과 종결신문을 폐지하고, 피의자, 증인, 감정인으로 하여금 검찰의 소환에 응할 의무를 부과하게 되었다(제161조a, 제163조a). 이밖에도 법관의 신문에 출석할 권리를 확대(제168조c)하고, 재심절차에서 의무적으로 변호인을 선임하도록 했으며, 중죄법원(Schwurgericht)을 지방법원에 상설하도록 했고, 배심법관의 수를 기존의 6인에서 2인으로 축소했다. 「보충

법률」은 피의자/피고인과의 공모혐의가 있거나 미결구금시설에 있는 피의자/피고인에 대한 방문을 중범죄 또는 국가안전의 위해를 목적으로 남용할 소지가 있는 변호인을 절차에서 배제하도록 규정했다(제138조a 내지 제138조d). 또한 피의자의 변호인 수를 최고 3인으로 제한하고, 1인의 변호인이 다수의 피의자를 변호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신속한 절차를 위한 조치를 강화했다.

1975년에서 1978년 사이에도 중요한 영역에서 개정이 이루어졌다. 1975년에는 언론인의 증언거부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개정을 통해 소송법상 정보출처를 보호하는 규정이 충분하지 않았던 문제점을 해소하게 되었다(제53조 제1항 5호, 제97조 제5항, 제98조 제1항, 제111조m, 제111조n). 하지만 1976년부터는 독일 적군파(RAF)의 테러리즘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에서 피고인보장이라는 기존 형사소송법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법률개정이 여러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1976년 8월 18일의 법률개정을 통해 구속수사의 범위를 확대(제112조 제3항)하고, 테러리스트 재판에서 변호인과 피고인 사이의 교신을 법관이 통제할 수 있도록 했으며(제148조 제2항), 변호인을 배제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더욱 세분화된 규율(제138조a 제3항, 제138조c 제5항)을 갖게 되었다. 또한 1978년 4월 14일의 이른바 「반테러법」(공식명칭은 「형사소송법개정법률」)은 테러활동 수사를 위해 주거수색의 범위를 확대(제103조)하고, 테러범죄 수사와 관련된 검문소의 설치(제111조) 및 신원확인(제163조b, 제163조c)을 새롭게 규정했으며, 변호인과 의뢰인이 대화할 때 차단막을 설치하는 것을 허용(제148조 제2항 3문)하고, 변호인배제와 관련하여 더욱 섬세하게 규정(제138조a 이하)하게 되었다. 이 시기의 형사소송법개정은 1978년 10월 5일 제정되어 이듬해 1월 1일부터 발효한 「형사소송법개정법률」로서 형사절차의 신속화를 목적으로 삼았던 「제1차 법률」의 연장선상에서 기피신청의

공판중지력 배제(제29조 제2항), 기소편의주의적 요소의 확대(제154조, 제154조a), 조서의 간소화(제168조, 제168조a) 등을 특징으로 했다.

그 이후에도 형사소송법과 관련된 입법자의 활동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는데 1980년에는 소송비용부조제도를 개정했고, 1987년 1월 1일부터는 정치적으로 논란이 많았던 "저인망식수사(Schleppennetzfahndung)"를 명시적으로 허용하게 되었고(제163조d), 「형사소송에서 피해자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제1차 법률」을 통해 1987년 4월 1일부터는 보조기소와 민형사병합절차제도를 확대하고, 피해자의 권한에 대한 제406조d 이하의 규정들을 별도의 장으로 편성하게 되었다.

1991년의 독일통일은 지역관할의 확대와 함께 형사소송법과 법원조직법에 관련된 여러 규정들이 통일조약에 각주의 형태로 명시되면서 구 동독지역에도 「형사소송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조율과정을 거치도록 했다. 그리하여 1992년 6월 26일의 개정법률은 독일연방공화국에 새로 가입한 구동독지역의 사법시스템의 수립과 조율을 규정했다.

1990년대 초반에는 마약범과 조직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이 빈번하게 이루어졌다. 먼저 1992년 7월 15일의 「위험한 마약거래 및 기타 조직범죄 퇴치를 위한 법률」에 따라 위협을 받고 있는 증인에 대한 보호(제68조), 데이터 비교조사를 통한 수사의 허용(제98조a 내지 제98조c), 감청수사기법의 확대(제100조c, 제100조d) 및 관찰을 위한 수배의 허용(제163조e)이 형사소송법에 정착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1992년 7월 23일의 법률개정을 통해 국가가 운영하는 마약중독자 상담소의 상담원에게 증언거부권을 인정하게 되었다(제53조 제1항 3호b). 다른 한편 사법부의 업무부담 완화책도 이 시기 형사소송법개정의 뚜렷한 특징이다. 1993년 1월 11일의 개정법률은 특히 검사의 기소중지권한을 확대하고(제153조 제1항 제2문, 제153조a 제1항 제1문), 경미한 벌금형선고에 대한

항소가능성을 제한했으며(제313조), 1년 이하의 집행유예의 경우에도 약식명령이 가능(제407조 제2항)하도록 했다. 1994년 10월 28일의 「범죄퇴치법」은 구속의 범위를 중상해죄와 중방화죄에까지 확대(제112조 제3항)하고, 강력범죄와 조직범죄와 관련하여 절차의 신속화와 사법부의 부담경감을 위해 여러 조항(예컨대 제420조, 제411조 제2항, 제474조 이하)을 개정했다.

1997년과 1998년에도 입법자는 활발한 입법활동을 통해 크게 네 가지 측면에서 「형사소송법」에 수정을 가했다. 먼저 1997년 3월 17일의 「형사소송법개정법률」을 통해 행위자확인을 위한 분자유전학적 수사를 허용하는 법적 기초(제81조e, 제81조f)를 마련했으며, 제81조a와 제81조c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전 또는 압수한 범죄흔적에 대한 DNA분석을 허용하게 되었다. 둘째, 1997년 7월 17일의 개정법률을 통해 이른바 "공판을 위한 구속"(제127조b)을 도입하여 재판의 신속화를 도모했다. 셋째, 1997년 11월 14일의 개정법률은 위협을 받고 있는 증인과 청소년증인에 대해서는 공판 외에서 녹화를 통해 증인신문이 가능할 수 있도록 했으며(제58조a, 제168조e, 제247조a, 제225조a), 증인보호를 위해 특정한 경우에는 국가가 증인을 보조하는 변호사의 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했다(제68조b, 제397조a, 제406조b). 넷째, 1998년 5월 4일에 제정된 「조직범죄퇴치의 개선을 위한 법률」에 의거하여 개인의 사적 영역을 깊숙이 침해하는 수사기법인 "주거에 대한 감청"의 범위를 상당히 확대(제100조c)하게 되었다.

1999년의 형사소송법 개정은 무엇보다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화해나 손해의 원상회복이 소송법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현저하게 확대하면서(제155조a, 제155조b), 이를 담당하는 별도의 기관을 설치하여 이 기관이 관련된 신상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 기초를 마련했다. 2000년에도 「형사소송법」에 중대한 개혁이 이루어지는데, 예컨대 "지명수배"와 관련하여 제131조 내지 131조c를 별도의 편으로 구성하여 공개수사의 요건을

과거에 비해 훨씬 더 완화했으며, 기록열람권 제도의 개선(제147조 제5항, 제7항)을 도모하고 장기간에 걸친 감시 제도를 신설(제163조f)했으며 제8장 서두에 두 개의 편을 신설하여 소송 전반에 걸친 목적을 위한 정보의 이용 및 데이터규율에 관해 상세히 규정하게 되었다.

2001년과 2002년에 걸쳐서도 여러 가지 개정이 이루어졌다. 첫째, 2001년 2월 16일에 제정된 새로운 「사실혼관계법」에 근거하여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도록 해당조문(특히 증언거부권에 관한 제52조 제1항 2호a)을 개정했다. 둘째, 2001년 12월 20일의 개정법률에 따라 일단 3년의 한시기간 동안 전화나 인터넷을 통한 교신데이터에 대한 정보제공을 규율하는 조항을 신설했다(제100조g, 제100조h). 2002년 2월 15일의 개정법률은 언론의 증언거부권과 압수배제범위를 확대, 구체화했다(제53조 제1항, 제2항, 제97조 제5항). 넷째, 2002년 6월 26일의 「국제형법전 도입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형사소송법」의 여러 조항에 국제형법에 관련된 문구가 추가되고, 제153조f를 신설하여 국제형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독일법에 따른 형사소추가능성을 배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다섯째, 2002년 8월 6일의 개정법률에 따라 중대한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 이동통신 단말기의 위치를 추적하는 기술의 이용을 허용하게 되었다(제100조i). 여섯째, 2002년 「형법」에 보호감호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2002년 8월 21일의 개정법률을 통해 이에 상응하는 형사소송법 차원의 개정이 이루어졌다(제275조a).

2004년에는 헌법재판소가 기존의 “주거감청”에 관한 법률규정을 헌법불합치로 선고하고, 입법자에게 늦어도 2005년 6월 30일까지 헌법에 합치하는 새로운 규정을 만들도록 과제를 부여했다. 2004년 6월 24일에 제정된 「피해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개정법률」은 피해자의 지위와 권리를 개선하기 위해 「형사소송법」의 23개의 조항이 개정되는 결과를

낳았다. 또한 2004년 7월 1일에 제정된 「사법현대화를 위한 제1차 법률」도 형사소송법에 커다란 변화를 불러일으켰는데, 예를 들어 증인선서의 제한(제59조), 공판중지 가능성의 확대(제229조), 약식명령절차의 간소화(제411조 제1항)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05년에는 전자문서전달 시스템과 관련된 제41조a의 신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주거감청"의 전면적 개정(제100조c 내지 제100조f), DNA 분석의 허용을 간소화하고 이를 확대(제81조f 내지 제81조h)하는 「형사소송법」개정이 이루어졌다. 2006년에도 세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개정이 행해졌는데, 범죄행위로 인해 상실된 재산을 피해자가 더 쉽게 반환받을 수 있도록 제111조b 내지 제111조l을 개정했고, 중앙검찰청의 소송등록부를 연방사법기관이 담당하도록 했으며(제492조 제1항), 「사법현대화를 위한 제2차 법률」(2006년 12월 22일)에 근거하여 몇 가지 측면에서 법률을 개정하게 되었다.

2007년에는 모두 네 차례에 걸쳐 「형사소송법」개정이 행해졌다. 「스토킹의 가벌성에 관한 법률」(2007년 3월 23일)과 「변호사단체의 자치 강화를 위한 법률」(2007년 3월 27일)에 따른 자구수정 이외에도 「행장감독 개정과 사후적 보호감호의 개정을 위한 법률」(2007년 4월 13일)은 피해자의 정보권을 확대(제406조d)하는 결과를 낳았고, 보안처분 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2007년 7월 16일의 법률은 제126조a, 제246조a, 제358조 및 제463조의 개정을 불러일으켰다.

2008년에 제100조a, 제255조 및 제275조에 대한 소폭의 개정이 이루어진 이후, 2009년 6월과 7월에 대폭적인 개정이 행해졌다. 2009년 6월 26일에는 연방의회 또는 주의회 의원에 대한 압수금지 범위의 확대(제97조 제3항, 제4항)와 함께, 미결구금과 관련된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법률개정(제114조a 내지 114조e, 제116조b, 제119조, 제119조a, 제147조 제2항, 제7항,

제148조 제2항), 「형사소송에서 피해자와 증인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법률」(2009년 7월 29일)을 통한 증인신문 관련규정의 개정(제395조, 제397조, 제397조a) 및 보조기소(제395조, 제397조, 제397조a)와 피해자 권리에 관한 규정(제406조e 내지 제406조h)에 커다란 변화가 이루어졌다. 2009년 7월 29일에 제정된 「형사소송상의 합의를 규율하기 위한 법률」은 기존의 실무에서 법률에 따른 법형성으로 인정되어 왔지만, 이론과 실무에서 논란이 많았던 소송상의 합의를 법률로 명문화하게 되었다. 2010년 12월 22일의 개정을 통해 보호감호법의 개정에 따른 보호감호의 유보(제140조, 제141조)에 대한 소폭의 개정이 이루어졌고, 보안관찰에 따른 지시사항의 이행과 관련된 새로운 기술적 처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 처리의 문제(제463조a)에 대해 상세히 규율하게 되었으며, 증언거부권자에 대한 수사절차상의 보호범위를 확대했다(제160조a).

독일 형사소송법

제 1 편 총 칙

제 1 장 법원의 사물관할

제1조(관할) 법원의 사물관할은 법원조직법으로 정한다.

제2조(관련형사사건) ①각각 상이한 심급에 귀속될 수 있는 관련형사사건은 병합하여 상위의 관할권을 가지는 재판부에 계속시킬 수 있다. 법원조직법 제74조 제2항 및 제74조a와 제74조c에 의하여 각각 형사합의부의 특별 관할에 속하는 관련형사사건은 법원조직법 제74조e에 따라 우선권을 갖고 있는 형사합의부에 병합하여 계속시킬 수 있다.
②전항의 법원은 합목적성이 있을 때에는 결정을 통해 병합된 형사사건의 분리를 명할 수 있다.

제3조(관련성의 개념) 1인이 다수의 죄를 범한 혐의가 있는 경우 또는 하나의 행위를 중심으로 다수인이 정범, 공범관계 혹은 범죄비호, 범인은닉, 장물취득의 관계에 있다는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성을 인정한다.

제4조(절차개시 이후의 병합 또는 분리) ①공판절차가 개시된 이후에도 법원은 검사나 피고인의 신청에 기하여 또는 직권으로 결정을 통해 관련 형사사건을 병합하거나 병합된 형사사건을 분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결정은 병합 또는 분리 대상이 되는 사건이 계속된 법원들이

속하는 지역의 상급법원이 관할한다. 그러한 상급법원이 존재하지 않을 때에는 공통의 상급법원이 결정한다.

제5조(병합의 지속) 관련사건의 병합이 지속되는 동안에는 상급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형사사건이 절차의 기준이 된다.

제6조(사물관할의 직권심사) 법원은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직권으로 사물관할을 심사하여야 한다.

제6조a(특별형사합의부의 관할) 법원조직법 규정(제74조 제2항, 제74조a, 제74조c)에 따른 특별형사합의부의 관할은 공판절차 개시 이전까지 법원이 직권으로 심사한다. 공판절차개시 이후에는 피고인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만 법원은 그 관할위반을 심사할 수 있다. 피고인은 공판절차에서 피고인 신문이 개시되기 전까지만 이의를 주장할 수 있다.

제 2 장 토지관할

제7조(범행지) ①토지관할은 범행이 저질러진 지역의 법원에 귀속한다.

②본 연방법의 효력범위 내에서 발간된 출판물의 내용을 통해 범행이 실현된 경우에는, 당해 출판물이 발간된 지역의 법원만을 제1항에서 말하는 관할법원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모욕죄와 관련하여 사인 기소를 통해 형사소추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출판물이 유포되었다면 그 유포지역의 법원도 관할법원이 된다.

제8조(주소-거소) ①공소제기 당시의 피고인의 주소지 법원에도 토지관할이 귀속된다.

②본 연방법의 효력범위 내에 피고인의 주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토지관할은 거소에 의하여 결정되며, 이러한 거소를 알 수 없다면 최후 주소지에 따라 결정한다.

제9조(체포지) 피의자가 체포된 지역의 법원에도 토지관할이 귀속된다.

제10조(독일 선박 또는 항공기에서의 범죄) ①본 법의 효력범위 바깥일지라도 연방기를 게양할 권한이 있는 선박에서 범행이 저질러졌다면, 당해 선박의 선적항이 소재한 지역의 법원 또는 범행 후 최초로 도착한, 본 법의 효력범위 내에 있는 항구가 소재한 지역의 법원이 관할법원이 된다.

②제1항은 독일연방공화국 국적표식을 할 권한이 있는 항공기에 대해서도 준용한다.

제10조a(해상범죄의 토지관할) 본 법의 효력범위 바깥의 해상에서 저질러진 범행에 대해 토지관할이 존재하지 않는 때에는 함부르크가 토지관할이 된다. 즉, 관할 지방법원은 함부르크 지방법원이다.

제11조(외국 근무 공무원) ①치외법권을 가지는 독일인 및 연방 또는 개별 주의 공무원으로서 해외에서 근무하는 자가 저지른 범행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과거에 가졌던 주소를 기준으로 토지관할을 정한다. 만일 국내 주소지가 없었다면, 연방정부 소재지를 그 주소로 간주한다.

②명예영사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12조(수개의 토지관할) ①제7조 내지 제11조 규정에 의한 수개의 관할 법원 중 최초로 심리를 개시한 법원에 우선권이 있다.
②그러나 공통의 상급법원이 관할법원들 가운데 우선권을 갖지 않는 다른 법원에게 심리와 결정을 이양할 수 있다.

제13조(관련사건의 토지관할) ①제7조 내지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각기 상이한 법원의 관할에 귀속되는 관련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관련사건 가운데 어느 하나에 대한 관할을 갖는 모든 법원에 토지관할이 귀속된다.
②수개의 관련 형사사건이 각각 서로 다른 법원에 계속되었다면, 다수의 법원들은 검사가 제기한 신청들 가운데 어느 하나의 신청에 상응하는 합의를 통해 관련 형사사건 전체 또는 일부를 어느 한 법원의 관할로 병합할 수 있다. 그러한 약정이 성립하지 못한 경우에는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기하여 공통 상급법원이 병합 여부 및 병합에 따른 관할법원에 관하여 결정을 내린다.
③병합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13조a(연방법원에 의한 관할지정) 본 법의 효력범위 내에 관할법원이 존재하지 않거나,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방법원이 관할법원을 지정한다.

제14조(관할의 경합) 수개의 법원 사이에 관할의 경합이 있는 때에는 공통 상급법원이 심리와 결정을 내려야 할 법원을 지정한다.

제15조(관할법원의 장애) 관할법원이 특정한 사건에서 법적 또는 사실상의 이유로 법관직을 수행하는 데에 장애가 있는 경우 혹은 특정 법원에서 공판을 진행하는 것이 공공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직근상급법원은 다른 지역의 동급법원에게 당해 사건의 심리와 결정을 이양하도록 해야 한다.

제16조(토지관할에 대한 심사) 법원은 공판절차의 개시 이전까지 토지관할을 직권으로 심사한다. 공판절차 개시 이후에는 법원은 피고인이 이의를 제기할 때에만 관할위반을 선언할 수 있다. 피고인은 공판절차에서 피고인 신문이 개시되기 전까지만 관할위반에 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17조 및 **제18조(삭제)**

제19조(소극적 관할경합) 어느 한 법원에만 관할이 귀속되는 사건에서 수개의 법원 모두가 더 이상 불복할 수 없는 결정에 의해 관할 없음을 선언한 때에는 공통의 상급법원이 관할법원을 지정한다.

제20조(관할권 없는 법원의 조사) 관할권 없는 법원이 수행한 개개의 조사활동은 그것이 관할권 없는 법원에 의해 수행되었다는 이유로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제21조(긴급관할) 조사를 지체해서는 안 될 경우에는 관할권 없는 법원 일지라도 자신의 지역 내에서 수행되어야 할 조사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 3 장 법관의 제척과 기피

제22조(법관의 제척) 법관은 다음의 경우 법률에 의하여 법관으로서의 직무수행에서 제척된다.

1. 법관이 피해자인 경우
2. 법관이 피의자나 피해자의 혼인배우자, 사실혼배우자, 후견인, 보호자이거나 또는 그러한 관계에 있었던 경우
3. 법관이 피의자나 피해자와 직계 혈족 또는 인척이거나, 3촌까지의 방계혈족 또는 2촌까지의 인척이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었던 경우
4. 법관이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공무원, 경찰공무원, 피해자의 변호사 또는 변호인으로 활동하였던 경우
5. 법관이 증인 또는 감정인으로서 사건과 관련된 신문을 받은 경우

제23조(전심절차에의 관여로 인한 제척) ①상소제기를 통해 불복된 재판에 관여한 법관은 법률에 의하여 상급심재판에서 제척된다.

②재심이 청구된 재판에 관여한 법관은 법률에 의하여 재심재판에서 제척된다. 재심을 통해 불복된 재판을 상급심에서 다루는 경우 불복의 근거가 된 하급심재판에 관여한 법관도 제척된다. 제1문과 제2문은 재심절차의 준비를 위한 재판에 관여한 법관에 대해서도 준용된다.

제24조(법관의 기피) ①법관이 법률에 의하여 직무수행에서 제척된 경우뿐만 아니라, 불공정한 재판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기피될 수 있다.

②법관의 중립성에 대한 불신을 정당화하기에 적절한 근거가 존재한다면, 그 법관은 불공정 재판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기피될 수 있다.
③검사, 사인소추권자 및 피고인에게 기피신청권이 있다. 기피신청권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재판에 관여하게 된 법관의 성명을 통보해야 한다.

제25조(기피시한) ①불공정한 재판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사실심 법관을 기피신청하는 것은 피고인에 대한 첫 번째 인정신문 전까지 그리고 항소심이나 상고심 공판에서는 심리보고인의 보고가 시작되기 전까지만 허용된다. 모든 기피사유는 동시에 제출되어야 한다.
②이 시한 이후에는 다음의 경우에만 법관의 기피신청이 가능하다.
1. 기피시한 이후에 기피사유가 발생했거나 또는 기피시한 이후에 기피권자에게 기피사유가 알려진 경우
2. 기피가 즉시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 경우 피고인의 최후진술 이후에는 기피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다.

제26조(기피신청) ①기피신청은 해당 법관이 소속된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은 법원사무국에서 조서작성을 통해 그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제257조a는 적용하지 않는다.
②신청인은 기피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25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시한 준수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도 소명하여야 한다. 선서는 소명수단에서 배제된다. 소명을 위해서는 기피된 법관이 직무상 행한 발언을 원용할 수 있다.
③기피된 법관은 기피사유에 대해 직무상 의견을 개진하여야 한다.

제26조a(기피신청기각) ①법원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피신청을 기각한다.

1. 기피신청이 시한을 초과한 경우
2. 기피사유 또는 소명수단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또는
3. 기피를 수단으로 절차를 지연시키거나 절차와 관계없는 목적을 추구하려는 것이 명백한 경우

②법원은 기피신청 대상인 법관을 배제하지 않고서도 제1항에 따른 기각을 결정할 수 있다. 제1항 3호의 경우에는 전원일치 결정과 함께 기각사유를 야기한 사정을 제시해야 한다. 수명법관, 수탁판사, 소송준비절차를 담당한 법관 또는 형사단독판사가 기피된 경우에는 해당 법관 스스로 기피신청의 기각 여부를 결정한다.

제27조(기피신청에 관한 결정) ①기피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기각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기피신청에 대해서는 기피된 법관이 속한 법원이 기피된 법관의 관여 없이 결정한다.

②사실심 형사합의부를 구성하는 판사에 대해 기피가 신청된 경우에는 공판 이외의 결정을 담당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재판부구성에 따른 형사합의부가 기피신청에 대해 재판한다.

③지방법원 법관이 기피된 경우에는 당해 법원의 다른 법관이 재판한다. 기피된 법관이 기피신청을 이유 있다고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④기피된 판사의 탈퇴로 인하여 재판을 위해 소집된 재판부가 결정능력을 상실한 때에는 직근상급법원이 결정한다.

제28조(상소) ①기피가 이유 있다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②기피가 허용되지 않는다거나 기피가 이유 없다고 기각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가 허용된다. 결정이 사실심 법관에 관련된 경우 당해 결정에 대한 불복은 반드시 판결에 대한 불복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제29조(긴급한 직무행위) ①기피된 법관은 기피신청이 처리되기 전에는 긴급한 직무행위 이외에는 수행할 수 없다.

②공판 중에 법관이 기피되어 그에 관한 결정(제26조a, 제27조)을 위해 공판을 중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일지라도 기피결정이 공판의 연기 없이 가능한 때까지는 공판을 속행할 수 있다. 그러나 늦어도 두 번째 공판기일 시작 전까지는 기피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최종변론 이전까지는 반드시 결정하여야 한다. 기피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고 이를 이유로 공판의 중단이 필요하지 않은 때에는 기피신청 제출 이후의 공판부분은 반복되어야 한다. 다만 이는 긴급을 요하는 직무행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기피신청의 제출 이후에는 공판 외에서도 가능한 결정일지라도 긴급한 경우가 아닌 한, 기피된 법관의 관여는 배제된다.

제30조(법관의 신고) 법원은 기피사유가 될 수 있는 사정을 법관 스스로 고지한 경우 또는 법관을 제척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의문을 갖게 하는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기피여부에 관해 결정해야 한다.

제31조(배심판사, 문서공무원) ①본 장의 규정들은 배심판사, 법원사무국의 서기 및 기타 조서작성자로서 관여한 자에게도 준용한다.

②당해 결정은 재판장이 내린다. 대형사합의부와 중죄법원의 경우에는 재판부를 구성하고 있는 직업법관들이 결정한다. 법관에게 배속되어 있는 조서작성자의 경우에는 그 법관이 조서작성자의 기피 또는 제척에 관하여 결정한다.

제32조(삭제)

제 4 장 재판 및 그 고지

제33조(관계인의 의견청취) ①공판 진행 중 법원의 재판은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한 후에 행한다.

②공판 과정 이외의 법원의 재판은 검사의 서면 또는 구두에 의한 의견진술 이후에 행한다.

③제2항의 재판에서 다른 관계인에게 불리한 사실이나 증거조사결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반드시 당해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④구속, 압수 또는 그 밖의 처분을 명하는 경우에 사전의 의견청취가 당해 처분의 목적에 반할 위험이 있다면 제3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관계인의 의견청취에 관한 특별규정들은 제3항의 적용대상에서 배제된다.

제33조a(의견청취의 만회) 법원이 결정에서 재판에 현저한 의미를 가질 정도로 관계인의 법적 청문권을 침해했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관계인이

결정에 대한 항고나 기타 법적 구제수단을 갖고 있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해 관계인에게 불이익이 계속 존재하는 한, 법원은 직권으로 혹은 신청에 기하여 재판이 선고된 이전 상태로 절차를 되돌리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에 관해서는 제47조를 준용한다.

제34조(이유제시) 상소로써 불복할 수 있는 재판 및 신청을 기각하는 재판에서는 그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34조a(결정을 통한 확정력) 적시(適時)에 상소를 제기한 이후 불복대상이 된 재판의 확정력을 직접적으로 야기하는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당해 결정일의 경과와 함께 확정력이 발생한다.

제35조(고지) ①당사자의 출석 하에 행하여진 재판은 선고를 통해 당사자에게 고지된다. 당사자가 요구하면 그 등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그 밖의 재판은 송달에 의하여 고지된다. 재판의 고지에 의하여 별도의 기간이 개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한 형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 통지만으로 충분하다.

③인신구속중인 자에 대하여는 요구가 있을 경우 송달된 문서를 낭독해 주어야 한다.

제35조a(상소에 관한 고지) 일정 기간 내에 상소를 제기함으로써 불복이 가능한 재판을 고지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불복가능성과 함께 그 기간 및 형식에 대해 고지하여야 한다. 판결에 대해 항소가 허용되는

경우에는 제40조 제3항, 제329조 및 제330조의 법률효과에 대해서도 피고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판결에 앞서 합의(제257조c)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가 어떠한 경우든 상소를 제기할 것인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고지하여야 한다.

제36조(송달과 집행) ①재판의 송달은 재판장이 지시한다. 법원사무국은 그 송달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한다.

②집행을 요하는 재판은 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지휘하는 검사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단, 공판정의 질서와 관련된 재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송달절차) ①송달절차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1인의 관계인에게 지정된 송달이 수인의 수령권자에게 행해진 경우 기간의 계산은 최후의 송달을 기준으로 한다.

제38조(직접소환) 증인과 감정인을 직접 소환할 권한이 있는 형사절차 관계인은 집행관에게 소환장의 송달을 위임하여야 한다.

제39조(삭제)

제40조(공시송달) ①공판에의 소환장을 아직 송달받지 못한 피고인에 대한 송달이 국내 송달에 대해 규정된 방식대로 이루어질 수 없고 또한 외국에서의 송달에 관련된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성공

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공시 이후 2주가 경과하면 송달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한다.

②피고인에게 공판소환장이 사전에 송달된 경우에는 규정된 방식대로 국내에서의 송달이 더 이상 이루어질 수 없다면 공시송달이 허용된다.

③피고인에 의해 제기된 항소절차에서 마지막으로 송달된 주소지 또는 피고인이 최근에 제출한 주소지로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시송달이 허용된다.

제41조(검사에 대한 송달) 검사에 대한 송달은 송달될 문서의 원본을 제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송달과 함께 기간의 진행이 시작되는 경우에는 검사는 그 제시일을 원본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41조a(전자문서) ①법원 또는 검사를 수신자로 하는 의사표명, 신청 또는 그 이유서 가운데 본 법률이 명시적으로 서면으로 작성하거나 서명을 요한다고 규정한 경우 서명법에 따른 특수한 전자서명을 구비하고 법원이나 검사가 처리하기에 적절한 때에는 전자문서의 형태로 제출할 수 있다. 본조 제2항에 따른 법규명령의 범위 내에서 특수한 전자서명 이외에도 전달된 전자문서의 진실성과 진정성을 보장하는 다른 확실한 절차도 허용될 수 있다. 전자문서는 법원과 검사의 수신 장치에 해당 문서가 기록되는 즉시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전달된 전자문서가 이를 처리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신자에게 처리를 위해 적절한 기술적 조건과 함께 이를 즉시 통보해야 한다. 전자문서는 지체 없이 인쇄하여 기록문서로 만들어야 한다.

②연방정부와 주정부는 법규명령을 통해 법원과 검찰에 전자문서 제출이 가능하기 시작하는 시점 및 문서처리의 적절한 형태를 정한다. 주정부는 법규명령을 통해 주 사법행정부에 관련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전자형태의 허가는 특정 법원, 특정 검찰 또는 특정 절차에 국한될 수 있다.

제 5 장 기간 및 실기의 회복

제42조(일로 정한 기간) 일로 정한 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기간 개시의 기준이 되는 시점이나 사건 당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3조(주 또는 월로 정한 기간) ①주 또는 월로 정한 기간은 최종의 주 또는 월에서 기간이 시작되었던 날의 명칭이나 수에 상응하는 날의 경과로 종료하며, 최종의 월에 이러한 날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달의 최종일의 경과로 기간이 종료한다.

②일요일이나 일반 공휴일 또는 토요일에 기간이 종료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평일의 경과로 기간이 종료한다.

제44조(실기의 회복)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데 대해 유책성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신청에 기하여 실기의 회복을 허용해야 한다. 제35조a 제1문과 제2문, 제319조 제2항 제3문, 제346조 제2항 제3문에 따른 고지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소기간의 실기에 대하여 유책성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45조(회복청구) ①실기회복 신청은 장애가 제거된 후 1주일 이내에 기간의 준수를 요구했었을 법원에 제기해야 한다. 기간의 준수를 위해서는 신청에 관하여 재판하는 법원에 청구가 제 때에 제기된 것으로 충분하다.
②신청의 근거가 되는 사실에 대해서는 신청과 함께 또는 신청에 관한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소명하여야 한다. 신청기간 중에는 지체된 행위를 사후적으로 보완할 수 있다. 이러한 보완이 행해지면 신청이 없이도 실기의 회복을 허용할 수 있다.

제46조(재판-상소) ①실기회복 신청에 관해서는 제 때에 행위를 했다면 사안 자체의 재판을 담당했을 법원이 재판한다.
②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③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가 허용된다.

제47조(집행) ①실기회복 신청을 통해 법원의 재판에 대한 집행이 정지되지는 않는다.
②그러나 법원은 집행의 연기를 명할 수 있다.
③실기회복이 재판의 확정력을 소멸시키는 경우에는 구속명령, 수용명령 및 확정력이 발생한 시점에 존재했던 기타 명령들은 다시 효력을 갖는다. 구속명령이나 수용명령에 관하여 실기회복을 허용한 법원은 그 요건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이 명백한 때에는 그 취소를 명한다.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26조 제2항에 따라 관할을 갖는 법원이 지체 없이 구속적부심사를 하여야 한다.

제6장 증 인

제48조(증인의 소환) ①증인은 그를 신문할 수 있도록 특정 기일에 법관 앞에 출두할 의무가 있다. 증인은 법률로 허용되어 있는 예외가 존재하지 않는 한, 진술할 의무가 있다.

②증인을 소환할 때에는 증인에게 이익이 되는 절차법적 규정, 증인을 보호하기 위한 현행법상의 가능성 및 소환에 응하지 않을 때의 법률효과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49조(연방대통령에 대한 신문) 연방대통령에 대한 신문은 그 주거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연방대통령은 공판에 소환되지 않는다. 연방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신문조서는 공판에서 낭독한다.

제50조(정부각료 및 국회의원에 대한 신문) ①연방하원, 연방상원 또는 주의회의 의원들에 대한 신문은 회기 중에는 그 체류지에서 행한다.

②연방정부 또는 주정부의 각료에 대한 신문은 그 정부소재지에서 행하거나 또는 정부소재지 밖에 체류하고 있을 때에는 그 체류지에서 행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과 다르게 신문을 할 때에는, 제1항에서 열거된 기관의 구성원에 대하여는 그 기관의 동의를, 연방정부의 각료에 대하여는 연방정부의 동의를 그리고 주정부의 각료에 대해서는 주정부의 동의를 요한다.

④제1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입법기관의 구성원과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각료를 공판 외에서 신문하였다면, 공판에 소환하지 않는다. 이들에 대한 법관의 신문조서는 공판에서 낭독한다.

제51조(불출석의 효과) ①적법한 소환에 응하지 않은 증인에게는 그 불출석으로 유발된 비용이 부과된다. 이와 동시에 질서벌로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과태료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질서벌로서 구류에 처할 수 있다. 증인의 강제구인 또한 허용되며, 이 경우 제135조를 준용한다. 불출석이 반복되는 경우 질서벌을 재차 부과할 수 있다.

②증인이 불출석한 것에 대해 제 때에 충분한 해명을 하였다면, 비용 및 질서벌을 부과하지 않는다. 제1문의 해명이 제 때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증인이 그 지체에 유책성이 없다는 사실이 소명될 때에만 비용 및 질서벌을 부과하지 않는다. 증인이 사후에 불출석 사유를 충분히 해명하였다면 제2문의 요건에 따라 그 명령을 취소한다.

③이들 처분권은 소송준비절차에 관여한 판사 및 수명법관과 수탁판사에게 귀속된다.

제52조(인적 사유로 인한 증언거부권) ①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증언거부권이 있다.

1. 피의자의 약혼자 또는 피의자와 생활공동체를 결성하기로 약속한 파트너인 경우
2. 피의자의 배우자인 경우. 혼인관계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3. 피의자의 직계혈족 또는 인척이거나, 3촌까지의 방계혈족 또는 2촌까지의 인척이거나 과거에 그러한 관계에 있었던 경우

②사고가 성숙하지 못한 미성년자 또는 육체적 질병이나 정신적, 심리적 장애를 가진 미성년자나 피후견인이 증언거부권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들이 진술할 준비가 되어 있고 이들의 법정대리인이 동의한 경우에만 신문할 수 있다. 단,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인 경우에는 증언거부권행사에 관하여 직접 결정할 수 없다. 법정대리권을 부모 양쪽 모두가 갖고 있는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부 또는 모의 경우에도 이와 동일하다.

③증언거부권이 있는 자와 제2항의 경우에 증언거부권행사에 관한 결정권을 가진 대리인에게는 신문을 할 때마다 사전에 이들의 권리에 관해 고지해야 한다. 증언거부권의 포기는 신문 중에도 이를 철회할 수 있다.

제53조(직업상 비밀준수자의 증언거부권) ①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아래 사실에 대한 증언거부권이 있다.

1. 성직자의 경우 사제로서의 신분 때문에 고해받았거나 알게된 사실에 대하여
2. 피의자의 변호인의 경우 그 직업상 고백받았거나 알게 된 사실에 대하여
3.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선서한 회계감정인 및 세무사, 세무대리인, 의사, 치과의사, 심리치료사, 청소년 심리치료사, 조산원의 경우 그 직업으로 인하여 고백받았거나 알게 된 사실에 대하여

3a. 임신갈등법 제3조 및 제8조에 의해 승인된 상담소의 구성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경우 그 직업상 고백받았거나 알게 된 사실에 대하여

3b. 관청, 단체 또는 공법상의 시설이나 재단으로 인가되었거나 이러한 조직에 부설된 마약중독자 상담소의 상담원의 경우 직업상 고백받았거나 알게 된 사실에 대하여

4. 연방하원의 의원, 연방총회의 구성원, 유럽의회의 독일연방공화국 의원 또는 주의회 의원으로서 이 기관 구성원으로 신분으로 인하여 일정 사실을 고백받은 경우 그러한 고백을 한 자 및 그 사실 자체에 대하여
5. 인쇄물, 방송, 영화 또는 정보제공이나 의사형성에 기여하는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의 준비, 제작 또는 유포에 직업상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자.

제1문 5호에 언급한 자는 저작물 또는 방송물의 저자나 방송전파자 또는 기타 정보제공자의 신상 및 자신의 활동과 관련하여 행한 통보와 그 내용 그리고 직접 처리한 자료의 내용 및 직업과 관련하여 지각하게 된 대상에 관하여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②제1항 2호 내지 3호b에 언급된 자들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가 해소된 때에는 증언을 거부할 수 없다. 제1항 제1문 5호에 언급된 자들의 경우 진술이 범죄수사에 기여하거나 수사대상이 이하 각 1호에 해당하고 사안에 대한 수사나 피의자의 소재지의 확인이 다른 방식으로는 가망성이 없거나 현저한 난관에 부딪히는 경우에는 자신이 직접 처리한 자료의 내용과 그에 따라 지각하게 된 대상일지라도 그에 대해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배제된다.

1. 평화위반과 민주적 법치국가에 대한 위해 또는 반역과 국가안전에 대한 위해에 해당하는 범죄(형법 제80조a, 제85조, 제88조, 제95조 및 제97조b와 결부시켜 제97조a, 제98조 내지 제100조a)
2. 형법 제174조 내지 제176조, 제179조에 따른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 또는

3. 형법 제261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른 불법적으로 취득한 재화를 은닉하기 위한 금전세탁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증인은 자신의 진술이 저작물 또는 방송물의 저자나 방송전파자나 기타 정보제공자의 신상 또는 자신의 활동과 관련하여 제1항 제1문 5호에 따른 통보나 그 내용을 공개하는 결과를 낳을 때에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제53조a(직업보조자의 증언거부권) ①제53조 제1항 1호 내지 4호에서 언급하고 있는 자들의 보조자 및 그 직업생활을 준비하기 위하여 직업상의 활동에 참여하는 자들 또한 증언거부권과 관련하여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이들 보조인들의 증언거부권행사에 관한 판단은 단시일 내에 그러한 판단이 내려질 수 없다고 예상되는 경우가 아닌 한, 제53조 제1항 1호 내지 4호에서 언급하고 있는 자들이 내린다.

②비밀준수 의무의 소멸에 관한 규정(제53조 제2항)은 보조인에게도 적용한다.

제54조(공직자의 비밀준수 의무) ①법관, 공무원 기타 공직에 종사하는 자를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와 관련된 사정에 관하여 증인신문을 하는 문제 및 진술을 허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공무원법상의 특별규정을 적용한다.

②연방하원, 주의회,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의 구성원 및 연방하원과 주의회 각 정파의 고용인에 대하여는 이들에게 준칙이 되는 특별규정을 적용한다.

③연방대통령은 자신의 증언으로 연방 또는 개별 주의 안녕에 불이익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④이상에서 열거한 자들이 더 이상 공직에 종사하지 않거나 정파의 고용인이 아니거나 또는 의원직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직무기간이나 근무기간 또는 의원재직 기간 중 발생하였거나 그 기간 중 알게 된 사실에 대하여는 본 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5조(정보제공거부권) ①모든 증인은 자신의 답변이 본인 또는 제52조 제1항에서 기술하고 있는 친족 가운데 1인의 범죄행위나 질서위반을 이유로 기소될 위험을 야기하는 때에는 정보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②증인에게는 정보제공거부권을 갖는다는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제56조(거부사유의 소명) 제52조, 제53조 및 제55조의 경우 그 증언거부의 근거가 되는 사실의 소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소명하여야 한다. 이는 증인의 선서에 의한 확약으로 충분하다.

제57조(증인에 대한 고지) 증인신문을 하기 전에 증인에게 진실만을 말할 것을 경고하고 허위나 불완전한 진술을 했을 때 야기될 형법적 결과에 대해 고지해야 한다. 증인에게는 선서의 가능성을 지적해 주어야 한다. 선서를 하는 경우에는 증인에게 선서의 의미 및 종교적 맹세가 수반된 선서와 그렇지 않은 선서 가운데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해야 한다.

제58조(신문-대질) ①증인은 한 명마다 별도로 그리고 나중에 신문하게 될 증인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문해야 한다.

②준비절차 중에 다른 증인이나 피의자와의 대질은 그것이 다음 단계의 절차를 위해 필요하다고 여겨질 때에는 허용된다.

제58조a(녹화) ①증인신문은 녹화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녹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1. 범죄피해자가 18세 이하인 경우로서, 그의 보호되어야 하는 이익을 보장해 주어야 하는 때
2. 공판절차에서 증인을 신문할 수 없을 것이지만 진실을 조사하는 데 녹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경우

②녹화의 이용은 오로지 형사소추의 목적을 위해서만 그리고 진실을 조사하는 데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이와 관련해서는 제101조 제8항을 준용한다. 기록열람의 권한이 있는 자에게 녹화 복사본을 교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147조와 제406조e를 적용하여야 한다. 복사본은 이를 재복사하거나 타인에게 교부할 수 없다. 복사본을 이용할 정당한 이익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즉시 검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상기의 자 이외의 자에게 녹화물을 교부하거나 복사본을 반환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증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증인이 제2항 제3문에 따른 증인신문 녹화 복사본의 교부를 거부할 때에는 녹화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를 제147조와 제406조e에 근거한 기록열람권자에게 교부한다. 녹화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는 자는 서면의 진실성을 확인한다는 문장과 함께 서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147조,

제406조e에 따라 녹화를 시청할 권리 자체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증인에게는 제1문에 따른 거부권을 고지해야 한다.

제59조(선서) ①증인은 법원이 그 재량에 비추어 진술이 갖는 결정적 의미 때문에 또는 진정한 진술을 유도할 목적에서 필요하다고 여길 때에만 선서를 한다. 증인이 선서를 하게 된 사유는 서면에 기록할 필요가 없다. 단, 증인신문이 공판절차 이외에서 이루어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증인선서는 각 증인마다 개별적으로 그리고 신문 후에 행한다.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선서는 공판 중에 행한다.

제60조(선서금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선서에서 배제한다.

1. 신문 당시 만18세가 되지 않았거나, 사고의 미성숙이나 육체적 질병 또는 정신적, 심리적 장애로 인하여 선서의 본질과 의미에 관한 충분한 이해가 없는 자의 경우
2. 조사대상이 되는 범죄행위 또는 그에 관여한 행위 내지 증거인멸, 범인은닉 또는 장물취득의 혐의를 받고 있거나 이로 인하여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경우

제61조(선서거부권) 제52조 제1항에 정하고 있는 범위의 피고인 가족은 증언에 대한 선서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이들에게 선서거부권의 존재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62조(소송준비절차에서의 선서) 소송준비절차에 있어서는 다음의 경우에만 선서가 허용된다.

1.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2. 증인의 공판출석에 장애가 있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제59조 제1항의 요건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이와 동일하다.

제63조(위임에 의한 신문에서의 선서) 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가 증인을 신문하는 경우 선서가 허용되는 한, 법원이 위임 또는 촉탁에 의해서 이를 요구한 때에는 선서가 행해져야 한다.

제64조(선서의 형식) ①종교적 맹세를 수반하는 선서는 법관이 증인에게 다음의 형식을 말하여 진행한다.

"당신은 전지전능하신 신 앞에서 최선의 지식에 따라 오로지 진실만을 말하였고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음을 서약합니다"

이에 대하여 증인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신께 맹세코 저는 이를 서약합니다"

②종교적 맹세를 수반하지 않는 선서는 법관이 증인에게 다음의 형식을 말하여 진행한다.

"당신은 최선의 지식에 따라 오로지 진실만을 말하였고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음을 서약합니다"

이에 대해 증인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저는 이를 서약합니다"

③증인이 특정 종교단체나 종파의 구성원으로서 그 공동체의 서약의 형식을 사용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이를 선서에 추가할 수 있다.

④서약하는 자는 선서 중에 오른손을 들어야 한다.

제65조(진술의 진실성에 대한 보증) ①증인이 신앙이나 양심상의 이유로 선서를 원하지 않는 경우 그는 진술의 진실성을 보증하여야 한다. 보증은 선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증인에게 이에 관해 지적해야 한다.

②법관이 증인에게 다음과 같이 말함으로써 진술의 진실성이 보증된다.

"당신은 최선의 지식에 따라 오로지 진실만을 말하였고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음을 법원 앞에서 귀하의 책임 하에 보증합니다"

이에 대하여 증인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예"

③제64조 제3항을 준용한다.

제66조(농아장애인의 선서) ①농아장애인은 선택에 따라 선서형식을 구두로 낭독하거나 선서형식을 필기하여 이에 서명하거나 또는 법원이 소환한 수화통역자의 도움을 빌어 선서한다. 법원은 이를 위해 필요한 적절한 기술적 보조수단을 준비하여야 한다. 농아장애인에게는 선서와 관련하여 선택권이 있음을 지적해야 한다.

②농아장애인이 제1항에 따른 선택권을 사용하지 않거나 제1항에 따라 선택된 선서행위가 불가능하거나 이를 위해 과도한 노력과 비용이 소요될 때에는 법원은 서면 선서를 요구하거나 수화통역사의 소환을 명할 수 있다.

제67조(이전 선서의 원용) 증인이 신문을 받고 선서를 한 이후 동일한 소송준비절차나 공판에서 다시 신문을 받게 되는 경우, 법관은 증인을 다시 선서하도록 하는 대신 이전에 수행한 선서를 원용하여 그 증언의 진실성을 확인하도록 할 수 있다.

제68조(증인신문) ①증인의 성명, 나이, 신분 또는 직업 및 주소를 묻는 것으로 신문이 시작된다. 증인이 공직에 있었던 경우에는 주소 대신 근무지를 진술할 수 있다.

②증인이 자신의 주소를 진술함으로써 증인 자신이나 타인을 위험에 빠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 증인이 주소 대신 직장소재지나 근무지 또는 소환장 송달이 가능한 다른 주소지를 진술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제1문의 요건이 충족되면 재판장은 공판에서 증인이 자신의 주소를 진술하지 않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③증인이 자신의 신상이나 주소 또는 거소를 공개함으로 인하여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자유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증인이 자신의 신상을 진술하지 않거나 과거의 신상만을 진술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그러나 증인은 공판에서 자신이 증언하는 사실을 어떠한 신분으로 알게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여야 한다. 증인의 신분확인을 보증하는 자료는 검사가 보관한다. 위험이 사라진 때에 비로소 당해 자료를 소송기록에 포함시킨다.

④제2항과 제3항의 요건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을 때에는 증인에게 당해 조항에 정해진 권한을 지적해주어야 한다. 증인의 거주지 또는 신상의 확인을 보장하는 문서는 검찰에 보관한다.

당해 문서는 증인을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불식된 때에야 비로소 소송기록의 내용으로 삼을 수 있다.

⑤제2항 내지 제4항은 증인신문이 종결된 이후에도 적용된다. 증인이 개인 신상정보를 제시하지 않는 것이 허용되는 한, 기록상의 정보나 기록에 대한 열람을 할 때 증인의 신상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해야 하지만, 제2항과 제3항에서 의미하는 위태화가 배제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제68조a(불명예스러운 사실 및 전과) ①증인이나 제52조 제1항에 의한 증인의 친족에게 불명예가 될 수 있는 사실 또는 그들의 사생활 영역에 관계되는 사실에 관하여는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질문하여야 한다.

②사안과 관련하여 증인의 신뢰성 여부에 관련된 사정, 특히 피의자나 피해자와 증인의 관계에 관한 사실에 대해서는 그것이 필요한 경우에만 질문하여야 한다. 제60조 2호에 정한 요건의 존재 여부를 결정하거나 증인의 신뢰성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만 증인에게 전과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다.

제68조b(증인에 대한 조력) ①증인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증인신문에 조력을 주기 위해 출석한 변호사에게는 출석을 허용한다. 그러나 특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변호사의 출석이 원활한 증거조사를 중대하게 침해할 것이라고 생각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때에는 증인신문에서 변호사를 배제할 수 있다. 특정한 사실에 비추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고 가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변호사의 출석을 배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1. 조력을 제공하는 변호사가 조사대상인 행위에 관여했거나 그 행위와 관련하여 증거인멸, 범인은닉이나 장물취득의 죄로 관여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경우
2. 조력을 제공하는 변호사가 증인의 이익에만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임에 따라 증인의 진술행태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경우
3. 조력을 제공하는 변호사가 증인신문을 통해 획득된 사실을 제112조 제2항 3호가 의미하는 은폐를 위해 이용하거나 조사목적을 위태롭게 하는 방식으로 제3자에게 전달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경우

②증인신문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않고 또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다른 방식으로는 감안할 수 없는 증인에게는 그가 신문에서 자신의 권한을 스스로 행사할 수 없다고 보이게 만드는 특수한 사정이 존재한다면 신문이 진행되는 동안 조력을 제공할 변호사를 임명하여야 한다. 제142조 제1항을 준용한다.

③제1항 제3문과 제2항 제1문에 따른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결정이유는 조사목적을 위태롭게 하지 않는 한, 이를 소송기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69조(사실에 대한 신문) ①증인에게는 그에 대한 신문의 대상에 관하여 알게 된 사실과 관련하여 진술하도록 해야 한다. 증인에게는 신문을 하기 전에 조사의 대상 및 피고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상을 적시하여야 한다.

②진술내용을 해명하고 그것을 완전하게 하기 위하여 또는 증인이 알고 있는 내용의 기초가 된 근거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

③제136조a의 규정은 증인신문에 준용한다.

제70조(증언거부 또는 선서거부) ①적법한 이유 없이 증언이나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 증인에게 그 거부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을 부과한다. 이와 동시에 그에게는 질서벌로서 과태료를 부과하며, 과태료 징수가 불가능한 때에는 질서벌로서 구류에 처한다.

②또한 증언을 강제하기 위한 감치를 명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해당 심급에서의 절차의 종결시점을 넘지 못하며 또한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③이들 처분에 관한 권한은 소송준비절차 담당법관 및 수명법관과 수탁판사에게도 있다.

④이러한 처분이 모두 사용되었다면, 동일한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동일 절차 혹은 다른 절차에서는 이 처분을 다시 행할 수 없다.

제71조(증인비용) 증인에게는 증인 및 감정인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그 비용을 보상한다.

제 7 장 감정인과 검증

제72조(증인규정의 적용) 증인에 관한 제6장의 규정들은 이하의 조항들에서 그와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감정인에게도 적용한다.

제73조(선발) ①관여하게 될 감정인의 선발과 그 수는 법관이 결정한다. 법관은 선발된 감정인들과 함께 어느 기간 내에 감정이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 협의한다.

②특정한 종류의 감정을 위해 감정인을 공적으로 임명하였다면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다른 사람을 감정인으로 선발할 수 있다.

제74조(기피) ①법관의 기피와 동일한 사유로 감정인을 기피할 수 있다. 그러나 감정인이 증인으로서 신문받은 사실이 기피사유가 될 수는 없다.

②검사, 사인소추권자, 피고인에게 기피신청권이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임된 감정인을 기피신청권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기피사유는 소명되어야 하며, 선서는 소명수단에서 제외된다.

제75조(감정인의 의무) ①필요한 종류의 감정을 위하여 감정인을 공적으로 임명하였거나, 감정인이 감정의 전제가 되는 학문이나 예술 또는 직업 관련 지식을 영리 목적에서 공적으로 활용하거나 또는 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공적으로 임명되거나 권한을 위임받은 자인 경우, 감정인으로 지명된 자는 그 지명에 응해야 한다.

②법정에서 감정에 대한 승낙의 의사를 표명한 자도 감정의 의무를 진다.

제76조(감정거부권) ①증인에게 증언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같은 근거로 감정인에게도 감정거부권이 부여된다. 감정인은 다른 사유가 있을 때에도 감정의무로부터 면제된다.

②법관, 공무원 기타 공직에 종사하는 자를 감정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공무원법상의 특별규정이 적용된다. 연방정부 및 주정부 구성원에 대하여는 이들에게 기준이 되는 특별규정을 적용한다.

제77조(불복종의 효과) ①감정의 의무가 있는 감정인의 불출석이나 감정 거부의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은 이를 배상하도록 감정인에게 부과한다. 이와 함께 그러한 감정인에게는 질서벌로서 과태료를 부과한다. 불응이 반복되면 비용부과와 함께 질서벌로서 과태료를 재차 부과할 수 있다.

②감정의 의무가 있는 감정인이 제73조 제1항 제2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량적 기간에 대한 협의를 거부하거나 또는 그 협의된 기간을 해태한 경우 감정인에게 질서벌로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질서벌인 과태료 부과 전에 유예기간을 정하여 경고를 행하여야 한다. 기간의 해태가 반복되면 질서벌로서 과태료를 재차 부과할 수 있다.

제78조(법관의 지도) 법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정인의 활동을 지도해야 한다.

제79조(감정인의 선서) ①감정인은 법원의 재량에 따라 선서할 수 있다.

②선서는 감정 이후에 행한다. 선서는 감정인이 편견 없이 최선의 지식과 양심에 따라 감정을 수행하였음을 내용으로 한다.

③감정인이 해당 종류의 감정을 수행하면서 일반적인 내용으로 선서를 한 경우에는 이미 행한 선서를 원용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제80조(소견서의 준비) ①감정을 준비하기 위하여 감정인의 요청에 따라 증인 또는 피고인을 신문하여, 감정인에게 더 많은 설명을 확보하도록 할 수 있다.

②전항의 목적을 위하여 소송기록을 열람하고, 증인과 피고인 신문 시 동석하며 직접 질문하는 것을 감정인에게 허용할 수 있다.

제80조a(준비절차에서의 감정인 관여) 피의자를 정신병원감호, 금단치료소 감호 또는 보안감호에 처하도록 명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감정인에게는 공판에서 행하여질 감정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제81조(관찰을 위한 감호처분) ①피고인의 정신상태에 대한 감정을 준비하기 위하여 법원은 감정인과 변호인의 의견을 청취한 후 피고인을 국공립정신병원에 유치하여 관찰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명령은 피고인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유력한 혐의가 있는 경우에만 행한다. 이러한 법원의 명령이 사안의 중요성 및 기대되는 형벌 또는 보안처분에 비추어 비례성에 반하는 과도한 명령인 경우에는 그러한 명령은 행할 수 없다.

③당해 준비절차에서는 공판개시를 관할하게 될 법원이 재판한다.

④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가 허용된다. 본 항고는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있다.

⑤제1항에 따른 정신병원감호는 총 6주를 초과할 수 없다.

제81조a(신체검사-혈액표본) ①소송절차상 중요한 사실의 확인을 위하여 피의자에 대한 신체검사를 명할 수 있다. 혈액표본의 채취 또는 기타 신체적 침해가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이루어진 경우, 이들 침해가 의사에 의하여 의학적 기술법칙에 따라 검사목적을 위하여 수행되고, 피의자의 건강손상이 우려되지 않는 때에는, 피의자의 승낙 없이도 이를 허용한다.

②전항의 명령은 법관이 행할 수 있으며, 지체할 경우 신체검사의 성과를 위협할 사정이 있는 때에는 검사와 그 수사요원(법원조직법 제152조)에게도 당해 명령권이 있다.

③피의자에게서 채취한 혈액표본 또는 기타 신체세포는 그 채취의 근거가 되는 형사절차 또는 다른 계속된 형사절차의 목적수행을 위해서만 이용될 수 있으며, 이들 표본이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 즉시 폐기되어야 한다.

제81조b(사진-지문-측정) 형사절차 수행을 위하여 또는 감식목적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피의자의 사진이나 지문을 그 의사에 반하여 수집하는 것과 신체치수를 측정하거나 이와 유사한 처분을 하는 것이 허용된다.

제81조c(제3자에 대한 검사) ①피의자 이외의 제3자가 증인으로 고려되는 경우 진실탐지를 위한 확증이 필요한 때에 한하여 당사자의 승낙 없이 그의 신체에 범죄행위의 흔적이나 결과가 남아 있는지 여부를 검사할 수 있다.

②혈통의 확인을 위한 검사와 혈액표본의 채취는 피의자가 아닌 제3자의 경우에도, 이 검사가 건강을 해할 염려가 없고 진실탐지를 위하여 불가결한 것인 때에는 피검자의 승낙 없이 수행하는 것이 허용된다. 검사나 혈액표본의 채취는 반드시 의사만이 행할 수 있다.

③검사 또는 혈액표본의 채취는 증언의 경우와 동일한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 있다. 미성년자가 사고의 미성숙으로 인하여 또는 미성년자나 피후견자가 육체적 질병이나 정신적, 심리적 장애로 인하여 그 거부권에 관하여 충분히 이해할 수 없는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결정하고, 이에 관하여는 제52조 제2항 제2문과 제3항을 준용한다. 법정대리인이 당해 결정으로부터 배제된 경우(제52조 제2항 제2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제 때에 결정을 할 수 없고 증거보전을 위하여 즉각적인 검사나 혈액표본의 채취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이러한 처분은 법관의 특별명령에 의해서만 허용되지만, 만일 적시에 법원에 도달할 수 없을 때에는 검사의 특별명령에 의해서도 허용된다. 처분을 명령한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제3문에 따라 조사된 증거들을 절차의 진행 중에 이용할 때에는 이에 관한 권한이 있는 법정대리인의 승낙을 요한다.

④모든 사정을 감안할 때 제1항과 제2항에 의한 처분을 당사자에게 요구할 수 없는 경우,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

⑤제3항 제3문의 경우가 아닌 한, 검사의 지연으로 인해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예견될 때에는 법관 및 검사와 그 수사요원(법원조직법 제152조)에게 명령의 권한이 있으나, 제2항 제3문은 이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81조a 제3항을 준용한다.

⑥당사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제70조 규정을 준용한다. 직접적인 강제는 법관의 특별명령이 있을 때에만 허용된다. 당해 특별명령은 질서벌로서의 과태료가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계속 거부를 하거나 긴급을 요한다는 사정을 전제한다.

제81조d(신체검사) ①신체검사가 수치심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신체검사는 같은 성별의 사람 또는 여의사나 남의사가 행한다. 정당한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특정 성별의 사람 또는 의사에게 위임해 달라는 피검사자의 희망에 따라야 한다. 당사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친지의 입회를 허용해야 한다. 당사자에게는 제2문과 제3문의 규정을 지적해야 한다.

②이 규정은 당사자가 검사에 동의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81조e(DNA 분석) ①제81조a 제1항의 처분을 통해 얻은 시료에 대하여는, 혈통의 확인을 위하여 또는 발견된 추적단서가 피의자의 것인지 또는 피해자의 것인지를 가려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분자유전학적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검사를 통해 해당자의 성별을 확인할 수도 있다. 제81조c의 처분에 의해 획득한 시료에 대한 확인의 경우에도 제1문에 따른 검사가 허용된다. 제1문에서 기술하고 있는 사실 이외의 사실을 확인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한 검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②발견하였거나 보관 중인 추적단서 또는 압수한 추적단서에 대해서도 제1항에서 허용하고 있는 검사가 허용된다. 제1항 제3문 및 제81조a 제3항의 제1문 상단을 준용한다.

제81조f(명령과 이행) ①제81조e의 검사는 당사자의 서면동의가 없을 경우에는 법원에 의해서만, 그리고 지체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검사와 그 수사요원(법원조직법 제152조)에 의해서도 명령될 수 있다. 당해 검사에 동의한 자에게는 검사결과로 확인된 데이터가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될 것인지에 대해 고지하여야 한다.

②제81조e에 따른 검사는 공적으로 임명된 자, 의무규정에 의해 그 의무를 부담하는 자 또는 공무원인 감정인을 서면명령에 명시하여 이를 위임하여야 하며, 공무원의 경우 수사를 수행하는 기관에 소속된 자에게는 그 위임이 허용되지 않으나, 조직과 업무내용에 비추어 수사기관과 분리된 기관의 조직단위에 소속된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상기의 감정인은 기술적, 조직적 조치를 취하여 불허된 분자유전학적 검사 및 제3자의 권한 없는 정보취득을 배제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검사시료는 당사자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을 포함하지 않은 상태에서 감정인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감정인이 사적인 지위에 있는 때에는 감독관청이 정보보호에 관한 규정의 준수를 감독하는 기준이 되는 정보보호법 제38조가 적용되며, 이는 감독관청이 감정인의 규정위반에 관한 충분한 근거를 갖고 있지 못하거나 감정인이 개인신상에 관한 데이터를 자동적으로 처리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제81조g(DNA 동일성 확인) ①피의자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범죄행위의 혐의가 있는 경우 범행의 종류나 수행방식, 피의자의 성향 또는 기타 사실에 기하여 장래에도 피의자에 대해 중대한 범죄행위로 인한 형사절차가 이루어질 것으로 가정할 근거가

존재할 때에는 장래의 형사절차에서도 그 동일성을 확인하기 위해 체세포를 채취하여, DNA 동일성 형태 및 성별의 확인을 위하여 분자유전학적으로 검사할 수 있다. 기타 범죄행위를 반복해서 저질렀다는 사정 역시 그 불법내용에 비추어 중대한 범죄행위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②채취된 체세포는 제1항에서 언급된 분자유전학적 검사를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으며, 검사를 위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즉시 폐기해야 한다. 검사에서는 DNA 동일성 형태 및 성별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 이외의 확인은 수행할 수 없으며, 그 이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③체세포의 채취는 피의자의 서면동의가 없을 경우 오로지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만 그리고 지체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검사와 그 수사요원(법원조직법 제152조)의 명령에 의해서도 행해질 수 있다. 체세포에 대한 분자유전학적 검사는 피의자의 서면동의가 없을 경우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만 행해질 수 있다. 동의를 하는 자에 대해서는 조사될 데이터가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될 것인지에 대해 고지해야 한다. 제81조f를 준용한다. 법원의 서면이유서에는 개별사례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서술한다.

1. 범죄행위의 중대성 판단에 결정적인 의미를 갖는 사실
2. 피의자에 대해 장래에도 형사절차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가정하게 만드는 근거가 되는 사실
3. 중요한 의미가 되는 개별 사정들에 대한 형량

④제1항 내지 제3항은 당사자가 범죄행위로 인해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다음 각 호의 사유 가운데 하나로 유죄판결을 받지 않았고 연방전과기록부나 교육등록부에 기록된 해당 내용이 말소되지 않은 경우에도 준용한다.

1. 책임무능력의 입증 또는 책임무능력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
2. 정신질환으로 인한 소송무능력
3. 책임의 결여 또는 책임의 결여를 배제할 수 없는 경우(청소년법원법 제3조)

⑤조사된 데이터는 연방경찰청에 저장하며 연방경찰철법의 기준에 맞추어 이용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경우에도 그러하다.

1. 제1항에서 언급한 요건이 충족된 경우 제81조e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피의자 관련 데이터
2. 제81조e 제2항에 따라 조사한 데이터

데이터는 형사절차, 위험방지 및 국제적 법률공조의 목적을 위한 경우에만 교부할 수 있다. 제2문 1호의 경우 피의자에게 즉시 데이터 저장 사실을 통지하고 피의자가 법원의 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여야 한다.

제81조h(집단적인 분자유전학적 검사) ①특정한 사실에 비추어 생명, 신체, 자유,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범죄가 행해졌다는 혐의가 충분할 때에는 행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특정한 심사표지를 충족하고 있는 자들에 대해 그 서면동의를 얻어 추적단서가 이들에게 연유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고 또한 조치가 해당되는 인적 범위에 비추어 범죄의 중대성과 불균형관계에 있지 않다면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체세포 채취
2. DNA 동일성 형태 및 성별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
3. 확인된 DNA 동일성 형태와 추적단서의 DNA 동일성 형태의 자동화된 비교

②제1항에 따른 조치는 법원의 명령을 요한다. 당해 명령은 서면으로 행한다. 서면명령은 특정한 심사표지에 비추어 해당자를 표시해야 하며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해당자들에 대한 사전의 청문은 필요하지 않다. 처분을 명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③처분의 이행에 관해서는 제81조f 제2항과 제81조g 제2항을 준용한다. 처분을 통해 확인된 DNA 동일성 형태에 관한 기록이 범죄수사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즉시 이를 폐기하여야 한다. 폐기는 문서로 기록하여야 한다.

④처분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을 때에만 이행될 수 있음을 해당자에게 서면을 통해 알려야 한다. 이와 함께 다음의 사항을 지적하여야 한다.

1. 채취된 체세포는 전적으로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위해 사용되며 이를 위해 체세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즉시 폐기한다는 사실
2. 확인된 DNA 동일성 형태는 장래의 형사소송에서 이용할 목적으로 연방경찰청에 저장되지 않는다는 사실

제82조(소송준비절차에서의 소견서) 소송준비절차에서 감정인이 그들의 감정을 서면으로 보고할 것인지 아니면 구두로 행할 것인지는 법관의 명령에 따른다.

제83조(재감정) ①감정이 불충분하다고 여기는 경우 법관은 동일 감정인 또는 다른 감정인을 통한 재감정을 명할 수 있다.

②감정인이 감정을 보고한 이후에 기피되어 그 감정결과를 채택할 수 없는 경우 다른 감정인에 의한 재감정을 명할 수 있다.

③중요한 사안에서는 전문관청의 감정을 구할 수 있다.

제84조(감정에 대한 보상) 증인 및 감정인에 대한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인에 대해서는 보상을 한다.

제85조(감정증인) 특별한 전문지식이 있어야 인식가능한 과거의 사실이나 상황에 관한 증명을 위하여 전문가를 신문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증언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86조(검증) 법관이 검증을 할 때에는 조서에 대상이 되는 사물이 적시되어야 하며, 사건의 특수한 성격에 비추어 그 존재를 추론할 수 있는 단서와 특징 가운데 어떠한 것이 결여되었는지에 관한 정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87조(검시-사체해부) ①검시는 검사가 그리고 검사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관과 함께 의사의 조력 하에 실시한다. 사안을 밝히기 위해 명백히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사의 관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②사체해부는 2인의 의사가 한다. 그 가운데 1인의 의사는 법정자문의, 국공립법의학연구소 또는 병리학연구소의 장이거나 이들 연구소의

촉탁의로서 법의학적 전문지식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사자의 사망 직전에 그의 질병을 치료하던 의사에게는 사체해부를 위탁할 수 없다. 그러나 사자의 병력을 통한 정보제공을 위해 치료하던 의사의 입회를 요구할 수 있다. 검사는 사체해부에 참여할 수 있다. 검사의 신청이 있는 경우, 판사도 사체해부에 입회한다.

③이미 매장한 사체에 대한 검시 또는 해부를 위한 발굴은 허용된다.

④매장된 사체의 발굴 및 해부는 법관이 명하며, 그 지체로 인하여 조사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는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에게도 명령권이 있다. 발굴이 명하여지면, 그 친족에 대한 통지가 특별한 어려움 없이 전달 가능하고 이 통지로 인해 조사 목적의 달성에 위험이 가해지지 않는 한 즉시 사자의 친족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제88조(사체의 확인) ①사체해부를 하기 전에 사자의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특히 사자를 알고 있었던 지인에게 문의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조치는 수사활동의 방식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신원과 성별을 확인하기 위해 체세포를 채취하고 분자생물학적 검사를 하는 것은 허용된다. 분자생물학적 검사와 관련해서는 제81조f 제2항을 준용한다.

②피의자가 존재하면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도록 사체를 보여주어야 한다.

제89조(사체해부의 범위) 사체의 상태가 허용하는 한 사체해부는 두부, 흉부 및 복부에 걸쳐 이루어져야 한다.

제90조(유아사체) 신생아 사체를 해부하는 경우 특히 신생아가 출생 이후 혹은 출생 중에 생존해 있었는지 또 모체 바깥에서도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성숙했거나 최소한 그러한 가능성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하여야 한다.

제91조(독살의혹) ①독살의 의혹이 있는 경우에는 사체나 기타 의심이 가는 물질에 대하여 화학자 또는 이러한 문제를 담당하는 전문관청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한다.

②이러한 조사가 의사의 관여나 지휘 하에 이루어지도록 명령할 수 있다.

제92조(통화 또는 유가증권의 감정) ①통화나 유가증권 위조의 의혹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면 동종의 진품 통화 또는 유가증권을 유통시키는 관청에 위조 의혹이 있는 통화나 유가증권을 제출하여 감정을 받아야 한다. 해당 관청은 비진정성 또는 위조 여부 및 추정되는 위조방법에 관하여 감정하여야 한다.

②문제되는 통화나 유가증권이 외국의 통화유통지역에서 통용되는 것일 경우 외국 통화유통지역 관청 대신 독일 관청의 감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93조(필체의 비교) 문서의 진정성 여부 및 그 작성자를 확인하기 위해 감정인의 참여하에 필체를 비교할 수 있다.

제 8 장 압수, 전신전화의 검열, 데이터 비교조사를 통한 수사, 기술수단의 투입, 비공개수사관의 투입, 수색

제94조(증거대상의 보전) ①증거방법으로서 심리에 중요할 수 있는 대상은 유치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 보전해야 한다.

②그러한 대상을 개인이 소지하고 있고 이를 자발적으로 인도하지 않는 때에는 압수를 요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은 증거로 사용될 운전면허증에도 적용된다.

제95조(제출 및 인도의무) ①전술한 종류의 대상을 소지하고 있는 자는 요구가 있으면 이를 제출하고 인도할 의무가 있다.

②전항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제70조에 규정된 질서벌 및 강제수단을 부과할 수 있다. 단 증언거부권이 있는 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96조(공문서의 예외) 관청이나 공무원이 공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기록 또는 기타 공적인 문서의 경우, 해당하는 최상급관청이 그러한 기록이나 문서의 내용이 공개되면 연방이나 개별 주의 안녕에 해가 될 수 있다고 밝힌 때에는, 그 인도와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연방하원 또는 주의회의 의원 및 연방하원이나 주의회 소속 정파의 고용인이 소지하고 있는 기록 및 기타 서류의 경우 그에 대한 진술을 허가할 권한 있는 기관이 전술한 내용을 밝힌 경우에도 제1문을 준용한다.

제97조(압수금지대상)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압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 피의자와 제52조 또는 제53조 제1항 1호 내지 3b호에 의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자 사이의 서면교신
2. 제53조 제1항 1호 내지 3b호에 열거된 자들에게 피의자가 신뢰하여 알린 내용이나 증언거부권이 미치는 기타 사정에 관하여 이들이 행한 기록
3. 제52조 제1항 1호 내지 3b호에 열거된 자들의 증언거부권이 미치는 의학적 진단결과를 포함한 기타 대상

②이러한 제한은 증언거부권자가 대상을 소지하고 있는 때에만 적용된다. 다만 사회법 제5권 제291조a가 의미하는 전자의료보험카드는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압수할 수 없다. 의사, 치과의사, 심리치료사, 아동 및 청소년심리치료사, 약사, 조산사의 증언거부권에 해당하는 대상이 상기 직업인들을 위해 개인 신상과 관련된 정보를 처리 또는 이용한 병원이나 기타 용역기관에 보관된 경우 이를 압수할 수 없으며, 제53조 제1항 3호a 및 3호b에 열거된 자의 증언거부권에 해당하는 대상이 당해 규정에 언급된 상담소에 보관된 경우에도 압수할 수 없다. 그러나 증언거부권자가 공범의 혐의 또는 증거인멸, 범인은닉이나 장물취득의 혐의가 있을 경우 또는 해당하는 대상이 범죄행위의 결과이거나 범죄행위를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하기 위한 것인 경우 또는 범죄행위와 관련된 것인 경우에는 압수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③제53조 제1항 제1문 3a호와 3b호에 언급한 자들의 보조인(제53조a)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④제53조 제1항 제1문 4호에 언급한 자의 증언거부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는 목적물의 압수는 허용되지 않는다. 당해 압수금지는 제53조 제1항 제1문 4호에 언급한 자들이 그 보조인(제53조a)에게 맡긴 목적물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제53조 제1항 제1문 4호에 언급한 자들의 보조인(제53조a)이 증언거부권을 갖는 경우에는 제1문을 준용한다.

⑤제53조 제1항 제1문 5호에 열거된 자들의 증언거부권과 관련되는 한, 이들 또는 편집국, 출판사, 인쇄소 또는 방송시설에 보관되어 있는 문서, 음향기록장치, 영상기록장치, 데이터기록장치, 도화 또는 기타 표현물에 대한 압수는 허용되지 않는다. 제2항 제3문과 제160조a 제4항 제2문을 준용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기본법 제5조 제1항 제2문에 따른 기본권을 고려할 때 물건이 갖는 의미에 비추어 비례성에 반하지 않고, 사안에 대한 수사 또는 범인의 소재지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압수가 허용된다.

제98조(압수명령) ①압수명령은 법원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검사와 그 수사요원(법원조직법 제152조)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제97조 제5항 제2문에 의한 편집국, 출판사, 인쇄소 또는 방송시설 내에서의 압수는 법원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②법원의 명령이 없이 어떤 대상을 압수한 공무원은, 압수 당시 당사자 또는 성년인 그의 가족이 부재했거나,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이의를 제기했거나 또는 당사자가 없어 성년인 가족이 이의를 제기했던 때에는 압수 후 3일 이내에 법원의 추인을 신청해야 한다. 당사자는 언제든지 법원의 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의 관할은 제162조에 따라 정한다.

당사자는 압수가 행해진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도 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당사자에게는 그의 권리를 고지해야 한다.

③공소제기 이후 검사나 그 수사요원이 압수를 행한 경우 3일 이내에 법원에 압수 사실을 통지해야 하며, 압수 대상을 법원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군용건조물 또는 일반에게 개방되어 있지 않은 연방방위군의 건조물로서 그 시설이나 설비에서 압수가 필요한 때에는 당해 건조물 등을 관리하는 상급기관에게 압수를 의뢰한다. 의뢰받은 기관은 압수에 참여할 권한이 있다. 그러나 압수가 군인 이외의 자만이 거주하는 장소에서 이루어질 경우에는 상기의 의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제98조a(데이터 비교조사를 통한 수사) ①다음에 기술하는 중대한 범죄를 행하였다는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존재하는 경우 제94조, 제110조, 제161조와 관계없이, 혐의 없는 자를 배제하거나 수사에서 다른 중요한 심사특징을 충족시키는 자를 확인할 목적에서 범죄행위자에 해당한다고 추정되는 일정한 심사특징을 충족시키는 자들의 신상관련 데이터를 기계적으로 다른 데이터와 비교조사하는 것이 허용된다.

1. 금지된 마약거래, 무기거래, 통화 및 유가증권 위조의 영역
2. 국가보호의 영역(법원조직법 제74조a 및 제120조)
3. 공공위해범죄의 영역
4. 신체, 생명, 성적 자기결정권 또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
5. 영업적 또는 상습적인 범죄
6. 범죄단체 구성원의 범죄 또는 기타 조직적인 범죄

이러한 처분은 사실관계의 조사나 범죄행위자의 소재에 대한 수사가 다른 방식으로는 그 성과를 기대하기 매우 어렵거나 현저히 곤란할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에만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에 기술된 목적을 위해 데이터를 저장, 관리하는 기관은 비교조사를 위해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된 데이터장치에서 선별 정리하여 형사소추기관에 전달하여야 한다.

③전달해야 할 데이터를 다른 데이터로부터 분리하는 작업이 과도한 비용을 소요하게 하는 경우에 한하여 다른 데이터도 함께 전달하도록 명할 수 있다. 함께 송부한 데이터의 사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④검사의 요구가 있는 경우 데이터를 저장 관리하는 기관은 데이터의 비교조사를 지원하여야 한다.

⑤제95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98조b(명령과 집행) ①데이터의 비교조사 및 전달 명령은 법원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검사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검사가 당해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법원의 추인을 신청한다. 3일 이내에 법원의 추인을 얻지 못하면 그 명령은 효력을 상실한다. 명령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서면에는 전달의무가 있는 자를 적시하여야 하며, 명령은 개별사례에서 반드시 필요한 데이터 및 조사대상에 국한되어야 한다. 연방의 특별법 또는 그에 상응하는 주법에서 정하고 있는 데이터 사용규정에 반하여 데이터를 사용하게 되는 전달명령은 금지된다. 제96조, 제97조, 제98조 제1항 제2문을 준용한다.

②질서벌 및 강제수단(제95조 제2항)은 법원만이 부과할 수 있으며,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검사도 이를 행할 수 있다. 단 구류 결정은 법원만이 내릴 수 있다.

③데이터가 데이터기억장치의 형태로 전달되면 비교조사가 종료하는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른 데이터기억장치로 복사된 신상 관련 데이터의 경우 그 데이터가 형사절차에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 즉시 이를 삭제하여야 한다.

④제98조a에 따른 처분이 종료한 이후에는 데이터보호에 관한 규정의 준수 여부를 통제하는 공적인 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8조c(데이터 비교조사) 범죄를 수사할 목적에서 또는 형사절차를 위해 추적하고 있는 자의 체류지를 확인할 목적에서 형사절차로부터 획득된 신상 관련 데이터를 형사소추, 형집행 또는 위험예방을 위하여 획득된 데이터와 기계적으로 비교조사 할 수 있다. 단 연방의 특별법이나 이에 상응하는 주법이 그러한 데이터사용을 금지하고 있을 때에는 비교조사를 할 수 없다.

제99조(우편물의 압수) 직업상 우편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사람 또는 기업이 피고인에게 발송된 우편물 및 전신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압수는 허용된다. 압수가 허용되는 우편물 및 전신이 피의자가 발송했거나 또는 피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한 것이고 그 내용이 조사에 중요한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는 사실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압수가 허용된다.

제100조(관할) ①압수(제99조)는 법원의 권한에 속하며,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검사도 그 권한이 있다.

②검사에 의해 압수가 이루어진 경우, 설령 그 대상의 인도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3일 이내에 법원의 추인이 없다면 효력을 상실한다.

③법원은 인도된 우편물을 개봉할 수 있다. 그 지체로 인하여 조사의 성과가 달성되지 못할 위험이 있는 경우 법원은 우편물의 개봉을 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당해 위임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지만, 언제든지 취소될 수 있다. 제2문의 명령이 없는 경우 검사는 즉시 그에게 인도된 우편물, 특히 봉함된 우편물인 경우에는 봉함된 상태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검사가 행한 압수에 관하여는 제98조의 관할권 있는 법원이 재판한다. 인도된 우편물의 개봉에 관하여는 압수를 명하거나 추인한 법원이 재판한다.

⑤우편물에 대한 개봉이 명령되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정해진 수신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개봉 이후 더 이상 압수상태에 있을 필요가 없는 우편물도 그러하다.

⑥압수상태에 있는 우편물 가운데 조사를 위해 더 이상 유보할 필요가 없는 부분은 정해진 수신자에게 사본으로써 통지한다.

제100조a(통신감청)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자가 이를 알지 못하더라도 통신을 감청 및 녹음할 수 있다.

1. 제2항에 열거된 중범죄의 정범 또는 공범으로서 수행했다는 혐의 및 미수를 처벌하는 사례에서 실행에 착수하였거나 다른 범죄행위를 통해 이를 예비하였다는 혐의의 근거가 되는 사실이 있는 경우
2. 개별사례에 비추어 범행의 중대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사실관계의 조사나 피의자의 소재에 대한 수사가 다른 방법으로는 현저히 어려움을 겪거나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②제1항 1호에 해당하는 중범죄는 다음과 같다.

1. 형법
   a) 형법 제80조 내지 제82조, 제84조 내지 제86조, 제87조 내지 제89조a, 제94조 내지 제100조a에 따른 평화위반의 죄, 반란죄, 민주적 법치국가를 위협하는 죄 및 내란죄, 외환죄
   b) 제108조a에 따른 의원증뢰죄
   c) 제109조d 내지 제109조에 따른 국가방위에 반하는 죄
   d) 제129조 내지 제130조에 따른 공공질서에 반하는 죄
   e) 제152조와 결부된 제146조, 제151조 및 제152조a 제3항과 제152조b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른 화폐 및 유가증권 위조의 죄
   f) 제176조a, 제176조b, 제177조 제2항 2호 및 제179조 제5항 2호에 해당하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죄
   g) 제184조b 제1항 내지 제3항, 제184조c 제3항에 따른 아동 및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의 유포, 취득, 소지
   h) 제211조, 제212조에 따른 모살과 고살
   i) 제232조 내지 제233조a, 제234조, 제234조a, 제239조a 및 제239조b에 따른 개인적 자유에 반하는 죄

j) 제244조 제1항 2호에 따른 범죄단체구성절도와 제244조a에 따른 범죄단체구성중절도

k) 제249조 내지 제255조에 따른 강도와 협박의 죄

l) 제260조와 제260조a에 따른 영업적인 장물취득, 범죄단체구성 장물취득 및 영업적인 범죄단체구성 장물취득

m) 제261조 제1항, 제2항, 제4항에 따른 금전세탁 및 불법영득재산의 은닉

n) 제263조 제3항 제2문의 요건을 충족하고 제263조a 제2항과 결부하여 제263조a 제5항에 해당하는 사기와 컴퓨터사기

o) 제264조 제2항 2호에서 언급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고 제263조 제3항과 결부하여 제264조 제3항에 해당하는 보조금사기

p) 제267조 제3항 제2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고 제268조 제5항 또는 제269조 제3항과 결부하여 제267조 제4항에 해당하는 문서위조의 죄 및 제275조 제2항과 제276조 제2항에 따른 문서위조의 죄

q) 제283조a 제2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한 파산

r) 제298조에 따른 불공정경쟁의 죄 및 제300조 제2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는, 제299조에 따른 불공정경쟁의 죄

s) 제306조 내지 제306조c, 제307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308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309조 제1항 내지 제4항, 제310조 제1항, 제313조, 제314조, 제315조 제3항, 제315조b 제3항 및 제316조a와 제316조b에 해당하는 공동체에 위험이 되는 죄

t) 제332조와 제334조에 따른 수뢰와 증뢰죄

2. 세법

a) 제370조 제3항 제2문 5호에서 언급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한 탈세

b) 제373조에 따른 영업적, 폭력적 및 범죄단체를 구성하여 행한 밀수

c) 제374조 제2항에 해당하는 조세장물죄

3. 의약품법 제95조 제3항 제2문 2호 b)에서 언급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제95조 제1항 2a호에 따른 범죄

4. 망명절차법

a) 제84조 제3항에 따른 망명신청남용을 목적으로 하는 호도행위

b) 제84조a에 따른 망명신청남용을 목적으로 하는 영업적 및 범죄단체 구성을 통한 호도행위

5. 외국인체류법

a) 제96조 제2항에 따른 외국인의 불법유입

b) 제97조에 따른 인명의 손실을 야기한 불법유입과 영업적 및 범죄단체 구성을 통한 불법유입

6. 무역법 제34조 제1항 내지 제6항에 따른 범죄

7. 마약류법

a) 제29조 제3항 제2문 1호와 관련된 규정에 따라 당해 조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는 범죄

b) 제29조a, 제30조 제1항 1호, 2호, 4호 및 제30조a, 제30조b에 따른 범죄

8. 마약재료감시법 제19조 제3항 제2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는 제19조 제1항에 따른 범죄

9. 전쟁무기통제에 관한 법률

a) 제21조와 결부하여 제19조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20조 제1항과 제2항 및 제20조a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범죄

b) 제22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범죄

10. 국제형법

a) 제6조에 따른 인종학살

b) 제7조에 따른 인간성에 반하는 죄

c) 제8조 내지 제12조에 따른 전쟁범죄

11. 무기법

a) 제51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범죄

b) 제52조 제1항 1호와 2호 c), d) 및 제5항, 제6항에 따른 범죄

③통신검열 명령은 오로지 피의자 또는 특정한 사실에 근거하여 피의자를 위해 특정한 통지를 수령하거나 피의자가 행한 통지를 수령 또는 전달한다고 추정되는 자 또는 피의자가 통신을 위해 이용하는 통신장치의 소유자에 대해서만 행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처분으로 인해 사적인 생활형성의 핵심영역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한 인식만을 획득할 수 있을 뿐이라고 추정할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때에는 그러한 처분은 허용되지 않는다.

제1항에 따른 처분으로 인해 획득된, 사적인 생활형성의 핵심영역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한 인식은 이용할 수 없다. 이에 관한 녹음 및 기타 기록은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그러한 인식의 획득 및 삭제 사실은 문서로 기록하여야 한다.

제100조b(명령 및 이행) ①제100조a에 따른 처분은 검사의 신청에 기하여 법원만이 행할 수 있다.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검사도 당해 처분을 명할 수 있다. 검사의 명령이 3일 이내에 법원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검사의 명령은 효력을 상실한다. 감청명령은 최장 3개월의 기간에 한정된다. 획득된 수사결과를 고려하여 명령의 요건이 존속하는 때에는 3개월 이하의 연장이 허용된다.

②명령은 서면으로 이루어진다. 결정문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다.

1. 가능한 한 처분의 대상이 되는 자의 성명과 주소
2. 전화번호, 감청대상이 되는 접속장치의 표식 또는 일정한 사실에 비추어 다른 단말기에 속한다는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단말기의 표식
3. 처분의 종류, 범위 및 종료시점을 명시한 기간

③감청명령에 근거하여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서비스에 관여하는 자는 누구나 법원, 검사 및 경찰에서 근무하는 수사요원(법원조직법 제152조)에게 제100조a에 따른 처분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필요한 정보를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사전에 일정한 대비를 해야 하는지 여부 및 그 범위는 통신법과 통신감독령에 따라 결정한다. 제95조 제2항을 준용한다.

④명령의 요건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 즉시 명령에 근거한 처분을 종료하여야 한다. 처분이 종료한 이후 명령을 내린 법원에 대해 처분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각 주와 연방검찰총장은 매년 6월 30일까지 그 이전 연도에 각 관할영역에서 제100조a에 따라 명령된 처분에 대해 연방법무성에

보고해야 한다. 연방법무성은 보고연도에 연방 전체에서 명령된 처분을 개관할 수 있는 도표를 만들어 이를 인터넷에 공표한다.

⑥제5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다.

1. 제100조a 제1항에 따른 처분이 명령된 절차의 수
2. 제100조a에 따른 감청명령의 수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구별하여 기재
   a) 제1회 명령 및 연장명령
   b) 일반전화통신, 이동전화통신, 인터넷통신
3. 제100조a 제2항의 구별기준에 따라 명령의 근거가 된 범죄행위

제100조c(주거에 대한 감청) ①다음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이를 알지 못하더라도 주거에서 이루어지는 비공개 대화에서 언급된 내용을 감청 및 기록할 수 있다.

1. 누군가가 정범 또는 공범으로서 제2항에 규정된 특별히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 또는 미수의 가벌성이 있는 때에는 그러한 범죄에 착수했다는 혐의의 근거가 되는 사실이 존재하는 경우
2. 개별사례와 관련하여 범행이 특별히 중대한 경우
3. 충분한 근거가 있는 사실에 비추어 도청을 통해 사안의 탐문 또는 공범의 소재지를 수사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는 피의자의 발언을 포착할 수 있으리라고 가정할 수 있는 경우
4. 사안의 탐문 및 공범의 소재지 수사가 다른 방식으로는 현저히 어렵거나 가망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제1항 1호에서 말하는 특별히 중대한 범죄는 다음과 같다.

1. 형법

a) 제80조, 제81조, 제82조, 제89조a에 따른 평화위반죄, 반역죄와 민주적 법치국가를 위해하는 죄 및 형법 제94조, 제95조 제3항과 제96조 제1항에 따른 내란죄와 국가의 안전을 위해하는 죄(각 경우마다 형법 제97조b 및 제97조a, 제98조 제1항 제2문, 제99조 제2항과 제100조, 제100조a 제4항과 결부시켜 판단한다)

b) 제129조 제1항과 제4항 제2문에 따른 범죄단체 조직의 죄 및 제129조a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1문 1단에 따른 테러단체 조직의 죄(각 경우마다 제129조b와 결부시켜 판단한다)

c) 제146조와 제151조(각 경우마다 제152조와 결부시켜 판단한다) 및 제152조a 제3항과 제152조b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른 화폐위조 및 유가증권 위조의 죄

d) 제176조a 제2항 2호 또는 제3항, 제177조 제2항 2호 또는 제179조 제5항 2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는 범죄

e) 제184조b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의 아동이 등장하는 음란물의 유포, 취득 및 소지의 죄

f) 제211조, 제212조에 따른 모살과 고살

g) 제234조, 제234조a 제1항, 제2항, 제239조a, 제239조b에 따른 인격적 자유에 반하는 죄 및 제232조 제3항, 제4항 또는 제5항, 제233조 제3항에 따른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하는 인신매매와 노동력의 착취를 목적으로 하는 인신매매의 죄 가운데 중죄에 해당하는 경우

h) 제244조 제1항 2호에 따른 범죄단체를 결성하여 행한 절도죄와 제244조a에 따른 범죄단체를 결성하여 행한 절도죄

i) 제250조 제1항 또는 제2항, 제251조에 따른 중한 강도 또는 강도 치사의 죄

j) 제255조에 따른 강도협박의 죄와 제253조 제4항 제2문의 요건을 충족하는, 제253조에 따른 협박죄

k) 제260조, 제260조a에 따른 영업적 장물죄, 범죄단체를 결성하여 행한 장물죄 및 범죄단체를 결성하여 영업적으로 행한 장물죄

l) 제261조 제4항 제2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는, 제261조에 따른 특별히 중한 돈세탁, 불법영득재산 은닉의 죄

m) 제335조 제2항 1호 내지 3호에 언급한 요건을 충족하는, 제335조 제1항에 따른 특별히 중한 증뢰죄와 수뢰죄

2. 망명절차법

a) 제84조 제3항에 따른 망명신청남용을 목적으로 하는 호도행위

b) 제84조a에 따른 망명신청남용을 목적으로 하는 영업적 및 범죄단체 구성을 통한 호도행위

3. 외국인체류법

a) 제96조 제2항에 따른 외국인의 불법유입

b) 제97조에 따른 인명의 손실을 야기한 불법유입과 영업적 및 범죄단체 구성을 통한 불법유입

4. 마약류법

a) 제29조 제3항 제2문 1호에서 언급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한, 제29조 제1항 제1문 1호, 5호, 6호, 10호, 11호 또는 13호, 제3항의 범죄가 특별히 중한 경우

b) 제29조a, 제30조 제1항 1호, 2호, 4호 및 제30조a에 따른 범죄

5. 전쟁무기통제에 관한 법률

a) 제21조와 결부하여 제19조 제2항 또는 제20조 제1항에 따른 범죄

b) 제22조a 제2항과 결부된 제2항에 따른 범죄의 특별히 중한 경우

6. 국제형법

a) 제6조에 따른 인종학살

b) 제7조에 따른 인간성에 반하는 죄

c) 제8조 내지 제12조에 따른 전쟁범죄

7. 무기법

a) 제51조 제2항과 결부된 제1항에 따른 범죄의 특별히 중한 경우

b) 제52조 제5항과 결부된 제1항 1호에 따른 범죄의 특별히 중한 경우

③당해 감청 처분은 피의자에 대해서만 그리고 피의자의 주거에 대해서만 수행될 수 있다. 피의자 이외의 다른 자의 주거에 대한 감청은 특정한 사실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전제할 수 있을 때에만 허용된다.

1. 제100조d 제2항에 따른 명령에 기재한 피의자가 그 제3자의 주거에 체류하고
2. 피의자의 주거에 대한 처분만으로는 사안의 탐문 및 공범의 소재지 수사를 할 수 없는 경우

처분으로 인하여 피의자 이외의 제3자까지 감청대상이 될지라도 처분은 허용된다.

④처분은 사실상의 근거, 특히 감청대상이 될 공간의 종류 및 감청대상이 될 자들의 관계에 비추어 극히 개인적인 생활형성의 핵심영역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는 표현내용이 감청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가정할 수 있을 때에만 명할 수 있다. 영업 또는 거래공간에서 행해진 대화는 원칙적으로 개인적인 생활형성의 핵심영역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행해진 범죄에 대한 대화 및 범죄수행의 수단이 된 표현 역시 그러하다.

⑤감청 및 그 기록은 감청 도중에 개인적 생활영역의 핵심영역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는 표현이 포착되는 즉시 중단해야 한다. 그러한 표현에 대한 기록은 즉시 삭제해야 한다. 제1문에 따라 처분이 중단된 후에는 제4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요건이 충족되면 다시 계속할 수 있다. 처분의 중단 또는 계속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법원의 결정을 구하여야 한다. 제100조d 제4항을 준용한다.

⑥제53조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처분은 허용되지 않으며, 처분의 수행 도중 또는 수행 이후에 제53조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밝혀진 때에는 제5항 제2문 내지 제4문을 준용한다. 제52조, 제53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문에 따라 획득된 사실은 그 근거가 되는 신뢰관계가 갖는 의미를 감안하여 사안의 탐문 및 피의자의 소재지의 수사와 현저한 불균형 관계에 있지 않는 때에만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제160조a 제4항을 준용한다.

⑦제5항에 따른 증거사용금지를 고려할 필요가 없는 한, 검사는 획득된 사실의 사용과 관련하여 지체 없이 처분을 명한 법원의 결정을 구해야 한다. 법원이 증거사용 가능성을 부인하는 한, 이는 그 이후의 절차에서도 구속력을 갖는다.

제100조d(관할) ①제100조c에 따른 처분은 검사의 신청에 기하여 검사가 소재하는 지역의 주법원에서 법원조직법 제74조a 제4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합의부를 통해서만 명령될 수 있다. 긴급을 요하는 경우 이 명령은 당해 합의부의 재판장 단독으로 명할 수 있다. 이 재판장의 명령이 3일 이내에 합의부의 동의를 얻지 못한 때에는 그 명령은 효력을 상실한다. 감청명령은 최장 1개월의 기한에 한정된다. 획득된 수사결과를 고려하여 계속 감청명령의 요건이 존재하는 경우 1개월 이하의 연장이 허용된다. 감청명령의 지속기간이 총 6개월을 초과한 경우 그 처분의 연장에 관해서는 주고등법원이 결정한다.

②명령은 서면으로 이루어진다. 명령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가능한 한, 처분의 대상이 되는 피의자의 이름과 주소
2. 처분을 명령한 근거가 되는 범죄행위
3. 감청의 대상이 되는 주거지 또는 주거공간
4. 처분의 종류, 범위 및 지속기간
5. 처분을 통해 조사하고자 하는 정보의 종류 및 소송에서 당해 정보가 갖는 의미

③명령의 사유 또는 연장의 사유에는 그 요건과 형량을 해야 할 중요한 관점들에 대해 서술한다. 개별사례에 비추어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한다.

1. 혐의의 근거가 되는 특정 사실
2. 처분의 필요성 및 비례성과 관련된 중요한 고려사항
3. 제100조c 제4항 제1문에서 의미하는 사실상의 근거

④명령을 한 법원에 대해 처분의 진행과정 및 그 결과에 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명령의 요건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경우, 검사가 처분의 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이 처분의 중단을 명령한다. 처분중단 명령은 재판장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⑤주거공간에 대한 음성감청에 의해 획득된 개인관련 정보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는 한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1. 제100조c에 따른 처분을 통해 획득된 사용가능한 개인관련 정보는 제100조c에 따른 처분이 명해질 수 있었던 범죄행위의 수사를 위한 경우 또는 그러한 범죄행위 피의자의 소재지를 수사하기 위한 경우일 때에만 감청대상이 된 자의 동의 없이도 다른 형사절차에서 사용할 수 있다.
2. 제100조c에 따른 처분을 통해 획득된 개인관련 정보 및 제100조c 제6항 제1문 2단에 따른 조치에 의해 획득된 개인관련 정보는 개별사례에 비추어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거나 개인의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급박한 위험 또는 국민의 후생에 기여하는 중대한 가치가 있는 대상에 대한 위험, 문화적으로 현저히 중요한 가치가 있는 대상에 대한 위험 또는 형법 제305조에서 언급하고 있는 대상에 대한 위험이 존재할 때에만 위험방지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 제100조c에 따른 처분을 통해 획득된, 사용가능한 개인관련 정보는 여타의 중요한 재산가치와 관련하여 개별사례에 비추어 급박한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그 방지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당해 정보가 위험방지를 위하여 또는 위험방지를 목적으로 내려진 결정에

대해 법정절차 또는 법정절차 이외의 심사를 위하여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때에는 위험방지를 담당하는 기관이 당해 정보의 기록을 지체 없이 삭제하여야 한다. 만일 기록된 정보의 삭제가 법정절차 이전 또는 법정절차에서 있을 수 있는 심사를 위해 유보된 때에는 당해 정보는 이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다. 이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차단하여야 한다.

⑥사용가능한 개인관련 정보가 관할 경찰의 처분으로 획득된 때에는 제100조c에 따른 처분이 명령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범죄행위를 조사하기 위한 경우 또는 그러한 범죄행위의 피의자의 소재지를 수사하기 위한 경우에만 감청의 대상이 된 자의 동의 없이도 형사절차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제100조e(보고) ①제100조c에 따라 명해진 처분에 대해서는 제100조b 제5항을 준용한다. 당해 사항을 인터넷에 공개하기 전에 연방정부는 연방의회에게 그 이전 연도에 제100조c에 따라 명령된 처분에 대해 보고한다.

②제1항의 보고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제100조c 제1항에 따라 처분이 명령된 절차의 숫자
2. 제100조c 제2항의 분류를 기준으로 하여 감청의 근거가 된 범죄행위
3. 절차가 조직범죄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
4. 감청대상이 개인용 주거 또는 여타의 주거인지 및 피의자의 주거 또는 제3자의 주거인지에 따라 분류하여 각각의 절차의 숫자

5. 감청대상이 피의자인지 아니면 그 이외의 자인지에 따라 분류하여 각 절차에 따라 감청대상이 된 사람의 숫자
6. 감청명령의 기간, 연장기간 및 실제 감청기간을 적시하여 각 감청의 지속기간
7. 제100조c 제5항, 제100조d 제4항에 따라 처분이 중단 또는 정지된 빈도
8. 당사자에 대한 통보(제101조 제4항 내지 제6항)가 이루어졌는지 또는 어떠한 사유에서 그러한 통보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에 대한 내용
9. 감청이 해당 형사절차에 중요하거나 또는 중요할 것으로 예상한 결과를 낳았는지 여부
10. 감청이 다른 형사절차에 중요하거나 또는 중요할 것으로 예상한 결과를 낳았는지 여부
11. 감청이 중요한 결과를 낳지 못한 경우, 기술적 측면과 여타의 측면을 구별하여 그 원인에 대한 설명
12. 번역을 위한 비용 및 그 이외의 비용을 구별하여, 처분에 소요된 비용

제100조f(주거 이외의 영역에서 이루어진 비공개적 언술) ①특정한 사실이 제100조a 제2항에 규정한 범죄행위의 정범이나 공범의 혐의 또는 개별 사례에 비추어 중대한 범죄행위의 정범 또는 공범으로 행위를 했다는 혐의의 근거가 되거나 미수의 가벌성이 규정된 사례에서 그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다는 혐의의 근거가 되고, 당해 사안에 대한 조사 및 피의자의 소재지에 대한 수사가 다른 방식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고

예상되거나 현저하게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주거 이외의 영역에서 비공개적으로 행해진 언술에 대해 당사자가 알지 못하더라도 기술적 수단을 통해 이를 감청 및 기록할 수 있다.

②당해 처분은 피의자에 대해서만 행할 수 있다. 그 이외의 자에 대한 처분은 특정한 사실에 근거하여 피의자와 관계가 있거나 또는 그러한 관계가 수립되어 사안의 조사 또는 피의자의 소재지에 대한 수사를 가능하게 하며 동시에 다른 방식으로는 그러한 조사나 수사가 가능할 수 없거나 현저하게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③피의자 이외의 제3자가 불가피하게 처분의 대상이 된 때에도 처분은 허용된다.

④제100조b 제1항, 제4항 제1문 및 제100조d 제2항을 준용한다.

제100조g(교신데이터 조사) ①특정한 사실에 근거하여 누군가가 정범 또는 공범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범죄를 행했다는 혐의가 있을 때에는, 사안의 조사 및 피의자의 소재지 수사에 필요한 한, 당사자가 이를 알지 못하더라도 교신데이터(통신법 제96조 제1항, 제113조a)를 조사할 수 있다.

1. 구체적인 사례에 비추어 중대한 의미가 있는 범행, 특히 제100조a 제2항에 규정된 범행을 행했거나 미수의 가벌성이 있는 행위의 착수 또는 별도의 범행을 통해 예비한 때
2. 통신을 수단으로 행한 범죄

제1문 2호의 경우 처분은 사안의 조사 및 피의자의 소재지 수사가 다른 방법으로는 성공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데이터 조사가

사안의 비중과 적절한 비례관계에 있을 때에만 허용된다. 실시간으로 확인되는 소재지 데이터에 대한 조사는 제1문 1호의 경우에만 허용된다.

②제100조a 제3항과 제100조b 제1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한다. 제100조b 제2항 제2문 2호와는 달리 중대한 의미가 있는 범죄와 관련하여 사안의 조사 및 피의자의 소재지 수사가 다른 방법으로는 성공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현저하게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정한 통신장소 및 그 시간에 대한 표식만으로 충분하다.

③통신데이터의 조사가 통신서비스제공자를 통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통신과정이 종료한 이후의 조사는 일반규정에 따른다.

④제1항에 따른 처분은 제100조b 제5항에 상응하여 매년 당해 처분을 개관할 수 있는 도표를 작성한다. 이 도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제1항에 따른 처분이 수행된 절차의 수
2. 제1회 명령 및 연장명령을 구별하여 제1항에 따른 처분을 명령한 수
3. 제1항 제1문 1호와 2호를 구별하여 각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범죄행위
4. 명령이 내려진 시점을 기준으로 제1항에 따른 교신데이터 조사가 이루어진 후에 남게 된 개월의 수
5. 조사된 데이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조사가 성공하지 못한 처분의 수

제100조h(당사자의 부지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여타의 처분) ①사안의 조사 및 피의자의 소재지 수사가 다른 방식으로는 성공을 기약할 수 없거나 현저히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당사자가 이를 알지 못하더라도 주거 이외에서 다음의 처분을 행할 수 있다.

1. 촬영
2. 감시목적을 위한 여타의 특수한 기술적 수단의 사용

제1문 2호에 따른 처분은 조사대상이 중대한 범죄일 때에만 허용된다.

②조치는 피의자에 대해서만 취해질 수 있다. 그 이외의 자에 대해서는

1. 사안의 조사 및 피의자의 소재지 수사가 다른 방식으로는 성공을 기약할 수 없거나 현저히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만 제1항 1호에 따른 조치가 허용된다.
2. 특정한 사실에 근거하여 당해 타인이 피의자와 교신하거나 교신을 할 것으로 가정할 수 있고, 사안의 조사 및 피의자의 소재지 수사가 다른 방식으로는 성공을 기약할 수 없거나 현저히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될 때에만 제1항 1호에 따른 처분이 허용된다.

③제3자가 처분의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처분을 행할 수 있다.

제100조i(이동통신 단말기에 대한 처분) ①특정한 사실에 근거하여 누군가가 정범 또는 공범으로서 개별사례에 비추어 중대한 범죄행위, 특히 제100조a 제2항에 규정한 범죄행위, 미수의 가벌성이 있는 경우의 실행의 착수 또는 다른 범죄행위를 통해 그 예비를 했다는 혐의가 있을 때에는 사안의 조사 및 피의자의 소재지 수사를 위해 필요하다면 다음 사항을 수사할 수 있다.

1. 이동통신 단말기의 기기번호와 단말기 내부에서 사용되는 카드의 카드번호
2. 이동통신 단말기의 소재지

②그와 같은 처분을 행하면서 기술적인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한 때에만 제3자의 개인관련 데이터에 대한 조사가 허용된다. 당해 데이터는 추적하는 기기번호 및 카드번호를 수사하기 위한 데이터 비교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처분이 종료된 즉시 이를 삭제하여야 한다.
③제100조a 제3항과 제100조b 제1항 제1문 내지 제3문, 제2항 제1문을 준용한다. 명령은 최장 6개월의 기간에 한정된다. 제1항에 규정한 요건이 존속하는 한, 6개월 이하의 연장이 허용된다.

제101조(통지; 개인관련 데이터의 삭제) ①제98조a, 제99조, 제100조a, 제100조c 내지 제100조i, 제110조a, 제163조d 내지 제163조f에 따른 처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하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00조c, 제100조f, 제100조h 제1항 2호와 제110조a에 따른 처분에 관한 결정문 및 기타 문서는 검찰에 보관한다. 제5항에 따른 통지의 요건이 충족된 때에만 이를 소송기록에 포함시킨다.
③제1항에 따른 처분을 위해 조사한 개인관련 데이터는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른 기관에 전달한 경우에도 당해 표시가 유지되어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처분은 다음 각 호에 의거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1. 제98조a의 경우 데이터에 대한 평가에 의거하여 계속 수사대상이 되는 자
2. 제99조의 경우 우편물의 발신인과 수신인
3. 제100조a의 경우 감청된 통신의 당사자
4. 제100조c의 경우
   (a) 처분 대상 피의자

(b) 여타 감청대상자

(c) 처분을 이행한 시점 당시 감청 대상 주거의 보유자 및 그 거주자

5. 제100조f의 경우 목표대상자 및 현저하게 침해를 받은 자

6. 제100조g의 경우 해당 통신의 당사자

7. 제100조h 제1항의 경우 목표대상자 및 현저하게 침해를 받은 자

8. 제100조i의 경우 목표대상자

9. 제110조a의 경우

(a) 목표대상자

(b) 현저하게 침해를 받은 자

(c) 비밀수사요원이 출입한 개인용 주거의 거주자

10. 제163조d의 경우 데이터의 평가에 의거하여 계속 수사대상이 되는 자

11. 제163조e의 경우 목표대상자 및 개인관련 데이터가 통보된 해당자

12. 제163조f의 경우 목표대상자 및 현저하게 침해를 받은 자

당해 통지를 할 때에는 제7항에 따른 사후적인 권리보호의 가능성 및 그 기한을 지적하여야 한다. 통지가 한 당사자의 중대한 이익의 보호에 반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하지 않는다. 또한 제1문 1호, 2호, 6호에 기재된 자로서 처분의 대상이 아니었던 자가 처분으로 인해 현저한 침해를 받지 않았거나 통지에 관심이 없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하지 않는다. 제1문에 기재한 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사후조사는 해당자에 대한 처분의 침해강도, 신원확인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로 인해 당사자 및 타인에게 유발되는 침해를 고려하여 필요한 때에만 수행한다.

⑤통지가 수사목적, 한 사람의 생명, 신체의 완결성, 개인적 자유 및

중대한 재산가치 그리고 제100조a에 따른 비밀수사요원의 계속적인 이용가능성을 위협하지 않는 즉시, 당해 통지를 행한다. 제1문에 따른 통지가 유예된 때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기록한다.

⑥제5항에 따른 지체된 통지가 처분이 종료된 이후 12개월 이내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이를 계속 유예하고자 할 때에는 법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법원은 통지의 요건이 장래에도 성립하지 않으리라고 확실시 되는 경우에는 통지의 완전한 배제에 동의할 수 있다. 다수의 처분이 매우 근접한 시간적 거리를 두고 수행된 때에는 제1문에 언급한 기간은 마지막 처분의 종료와 함께 개시한다. 제100조c의 경우에는 6개월을 기간으로 한다.

⑦제6조에 따른 법원의 결정은 처분의 명령을 관할하는 법원이, 그 이외의 경우에는 관할 검찰이 소재하는 법원이 내린다. 제4항 제1문에 언급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2주 내에 제1문에 따른 관할법원에 처분 및 그 집행방식의 적법성에 대한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가 허용된다. 공소가 제기되었고 피고인이 통지를 받은 때에는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절차를 종결하는 재판에서 당해 신청에 대해 결정한다.

⑧처분을 통해 획득된 개인관련 데이터가 형사소추 및 처분에 대한 법원의 심사를 위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 때에는 이를 즉시 삭제해야 한다. 삭제 사실은 문서로 기록한다. 삭제가 오로지 처분에 대한 법원의 심사로 인해 유예된 경우에 당해 데이터는 오로지 이 목적을 위해서만 당사자의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이에 준하여 데이터에의 접근을 차단한다.

제102조(혐의자에 대한 수색) 범죄의 정범 또는 공범이나 증거인멸, 범인은닉 또는 장물취득의 혐의를 받는 자에 대하여는, 그 체포의 목적이거나 증거방법의 발견이 추정되는 경우 주거와 기타 공간 및 그 신체와 물건에 대한 수색을 할 수 있다.

제103조(기타의 자에 대한 수색) ①피의자의 체포, 범죄단서의 추적, 특정한 대상의 압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또는 추적대상인 사람, 단서 또는 물건이 수색될 공간에 있다고 추론할 수 있는 사실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기타의 자에 대한 수색이 허용된다. 형법 제89조a에 따른 범죄, 제129조b 제1항과 결부된 제129조a에 따른 범죄 또는 제129조a에 언급된 범죄 가운데 하나를 범한 것으로 보이는 유력한 피의자를 체포할 목적으로 주거와 기타 공간에 대해 수색하는 것 역시 이들 공간이 건조물 내에 소재하고 있고 그 내부에 피의자가 체류한다고 추정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을 때에만 허용된다.

②피의자가 체포된 공간 또는 추적 중에 피의자가 출입한 공간에 대하여는 제1항 제1문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제104조(야간 가택수색) ①현행범을 추적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탈출한 죄수를 다시 체포하기 위한 경우에만 주거, 상업공간, 위요지(圍繞地)에 대한 야간수색이 허용된다.

②야간에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공간 또는 전과자들의 숙소나 집결장소, 범죄를 통하여 얻어진 물건의 저장소, 도박이나 금지된 마약류 및 무기거래 또는 매춘을 위한 은신처로 경찰에 알려진 공간에 대하여는

이러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③야간이라 함은 4월 1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는 저녁 9시부터 아침 4시를, 10월 1일부터 3월 31일 사이에는 저녁 9시부터 아침 6시를 의미한다.

제105조(명령; 이행) ①법관만이 수색을 명령할 수 있으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검사 및 그 수사요원(법원조직법 제152조)도 이를 명령할 수 있다. 제103조 제1항 제2문의 수색은 법관이 명령하며,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검사도 명령할 권한이 있다.

②주거, 상업공간 또는 위요지에 대한 수색의 경우 판사나 검사가 입회하지 않은 때에는 가능한 한 수색이 행하여지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1인 또는 지방자치단체 주민 2인이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경찰공무원이나 검사의 보조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 주민으로서 참여할 수 없다.

③군용건조물 또는 일반에게 개방되어 있지 않은 연방방위군의 시설이나 설비에서의 수색이 필요한 때에는 당해 건조물 등을 관리하는 기관에게 그 수색을 의뢰한다. 의뢰받은 기관은 수색에 참여할 권한이 있다. 상기의 시설이라 할지라도 군인 아닌 자만이 주거하는 공간을 수색할 때에는 의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제106조(점유자의 참여) ①수색할 공간 또는 그 대상의 점유자는 수색에 입회할 수 있다. 점유자가 부재중인 경우에는 가능하다면 그 대리인 또는 성년인 친족, 동거인 또는 이웃이 입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03조 제1항의 경우 점유자나 그의 부재중 입회한 자에게는 수색의 목적에 대해 수색을 개시하기 이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제104조 제2항에 기술된 공간의 점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107조(통지-목록) 수색대상이 된 자에게는 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수색의 근거(제102조, 제103조)를 수색이 종료한 이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102조의 경우에는 통지 시 해당 범죄행위를 적시하여야 한다. 또한 요구가 있을 경우 유치 또는 압수한 대상의 목록 그리고 혐의가 발견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에 관한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08조(여타 대상에 대한 압수) ①조사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지만 수색의 기회에 다른 범행의 혐의근거가 되는 대상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가압수할 수 있다. 당해 사실은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3조 제1항 제2문에 의한 수색의 경우에는 제1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환자에 대한 인공임신중절과 관련하여 시술 의사에게서 제1항 제1문에서 언급한 대상이 발견된 경우, 형법 제218조의 범죄행위를 이유로 당해 환자에 대해 진행되는 형사절차에서 이를 증거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제53조 제1항 제1문 5호에 언급한 자에게서 제1항 제1문의 대상이 발견되었지만 그것이 해당자의 증언거부권이 미치는 영역에 속하는 때에는, 이 대상을 형사소송의 증거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자유형에 해당하면서 형법 제353조b의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범행에 대한 형사절차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제109조(압수된 대상에 대한 표식) 유치 또는 압수된 대상에 대해서는 정확한 표식을 부착하여야 하며, 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인 또는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10조(문건 및 전자 저장매체의 검열) ①피수색자의 문건은 검사 또는 검사의 명령을 받은 수사요원(법원조직법 제152조)이 검열한다.

②제1항에 규정된 자들 이외의 공무원은 점유자가 검열을 승인한 경우에만 발견된 문건을 검열할 수 있다. 점유자가 검열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공무원은 검열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는 문건을 봉투에 넣어 점유자의 입회하에 관인으로 봉하여 검사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③수색대상인 자의 전자 저장매체에 대한 검열은 검열대상인 데이터가 상실될 우려가 있다면 저장매체로부터 도달될 수 있는 한, 당해 저장매체와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저장매체들에까지 확대될 수 있다. 조사에 중요한 의미가 있을 수 있는 데이터는 이를 압수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제98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10조a(비공개수사관) ①다음에 열거한 중대한 범죄를 행하였다는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존재하는 경우 그 범죄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비공개수사관을 투입할 수 있다.

1. 금지된 마약류거래 또는 무기거래 및 통화나 유가증권위조의 영역
2. 국가보호의 영역(법원조직법 제74조a 및 제120조)에서
3. 업무상으로나 상습적으로 또는
4. 범죄단체구성원에 의해 또는 기타의 방식으로 조직적으로 행해진 범죄

특정한 사실에 비추어 연쇄범죄의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비공개수사관을 투입할 수 있다. 당해 투입조치는 다른 방법으로는 진상을 규명할 가능성이 없거나 현저하게 곤란할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이밖에도 범죄가 갖는 특수한 의미에 비추어 불가피하고 또한 다른 조치로는 진상을 규명할 가능성이 없을 때에는 범죄수사를 위하여 비공개수사관을 투입할 수 있다.

②비공개수사관이라 함은 부여된 신분변경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수사하는 경찰직 공무원(비밀요원)을 말한다. 이들은 이러한 변경된 신분으로 법적 거래에 참여할 수 있다.

③비밀요원의 신분을 구축하거나 이를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관련 문서를 제작, 변경,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

제110조b(검사, 법관의 동의; 신분에 대한 비밀유지) ①비공개수사관의 투입은 검사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긴급을 요하지만 검사의 결정이 제 때에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 경찰이 즉시 결정할 수 있다. 검사가 3일 이내에 이에 동의하지 않는 때에는 그 처분을 종료하여야 한다. 동의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투입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비공개수사관 투입을 위한 요건이 존속하는 한, 기간의 연장이 허용된다.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비공개수사관의 투입은 판사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1. 특정 피의자에 관한 경우
2.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있지 않은 주거에 비공개수사관이 출입하는 경우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동의만으로 충분하다. 검사의 결정이 제 때에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 경찰이 즉시 결정할 수 있다. 판사가 3일 이내에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처분을 종료하여야 한다. 제1항 제3문과 제4문을 준용한다.

③비공개수사관의 신분은 그 투입이 종료된 후에도 비밀로 유지한다. 투입에 대한 동의권이 있는 검사와 판사는 그 신분을 공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밖에 비공개수사관의 신분공개가 비공개수사관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자유를 위협하거나 당해 비공개수사관의 계속적인 활용가능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형사절차에서 제96조를 기준으로 그 신분의 비밀유지가 허용된다.

제110조c(주거출입) 비공개수사관은 자신의 비밀요원 신분으로 권리자의 양해를 얻어 주거에 출입할 수 있다. 비밀요원 신분의 사용범위를 초과하여 기망을 통해 양해를 얻어 출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 밖의 비공개수사관의 권한은 본 법과 여타 법규정에 따른다.

제110조d, 제110조e(삭제)

제111조(검문소) ①특정한 사실에 비추어 형법 제89조a 또는 제129조b와 결부된 제129조a에 서술되어 있는 범죄 가운데 한 범죄 또는 형법 제250조 제1항 제1호의 범죄를 행하였다는 혐의가 있을 경우 당해 처분이 범죄행위자의 체포 또는 범행의 진상규명을 돕는 증거방법의 보전을 위한 것임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실이 존재한다면 공용도로와

광장 기타 일반인에게 개방된 공공장소에 검문소를 설치할 수 있다. 검문소에서는 누구나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소지물의 수색에 응할 의무가 있다.

②검문소의 설치는 판사가 명하며,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검사나 그 수사요원(법원조직법 제152조)도 이를 명할 권한이 있다.

③제1항에 의한 수색 및 신분의 확인에는 제106조 제2항 제1문, 제107조 제2문 전단, 제108조, 제109조, 제110조 제1항과 제2항 및 제163조b와 제163조c를 준용한다.

제111조a(운전면허의 일시 정지) ①운전면허를 박탈(형법 제69조)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 판사는 결정으로 피의자의 운전면허를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 이 처분의 목적이 저해되지 않음을 정당화하는 특정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 특정 차종은 일시 정지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운전면허 일시 정지 근거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법원이 판결을 통해 운전면허를 취소하지 않은 경우에는 운전면허 일시 정지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명령 또는 독일 관청에 의한 운전면허증 압수증명서의 교부와 동시에 운전면허 일시 정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는 해당 운전면허증의 소지자가 독일 내에 거주하는 한, 그 면허증이 유럽연합 회원국 또는 여타 유럽 경제수역에 관한 조약의 당사국 관할관청에서 발급된 경우에도 그러하다.

④형법 제69조 제3항 제2문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회수할 수 있어 이를

압수하였고, 그 압수에 관한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 운전면허 일시 정지에 대한 결정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⑤형법 제69조 제3항 제2문에 의하여 운전면허증을 회수할 수 있음을 근거로 이를 유치, 보전 또는 압수하는 경우, 제1항에 서술된 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판사가 운전면허의 일시 정지를 기각하거나 또는 법원이 판결로 운전면허를 박탈하지 않은 때에는 피의자에게 운전면허증을 반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판결을 통해 형법 제44조에 의한 운전금지를 명한 경우 피의자가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운전면허증의 반환을 유예할 수 있다.

⑥제3항 제2문에서 언급한 국가 이외의 외국 운전면허증을 일시 정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당해 사실을 등록할 때까지는 운전면허증을 압수할 수 있다(제94조 제3항, 제98조).

제111조b(목적물의 보전) ①목적물에 대한 추징과 몰수 요건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11조c의 압수에 의해 목적물을 보전할 수 있다. 제94조 제3항은 이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②등가물의 추징이나 몰수를 위한 요건이 존재함을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보전을 위하여 제111조d에 따른 압류를 명할 수 있다.

③긴급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때에는 법원은 제1항 제1문 및 제2항에서 언급한 처분을 6개월 이내에 취소하여야 한다. 특정한 사실에 비추어 범죄혐의가 있고, 제1문에 정한 기간이 수사의 어려움과 그 범위 또는 기타 중요한 사유로 이를 지속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기하여 처분을 연장할 수 있다. 긴급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처분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④제102조 내지 제110조를 준용한다.

⑤형법 제73조 제1항 제2문의 요건이 존재한다는 것만을 이유로 추징을 명하지 않았다면 제1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한다.

제111조c(압수를 통한 보전) ①제111조b의 경우 동산에 대한 압수는 그 목적물을 유치하거나 봉인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해 그 사실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토지에 대한 압수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의 규율대상인 권리에 대한 압수는 등기부에 기재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경매 및 경매 시 압수의 범위에 관한 관리에 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청구권 또는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의 규율을 받지 않는 기타 재산권의 압수는 압류에 의한다. 청구권 기타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관한 민사소송법 규정을 이 경우에 준용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840조 제1항에서 서술하고 있는 의사표시를 위한 최고는 압수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④선박, 선박건조물 및 항공기에 대한 압수는 제1항에 따른다. 선박등기부, 선박건조등기부 또는 항공기저당권등기부에 등기되어 있는 선박, 선박건조물 및 항공기는 그 압수를 등기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등기가 가능하지만 등기되어 있지 않은 선박건조물이나 항공기에 대하여는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등기를 신고할 수 있으며, 집행명의를 근거로

등기부 등록을 요구할 수 있는 자의 신고와 관련된 규정을 준용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한 목적물의 압수는 민법 제136조에서 의미하는 양도금지의 효과를 발생시키며, 당해 금지는 양도 이외의 처분도 대상으로 한다.

⑥압수된 동산은 압수처분 대상자에게

1. 그 가액의 즉각적인 납입이 있는 경우 이를 반환하거나 또는
2. 언제든지 이를 철회할 수 있다는 조건 하에 절차가 종결할 때까지 잠정적으로 계속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1문 1호에 의해 납입된 금액은 목적물을 대체한다. 제1문 2호의 처분은 피처분자의 담보제공 또는 일정한 준수사항의 부과를 조건으로 할 수 있다.

제111조d(압류를 통한 보전) ①등가물의 추징이나 몰수 및 벌금형 또는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형사소송비용을 이유로 압류를 명할 수 있다. 벌금형 또는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형사소송비용을 이유로 한 압류는 피의자에게 형을 부과하는 판결이 내려진 경우에만 명할 수 있다. 집행비용이나 경미한 액수의 보전을 위해서는 압류하지 않는다.

②민사소송법 제917조, 제920조 제1항 및 제923조, 제928조, 제930조 내지 제932조 제1항을 준용한다.

③벌금형이나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이유로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피의자가 보전대상 목적물을 자신의 변론비용 또는 자신이나 가족의 생활비로 지불하는 데 필요로 하는 때에는 피의자의 신청에 기하여 그 집행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11조e(압수 또는 압류 명령) ①압수(제111조c) 및 압류(제111조d) 명령은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검사도 권한이 있다. 동산의 압수(제111조c 제1항)와 관련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수사용원(법원조직법 제152조)도 이를 명할 수 있다.

②검사가 압수나 압류를 명한 경우에 1주일 이내에 법원에 당해 명령에 대한 추인을 신청해야 한다. 동산에 대한 압수를 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처분대상자는 모든 경우에 언제든지 법원의 판단을 신청할 수 있다.

③압수 및 압류의 집행에 관해서는 범죄행위 피해자가 이를 알고 있거나 형사절차 진행 중에 이를 알게 된 때에는 검사가 즉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피해자 개개인에게 통지를 하는 것이 과도한 비용을 소모하거나 범죄행위를 근거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전자관보에 1회 공표함으로써 당해 통지를 할 수 있다. 다른 적절한 방식으로 추가 통지를 공표할 수도 있다. 피해자의 청구권 관철을 위해 보전된 재산가치에 대한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데 불가피한 경우에만 신상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보전처분이 종료한 이후 검사는 전자관보에 게재된 내용을 삭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11조f(압수이행 및 압류집행의 관할) ①압수(제111조c)는 검사가 이행하여야 하며 동산 압수인 경우에는 그 보조공무원의 권한에 속한다. 제98조 제4항을 준용한다.

②토지등기부 및 제111조c 제4항에 열거된 등기부에 필요한 등기는 검사 또는 그 압수를 명한 법원의 요청에 따라 행해진다. 제111조c 제4항의 신고에 대해서도 이를 준용한다.

③압류가 동산 저당에 관한 법규정에 따라 집행되어야 한다면 사법징수규칙 제2조에 기술된 관청, 집달관, 검사 또는 그 수사요원(법원조직법 제152조)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이에 관해서는 제2항을 준용한다. 등기된 선박 또는 선박건조물에 대한 저당권설정 명령 및 제111조d에 따른 압류에 따른 청구권보전 명령에 대해서는 검사 또는 검사가 신청한 때에는 압류를 명령한 법원이 관할한다.

④송달에 관해서는 제37조 제1항을 준용하며, 검사의 수사요원(법원조직법 제152조)에게 그 이행을 위임할 수 있다.

⑤압수 또는 압류의 집행과 관련하여 내려진 처분에 대해 관련 당사자는 언제든지 법원의 판단을 신청할 수 있다.

제111조g(압수와 관련된 피해자 청구권의 우선충족) ①제111조c에 따른 목적물의 압수와 제111조d에 따른 압류집행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청구권을 근거로 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집행의 방법으로 행사되는 피해자의 처분권에 반할 수 없다.

②제1항에 따른 강제집행이나 압류의 집행은 압수(제111조c) 또는 압류(제111조d)를 관할하는 판사의 허가를 필요로 한다. 이는 결정에 의하며, 당해 결정에 대해 검사, 피의자 및 피해자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 범죄행위에 의한 청구권 발생사실을 피해자가 소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94조를 적용한다.

③제111조c 제5항에 따른 양도금지는 압수가 행해진 시점부터 효력을 가지며, 압수가 지속되는 기간 중에 압수된 목적물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행하거나 압류를 집행한 피해자에 대해서도 양도가 금지된다. 토지등기부에 국가를 수혜자로 하여 등록된 양도금지는 민법 제892조 제1항 제2문의 적용과 관련하여 압수가 지속되는 기간 중에 양도금지의 수혜자로서 토지등기부에 등기된 피해자를 위한 등록으로도 간주한다. 등기관청에 허가결정을 제시하여 청구권이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 제111조c 제4항에 열거된 선박, 선박건조물 및 항공기의 양도금지에 대해서도 제2문과 제3문을 준용한다. 피해자에 대한 양도금지는 압수가 취소되더라도 유효하다. 제1문과 제5문은 동산재산에 대한 압류의 집행(제111조d)으로 발생한 저당권의 효력에 대해서도 이를 준용한다.

④압수 또는 압류를 이유로 저당된 목적물이 형법 제73조 제1항 제2문에 서술된 것과는 다른 사유로 추징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압수 또는 압류 허가가 부당하게 이루어진 경우, 피해자는 제3항에 따른 양도금지로 인해 이익을 얻은 반면 그로 인해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피해자는 해당 제3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⑤목적물의 추징이 명하여졌으나 그 명령의 확정력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경우 제1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한다. 단, 목적물이 몰수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111조h(압류와 관련된 피해자 청구권의 우선충족) ①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청구권을 근거로 피해자가 강제집행을 행하거나 제111조d에

의해 압류가 집행된 토지에 가압류를 집행하는 경우, 그 피해자는 제111조d에 의한 압류집행에 기초한 보전저당권을 자신의 권리보다 후순위로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가압류가 취소되더라도 우선하는 권리에 인정된 순위는 상실되지 않는다. 순위변경에 대해서는 소유권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기타의 사항과 관련해서는 민법 제880조를 준용하여야 한다.

②순위변경은 압류(제111조d)를 관할하는 법관의 허가를 필요로 한다. 제111조g 제2항 제2문 내지 제4문 및 제3항 제3문을 준용한다.

③허가가 부당하게 이루어진 경우 피해자는 순위변경에 의해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④제111조c 제4항에서 의미하는 선박, 선박건조물 또는 항공기에 대해 제111조d에 따른 압류가 집행된 때에도 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한다.

제111조i(일정 기한에 걸친 압수의 유지) ①법원은 제430조와 제442조 제1항에 따른 절차가 다른 법률효과에 의해 제한되었거나 즉각적인 취소가 피해자에게 부당한 것일 수 있는 경우에는 제111조c에 따른 압수 또는 제111조d에 따른 압류가 최장 3개월까지 유지되도록 명령할 수 있다.

②법원이 단지 형법 제73조 제1항 제2문이 의미하는 피해자의 청구권에 반한다는 이유만으로 추징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때에는 법원은 이 사실을 판결문에 적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범죄로 인해 획득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형법 제73조a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판결문에 획득된 사항의 가치에 상응하는 금액을 기재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2문과 제3문에 따른 확인의 범위에서 배제한다.

1. 피해자가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집행을 통해 이미 보유하게 된 부분
2. 피해자가 압수되지 않은 재산 또는 가압류집행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재산으로부터 청구권을 충족한 부분
3. 획득된 물건이 제111조k에 따라 피해자에게 반환된 부분

③법원이 제2항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법원은 결정을 통해 제2항 제2문과 제4문이 의미하는 획득된 사항의 압수(제111조c) 및 압류(제111조d)를 최대 제2항 제3문과 제4문에 따라 확인된 액수만큼 3년간 유지할 수 있다. 당해 기간은 판결의 확정력과 함께 개시한다. 보전된 재산가치는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917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피해자가 유지 기간 내에 압수되지 않은 재산 또는 가압류집행을 통해 저당권을 설정한 재산으로부터 청구권을 충족한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기하여 압수(제111조c) 또는 압류(제111조d)를 취소한다.

④법원은 제3항에 따른 명령 및 확정력의 발생을 범죄행위 피해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당해 통지에는 제5문에 언급한 효과와 강제집행이나 가압류를 통해 청구권을 관철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지적도 첨부하여야 한다. 제111조e 제4항 제1문 내지 제3문을 준용한다.

⑤제3항에서 언급한 기간의 경과와 함께 국가는 형법 제73조e 제1항에 상응하여 제2문에 규정한 재산가치 및 제2항에서 확인된 액수의 대금청구권을 취득한다. 단, 다음 사항에 관련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피해자가 그 사이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집행을 통해 이미 보유하게 된 부분
2. 피해자가 압수되지 않은 재산 또는 가압류집행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재산으로부터 청구권을 충족한 부분

3. 물건이 제111조k에 따라 그 사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거나 피해자가 계속 보유했던 부분
4. 물건이 제111조k에 따라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을 것이고 또한 제3항에 언급된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피해자가 반환을 신청한 부분

이와 함께 국가는 압류집행을 통해 설정된 저당권을 민사소송법 제8장의 규정에 따라 환가처분할 수 있다. 그에 따른 수익 및 남겨진 금액은 국가에 귀속된다. 환가수익이 청구권액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환가처분과 함께 제1문에 따라 발생한 대금청구권은 소멸한다.

⑥제1심 법원은 제5항 제1문에 따른 국가의 권리취득의 발생 및 그 범위를 결정을 통해 확인한다. 제111조l 제4항을 준용한다.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불복할 수 있다. 결정이 확정력을 갖게 된 이후 법원은 제4항에 따라 전자관보에 이루어진 공표를 삭제하도록 조치한다.

⑦유죄를 선고받은 자 또는 압수나 압류의 대상이 된 자가 이를 통해 보전된 피해자의 청구권을 제3항에 언급된 기간 내에 충족시킨 때에는 국가에 귀속된 환가수익 총액 한도 내에서 그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다음의 경우에는 보상이 배제된다.

1. 제5조 1항에 따른 국가의 대금청구권이 국가가 취득한 환가수익을 공제하더라도 존속하는 경우
2. 제3항에서 언급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 3년이 경과한 경우

⑧형법 제76조a 제1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제442조 제1항과 결부된 제440조와 제441조에 따른 절차에도 제2항 내지 제7항을 준용한다.

제111조k(피해자에 대한 동산의 반환) 제94조에 따라 압수되었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보전된 동산 또는 제111조c 제1항에 따라 압수된 동산이 형사절차의 목적을 위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때에는 피해자가 알려져 있고, 제3자의 대립되는 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는 한, 범죄행위로 인해 이를 취거당한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11조f 제5항을 적용한다. 피해자의 권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검사는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다.

제111조l(압수대상 또는 압류대상의 긴급매각처분) ①변질 또는 그 가치의 현저한 하락의 위험이 있거나 또는 그 보관, 관리 또는 유지를 위하여 과도한 비용이 필요하거나 이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제111조c에 의하여 압수되었거나 또는 압류(제111조d)를 근거로 저당된 재산가치는 판결의 확정력이 발생하기 이전에 매각처분할 수 있다. 제111조i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압류(제111조d)를 근거로 저당된 재산가치는 목적에 부합한다고 여겨지는 때에는 이를 매각처분할 수 있다. 당해 매각처분으로 인한 수익은 목적물을 대체한다.

②소송준비절차에서의 긴급매각은 검사가 명한다. 검사의 결정 이전에 목적물이 변질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의 수사요원(법원조직법 제152조)에게도 이러한 권한이 있다.

③공소제기 이후에는 본안을 다루는 법원이 이를 명한다. 법원의 판단 이전에 목적물이 변질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이러한 권한이 있으며, 제2항 제2문을 준용한다.

④이러한 명령을 내리기 전에 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갖는 피의자, 소유권자 및 기타의 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통지가 가능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명령 및 매각처분의 시점과 장소를 이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긴급매각처분은 저당된 물건의 환가처분에 관한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른다. 제2항 및 제3항 제2문의 경우 검사가, 제3항 제1문의 경우에는 본안을 처리하는 법원이 집행법원(민사소송법 제764조)을 대신한다. 민사소송법 제825조에 따라 허용되는 환가처분은 직권으로 또는 제4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자들의 신청에 따라, 제3항 제1문의 경우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긴급매각과 동시에 또는 그 사후에 명할 수 있다. 목적에 부합한다고 여겨지는 때에는 긴급매각처분은 다른 방식을 통해 또는 집달관 이외의 자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⑥소송준비절차에서의 검사나 그의 보조공무원이 행한 명령(제2항 및 제5항)에 대해 처분대상자는 제161조a 제3항에 따라 법원의 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 공소제기 이후에 내려진 검사나 그의 보조공무원이 행한 명령(제2항 제3문, 제5항)에 대해 처분대상자는 본안을 다루는 법원(제3항 제1문)의 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제297조 내지 제300조, 제302조, 제306조 내지 제309조, 제311조a, 제473조a를 준용한다. 법원 그리고 긴급한 경우에는 재판장이 매각처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제111조m(인쇄물 또는 기타 문서의 압수) ①인쇄물이나 기타 문서 또는 형법 제74조d에서 의미하는 목적물과 관련하여 특히 이를 즉각 유포해야 할 공공의 이익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와 같이 그 부정적 결과가 사건의 중요성에 비해 훨씬 더 큰 의미를 갖는다고 보일 때에는 제111조b 제1항에 의한 압수를 명할 수 없다.

②가벌성이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분리가능한 문서의 일부분은 압수대상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압수명령에서 이 부분에 대한 압수는 계속 제한될 수 있다.

③압수명령에는 문서 가운데 압수의 원인을 제공한 해당부분을 적시하여야 한다.

④처분대상자가 압수의 원인을 제공한 문서 일부의 복사나 배포를 배제하는 경우에는 압수를 면할 수 있다.

제111조n(인쇄물 압수명령 및 그 취소) ①정기간행물 또는 형법 제74조d에서 의미하는, 이에 준하는 목적물에 대한 압수는 판사만이 명할 수 있다. 기타 인쇄물 또는 형법 제74조d에서 의미하는 기타 목적물의 압수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 검사가 명할 수 있다. 판사가 이를 3일 이내에 추인하지 않으면 검사의 명령은 효력을 상실한다.

②압수 후 2개월 이내에 공소가 제기되지 않거나 별도의 몰수신청이 없는 때에는 압수를 취소하여야 한다. 수사의 범위가 특수하여 제1문의 기간으로 충분하지 못한 경우 법원은 검사의 신청에 기하여 그 기간을 2개월 연장할 수 있다. 당해 신청은 1회에 걸쳐 반복할 수 있다.

③공소도 제기되지 않았고 별도의 몰수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검사가 이를 신청한 경우 압수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111조o, 제111조p(실효)[1)]

1) 재산형에 근거한 압류에 관한 제111조o 및 재산압수에 관한 제111조p는 연방헌법재판소가 2002년 3월 20일 판결을 통해 재산형에 관한 형법 제43조a를 위헌으로 선고함으로써 그 적용영역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제 9 장 구속 및 일시 체포

제112조(구속의 요건; 구속사유) ①피의자에 대한 범죄 혐의가 유력하고 구속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피의자에 대해 구속을 명할 수 있다. 사안의 중대성과 예상되는 형벌 또는 보안처분에 비추어 비례성이 없을 때에는 구속 명령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특정한 사실에 근거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진실탐지가 곤란하게 될 위험(증거인멸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구속사유가 존재한다.

1. 피의자가 도주 중이거나 은신 중임이 확인된 경우
2. 개별사건의 정황을 평가해 볼 때 피의자가 형사절차를 회피할 위험(도주의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또는
3. 피의자의 행동에 비추어 다음 사항에 대한 유력한 혐의가 존재하는 경우

a) 증거방법의 말소, 변경, 제거, 은폐 또는 위조

b) 공동피의자, 증인 또는 감정인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c) 타인에게 그와 같은 행위를 사주

③국제형법 제6조 제1항 1호 또는 형법 제129조b와 결부된 제129조a 제1항에 따른 범죄행위 또는 형법 제211조, 제212조, 제226조, 제306조b나 제306조c에 따른 범죄행위 또는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를 위협하는 형법 제31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유력한 혐의가 있는 피의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구속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구속을 명할 수 있다.

제112조a(여타의 구속사유) ①피의자에게 다음에 해당하는 범죄를 행하였다는 유력한 혐의가 있고, 특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확정판결 이전에 동종의 중대한 범죄를 행할 위험이 있거나 그 범죄를 계속할 위험이 있고 이러한 급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2호의 경우 1년 이상의 자유형이 예상되는 때에도 구속사유가 존재한다.

1. 형법 제174조, 제174조a, 제176조 내지 179조 또는 제23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범죄행위 또는
2. 형법 제89조a, 제125조a, 제224조 내지 제227조, 제243조, 제244조, 제249조 내지 제255조, 제260조, 제263조, 제306조 내지 제306조c, 제316조a 또는 마약류법 제29조 제1항 1호, 4호, 10호 또는 제3항, 제29조a 제1항, 제30조 제1항, 제30조a 제1항에 따른, 법질서에 중대한 침해를 유발하는 범죄행위의 반복 또는 계속

제1문 2호에서 의미하는 유력한 혐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확정력을 갖는 형사절차를 포함한 여타의 형사절차의 대상이거나 대상이었던 범죄행위도 함께 고려한다.

②제112조에 의한 구속영장 발부를 위한 요건이 성립하고 제116조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구속영장 집행이 중지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113조(경미한 범죄에 대한 구속의 요건) ①최고 6개월의 자유형이나 180일의 일수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는 행위의 경우에는 증거인멸을 이유로 구속을 명할 수 없다.

②전항의 경우 피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만 도주위험을 이유로 구속을 명할 수 있다.

1. 소송절차를 이미 회피한 적이 있거나 도주의 준비를 한 경우
2. 이 법의 효력범위 내에 주소나 거소가 없는 경우 또는
3.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제114조(구속영장) ①법관은 서면 구속영장을 통해 구속을 명할 수 있다.

②구속영장에는 다음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피의자
2. 피의자가 유력한 혐의를 받고 있는 행위, 그 수행 시간 및 장소, 범행에 해당하는 법률구성요건과 적용될 형법규정
3. 구속사유 및
4. 국가안보를 저해하지 않는 한, 유력한 범죄혐의와 구속사유의 근거가 되는 사실

③제112조 제1항 제2문을 적용해야 할 여지가 있거나 피의자가 이 규정을 원용할 때에는 당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14조a(구속영장의 교부) 피의자에게는 체포 시에 구속영장 사본을 교부하여야 하고, 만일 피의자가 독일어를 충분히 구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의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한 영장도 함께 교부하여야 한다. 영장사본 및 번역본의 교부가 불가능할 때에는 피의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체포의 사유와 피의사실의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지체 없이 구속영장의 사본 또는 그 번역본이 교부되어야 한다.

제114조b(고지의무) ①체포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즉시 그리고 피의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된 서면으로 그의 권리에 관해 고지하여야 한다. 서면고지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구두로 고지하여야 한다. 서면고지가 불가능한 때에는 구두로 고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즉시 가능한 방식에 따라 서면고지가 사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피의자는 자신이 당해 고지를 받았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확인해야 하며, 피의자가 이를 거부할 때에는 그 사실을 문서에 기록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고지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피의자가 지체 없이, 늦어도 체포된 그 다음 날까지는 그를 신문하고 체포상태의 지속에 대해 결정하는 법원에 인치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
2. 피의자는 피의사실에 대해 의사를 표명하거나 사안에 대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3. 피의자는 자신의 면책을 위해 개별적인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
4. 피의자는 언제든지, 즉 신문을 받기 이전에도 자신이 선임하고자 하는 변호인에게 문의할 수 있다는 사실
5. 피의자는 자신이 선택한 의사의 진단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
6. 피의자는 수사의 목적을 저해하지 않는 한, 가족 또는 피의자가 신뢰하는 사람과 교신할 수 있다는 사실

독일어 구사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피의자에게는 그가 형사절차에서 무료 통역을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외국 국적의 피의자에게는 고국 영사관에 자신의 체포사실을 통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영사관으로부터 통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114조c(가족에 대한 통지) ①체포된 피의자에게는 수사의 목적을 저해하지 않는 한, 지체 없이 가족 또는 그가 신뢰하는 자와 교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②법원에 구인된 이후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이 집행되는 경우 법원은 피의자의 가족 또는 피의자가 신뢰하는 자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구속의 지속과 관련된 모든 결정에 대해서도 동일한 의무가 존재한다.

제114조d(행형시설에 통지하여야 할 사실) ①법원은 피의자를 담당하는 행형시설에 수용신청과 함께 구속영장의 사본을 교부한다. 이와 함께 다음 사실도 통보한다.

1. 절차를 주도하는 검찰 및 제126조에 따른 관할법원
2. 제114조c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
3. 제119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결정과 여타 처분
4. 행형시설이 담당하는 과제의 이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절차와 관련된 여타의 결정
5. 공판기일 및 그에 따라 행형시설이 담당하는 과제의 이행에 필요한 사실
6. 판결의 확정력의 발생 시점 및
7. 특히 피의자의 인격과 여타 중요한 의미가 있는 형사절차를 포함하여 행형시설이 담당하는 과제의 이행에 필요한, 피의자 관련 신상정보

통지된 사실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제1문과 제2문을 준용한다. 행형기관이 다른 경로를 통해 이미 인지하고 있는 사실은 통지대상에서 제외한다.

②검사는 법원이 제1항에 따른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을 지원하며 행형시설에 대해 직권으로 특히 제1항 제2문 7호에 따른 정보 및 제119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여타 조치에 대해 통지한다. 이밖에도 검사는 행형시설에 대해 공소장작성 사실을 통지하며, 제126조 제1항에 따른 관할법원에 대해 공소제기 사실을 통지한다.

제114조e(행형시설에 의한 사실의 통지) ①행형시설은 구속의 집행 중에 획득한 사실 가운데 행형시설의 관점에서 수신인에게 의미가 있고 또한 다른 방식으로 이미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이라면 이를 직권으로 법원과 검사에게 통지한다. 법원과 검사에게 사실을 통지할 수 있는 행형시설의 여타 권한은 이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115조(관할법관에의 구인) ①피의자가 구속영장을 근거로 체포되었다면, 그 피의자는 즉시 관할법원에 인치되어야 한다.

②인치 직후, 늦어도 그 익일에 법원은 혐의사실에 관하여 피의자를 신문하여야 한다.

③신문할 때 피의자에게는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정황 및 혐의사실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권리와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고지해 주어야 한다. 피의자에게는 혐의근거 및 구금사유를 반박할 기회와 그에게 유리한 사실을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④구속이 계속되는 경우 피의자에게는 항고권 및 기타 법적 구제수단(제117조 제1항, 제2항, 제118조 제1항, 제2항, 제119조 제5항, 제119조a 제1항)에 대해 고지하여야 한다. 제304조 제4항과 제5항은 이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115조a(가장 가까운 지방법원 법관에의 인치) ①피의자 체포 후 늦어도 그 익일까지 그를 관할법원으로 인치할 수 없는 경우 지체 없이, 늦어도 체포 익일까지는 관할 지방법원에서 가장 가까운 지방법원의 법관에게 인치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인치 후 즉시, 늦어도 그 익일까지는 피의자를 신문하여야 한다. 신문 시에는 가능한 한 제115조 제3항을 적용한다. 신문을 통해 구속영장이 취소되거나 검사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제120조 제3항) 또는 피체포자가 구속영장에 지정된 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피체포자를 석방하여야 한다. 피체포자가 구속영장이나 그 집행에 관하여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보이는 이의를 제기한 경우 또는 법원이 구속의 계속에 대하여 의문을 갖는 경우, 법원은 즉시 관할법원과 관할검사에게 상황에 비추어 가장 신속한 방식으로 이 사실을 통지하고, 관할법원은 즉시 구속영장을 취소하거나 그 집행을 정지할 것인지를 심사한다.

③피의자가 석방되지 않으면 그의 요구에 따라 제115조에 따른 신문을 위하여 관할법원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피의자에게는 이러한 권리를 지적하고 제115조 제4항에 따른 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116조(구속영장의 집행정지) ①단지 도주위험만을 근거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 더 가벼운 처분으로도 구속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면 법관은 구속영장의 집행을 정지시킨다. 고려대상이 되는 더 경한 처분은 다음과 같다.

1. 정해진 시간에 판사, 형사소추기관 또는 이들이 지정한 사무소에 출두하여야 한다는 지시

2. 판사의 승인 없이는 주소, 거소 또는 일정지역을 이탈할 수 없다는 지시
3. 지정된 자의 감독 하에서만 주거를 이탈할 수 있다는 지시
4. 피의자 또는 제3자가 적절한 담보를 제공

②증거인멸을 근거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 더 경한 처분으로도 증거인멸위험을 현저히 감소시킬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면 법관은 구속영장의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고려대상이 되는 더 경한 처분은 예컨대 공동피의자, 증인 또는 감정인과 연락하지 않아야 한다는 지시이다.

③피의자가 특정한 지시를 준수할 것이고 이를 통해 구금의 목적이 달성되리라고 예상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존재하는 경우 법관은 제112조a에 의하여 발부된 구속영장의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④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판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 구속영장의 집행을 명한다.

1. 피의자가 그에게 부과된 의무나 제한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
2. 피의자가 도주를 준비하거나, 적법한 소환에 대하여 충분한 해명 없이 불응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에 대한 신뢰가 정당한 것이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경우 또는
3. 새로이 발생한 상황에 의하여 체포가 필요한 경우

제116조a(담보제공) ①현금이나 유가증권의 공탁, 담보권의 설정 또는 적절한 자의 보증 등을 통하여 담보가 제공된다.

②법관은 자유재량에 의하여 담보의 액수와 종류를 정한다.

③본 법의 효력범위 내에 거주하지 않는 피의자가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구속영장의 집행정지를 신청한 때에는 관할법원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게 송달된 서류의 수취에 관해 전권을 부여할 의무가 있다.

제116조b(구속 집행 우선) 구속은 범죄인 인도를 위한 구금, 범죄인 인도를 위한 일시구금, 추방구금의 집행에 우선한다. 여타의 자유박탈처분의 집행이 구속에 우선한다. 다만 구속의 목적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법원이 달리 결정을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7조(구속심사) ①구속 중에 있는 피의자는 구속영장이 취소될 수 있는지 또는 그 집행이 제116조에 의하여 정지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언제든지 법원의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구속심사의 신청은 항고와 함께 제기할 수 없다. 그러나 구속심사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해 항고할 권리는 이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③판사는 구속의 계속에 관한 장래의 결정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개개의 사실에 대한 수사를 명령할 수 있으며, 이러한 수사가 이루어진 이후 새로운 심사를 할 수 있다.

제118조(구두변론) ①구속심사의 경우 피의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법원의 재량에 따른 직권으로 구두변론을 거친 이후 재판한다.

②구속영장에 대한 항고가 제기된 경우 항고절차 중에도 피의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구두변론에 의해 재판할 수 있다.

③구두변론 이후 구속이 계속되는 경우 구속이 최소 3개월, 마지막 구두변론 이후 최소 2개월을 경과한 때에만 피의자는 또 다른 구속에 대한 청구권을 갖는다.

④공판이 계속 중이거나 자유형 또는 자유를 박탈하는 보안처분을 선고한 판결이 내려진 경우에는 구속에 대한 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⑤구두변론은 지체 없이 수행되어야 하며, 피의자의 동의 없이는 신청 후 2주일을 초과하여 기일을 정할 수 없다.

제118조a(구두변론의 수행) ①구두변론의 장소와 시간은 검사,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피의자가 변론에의 출석을 포기하거나 피의자가 변론장소로부터 원격지에 있거나 질병 또는 피의자를 변론에 구인하는 데 제거할 수 없는 기타의 장애가 존재하지 않는 한, 피의자를 변론에 구인하여야 한다. 피의자가 구두변론에 구인되지 않은 경우 변호인이 변론에서 피의자의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구두변론을 위한 변호인을 선임해야 한다. 제142조, 제143조를 준용한다.

③구두변론에서는 출석한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증언청취의 방법과 범위는 법원이 결정한다. 변론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제271조 내지 제273조를 준용한다.

④구두변론의 종결과 함께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늦어도 1주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제118조b(신청권자) 구속심사의 신청(제117조 제1항)이나 구두변론의 신청과 관련해서는 제297조 내지 제300조 및 제302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19조(구속의 집행) ①도주위험, 증거인멸위험 또는 동종의 범행을 반복할 위험(제112조, 제112조a)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체포된 피의자에게 일정한 제한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다음 사항을 명령의 대상으로 고려한다.

1. 면회와 통신에 대한 허가
2. 면회, 통신, 서신 및 소포에 대한 검열
3. 면회 시 물건의 전달에 대한 허가
4. 피의자를 특정 수감자 또는 수감자 전원으로부터 분리
5. 다른 수감자와 함께 수용되거나 같은 장소에 체류하는 것의 제한 또는 배제

당해 명령은 법원이 내린다. 법원의 명령이 제 때에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행형시설이 임시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이 그 사이 문제를 처리하지 않은 이상, 당해 명령은 3일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구해야 한다. 피의자에게는 명령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문 2호에 따른 명령은 면회와 통신을 단절하고 서신과 소포를 차단할 권한도 포함한다.

②명령의 이행은 명령을 내린 기관의 책임영역에 속한다. 법원은 명령 이행의 철회를 유보하여 검사에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을 받은 검사는 이행과 관련하여 그 보조공무원과 행형시설의 보조를 이용할 수 있다. 위임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있다.

③제1항 제2문 2호에 따른 통신검열이 명령된 때에는 통신연결이 이루어진 직후 피의자의 대화상대방에게 의도하는 검열에 대해 통지하여야 한다. 피의자에게는 통신이 개시되기 전에 제때에 당해 통지의무에 대해 알려주어야 한다.

④제148조와 제148조a는 이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피의자가 하기의 상대방과 행한 교신에 대해서는 제148조와 제148조a가 적용된다.

1. 피의자를 관할하는 보호관찰기관
2. 피의자를 관할하는 행장감독기관
3. 피의자를 관할하는 사법보조기관
4. 연방 및 각주의 대의기관
5. 연방헌법재판소 및 피의자를 관할하는 주 헌법재판소
6. 피의자를 관할하는 주 시민상담기관
7. 정보보호와 정보의 자유를 담당하는 연방특임기관, 주에서 정보보호 규정의 준수를 감독하는 각 주의 기관, 연방정보보호법 제38조에 따른 외국인청
8. 유럽의회
9. 유럽인권법원
10. 유럽재판소
11. 유럽 정보보호특임기관
12. 유럽 시민상담기관
13. 고문, 비인간적이고 인간을 비하하는 처우나 형벌의 방지를 위한 유럽 위원회
14. 인종주의와 불관용 척결을 위한 유럽 위원회

15. 국제연합 인권위원회
16. 인종차별의 제거와 여성차별의 제거를 위한 국제연합 위원회
17. 국제연합 반고문 위원회 및 고문방지를 위한 국제연합 하부위원회 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국가단위 예방기관
18. 제53조 제1항 제1문 1호와 4호에 언급된 자로서 당해 조항에 열거된 내용과 관련
19. 법원이 별도의 명령을 내리지 않은 한,
    a) 행형기관의 이사회
    b) 피의자 본국의 영사

제1문과 제2문에 따른 요건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처분은 제2항에 따라 관할권을 갖는 기관이 내린다.

⑤본 조항에 따라 내려진 결정 또는 여타의 처분에 대항하여 법적 구제수단으로서 항고가 허용되지 않는 한, 법원의 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 당해 신청은 결정 또는 처분을 유예하는 효과를 갖지 않는다. 그러나 법원은 임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은 구속이 명령된 피의자에 대해 다른 자유박탈 처분이 집행되는 경우(제116조b)에도 적용된다. 이 경우 법원의 관할은 제126조에 따라 정한다.

제119조a ①구속의 집행과 관련된 행정관청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항하여 법원의 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구속집행 중에 신청한 행정관청의 결정이 3주 이내에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도 법원의 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

②법원의 재판에 대한 신청은 결정 또는 처분을 유예하는 효과를 갖지 않는다. 그러나 법원은 임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③집행상의 결정 또는 처분을 관할하는 기관도 법원의 재판에 대항하여 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제120조(구속영장의 취소) ①구속을 위한 요건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구속의 계속이 사안의 중요성 및 예상되는 처벌이나 보안처분에 비추어 비례성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속영장을 취소하여야 한다. 특히 피고인이 무죄석방되거나, 공판절차의 개시가 기각되거나 또는 절차가 단지 잠정적으로 중지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구속영장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상소제기를 이유로 피고인의 석방을 저지해서는 안 된다.

③공소제기 이전에 검사의 신청이 있는 경우 구속영장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청과 동시에 검사는 피의자의 석방을 명할 수 있다.

제121조(6개월 이상의 구속) ①자유형 또는 자유를 박탈하는 보안처분의 판결이 선고되지 않은 한, 수사가 특별히 어렵거나 수사의 범위가 특별히 넓은 경우 또는 기타 중요한 사유에 비추어 판결을 선고할 수 없고 당해 구금의 계속이 정당하다고 여겨지는 때에만 동일한 행위를 이유로 6개월 이상 구속의 집행이 가능하다.

②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116조에 따른 구속영장의 집행이 정지되지 않거나 주 고등법원이 구속의 계속을 명하지 않은 때에는 6개월이 경과하면 구속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서술된 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에 소송기록이 주 고등법원에 제출된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는 기간의 진행이 정지된다. 기간의 종료 이전에 공판이 시작된 때에는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기간의 진행이 정지된다. 공판이 정지되고 그 즉시 소송기록을 주 고등법원에 제출한 경우에도 당해 법원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기간의 진행이 정지된다.

④법원조직법 제74조a에 따라 형사합의부가 관할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법원조직법 제120조에 따라 관할 주 고등법원이 재판한다. 법원조직법 제120조에 의하여 주 고등법원이 관할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연방법원이 재판한다.

제122조(주 고등법원에 의한 특별 구속심사) ①제121조에 해당하는 사례에서 구속의 계속이 필요하다고 보거나 검사가 그 계속을 신청하는 때에는 관할법원은 검사를 경유하여 소송기록을 주 고등법원에 제출한다.

②당해 재판 이전에 피의자와 그 변호인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주 고등법원은 구속에 관하여 구두변론을 거쳐 재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18조a를 준용한다.

③주 고등법원이 구속의 계속을 명한 때에는 제114조 제2항 4호를 준용한다. 기타 구속심사(제117 조 제1항)는 자유형이나 자유를 박탈하는 보안처분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주 고등법원의 관할에 속한다. 주 고등법원은 일반규정에 따른 관할법원에 대하여 매회 최장 3개월에 걸쳐 구속심사를 위임할 수 있다. 제118조 제1항의 경우 주 고등법원은 재량에 따라 구두변론신청에 관하여 재판한다.

④제121조 제1항에 따른 요건의 심사는 다른 소송절차에 관련된 경우에도 계속 주 고등법원의 관할에 속한다. 당해 심사는 최소한 3개월 후에 반복되어야 한다.

⑤주 고등법원은 제116조에 따른 구속영장의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⑥동일한 사안과 관련하여 다수의 피의자가 구속 상태에 있는 경우, 주 고등법원은 제121조 및 그 이전 조항들에 따라 아직 주 고등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계속에 대해서도 재판할 수 있다.

⑦연방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결정과 관련해서는 연방법원이 주 고등법원을 대체한다.

제122조a(1년 이상의 구속) 제12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례에서 구속이 제112조a의 구금사유에 근거한 때에는 그 집행이 1년을 초과하여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

제123조(더 경한 처분의 취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속집행의 정지를 위한 처분(제116조)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구속영장이 취소된 경우 또는
2. 구속 또는 선고된 자유형이나 자유를 박탈하는 보안처분이 집행된 경우

②동일한 요건 하에 아직 추징되지 않은 보증금을 해제한다.

③피의자를 위하여 보증금을 제공한 자가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피의자가 출두하도록 한 경우 또는 피의자의 도주기도에 관한 의혹을

뒷받침하는 사실을 제 때에 알려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그 보증금의 제공자는 보증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제124조(보증금의 추징) ①피의자가 조사를 회피하거나 선고된 자유형 또는 자유를 박탈하는 보안처분의 집행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아직 해제되지 않은 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된다.

②피의자 및 피의자를 위하여 보증금을 제공한 자에게는 재판에 앞서 의견진술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들은 당해 재판에 대항하여 즉시항고만을 제기할 수 있다. 항고재판 이전에 이들과 검사에게는 신청에 대해 구두로 근거를 제시하고, 이행된 수사에 관해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③추징을 선고하는 재판은 피의자를 위해 보증금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 민사법관이 임시집행이 가능하다고 선고한 종국판결로서의 효력을 가지며, 항고기간이 종료한 후에는 확정력 있는 민사종국판결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25조(구속영장발부의 관할) ①공소제기 이전에는, 토지관할이 있거나 피의자가 체류하고 있는 지역의 지방법원 판사가 검사의 신청에 기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검사의 신청이 불가능하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②공소제기 이후에는 그 사건을 다루는 법원이, 상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불복대상이 된 판결을 선고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긴급한 경우에는 재판장도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제126조(여타의 결정에 대한 관할) ①공소를 제기하기 전에 구속이나 구속집행의 정지(제116조), 그 집행(제116조b) 및 제119조a에 따른 신청에 관계된 법원의 여타 결정이나 처분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에게 관할권이 있다. 항고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경우에는 그 선행재판을 한 법원에게 관할권이 있다. 소송준비절차가 다른 장소에서 수행되었거나 구속이 다른 장소에서 집행된 경우에는 법원은 검사의 신청에 기하여 그 지역 지방법원으로 관할을 이송할 수 있다. 그 장소가 수개의 법원의 관할구역으로 나누어져 있는 경우에는 주정부가 법규명령으로 관할 지방법원을 지정한다. 주정부는 이러한 권한을 주 사법행정부에 위임할 수 있다.

②공소제기 이후에는 그 사안을 다룬 법원에게 관할권이 있다. 상고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불복대상이 된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게 관할권이 있다. 특히 제119조에 따른 처분을 포함한 개별처분들은 재판장이 명령한다. 긴급을 요하는 경우 검사가 동의한 때에는 재판장도 구속영장을 취소하거나 그 집행을 정지(제116조)할 수 있으며, 검사가 동의하지 않은 때에는 지체 없이 법원의 재판이 이루어져야 한다.

③상고법원이 불복된 판결을 파기하고, 당해 재판에서 제120조 제1항의 요건이 존재한다고 명확히 밝혀진 때에는 상고법원이 구속영장을 취소할 수 있다.

④제121조 및 제122조는 이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126조a(임시수용) ①책임무능력 또는 한정책임능력(형법 제20조 및 제21조)의 상태에서 위법행위를 저질렀고, 따라서 정신병원이나 금단

치료소에 수용하도록 명령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이는 자에 대해 법원은 공공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면 시설수용영장을 통해 해당 시설에 임시 수용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②임시수용에 대해서는 제114조 내지 제115조a, 제116조 제3항과 제4항, 제117조 내지 제119조a, 제123조, 제125조, 제126조를 준용하며, 이와 관련하여 주 고등법원은 임시수용의 요건이 계속 존재하는지를 심사한다.

③임시수용을 위한 요건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법원이 판결에서 정신병원감호 또는 금단치료소감호를 명하지 않은 경우 시설수용영장을 취소하여야 한다. 상소가 제기되었다고 해서 석방을 저지하지는 못한다. 제120조 제3항을 준용한다.

④피수용자에게 법정대리인 또는 민법 제1906조 제5항이 의미하는 대리인이 있을 때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결정은 이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7조(임시체포) ①범죄현장의 직접 당사자이거나 이로 인하여 추적되고 있는 자가 도주의 혐의가 있거나 그 신원을 즉시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법관의 명령 없이도 누구나 그를 임시로 체포할 수 있다. 검사나 경찰직 공무원에 의한 개인 신원의 확인은 제163조b 제1항에 따른다.

②긴급을 요하는 경우 구속영장이나 시설수용영장의 요건이 존재한다면 검사와 경찰공무원도 임시체포권한을 갖는다.

③고소가 있어야만 형사소추가 가능한 범죄행위의 경우 고소가 아직 제기되지 않은 때에도 임시체포가 허용된다. 권한의 위임이 있거나

처벌요구가 있는 때에만 형사소추가 가능한 범죄의 경우에도 이와 동일하다.

④검사와 경찰공무원의 임시체포에 관해서는 제114조a 내지 제114조c를 준용한다.

제127조a(체포명령의 배제 또는 체포의 유지) ①피의자가 본 법의 효력범위 내에 주소나 거소를 가지고 있지 않고 단지 도주위험만을 이유로 구속영장 발부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피의자에 대한 체포명령 또는 그 체포의 유지를 배제할 수 있다.

1. 범죄행위를 이유로 자유형을 선고하거나 자유를 박탈하는 보안처분을 명할 것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2. 피의자가 예상되는 벌금형과 소송비용에 대하여 적절한 담보를 제공한 경우

②제116조 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127조b(공판을 위한 구속) ①다음의 경우에도 검사와 경찰공무원은 범죄현장의 당사자 또는 그로 인하여 추적을 받는 자를 임시 체포할 권한이 있다.

1. 신속절차를 통해 즉각적인 판결이 예상되는 경우
2. 특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체포된 자가 공판에 출석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경우

제114조a 내지 제114조c를 준용한다.

②체포 후 1주일 이내에 공판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만

제1항을 근거로 범죄행위의 유력한 혐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제128조 제2항 제2문)을 발부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 경우 구속영장은 체포일을 기점으로 최장 1주일을 기한으로 하여야 한다.

③구속영장의 발부에 관해서는 신속재판을 관할하는 판사가 판단한다.

제128조(지방법원 판사로의 인치) ①체포된 자가 석방되지 않은 이상, 지체 없이 늦어도 체포일 익일까지는 체포지의 지방법원 판사에게 그를 인치하여야 한다. 판사는 제115조 제3항에 따라 인치된 자를 신문한다.

②판사가 체포를 정당하지 않다고 보거나 체포의 근거가 제거되었다고 보는 경우에는 석방을 명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판사는 검사의 신청에 기하여, 검사가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직권으로 구속영장이나 시설수용영장을 발부한다. 제115조 제4항을 준용한다.

제129조(공소제기 이후의 구인) 체포된 자에 대하여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즉시 또는 그에 대한 처음 구인이 이루어졌던 법관의 지시에 기하여 관할법원으로 구인되어야 하며, 당해 법원은 늦어도 체포일 익일까지는 체포된 자의 석방, 구금 또는 임시수용에 관하여 재판하여야 한다.

제130조(친고죄 관련 구속영장) 고소가 있어야만 형사소추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한 혐의를 근거로 고소가 제기되기 전에 구속영장을 발부한 경우에는 고소권자 또는 고소권자가 다수인 때에는 그 가운데 최소한 1인에게 구속영장의 발부 사실을 통지하고, 1주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판사가 지정한 기간 이내에 고소가 없으면 구속영장이 취소된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 기간 내에 형사고소가 없으면 구속영장을 취소하여야 한다. 권한의 위임이나 처벌요구가 있어야만 형사소추가 가능한 경우에도 동일하다. 제120조 제3항을 적용한다.

제 9 장a 형사소추 및 형벌집행을 보장하기 위한 기타 처분

제131조(지명수배) ①구속영장 또는 시설수용영장에 근거하여 판사나 검사 또는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검사의 수사요원(법원조직법 제152조)이 지명수배를 지시할 수 있다.

②구속영장이나 시설수용영장 발부의 요건이 존재하고, 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기다릴 경우 추적수사가 성공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임시체포를 위해 필요하다면 검사나 그 수사요원(법원조직법 제152조)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구속영장 또는 시설수용영장의 발부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늦어도 1주일 이내에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

③중대한 범죄와 관련하여 제1항과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판사와 검사는 다른 형태의 소재수사가 성공할 수 없거나 현저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공개추적수사를 지시할 수 있다. 동일한 요건하에서 긴급을 요하고 또한 판사나 검사와 제 때에 접촉할 수 없는 상황인 때에는 검사의 수사요원(법원조직법 제152조)도 당해 권한을 갖는다. 제2문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검사의 결정을 받아야 하다. 검사의 확인이 24시간 이내에 이루어지지 않는 때에는 당해 명령은 효력을 상실한다.

④지명수배장에는 피의자를 최대한 정확하게 묘사하고 필요하다면 피의자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며, 사진을 첨부하는 것도 허용된다. 피의사실인 범죄, 범행 장소와 시간 및 체포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정을 기재할 수 있다.

④제115조 및 제115조a를 준용한다.

제131조a(소재확인을 위한 지명수배) ①피의자 또는 증인의 소재수사를 위한 지명수배는 그 소재지가 알려져 있지 않은 때에 명령할 수 있다.

②제1항은 운전면허증의 보전, 범죄흔적수사와 관련된 처리, DNA 분석 및 신원확인을 위해 필요한 피의자 지명수배에 대해서도 준용한다.

③피의자 또는 증인의 소재수사를 위한 지명수배와 관련하여 중대한 범죄인 경우 피의자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유력한 혐의가 있고 다른 방식으로는 피의자 소재수사가 성공할 수 없거나 현저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공개추적수사를 명령할 수 있다.

④제131조 제4항을 준용한다. 증인의 소재를 수사하는 때에는 당사자가 피의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시해야 한다. 증인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더 중대한 경우에는 증인에 대한 공개추적수사를 할 수 없다. 증인의 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다른 방식으로는 소재수사가 성공할 수 없거나 현저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⑤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명수배는 형사소추기관의 모든 추적수단을 동원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제131조b(사진의 공개) ①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는 혐의가 있는

피의자의 사진을 공개하는 것은 범죄수사, 특히 신원미상인 범인의 신원확인이 다른 방식으로는 성공할 수 없거나 현저하게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②증인의 사진을 공개하고 공개의 원인이 된 형사절차에 대한 지적은 중대한 범죄행위의 수사, 특히 증인의 신원확인이 다른 방식으로는 성공할 수 없거나 현저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증인의 사진을 공개할 때에는 해당자가 피의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시해야 한다.

③제131조 제4항 제1문 전단과 제2문을 준용한다.

제131조c(추적수사처분의 명령과 추인) ①제131조a 제3항과 제131조b에 따른 추적수사는 법관만이 명령할 수 있고,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검사와 그 수사요원(법원조직법 제152조)도 명령할 수 있다. 제131조a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추적수사는 검사의 명령을 요하며,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수사요원(법원조직법 제152조)에 의해 명령될 수도 있다.

②전자매체에 지속적으로 공개하는 경우 및 방송 또는 정기간행물에 반복해서 공개하는 경우 제1항 제1문에 따른 검사와 그 수사요원(법원조직법 제152조)의 명령은 1주일 이내에 판사의 추인을 받지 못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 또한 검사 수사요원(법원조직법 제152조)의 추적수사명령은 1주일 이내에 검사의 추인을 받지 못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132조(기타 처분) ①범죄행위에 대하여 유력한 혐의가 있는 피의자가

본 법의 효력범위 내에 주소나 거소를 갖고 있지 않지만, 구속영장의 요건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절차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벌금형과 소송비용에 상응하는 적절한 담보의 제공
2. 관할법원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게 송달의 수령에 관한 전권의 위임

제116조a 제1항을 준용한다.

②이러한 명령은 판사만이 내릴 수 있으며,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검사 및 그 수사요원(법원조직법 제152조)도 내릴 수 있다.

③피의자가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그가 직접 이용하고 그의 소유인 운송수단과 기타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 제94조와 제98조를 준용한다.

제 9 장b 일시적 직업금지

제132조a(명령-취소) ①직업금지(형법 제70조)를 명령할 유력한 근거가 존재하는 경우, 판사는 결정으로 피의자가 직업, 직업의 일부, 영업 또는 영업의 일부에 종사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금지할 수 있다. 형법 제70조 제3항을 준용한다.

②일시적 직업금지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법원이 판결에서 직업금지를 명령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 10 장 피의자신문

제133조(소환) ①신문을 위하여 피의자를 서면으로 소환하여야 한다.

②불출석의 경우 구인된다는 경고와 함께 소환할 수 있다.

제134조(구인) ①구속영장발부를 정당화할 만한 근거가 존재하는 경우 피의자에 대한 즉시 구인을 지시할 수 있다.

②구인장에는 피의자를 정확히 적시하고 그의 책임을 묻게 될 범죄행위 및 구인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35조(즉시신문) 피의자는 즉시 판사에게 인치되어야 하고 당해 판사가 신문하여야 한다. 구인장을 근거로 한 구류는 구인이 시작된 때로부터 24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제136조(최초신문) ①최초의 신문을 시작함에 있어 피의자에게는 그가 어떠한 행위의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이고 어떠한 형법규정이 고려의 대상인지를 고지해야 한다. 또한 법률에 근거하여 피의사실에 대해 진술하거나 사안에 대해 진술하지 않을 자유가 있으며, 신문 전에도 언제든지 자신이 선임할 변호인에게 문의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사실을 피의자에게 고지해 주어야 한다. 피의자가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개별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도 고지하여야 한다. 적절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진술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화해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신문에서는 피의자에게 자신에 대한 혐의의 근거를 제거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을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피의자에 대한 최초의 신문에서는 피의자의 개인적 상황에 대한 수사내용도 고려하여야 한다.

제136조a(금지된 신문방법) ①가혹행위, 혹사, 신체침해, 투약, 학대, 기망 또는 최면에 의하여 피의자의 의사결정 및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 형사절차법이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강제수단을 허용한다. 형사절차규정에서 허용하지 않는 처분을 수반한 협박 및 법률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익의 약속은 금지된다.

②피의자의 기억력이나 통찰력을 침해하는 처분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금지는 피의자의 승낙과 관계없이 효력을 갖는다. 이들 금지에 위반하여 얻어진 진술은 설령 피의자가 동의할지라도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제 11 장 변 호

제137조(변호인의 선임) ①절차의 어느 단계에서나 피의자와 피고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선임된 변호인의 수는 3인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피의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 그 법정대리인도 독립적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1항 제2문을 준용한다.

제138조(사선변호인) ①변호사 그리고 대학법상 법관직을 담당할 자격이 있는 법학교수는 변호인으로 선임될 수 있다.

②기타의 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선임될 수 있다. 변호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선임된 자가 변호인으로 임명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을 때에는, 선임된 자는 변호인으로 임명될 수 있는 자와 함께 하는 경우에만 사선변호인으로 허가할 수 있다.

③증인, 사인기소인, 보조기소인, 보조기소 권한을 갖는 자, 피해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거나 변호인으로 하여금 자신을 대리하게 할 수 있다면, 제1항과 제2항 제1문에 언급한 자 역시 조력자와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제138조a(변호인의 배제) ①공판절차개시를 정당화할 정도로 또는 유력하게 다음에 해당하는 혐의를 받고 있는 변호인의 경우 그 변호인을 절차참여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1. 조사대상인 범죄행위에의 관여
2. 인신구속중인 피의자와의 왕래를 이용한 범죄행위 또는 집행시설의 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협
3. 피의자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게 되는 경우 이와 관련하여 증거인멸, 범죄은닉, 장물취득으로 인정될 만한 행위의 수행

②특정한 사실에 비추어 변호인이 제1항 1호와 2호에서 서술하고 있는 행위를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이라는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호인을 형법 제129조a의 범죄를 대상으로 하는 소송절차참여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척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척요건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즉시. 다만 피의자가 석방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제척을 취소할 수 없다.
2. 변호인의 제척사유가 되었던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개시된 공판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거나, 신분 및 직업법원(Ehren- und Berufsgericht)의 판결에서 그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직업상의 의무에 대한 유책한 위반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

3. 제척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로 인한 제척 이후 최소 1년 이상 형사절차 또는 신분 및 직업법원절차의 공판이 개시되지 않았거나 약식명령이 부과되지 않은 경우

3호에 따라 제척이 취소되었더라도 사안이 갖고 있는 특수한 난점이나 특수한 범위 또는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공판절차의 개시에 대한 결정이 어려울 때에는 일정 기간에 걸쳐 제척이 계속될 수 있지만, 그 기간은 최장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제척된 변호인은 법률에 규정된 다른 절차에서도 피의자를 변호할 수 없다. 여타의 사안과 관련해서도 제척된 변호인은 구속 중인 피의자를 방문할 수 없다.

⑤제척된 변호인이 동일 절차에서 다른 피의자를 변호하는 것 역시 허용되지 않으며, 형법 제129조a에 따른 범죄행위(제129조b와 결부된 범죄행위 포함)를 대상으로 하는 형사절차에서 제척당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이와 동일한 범죄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형사절차의 다른 피의자를 변호할 수 없다. 제4항을 준용한다.

제138조b(연방공화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의 변호인 배제) 법원조직법 제74조a 제1항 3호 및 제120조 제1항 3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범죄행위 또는 형법 제94조 내지 제96조, 제97조a 및 제100조의 간첩이나 외환의 죄와 관련된 형법 제138조의 의무불이행을 대상으로 하는 절차에서 변호인의 참여가 독일연방공화국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여기게 되는 특정한 사실이 존재할 때에는 변호인을 절차참여에서 배제할 수 있다. 제138조a 제3항 제1문 1호를 준용한다.

제138조c(변호인배제의 관할; 법원의 명령) ①제138조a와 제138조b에 따른 재판은 주 고등법원이 행한다. 소송준비절차에서의 수사를 연방검찰총장이 지휘하거나 소송이 연방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에는 연방법원이 재판한다. 소송이 주 고등법원 합의부나 연방법원 합의부에 계속 중인 경우에는 당해 법원의 다른 합의부가 재판한다.

②공소가 제기된 이후 절차가 확정력을 갖고 종결할 때까지는 소송이 계속 중인 법원의 변호인 배제의 제안이나 검사의 배제신청에 대해서는 제1항의 관할법원이 재판한다. 변호인 제척제안은 검사의 신청에 의하거나 또는 검사를 경유하여 직권으로 행한다. 변호사인 변호인을 배제하여야 하는 경우, 제1문의 검사의 신청서 또는 법원의 제안서 등본을 그 변호사가 소속되어 있는 변호사회회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해당 변호사는 배제에 관한 절차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소송이 계속 중인 법원은 제1항의 관할법원의 배제에 관한 재판 전까지 제147조와 제148조의 변호인의 권리행사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으며, 제138조a 제4항과 제5항에 서술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변호인의 권리행사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공소제기 이전과 확정력을 갖는 절차 종결 이후에는 변호인의 제척에 관하여 재판한 법원이 제1문의 명령을 행한다. 이 명령은 법원의 결정으로 이루어지며, 이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명령의 효력이 지속하는 동안에는 법원은 제147조와 제148조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다른 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142조를 준용한다.

④소송이 계속 중인 법원이 제2항에 따라 공판 중에 변호인제척을 제안하는 경우 그 법원은 제안과 동시에 제1항의 관할법원에 의한

재판 전까지 공판을 중단하거나 정지하여야 한다. 공판은 최고 30일 동안 중단할 수 있다.

⑤제2항에 따른 제척신청이 제기되거나 관할법원의 재판을 위해 사안이 제기된 이후에 당해 변호인 자신의 결단 또는 피의자의 의사에 근거하여 소송절차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게 된 때에도 당해 사안의 재판관할을 갖는 법원은 당해 변호인의 참여가 허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척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참여불가의 확인은 제138조a, 제138조b, 제138조d에서 의미하는 배제와 동일하다.

⑥변호인이 절차참여에서 배제되었다면 그 절차의 정지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은 당해 변호인에게 부과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재판은 소송이 계속 중인 법원이 행한다.

제138조d(변호인배제절차) ①변호인의 배제에 관하여는 구두변론에 의해 재판한다.

②변호인을 구두변론기일에 소환하여야 한다. 소환기간은 1주일이며, 이는 3일까지 단축될 수 있다. 검사, 피의자 및 제138조c 제2항 제3문의 변호사회 회장에게는 구두변론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변호인이 적법하게 소환되었고, 그가 출석하지 않는 때에도 변론이 진행될 수 있음을 소환장에 밝힌 경우에는 그 변호인 없이도 구두변론을 진행할 수 있다.

④구두변론에서는 출석한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법원은 의무재량에 따라 증거조사의 범위를 정한다. 변론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제271조 내지 제273조를 준용한다.

⑤결정은 구두변론의 종결과 함께 선고하여야 한다.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 결정은 변론종결 후 늦어도 1주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⑥제138조a에 열거한 사유로 인한 변호인제척의 결정 또는 제138조b에 따른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허용한다. 변호사회회장은 항고권이 없다. 제138조a에 따른 변호인 제척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139조(시보에 대한 업무위임) 변호인으로 선임된 변호사는 그를 선임한 자의 동의하에 제1차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최소 1년 3개월 이상 사법실무에 종사한 시보에게 변호를 위임할 수 있다.

제140조(필요적 변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인이 반드시 참여하여야 한다.

1. 제1심 공판이 주 고등법원이나 주법원에서 열리는 경우
2. 피의자에게 범죄의 책임을 묻는 경우
3. 직업금지가 선고될 수 있는 소송절차의 경우
4. 피의자에 대해 제112조, 제112조a에 따른 구속이나 제126조a 또는 제275조a 제6항에 따른 임시수용이 집행되는 경우
5. 피의자가 판사의 명령 또는 판사의 허가에 근거하여 최소 3개월간 시설에 수용되었고 공판개시 2주 전까지도 석방되지 않은 경우
6. 피의자의 정신상태에 대한 감정을 준비하기 위하여 제81조에 따른 시설수용을 고려하는 경우
7. 보안처분절차가 이루어지는 경우

8. 재판을 통하여 지금까지 소송을 대리했던 변호인을 절차참여에서 배제하는 경우

②기타의 경우에도 범행의 중대성 또는 사실문제와 법률문제의 난점을 이유로 변호인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여겨지거나 특히 제397조a, 제406조g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변호인이 피해자를 조력하고 있기 때문에 피의자가 스스로를 변호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한 때에는 재판장이 피의자의 신청에 기하여 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임명한다. 농아자인 피의자의 신청도 동일하게 처리한다.

③피의자가 공판개시 최소 2주일 전에 시설에서 석방된 경우에는 제1항 5호에 따른 변호인의 임명을 취소할 수 있다. 다른 변호인을 임명하지 않은 경우, 제117조 제1항 4호에 따른 변호인의 임명은 제1항 5호의 요건 하에 다른 절차에서도 효력을 갖는다.

제141조(변호인임명) ①제140조 제1항 1호 내지 3호, 5호 내지 8호와 제2항의 경우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 그가 제201조에 의하여 공소장에 관한 진술을 요구받는 즉시 변호인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뒤늦게 변호인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변호인을 임명한다.

③소송준비절차 중에도 변호인을 임명할 수 있다. 검사는 법원의 절차에서 제140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변호인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변호인의 임명을 신청한다. 수사의 종결(제169조a) 이후에는 검사의 신청에 기하여 변호인을 임명할 수 있다. 제140조 제1항 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행이 개시되는 즉시 변호인을 임명해야 한다.

④공판절차를 관할하는 법원의 재판장 또는 소송이 계속 중인 법원의 재판장이 변호인의 임명에 대해 결정하며, 제140조 제1항 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6조 또는 제275조a 제6항에 따라 관할하는 법원이 결정한다.

제142조(변호인 선택) ①변호인을 임명하기 전에 피의자에게는 일정한 기간 내에 자신이 선택한 변호인을 지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재판장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야 할 중대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피의자가 선택한 변호인을 임명한다.

②제140조 제1항 2호와 5호 및 제140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소정의 제1차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최소 1년 3개월간 그 직무에 종사한 시보도 제1심 변호인으로 임명될 수 있으나, 그의 수습을 위탁받은 판사가 속한 법원에서는 변호인으로 선임될 수 없다.

제143조(임명철회) 임명 직후 다른 변호인이 선임되고, 변호인이 이를 수용한 때에는 임명을 철회하여야 한다.

제144조(삭제)

제145조(변호인의 불출석) ①변호인이 필요한 경우임에도 변호인이 공판에 출석하지 않거나 공판 도중 퇴정하거나 또는 변호를 거부하는 때에는, 재판장은 즉시 피고인에게 다른 변호인을 임명해 주어야 한다. 법원은 이를 이유로 심리의 연기를 결정할 수도 있다.

②제141조 제2항의 필요적 변호인이 공판의 진행 중에 비로소 임명된 때에는 법원은 심리의 연기를 결정할 수 있다.

③새로 임명된 변호인이 심리를 중단하거나 연기하지 않으면 변호의 준비를 위해 필요한 시간이 없다고 밝히는 경우에는 심리를 중단하거나 연기하여야 한다.

④변호인의 책임으로 인하여 심리의 연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로 인해 발생한 비용은 당해 변호인에게 부과하여야 한다.

제145조a(변호인에 대한 송달) ①소송기록에 그 대리권이 명시되어 있는 사선변호인 및 국선변호인은 피의자에 대한 송달 및 기타 통지를 수령할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본다.

②소송기록에 그 대리권이 명시되어 있는 변호인일지라도 기록에 소환장의 수령에 관해서도 대리한다는 사실이 명시된 경우에만 피의자에 대한 소환장을 변호인에게 송달할 수 있다. 제116조a는 이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③제1항에 따라 변호인에게 재판서가 송달된 경우, 피의자에게도 송달 사실을 알려야 하며, 이와 함께 피의자에게 재판서 등본을 교부한다. 재판서가 피의자에게 송달된 경우, 서면대리권이 소송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변호인에게 송달 사실을 알려야 하며, 이와 함께 변호인에게 재판서 등본을 교부한다.

제146조(공동변호) 1인의 변호인이 동시에 동일한 범죄행위에 관련된 수인의 피의자를 변호할 수 없다. 또한 하나의 절차에서 동시에 수개의 상이한 범죄행위 피의자를 변호할 수 없다.

제146조a(선임변호인 거부) ①제137조 제1항 제2문 또는 제146조의 요건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으로 선임된 자에 대해서는 이 사실이 밝혀진 즉시 그 변호인선임을 거부하여야 하며, 선임 이후 제146조의 요건이 성립하게 된 경우에도 동일하다. 제137조 제1항 제2문의 경우에 수인의 변호인이 동시에 그 선임을 신고하여 선임 가능한 변호인 수의 상한을 초과한 때에는 이들 모두에 대한 선임을 거부하여야 한다. 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공판절차를 관할하게 될 법원이 이러한 거부에 관하여 재판한다.

②변호인이 거부되기 이전에 행한 행위는 제137조 제1항 제2문 또는 제146조의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이유로 그 효력이 상실되지는 않는다.

제147조(변호인의 기록열람) ①변호인은 법원이 보유하고 있거나 또는 공소가 제기되면 법원에 제출하게 될 기록을 열람할 권한이 있으며, 관청이 보관하고 있는 증거물을 열람할 권한이 있다.

②수사의 종결을 아직 기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수사목적에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 대하여 기록 또는 기록의 일부에 대한 열람 및 관청이 보관하고 있는 증거물의 열람을 거부할 수 있다. 제1문의 요건이 존재하고 피의자가 구속 상태에 있는 경우 또는 임시 체포 상태에서 구속의 청구가 이루어진 경우 변호인에게 자유박탈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한 원칙적으로 기록열람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피의자에 대한 신문조서, 변호인의 입회가 허용되었거나 그 입회가 허용되었어야만 하는 법원의 조사행위에 관한 조서 및 감정인의 감정

조서의 열람과 관련하여 절차의 어느 단계에서도 변호인에게 그 열람을 거부할 수 없다.

④다른 중대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이 있는 경우 증거물 이외의 모든 기록은 변호인의 사무실이나 주거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변호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에 관한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⑤기록열람의 허용에 관해서는 소송준비절차 중 및 절차가 확정력을 갖고 종결한 이후에는 검사가 판단하며, 그 밖의 경우에는 사건을 다루는 법원의 재판장이 판단한다. 수사의 종결을 기록에 기재한 이후에 검사가 기록열람을 거부하는 경우, 제3항에 따라 기록열람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피의자가 석방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162조에 따른 관할법원의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97조 내지 제300조, 제302조, 제306조 내지 제309조, 제311조a와 제473조a를 준용한다. 당해 결정에는 그 공개로 인해 조사목적에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결정이유를 포함시키지 않는다.

⑥기록열람에 대한 거부사유가 사전에 소멸하지 않는 경우 검사는 늦어도 수사의 종결과 함께 당해 명령을 취소한다. 기록열람권이 다시 제한을 받지 않게 되는 즉시 이를 변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변호인이 없는 피의자에게는 적절한 변호를 위해 필요하고 또한 다른 형사절차의 조사목적을 포함한 조사목적에 위험을 야기하지 않으며 제3자의 중대한 이익에 반하지 않는 한, 신청이 있을 때에는 기록에 관련된 정보 및 그 등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항 제2문 전단, 제5항과 제477조 제5항을 준용한다.

제148조(피의자의 접견교통) ①인신구속 중인 피의자도 서면 또는 구두로 변호인과의 접견교통이 허용된다.

②인신구속 중인 피의자에게 형법 제129조a에 따른 범죄행위(제129조b 제1항과 결부된 경우도 포함)에 대해 유력한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문서 기타 목적물을 먼저 제148조a에 따라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하는 것에 발송자가 동의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한, 법원은 변호인과의 접견교통에서 당해 문서와 기타 목적물의 반입을 거부할 수 있다. 제129조a에 따른 범죄행위(제129조b 제1항과 결부된 경우도 포함)를 근거로 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결정은 구속영장 발부를 관할하게 될 법원이 내린다. 제1문에 따른 서면 접견교통을 감시해야 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와 변호인 사이의 대화를 대비하여 문서 및 기타 목적물의 교부를 배제하기 위한 장치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

제148조a(감시처분의 수행) ①제148조 제2항의 감시처분의 수행에 관하여는 집행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의 지방법원 판사가 관할한다. 형법 제138조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의 근거가 되는 문서 및 기타 목적물을 일시적으로 유치할 수 있다. 다만, 압수에 관한 규정은 이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②감시처분을 담당하는 판사는 조사대상에 관여한 판사이거나 장래에 관여하게 될 판사이어서는 안 된다. 판사는 감시와 관련하여 획득한 지식에 대해 그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단, 형법 제138조는 이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149조(조력의 허용) ①공판에서는 피고인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배우자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하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배우자나 사실혼 배우자에게 공판의 시간과 장소를 제 때에 통지해야 한다.

②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의 경우에도 이와 동일하다.

③소송준비절차에서 이와 같은 조력을 허용할 것인지는 판사의 재량에 따른다.

제150조(삭제)

제2편 제1심

제1장 공 소

제151조(탄핵주의) 공소의 제기가 있어야 법원의 조사가 개시된다.

제152조(국가소추주의-기소법정주의) ①공소제기는 검사의 권한에 속한다.

②법률에 다르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한, 검사는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존재하는 한, 형사소추 가능한 모든 범죄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제152조a(개별주법상의 면책규정) 입법기관의 구성원에 대하여 형사소추를 제기하거나 계속할 수 있는 요건에 관한 개별주법의 규정은 독일연방공화국의 다른 주와 연방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제153조(경미사건에 대한 절차배제) ①경미한 범죄를 대상으로 하는 소송절차에서 행위자의 책임이 경하다고 볼 수 있고 또한 형사소추로 인한 공공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검사는 공판개시의 관할권이 있는 법원의 동의를 얻어 형사소추를 배제할 수 있다. 최저한도의 가중형이 규정되지 않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가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는 법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②이미 소가 제기되었다면 법원은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 검사와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공판이 제205조에서 인용한 사유로 인하여 절차를 진행할 수 없거나 제231조 제2항, 제232조 및 제233조에 해당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채로 공판이 진행된 때에는 피고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 판단은 결정에 의한다. 당해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제153조a(준수사항과 지시사항을 이행한 때의 절차중지) ①경죄와 관련하여 검사는 공판개시를 관할하는 법원과 피의자의 동의를 얻어 잠정적으로 공소를 제기하기 않고, 피의자에게 형사소추에 대한 공적 이익을 배제하기에 적합하고 또한 책임의 중대성에 반하지 않는 한 피의자에게 준수사항과 지시사항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한 준수사항과 지시사항으로는 특히 다음 각 호의 내용이 고려대상이 된다.

1. 범죄행위에 의해 야기된 손해의 보상을 위한 일정 급부 제공
2. 공익시설 또는 국고에 대한 일정액 지불
3. 기타 공익을 위한 급부 제공
4. 일정한 액수의 부양의무 이행
5. 피해자와의 화해(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화해)에 도달하려는 진지한 노력 및 자신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원상회복 또는 원상회복을 위한 노력
6. 도로교통법 제2조b, 제2항 또는 제4조 제8항 제4문에 따라 개설되는 교육세미나 참여

준수사항과 지시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검사는 피의자에게 제2문 1호 내지 3호 및 6호의 경우 최고 6개월, 제2문 4호의 경우 최고 1년의

기간을 부여한다. 검사는 이들 준수사항과 지시사항 부과를 사후에 취소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3개월 연장할 수 있고, 또 피의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추가적으로 준수사항과 지시사항을 부과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피의자가 준수사항과 지시사항을 이행한 때에는 해당 범죄행위를 더 이상 경죄로서 소추할 수 없다. 피의자가 준수사항과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가 그 이행을 위하여 제공한 급부는 상환되지 않는다. 제2문 1호 내지 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3조 제1항 제2문을 준용한다.

②공소가 이미 제기된 때에는 법원은 검사와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사실관계 확정이 최종적으로 심사될 수 있는 공판이 종료할 때까지 절차를 잠정적으로 중지할 수 있고, 동시에 피고인에게 제1항 제1문과 제2문에 열거된 준수사항과 지시사항을 부과할 수 있다. 제1항 제3문 내지 제6문을 준용한다. 제1문에 대한 판단은 결정으로 행한다. 당해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제1문에 따라 부과된 준수사항과 지시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에도 제4문을 적용한다.

③준수사항과 지시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정해진 기간이 진행 중인 때에는 시효가 중단된다.

제153조b(불기소-절차중지) ①법원이 형을 면제할 수 있는 요건이 존재하는 경우 검사는 공판을 관할하게 될 법원의 동의를 얻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

②공소가 이미 제기된 경우 공판개시까지는 법원이 검사와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제153조c(외국에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한 불기소) ①검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기소하지 않을 수 있다.

1. 본 법의 장소적 효력범위 밖에서 수행된 범죄행위 또는 본 법의 장소적 효력범위 밖에서 수행된 범죄행위의 공범으로서 본 법의 효력범위 내에서 수행된 범죄행위
2. 국내에 있는 외국국적의 선박이나 항공기 내에서 이루어진 외국인의 범죄행위
3. 형법 제129조와 제129조a 그리고 제129조b 제1항의 모든 사항과 관련된 경우의 범죄조직이 국내에 있지 아니하거나 주로 국내에서 활동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국내에서 저질러진 조직참여행위가 단지 부차적인 의미만 갖거나 단순히 조직에 소속을 두고 있는 정도에 그친 경우

국제형법전에 따라 가벌성이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153조f를 적용한다.

②외국에서 행해진 범죄행위로 인해 피의자에 대한 형이 이미 집행되었고, 그 외국의 형을 감안하여 볼 때 국내에서 예상하고 있는 형벌의 정도가 높지 않은 경우 또는 피의자가 그 행위에 관하여 외국에서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검사는 기소하지 않을 수 있다.

③본 법의 장소적 효력범위 밖에서의 활동을 통해 본 법의 장소적 효력범위 내에서 수행된 범죄행위에 대하여 소송의 수행이 독일연방공화국에 대한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거나 그 소추가 여타 중대한 공익에 반하는 때에는 검사는 기소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④제1항 1호, 2호 및 제3항의 경우 소송의 수행이 독일연방공화국에 대한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거나 그 소추가 여타 중대한 공익에 반하는 때에는 검사는 소송절차의 어느 단계에서나 제기된

공소를 취하하고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⑤법원조직법 제74조a 제1항 2호 내지 6호 및 제120조 제1항 2호 내지 7호에 서술된 종류의 범죄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소송의 경우 이상의 권한은 검찰총장에게 있다.

제153조d(정치범죄에 대한 불기소) ①법원조직법 제74조a 제1항 2호 내지 6호와 제120조 제1항 2호 내지 7호에 서술한 종류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소송의 수행이 독일연방공화국에 대한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거나 그 소추가 여타 중대한 공익에 반하는 때에는 검찰총장은 그 소추를 배제할 수 있다.

②이미 소가 제기된 경우 검찰총장은 제1항에서 기술한 요건 하에 소송절차의 어느 단계에서나 공소를 취하하고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제153조e(적극적 참회를 한 경우의 불기소) ①소송의 대상이 법원조직법 제74조a 제1항 2호 내지 4호와 제120조 제1항 2호 내지 7호에서 서술하고 있는 종류의 범죄행위인 경우 행위자가 자신의 범죄행위 후 그 범죄사실이 발각되었음을 알지 못한 채 독일연방공화국 또는 그 헌법질서의 존립이나 안전에 대한 위험을 저지하는 일에 기여한 때에는, 검찰총장은 법원조직법 제120조에 따른 관할 상급주법원의 동의를 얻어 그 행위에 대하여 기소하지 않는다. 행위자가 범죄행위 후 그 행위와 관련한 내란, 민주적 법치국가에 대한 위해 또는 간첩 및 외환죄의 기도에 대한 정보를 관청에 고지하여 전술의 기여를 한 경우에도 동일하다.

②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조직법 제120조에 의한 관할법원이 검찰총장의 동의를 얻어 제1항의 요건 하에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제153조f(국제형법에 따른 범죄에 대한 불기소) ①검사는 피의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장래에도 거주할 것으로 판단되지 아니한 때에는 국제형법 제6조 내지 제14조에 따라 가벌성이 인정되는 범죄에 대하여 제153조c 제1항 1호와 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소하지 않을 수 있다. 제153조c 제1항 1호의 경우 피의자가 독일인인 때에는 그 행위가 국제형사재판소 또는 그 행위가 저질러진 국가나 그 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속한 국가에 의해 기소된 때에 한하여 기소하지 않을 수 있다.

②제153조c의 제1항 1호와 2호의 경우 검사는 국제형법 제6조 내지 제14조에 따른 행위에 대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소하지 않을 수 있다.

1. 독일인에 대한 범죄의 혐의가 없는 경우
2. 범죄가 독일인을 대상으로 저질러지지 않은 경우
3. 범죄혐의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또한 장차 거주할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 경우
4. 범죄행위가 국제형사재판소 또는 혐의를 받고 있는 자의 범죄행위가 저질러진 국가나 그 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속한 국가에 의해 기소된 경우

외국에서 저질러진 범죄의 외국인 피의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때에도 동일하지만, 이는 제1문의 2호와 4호에 해당하고 국제형사재판소 또는 기소된 국가로 인도하는 것이 허용되고 또한 그러한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검사는 절차의 어느 단계에서나 공소를 취하하고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제154조(중요하지 않는 부수적 범죄행위) ①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검사는 범죄행위를 기소하지 않을 수 있다.

1. 피의자의 다른 행위에 대하여 확정력을 갖고 선고되었거나 다른 행위로 인하여 예상되는 형벌 또는 보안처분과 비교해 볼 때, 형사소추를 통해 이루어질 형벌 또는 보안처분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경우 또는
2. 그 밖에 범죄행위에 대한 판결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할 수 없고, 피의자에게 이미 확정력을 갖고 선고되었거나 다른 행위로 인하여 예상되는 형벌이나 보안처분이 행위자에게 미칠 영향 및 법질서방위를 위하여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공소가 이미 제기된 경우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은 그 절차를 어느 단계에서나 잠정적으로 중지할 수 있다.

③다른 범죄행위를 이유로 이미 확정판결이 내려진 형벌 또는 보안처분을 고려하여 절차가 잠정적으로 중지된 경우 그 사이 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한, 확정판결이 내려진 형벌 또는 보안처분이 사후적으로 소멸한 때에는 그 절차를 다시 개시할 수 있다.

④다른 행위를 이유로 예상되는 형벌 또는 보안처분을 고려하여 소송을 일시적으로 중지한 경우 그 사이 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한, 다른 행위에 대하여 선고된 판결의 확정력이 발생한 이후 3개월 이내에 그 절차를 다시 개시할 수 있다.

⑤법원이 잠정적으로 절차를 중지한 경우 그 재개를 위해서는 법원의 결정을 요한다.

제154조a(형사소추의 제한) ①1개의 범죄행위 가운데 분리 가능한 일부 또는 동일한 행위에 의해 이루어진 수 개의 법률위반 가운데 개별 부분이

1. 그 행위에 대하여 예상되는 형벌이나 보안처분 또는
2. 다른 행위로 인하여 피의자에게 확정력을 갖고 선고되었거나 다른 행위로 인하여 선고될 것으로 예상되는 형벌 또는 보안처분과 비교하여 볼 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경우, 행위의 나머지 부분 또는 나머지 법률위반에 대한 소추를 제한할 수 있다. 제154조 제1항 2호를 준용한다. 당해 제한에 관해서는 문서로 기록하여야 한다.

②공소장의 제출 이후 법원은 절차의 어느 단계에서나 검사의 동의를 얻어 이러한 제한을 행할 수 있다.

③법원은 절차의 어느 단계에서나 범죄행위 또는 법률위반의 분리된 일부분을 절차에 다시 포함시킬 수 있다. 이에 대한 검사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범죄행위의 분리된 부분이 다시 포함된 때에는 제265조 제4항을 적용한다.

제154조b(범죄인 인도와 추방) ①범죄행위를 이유로 피의자를 외국정부에 인도한 때에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

②다른 범죄행위를 이유로 피의자가 외국정부에 인도되거나 국제형사재판소에 이송되고, 국내에서 기소에 따라 부과될 수 있는 형벌이나 보안처분이 외국에서 확정판결로 선고된 형벌이나 보안처분 또는 외국에서 선고될 것으로 예상되는 형벌이나 보안처분과 비교해 볼 때 커다란 비중이 없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③피의자가 본 연방법의 효력범위로부터 추방된 때에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 공소가 이미 제기된 때에는 법원은 검사의 신청에 따라 절차를 일시적으로 중지한다. 제154조 제4항에 따른 기간을 1년으로 한다는 기준 하에 제154조 제3항 내지 제5항을 준용한다.

제154조c(강요죄 또는 협박죄 피해자) ①범죄행위를 공개하겠다는 내용의 고지를 위협수단으로 하는 강요죄 또는 협박죄(형법 제240조, 제253조)의 경우, 검사는 그 공개의 대상이 된 범죄행위를 기소하지 않을 수 있으나, 범죄행위의 중대성으로 인해 속죄가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 때로 한정한다.

②강요죄 또는 협박죄(형법 제240조, 제253조)의 피해자가 이를 고소한 경우(제158조), 이를 통해 피해자가 저지른 경죄가 인지된 때에는 검사는 그 행위의 중대성으로 인해 속죄가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 한, 그 경죄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

제154조d(민법 또는 행정법상의 선결문제에 대한 결정) 경죄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가 민법이나 행정법에 따라 판단해야 할 문제에 대한 판단에

좌우되는 경우, 검사는 민사소송절차 또는 행정소송절차에서 당해 문제가 결정이 이루어지는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기간을 정할 수 있다. 이에 관해서는 고발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정해진 기간이 아무런 성과 없이 경과한 후에 검사는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제154조e(무고죄 또는 모욕죄에 따른 형사절차 또는 징계절차) ①무고죄 또는 모욕죄(형법 제164조, 제185조 내지 제188조)에 근거한 공소의 경우, 고발되거나 주장된 행위에 대한 형사절차 또는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②공소 또는 사인기소가 이미 제기된 경우, 고발되거나 주장된 행위를 이유로 한 형사절차 또는 징계절차의 종결 시까지 법원은 절차를 중지한다.

③고발되거나 주장된 행위를 이유로 한 형사절차 또는 징계절차의 종결 시까지 무고죄 또는 모욕죄의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제154조f(절차의 잠정적 중지) 피의자의 불출석 또는 기타 피의자의 개인적 장애사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공판절차의 개시 또는 공판절차의 진행이 어려운 경우에 아직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때에는 검사는 그 사실관계를 최대한 분명히 밝히고 필요한 증거를 최대한 확보한 이후 절차를 잠정적으로 중지할 수 있다.

제155조(조사범위) ①조사와 재판의 대상은 소에 기재된 범죄행위 및 소를 통해 피의자가 된 자에 한정된다.

②법원은 전항의 범위 내에서 독립적으로 활동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특히 형법의 적용과 관련하여 소를 통해 제기된 신청에 구속되지 않는다.

제155조a(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화해) 검사와 법원은 형사절차의 어떠한 단계에서나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화해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사와 법원은 화해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명백한 의사에 반해서 화해가 적절한 것으로 전제해서는 안 된다.

제155조b(화해의 이행) ①검사와 법원은 직권 또는 청구에 기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화해 또는 손해의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검사와 법원의 위탁에 기초하여 이를 이행하는 기관에게 필요한 개인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기록을 전달하는 데 과도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청구한 기관에게 기록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공공기관이 아닌 기관에 대하여 제공되는 정보가 오로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화해 또는 손해의 원상회복이라는 목적을 위해서만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정보제공을 신청한 기관은 오로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화해 또는 손해의 원상회복을 이행하는 데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그리고 당사자의 보호되어야 할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만 제1항의 개인관련 정보를 처리하고 이용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은 당사자가 승인하고 그것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화해 또는 손해의 원상회복을 이행하는 데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개인관련 정보를

추출하거나 추출된 정보를 처리 및 이용할 수 있다. 해당 기관이 관련된 과제를 수행한 이후에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그 결과를 검사 또는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위탁을 받은 기관이 공공기관이 아닌 때에는 개별 정보가 데이터 내에서 또는 데이터로부터 추출된 상태에서 처리되는 경우가 아닌 한, 연방정보보호법 제3절의 규정도 적용된다.

④형사절차가 종결한 이후 1년이 경과한 때에는 위탁을 받은 기관은 제2항 제1문과 제2문에 서술된 개인관련 정보가 담긴 문서를 폐기하여야 한다. 검사 또는 법원은 위탁기관에 대하여 직권으로 절차의 종료시점을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156조(공소취소금지) 공판절차개시 이후에는 공소를 취소할 수 없다.

제157조("피고인"와 "공판피고인"의 개념) 본 법에서 피고인(Angeschuldigter)이라 함은 공소가 제기된 이후의 피의자(Beschuldigte)를 의미하며, 공판피고인(Angeklagter)은 공판의 개시가 결정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가리킨다.

제 2 장 공소의 준비

제158조(고발-고소) ①범죄행위에 대한 고발과 고소는 검사, 경찰기관 및 경찰공무원 그리고 지방법원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구두 고발은 문서화하여야 한다.

②고소만을 근거로 형사소추가 개시되는 범죄행위에서 고소는 법원이나 검사에게는 서면 또는 조서작성을 통해, 기타 관청에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③국내에 주소지가 있는 피해자가 다른 유럽연합국가에서 저질러진 범죄행위에 대해 고발하는 경우, 그 범죄행위가 독일형법의 대상이 아니거나 제153조c 제1항 제1문 1호(제153조f와 결부되는 경우 포함)에 따라 불기소의 대상인 때에 검사는 이 고발을 다른 유럽연합국가의 관할 형사소추기관에 고소가 이루어지도록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송하지 않을 수 있다.

1. 범죄행위 및 기소에 필요한 기본적인 상황이 관할권을 갖는 외국 소추관청에 이미 알려져 있는 경우 또는
2. 행위의 불법내용이 경미하고 피해자가 외국에서 고발하는 것이 가능했던 경우

제159조(변사자) ①어떤 자가 변사하였다고 할 만한 근거가 존재하거나 신원불명의 사체가 발견되는 경우 경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청은 즉시 검사나 지방법원에 이를 신고할 의무가 있다.

②변사자를 매장하기 위해서는 검사의 서면허가를 필요로 한다.

제160조(수사절차) ①고발이나 그 밖의 방식으로 범죄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알게 되는 즉시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검사는 책임을 가중시키는 것 뿐 아니라 감경시키거나 면제하는 사정에 대하여도 수사하여야 하며, 멸실의 우려가 있는 증거의 조사를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검사는 행위의 법적 효과를 확정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정에 대해서도 수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검사는 사법보조공무원을 이용할 수 있다.

④특별한 연방법 및 그에 상응하는 주법상의 규정들에 위배되는 수사방법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160조a(증언거부권이 있는 경우의 수사처분) ①제53조 제1항 1호, 2호 또는 4호에 언급된 자, 변호사, 연방변호사법 제206조에 따라 변호사협회에 가입된 자, 변호사자격이 없지만 법률서비스법에 따라 예외적으로 소송대리가 허용된 자에 대한 수사 또는 이러한 자들이 증언거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내용을 획득하고자 하는 수사방법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를 통해 인식한 내용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내용을 수사에 이용할 수 없다. 이러한 내용을 기재한 서류 등도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이러한 내용의 확보 및 그 기록에 대한 폐기 사실은 문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1문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수사처분을 통해 제1문에 해당하는 자들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내용을 획득한 때에도 제2문 내지 제4문을 준용한다.

②제53조 제1항 1호, 3호 내지 3호b 또는 5호에 언급한 사람들에 대한 수사 또는 이러한 사람들의 증언거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내용을 획득하기 위한 수사가 행해지는 경우에는, 비례성 심사의 범위

내에서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중대한 의미를 갖는 수사절차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형사소추를 해야 할 이익이 더 큰 비중을 갖는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수사처분을 행하지 않아야 하거나, 수사처분의 종류에 따라 가능하다면 수사처분을 제한하여야 한다. 그와 같은 수사를 통해 밝혀진 내용을 입증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제1문에 따른다. 제1문 내지 제3문은 변호사, 연방변호사법 제206조에 따라 변호사협회에 가입된 자 및 법률서비스법에 따라 예외적으로 소송대리가 허용된 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은 제53조a에 언급된 사람들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에도 준용한다.

④특정한 사실에 비추어 증언거부권이 있는 사람이 범죄행위의 공범이거나 범죄비호죄, 범인은닉죄 또는 장물죄의 형태로 범죄행위에 관여했다는 혐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범죄행위가 친고죄이거나 권한위임이 있는 경우에만 소추가 가능한 범죄인 경우 제53조 제1항 1호 내지 5호에 해당하는 사례와 관련하여 고소가 제기되거나 권한이 위임된 즉시 그리고 그 범위 내에서만 제1문을 적용한다.

⑤제97조와 제100조c 제6항은 이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160조b(절차상황에 대한 논의) 검사는 절차를 촉진하는 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절차의 상황을 절차관계인과 논의할 수 있다. 논의의 주요 내용은 문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161조(수사; 비밀수사로 획득한 정보의 사용) ①제160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명시된 목적에 따라 검사는 모든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를 요구할 수 있고, 그 권한에 대한 다른 특별한 법규정이 없는 한 모든 종류의 수사를 스스로 수행하거나 경찰기관과 경찰직공무원이 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경찰기관과 경찰직공무원은 검사의 의뢰나 지시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 다른 모든 기관에게 정보를 요구할 권한을 갖는다.

②본 법률에 따른 수사처분이 특정한 범죄행위에 대한 혐의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 수사처분에 근거하여 획득된 개인관련 정보는 본 법률에 따를 때에도 그와 같은 처분이 허용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범죄행위의 규명을 위해서 필요한 때에 한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도 형사절차에서 증거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00조d 제5항 3호는 이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다.

③경찰법에 근거하여 비공개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수사요원을 보호하기 위해 기술적 수단을 투입하여 주거의 내부에서 또는 주거로부터 획득한 정보는, 당해 기관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관할 지방법원(제162조 제1항)이 그 처분의 적법성을 확인한 때에만 비례성원칙을 감안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기본법 제13조 제5항),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원의 사후적인 판단을 구해야 한다.

제161조a(검사에 의한 증인신문 및 감정인신문) ①증인과 감정인은 검사의 소환에 응하여 출석하고 사건에 관하여 진술하거나 감정을 행할 의무가 있다.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제1편 제6장과 제7장의 증인과 감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선서에 의한 신문은 법관이 행한다.

②증인이나 감정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검사는 제51조, 제70조 및 제77조에 규정된 처분을 행할 권한이 있다. 그러나 구속여부는 제162조에 따른 관할법원이 결정한다.

③제2항 제1문에 따른 검사의 결정에 대해서는 제162조에 따른 관할 법원에 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 검사가 제68조b에 따른 결정을 행한 때에도 이와 같다. 제297조 내지 제300조, 제302조, 제306조 내지 제309조, 제311조a 및 제473조a를 준용한다. 제1문과 제2문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④검사가 다른 검사에게 증인이나 감정인에 대한 신문을 의뢰한 때에는 제2항 제1문의 권한은 그 의뢰를 받은 검사에게 있다.

제162조(법원의 조사) ①검사가 법원의 조사활동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경우 검사는 공소제기 전에 검찰청 소재지 또는 청구가 이루어지는 소재지의 관할 지방법원에 이를 청구한다. 검사가 법원의 구속영장 또는 수용영장이 필요한 때에는 제125조, 제126조a에 관계없이 제1문에 명시된 법원에 명령을 청구하여야 한다. 법원의 신문과 검증은 검사가 절차의 신속 또는 당사자의 부담경감을 위하여 청구한 때라면 조사 활동이 시행되는 그 장소의 법원이 관할한다.

②법원은 신청된 조사활동이 사안의 정황을 감안하여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③공소제기 이후에는 수소법원이 관할한다. 상고절차 중에는 불복대상인 판결을 내린 법원이 관할한다. 절차가 확정판결로 종결된 이후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재심청구 이후에는 재심절차의 판결을 담당하는 법원이 관할한다.

제163조(경찰의 임무) ①경찰기관과 경찰공무원은 범죄행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사실관계가 불분명해지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 지체해서는 안 될 모든 명령을 내려야 한다. 이러한 목적에서 경찰기관과 경찰공무원은 다른 기관에 대해 정보제공을 의뢰할 권한이 있으며,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다른 법률규정에 권한과 관련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모든 종류의 수사를 행할 권한이 있다.

②경찰기관과 경찰공무원은 모든 수사내용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판사의 신속한 조사행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모든 수사자료를 직접 지방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③경찰공무원에 의한 증인신문에 대해서는 제52조 제3항, 제55조 제2항, 제57조 제1항과 제58조, 제58조a, 제68조 내지 제69조를 준용한다. 제68조 제3항 제1문에 따른 허가와 증인에 대한 조력제공자의 임명에 관해서는 검사가 결정하며, 그 밖의 필요한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신문을 주재하는 자가 이를 결정한다. 제68조b 제1항 제3문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제161조a 제3항 제2문 내지 제4문을 준용한다. 경찰공무원이 감정인에게 알려주어야 하는 내용과 절차는 제52조 제3항과 제55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81조c 제3항 제1문과 제2문의 경우에는 경찰공무원의 조사와 관련해서도 그 의미에 맞게 적용한다.

제163조a(피의자신문) ①절차가 중지되지 않은 한, 늦어도 수사의 종결 이전까지는 피의자를 신문하여야 한다. 단순한 사안의 경우에는 피의자에게 서면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②피의자가 책임의 감경이나 면제를 위한 증거조사를 신청하는 경우 그 증거가 중요한 것일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야 한다.

③피의자는 검사의 소환에 응하여 출두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제133조 내지 136조a 및 제168조c 제1항과 제5항을 준용한다. 구인의 적법성에 관하여 피의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62조의 관할법원이 이를 판단한다. 이 경우 제297조 내지 제300조, 제302조, 제306조 내지 제309조, 제311조a와 제473조a를 준용한다. 이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④경찰공무원이 피의자를 최초로 신문하는 경우 피의자의 책임을 묻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피의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그밖에 경찰직 공무원이 피의자를 신문하는 때에는 제136조 제1항 제2문 내지 제4문, 제2항, 제3항 및 제136조a를 적용한다.

제163조b(신원확인) ①범죄행위의 혐의를 받는 자에 대하여 검사와 경찰직 공무원은 그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63조a 제4항 제1문을 준용한다. 혐의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거나 이를 확인하는 일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경우 혐의자를 구금하는 것이 허용된다. 제2문의 요건 하에 혐의자의 신체와 그가 소지한 물건의 수색 및 감식작업을 위한 처분이 허용된다.

②범죄행위의 규명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범죄혐의가 없는 자의 신원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69조 제1항 제2문을 준용한다. 제1항 제2문에 서술된 종류의 처분들은 이들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추어 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으며, 제1조 제3항에 서술된 종류의 처분은 피처분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할 수 없다.

제163조c(신원확인을 위한 자유박탈) ①제163조b에 따른 피처분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신원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이상 구금되어서는 안 된다. 법관의 판단을 위해 예상되는 소요기간이 신원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보다 더 장기간이 될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가 아닌 한, 자유박탈의 허용과 지속에 관한 판단을 위하여 지체 없이 피처분자가 체포된 지역의 지방법원판사에게 구인하여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제114조a 내지 제114조c를 준용한다.

②신원확인을 목적으로 하는 자유박탈은 총 12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신원이 확인되면 제163조b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원확인과 관련하여 처리된 자료를 폐기하여야 한다.

제163조d(데이터의 저장) ①특정한 사실에 근거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대한 혐의가 있다면, 국경경찰의 검문의 기회에 그리고 1호와 관련하여 제111조에 따른 검문의 기회에 입수된 것으로서 범죄행위의 규명이나 범인의 체포를 위하여 중요한 신원 또는 상황에 관한 데이터를 파일로 저장하는 것이 허용되며, 다만 데이터의 평가를 통하여 범인의 체포 또는 범죄행위의 규명에 이르게 될 것이고 이러한 처분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추어 상당한 것이라는 가정이 정당화되는 경우에 한정된다.

1. 제111조에서 기재된 범죄행위 또는
2. 제100조a 제2항 6호 내지 9호에 기재된 범죄행위

제1문의 경우 여권이나 신분증을 자동으로 판독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이 데이터는 형사소추기관에만 제공될 수 있다.

②제1항에서 서술하고 있는 처분은 판사만이 명할 수 있으며,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검사와 그 수사요원(법원조직법 제152조)도 명할 수 있다. 검사나 사법보조공무원이 이를 명한 경우 검사는 지체 없이 그 명령에 대한 판사의 추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명령이 3일 이내에 판사로부터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 그 명령은 효력을 상실한다. 이에 대해서는 제100조b 제1항 제3문을 준용한다.

③당해 명령은 서면으로 행한다. 명령은 저장되는 정보의 대상이 되는 자의 신원 및 그 특성이나 속성과 관련하여 명령 당시에 범죄혐의자에 관해 알려져 있는 바에 따라 가능한 내용을 최대한 자세히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처분의 종류와 기간이 확정되어야 한다. 당해 명령의 효력은 장소적으로 제한되며, 효력기간은 최고 3개월로 제한된다. 제1항에서 서술하고 있는 요건들이 존속하는 한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회의 기간연장이 허용된다.

④명령을 위한 요건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명령에 의한 처분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 명령의 효력은 즉시 종결된다. 이 처분을 통해 획득한 개인관련 정보가 형사절차에서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 때에는 이를 즉시 폐기하여야 하며, 그 처분의 지속기간(제3항)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정보의 저장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데이터의 폐기에 관해서는 검사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63조e(경찰의 관찰을 위한 수배) ①중대한 범죄행위가 행하여졌다는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인적 사항의 확인을 허용하는 경찰의 검문을 계기로 관찰을 위한 수배를 명령할 수 있다. 당해 명령은 피의자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사건의 탐문이나 행위자의 소재지에 대한 수사가 다른 방식으로는 성공할 수 없거나 현저하게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만 내려질 수 있다. 특정한 사실에 비추어 피의자 이외의 자가 범죄행위자와 연락하고 있고, 그에 대한 처분이 사건의 탐문이나 행위자의 소재지에 대한 수사를 가능하게 하며 또한 다른 방식으로는 성공할 수 없거나 현저하게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만 피의자 이외의 자에 대한 처분이 허용된다.

②차량이 제1항에 따라 수배된 자의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거나 차량 또는 컨테이너가 수배된 자나 성명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범죄행위에 대한 유력한 혐의가 있는 자가 이용하는 경우라면 차량의 표지판 또는 선박, 항공기 내지 컨테이너의 등록번호 또는 외부 식별표지 사항을 수배할 수 있다.

③수배된 자가 나타난 경우에는 그의 동행인 및 제2항에 따라 수배된 차량의 운전자 또는 제2항에 따라 수배된 컨테이너의 이용자에 관한 개인관련 정보도 보고할 수 있다.

④경찰의 관찰을 위한 수배는 법원만이 명할 수 있다.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검사도 명할 수 있다. 검사가 이를 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명령에 대한 법원의 추인을 신청한다. 이에 대해서는 제100조b 제1항 제3문을 준용한다. 명령은 최고 1년을 기한으로 한다. 명령의 요건이 존속하는 한, 3개월을 넘지 않는 기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제163조f(장기간의 감시) ①범죄행위가 중대하다는 점에 대한 충분한 사실적인 근거가 존재하는 경우, 피의자에 대한 수사계획에 부합하는 감시를 명할 수 있으며, 이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한다(장기간의 감시).

1. 24시간 이상 지속적으로 감시를 하는 경우 또는
2. 2일 이상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

당해 처분은 사실관계의 탐문이나 행위자 거주지의 수사가 다른 수단을 통해서는 성공하기 어렵거나 현저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명할 수 있다. 피의자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당해 처분은 특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그가 행위자와 관계를 맺고 있거나 관계를 맺게 될 것이며, 사실관계의 탐문이나 행위자 소재지의 수사가 다른 수단을 통해서는 성공하기 어렵거나 현저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명할 수 있다.

②당해 처분은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허용될 수 있다.

③당해 처분은 법원만이 명할 수 있으나,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검사 또는 수사요원(법원조직법 제152조)도 명할 수 있다. 검사 또는 사법보조공무원이 내린 명령은, 3일 이내에 법원의 추인을 얻지 못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100조b 제1항 제4문과 제5문, 제2항 제1문을 준용한다.

제164조(방해자체포) 직무활동을 지휘하는 공무원은, 현장에서 자신의 직무행위를 고의적으로 방해하거나 자신의 관할 내에서 발하여진 명령에

저항하는 자를 체포할 수 있고, 그 익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신의 공무집행 종료 시까지 구금할 권한이 있다.

제165조(판사의 긴급행위) 검사와 접촉할 수 없는 경우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판사가 검사의 신청이 없이 필요한 조사활동을 행할 수 있다.

제166조(피의자의 증거신청) ①판사가 피의자를 신문하고 그 신문에서 피의자가 자신의 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줄 수 있는 개별 증거조사를 신청한 경우 그 증거의 멸실이 우려되거나 증거조사가 피의자의 석방근거가 될 수 있는 때에는, 판사가 그러한 증거들을 중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한, 증거조사를 행하여야 한다.

②증거조사가 다른 관할구역에서 행해져야 하는 경우 판사는 그 지역의 판사에게 증거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67조(검사의 여타 처분) 제165조 및 제166조에 해당하는 경우 여타의 처분은 검사가 수행한다.

제168조(조서) 판사의 모든 조사활동에 관하여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조서작성을 위해 법원사무국의 서기공무원이 관여하게 해야 하며, 조서작성자의 관여를 필요로 하지 않음이 인정되는 경우 판사는 이를 배제할 수 있다. 긴급한 경우 판사는 법원사무국 서기가 아닌 자로 하여금 선서를 하고 조서작성자로 관여하게 할 수 있다.

제168조a(조서작성의 방식) ①조서의 내용은 작성 장소, 일자 및 참여자와 관계인의 성명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고, 절차의 본질적 형식의 준수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68조 제2항과 제3항은 이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다.

②조서의 내용은 속기타자기, 녹음기 또는 해독 가능한 약어를 통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속기방식으로 임시로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 심리가 종료하는 즉시 이를 조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임시기재는 소송기록에 포함시키거나 또는 그것이 소송기록으로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국에 소송기록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절차가 확정력을 갖고 종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종료한 경우에는 음성기록을 폐기할 수 있다.

③조서가 심리에 참여한 관계인과 관련된 것일 때에는, 확인을 위하여 낭독하거나 그가 볼 수 있도록 제시하여야 한다. 당해 관계인의 확인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관계인은 조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서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조서의 내용이 임시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임시로 기재된 내용을 낭독하거나 재생하는 것으로 족하다. 조서에는 이러한 사실과 함께 관계인의 확인 여부 또는 어떤 이의가 제기되었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관계인과 관련되는 조서내용에 관하여, 관계인이 이러한 낭독 또는 검토를 위한 제출이나 기록 재생을 포기한 때에는 이를 배제할 수 있으며, 포기한다는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법관과 조서작성자는 조서에 서명해야 한다. 조서작성자가 관여하지 않은 상황에서 조서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가 녹음기에 임시로 녹음된

경우에는 법관 및 녹취를 근거로 조서를 작성한 자가 서명한다. 후자는 녹취된 대로 기재되었다는 정확성을 보증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서명한다. 녹취내용 기재의 부정확성에 대한 증명은 허용된다.

제168조b(검사의 조사활동에 관한 조서) ①검사의 조사활동의 결과는 문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피의자, 증인 및 감정인에 대한 신문에 관한 조서작성이 수사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는 한, 제168조와 제168조a에 따라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68조c(법관의 신문에 참석할 권한) ①피의자에 대한 판사의 신문 시 검사와 변호인의 참석을 허용한다.

②증인이나 감정인에 대한 판사의 신문 시 검사, 피의자 및 변호인의 참석을 허용한다.

③심리에서 피의자의 참석이 조사목적을 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판사는 이를 배제할 수 있다. 특히 피의자의 참석 하에서는 증인이 진실을 말하지 않을 것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④인신구속 중인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 피의자는 자신이 구금된 장소의 법원에서 진행되는 신문기일에만 참석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⑤신문기일은 참석권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로 인하여 조사목적을 해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통지하지 않는다. 참석권자의 장애를 이유로 신문기일의 연기를 청구할 수 없다.

제168조d(법관의 검증에의 참여) ①법관의 검증에는 검사, 피의자 및 변호인의 심리참여를 허용한다. 제168조c 제3항 제1문, 제4항과 제5항을 준용한다.

②법관의 검증에 감정인이 관여하는 경우 피의자는 자신이 공판에 추천한 감정인을 검증기일에 소환할 것을 신청할 수 있으며, 법관이 그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피의자 스스로 감정인을 소환할 수 있다. 피의자가 지정한 감정인의 검증 및 필요한 조사에 대한 참여는 법관이 지정한 감정인의 활동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를 허용한다.

제168조e(증인에 대한 격리신문) 참석권한이 있는 자가 증인신문에 참여하는 것이 증인의 안녕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명백한 위험이 존재하고 이를 피할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에, 법관은 참석권한 있는 자와 격리하여 신문을 진행할 수 있다. 이 신문과정은 동시에 화상을 통해 전달되어야 한다. 참석권한이 있는 자가 신문과정에 참여하여 이행할 수 있는 권한은 그대로 존속한다. 제58조a와 제241조a를 준용한다. 제1문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제169조(상급주법원과 연방법원의 수임판사) ①법원조직법 제120조에 따라 제1심 재판이 상급주법원의 관할 사건인 경우 소송준비절차에서 지방법원판사에게 주어진 업무는 상급주법원의 수임판사가 대신할 수 있다. 연방검찰총장이 수사를 지휘하는 경우 연방법원의 수임판사가 전술한 상급주법원 수임판사의 지위를 대신하여 관할한다.

②사건을 관할하는 상급주법원의 수임판사는 조사활동이 그 법원의 관할구역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조사를 명할 수 있다.

제169조a(수사 종결의 기재) 검사가 공소제기를 고려하는 경우, 수사의 종결을 기록에 기재한다.

제170조(공소제기-절차의 중지) ①수사결과 공소제기를 위한 충분한 근거가 밝혀진 경우 검사는 관할법원에 공소장을 제출함으로써 공소를 제기한다.

②그렇지 않은 때에는 검사는 절차를 중지한다. 피의자에 대한 신문이 있었거나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 검사는 절차의 중지를 피의자에게 고지하며, 피의자가 결정통지를 요청하였거나 고지에 따른 특별한 이익이 명백히 존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제171조(고소인에 대한 통지) 검사가 고소인의 공소제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수사종결 이후 절차의 중지 처분을 내린 경우, 검사는 고소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그 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당해 결정을 통지할 때에는 피해자인 고소인에게는 그 결정에 대한 불복가능성 및 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기간(제172조 제1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172조(기소강제절차) ①고소인이 피해자인 경우, 제171조의 결정에 대하여 고지가 이루어진 후 2주 내에 검사의 상급공무원에게 항고할 수 있다. 검사에 대한 항고제기에서도 그 기간을 준수한다. 제171조 제2문에 따라 규정된 기간의 고지가 없는 경우에는 기간이 진행되지 않는다.

②검사의 상급공무원의 기각결정에 대하여 고소인은 기각을 고지 받은 후 1개월 내에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사항과 이를 위한 절차형식을 고소인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기간이 진행되지 않는다. 소송절차가 피해자에 의한 사인소추의 방식을 통해서만 소추할 수 있는 범죄행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경우 또는 제153조 제1항, 제153조a 제1항 제1문과 제7문 또는 제153조b 제1항에 의하여 검사가 그 행위를 기소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러한 신청이 허용되지 않으며, 제153조c 내지 제154조 제1항 및 제154조b와 제154조c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③재정신청에는 공소제기의 근거가 되는 사실 및 증거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신청에는 변호인이 서명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소송비용보조에 대하여는 민사소송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한다. 신청서는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재정결정은 상급주법원의 관할이다. 법원조직법 제120조를 의미에 맞게 적용한다.

제173조(법원의 절차) ①법원의 요구에 따라 검사는 이제까지 수행된 모든 수사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피의자의 의견진술을 위해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재정신청사실을 피의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③법원은 재판을 준비하기 위한 수사를 명할 수 있고,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에게 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74조(기각결정) ①공소제기를 위한 충분한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재정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과 검사 및 피의자에게 기각 사실을 고지한다.

②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방법을 근거로 하는 때에만 공소제기가 가능하다.

제175조(기소명령) 법원이 피의자의 의견청취 이후 신청이 이유 있다고 보는 경우에는 공소제기를 결정한다. 검사는 이 결정을 이행할 의무를 진다.

제176조(담보제공) ①재정신청에 관한 절차를 통하여 국고와 피의자에게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이전에 신청인이 담보를 제공하도록 법원이 결정할 수 있다. 담보제공은 현금이나 유가증권의 공탁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법원 및 사법기관에 대한 금전지불법의 내용에 의거한 이와 다른 규정들은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담보의 상한은 법원이 자유재량에 의해 정한다. 이와 동시에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도 정한다.

②정해진 기간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신청이 철회되었음을 선언하여야 한다.

제177조(비용) 재정신청에 관한 절차에 의해 발생하는 비용은 제174조와 제176조 제2항의 경우 신청인에게 부과하여야 한다.

제 3 장

제178조 내지 **제197조(삭제)**

제 4 장 공판절차개시에 관한 재판

제198조(삭제)

제199조(공판절차 개시에 관한 결정) ①공판의 관할법원은 공판절차의 개시 여부 또는 절차의 일시적 정지 여부에 관하여 재판하여야 한다.
②공소장은 공판절차 개시의 청구를 포함한다. 공소장과 함께 기록을 법원에 제출한다.

제200조(공소장의 내용) ①공소장에는 피고인, 그에게 책임을 묻게 될 행위, 행위의 시간과 장소, 범죄행위의 법률적 표지 및 적용할 형법 규정을 적시하여야 한다(기소문). 이 밖에도 증거방법, 공판이 열리게 될 법원 및 변호인을 기재하여야 한다. 증인을 언급할 때에는 주소지 또는 체류지만을 언급하는 것으로 족하고, 상세한 주소를 기재할 필요는 없다. 제68조 제1항 제2문, 제2항 제1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인의 성명을 기재하는 것으로 족하다. 신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해서는 안 될 증인을 지명하는 경우에는 그 사정을 기재해야 한다. 증인의 주소지 또는 체류지를 밝히지 말아야 할 경우에도 동일하다.
②공소장에서는 또한 수사의 주요 결과를 밝힌다. 형사단독판사에게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이를 배제할 수 있다.

제201조(공소장의 송달) ①재판장은 공소장을 피고인에게 송달하고, 이와 동시에 공판절차 개시결정에 앞선 일정 기간 내의 개별 증거조사의 신청 여부 또는 공판절차의 개시에 대한 이의제기 여부의 의사를 표명할 것을 피고인에게 요구한다. 공소장은 또한 소를 제기한 보조기소인 및 보조기소의 권한 있는 자에게도 송달해야 하며, 이에 대해서는 제145조a 제1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②신청과 이의에 관하여는 법원이 결정한다. 이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제202조(개별 증거조사 명령) 법원은 공판절차의 개시에 관한 재판을 하기 전에 사안에 대한 더 나은 규명을 위해 개별 증거의 조사를 명할 수 있다. 이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제202조a(공판절차 개시 이전의 논의) 법원이 공판을 개시하고자 하는 경우, 절차를 촉진하는 데 적절하다고 여겨진다면 절차의 진행과 관련하여 당사자들과 논의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의 주요 내용은 기록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제203조(공판개시결정) 소송준비절차의 결과에 따라 피고인이 범죄행위에 대하여 충분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은 공판절차의 개시를 결정한다.

제204조(개시의 기각) ①법원이 공판절차를 개시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이 사실적 근거에 기초한 것인지 또는 법적 근거에 기초한 것인지 여부를 결정에서 밝혀야 한다.

②이 결정은 피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5조(잠정적 중지) 피고인의 부재 또는 피고인의 일신상의 사유에 따른 장애가 장기간 지속되어 공판을 개시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잠정적으로 그 절차의 중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판장은 필요하다면 증거를 보전한다.

제206조(신청의 구속력) 결정과 관련하여 법원은 검사의 신청에 구속되지 않는다.

제206조a(소송장애에 따른 중지) ①공판절차의 개시 이후 절차상의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법원은 공판 외의 결정으로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②이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불복할 수 있다.

제206조b(법률변경으로 인한 중지) 범죄행위가 종료된 시점에서 효력을 갖던 형법이 재판 이전에 변경되고, 법원에 계속 중인 형사절차가 기존의 법에 의해서는 처벌 가능하나 신법에 의해서는 더 이상 처벌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은 공판 외의 결정으로 절차를 중지한다. 이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불복할 수 있다.

제207조(개시결정의 내용) ①법원은 공판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에서 공판을 위한 소를 허용하고, 공판이 열리게 될 법원을 적시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어떠한 변경을 가하여 공판을 위한 소를 허용하는지를 결정에 명시한다.

1. 수개의 범죄행위를 이유로 기소되었고 또한 이들 수개의 행위 가운데 일정한 개별 행위에 대해서는 공판개시를 기각하는 경우
2. 제154조a에 따른 형사소추가 하나의 범죄행위 가운데 분리가 가능한 개별 부분에 국한되거나 또는 그러한 개별 부분이 소송절차에 다시 편입되는 경우
3. 범죄행위가 법적인 측면에서 공소장과는 다르게 평가되는 경우 또는
4. 동일한 범죄행위로 행하여진 수개의 법률위반 가운데 개별행위에 대한 소추를 제154조a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 또는 그러한 법률위반이 절차에 다시 편입되는 경우

③제2항 1호와 2호에 해당하는 경우 검사는 법원의 결정에 상응하는 새로운 공소장을 제출한다. 이 경우에는 수사의 주요 결과에 서술을 배제할 수 있다.

④동시에 법원은 직권으로 구속이나 임시수용명령 또는 그 지속 여부에 관하여 결정한다.

제208조(삭제)

제209조(공판개시의 관할) ①소가 제기된 법원이 자신이 속한 지역의 하급 법원에 관할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길 때에는 공판절차는 해당 하급법원에서 개시한다.

②소가 제기된 법원이 자신이 속한 지역의 상급법원에 관할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길 때에는 해당 상급법원이 재판하도록 검사를 경유하여 기록을 제출한다.

제209조a(특별한 기능적 관할) 제4조 제2항, 제209조 및 제210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다음의 법원은 상급법원과 동등한 지위를 갖는다.

1. 법원조직법 제74조 제2항, 제74조a와 제74조c에 따른 경우 자신의 관할구역의 일반형사부에 대한 특별형사부 및 동법 제74조e에 기재된 서열에 비추어 본 특별형사부 상호간
2. 동급의 일반 형사사건 관할법원에 대하여, 다음의 경우 사건의 소년법원 관할 여부를 판단하는 소년법원
   a) 소년법원법 제33조 제1항, 제103조 제2항 제1문 및 제107조에 따른 경우
   b) 소년보호사안(법원조직법 제26조 제1항, 제74조b 제1문)에 해당하는 경우

제210조(상소) ①공판절차 개시의 결정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불복할 수 없다.

②공판절차의 개시를 기각하거나 검사의 신청과 달리 하급법원으로 이송을 지시하는 결정에 대하여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항고법원은 항고를 허용함과 동시에 제2항의 결정을 행한 법원의 다른 부 또는 같은 주의 직근 동급법원에서 공판을 진행하도록 정할 수 있다. 상급주법원이 제1심 재판을 하는 절차인 경우에는 당해 법원의 다른 합의부에서 공판을 진행하도록 연방법원이 정할 수 있다.

제211조(기각결정의 효력) 공판절차의 개시가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을 통해 기각된 경우,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방법에 근거하는 때에만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 5 장 공판의 준비

제212조(공판개시 이후의 논의) 공판개시 이후의 논의에 대해서는 제202조a를 준용한다.

제213조(기일의 지정) 공판기일은 재판장이 지정한다.

제214조(소환) ①재판장은 공판에 필요한 소환을 명한다. 이와 동시에 재판장은 제397조 제2항 제3문, 제406조g 제1항 제4문, 제2항 제2문에 따라 필요한 기일의 통지를 이행해야 하며, 이에 대해서는 제406조d를 준용한다. 법원사무국은 소환 및 통지내용의 전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②공판이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경우 재판장은 증인이나 감정인의 전체 또는 일부를 공판이 시작된 이후의 시점에 소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검사에게는 여타의 사람들을 직접 소환할 권한이 있다.

④검사는 증거방법으로 이용될 대상을 제출한다. 법원도 증거의 대상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15조(개시결정의 송달) 공판절차 개시의 결정은 늦어도 소환장과 동시에 피고인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제207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추후 제출된 공소장도 이와 동일하다.

제216조(피고인의 소환) ①인신구속 중이 아닌 피고인에 대한 소환은 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의 경우 구금 또는 구인하겠다는 경고와 함께 서면으로 이루어진다. 제232조의 경우에는 이 경고를 배제할 수 있다.
②인신구속 중인 피고인의 소환은 제35조에 따른 공판기일의 고지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와 함께 피고인에게 공판에서 자신의 변호를 위한 신청을 제기했는지 여부 및 어떠한 신청을 했는지를 질문하여야 한다.

제217조(소환기간) ①소환장의 송달(제216조)과 공판일 사이에는 최소 1주일의 기간을 두어야 한다.
②이 기간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사실심리의 시작까지 심리의 연기를 요구할 수 있다.
③피고인은 상기 기간의 준수를 포기할 수 있다.

제218조(변호인의 소환) 국선변호인은 언제나 피고인과 함께 소환하여야 하며, 사선변호인은 그 선임을 법원에 보고한 경우에 한하여 소환하여야 한다. 제217조를 준용한다.

제219조(피고인의 증거신청) ①피고인이 증인이나 감정인의 소환을 요구하거나 또는 공판을 위해 다른 증거방법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피고인은 증거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사실을 명시하여 재판장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신청에 따른 처분은 피고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피고인의 증거신청을 허용하는 때에는 이를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0조(피고인에 의한 소환) ①재판장이 소환신청을 거절한 자의 경우 피고인이 그를 직접 소환하게 할 수 있다. 피고인은 사전에 증거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권한을 갖는다.
②피고인에 의한 소환과 관련하여 여비 및 근로이익의 상실에 대해 법률로 정해진 보상이 현금으로 지급되거나 또는 이를 법원사무국에 공탁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만 소환된 자에게 출석의무가 있다.
③직접 소환된 자에 대한 신문이 사건해결을 위하여 유용하다는 사실이 공판에서 밝혀진 경우 법원은 신청에 기하여 소환된 자에게 국고로부터의 법률로 정해진 보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221조(직권에 의한 증거물 확보) 재판장은 직권으로 증거방법이 될 수 있는 다른 대상을 확보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222조(증인과 감정인의 명시) ①법원은 소환된 증인과 감정인의 성명을 제 때에 검사와 피고인에게 밝혀야 하며, 그들의 주소 또는 거소를 제시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214조 제3항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소환된 증인과 감정인의 성명을 제 때에 법원과 피고인에게 밝혀야

하며, 그들의 주소와 거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200조 제1항 제3문 내지 제5문을 의미에 맞게 준용한다.

②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소환하거나 자신이 공판에 내세울 증인과 감정인의 성명을 제 때에 법원과 검사에게 밝혀야 하며, 그들의 주소와 거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222조a(재판부구성의 통지) ①제1심 공판이 주법원이나 주 고등법원에서 진행되는 경우 늦어도 공판이 시작될 때까지는 재판장 및 보충법관과 보충배심법관을 명시한 재판부의 구성을 통지해야 한다. 재판장의 명령으로 재판부의 구성을 공판 이전에 미리 통지할 수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통지는 변호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이미 통지한 재판부의 구성이 변경된 경우 늦어도 공판이 시작될 때까지는 그 변경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재판부의 구성이나 그 구성변경의 통지가 공판시작 1주일 전보다 늦게 도달한 경우 법원은 피고인, 변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재판부 구성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공판을 중단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공판중단의 신청은 늦어도 첫 번째 피고인에 대한 사실심리가 시작할 때까지는 이루어져야 한다.

③피고인을 위해서는 그 변호인이나 변호사가, 보조기소인을 위해서는 변호사만이 재판부구성의 기준이 되는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222조b(재판부구성에 대한 이의) ①제222조a에 따른 재판부구성을 통지한 때에는 첫 번째 피고인에 대한 사실심리가 시작할 때까지만 재판부의

구성이 규정위반이라는 이의를 주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규정을 위반한 재판부구성의 사실을 함께 적시하여야 한다. 모든 이의사항을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판 외에서는 서면으로 이의를 주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45조 제2항을 준용하고, 보조기소인의 경우에는 제390조 제2항을 준용한다.

②이의제기에 관하여는 공판 외의 재판을 위해 구성된 재판부가 재판한다.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판부의 구성이 규정을 위반하였음을 확인한다. 이의제기의 결과 재판부구성이 변경된 경우 그 새로운 구성에 대해서는 제222조a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223조(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에 의한 신문) ①장기간 혹은 불확정적인 기간 동안 증인이나 감정인이 공판에 출석하는 일이 질병, 노약 기타 제거할 수 없는 장애로 인하여 불가능한 경우 법원은 이들에 대한 신문을 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에게 명할 수 있다.

②원격을 이유로 증인이나 감정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없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제224조(관계인에 대한 통지) ①이러한 신문을 목적으로 지정된 기일에 관하여는 검사와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지만, 신문 시 반드시 이들이 참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통지가 조사의 성공을 위태롭게 하는 때에는 통지하지 않는다. 작성된 조서는 검사와 변호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인신구속 중인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 피고인은 자신이 구속

중인 지역의 관할법원에서 진행되는 기일과 관련해서만 출석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225조(법관의 검증) 공판준비를 위하여 법관의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22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225조a(공판 전 관할변경) ①법원이 공판시작 이전에 사물관할이 상급법원에 속하는 근거가 있다고 보는 경우 소송기록을 검사를 경유하여 해당 상급법원에 제출하며, 제209조a 2호의 a)를 준용한다. 사건을 제출받은 법원은 그 사건의 인수 여부를 결정으로 판단한다.

②형사단독판사나 배심법원이 상급법원에 소송기록을 제출한 경우 제출 시에 정해진 기간 내에 피고인은 개별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사건을 제출받은 법원의 재판장이 그 신청에 관하여 판단한다.

③인수결정에는 피고인과 공판이 진행될 법원을 적시하여야 한다. 제207조 제2항 2호 내지 4호, 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그 결정에 대한 불복가능성은 제210조에 따라 정한다.

④법원이 공판개시 이전 제6조a에 따라 피고인의 이의를 이유 있다고 보고, 법원조직법 제74조e에 따라 그 우위가 인정되는 특별형사부의 관할이 될 수 있는 경우에도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다. 다른 형사부의 관할을 이유 있다고 보는 법원이 법원조직법 제74조e에 따라 해당 형사부보다 우위인 경우, 법원은 사건을 해당 형사부로 이전하도록 구속력을 갖는 지시를 행하며, 이러한 이전결정에 대한 불복가능성은 제210조에 따라 정한다.

제 6 장 공 판

제226조(상시임석) ①공판은 판결을 담당하는 자, 검사 및 법원사무국 서기의 상시 임석 하에 이루어진다.

②형사법관은 공판에 법원사무국 서기가 임석하지 아니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이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제227조(일인 이상의 검사 및 변호인) 공판에는 수인의 검사와 수인의 변호인이 참여하여 그들의 활동을 분담할 수 있다.

제228조(연기 또는 중단) ①공판의 연기 또는 중단에 관하여는 제229조에 따라 법원이 판단한다. 단기간의 중단은 재판장이 명한다.

②제145조의 규정과는 별도로 변호인에게 장애가 있는 경우 이를 근거로 피고인이 공판의 연기를 요구할 권리를 갖지는 않는다.

③제217조 제1항의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공판의 연기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229조(중단의 최장기간) ①공판의 중단은 3주까지 허용될 수 있다.

②공판이 최소 10일간 진행되었던 경우, 1개월까지 공판의 중단이 허용된다.

③최소 10일간 진행된 공판에 피고인 또는 판결을 행할 자가 질병을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 그 장애가 지속되는 동안에는 제1항과 제2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기간의 진행이 최장 6주까지는 정지되며,

이러한 기간은 그 장애의 제거 후 최소 10일이 경과하여야 종료된다. 법원은 장애의 시작과 종료를 불복할 수 없는 결정으로 확인한다.

④전항들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이 종료한 이후 늦어도 그 익일에 공판이 재개되지 않는 경우, 공판은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기간 종료 후 익일이 일요일,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 다음 평일에 공판을 속행한다.

제230조(피고인의 불출석) ①출석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해서는 공판을 진행하지 않는다.

②피고인의 불출석에 대하여 충분한 해명이 없는 경우 구인을 명하거나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231조(피고인의 재정의무) ①출석한 피고인은 심리 진행 중에는 퇴정할 수 없다. 재판장은 퇴정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심리가 중단되는 동안에 피고인을 유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퇴정하거나, 중단된 공판의 속행 시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피고인이 이미 소에 관하여 신문을 받았고 법원이 피고인이 향후 출석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을 계속하여 종료할 수 있다.

제231조a(고의로 야기한 소송무능력) ①피고인이 고의로 또는 유책하게 자신의 소송능력을 상실하게 하고 이를 통하여 자신이 출석하고 있는

공판의 속행이나 공판의 정상적인 진행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피고인이 아직 소에 관한 신문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원이 그의 출석을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지 않는 한,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을 진행하고 계속한다. 단, 공판개시 이후 피고인이 법원이나 수명법관 앞에서 소에 관하여 진술한 기회를 가졌던 경우에만 제1문에 따른다.

②판결의 선고가 시작되지 않은 이상 피고인이 소송능력을 되찾는 즉시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그가 출석하지 않은 동안 다루어진 주요 내용에 관하여 알려 주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피고인의 불출석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심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법원이 감정인인 의사의 의견을 청취한 후에 결정한다. 이 결정은 공판시작 직전에 내려질 수 있다.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가 허용되며, 즉시항고는 정지적 효력을 갖는다. 이미 시작된 공판은 즉시항고에 관한 재판이 있기까지 중단되어야 하며, 제229조 제2항의 요건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30일간의 중단이 허용된다.

④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고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의 불출석 상태에서의 심리 진행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즉시 변호인을 임명하여야 한다.

제231조b(질서위반행위로 인한 피고인의 퇴정) ①피고인이 질서위반행위로 인하여 법정에서 퇴정당하거나 구속된 경우(법원조직법 제177조), 법원이 피고인이 향후 반드시 출석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피고인의 출석이 공판의 진행을 상당한 정도로 침해할 것을 우려하는 때에는 피고인 없이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피고인에게 소에 관하여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피고인의 출석이 다시 허락되는 즉시 제231조a 제2항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231조c(피고인 퇴정의 허용) 수인의 피고인에 대한 공판이 진행되는 경우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피고인 일부 및 필요적 변호의 경우 해당 피고인의 변호인에게 그들과 관련 없는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퇴정할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러한 법원의 결정에서는 퇴정이 허용된 심리부분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허용은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제232조(피고인 불출석하의 공판) ①피고인을 합법적으로 소환하였고 소환장에 피고인이 불출석한 경우에도 심리가 진행될 수 있음을 명시한 경우 그리고 180일 이하의 일수벌금형, 선고유예, 운전금지, 추징, 몰수, 파기 또는 폐기의 처분이 단독으로 또는 병행하여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피고인 없이도 공판을 진행할 수 있다. 이러한 절차에서는 예상되는 것보다 더 중한 형이나 보안처분을 선고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을 소환하면서 운전면허취소의 가능성을 고지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불출석 시에도 운전면허취소 처분이 허용된다.

②공고를 통한 소환을 한 때에는 피고인 없이 공판을 진행하지 않는다.

③공판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판사의 신문 조서를 낭독한다.

④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내린 판결과 판결이유를 변호인에게 송달하였으나, 그 송달이 제145조a 제1항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피고인에게 직접 송달하여야 한다.

제233조(피고인 출석의무의 면제) ①6개월 이하의 자유형, 180일 이하의 일수벌금형, 선고유예, 운전금지, 추징, 몰수, 파기 또는 폐기의 형이 단독으로 또는 병행하여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피고인은 신청을 통해 공판 출석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절차에서는 예상되는 것보다 더 중한 형이나 보안처분을 선고해서는 안 된다. 운전면허취소는 허용된다.
②피고인이 공판 출석의무를 면제받은 경우 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가 소에 관하여 그를 신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고인에게 그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진행되는 심리에서 허용되는 법률효과에 관하여 고지하여야 하며, 공판 출석의무 면제에 관한 자신의 신청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질문하여야 한다.
③검사와 변호인에게는 신문을 목적으로 정해진 기일을 통지하여야 하지만, 이들이 신문에 출석할 필요는 없다. 신문조서는 공판에서 낭독하여야 한다.

제234조(불출석 피고인의 대리) 피고인 없이도 공판을 진행할 수 있는 경우인 한, 피고인은 서면 위임장을 받은 변호인에게 자신을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제234조a(피고인 불출석시 변호인의 권한) 피고인 없이 공판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제265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필요한 지적을 하는 것으로 족하며, 변호인이 공판에 참여하는 경우, 제245조 제1항 제2문과 제251조 제1항 1호, 제2항 3호에 따른 피고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아니하다.

제235조(원상태의 회복) 제232조에 의하여 피고인 없이 공판을 진행하는 경우, 피고인은 판결에 대하여 판결의 송달 후 1주일 이내에 기간의 해태와 동일한 요건 하에서 원상태의 회복을 청구할 수 있으며, 피고인이 공판에의 소환에 대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원상태의 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점은 판결의 송달과 함께 피고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제236조(본인출석 명령) 법원은 언제라도 본인의 출석을 명하고 구인장이나 구속영장을 통해 이를 강제할 수 있다.

제237조(수개의 형사사건의 병합) 계속 중인 수개의 형사사건이 서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연관성이 제3조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법원은 동시심리를 목적으로 이들 사건의 병합을 명할 수 있다.

제238조(소송의 지휘) ①심리의 지휘, 피고인 신문 및 증거조사는 재판장이 행한다.

②심리에 관여하는 자가 소송의 지휘와 관계된 재판장의 명령이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명령에 불복하는 경우 이에 관하여는 법원이 재판한다.

제239조(교호신문) ①재판장은 검사와 변호인의 일치된 신청에 따라 검사와 피고인이 지명한 증인과 감정인에 대한 신문을 검사와 변호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 검사가 지명한 증인과 감정인에 대하여는 검사

자신이, 피고인이 지명한 증인과 감정인에 대해서는 변호인이 우선적으로 신문할 권리가 있다.

②검사와 변호인의 신문 이후 재판장은 증인과 감정인에 대해 사안의 해명에 필요하다고 보이는 질문을 제기하여야 한다.

제240조(질문권) ①재판장은 요청이 있을 경우 배석판사가 피고인과 증인 및 감정인에 대해 질문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②재판장은 검사, 피고인과 변호인 및 배심판사에게도 동일하게 허용하여야 한다. 한 피고인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해 직접 질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제241조(질문권의 박탈) ①제239조 제1항에 의하여 주어진 신문의 권한을 남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재판장이 그 권한을 박탈할 수 있다.

②제239조 제1항과 제240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재판장은 부적절하거나 사건과 관계없는 질문을 불허할 수 있다.

제241조a(18세 미만의 증인) ①18세 미만의 증인은 재판장이 단독으로 신문한다.

②제240조 제1항과 제2항 제1문에 기재된 자들은 재판장이 증인에게 추가질문을 제기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의무에 합당한 재량에 비추어 증인의 안녕에 불이익이 야기될 우려가 없다고 보이는 경우 재판장은 상기의 자들에게 증인에 대한 직접 질문을 허용할 수 있다.

③제24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242조(질문의 허용 여부에 관한 의문) 질문의 허용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원이 재판한다.

제243조(공판의 진행) ①공판은 사건의 호명과 함께 시작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출석 여부와 증거방법의 제출 여부, 특히 소환된 증인과 감정인의 출석 여부를 재판장이 확인한다.

②증인은 법정에서 퇴정한다. 재판장은 피고인의 인적사항에 관하여 신문한다.

③이에 뒤이어 검사는 기소문을 낭독한다. 제207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검사는 새로운 공소장을 기초로 한다. 제207조 제2항 3호의 경우 검사는 기소문과 함께 공판개시 결정의 기초가 된 법적 평가에 대해 진술하며, 또한 그러한 법적 평가로부터 벗어나는 자신의 법적 견해를 진술할 수도 있다. 제207조 제2항 4호에 해당하는 경우 검사는 법원이 공판을 위한 기소를 허가하면서 결정했던 변경사항을 고려한다.

④재판장은 합의(제257조c)의 가능성에 대하여 논의가 있었던 경우, 제202조a, 제212조에 따른 논의가 진행되었는지 여부를 통지하고, 만일 논의가 진행되었다면 그 주요 내용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통지의무는 공판을 개시할 때 통지해야 할 사항에 변경이 있는 한, 공판진행의 모든 단계에 걸쳐 적용된다.

⑤그 다음으로 피고인에게 자신이 소에 관한 의견을 말하거나 사건에 대하여 진술하지 않을 자유가 있음을 알려준다. 피고인이 진술할 용의가 있다면 제136조 제2항에 따라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을 신문한다. 피고인의 전과사실은 그것이 판결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한다. 언제 피고인의 전과를 확인할 것인지는 재판장이 정한다.

제244조(증거조사) ①피고인 신문 후 증거조사를 실시한다.

②법원은 진실탐지를 위하여 판결과 관련하여 중요한 모든 사실과 증거방법에 관하여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증거조사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증거신청을 기각해야 한다. 이 밖에 공지의 사실이기 때문에 증거조사가 불필요한 경우, 증명되어야 할 사실이 판결에 중요하지 않은 것이거나 이미 증명된 경우, 증거방법이 매우 부적절하거나 입수하기 어려운 경우, 증거신청이 소송방해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또는 피고인의 책임감면을 위해 증명되어야 할 중요한 주장과 관련하여 주장된 사실을 진실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에만 증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④법원 스스로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경우에도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감정인신문에 대한 증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주장된 사실이 선행감정에 의해 이미 반증된 경우 다른 감정인의 의견청취를 기각할 수 있다. 그러나 선행감정인의 전문성에 의문이 있는 경우, 그 감정이 부적절한 사실을 근거로 한 경우, 감정 자체가 모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경우 또는 새로운 감정인이 선행감정인의 것보다 우수하다고 보이는 조사방법을 채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법원의 의무에 합당한 재량에 비추어 진실탐지를 위한 감정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정실시에 대한 증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동일한 요건 하에서 증인신문에 대한 증거신청 또한 그 소환이 외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면 이를 기각할 수 있다.

⑥증거신청의 기각은 법원의 결정을 요한다.

제245조(증거조사의 범위) ①증거조사를 불허하는 경우가 아닌 한, 증거조사는 법원에 의해 소환되어 출석한 증인과 감정인 및 그 밖에 제214조 제4항에 따라 법원이나 검사에 의해 제출된 증거방법을 포괄하여야 한다. 검사, 변호인 및 피고인이 동의하는 경우 개별증거의 조사를 배제할 수 있다.

②증거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피고인이나 검사에 의하여 소환되어 출석한 증인과 감정인 및 그 밖에 제출된 증거방법에 대하여 증거조사를 확대할 의무가 있다. 증거조사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그 신청을 기각한다. 그 밖에 증명되어야 할 사실이 이미 증명되어 있거나 공지의 사실인 경우, 그 사실과 판결의 대상 사이에 관련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증거방법이 매우 부적절한 경우 또는 그 신청이 소송방해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제246조(증거신청의 지체) ①증거방법이나 증명되어야 할 사실이 너무 늦게 제출되었다는 이유로 증거조사를 기각하여서는 안 된다.

②그러나 신청자의 상대방에게 신문받게 될 증인이나 감정인을 너무 늦게 거명했거나 증명되어야 할 사실을 너무 늦게 제시하여 상대방이 이들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갖지 못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증거조사 종결 이전까지는 정보입수를 목적으로 공판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재판장이나 법원의 명령으로 소환된 증인이나 감정인에 대하여 검사와 피고인은 전항과 동일한 권한을 갖는다.

④신청에 대하여 법원은 자유재량으로 판단한다.

제246조a(의사 감정인) 피고인을 정신병원 수용 또는 보안감호에 처할 것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 공판에서 피고인의 상태와 그 치료전망에 관하여 감정인을 신문하여야 한다. 법원이 피고인을 금단치료시설에 수용하도록 결정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 감정인이 피고인을 사전에 진찰하지 못한 경우 공판 전에 감정인에게 그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제247조(피고인의 일시적인 퇴정) 공동피고인이나 증인에 대한 신문 시 피고인의 존재로 인하여 진실을 말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은 신문이 이루어지는 동안 피고인의 퇴정을 명할 수 있다. 18세 미만의 증인에 대한 신문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존재가 증인의 안녕에 현저한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피고인의 출석 하에서 여타의 증인을 신문하는 것이 증인의 건강에 현저한 해악을 끼칠 급박한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피고인의 상태나 치료전망에 관해 논의하는 동안에 피고인의 건강에 현저한 손상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퇴정을 명할 수 있다. 피고인이 다시 법정에 입정하는 즉시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그가 퇴정한 동안 진술된 사항이나 심리된 주요 내용을 알려 주어야 한다.

제247조a(다른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증인신문) 증인이 공판정에 참석하여 신문을 받을 경우 증인의 안녕에 현저한 불이익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증인의 신문이 다른 장소에서 진행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진실탐문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251조 제2항의 요건 하에서도 이러한 명령이 허용된다. 이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이 경우 진술은 동시 중계를 통해 화면과 음성이 공판정에 전달되어야 한다.

앞으로의 공판에 증인 신문이 가능하지 않을 우려가 있고 그 내용이 진실탐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문내용을 녹화하여야 한다. 제58조a 제2항을 준용한다.

제248조(증인과 감정인의 퇴정) 신문받은 증인과 감정인은 재판장의 승인이나 지시가 있는 때에만 법정에서 퇴정할 수 있다. 검사와 피고인의 의견을 사전에 청취하여야 한다.

제249조(서면의 낭독) ①공판에서는 기록 및 기타 증거방법이 되는 문서를 낭독한다. 이는 과거에 행해진 형사판결, 형벌목록 및 교회기록부와 혼인 및 출생 등록부에서 발췌한 내용에도 적용되며, 법관의 감정조서도 이와 동일하다.

②제253조와 제254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관과 배심판사가 그 기록이나 문서의 내용에 대하여 알고 있고 그 밖의 관계인들도 이를 알 기회를 가졌던 경우에는 낭독을 배제할 수 있다. 제1문에 따라 절차를 진행도록 한 재판장의 명령에 대하여 검사, 피고인 및 변호인이 지체 없이 불복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재판한다. 재판장의 명령, 사전지식과 이를 얻을 기회의 확증 및 그 불복에 대해서는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50조(직접신문 원칙) 어떤 사실에 관한 증거가 개인의 지각에 근거하고 있는 경우 공판에서 그를 신문하여야 한다. 이 신문은 과거 신문 시 작성된 조서의 낭독이나 서면진술로 대체할 수 없다.

제251조(조서의 낭독) ①다음의 경우 증인, 감정인 또는 공동피고인에 대한 구두신문은 이들에 대한 신문조서 또는 이들이 작성한 서면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문서의 낭독으로 대체할 수 있다.

1.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고, 검사, 변호인 그리고 피고인이 이에 동의한 경우
2. 증인, 감정인 또는 공동피고인이 사망하였거나 다른 사유로 인하여 예정된 시간에 법정에서 신문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3. 조서 또는 문서가 재산적인 손해의 존재 여부 또는 그 정도에 관한 것일 경우

②다음의 경우, 증인, 감정인 또는 공동피고인에 대한 구두신문은 이들에 대한 법관의 신문조서의 낭독으로 대체할 수 있다.

1. 질병, 노쇠 기타 제거할 수 없는 장애를 이유로 증인, 감정인 또는 공동피고인의 공판 출석이 장기간 또는 불확정한 기간 동안 불가능한 경우
2. 증인 또는 감정인의 진술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사정에 비추어 이들로 하여금 원격지로부터 공판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없는 경우
3. 검사, 변호인 그리고 피고인이 낭독에 동의한 경우

③직접 판결에 이르기 위한 것과는 다른 목적, 특히 특정인의 소환과 그에 대한 신문의 수행 여부에 관한 판단을 준비하기 위해 낭독을 이용하여야 하는 경우 신문조서, 기록 기타 증거방법으로 사용되는 문서를 낭독하는 것도 허용된다.

④1항과 2항에 해당하는 경우 낭독을 명할 것인지는 법원이 결정한다. 이 때에는 낭독의 근거를 알린다. 법관의 신문조서를 낭독하는 경우

피신문자의 선서 여부를 확인한다. 법원이 선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선서가 아직 가능한 경우 이를 추완한다.

제252조(허용되지 않는 조서낭독) 공판 이전에 신문받은 증인이 공판에서 비로소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경우 공판 이전에 행한 진술은 낭독해서는 안 된다.

제253조(기억을 돕기 위한 조서의 낭독) ①증인이나 감정인이 일정 사실을 더 이상 기억할 수 없다고 밝히는 경우 이들에 대한 과거 신문내용 가운데 이들의 기억을 도울 수 있는 조서의 관련부분을 낭독할 수 있다.
②공판을 중단하는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는 신문에서 드러난 진술과의 모순을 확인하거나 제거할 수 없는 경우에도 전항과 동일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54조(자백 및 모순과 관련된 낭독) ①자백에 관한 증거조사의 목적으로 법관의 조서에 포함되어 있는 피고인의 진술을 낭독할 수 있다.
②공판을 중단하는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는 신문에서 드러난 과거 진술과의 모순을 확인하거나 제거할 수 없는 경우에도 전항과 동일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55조(낭독의 조서기재) 제253조와 제254조의 낭독 및 그 사유를 검사와 피고인의 신청에 기하여 이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55조a(화상녹화) ①증인신문에 대한 화상 및 음성의 녹화 절차에 대해서는 제251조, 제252조, 제253조와 제255조에 따른 신문내용에 대한 문서의 낭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범죄(형법 제174조 내지 제184조g) 또는 생명에 대한 범죄(형법 제211조 내지 제222조), 보호대상자에 대한 가혹행위(형법 제225조) 또는 형법 제232조 내지 제233조a의 개인적 자유에 대한 범죄에 대한 형사절차에서 18세 미만인 증인의 신문과정이 피고인 및 변호인이 참여한 때에 이루어진 경우 그 녹화내용으로 법관의 신문을 대체할 수 있다. 증인에 대한 추가적인 신문은 허용된다.

제256조(행정기관과 의사의 진술의 낭독) ①다음의 경우에 문서를 낭독할 수 있다.

1. 증명 또는 감정을 포함한 진술내용이 아래의 주체에 의한 것인 경우
   a) 공공기관
   b) 선서 등 일반적인 방법에 따라 감정을 수행하는 감정인
   c) 사회적 성격에 대한 자문을 제외한 영역에 관련하여 법정 자문을 수행하는 의사
2. 중상해의 경우를 제외한 여타의 상해와 관련된 의사의 진단서
3. 혈액표본 채취에 대한 의사의 보고
4. 운행기록계에 대한 평가, 혈액형 또는 혈중알코올농도의 확인 및 역산방식을 포함한 혈중알코올농도의 확인에 관한 감정
5. 수사활동에 관련된 형사소추기관의 진술을 포함하고 있는 조서 가운데 신문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아닌 것

②합의제 전문기관의 감정을 구하는 경우 법원은 그 전문기관의 구성원 가운데 1인에게 공판에서의 감정을 대리하도록 위임하고 해당 대리인이 누구인가를 법원에 통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257조(피고인, 검사, 변호인에 대한 문의) ①공동피고인 각자에 대한 신문 및 개별 증거조사 이후 피고인이 이에 관하여 진술할 것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문의하여야 한다.

②피고인에 대한 신문 및 개별 증거조사 이후 검사와 변호인의 요청에 따라 이들에게도 신문과 증거조사에 관하여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이러한 진술은 최종변론을 대신할 수 없다.

제257조a(서면신청과 질문의 유도) 법원은 소송관계인에게 절차에 관한 질문의 신청과 유도를 서면으로 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는 제258조에서 서술하고 있는 신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249조를 준용한다.

제257조b(공판과정 중 절차상황에 대한 논의) 법원은 절차를 유지하는 데에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공판과정에서 그 절차의 진행상황에 대해 당사자들과 논의할 수 있다.

제257조c(법원과 절차당사자들 간의 합의) ①법원은 적합한 사안인 경우에 다음 항의 방식에 따라 절차의 향후 진행 및 그 결과에 대해 당사자들과 합의할 수 있다. 제244조 제2항은 이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다.

②합의의 대상은 판결이나 그에 상응하는 결정의 내용이 될 수 있는 법률효과, 여타 판결의 기초가 되는 사실 확인절차 및 절차관계인의 소송활동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합의의 모든 구성부분은 자백으로 간주한다. 죄책의 유무 및 보안처분은 합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③법원은 합의가 어떠한 내용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지를 알려야 한다. 사안을 둘러싼 모든 상황이나 양형에서 고려되는 일반적인 사항들에 대해 법원의 자유로운 평가에 따른, 형벌의 상한과 하한도 알려줄 수 있다. 소송관계인들은 이에 대해 입장을 표명할 기회를 갖는다. 합의는 피고인과 검사가 법원의 제안에 동의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④법적 또는 사실적으로 중요한 사정이 간과되었거나, 새로운 사정이 발생하여 법원이 그로 인해 정해진 형벌의 정도가 사실관계나 책임정도에 비추어 더 이상 적절하지 못하리라는 확신에 도달한 때에는 법원은 합의에 구속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여타의 소송활동이 법원이 예상했던 방식으로부터 벗어난 경우에도 이와 같다. 이 경우 합의는 피고인의 자백으로 이용할 수 없다. 법원은 합의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점을 즉시 알려주어야 한다.

⑤피고인에게는 4항에 따라 예상했던 결과에 법원이 구속되지 않게 된 요건과 결과에 대해 고지하여야 한다.

제258조(최종변론) ①증거조사의 종료 후에는 검사, 피고인의 순으로 변론과 신청에 대해 진술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②검사에게는 피고인의 최종변론에 대응할 권리가 있으며,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다시 최후진술을 할 수 있다.

③변호인이 피고인을 위하여 진술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 스스로 자신을 변호하기 위하여 진술할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피고인에게 질문하여야 한다.

제259조(통역) ①법정에서 사용하는 언어에 능숙하지 못한 피고인에게는 최종변론의 내용 가운데 최소한 검사와 변호인의 신청에 관해서는 통역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②농아자인 피고인에 대해서도 법원조직법 제186조에 따라 이와 동일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260조(판결) ①심의를 거친 이후 판결의 선고와 함께 공판은 종료한다.

②직업금지 명령이 내려진 경우 판결에서는 금지되는 직업, 직종, 영업 또는 그 영업분과를 적시하여야 한다.

③절차상의 장애가 존재하는 경우 판결에서 절차의 중지를 선언하여야 한다.

④판결주문에는 피고인의 죄책이 인정되는 범죄행위의 법적 명칭을 명시한다. 법률상 특정한 표제어를 갖고 있는 범죄구성요건과 관련해서는 당해 표제어를 범죄행위의 법적 명칭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벌금형이 부과된 경우 그 액수와 일수의 한도를 판결주문에 기재하여야 한다. 보안감호를 유예하는 경우, 형벌이나 보안처분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유예 또는 형의 면제의 경우에는 이를 판결주문에 밝혀야 한다. 기타 판결주문의 양식은 법원의 재량에 따른다.

⑤판결주문 다음에는 적용 법규의 조, 항, 호, 자모를 그 법률의 명칭과 함께 명시한다. 이 밖에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전체형인 자유형을

선고하는 유죄판결에서 행위 또는 행위의 중요부분이 마약류 중독에 의하여 저질러진 경우에는 연방범죄등록법 제17조 제2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261조(자유심증주의) 법원은 심리 전체로부터 얻어진 자유로운 심증에 따라 증거조사의 결과에 관하여 재판한다.

제262조(민사상의 선결문제) ①어떤 행위의 가벌성이 민법상의 권리관계에 관한 재판에 의존되어 있는 경우, 형사법원도 이에 관하여 형사사건에서의 절차와 증거에 적용되는 규정에 따라 재판한다.

②그러나 법원은 조사를 연기하고 관계인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여 주거나 또는 민사법원의 판결을 기다릴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제263조(표결) ①책임문제 및 행위의 법률효과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단을 위해서는 참여법관의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필요로 한다.

②책임문제는 형법상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가벌성 배제, 경감 또는 가중 사유도 포함한다.

③책임문제는 시효의 요건을 포함하지 않는다.

제264조(판결의 대상) ①판결은 공소장에 기재된 행위가 심리의 결과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대상으로 한다.

②법원은 범죄행위에 대하여 공판개시결정의 근거로 삼은 판단에 구속되지 않는다.

제265조(법적 관점의 변경) ①사전에 피고인에게 법적 관점의 변경을 특별히 언급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변호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법원이 허용한 공소에서 제시된 형법규정과는 다른 근거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해서는 안 된다.

②형법상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가벌성 가중사유 또는 보안처분 정당화 사유가 심리 중에 비로소 밝혀진 경우에도 동일하다.

③법원이 허용한 공소에서 제시한 형법규정보다 더 중한 형법규정을 피고인에게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거나, 제2항에서 규정한 사유에 속하는 새로운 사정의 출현에 대해 변호를 충분히 준비하지 못하였다는 주장과 함께 피고인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그의 신청에 따라 공판을 연기하여야 한다.

④그 밖에도 사실상태의 변경으로 인하여 공소 또는 변호의 충분한 준비를 위해 공판을 연기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이 신청에 기하여 또는 직권으로 공판을 연기하여야 한다.

제265조a(준수사항 또는 지시사항) 준수사항과 지시사항(형법 제56조b, 제56조c, 제59조a 제2항)을 고려하는 경우 피고인에게는 그가 행한 불법을 배상할 급부를 제공할 것인지 여부 또는 그의 장래의 생활 방식을 확약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적절한 시점에 질문하여야 한다. 치료행위 또는 금단치료요양을 받도록 하거나 적절한 보호시설이나

기관에 수용하도록 하는 지시를 고려하는 경우, 피고인이 이에 동의하는지를 질문하여야 한다.

제266조(추가기소) ①검사가 공판 중에 피고인의 다른 범죄행위에까지 기소를 추가하는 경우 법원이 그 추가된 기소에 대하여 관할권이 있고 피고인이 동의하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을 통해 이를 절차에 편입시킬 수 있다.

②추가기소는 구두로 가능하다. 그 내용은 제200조 제1항에 따른다. 이는 공판조서에 기록한다.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변호의 기회를 부여한다.

③재판장이 심리중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피고인이 이를 신청하고 그 신청이 명백히 경솔한 것이거나 단지 절차의 지연을 의도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심리를 중단한다. 피고인에게는 심리의 중단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267조(판결이유) ①피고인이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 입증된 것으로 여겨지는 사실을 적시하여야 하며, 그 사실은 범죄의 법률적 표지에 상응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른 사실로부터 증거를 추론하는 경우에는 이들 사실을 적시하여야 한다. 상세한 내용은 소송기록을 참조하도록 할 수 있다.

②형법상 특별히 규정한 가벌성의 배제, 감경 또는 가중 사유를 심리 중에 주장한 경우, 이들 사유가 확인된 것으로 여겨지는지 여부를 판결이유에 밝혀야 한다.

③또한 형사판결의 이유에서는 적용된 형법규정을 적시하여야 하고, 형의 양정을 결정한 사정을 밝혀야 한다. 형법에 감경사유가 규정되어 있어 경한 형의 규정이 적용된 경우 판결이유는 이들 사정을 받아들인 이유 또는 심리 중에 제기된 신청을 거절한 이유를 밝혀야 하며, 이는 형법 제47조에 따라 자유형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준용한다. 또 판결이유에는 형법상 일반적으로 특히 중한 경우에 해당하는 요건이 충족되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이유도 밝혀야 하며, 이들 요건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중한 경우로 인정한 경우에는 제2문을 준용한다. 더 나아가 판결이유는 보호관찰부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 또는 심리 중에 제기된 신청에 반하여 이를 유예하지 않은 이유를 밝혀야 하며, 이는 형의 선고유예나 형의 면제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판결이 합의(제257조c)를 전제로 한 경우에도 판결이유에 이를 명시해야 한다.

④불복할 권리 있는 자가 모든 상소를 포기하거나 기간 내에 상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범죄행위의 법률적 표지를 포함하는 입증 사실 및 적용된 형법규정을 밝혀야 하며, 벌금형만을 부과하거나 벌금형에 부가하여 운전금지 또는 운전면허취소 및 운전면허증의 회수를 함께 명하는 판결에서는 법원이 받은 기소문, 제418조 제3항 제2문에 의한 소추 또는 약식명령 및 약식명령의 신청을 참고하도록 할 수 있다. 제3항 제5문을 준용한다. 판결이유의 여타 내용은 법원이 개별상황을 고려하여 재량에 따라 정한다. 상소제기를 위한 기간의 실기에 대한 회복을 허용하는 경우, 판결이유의 여타 내용을 제275조 제1항에 정한 기간 내에 보충할 수 있다.

⑤피고인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피고인의 유죄가 인정되지 않았는지 또는 증명된 사실을 가벌성이 없다고 보는 것인지 및 어떠한 근거로 그와 같은 판단에 도달한 것인지를 판결이유에 밝혀야 한다. 불복할 권한 있는 자가 상소를 포기하거나 기간 내에 상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고인의 책임을 묻는 범죄행위가 확인되지 않은 것이 사실적 근거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법적 근거에 의한 것인지를 밝히는 것만으로 족하다. 제4항 제3문을 적용한다.

⑥판결이유에는 또한 보안처분을 명한 이유, 유보조건부 보호감호를 선고한 이유 또는 심리 중의 신청에 반하여 이를 명하지 않은 이유도 밝혀야 한다. 범죄행위의 종류에 비추어 볼 때 운전면허취소 또는 형법 제69조a 제1항 제3문의 정지를 고려하였음에도 이를 명하지 않은 경우 판결이유에 당해 처분을 명하지 않은 이유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

제268조(판결의 선고) ①판결은 국민의 이름으로 선고된다.

②판결의 선고는 판결주문의 낭독과 판결이유의 고지를 통해 이루어진다. 판결이유의 낭독 또는 그 주요 내용의 구두통지에 의해 판결이유를 고지한다. 판결주문의 낭독은 반드시 판결이유의 고지에 선행하여야 한다.

③심리의 종결시점에서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늦어도 심리종결 이후 제11일까지는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공판을 새롭게 시작하여야 한다. 제229조 제3항과 제4항 제2문을 준용한다.

④판결의 선고를 유예한 경우 가능한 한 판결이유를 먼저 서면으로 확인해야 한다.

제268조a(집행유예 또는 보안처분의 유예 결정) ①판결에서 보호관찰부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피고인에 대한 선고를 유예한 경우 법원은 형법 제56조a 내지 제56조d 및 제59조a에 규정된 판결을 결정으로 행하며, 이는 판결과 함께 선고하여야 한다.

②판결에서 보안관찰부로 보안처분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형벌과 함께 보호관찰을 명하고 법원이 형법 제68조a 내지 제68조c에 따라 재판한 경우 제1항을 준용한다.

③재판장은 피고인에게 형벌 또는 처분의 보호관찰부 집행유예, 선고유예 또는 보호관찰의 의미, 보호관찰기간, 준수사항과 지시사항 및 집행유예의 취소 또는 유예된 형의 선고가능성(형법 제56조f 제1항, 제59조b, 제67조g 제1항)에 관하여 고지한다. 법원이 피고인에게 형법 제68조b 제1항에 따라 지시사항을 부과한 경우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형법 제145조a에 따른 처벌가능성도 고지한다. 원칙적으로 이들 고지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결정의 선고에 이어 이루어진다. 정신병원 수용처분이 보호관찰부로 유예된 경우 재판장은 그 유예의 취소가능성에 관한 고지를 배제할 수 있다.

제268조b(구속의 계속) 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직권으로 구속의 계속 또는 임시수용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 결정은 판결과 함께 선고하여야 한다.

제268조c(운전금지 개시에 관한 고지) 판결에서 운전금지를 명한 경우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금지기간의 개시(형법 제44조 제3항 제1문)에 관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당해 고지는 판결의 선고에 이어 이루어진다.

피고인의 불출석 하에 판결이 선고된 경우 피고인에게 이를 서면으로 고지해야 한다.

제268조d(유보조건부 보호감호에 관련된 고지) 판결을 통해 형법 제66조a 제1항 또는 제2항의 보호감호 명령이 유보된 경우,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유보의 의미 및 유보기간을 고지한다.

제269조(하급법원의 관할) 법원은 사건이 하급법원의 관할이라는 이유로 법원이 관할 없음을 선언할 수는 없다.

제270조(상급 관할법원으로의 이송) ①공판이 시작된 후 법원이 상급 법원의 사물관할을 이유 있다고 보는 경우 결정으로 사건을 해당 관할법원에 이송하며, 제209조a 2호의 a)를 준용한다. 피고인이 적시에 주장한 이의에 대하여 법원이 이유 있다고 보는 경우에도 이와 동일하게 처리한다.

②법원은 당해 결정에서 제200조 제1항 제1문에 따라 피고인과 범죄행위를 적시한다.

③이 결정은 공판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의 효력을 갖는다. 이에 대한 불복가능성은 제210조에 따른다.

④형사단독판사 또는 배심법원에 의해 이송결정이 내려지면 피고인은 고지된 결정에서 정해져야 하는 기간 내에 공판에 앞서 개별 증거를 조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신청에 관해서는 사건이 이송된 법원의 재판장이 판단한다.

제271조(공판조서) ①공판에 관하여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재판장과 공판에 참여한 법원사무국의 서기가 이에 서명하여야 한다. 조서에는 조서작성이 완결된 일자도 기재하여야 한다.

②재판장이 서명을 할 수 없는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재판장을 대신하여 배석판사 가운데 최고연장자가 서명한다. 재판장이 재판부의 유일한 구성원인 경우 서명이 불가능한 때에는 법원사무국 서기의 서명으로 족하다.

제272조(조서의 내용) 공판조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심리장소와 기일
2. 판사, 배심판사, 검찰공무원, 법원사무국 서기 및 심리에 관여한 통역의 성명
3. 기소에 따른 범죄행위의 명칭
4. 피고인, 변호인, 사인기소인, 보조기소인,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청구권을 주장하는 피해자, 기타 보조관계인, 법정대리인, 대리인, 후견인의 성명
5. 공개적으로 심리하거나 공개를 배제한다는 사실에 관한 기재

제273조(공판내용의 서면기재) ①조서는 공판의 진행과 결과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하고 모든 중요한 형식의 준수를 명백히 하여야 하며, 또한 낭독할 문서 또는 제249조 제2항에 의하여 그 낭독이 배제된 문서의 명칭 및 심리 진행 중에 제기된 신청, 선고된 판결과 그 판결주문을 포함하여야 한다. 조서에는 또한 제257조b에 규정된 논의의 진행과 내용의 중요한 부분이 기재되어야 한다.

①a 조서는 또한 제257조c에 따른 합의의 진행과 내용의 중요한 부분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43조 제4항, 제257조c 제4항 제4문과 제5항에 규정된 통지와 고지의 이행도 기재되어야 한다. 합의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진행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조서에 기재해야 한다.

②이 밖에 공판 외에서 형사법관이나 배심법원 앞에서 이행된 신문의 중요한 결과는 조서에 기재되어야 하나, 불복의 권한이 있는 자가 상소를 포기하거나 또는 기간 내에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재판장은 신문의 중요한 결과들을 기재하는 대신 개별적인 신문사항들을 녹음매체에 저장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녹음된 매체는 기록에 추가하거나 법원사무국이 기록과 함께 보관할 수 있다. 제58조a 제2항 제1문과 제3문 내지 제6문을 준용한다.

③공판기간 중에 사건의 확인 또는 진술이나 의견 내용의 확인이 문제되는 경우 재판장은 직권으로 또는 심리에 참여한 자들 가운데 1인의 신청에 기하여 그 전부를 조서에 기재하고 낭독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재판장이 이러한 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심리에 참여한 자들 가운데 1인의 신청에 기하여 법원이 이를 판단한다. 낭독과 승인이 이루어졌다는 사실 또는 어떤 이의가 제기되었는가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조서가 완성되기 전에는 판결을 송달해서는 안 된다.

제274조(조서의 증명력) 공판에 관하여 규정된 형식의 준수는 조서에 의해서만 증명할 수 있다. 이들 형식과 관계된 조서의 내용에 대하여는 그 위조의 증명만을 허용한다.

제275조(판결기록) ①판결과 그 이유를 즉시 조서에 완벽하게 기재하지 않은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소송기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이는 늦어도 선고 후 5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공판이 3일 이상 계속된 경우 이 기간은 2주 연장되고, 공판이 1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매 10일마다 다시 2주씩 연장된다. 이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판결이유를 변경할 수 없다. 법원이 개별 사안에서 예상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한하여 기간의 도과를 허용한다. 법원사무국은 판결이유의 채택 및 변경시기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재판에 참여한 법관은 판결에 서명하여야 한다. 서명과 관련하여 법관 1인에게 장애가 발생한 경우 재판장은 장애사유를 명시하고, 재판장에게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석판사 가운데 최고연장자가 이 사실을 명시하여 판결에 부기하여야 한다. 배심판사의 서명은 필요하지 않다.

③공판일 및 법관, 배심판사, 검찰공무원, 변호인, 공판에 참여한 법원사무국 서기의 성명을 판결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판결의 정본과 초본에는 법원사무국의 서기가 서명하고 법원인장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제7장 유보부 내지 사후적 보호감호명령에 대한 판결

제275조a(유보부 또는 사후적 보호감호명령 판결) 판결에서 보호감호명령을 유보한 경우(형법 제66조a), 형집행기관은 관할법원의 검사에게

기록을 제 때에 송부한다. 검사는 기록을 제 때에 재판장에게 제출하여, 제5항에 규정한 시점까지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형법 제67조d 제6항 제1문에 따른 정신병원 수용이 불필요하다고 선고된 때에는 형집행기관은 즉시 사후적 보호감호명령(형법 제66조b)을 관할하는 법원의 검사에게 기록을 송부해야 한다. 검사가 사후적 보호감호명령을 신청할 의도가 있는 때에는, 이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검사는 사후적 보호감호명령 신청을 즉시 제기하여야 하며, 기록과 함께 당해 신청을 재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이하에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공판절차의 준비와 진행에 대해서는 제213조 내지 제275조를 준용한다.

③제243조 제1항의 방식에 따라 공판절차가 개시된 이후에는 증인이 불참한 경우 주임판사가 지금까지 절차의 결과들에 대해 보고한다. 유보부 또는 사후적 보호감호 명령을 내릴 때 의미가 있는 경우에는 재판장이 그 이전의 선고를 낭독한다. 그 이후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대한 신문 및 증거조사를 행한다.

④법원은 판결에 앞서 감정인의 소견서를 참고하여야 한다. 사후적인 보호감호명령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두 명의 감정인으로부터 소견서를 받아야 한다. 감정인은 형벌집행 및 구금집행에서 수형인에 대한 처우를 담당했던 자이어서는 안 된다.

⑤유보된 보호감호명령에 관하여 법원은 자유형의 집행이 종료하기 6개월 이전에 재판하여야 한다.

⑥사후적인 보호감호를 명해야 할 긴급한 이유가 존재할 때에는 법원은 판결의 확정력이 발생할 때까지는 구금명령을 내릴 수 있다. 구금

명령의 선고에 관해서는 사후적 보호감호명령에 대한 신청이 이에 대한 결정을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될 때까지는 형법 제67조d 제6항에 따른 결정을 관할하는 법원이 담당한다. 형법 제66조a에 해당하는 경우, 제1심에서 형법 제66조a 제3항 제1문에 정해진 시점에 도달하기 이전에 유보부 보호감호를 명령했다면 법원은 그 판결이 확정력을 가질 때까지 구금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제114조 내지 제115조a, 제117조 내지 제119조a 그리고 제126조a 제3항을 준용한다.

제 8 장 부재자에 대한 절차

제276조(개념과 절차) 피고인의 소재지가 알려지지 않은 경우 또는 피고인이 외국에 체류하고 있고 관할법원에의 출두가 불가능하거나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피고인을 부재자로 본다.

제277조 내지 **제284조(삭제)**

제285조(증거보전의 목적) ①부재자에 대해서는 공판을 열지 않는다. 부재자에 대하여 시작된 절차에서는 그가 장래에 출두할 경우에 대비하여 증거를 보전하여야 한다.

②이 절차에는 제286조 내지 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86조(보조인)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해 출두할 수 있다. 피고인의 친족은 위임 없이도 그 대리인으로 허용된다.

제287조(통지) ①부재중인 피고인에게는 절차의 진행에 관한 통지를 청구할 권리가 없다.

②그러나 법관은 소재지가 알려진 부재자에게는 통지하도록 할 수 있다.

제288조(출석요구) 소재지가 알려져 있지 않은 부재자에게는 1개 또는 수개의 관보를 통하여 법원에 출석하거나 자신의 소재지를 신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289조(증거조사의 위임) 공판개시 이후에야 비로소 피고인의 부재사실이 밝혀진 경우 필요한 증거조사는 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가 실시한다.

제290조(구속영장 대신 압수) ①공소제기의 대상이 된 부재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의 발부를 정당화할 만한 혐의근거가 존재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연방법의 적용범위 안에 존재하는 부재자 재산을 압수할 수 있다.

②최고 6개월의 자유형 또는 180일의 일수벌금형이 가능한 범죄행위를 근거로 재산을 압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제291조(압수의 공고) 압수결정은 연방전자관보에 공고하여야 하며 법원의 재량에 따라 다른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도 공고할 수 있다.

제292조(공고의 효력) ①연방전자관보에 최초 공고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피고인은 압수된 재산에 대한 통상의 처분권을 상실한다.

②재산압수에 대한 결정은 부재자 재산관리의 개시를 담당하는 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해당 관청은 재산관리를 개시하여야 한다.

제293조(압수의 취소) ①압수사유가 소멸한 경우 압수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압수의 취소는 그 압수를 공고하였던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제291조에 따라 연방전자관보에 게재했다면 이를 삭제하도록 조치해야 하며, 연방전자관보에 압수의 취소를 게재했다면 1개월 이후에 이를 삭제하도록 해야 한다.

제294조(공소제기 이후의 절차) ①그 밖에 공소제기 이후의 절차에 대하여는 공판개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이 절차의 종료 이후에 행하여진 결정(제199조)에서는 압류의 계속 또는 취소에 관하여 동시에 판단하여야 한다.

제295조(구금면제의 보장) ①법원은 부재중인 피고인에게 구금면제를 보장할 수 있으며, 이는 조건부로 가능하다.

②구금면제의 보장은 구속의 면제를 보장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면제는 구금면제를 보장하는 범죄행위를 근거로 하는 구속에만 국한된다.

③자유형을 부과하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 피고인이 도주를 준비하거나 피고인에게 부여한 구금면제의 보장에 따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때에는 구금면제의 보장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3편 상 소

제1장 총 칙

제296조(상소권자) ①검사와 피고인은 법원의 재판에 대해 상소할 수 있다.
②검사는 피고인을 위하여서도 상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297조(변호인)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298조(법정대리인) ①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에게 주어진 기간 내에 허용된 상소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②이러한 상소 및 그 절차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상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299조(구금상태의 피의자) ①인신구속 중인 피고인은 행정관청의 명령에 의하여 자신이 수감되어 있는 시설이 소재한 지역 지방법원 사무국의 조서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상소와 관련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기간 내에 상소와 관련된 조서가 작성되면 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제300조(표기의 착오) 상소가 허용된 경우, 그 표기상의 착오는 상소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301조(검사의 상소) 검사가 제기한 모든 상소는 불복대상인 판결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되거나 파기될 수 있는 작용을 한다.

제302조(취하 또는 포기) ①상소의 취하 및 상소제기의 포기는 상소제기를 위한 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에도 유효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판결에 앞서 소송상의 합의(제257조c)가 있었던 경우에는 상소제기를 포기할 수 없다. 피고인을 위하여 검사가 상소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동의 없이는 이를 취하할 수 없다.

②변호인이 상소를 취하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명시적 위임을 필요로 한다.

제303조(상대방의 동의) 상소에 대한 재판이 구두변론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는 경우, 공판이 시작된 후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만 상소를 취하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상소를 취하할 때에는 보조기소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제 2 장 항 고

제304조(항고의 허용) ①법률이 명문으로 불복을 배제하고 있지 않는 한, 제1심 또는 항소절차에서 법원이 행한 모든 결정 및 재판장, 소송준비절차에서의 판사, 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의 처분에 대해서는 항고를 허용한다.

②증인, 감정인 및 기타의 자들도 자신에게 관계되는 결정과 처분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③비용 또는 필요한 부대경비를 부과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대상의 가액이 2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항고를 허용한다.

④연방법원의 결정과 처분에 대해서는 항고를 허용하지 않는다. 상급주법원의 결정과 처분에 대하여도 동일하나, 상급주법원이 제1심을 관할하는 작센 주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결정과 처분에 대해 항고가 허용된다.

1. 구금, 임시수용, 관찰을 위한 수용, 압수 또는 수색 또는 제101조 제1항에 언급된 조치
2. 공판개시의 기각 또는 절차상의 장애를 이유로 하는 절차의 정지
3. 피고인의 불출석 상태에서 내려진 공판진행 명령(제231조a) 또는 하급법원으로의 이송명령
4. 소송기록의 열람
5. 집행유예의 취소, 형면제의 취소와 집행유예(제453조 제2항 제3문), 집행유예취소의 보전을 위한 가처분명령(제453조c), 잔형의 유예와 취소(제454조 제3항과 제4항), 절차의 재심(제372조 제1문) 또는 제440조, 제441조 제2항 및 제442조에 의한 추징, 몰수 또는 폐기처분

제138조d 제6항은 이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⑤연방법원과 상급주법원에서 수사에 관여하는 수임판사의 처분(제169조 제1항)에 대해서는 그 처분이 구금, 임시수용, 압수, 수색 또는 제101조 제1항에 따른 조치인 경우에만 항고를 허용한다.

제305조(항고의 배제) 판결에 앞서 이루어지는 사실심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 단, 구금, 임시수용, 압수, 일시적 운전면허

취소, 일시적 직업금지 또는 질서유지수단이나 강제수단의 확정에 관한 결정 및 제3자가 관련된 모든 결정은 그렇지 아니하다.

제305조a(집행유예결정에 대한 항고) ①제268조a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를 허용한다. 이 경우의 항고는 당해 명령이 위법이라는 사실만을 근거로 삼을 수 있다.

②결정에 대하여 항고가 제기되고 판결에 대하여 허용되는 상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항고에 대한 재판의 관할은 상고법원에 있다.

제306조(항고의 제기; 경정 또는 항고제출) ①불복된 결정을 한 법원 또는 그러한 결정을 한 재판장이 속하는 법원에 대하여, 법원사무국의 조서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또는 서면으로 항고를 제기한다.

②불복된 결정을 한 법원이나 재판장이 항고를 이유 있다고 보는 경우 항고를 받아들여 그 결정을 경정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지체 없이 늦어도 3일이 경과하기 전에 항고법원에 항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이들 규정은 소송준비절차에서 이루어지는 법관 및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의 결정에도 적용된다.

제307조(집행의 부정지) ①항고의 제기로 인하여 불복된 결정은 그 집행에는 장애가 되지 않는다.

②그러나 불복된 결정을 내린 법원, 재판장 및 판사 그리고 항고법원은 불복된 결정에 따른 집행의 연기를 명할 수 있다.

제308조(항고법원의 권한) ①상대방의 반대의견 진술을 위한 항고사실의 통지가 없었다면 항고법원은 그 불복된 결정을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

②항고법원은 수사를 명할 수 있고 스스로 수사할 수도 있다.

제309조(재판) ①항고에 대한 재판은 구두변론 없이 진행되며, 적절한 경우에는 검사의 의견을 청취한 이후에 진행한다.

②항고를 이유 있다고 보는 경우 항고법원은 사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결정을 동시에 행한다.

제310조(재항고) ①주법원 또는 법원조직법 제120조 제3항에 따라 관할을 갖는 상급주법원이 제기된 항고에 관하여 내린 결정에 대해서는 그것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항고를 할 수 있다.

1. 구금
2. 임시수용
3. 제111조d와 관련하여 제111조b 제2항에 따른 물건의 압류가 가액 20,000유로 이상의 물건을 대상으로 한 경우

②여타의 항고심 결정에 대해서는 재차 불복할 수 없다.

제311조(즉시항고) ①즉시항고가 허용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다음의 특별 규정을 적용한다.

②항고는 1주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재판의 고지(제35조)와 함께 기간이 기산된다.

③법원은 항고를 통하여 불복된 자신의 결정을 변경할 권한이 없다. 그러나 사실이나 증거조사의 결과에 관하여 항고인의 의견을 청취하기 전에 사실이나 증거조사의 결과를 항고인에게 불리하게 평가하는 경우 및 사후적 진술에 근거하여 항고가 이유 있다고 보는 경우, 법원은 항고를 받아들여 재판을 경정한다.

제311조a(추후의 법적 청문) ①항고법원이 항고인 상대방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은 채 항고를 허용하였고, 그 재판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는 경우, 이를 통하여 발생한 상대방의 불이익이 여전히 존재하는 한,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기하여 추후에 상대방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고 그 신청에 관하여 재판하여야 한다. 항고법원은 자신의 재판을 신청 없이도 변경할 수 있다.

②전항의 절차에 대해서는 제307조, 제308조 제2항과 제309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3장 항 소

제312조(항소의 허용) 형사단독판사 및 배심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할 수 있다.

제313조(항소의 인용) ①피고인에게 15일 이하의 일수벌금형을 부과하는 유죄판결이 내려진 경우, 선고유예와 관련하여 유예된 형이 15일 이하의 일수벌금형인 경우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유죄판결이 내려진 경우

에는 항소가 인용될 때에만 이를 허용한다. 피고인이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또는 절차가 정지되고 검사가 30일 이하의 일수벌금형을 구형한 경우에도 동일하다.

②항소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항소를 인용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항소는 허용되지 않은 것으로서 기각된다.

③질서위반법 제79조 제1항에 따라 결정에 대한 항고가 허용되는 경우 또는 동법 제80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이를 허용할 수 있는 경우, 질서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무죄선고 또는 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판결에 대한 항소는 언제나 인용되어야 한다. 또한 제2항을 적용한다.

제314조(항소제기) ①항소는 판결 선고 후 1주일 이내에 제1심 법원에 대하여 법원사무국의 조서에 기재하는 방법 또는 서면으로 제기하여야 한다.

②판결의 선고가 피고인의 출석 하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제234조, 제387조 제1항, 제411조 제2항과 제434조 제1항 제1문에 해당하는 사례에서 서면에 의해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인이 출석한 상황에서 선고가 이루어진 경우가 아닌 한, 판결의 송달과 함께 항소제기 기간이 시작된다.

제315조(항소와 원상태 회복) ①피고인의 불출석 하에 내려진 판결에 대하여 원상태로의 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항소제기 기간의 진행이 배제되지 않는다.

②피고인이 원상태 회복을 신청한 경우 그 신청이 기각된 즉시 제 때에 항소를 제기함으로써 항소는 유지된다. 이에 따라 항소와 관계된 다른 처분은 원상태 회복의 신청이 처리될 때까지 유예된다.

③원상태 회복의 신청을 수반하지 않는 항소제기의 경우 원상태 회복의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316조(확정력의 장애) ①기간 내의 항소제기에 따라 불복된 판결은 확정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②판결과 그 이유를 아직 송달받지 않은 상소인에게는 항소가 제기되는 즉시 판결을 송달하여야 한다.

제317조(항소의 이유) 항소의 이유는 항소제기의 기간이 경과한 후 1주일 이내 또는 그때까지 판결이 송달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송달 후 1주일 이내에 제1심 법원에 대하여 법원사무국의 조서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또는 항소장을 통해 제시될 수 있다.

제318조(항소의 제한) 항소는 특정 불복논점에 대해서만 가능하도록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이러한 제한이 없거나 항소가 정당화되지 않은 경우 판결내용 전체에 대하여 불복한 것으로 본다.

제319조(항소제기의 지체) ①항소의 제기가 지체된 경우 제1심 법원은 그 상소를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②상소인은 기각결정을 송달받은 후 1주일 이내에 항소법원의 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록을 항소법원에 송부하여야 하지만, 이로 인하여 판결의 집행이 저지되는 것은 아니다. 제35조a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20조(검사에 대한 기록제출) 항소가 제 때에 제기되었다면, 항소이유를 제시하기 위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 법원사무국은 항소이유의 제시 여부와는 관계없이 검사에게 기록을 송부한다. 검사가 항소를 제기한 경우 검사는 피고인에게 항소의 제기 및 그 이유에 관한 서류를 송달한다.

제321조(항소법원에 대한 기록전달) 검사는 기록을 항소심 담당 검사에게 송부한다. 항소심 담당검사는 1주일 이내에 그 기록을 항소법원의 재판장에게 전달한다.

제322조(공판 없는 항소기각) ①항소법원이 항소제기에 관한 규정이 준수되었다고 인정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결정을 통해 당해 상소를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기각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이에 관하여 법원은 판결로써 재판하며, 제322조a는 이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322조a(항소인용에 대한 결정) 항소의 인용(제313조)에 관하여는 항소법원이 결정으로 재판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항소를 인용하는 결정은 이유를 제시할 필요가 없다.

제323조(공판의 준비) ①공판의 준비에 대해서는 제214조 및 제216조 내지 제225조를 준용한다. 소환장에는 피고인의 불출석에 따른 효과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제1심에서 신문한 증인과 감정인에 대한 재신문이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들을 소환하지 않을 수 있다. 재신문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항소법원은 제273조 제2항 제2문에 따라 신문의 녹취내용이 조서에 기재되도록 명령한다. 이 녹취내용을 기재한 자는 이러한 기재가 녹취된 내용과 일치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서명해야 한다. 검사는 변호인과 피고인에게 문서화된 조서의 등본을 송달해야 한다. 기재내용이 녹취내용과 상이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은 허용된다. 문서화된 조서는 제325조의 방식에 따라 낭독된다.

③새로운 증거방법은 허용된다.

④소환할 증인과 감정인의 선정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항소를 정당화하기 위해 거명한 자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24조(항소심공판의 진행) ①제243조 제1항에 따라 공판이 개시된 후, 증인의 불출석 하에서 주임판사는 이제까지의 절차의 진행결과에 관하여 보고한다. 제1심 판결이 항소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한, 이를 낭독하여야 하며, 검사, 변호인과 피고인이 판결이유의 낭독을 포기하는 경우 이를 배제할 수 있다.

②이에 뒤이어 피고인에 대한 신문과 증거조사가 이루어진다.

제325조(서면의 낭독) 보고 및 증거조사 시 서면을 낭독할 수 있으며,

증인이나 감정인을 재소환하였거나 피고인이 이들에 대한 재소환을 공판 전 제 때에 신청한 경우에는 제251조와 제253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 공판에서 신문한 증인과 감정인의 진술에 관한 조서를 검사와 피고인의 동의 없이 낭독하여서는 안 된다.

제326조(최종변론) 증거조사가 종료한 후 상소인의 의견을 우선 청취하고, 검사 및 피고인과 변호인에 대하여 그들의 설명과 신청을 포함하여 의견을 청취한다. 피고인에게는 최후진술의 기회를 부여한다.

제327조(판결심사의 범위) 판결은 그것이 불복된 범위 내에서만 항소법원의 심사대상이 된다.

제328조(항소재판의 내용) ①항소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항소법원은 판결을 파기하고 직접 사건을 재판하여야 한다.

②제1심 법원에 부당하게 관할권이 귀속된 경우 항소법원은 그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329조(피고인의 불출석) ①공판이 시작할 때 피고인 또는 출석이 허용된 대리인이 출석하지 않고 또한 피고인의 불출석에 대한 충분한 해명이 없는 경우,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사실심리 없이 기각하여야 한다. 상고법원이 사건을 환송함에 따라 항소법원이 새로이 심리하는 경우에는 제1문을 적용하지 않는다. 수개의 범죄행위 가운데 개별 행위에 대한 유죄판결이 파기된 때에는 항소의 기각과 함께 판결 가운데

계속 유지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명백히 밝혀야 하며, 항소법원은 선고된 형을 새로운 병합형으로 바꿀 수 있다.

②제1항 제1문의 요건 하에서는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피고인 없이 심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제2문의 요건이 존재하지 않는 한, 피고인의 동의 없이도 검사의 항소가 취하될 수 있다.

③피고인은 판결 송달 후 1주일 이내에 제44조와 제45조에서 서술하고 있는 요건 하에 원상태 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처리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구인 또는 구금을 명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강제수단 없이도 새로운 기일이 지정된 공판에 출석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1문은 배제된다.

제330조(법정대리인이 항소한 경우의 처분) ①법정대리인이 항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은 피고인도 공판에 소환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로 구인할 수 있다.

②법정대리인만이 공판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법정대리인 없이 심리할 수 있다. 공판이 개시될 때 법정대리인과 피고인이 모두 출석하지 않은 경우 제329조 제1항을 준용하며, 피고인만이 출석하지 않은 때에는 제329조 제2항 제1문을 준용한다.

제331조(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①피고인만이 항소를 제기한 경우 또는 검사나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를 제기한 경우, 행위에 대한 법률효과의 종류와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판결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

②정신병원수용 또는 금단치료소수용 명령에 대해서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332조(일반 규정) 그 밖의 경우에는 제2편 제6장의 공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 4 장 상 고

제333조(상고의 허용) 형사합의부와 중죄법원의 판결 및 상급주법원에서 내려진 제1심 판결에 대해서는 상고를 허용한다.

제334조(삭제)

제335조(비약상고) ①항소가 허용된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 대신 상고로써 불복할 수 있다.

②비약상고에 대해서는 항소절차 이후에 상고를 제기했다면 그 상고를 재판했을 법원이 재판한다.

③한 관계인은 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고 다른 관계인은 항소를 제기한 경우, 항소가 취하되지 않거나 또는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서 기각되지 않는 한, 규정된 형식을 갖추어 제 때에 제기된 상고는 항소로 다룬다. 그러나 상고의 신청과 그 사유를 규정된 형식과 기간에 맞추어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제344조 내지 제347조). 항소판결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에 따라 상고를 제기하는 것을 허용한다.

제336조(전심의 선행재판) 판결이 선행재판에 기초하고 있는 이상, 선행재판도 상고법원의 판단대상이 된다. 단, 불복할 수 없다고 명시한 재판 또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재판의 경우에는 제1문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337조(상고이유) ①판결이 법률위반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만이 상고이유가 될 수 있다.

②법률위반이라 함은 법규범을 적용하지 않았거나 이를 올바르게 적용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제338조(절대적 상고이유) 다음의 경우는 판결이 법률위반에 근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1. 수소법원이 규정에 따라 구성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제222조a에 따라 재판부의 구성을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때에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규정을 위반한 구성이 상고이유가 될 수 있다
   a) 통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b) 규정을 위반한 구성에 대해 제 때에 규정된 형식에 따라 제기된 이의를 간과하거나 기각한 경우
   c) 재판부 구성에 대한 심사를 위해 제222조a 제2항에 따르지 않고 공판을 중단한 경우 또는
   d) 제222조b 제2항 제2문에 따라 재판부 구성이 규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확인한 법원이 이 규정위반의 구성으로 재판한 경우
2. 법률에 의해 판사직의 수행에서 제척된 법관이나 배심판사가 판결에 참여한 경우

3. 법관이나 배심판사가 불공정재판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기피되었고 당해 기피신청이 이유 있다고 밝혀지거나 또는 이를 부당하게 기각한 경우 당해 법관이나 배심판사가 판결에 참여한 때
4. 법원이 부당하게 자신의 관할을 인정한 경우
5. 검사의 불출석 또는 법률이 출석을 규정하고 있는 자의 불출석 하에 공판을 진행한 경우
6. 절차공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구두변론에 근거하여 판결이 내려진 경우
7. 판결이 그 이유를 포함하고 있지 않거나 또는 그 이유를 제275조 제1항 제2문과 제4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 내에 기록으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
8. 법원의 결정으로 재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논점에 관한 변호를 부당하게 제한한 경우

제339조(피고인을 위한 법규범) 검사는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판결의 파기를 유도할 목적으로 오로지 피고인에게만 유리한 법규범의 위반을 주장할 수 없다.

제340조(삭제)

제341조(상고의 제기) ①상고는 판결 선고 후 1주일 이내에 불복된 법원에 법원사무국의 조서에 기재하는 방법 또는 서면으로 제기하여야 한다.
②판결의 선고가 피고인의 출석 하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제234조, 제387조 제1항, 제411조 제2항과 제434조 제1항 제1문에 해당하는

사례에서 서면에 의해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인이 출석한 상황에서 선고가 이루어진 경우가 아닌 한, 판결의 송달과 함께 그 기간이 시작된다.

제342조(원상태 회복과 상고) ①피고인의 불출석 하에 내려진 판결에 대하여 원상태 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은 상고제기기간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는다.

②피고인이 원상태 회복을 신청한 경우 그 신청이 기각된 즉시 제 때에 상고를 제기하고 그 이유를 제시함으로써 상고가 유지된다. 이에 따라 원상태 회복에 대한 신청이 처리될 때까지 상고와 관련된 다른 처분은 유예된다.

③원상태 회복의 신청과 관계없는 상고제기의 경우에는 원상태 회복의 청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343조(확정력의 장애) ①기간 내의 상고제기에 의하여 불복된 판결은 확정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②판결과 그 이유를 아직 송달받지 않은 상소인에게는 상고가 제기된 후 판결을 송달하여야 한다.

제344조(상고의 이유) ①상소인은 판결에 불복하고 그 파기를 신청(상고의 신청)하는 범위에 대하여 설명하고 그 신청에 대한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상고이유에는 절차에 관한 법규범 위반을 이유로 판결에 불복하는 것인지 또는 다른 법규범 위반을 이유로 한 것인지를 밝혀야 한다. 전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흠결을 포함하는 사실을 적시하여야 한다.

제345조(상고이유 제시기간) ①상고의 신청과 그 이유는 상소제기 기간이 경과한 이후 늦어도 1개월 내에 불복의 대상인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이때까지 판결이 송달되지 않은 경우 기간의 진행은 그 송달과 함께 시작된다.

②피고인의 상고는 변호인이나 변호사가 서명한 서면 또는 법원사무국의 조서에 기재하는 방법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346조(상고제기의 지체) ①상고제기가 지체된 경우 또는 상고신청이 제 때에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제345조 제2항에 규정된 형식에 따르지 않은 경우 불복된 법원은 결정으로 그 상소를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②불복하고자 하는 자는 결정의 송달 후 1주일 이내에 상고법원의 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록을 상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하지만, 판결의 집행은 이로 인하여 정지되지 않는다. 제35조a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47조(송달; 반대의견; 기록제출) ①상고를 제 때에 제기하였고 상고신청이 기간 내에 규정된 형식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 상고장을 상소인의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상고장을 송달받은 상대방은 1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반대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피고인은 법원사무국의 조서에 반대의견을 기재할 수 있다.

②반대의견이 제시된 이후 또는 기간의 경과 이후에 검사는 소송기록을 상고법원에 우송한다.

제348조(상고법원의 관할위반) ①기록을 제출받은 법원이 상소에 관한 심리와 재판이 다른 법원의 관할에 속한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관할위반을 선언하여야 한다.

②관할상고법원을 적시하고 있는 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고, 결정에서 적시하고 있는 법원은 그 결정에 구속된다.

③기록의 교부는 검사에 의해 이루어진다.

제349조(공판 없는 상고기각) ①상고법원이 상고의 제기 또는 상고신청에 관한 규정이 준수되었다고 인정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결정을 통해 당해 상소를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기각할 수 있다.

②상고법원은 이유제시를 첨부한 검사의 신청에 기하여 설령 상고법원이 만장일치로 상고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는 경우에도 결정으로 재판할 수 있다.

③검사는 제2항의 신청을 그 이유와 함께 상소인에게 통지한다. 상소인은 2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상고법원에 반대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상고법원이 만장일치로 피고인을 위하여 제기된 상고가 이유 있다고 보는 경우 상고법원은 결정으로 불복된 판결을 파기할 수 있다.

⑤상고법원이 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을 적용하는 경우 상소에 관한 재판은 판결로써 행한다.

제350조(공판) ①피고인과 변호인에게는 공판의 장소와 시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피고인에 대한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변호인에 대한 통지로 족하다.

②피고인은 직접 공판에 출석하거나 위임장을 소지한 변호인으로 하여금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인신구속중인 피고인에게는 출석에 대한 청구권이 없다.

③인신구속중인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피고인이 공판에 구인되지 않는 때에는 그의 신청에 따라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공판을 위한 변호인을 임명하여 준다. 변호인 임명에 대한 신청권의 지도와 함께 피고인에게 공판기일을 통지한 후 1주일 내에 제1문의 신청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351조(상고심공판의 진행) ①공판은 주임판사의 보고와 함께 시작된다.

②이에 뒤이어 상소인의 의견을 청취한 후 검사 및 피고인과 변호인의 설명과 신청을 포함한 의견을 듣는다. 피고인에게는 최후진술의 기회를 부여한다.

제352조(판결심사의 범위) ①상고법원의 심사는 제기된 상고신청 그리고 상고가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상고신청을 제기할 때 적시한 사실에 한정된다.

②제344조 제2항에 규정된 것 이외의 상고신청 이유를 제시할 필요는 없으며, 이유제시가 정당하지 않더라도 상고신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353조(상고재판의 내용) ①상고를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한 불복된 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②판결의 기초가 된 사실확인이 판결이 파기된 이유가 된 법률위반을 통해 이루어진 때에는 사실확인도 동시에 파기하여야 한다.

제354조(직접적인 본안 판결; 파기환송) ①판결의 기초가 된 사실확인에 법률을 적용하면서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만으로 판결을 파기한 경우에는, 다른 사실에 관한 논의 없이 무죄판결이나 공판의 중지 또는 절대적으로 확정된 형벌을 선고하여야 하거나 또는 상고법원이 검사의 신청과 합치하여 법정최저형 또는 형의 면제를 상당하다고 보는 때에 한하여, 상고법원이 직접 본안을 판단하여야 한다.

①a 법률효과의 양정에서만 법률위반이 있었던 경우 선고된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상고법원은 불복된 판결을 파기하지 않을 수 있다. 상고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기하여 법률효과를 낮출 수 있다.

①b 상고법원이 단지 전체형의 산정(형법 제53조, 제54조, 제55조)에서 법률위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전체형에 대한 추후의 결정이 제460조, 제462조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처리할 수 있다. 상고법원이 개별형을 고려하여 제1항 또는 제1a항에 따라 직접 재판을 한 경우에는 제1문을 준용한다. 이 밖에는 제1항과 제1a항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여타의 경우에는 사건을 파기된 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다른 단독심이나 합의부 또는 그 법원이 소재하고 있는 주의 다른 동급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상급주법원이 제1심 재판을 한 절차에서는 그 법원의 다른 합의부에 사건을 환송하여야 한다.

③범죄행위 사실이 여전히 문제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관할을 갖는 하급심법원에 환송할 수 있다.

제354조a(법률개정에 따른 재판) 상고법원의 재판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불복된 재판이 선고된 시점과는 다른 법률이 효력을 갖는다는 이유로 판결을 파기한 때에도 상고법원은 제354조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355조(관할법원에의 이송) 전심법원이 부당하게 관할을 인정하였음을 이유로 판결을 파기한 경우 상고법원은 동시에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한다.

제356조(판결의 선고) 판결의 선고는 제268조의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다.

제356조a(이전 상태로의 회복) 법원이 상고심재판에서 당사자가 갖는 법적 청문권을 판결에 영향이 있을 정도로 침해한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판결 확정 이전의 상태로 회복하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신청은 법적 청문권이 침해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서면 또는 법원사무국의 조서에 기재하게 하는 방식으로 그 이유를 명시하여 상고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침해를 안 날을 확정하는 시점은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 입증되어야 한다. 제47조를 준용한다.

제357조(공동피고인에 대한 상고효력의 확대) 형법의 적용과 관련된 법률 위반을 이유로 피고인에 유리하게 판결이 파기되고, 상고를 제기하지 않은 다른 피고인들에게도 그 파기된 판결이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들도 함께 상고를 제기한 것과 같이 판결하여야 한다. 제47조 제3항을 준용한다.

제358조(하급법원의 구속;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①본안을 다시 심리하도록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판결을 파기할 때 근거로 삼은 상고법원의 법적 판단을 재판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

②피고인만이 상고를 제기한 경우 또는 피고인을 위하여 검사나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이 상고를 제기한 경우, 행위의 법률효과의 종류와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불복된 판결을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 정신병원에의 감호명령이 파기된 경우에는, 본 규정과는 관계없이 감호 대신 형벌을 부과할 수 있다. 제1문은 또한 정신병원 또는 금단치료시설의 감호명령의 부과를 금지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제 4 편 확정판결에 의해 종결된 절차에 대한 재심

제359조(유죄판결을 받은 자를 위한 재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유죄판결을 받은 자를 위하여, 확정판결에 의해 종결된 절차의 재심을 허용한다.

1. 공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게 불리하게 제출된 문서가 진정한 것이 아니었거나 변조된 것이었던 경우
2. 증인 또는 감정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선서의무를 위반하거나 또는 선서 없는 고의의 허위진술의 죄를 범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게 불리한 증언이나 감정을 행한 경우
3. 사건과 관련하여 가벌적인 직무상 의무위반을 범한 법관이나 배심판사가 판결에 관여하였고, 그 위반을 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직접 야기한 것이 아닌 경우
4. 형사판결의 근거가 되는 민사판결이 다른 확정판결에 의해 파기된 경우
5. 단독으로 또는 과거에 조사된 증거와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이나 감경규정의 적용에 의한 형의 감경 또는 보안처분에 관한 본질적으로 상이한 판단의 근거가 되는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방법이 제출된 경우
6. 유럽인권재판소가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를 위한 유럽협약 또는 그 의정서를 위배한 사실을 확인하고 판결이 그러한 위배에 기초했던 경우

제360조(집행의 정지) ①절차의 재심청구는 판결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②그러나 법원은 집행의 유예 및 중단을 명할 수 있다.

제361조(형집행종료 또는 사망 이후의 재심) ①절차의 재심청구는 형집행이 종료되었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사망한 때에도 가능하다.

②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법률상 배우자, 사실상 배우자, 존·비속 친족 및 형제자매에게 재심청구권이 있다.

제362조(피고인에게 불리한 재심) 다음의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하여 종결된 절차에 대해 피고인에게 불리한 재심을 허용한다.

1.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제출된 문서가 진정한 것이 아니었거나 변조된 것이었던 경우
2. 증인 또는 감정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선서의무를 위반하거나, 선서 없는 고의의 거짓진술의 죄를 범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이나 감정을 행한 경우
3. 사건과 관련하여 가벌적인 직무상 의무위반을 범한 법관이나 배심판사가 판결에 관여한 경우
4. 무죄판결을 받은 자가 법정에서 또는 법정 밖에서 범죄행위사실을 자백하였고, 그 자백의 신빙성이 있는 경우

제363조(재심의 불허) ①동일한 형법규정을 근거로 상이한 형의 양정을 유도하려는 목적의 재심절차는 허용되지 않는다.

②한정책임능력(형법 제21조)을 이유로 한 형의 감경을 유도하려는 목적의 재심도 허용되지 않는다.

제364조(범죄행위의 주장) 범죄행위의 주장에 근거한 절차의 재심청구에서는, 그 행위를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 내려진 경우 또는 증거의 하자와는 다른 이유로 형사절차를 개시하거나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용한다. 제359조 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문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364조a(재심절차를 위한 변호인) 사실문제와 법률문제의 난해함을 이유로 변호인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심절차 재판의 관할법원은 변호인이 없는 유죄판결을 받은 자를 위하여 신청에 기하여 재심절차를 위한 변호인을 임명한다.

제364조b(재심절차의 준비를 위한 변호인) ①다음의 경우 재심절차 재판의 관할법원은 변호인이 없이 유죄판결을 받은 자를 위하여 신청에 기하여 재심절차의 준비를 위한 변호인을 임명한다.

1. 절차의 재심청구 허용의 기초가 되는 사실 또는 증거방법에 대한 일정한 조사를 수행해야 할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존재하는 경우
2. 사실문제 또는 법률문제의 난해함을 이유로 변호인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을 위해 필요한 생계를 상당부분 포기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비용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게 변호인이 임명되면 법원은 신청에 따라 1호 내지 3호의 요건이 존재한다는 점을 결정으로 확인한다.

②제1항 제1문 3호의 요건을 확인하는 절차에 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 내지 제4항과 제118조 제2항 제1문, 제2문, 제4문을 준용한다.

제365조(신청에 대한 일반규정) 절차의 재심신청에 관해서도 상소에 관한 총칙규정을 적용한다.

제366조(신청의 내용과 형식) ①재심신청에는 절차의 재심에 관한 법률적 근거 및 증거방법을 밝혀야 한다.

②피고인 및 제361조 제2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호인이나 변호사가 서명한 문서 또는 법원사무국의 조서에 기재하는 방법에 의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제367조(제364조a와 제364조b에 따른 재심의 허용과 신청에 대한 재판) ①재심절차 재판 및 재심절차 준비를 위한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법원의 관할은 법원조직법의 특별규정에 따른다.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제364조a와 제364조b에 따른 신청 또는 절차의 재심 허용에 대한 신청을 불복된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도 제출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법원은 그 신청을 관할법원에 송부한다.

②제364조a와 제364조b에 따른 신청 및 절차의 재심 허용에 관한 신청에 대해서는 구두변론 없이 재판한다.

제368조(재심불허에 따른 기각) ①규정된 형식을 갖추지 않고 신청하는 경우 또는 신청에서 재심의 법적 근거를 주장하고 있지 않거나 적절한 증거방법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을 기각한다.

②그 밖의 경우 의견진술을 위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의 상대방에게 이를 송달하여야 한다.

제369조(재심의 근거에 대한 증거조사) ①신청을 허용하는 경우 법원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판사 1인에게 제출된 증거의 조사를 위임한다.

②증인과 감정인에 대한 신문을 선서 하에 행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사항이다.

③증인과 감정인에 대한 신문 및 판사의 검증에는 검사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참석을 허용하여야 한다. 제168조c 제3항, 제224조 제1항 및 제225조를 준용한다. 피고인이 인신구속 중인 경우, 그가 구금되어 있는 지역의 법원에서 공판이 진행되지 않고, 증거조사를 통해 의도하는 해명을 위하여 피고인의 참여가 필요하지 않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참석에 대한 청구권이 없다.

④증거조사의 종료 후 검사와 피고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기타의 진술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370조(재심의 근거에 대한 재판) ①절차의 재심에 대한 청구에서 제시된 주장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고, 제359조 1호와 2호 또는 제362조 1호와 2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건의 상황에 비추어 이들 규정에서 지적한

행위가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는 때에는 재심신청은 구두변론 없이 이유 없는 것으로서 기각한다.

②그 밖의 경우 법원은 절차의 재심 및 공판의 갱신을 명한다.

제371조(공판을 거치지 않은 무죄판결) ①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 법원은 그때까지 필요한 증거조사 이후 공판의 갱신 없이 무죄를 선고하거나 재심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②다른 경우에도 법원은 검사만이 동의한 공소제기와 관련하여 이미 무죄판결을 위한 충분한 증거가 존재하는 때에는 법원은 즉시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③무죄판결과 함께 원판결의 파기를 선고하여야 한다. 보안처분만이 선고된 경우에는 무죄판결 대신 원판결을 파기한다.

④신청인의 요구에 기하여 판결의 파기를 연방전자관보에 공고해야 하며, 법원의 재량에 따라 다른 적합한 방식으로 공고를 할 수도 있다.

제372조(즉시항고) 절차의 재심 신청을 계기로 제1심 법원에서 선고된 모든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 검사는 절차의 재심과 공판의 갱신을 명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없다.

제373조(공판갱신에 따른 판결; 불이익변경금지) ①갱신된 공판에서는 원판결을 유지하거나, 또는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에 관하여 별도로 판결하여야 한다.

②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단독으로 또는 그를 위하여 검사나 그의 법정대리인이 재심을 신청한 때에는 행위의 법률효과의 종류와 정도에 비추어 원판결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안 된다. 정신병원이나 금단치료소 수용명령에 대해서는 제1문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373조a(약식명령과 관련된 철차) ①확정력 있는 약식명령에 의해 종결된 절차의 재심이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게 불리한 경우, 그 자체만으로 또는 과거의 증거와 결합하여 범죄행위로 인한 유죄판결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새로운 사실 또는 새로운 증거방법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이를 허용한다.

②그 밖의 경우 확정력 있는 약식명령에 의해 종결된 절차의 재심과 관련해서는 제359조 내지 제373조를 준용한다.

제 5 편 피해자의 소송참가

제 1 장 사인기소

제374조(사인기소의 허용; 사인기소권자)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자는 사전에 검사에게 고소할 필요가 없이 사인기소를 통해 소추할 수 있다.

1. 주거침입죄(형법 제123조)
2. 모욕죄(형법 제185조 내지 제189조) 가운데 형법 제194조 제4항에 규정된 정치단체에 대한 것이 아닌 경우
3. 서신비밀침해죄(형법 제202조)
4. 상해죄(형법 제223조 및 제229조)
5. 스토킹죄(형법 제238조 제1항) 또는 협박죄(형법 제241조)

5a. 업무상 수뢰 또는 증뢰죄(형법 제299조)

6. 재물손괴죄(형법 제303조)

6a. 형법 제323조a에 따른 행위로서, 그 행위가 명정상태에서 저질러진 1호 내지 6호에 해당하는 경우

7. 부정경쟁방지법 제16조 내지 제19조에 따른 범죄행위
8. 특허법 제142조 제1항, 실용신안법 제25조 제1항, 반도체보호법 제10조 제1항, 종자보호법 제39조 제1항, 상표법 제143조 제1항과 제143조a 제1항과 제144조 제1항과 제2항, 의장법 제51조 제1항, 제65조 제1항, 저작권법 제106조 내지 제108조b 제1, 2항 및 조형미술과 사진작품 저작권관련법 제33조에 따른 범죄행위

②피해자와 함께 또는 피해자를 대신하여 고소할 권리가 있는 자도 사인기소를 제기할 수 있다. 형법 제77조 제2항에 열거된 자들은 그들보다 우선권 있는 자가 고소하였더라도 사인기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피해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사인기소권한을 대리하여 행사하며, 단체, 회사, 기타 민사상 권리분쟁에 관한 소추가 가능한 사단이 피해자인 경우 민사상 권리분쟁에서 이들을 대리하는 자가 사인기소 권한을 대리하여 행사한다.

제375조(수인의 기소권자) ①동일한 범죄행위를 이유로 수인에게 사인기소권이 있는 경우 이들 각자는 독립적으로 당해 권리를 행사한다.

②그러나 기소권자 가운데 1인이 사인기소를 제기한 경우 나머지 기소권자는 개시된 절차에 참가할 권리를 가질 뿐이며, 참가 의사를 표시한 시점에서 진행 중인 절차상의 단계에 참가할 수 있을 뿐이다.

③본안 자체에 대해 내려진 모든 재판은 피고인을 위하여 사인기소를 제기하지 않은 기소권자에게도 효력을 미친다.

제376조(공소의 제기) 검사는 공소제기가 공익에 부합할 때에만 제374조에 열거한 범죄행위를 이유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377조(검사의 참여; 절차인수) ①사인기소절차에 검사가 참여할 의무는 없다. 검사가 기소를 인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검사에게 기록을 제출한다.

②검사는 판결의 확정력이 발생할 때까지 사안의 어느 단계에서나

명시적 의사표시를 통해 기소를 인수할 수 있다. 검사가 상소를 제기한 경우 이는 기소의 인수를 의미한다.

제378조(사인기소인의 변호인) 사인기소인은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거나 위임장을 가진 변호인으로 하여금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 변호인에 대한 송달은 곧 사인기소인에 대한 송달로서 법적 효력을 갖는다.

제379조(담보제공; 소송비용보조) ①민사상의 권리분쟁에서 원고가 피고의 요청에 따라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와 동일한 요건 하에 사인기소인은 피고인에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담보제공은 현금이나 유가증권의 공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③담보의 한도와 그 제공기간 및 소송비용보조에 관해서는 민사상의 권리분쟁에서와 동일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379조a(수수료선불) ①사인기소인에게는 소송비용보조 또는 비용면제가 인정되지 않는 한, 법원은 법원비용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선불을 위한 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발생하는 효과를 지적하여야 한다.

②지체로 인하여 보정될 수 없거나 보정이 어려운 불이익이 사인기소인에게 초래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 소명되지 않은 경우, 수수료의 선불 이전에는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없다.

③제1항에 의해 정해진 기간 내에 수수료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인소추는 기각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 법정기간 이내에 수수료를 납부하였음이 밝혀진 경우, 결정을 내린 법원은 직권으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380조(화해의 시도) ①주거침입죄, 모욕죄, 서신비밀침해죄, 상해죄(형법 제223조와 제229조), 협박죄 및 재물손괴죄를 이유로 한 사인기소는 주 사법행정부가 지정한 화해담당관청이 화해를 시도하였으나 성과가 없게 된 이후에 비로소 허용된다. 형법 제323조a에 따라 명정상태에서 이루어진 행위가 제1항에 나열된 범죄에 해당하는 때에도 이와 같다. 사인기소인은 이에 관한 증서를 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주 사법행정은 적절한 액수의 비용의 선불이 있을 때에만 화해담당관청이 활동을 하도록 규정할 수 있다.

③형법 제194조 제3항 또는 제230조 제2항에 의해 직무상 상관에게 고소권이 있는 경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④당사자들이 같은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주 사법행정부의 상세한 명령에 따라 화해시도를 생략할 수 있다.

제381조(사인기소의 제기) 사인기소는 법원사무국의 조서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또는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제기된다. 소는 제200조 제1항에 기재된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소장은 등본 2통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82조(사인기소의 통지) 사인기소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다면 법원은 의견진술을 위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피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83조(공판개시결정; 기각; 중지) ①피의자의 의견진술이 접수된 이후 또는 그 기간이 경과한 이후 법원은 공판절차를 개시할 것인지 또는 소를 기각할 것인지를, 검사가 직접 기소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을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공판개시의 결정에서 법원은 제200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과 그 행위를 적시한다.

②범죄행위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 법원은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이러한 중지는 공판 중에도 허용된다. 그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

제384조(여타의 절차) ①여타의 절차는 공소제기절차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그러나 보안처분은 명령할 수 없다.

②재판장이 공판절차 개시에 관한 결정을 낭독함에 따라 제243조를 적용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제244조 제2항과는 관계없이 증거조사의 범위를 결정한다.

④공판의 연기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제265조 제3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⑤배심법원에서는 사인기소 사건을 공소에 의해 계속 중인 사건과 동시에 처리할 수 없다.

제385조(사인기소인의 지위; 소환; 기록열람) ①공소제기에 의한 절차에서 검사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사인소추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사인소추인을 절차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검사에게 고지되는 모든 결정은 사인소추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사인소추인의 공판소환장 송달과 공판일 사이에는 최소 1주일의 기간을 두어야 한다.

③사인소추인은 기록열람에 대한 권리를 변호인을 통해서만 행사할 수 있다. 제147조 제4항과 제7항 그리고 제477조 제5항을 준용한다.

④제154조a와 제430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문들의 제3항 제2문을 적용하지 않는다.

⑤상고절차에서는 제349조 제2항에 따른 사인소추인의 신청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제349조 제3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제386조(증인과 감정인의 소환) ①누구를 공판에 증인 또는 감정인으로 소환할 것인지는 법원의 재판장이 정한다.

②사인기소인에게도 피고인과 동일한 직접 소환권이 있다.

제387조(공판에서의 대리) ①피고인도 변호인과 함께 공판에 출석하거나 위임장을 통하여 변호인으로 하여금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②제139조의 규정은 사인기소인의 변호인과 피고인의 변호인에게도 적용된다.

③법원은 사인기소인 및 피고인이 직접 출석하도록 명하거나 피고인을 구인할 권한이 있다.

제388조(반소) ①피해자가 사인기소를 제기한 경우, 피고인도 피해자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고 피고인에게 피해를 입힌 범죄행위를 사인기소의 방법으로 소추할 수 있으며 이미 제기된 사인기소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와 피고인에게 피해를 입힌 범죄행위가 서로 관련이 있는 경우라면, 피고인은 제1심에서의 최후진술(제258조 제2항 후단)까지 반소로써 사인기소인에 대한 처벌을 신청할 수 있다.

②사인기소인이 피해자가 아닌 경우(제374조 제2항), 피고인은 그 피해자에 대하여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에 대한 반소의 송달을 요하며, 그 반소가 피해자가 출석한 공판에서 제기되지 않은 이상, 피해자에 대해 공판에의 소환장을 송달해야 한다.

③소와 반소에 대해서는 동시에 선고해야 한다.

④소의 취하는 반소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389조(중지판결) ①법원이 사안을 심리한 이후, 확인된 것으로 여겨지는 사실이 본 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용될 수 없는 범죄행위라는 점을 파악한 때에는 법원은 판결을 통해 절차의 중지를 선고해야 하며, 당해 판결에서는 문제의 사실을 명확히 지적하여야 한다.

②이 경우 심리의 내용을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90조(사인기소인의 상소) ①공소제기에 따른 절차에서 검사가 갖는 상소권은 사인기소인에게도 부여된다. 제362조의 재심청구에 관하여도 동일하다. 제301조의 규정은 사인기소인의 상소에 적용하여야 한다.

②사인기소인은 변호인이 서명한 문서에 의해서만 상고신청 및 확정판결에 의해 종결된 절차의 재심신청을 할 수 있다.

③제320조, 제321조 및 제347조에서 명하고 있는 기록의 제출과 송부는 공소제기에 따른 절차에서와 같이 검사에 대하여 그리고 검사에 의해

수행된다. 상소인의 상대방에 대한 항소장과 상고장의 송달은 법원 사무국이 행한다.

④수수료선불 및 납부지체의 효과에 관해서는 제379조a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경미한 책임에 따른 절차중지에 대한 제383조 제2항 제1문과 제2문의 규정은 항소절차에서도 적용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391조(소의 취하; 원상태 회복) ①사인기소는 절차의 어느 단계에서나 취하할 수 있다. 제1심 피고인에 대한 사실심리 이후에는 소의 취하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②제1심 절차 및 피고인의 항소제기에 의한 제2심 절차에서 사인기소인이 공판에 출석하지 않고 변호인으로 하여금 대리하도록 하지도 않은 경우, 법원이 사인기소인의 직접 출석을 명하였음에도 공판이나 다른 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또는 절차의 중지를 경고하였는데도 정하여진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③사인기소인이 항소를 제기한 이상, 전항에서 기술한 불이행의 경우 제301조와 관계없이 그 항소를 즉시 기각하여야 한다.

④사인기소인은 불이행 이후 1주일 이내에 제44조와 제45조에서 서술하고 있는 요건 하에서 원상태 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제392조(취하의 효과) 취하한 사인기소는 새로이 제기할 수 없다.

제393조(사인기소인의 사망) ①사인기소인이 사망하면 절차가 중지된다.

②그러나 사인기소는 기소인의 사망한 이후에도 제374조에 따라 사인기소를 제기할 권한이 있는 자에 의해 계속될 수 있다.

③상기의 권한 있는 자는 사인기소인의 사망에 의한 권리의 상실을 기점으로 2개월 이내에 사인기소를 계속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법원에 밝혀야 한다.

제394조(피고인에 대한 통지) 사인기소의 취하와 사인기소인의 사망 및 사인기소의 계속에 관하여는 피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2 장 보조기소

제395조(보조기소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로 인한 피해자는 제기된 공소 또는 보안처분의 신청에 대한 보조기소자로서 참여할 수 있다.

1. 형법 제174조 내지 제182조의 행위
2. 형법 제211조와 제212조의 행위 및 그 미수
3. 형법 제221조, 223조 내지 226조와 340조의 행위
4. 형법 제232조 내지 238조, 제239조 제3항, 제239조a, 제239조a와 제240조 제4항의 행위
5. 폭력방지법 제4조의 행위
6. 특허법 제142조, 실용신안법 제25조, 반도체보호법 제10조, 종자보호법 제39조, 상표법 제143조 내지 제144조, 의장법 제51조와 제65조, 저작권법 제106조 내지 제108조b, 조형미술과 사진작품 저작권관련법 제33조, 불공정경쟁방지법 제16조 내지 제19조의 행위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도 동일한 권한이 주어진다.

1. 위법행위에 의해 사망한 자의 자녀, 부모, 형제자매 및 배우자
2. 재정신청(제172조)을 통하여 공소가 제기되도록 한 자

③다른 위법한 행위, 특히 형법 제185조 내지 189조, 제229조, 제244조 제1항 3호, 제249조 내지 제255조와 제316조a의 행위로 인한 피해자는, 행위의 중한 결과에 비추어 피해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기된 공소에 보조기소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④이러한 참여는 절차상 모든 단계에서 허용된다. 이는 또한 판결선고 후 상소를 제기할 때에도 가능하다.

⑤제154조a에 따라 소추가 제한되는 경우일지라도 공소제기에 보조기소인으로서 참여하는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보조기소인이 절차에 참여하는 것이 허용되는 한, 보조기소에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154조a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396조(참여의 의사표시) ①참여의 의사표시는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공소제기 이전에 검사나 법원에 도달한 참여의 의사표시는 공소제기와 함께 효력이 발생한다. 약식명령절차에서는, 공판기일이 정해지거나(제408조 제3항 제2문, 제411조 제1항) 약식명령에 대한 신청이 기각된 경우 참여의 의사표시가 효력을 갖는다.

②법원은 검사의 의견을 청취한 후 보조기소인의 참여권에 대하여 재판한다. 제395조 제3항의 경우 당해 조문에서 언급하고 사유로 인하여 참여가 필요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의견도 청취한 이후 법원이 재판하며, 이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③제153조 제2항, 제153조a 제2항, 제153조b 제2항 또는 제154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이 절차의 중지를 고려하는 경우, 참여권의 부여에 대하여 먼저 재판하여야 한다.

제397조(보조기소인의 권리) ①보조기소인은 그가 증인으로서 신문을 받아야 한다고 할지라도 공판에 참석할 권리가 있다. 그는 공판절차에 소환되며, 제145조a 제2항 제1문 및 제217조 제1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보조기소인에게는 법관(제24조, 제31조) 또는 감정인(제74조)에 대한 기피권, 질문권(제240조 제2항), 재판장의 명령에 대한 불복권(제238조 2항), 재판장의 질문에 대한 이의제기권(제242조), 증거신청권(제244조 제3항 내지 제6항)및 의견진술권(제257조, 제258조)이 부여된다. 별도의 법률규정이 없는 한, 보조기소인은 검사와 동일한 참여권 및 청취권을 갖는다. 검사에게 알려야 하는 결정사항은 보조기소인에게도 알려야 하며, 이와 관련해서는 제145조a 제1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②보조기소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변호인에 의해 대리될 수 있다. 변호인도 공판절차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변호인의 선임이 법원에 통지되었거나 변호인이 소송보조인으로 임명된 경우, 변호인에게도 공판절차의 기일을 알려야 한다.

제397조a(보조기소인의 신청에 따른 변호인 선정; 소송비용보조)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에 기하여 변호인을 임명해 주어야 한다.

1. 형법 제176조a, 제177조, 제179조, 제232조 및 제233조에 해당하는 범죄에 의한 피해자인 경우

2. 형법 제211조와 제212조의 위법한 미수행위의 피해자이거나 제395조 제2항 제1문이 의미하는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자의 친족인 경우
3. 형법 제226조, 제234조 내지 제235조, 제238조 내지 제239조a, 제249조, 제250조, 제252조, 제255조 및 제316조a의 행위로 인한 피해자로서, 신체적 정신적 상해를 입었거나, 그와 같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4. 형법 제174조 내지 제182조, 제221조, 제225조, 제226조, 제232조 내지 제235조, 제237조, 제238조 제2항, 제3항, 제239조a, 제239조b, 제240조 제4항, 제249조, 제250조, 제252조, 제255조 및 제316조a의 위법한 행위로 인한 피해자로서 변호인 신청 시점에 만18세에 이르지 아니하였거나, 자신의 이익을 스스로 충분히 보호할 수 없을 우려가 있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보조기소인이 자신의 이익을 충분히 보호할 능력이 없거나 이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에 기하여 민사상의 권리분쟁에서와 동일한 규정에 따라 보조기소인이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한 소송비용부조를 승인한다. 민사소송법 제114조 후단과 제121조 제1항 내지 제3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은 보조기소인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의사표시가 이루어지기 전에 제기되어야 한다. 사건을 다루는 법원이 소송비용부조의 승인에 관하여 재판한다. 제142조 제1항이 준용되는 변호사의 임명 그리고 소송비용의 승인에 대해서는 본안을 심리하는 법원의 재판장이 결정한다.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결정에 불복할 수 없다.

제398조(절차의 진행) ①절차의 진행은 보조기소인의 참여로 인하여 중지되지 않는다.

②시간 부족으로 인하여 보조기소인을 소환할 수 없었거나 이를 통지할 수 없었던 경우일지라도 이미 기일이 지정된 공판 및 여타 기일은 정해진 날에 진행된다.

제399조(이전의 결정에 대한 고지) ①보조기소인의 참여 이전에 재판이 이미 이루어졌고 이를 검사에게 고지하였다면 제401조 제1항 제2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보조기소인에게 고지할 필요가 없다.

②검사가 불복할 수 있는 기간이 종료된 재판에 대해서는 보조기소인도 더 이상 불복할 수 없다.

제400조(보조기소인의 상소권한) ①보조기소인은 범죄행위에 대해 다른 법률효과를 이끌어 내기 위한 목적으로 또는 보조기소인의 참여권이 없는 법률위반을 이유로 피고인이 유죄판결을 받게 할 목적으로 판결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다.

②공판의 개시를 기각하거나 제206조a와 제206조b에 따라 절차를 중지하는 결정이 보조기소인의 참여권의 근거가 되는 사실에 관련된 것인 한, 보조기소인은 이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여타의 경우에는 절차를 중지하는 결정에 대해 보조기소인은 불복할 수 없다.

제401조(보조기소인의 상소) ①보조기소인은 검사와는 독립적으로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 판결 선고 후에 상소제기를 위하여 공소에 참여한

경우 보조기소인에게는 불복된 판결을 즉시 송달하여야 한다. 상소의 이유제시를 위한 기간은, 검사의 상소제기를 위한 기간의 종료와 함께 개시되거나 또는 판결이 보조기소인에게 아직 송달되지 않은 때에는 판결의 송달과 함께 개시하며, 후자의 경우 보조기소인의 참여권한에 대한 재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때에도 동일하다.

②보조기소인이 공판에 참석하였거나 변호인이 대리하도록 하였다면, 판결 선고 시에는 참석하지 않았거나 변호인이 대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소제기의 기간은 판결의 선고와 함께 개시되며, 상소권에 관한 고지의 흠결을 이유로 하여서는 기간의 해태에 대항하여 그 이전 상태의 회복을 청구할 수 없다. 보조기소인이 공판에 전혀 참석하지 않거나 변호인으로 하여금 대리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의 기간은 보조기소인에 대한 판결주문의 송달과 함께 시작한다.

③보조기소인이 단독으로 항소를 제기한 경우, 공판이 시작할 때 보조기소인 자신이나 그를 대리하는 변호인이 모두 참석하지 않았다면, 제301조의 규정과 관계없이 그 항소를 즉시 기각하여야 한다. 보조기소인은 불출석 이후 1주일 이내에 제44조와 제45조의 요건 하에 원상태의 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④보조기소인이 단독으로 제기한 상소를 통해 불복한 재판을 파기한 경우 사건의 처리는 다시 검사가 담당한다.

제402조(철회; 보조기소인의 사망) 공소참여의 의사표시는 이를 철회하거나 보조기소인이 사망한 때에는 효력을 상실한다.

제 3 장 피해자에 대한 배상

제403조(요건)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청구권이 정규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아직 다른 법원에서 계속 중이지 않은 경우,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은 피고인에 대한 청구권을 형사절차에서 주장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에서의 절차에서는 소송대상의 가액에 관계없이 당해 청구권의 주장이 가능하다.

제404조(피해자의 신청) ①청구권을 주장하는 신청은 서면 또는 구두로 법원서기가 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여 제기하거나, 공판에서는 최종변론이 시작하기 전까지 구두로 제기할 수 있다. 신청은 청구권의 대상과 근거를 분명히 밝혀야 하고, 증거방법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신청이 공판 외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신청을 피고인에게 송달한다.

②신청의 제기는 민사소송에서의 소제기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법원에 신청이 접수됨과 동시에 신청이 제기된 것으로 본다.

③공판이 개시되기 전에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공판 장소와 기일을 고지한다. 신청인과 그 대리인 및 신청할 권한이 있는 자의 법률상 배우자 및 사실상 배우자는 공판에 참여할 수 있다.

④판결의 선고 시까지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⑤소가 제기된 즉시 신청인과 피고인에게는 민사소송에서와 동일한 규정에 따라 신청에 따른 소송비용부조를 승인하여야 한다. 공판에서 변호인이 있는 피고인에게는 그 변호인의 조력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전제 하에 민사소송법 제121조 제2항 제1문을 적용하며, 공판절차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신청인에게는 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임명한다. 재판의 관할은 사건을 다루는 법원에 있으며, 그 재판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제405조(조정) ①피해자 또는 그의 상속인 및 피고소인의 신청에 따라 법원은 범죄행위로 야기된 청구권에 대한 조정을 조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법원은 제1문에 기재된 자들 모두가 조정을 신청한 때에는 조정을 제안하여야 한다.

②조정의 법적 효력을 거부하는 이의제기에 대한 결정은 제1심 형사법원이 소재하고 있는 민사법원의 관할에 속한다.

제406조(재판) ①피고인이 범죄행위에 대하여 유책하다는 판결 또는 그에게 보안처분을 명한다는 판결이 내려진 경우, 이 범죄행위를 이유로 제기된 신청이 근거 있는 것인 한, 법원은 그 신청에 대해서 재판을 하여야 한다. 결정은 주장된 청구권의 근거 또는 그 일부에 제한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318조를 준용한다. 법원은 그 신청이 허용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여겨지는 때에는 재판을 배제한다. 이 밖에 법원은 신청인의 이해관계의 정당성을 고려할 때에 형사절차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여기지 않는 경우에만 재판을 배제할 수 있다. 결정이 청구권의 근거 또는 그 일부에만 제한될지라도 특히 신청에 대한 심사가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도록 만들고자 하는 의도에서 제기된 경우라면, 그러한 신청은 형사절차에서 처리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신청인이 민법상 위자료(민법

제253조 제2항)의 인정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제3문에 따르는 경우에만 재판의 배제가 허용된다.

②신청인이 피고인에 대해 주장하는 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고인이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이 인정한 내용에 따라 유죄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③청구에 대한 재판은 민사소송에서의 판결선고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법원은 그 재판결과를 잠정적으로 집행 가능한 것으로 판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708조 내지 제712조, 제714조 및 제716조를 준용한다. 청구권이 인정될 수 없는 경우, 이를 다른 방식으로 주장할 수 있다. 청구권의 근거에 대한 재판이 확정력을 갖게 되면, 민사소송법 제304조 제2항에 따라 관할법원에서 배상액 산정에 대한 심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④신청인은 판결과 그 이유의 사본 또는 초록을 수령한다.

⑤법원이 신청에 대한 재판을 배제하고자 할 때에는 이 사실을 절차의 당사자들에게 최대한 신속하게 알려야 한다. 법원이 신청인의 의견을 청취한 이후 신청에 대한 재판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는 즉시 결정으로 신청에 대한 재판을 배제하여야 한다.

제406조a(상소) ①제406조 제5항 제2문에 따라 신청에 대한 재판을 배제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당해 신청이 공판절차의 개시 이전에 제기되었고 심급을 종결시키는 판결이 선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항고가 허용된다. 그 이외의 경우에는 신청인의 상소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②법원이 신청을 인용하는 한, 피고인은 판결에 형법적 부분이 없더라도 통상의 상소를 통해 재판에 불복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소에 관하여는 비공개법정에서 결정으로 재판할 수 있다. 허용되는 상소가 항소인 경우에, 피고인 또는 신청인의 신청에 기하여 관계인에 대한 구두청문을 진행한다.

③신청에 대한 재판이 근거로 삼은 범죄행위를 이유로 한 유죄판결이 파기되어 피고인에게 유죄가 선고되지 않았거나 보안처분을 명령하지 않은 때에는 신청을 인용한 재판을 파기하여야 한다. 당해 파기판결이 불복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와 동일하다.

제406조b(집행) 민사소송에서 판결집행에 적용되는 규정을 기준으로 하여 집행이 이루어진다. 민사소송법 제323조, 제731조, 제767조, 제768조, 제887조 내지 제890조에 따른 절차에 대해서는 제1심 형사법원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민사법원에 관할권이 있다. 판결에서 확인된 청구권 자체에 대한 이의제기는 이의제기가 기초로 삼는 근거가 제1심 공판의 종료 이후, 항소법원이 재판한 경우에는 항소심 공판종료 이후 성립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제406조c(절차에 대한 재심) ①피고인은 청구권에 관하여 본질적으로 다른 재판을 이끌어내기 위한 경우에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공판을 갱신하지 않고 결정으로 재판한다.

②절차의 재심청구가 오로지 판결의 형법적 부분에만 관련된 경우에는 제406조a 제3항을 준용한다.

제4장 피해자의 여타의 권한

제406조d(피해자에 대한 통지) ①피해자에게는 그와 관련이 있는 한, 신청에 기하여 절차의 중지와 법원절차의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②피해자에게는 신청에 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1.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게 피해자와 접촉하거나 교류해서는 안 된다는 지시사항을 통보했는지 여부
2. 피해자가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설명하고 또한 피해자에 대한 통지를 배제하는 것이 당사자의 보호할 만한 중대한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 한, 피고인 또는 유죄판결 받은 자에 대해 자유박탈적처분이 명령되었는지 또는 그 처분이 종결되었는지 여부 또는 처음으로 집행을 완화하는 처분 내지 귀휴가 허용되었는지 여부를 피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395조 제1항 1호 내지 5호의 사안 또는 제395조 제3항에서 피해자에게 보조기소가 허용되는 때에는 정당한 이익에 대한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③피해자가 제시한 주소로 통지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피해자가 변호사를 조력자로 선임하였거나 피해자를 위해 변호인을 임명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변호사에 의해 대리되는 경우에는 제145조a 제3항을 준용한다.

제406조e(기록열람) ①변호사는 법원에 제출되어 있거나 공소를 제기할 때 제출되어야 하는 기록을 피해자를 위하여 열람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익이 있음을 변호인이 입증하는 경우에는 관청이 보관하고 있는

증거물을 열람할 수 있다. 제395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익에 대한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②피의자 또는 기타 제3자의 중요한 보호이익에 반하는 경우 기록열람을 허용하지 않는다. 해당절차 내지 다른 절차의 조사목적을 해할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에도 기록열람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제395조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례에서 검사가 수사의 종결을 기록에 기입한 경우가 아닌 한, 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기록열람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③기록열람에 반하는 중대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에 기하여 변호인에게 증거물을 제외한 기록을 자신의 사무실이나 주거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교부할 수 있다. 이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④소송준비절차 도중 또는 확정력 있는 절차의 종결 이후에는 기록열람의 허용에 관하여 검사가 판단하며, 그 밖의 경우에는 사건을 맡은 법원의 재판장이 판단한다. 검사가 기록열람을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 제162조에 따른 관할의 법원에 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 제297조 내지 제300조, 제302조, 제306조 내지 제309조, 제311조a 및 제473조a를 준용한다. 수사가 아직 종결되지 않은 한,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근거를 밝히는 것이 조사의 목적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이러한 결정은 근거제시 없이 행해진다.

⑤제1항의 요건 하에 기록으로부터 얻은 정보와 사본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수 있으며, 제2항과 제4항 및 제478조 제1항 제3문, 제4문을 준용한다.

⑥제477조 제5항을 준용한다.

제406조f(피해자에 대한 조력과 대리인) ①피해자는 형사절차에 있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거나 변호사로 하여금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피해자의 신문을 위한 변호사 조력인에게는 신문 참석이 허용된다.

②피해자 신문 시에는 조사의 목적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피해자가 신뢰하는 자가 신청에 기하여 신문절차에 참석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결정은 신문을 진행하는 주체가 행하며, 이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이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406조g(보조기소 권한 있는 자에 대한 조력) ①제395조에 의하여 보조기소인의 자격으로 공소에 참여할 권한이 있는 자는 비록 참여의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소제기 이전에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거나 변호인으로 하여금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보조기소인은 공판절차에 참석할 수 있으며 이는 그가 증인으로서 신문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한 사람이 보조기소의 권한이 있는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와 검사의 의견을 청취한 이후 법원이 참석의 권리에 관하여 결정하며, 이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보조기소의 권한이 있는 자가 신청을 하는 경우 공판절차의 기일에 대해 통지해야 한다.

②보조기소의 권한 있는 자의 변호사는 공판절차에 참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제1항 제3문을 준용한다. 변호사의 선임에 대하여 법원에 통지하였거나 법원이 조력자로서 변호사를 임명한 경우에는 변호사에게 공판절차의 기일을 알려야 한다. 변호사의 참석 및 그에 대한 통지가

조사의 목적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 법원의 신문과 법원에 의한 검증의 과정에도 제1문과 제2문을 적용한다.

③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제397조a를 준용한다.

1. 변호사의 임명
2. 변호사의 조력에 따른 소송비용부조의 승인

소송준비절차에서는 제162조에 따른 관할의 법원이 재판한다.

④제397조a 제2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기소인으로서 참여할 권리 있는 자의 신청에 기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임시로 변호사를 조력자로 임명할 수 있다.

1. 변호사의 임명이 특별한 사유에 비추어 필요한 경우
2. 조력자의 관여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3. 소송비용부조의 승인이 가능하다고 여겨짐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시기적절한 판단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변호사 임명에 관하여는 제142조 제1항과 제162조를 준용한다. 법원에 일정 기간내에 소송비용부조 승인에 대한 신청이 제기되지 않았거나 소송비용부조 승인이 기각된 경우 변호사 임명이 종료한다.

제406조h(권한에 대한 지적) 피해자에게는 최대한 신속하게 서면으로 그리고 가능한 한 피해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406조d 내지 제406조g에 따른 권한 및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적해 주어야 한다.

1. 본 법 제395조와 제396조 또는 소년법원법 제80조 제3항의 요건에 따라 피해자가 이미 제기된 공소에 보조기소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점과 제397조a에 따라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거나 그에 따른 소송비용의 부조를 받을 수 있다는 점

2. 본 법 제403조 내지 제406조c와 소년법원법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재산법적 청구권을 형사절차에서 주장할 수 있다는 점
3. 피해자보상법을 기준으로 생활보조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점
4. 폭력방지법에 따라 피고인에게 일시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
5. 상담 또는 심리사회학적 소송보조 등과 같은 형태로 피해자부조 시설에 의한 지원과 부조를 받을 수 있다는 점

개별 사안에 비추어 특정한 권한의 요건이 명백히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러한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송달가능한 주소를 기재하지 않은 피고인에게는 지적의무가 없다. 제1문과 제3문은 피해자에 상응하는 권한을 갖는 친족과 상속인에게도 적용된다.

제 6 편 특별절차

제 1 장 약식명령절차

제407조(허용) ①형사단독판사 또는 배심법원 관할의 경죄에 관한 절차에서는 검사의 신청에 기하여 공판 없이 서면심리에 따른 약식명령으로 범죄행위의 법률효과를 확정할 수 있다. 검사가 수사 결과에 따라 공판이 필요하다고 보지 않는 경우 이를 신청한다. 이 신청은 특정한 법률효과를 명시하여야 한다. 신청을 통해 공소가 제기된다.

②약식명령은 다음의 법률효과만을 단독 또는 병과로 확정할 수 있다.

1. 벌금형, 선고유예, 운전금지, 추징, 몰수, 파기, 폐기, 법인이나 인적 단체에 대한 유죄판결의 고지 및 과태료 부과
2.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운전면허취소
3. 형의 면제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다면, 1년 이하의 집행유예형도 부과할 수 있다.

③약식명령절차에서는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사전에 의견을 청취(제33조 제3항)할 필요가 없다.

제408조(신청에 대한 재판) ①배심법원의 재판장이 형사단독판사의 관할권을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재판장은 검사를 경유하여 해당 형사단독판사에게 사건을 송부하고, 형사단독판사는 이 결정에 구속되며, 검사에게는 즉시항고권이 있다. 형사단독판사가 배심법원의 관할권을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형사단독판사는 검사를 경유하여 소송기록을 배심법원 재판장의 재판을 위해 제출한다.

②판사가 피고인에게 충분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약식명령의 선고를 허용하지 않는다. 이 재판은 공판절차 개시의 기각결정(제204조, 제210조 제2항, 제211조)과 동등하다.

③약식명령의 선고 여부에 대하여 판사가 확신할 수 없는 경우 판사는 검사의 신청을 수용하여야 한다. 공판 없이 재판을 하는 것에 대하여 판사가 숙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판사가 약식명령신청에 따르는 법적 판단을 회피하거나 그 신청된 법률효과와 다른 법률효과를 정하고자 하고 검사는 자신의 신청을 계속 주장하는 경우 판사는 공판기일을 지정한다.

피고인에게는 소환장과 함께 신청된 법률효과를 제외한 약식명령신청서 등본을 전달하여야 한다.

제408조a(공판절차개시 이후의 신청) ①제407조 제1항 제1문과 제2문의 요건을 충족하고 피고인의 불출석이나 부재 또는 기타 중요한 사유로 인하여 공판의 진행에 장애가 있는 경우, 공판절차가 이미 개시되었다면 형사단독판사와 배심법원의 절차 중에 검사가 약식명령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공판절차 중에는 검사가 이를 구두로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중요한 내용은 공판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407조 제1항 제4문 및 제408조는 적용하지 않는다.

②제408조 제3항 제1문의 요건이 존재하는 경우 판사는 약식명령절차의 신청을 수용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판사는 불복할 수 없는 결정으로 신청을 기각하고 공판절차를 계속한다.

제408조b(변호인 임명) 제407조 제2항 제2문에 열거하고 있는 법률효과의 약식명령 선고를 위한 검사의 신청을 수용할 것을 판사가 고려하는 경우 판사는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에게 변호인을 임명한다. 제141조 제3항을 준용한다.

제409조(약식명령의 내용) ①약식명령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1. 피고인의 인적사항 및 보조관계인이 있는 경우 그 인적사항
2. 변호인의 성명
3. 피고인에게 책임을 묻는 행위의 명칭, 그 실행 시간과 장소 및 범죄행위의 법률적 표지
4. 법률의 명칭 및 조, 항, 호, 자모에 따른 그 적용규정
5. 증거방법
6. 법률효과의 확정
7. 불복가능성, 법률에 따른 불복기간과 형식 및 제410조에 따라 불복이 없는 경우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집행가능하게 된다는 사실

피고인에게 자유형을 부과하는 경우, 선고유예를 통한 경고가 이루어지는 경우, 운전금지를 명령하는 경우에는, 이와 함께 피고인에 대하여 제268조a 제3항 또는 제268조c 제1문에 의한 고지가 이루어져야 한다. 제111조i 제2항 내지 제267조 제6항 제2문을 준용한다.

②피고인의 법정대리인에게도 약식명령을 통지한다.

제410조(이의제기 기간; 확정력) ①피고인은 약식명령에 관하여 그 송달 후 2주일 이내에 명령을 발한 법원에 대하여 서면으로 또는 법원사무국의

조서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297조 내지 제300조와 제302조 제1항 제1문, 제2항을 준용한다.

②이의제기는 특정한 불복사항에 국한시킬 수 있다.

③약식명령에 대한 이의제기가 기한 내에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약식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411조(이의제기가 허용되지 않음으로 인한 기각; 공판기일) ①이의제기가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되거나 이의제기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그 이의제기에 대해서는 공판 없이 결정으로 기각하며, 이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가 허용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 공판기일을 지정한다. 피고인의 이의제기가 오로지 자유형 또는 벌금형의 정도에만 국한되었다면, 법원은 피고인, 변호인 및 검사의 동의를 거쳐 공판 없이 결정으로 재판할 수 있으며, 이 재판을 통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약식명령이 변경되어서는 안 되고, 이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가 허용된다.

②피고인은 위임장을 가진 변호인으로 하여금 공판에서 자신을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제420조를 적용한다.

③제1심 판결의 선고 시까지는 소와 이의제기를 취하할 수 있다. 제303조를 준용한다. 제408조a에 따라 절차 중에 약식명령이 선고된 경우에는 소를 취하할 수 없다.

④법원의 판결선고는 이의제기에 따른 절차에서 약식명령에 포함되어 있는 판단에 구속되지 아니한다.

제412조(피고인의 불출석) 공판을 시작할 때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고 변호인이 대리하지도 않으며 그 불출석에 대하여 충분한 해명이 없는 경우에는 제329조 제1항, 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법정대리인이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제330조도 적용한다.

제 2 장 보안처분절차

제413조(신청의 요건) 범죄행위자의 책임무능력이나 변론무능력을 이유로 검사가 형사절차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검사는 독립적으로 보안처분 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는 그 명령이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고 수사결과에 비추어 예상할 수 있을 만한 경우에 한한다(보안처분절차).

제414조(절차) ①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보안처분절차에는 형사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보안처분명령의 신청은 기소와 동등한 지위를 갖는다. 공소장을 필요로 하는 경우 이에 상응하는 신청서가 공소장을 대신한다. 신청서에는 검사가 명령을 신청하는 보안처분을 적시하여야 한다. 판결에서 보안처분을 명하지 않은 경우 신청의 기각을 선고하여야 한다.

③소송준비절차에서는 공판에서 허용되는 감정을 준비할 기회를 감정인에게 부여하여야 한다.

제415조(피의자 없는 공판) ①피고인이 그의 상태로 말미암아 출석이 불가능하거나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비추어 보안처분절차에 출석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법원은 피고인의 출석 없이도 공판을 진행할 수 있다.

②이 경우 공판에 앞서 수명법관이 감정인의 참여 하에 피고인을 신문한다. 신문기일에 관하여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 및 법정대리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신문 시 검사, 변호인 및 법정대리인의 참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③피고인의 상태를 고려할 필요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공판의 적법한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법원은 보안처분절차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거나 단지 일시적으로 출석한 경우에도 피고인에 대한 사실심리 이후에는 공판을 진행할 수 있다.

④공판이 피고인 없이 열린 이상 법관조서에 포함되어 있는, 피고인의 과거의 진술을 낭독할 수 있다. 제2항 제1문에 따른 사전신문에 관한 조서를 낭독하여야 한다.

⑤공판에서는 피고인의 상태에 대하여 감정인을 신문하여야 한다. 감정인이 피고인을 미리 진찰하지 않았다면 공판 전에 그러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416조(형사절차로의 이송) ①공판절차개시 이후의 보안처분절차에서 피고인이 책임능력이 있다고 밝혀지고 보안처분절차를 담당한 법원이 형사절차의 관할권을 가지지 않은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자신의 관할 없음을 선고하고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한다. 제270조 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②공판절차개시 이후의 보안처분절차에서 피고인이 책임능력이 있다고 밝혀지고 보안처분절차를 담당한 법원에 형사절차의 관할이 있는 경우, 피고인에게는 변화된 법률상황을 알려 주어야 하고 또 변호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변호를 위한 충분한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주장하는 경우 그의 신청에 기하여 공판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415조를 근거로 피고인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판을 진행하는 경우 피고인이 참석하지 않았던 공판의 부분을 반복하여야 한다.

③공판절차개시 이후의 보안처분절차에서 피고인이 변론능력이 있음이 밝혀지고 그 보안처분절차가 피고인의 책임무능력을 이유로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제 2 장a 신속절차

제417조(신청의 요건) 사안이 단순한 사실관계 또는 명백한 증거상황에 기초하고 있어서 즉각적인 심리에 적합한 경우 형사단독판사와 배심법원에 의한 절차에서 검사는 서면 또는 구두로 신속절차에 의한 재판을 신청한다.

제418조(공판의 진행; 소환; 공소장) ①검사의 신청이 있으면 공판절차 개시에 관한 재판 없이, 공판을 즉시 또는 단기간 내에 진행한다. 법원에 신청이 제기된 시점과 공판이 시작하는 시점 사이의 기간이 6주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②공판에 자발적으로 출두하지 않거나 법원에 구인되지 않은 피고인의 경우에만 피고인을 소환한다. 소환장과 함께 피고인의 책임을 묻는 범죄행위가 무엇인지를 피고인에게 통지한다. 총 소환기간은 24시간이다.

③공소장 제출은 필요하지 않다. 공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공판시작

당시 구두로 소를 제기하고 그 주요 내용을 공판조서에 기재한다. 제408조a를 준용한다.

④최소 6개월 이상의 자유형이 예상되는 경우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에게는 지방법원에서의 신속절차를 위한 변호인을 임명하여야 한다.

제419조(법원의 재판; 형량) ①사건이 신속절차에 의한 심리에 적합한 경우 형사단독판사 또는 배심법원은 신청을 수용하여야 한다. 신속절차에서는 1년 이상의 자유형이나 보안처분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운전면허의 취소는 가능하다.

②공판에서도 판결선고 시까지는 신속절차에 의한 재판을 기각할 수 있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③신속절차에 의한 재판을 기각한 경우 범죄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충분한 혐의가 있다고 여길 때에는 법원은 공판절차의 개시를 결정하며, 공판절차를 개시하지 않고 신속절차에 의한 재판을 기각한 경우 새로운 공소장 제출을 배제할 수 있다.

제420조(증거조사) ①과거의 신문조서 및 그 조서의 일부에 근거한 서면진술을 포함하는 문서를 낭독함으로써 증인, 감정인 또는 공동피고인에 대한 신문을 대체할 수 있다.

②제256조의 요건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직무상 인식, 조사, 판단에 관한 관청 및 기타 기관 및 그 소속원의 설명을 낭독할 수 있다.

③피고인, 변호인 및 검사가 공판에 참석하는 한,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절차는 이들의 동의를 요한다.

④형사단독판사에 의한 절차에서 판사는 제244조 제2항과 관계없이 증거조사의 범위를 정한다.

제421조 내지 **제429조(삭제)**

제 3 장 몰수 및 재산압수절차

제430조(몰수의 배제) ①예상되는 형벌이나 보안처분에 병과되는 몰수가 중대하지 않은 경우 또는 몰수와 관련된 절차가 부적절할 정도로 과도한 비용을 필요로 하거나 범죄행위에 대한 다른 법률효과에 대한 결정의 도출을 부적절할 정도로 어렵게 만드는 경우 법원은 검사의 동의하에 절차의 어느 단계에서나 행위에 대한 소추를 몰수 이외의 다른 법률효과에 제한시킬 수 있다.

②소송준비절차에서는 검사가 제1항의 제한을 행할 수 있다. 이 제한은 기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절차의 어느 단계에서나 상기의 제한을 다시 취소할 수 있다. 제한의 취소를 위한 검사의 신청을 수용하여야 한다. 제한을 다시 취소할 때에는 제265조를 준용한다.

제431조(몰수참여의 명령) ①형사절차에서 목적물의 몰수에 관하여 재판하여야 하고 다음과 같은 사실을 소명한 때에는, 법원은 몰수의 영향을 받는 제3자로 하여금 몰수와 관계된 절차에 참여할 것을 명한다(몰수관계인).

1. 목적물이 피고인이 아닌 제3자의 소유이거나 또는 제3자에게 처분권한이 있다는 사실 또는
2. 제3자가 목적물에 대해 여타의 권리를 갖고 있고, 몰수의 경우 그 권리의 소멸을 명할 수 있다는 사실(형법 제74조e 제2항 제2문과 제3문)

특정한 사실에 비추어 참여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보일 때에는 법원은 명령을 배제할 수 있다. 독일연방공화국의 존립과 안녕 또는 형법 제92조 제2항에서 서술하고 있는 헌법상의 제반원칙에 반하는 목표를 추구하고, 본 법의 장소적 효력범위 바깥에 존재하는 정당, 연합 또는 조직이 참여해야 하고,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이들 정당, 연합, 조직 또는 이들의 대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자신들의 목적을 촉진하기 위해 목적물에 대한 처분권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법원은 명령을 배제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목적물의 몰수에 관한 재판을 행하기 전에 가능한 한 목적물의 소유자 또는 그 권리에 관하여 처분권한이 있는 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②법원은 다음의 경우 제1항의 참여가 피고인의 책임문제에까지 확대되지 않을 것을 명할 수 있다.

1. 목적물이 피고인의 소유이거나 그에게 처분권한이 있다는 요건 하에서만 제1항 1호의 몰수를 고려하는 경우 또는
2. 몰수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사정에 비추어 형법 이외의 법규에 기초하여 보상 없이 몰수관계인으로부터 그 목적물을 장기간에 걸쳐 몰수할 수 있는 경우

③법인이나 단체에 대해 대체물의 몰수에 관하여 재판하여야 하는 경우(형법 제74조c와 관련한 제75조), 법원은 법인 또는 단체의 참여를 명한다.

④몰수의 판결 시까지 절차에 참여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허용된 항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항소절차의 최종변론 종결 시까지 이를 명할 수 있다.

⑤절차참여를 명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절차참여를 기각하거나 제2항의 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는 즉시항고를 허용한다.

⑥목적물의 몰수에 대하여 불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를 법원이나 검사에 대하여 서면이나 조서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또는 기타 관청에 서면으로 밝힌 자에 대해서는 절차참여를 명하지 않거나 또는 내려진 명령을 다시 취소한다.

⑦절차참여로 인하여 절차의 진행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제432조(준비절차에서 의견청취) ①소송준비절차에서 누군가를 몰수관계인으로 고려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다면 그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431조 제1항 제3문을 준용한다.

②몰수관계인으로서 참여가 고려되고 있는 자가 몰수에 대한 불복의 의사를 밝히고 있고 그의 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소명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를 신문하는 때에는, 그의 몰수참여와 관련하여 피의자 신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33조(공판절차에서 몰수관계인의 지위) ①본 법이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판개시와 함께 몰수참여인은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권한을 갖는다. 신속절차에서는 공판의 시작으로부터, 약식명령절차에서는 약식명령의 선고가 내려진 때부터 제1문을 적용한다.

②법원은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몰수관계인 본인이 직접 출석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불출석 시에는 구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소환장 송달과 함께 밝힌 경우, 본인출석의 명령을 받은 몰수관계인이 충분한 해명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면 법원은 그에 대한 구인을 명할 수 있다.

제434조(대리) ①몰수관계인은 절차의 어느 단계에서나 위임장을 근거로 하여 변호사 또는 변호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 자로 하여금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제137조 내지 제139조, 제145조a 내지 제149조 및 제218조의 변호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②사실문제나 법률문제가 난해한 경우 또는 몰수관계인이 자신의 권리를 직접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은 변호사 또는 변호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 자를 몰수관계인을 위하여 임명할 수 있다.

제435조(공판에 관한 기일의 통지) ①몰수관계인에게는 송달의 방법으로 공판기일을 통지하며, 제40조를 준용한다.

②몰수관계인이 소송절차에 참여하는 이상 공판기일과 함께 공소장 및 제207조 제2항의 경우에는 공판개시의 결정도 통지한다.

③상기의 통지에서 몰수관계인에게는 다음의 사항도 함께 알린다.

1. 몰수관계인의 출석 없이도 심리가 진행될 수 있다는 사실
2. 몰수관계인을 상대로 한 몰수에 대해서도 재판할 수 있다는 사실

제436조(공판절차) ①적법한 공판기일의 통지에도 불구하고 몰수관계인이 공판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몰수관계인 없이도 심리할 수 있다. 제235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②피고인의 책임문제에 관한 몰수관계인의 증거신청에 대해서는 제244조 제3항 제2문과 제4항 내지 제6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③몰수관계인에 대한 보상에 반하는 사정에 근거하여 법원이 몰수를 명한 경우, 법원은 이와 함께 몰수관계인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힌다. 보상의 거부가 부당하게 가혹할 수 있다는 이유로 몰수관계인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법원이 인정하는 때에는 제1문을 적용하지 않으며, 이 경우 법원은 동시에 보상의 정도에 대해서도 판단한다(형법 제74조f 제3항). 법원은 사전에 몰수관계인에게 이러한 보상의 가능성을 알리고 이에 관해 진술할 기회를 부여한다.

④몰수관계인이 판결 선고 시 출석하지 않았고 대리인도 출석하지 않았다면 몰수관계인에게 판결을 송달하여야 한다. 법원은 판결 가운데 몰수와 관계없는 부분은 삭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437조(상소절차) ①몰수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하고 또한 선행 절차에서 유죄선고 시까지 몰수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지 못한 것에 대해 몰수관계인의 책임이 없었던 경우에만 몰수관계인에 대한 몰수의 정당화 여부에 관한 상소절차에서의 심사가 불복된 판결의 유죄선고에까지 확장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심사가 유죄선고에까지 확대되는 경우, 법원은 몰수관계인이 제출한 사항이 새로운 심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 한, 유죄선고와 관련된 사실확인을 근거로 삼는다.

②다른 관계인의 상소에 의하여 유죄선고에 관한 재판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 항소절차에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③상고절차에서는 유죄선고에 대한 이의제기는 이유제출기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④재판에 대한 불복이 보상의 정도에만 관련되는 때에는 관계인이 반대하지 않는 한, 상소에 관하여 결정으로 재판할 수 있다. 법원은 사전에 관계인들에게 이러한 절차 및 반론의 가능성을 지적하고 이에 관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한다.

제438조(약식명령) ①약식명령에 의해 몰수를 명한 경우 당해 약식명령은 몰수관계인에게도 송달한다. 제435조 제3항 2호를 준용한다.

②몰수관계인의 이의에 관해서만 재판해야 하는 경우 제439조 제3항 제1문 및 제441조 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제439조(사후절차) ①목적물의 몰수에 관한 명령이 확정력을 갖고 다음의 사실을 소명한 자는 자신을 상대로 한 몰수가 정당화될 수 없음을 사후절차에서 주장할 수 있다.

1. 재판의 확정력이 발생할 당시 그 재판으로 인하여 침해되거나 소멸된 목적물에 대해 권리를 갖고 있었다는 사실 및
2. 제1심 절차에서나 항소절차에서 자신의 책임 없이 몰수관계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다는 사실

제360조를 준용한다.

②사후절차는 신청인이 확정판결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판결의 확정력이 발생한 후 2년이 경과하고 그 집행이 이미 종료한 경우에는 신청을 허용하지 않는다.

③몰수의 근거가 되는 사정에 따라 형사절차에서 제431조 제2항에 의한 명령이 허용될 수 있는 경우 법원은 유죄선고를 재심사하지 않는다. 그 밖의 경우에는 제437조 제1항을 준용한다.

④신청인이 주장한 권리가 증명되지 않은 경우 그 신청을 이유 없는 것으로서 기각한다.

⑤사후절차가 부적절하게 과도한 비용을 소요하는 경우 법원은 재판 이전에 검사의 동의를 얻어 몰수명령을 취소할 수 있다.

⑥제1항에 따른 이의를 주장할 목적으로 하는 제359조에 따른 재심은 배제된다.

제440조(독립적 몰수절차) ①독립적 몰수명령의 신청이 법적으로 허용되고 또 수사결과에 따라 이러한 명령이 예상되는 경우, 검사와 사인기소인은 몰수만을 독립적으로 명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신청 시에는 해당 목적물을 적시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독립적 몰수의 근거가 되는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제200조를 준용한다.

③제431조 내지 제436조 및 제439조를 준용한다.

제441조(사후의 독립된 몰수와 관련된 절차) ①사후절차에서의 몰수재판(제439조)은 제1심 법원이 수행하며, 독립적 몰수에 관한 재판(제440조)은 특정인에 대한 형사소추의 경우 관할권을 갖게 될 법원이 행한다. 자신의 관할구역에 목적물이 보전되어 있는 법원에도 독립적 몰수에 관한 재판의 토지관할이 있다.

②법원은 결정으로 재판하며, 이에 대해서는 즉시항고가 가능하다.

③그러나 허용된 신청에 관하여 구두변론을 근거로 판결로써 재판하는 것은 검사 기타 관계인이 이를 신청하거나 법원이 이를 명한 경우에

한하며, 이 경우 공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판결에 대하여 허용되는 항소를 제기한 자는 항소판결에 대한 상고를 제기할 수 없다.
④판결로써 재판하는 경우 제437조 제4항을 준용한다.

제442조(몰수에 준하는 법률효과; 관계인) ①추징, 파기, 폐기 및 위법상황의 제거는 제430조 내지 제441조에서 의미하는 몰수와 동일하다.
②형법 제73조 제3항 또는 제73조a에 따른 추징이 피고인 이외의 자에 대하여 집행되는 경우 법원은 그에게 절차에 참여할 것을 명한다. 그가 자신의 책임 없이 제1심 절차에서나 항소절차에서 소송관계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던 경우 추징명령에 대한 이의를 사후절차에서 주장할 수 있다. 이러한 요건 하에 사후절차를 신청한 경우 그 절차의 종료 시까지 신청인에 대한 집행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443조(재산압수) ①본 법의 효력이 미치는 재산이나 다음 각 호에 따른 범죄행위에 의해 기소되었거나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고인의 재산 목적물은 압수할 수 있다.

1. 형법 제81조 내지 제83조 제1항, 제89조a, 제94조 또는 제96조 제1항, 제97조a 또는 제100조, 제129조 또는 129조a 또는 제129조b의 행위와 관련된 것
2. 형법 제330조 제1항 제1문과 관련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고의로 타인의 신체나 생명 또는 타인의 물건에 대하여 현저한 위해를 가하였다는 혐의가 있는 경우 또는 형법 제330조 제1항 제2문 1호 내지 3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요건들 또는 형법 제330조 제2항, 제330조a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경우

3. 무기법 제51조, 제52조 제1항 1호와 2호 c와 d, 제5, 6항, 대외무역법 제34조 제1항 내지 제6항 또는 전쟁무기통제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1호 내지 3호, 제20조 제1항 또는 제2항(제21조와 결부되는 경우도 포함) 또는 제22조a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경우
4. 관계 규정에서 서술하고 있는 요건 하에 또는 마약류법 제29조a, 제30조 제1항 1호, 2호, 4호, 제30조a나 제30조b에 따른 범죄행위의 요건 하에 동법 제29조 제3항 제2문 1호에서 관련시키고 있는 규정

추후에 피고인에 귀속되는 재산도 압수의 대상이다. 압수는 늦어도 제1심 공판 종결 이후에는 취소되어야 한다.

②압수는 판사가 명한다. 긴급을 요하는 경우 검사는 임시로 압수를 명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임시적 명령은 판사가 3일 이내에 추인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한다.

③제291조 내지 제293조를 준용한다.

제 4 장 법인 및 단체에 대한 과태료확정절차

제444조(법인과 단체에 대한 과태료부과 확인의 절차) ①법인이나 단체에 대한 과태료 확정에 관하여 형사절차에서 재판해야 하는 경우(질서위반법 제30조), 법원은 그 범죄행위와 관계있는 법인이나 단체가 절차에 참여할 것을 명한다. 제431조 제4항과 제5항을 준용한다.

②법인이나 단체를 공판에 소환하였으나 이들의 대리인이 충분한 해명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리인 없이도 심리할 수 있다. 그 밖의 경우 이들의 절차참여와 관련해서는 제432조 내지 제434조, 제435조

제2항과 제3항 1호, 제436조 제2항과 제4항, 제437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438조 제1항을 적용하고, 이의제기에 대해서만 재판하는 경우에는 제441조 제2항과 제3항을 그 의미에 맞게 적용한다.

③독립된 절차에서는 제440조와 제441조 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한다. 법인이나 단체의 소재지 또는 지점이 소재하고 있는 구역의 법원에 토지관할이 있다.

제445조 내지 **제448조(삭제)**

제 7 편 형집행 및 소송비용

제 1 장 형집행

제449조(집행가능성) 형사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이를 집행할 수 없다.

제450조(미결구금일수와 운전면허취소일수의 산입) ①피고인이 상소를 포기하거나 이미 제기한 상소를 취하하거나 또는 의사표시 없이 상소제기기간이 종료한 이후 피고인을 구금한 미결구금일수는 집행하게 될 자유형에 가감 없이 산입하여야 한다.

②제111조a 제5항 제2문을 근거로 하여 판결에 의해 운전면허증의 유치, 보전 또는 압수가 계속되는 경우 이 기간을 가감 없이 운전금지(형법 제44조)기간에 산입하여야 한다.

제450조a(외국에서 이루어진 자유박탈의 산입) ①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형집행 목적으로 인도절차 도중에 외국에서 겪은 자유박탈 역시 집행할 자유형에 산입하여야 한다. 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형사소추를 목적으로 인도된 경우에도 동일하다.

②인도가 수개의 형집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외국에서 겪은 자유박탈은 가장 중한 형에 산입하여야 하며, 동종의 형인 경우에는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인도 이후 최초로 집행된 형에 산입하여야 한다.

③판결의 근거가 되는 사실확인에 대한 최종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판결이 선고된 이후의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행태에 비추어

볼 때 상기의 산입이 정당하지 않은 경우, 검사의 신청에 기하여 법원은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산입하지 않도록 명할 수 있다. 제1문에 따른 법원의 명령이 있는 경우, 외국에서의 자유박탈기간이 집행할 형을 초과하지 않는 한, 다른 절차에서도 이를 형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451조(형집행기관) ①형은 법원사무국 서기가 발급하여야 하고 또한 집행가능성을 확증하는 판결주문의 등본을 근거로 하여 검사가 집행한다.
②주 사법행정부가 구검찰청 검사에게 형집행을 위임한 경우에만 구검찰청 검사가 형을 집행할 수 있다.
③집행기관인 검사는 다른 주법원의 형집행부에서도 검사의 직무를 수행한다.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형집행부 소재지의 검사가 동의하는 경우, 검사는 자신의 직무를 상기 법원 관할의 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52조(사면권) 연방의 관할권이 행사되는 제1심에서 재판한 사건에 관한 사면권은 연방에 있다. 기타 사건에 관한 사면권은 개별 주에 속한다.

제453조(집행유예에 관한 사후재판) ①보호관찰부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형법 제56조a 내지 제56조g, 제58조, 제59조a, 제59조b)와 관계되는 사후재판은 법원이 구두변론 없이 결정으로 행한다. 검사와 피고인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준수사항 또는 지시사항에 대한 위반을 이유로 집행유예의 취소에 관하여 법원이 판단하여야 하는 경우,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게 구두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보호관찰관이 임명된

때에는 법원은 집행유예나 형면제의 취소에 관한 재판을 고려하는 경우 이 사실을 보호관찰관에게 알려야 하며, 다른 형사절차를 통해 법원이 알게 된 사실에 대해서는 보호관찰의 목적에 비추어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보호관찰관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재판에 대해서는 항고가 허용된다. 항고는 내려진 명령이 법률에 위배되거나 보호관찰기간이 사후적으로 연장되는 것을 이유로 할 때에만 허용된다. 집행유예의 취소, 형의 면제, 면제의 취소, 유예된 형의 선고 및 면소의 확인(형법 제56조f, 제56조g, 제59조b)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

제453조a(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의 경우 고지) ①제268조a에 따른 피고인에 대한 고지는 제453조에 따른 재판의 관할법원이 행한다. 재판장은 이러한 고지를 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중요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지는 구두로 이루어져야 한다.

③피고인에게는 사후의 재판에 관해서도 고지해야 한다. 제1항을 준용한다.

제453조b(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대한 감독) ①보호관찰기간 동안 법원은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생활태도, 특히 준수사항과 지시상항의 이행 및 급부제안과 약속의 이행을 감독한다.

②제453조에 따른 재판의 관할법원이 감독을 담당한다.

제453조c(유예 취소 전의 임시절차) ①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취소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존재하는 경우, 법원은 취소결정의 확정력이

발생할 때까지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인신을 확보하기 위하여 임시처분을 행할 수 있으며, 제112조 제2항 1호나 2호의 요건 하의 긴급한 경우 또는 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중대한 범죄행위를 행할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있는 경우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구속영장을 근거로 한 구금일수는 집행하게 될 자유형에 산입한다. 제33조 제4항 제1문 및 제114조 내지 제115조a와 제119조 및 제119조a를 준용한다.

제454조(잔형의 집행유예) ①자유형의 형기 가운데 잔형의 집행유예(형법 제57조 내지 제58조) 여부에 관한 재판 및 일정 기간의 경과 이전에는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이러한 신청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재판은 법원이 구두변론 없이 결정으로 행한다. 검사, 유죄판결을 받은 자 및 집행시설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구두로 의견을 진술한다. 다음의 경우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대한 구두진술을 배제할 수 있다.

1. 검사와 집행시설기관이 유기자유형의 유예를 제안하고 법원이 그 유예할 의도가 있는 경우
2. 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유예를 신청하고, 신청 당시
   a) 유기자유형의 경우 형의 2분의 1이 경과되지 않았거나 또는 2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b) 무기자유형의 경우 13년을 경과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그 신청의 시기가 이르다는 이유로 법원이 신청을 기각한 경우 또는

3.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신청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형법 제57조 제7항, 제57조a 제4항)

법원은 동시에 행형법 제43조 제10항 3호에 따른 산입을 배제할 것인지 여부도 결정하여야 한다.

②법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대한 감정인의 소견서를 받아야 한다.

1. 무기자유형 잔형의 집행유예 또는
2. 형법 제66조 제3항 제1문에서 서술하고 있는 종류의 범죄행위에 근거한 2년 이상 유기자유형 잔형의 집행유예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대한 조기 석방이 공공안녕에 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

소견서는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게 범죄행위를 통해 표출된 위험성이 존속할 위험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지 여부에 대한 명시적인 의견을 표명하여야 한다. 감정인의 의견을 구두로 청취하여야 하고, 이 경우 검사, 유죄판결을 받은 자, 그 변호인 및 집행시설에게 청문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유죄판결을 받은 자, 그 변호인 및 검사가 감정인의 구두진술 참여를 포기하는 경우 법원은 감정인의 청문을 배제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허용한다. 잔형의 유예를 명하는 결정에 대한 검사의 항고는 결정을 정지하는 효력을 갖는다.

④그 밖의 경우에는 제268조a 제3항, 제268조d, 제453조, 제453조a 제1항과 제3항 및 제453조b, 제453조c의 규정을 준용한다. 잔형의 유예에 관하여는 구두로 알리며, 집행시설에 이 내용의 전달을 위임할 수 있다. 이 내용의 전달은 석방 직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제454조a(유예기간의 개시; 잔여형 유예의 취소) ①법원이 자유형의 잔형의 집행유예를 석방 시점으로부터 최소 3개월 이전에 결정한 경우, 집행유예재판의 확정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석방까지의 기간만큼 보호관찰기간을 연장한다.

②새롭게 발생한 사실 또는 새롭게 알려진 사실에 기초하여 공공의 안녕을 고려할 때 집행유예에 대해 책임질 수 없는 경우,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석방 이전까지 법원은 자유형의 잔형의 집행유예를 취소할 수 있으며, 제454조 제1항 제1문과 제2문 및 제3항 제1문을 준용한다. 형법 제57조 제5항은 이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454조b(자유형과 대체자유형의 집행) ①자유형과 대체자유형은 순차적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②수개의 자유형 또는 자유형과 대체자유형을 순차적으로 집행하여야 하는 때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기관은 최초에 집행해야 할 자유형의 집행을 중단한다.

1. 형법 제57조 제2항 1호의 요건 하에 형기의 2분의 1(그러나 최소 6개월 이상)이 경과한 경우
2. 그 밖의 유기자유형에서 형기의 3분의 2(그러나 최소 2개월 이상)가 경과한 경우
3. 무기자유형에서 형기의 15년이 경과한 경우

그 유예의 취소를 근거로 집행되는 잔형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우선적으로 집행될 자유형이 다음에 집행될 자유형의 집행가능 시점에 앞서 이미 그 중단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중단의 효력은 집행가능 시점에까지 소급한다.

③집행기관이 제2항에 따라 집행을 중단한 때에는 모든 형의 잔형의 집행유예에 관하여 동시에 재판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법원이 형법 제57조와 제57조a에 따른 재판을 행한다.

제455조(자유형 집행의 정지) ①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정신질환을 앓는 경우에는 자유형의 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②형집행으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질병의 경우에도 전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신체상태가 행형시설에서의 즉각적인 집행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도 형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④집행기관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및 질병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자유형의 집행을 중단할 수 있다.

1. 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2. 형집행이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질병으로 인하여 그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3. 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기타 중병을 앓고 있고 집행시설이나 시설 내 병원이 그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할 수 없는 경우

공공안녕과 같은 중대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형집행을 중단할 수 없다.

제455조a(집행조직의 사유로 인한 정지 또는 중단) ①집행조직상 필요한 경우 및 공공안녕에 반하지 않는 중대한 사유가 존재하는 때에는 집행기관은 자유형이나 자유박탈 보안처분을 정지하거나 수형자의 승낙 없이 이를 중단할 수 있다.

②집행기관의 판단이 적시에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경우에는 집행시설의 장이 제1항의 요건 하에서 수형자의 승낙 없이 잠정적으로 그 집행을 중단할 수 있다.

제456조(일시적인 집행의 정지) ①형의 즉각적인 집행이 유죄판결을 받은 자 또는 그 가족에게 형벌목적 이외의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하는 때에는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신청에 기하여 그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②형의 집행정지는 4개월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③담보제공 및 기타 조건을 집행정지의 승인과 연계시킬 수 없다.

제456조a(범죄자인도 또는 추방을 이유로 한 형집행의 면제) ①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다른 범죄행위를 이유로 외국정부에 인도되는 경우, 국제형사재판소에 이양되는 경우 또는 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연방법의 효력범위 밖으로 추방된 경우 집행기관은 자유형, 대체자유형 또는 보안처분의 집행을 면제할 수 있다.
②인도된 자, 이양된 자 또는 추방된 자가 귀환한 경우에는 형을 집행할 수 있다. 보안처분의 회복에 대해서는 형법 제67조c 제2항을 준용한다. 인도된 자, 이양된 자 또는 추방된 자가 귀환할 경우 형집행기관은 형집행의 면제와 마찬가지로 그 집행의 회복을 명할 수 있으며, 이와 함께 구속명령, 시설수용명령을 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수배조치, 특히 체포를 하기 위한 지명수배를 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제131조 제4항 및 제131조a 제3항을 준용한다.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456조b(삭제)

제456조c(직업금지의 정지 및 유예) ①직업금지의 즉각적인 효력발생이 유죄판결을 받은 자 또는 그의 친족에게 그 목적을 뛰어넘어 현저하게 가혹하며 직업금지의 효력발생을 지연함으로써 그러한 상황을 방지할 수 있는 경우, 법원은 판결 선고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신청에 기하여 또는 그의 동의를 얻어 결정으로 직업금지의 효력발생을 정지할 수 있다.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제462조 제3항을 준용한다.

②동일한 요건 하에 집행기관은 직업금지를 유예할 수 있다.

③상기의 정지와 유예는 담보제공 또는 기타 조건과 연계시킬 수 없다. 정지와 유예는 6개월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④상기의 정지와 유예 기간은 작업금지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457조(구속영장; 지명수배) ①본 장에서 서술하고 있는 목적에 비추어 그 의미에 맞게 제161조를 적용한다.

②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형집행을 개시하기 위한 소환에 응하지 않거나 도주할 위험이 있는 경우, 집행기관에게는 자유형의 집행을 위한 구인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또 기결수가 도주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집행을 면탈한 경우에도 집행기관은 구인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③그 밖에 유죄판결을 받은 자를 체포하기 위한 처분이 확정적이고 적절한 것인 한, 제2항의 경우에는 집행기관이 형사소추기관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비례성 심사와 관련하여 특히 장래에 집행하게 될 자유형의 기간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심 법원이 이에 필요한 재판을 수행한다.

제458조(형집행에 관련된 법원의 재판) ①형사판결의 해석 또는 선고된 형의 양정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 또는 형집행의 허용에 대해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이 재판하여야 한다.

②제454조b 제1항과 제2항 및 제455조, 제456조, 제456조c 제2항의 경우 집행기관의 판단에 대해 이의가 제기된 경우 또는 외국으로 인도되거나 추방된 자에 대한 형벌이나 보안처분의 회복을 집행기관이 명하고 이 명령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이 재판한다.

③상기의 재판이 집행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더라도 법원은 집행의 정지 또는 중단을 명할 수 있다. 제456조c 제2항의 경우에는 법원이 잠정적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제459조(벌금형의 집행) 이 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벌금형 집행에 관해서 법원징수규칙을 적용한다.

제459조a(납입부담의 경감) ①판결이 확정력을 갖게 된 이후 집행기관은 벌금형과 관련된 납입부담의 경감(형법 제42조)을 승인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②제1항 또는 형법 제42조에 따른 납입부담의 경감에 관하여 집행기관이 내린 결정은 사후에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

기관이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게 불리하게 선행재판을 변경하는 것은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방법에 근거하는 때에만 허용된다.

③형법 제42조 제2문에 따라 분납액을 정하여 벌금형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특혜를 취소하는 경우 이를 소송기록에 기재한다. 집행기관은 납입부담의 경감을 새로이 승인할 수 있다.

④납입부담의 경감에 관한 재판은 소송비용에까지 확장된다. 소송비용에 관해서만 재판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제459조b(분납액의 산입) 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납입 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분납액은 제일 먼저 벌금형, 다음으로는 금전납부의무를 부과하는 기타 부수효과, 마지막으로 소송비용의 순서로 산입된다.

제459조c(벌금의 징수) ①특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납입을 면탈하려고 하는 것이 분명한 때에만 벌금형이나 벌금형의 분납액을 만기 도래 후 2주일이 경과하기 이전에 징수한다.

②그 집행이 단시일 내에는 성과를 거둘 수 없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경우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③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유산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집행해서는 안 된다.

제459조d(벌금형 집행의 배제) ①다음의 경우 벌금형의 집행이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재사회화를 곤란하게 할 수 있는 경우, 법원은 벌금형 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배제를 명할 수 있다.

1. 동일한 절차에서 자유형을 집행하였거나 이를 유예한 경우 또는

2. 다른 절차에서 자유형을 부과하였고 형법 제55조의 요건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②법원은 제1항에 의한 재판을 소송비용에 관하여서도 행할 수 있다.

제459조e(대체자유형의 집행) ①집행기관의 명령에 따라 대체자유형을 집행한다.

②전항의 명령은 벌금의 납입이 불가능하거나 제459조d에 따라 집행이 배제될 것을 전제한다.

③자유형 1일에 상응하지 않는 분납액을 근거로 대체자유형의 집행을 명하여서는 안 된다.

④벌금을 납부한 경우, 징수된 경우 또는 제459조d에 따라 집행이 배제된 경우에는 대체자유형을 집행하지 않는다. 제3항을 준용한다.

제459조f(대체자유형 집행의 배제) 대체자유형의 집행이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그 집행의 배제를 명한다.

제459조g(부수형의 집행) ①일정한 물건에 대한 추징, 몰수 또는 폐기가 명하여진 경우 그 물건을 추징하거나 또는 몰수관계인으로부터 압수하는 방법으로 그 명령을 집행한다. 당해 집행에는 법원징수규칙을 적용한다.

②금전납부의무를 부과하는 부수형에 대한 집행에 관하여는 제459조, 제459조a, 제459조c 제1항과 제2항 및 제459조d를 준용한다.

제459조h(이의제기의 경우 법원의 관할) 집행기관의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에 관하여 법원은 제459조a, 제459조c, 제459조e 및 제459조g에 따라 재판한다.

제459조i(재산형의 집행) ①재산형(형법 제43조a)의 집행에 대해서는 제459조, 제459조a, 제459조b, 제459조c, 제459조e, 제459조g를 그 의미에 맞게 적용한다.

②제111조o, 제111조p에 해당하는 경우 처분은 집행이 종료한 이후에 비로소 취소한다.

제460조(사후적 병합형의 형성) 수개의 확정판결을 통하여 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해 병합형의 선고에 관한 규정(형법 제55조)을 고려하지 않는 때에는 법원의 사후재판을 통해 선고된 형을 1개의 병합형으로 형성하여야 한다. 수개의 재산형이 1개의 병합형이 된 경우 최고형의 가액이 법원의 사후재판 당시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재산가액을 초과하는 때에도, 이러한 병합형이 최고형의 가액에 미달되어서는 안 된다.

제461조(병원체류일의 산입) ①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형집행 개시 이후 질병으로 인하여 행형시설과 분리된 병원에 이송된 경우 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형집행을 중단시키려고 고의로 질병을 유발한 것이 아닌 한, 병원에서의 체류기간은 형기에 산입하여야 한다.

②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형집행을 중단시키려는 고의로 질병을 유발한 경우 검사는 법원의 재판을 구하여야 한다.

제462조(법원의 재판; 즉시항고) ①법원은 제450조a 제3항 제1문과 제458조 내지 제461조에 의한 필요적 재판을 구두변론 없이 결정으로 행한다. 자격상실 및 권리의 재부여(형법 제45조b), 몰수 및 목적물의 사후적 몰수명령에 대한 유예의 취소(형법 제74조b 제2항 제3문), 가액의 추징이나 몰수의 사후명령(형법 제76조) 및 시효의 연장(형법 제79조b)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한다.

②제1항의 재판 이전에 검사와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특정한 사실로 인해 청문이 불가능한 경우, 법원은 형법 제79조b에 따른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청문을 배제할 수 있다.

③상기의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 집행의 중단을 명하는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갖는다.

제462조a(형집행부와 제1심 법원의 관할) ①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대하여 자유형을 집행하는 경우, 법원이 그 사건을 다루고 있을 당시 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수용되어 있던 행형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의 형집행부에 제453조, 제454조, 제454조a 및 제462조에 따른 재판의 관할권이 있다. 자유형의 집행이 중단되거나 자유형의 잔형의 집행이 보호관찰부로 유예된 이후 행하여져야 할 재판에 대하여도 당해 형집행부가 관할권을 갖는다. 형집행부는 제458조 제1항과 관계된 제462조에 따른 개별 재판을 제1심 법원에 이송할 수 있으며, 이송은 구속력을 갖는다.

②제1항에서 서술하고 있는 경우 이외에는 제1심 법원이 관할권을 갖는다. 법원은 제453조에 의한 재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주소 또는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통상의 거소가 소재하는 지역의 지방법원에 이송할 수 있으며, 이송은 구속력을 갖는다. 제1항에서 서술하고 있는 경우일지라도 제1심 법원이 보호감호명령을 유보했고 형법 제66조a 제3항 제1문에 따라 이에 관한 결정이 계속 가능한 때에는 제1항과는 달리 제1심을 담당한 법원이 관할한다.

③제460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심 법원이 재판한다. 수개의 법원이 수개의 판결을 선고한 경우 가장 중한 형 또는 동종의 형 가운데 최고형을 선고한 법원에 관할이 있으며, 이에 따르더라도 수개의 법원에 관할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판결을 내린 법원에 관할이 있다. 상급법원이 상기의 요건에 따른 기준이 되는 판결을 선고한 경우 제1심 법원은 병합형을 확정하며, 제1심 판결을 상급주법원이 선고한 경우 상급주법원이 병합형을 확정한다. 지방법원에 병합형의 형성에 관한 관할이 있으나, 당해 지방법원의 형벌권으로 충분하지 않은 때에는 그 법원이 속하는 지역의 주법원 형사부가 재판한다.

④제460조와 달리 수개의 법원이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확정판결을 내리거나 그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 이들 가운데 한 법원만이 제453조, 제454조, 제454조a 및 제462조에 따른 재판의 관할권을 갖는다. 제3항 제2문과 제3문을 준용한다. 제1항의 경우에는 형집행부가 재판하며, 이는 제1항 제3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⑤상급주법원이 제1심에서 판결을 내린 경우 형집행부를 대신하여 제1심 법원이 재판한다. 상급주법원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재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형집행부에 이송할 수 있다. 이송은 구속력을 갖지만, 상급주법원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⑥제354조 제2항과 제355조에 해당하는 경우 제1심 법원은 사건이 환송된 법원이며, 재심절차에서 제373조에 따른 재판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재판을 한 법원이 제1심 법원이 된다.

제463조(보안처분의 집행) ①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형집행에 관한 규정을 보안처분의 집행에도 준용한다.

②형법 제68조a 내지 제68조d에 따른 재판에도 제453조를 적용한다.

③형법 제67조c 제1항, 제67조d 제2항과 제3항, 제67조e 제3항, 제68조e, 제68조f 제2항 및 제72조 제3항에 따른 재판에도 제454조 제1항, 제3항과 제4항을 적용한다. 형법 제68조e에 해당하는 경우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구두진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제45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행위와는 별도로 법원이 보호감호의 집행에 대하여 결정해야 하는 경우, 제454조 제2항은 형법 제67조d 제2항과 제3항, 제67조c 제1항 및 제72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준용한다. 그 밖의 경우에 제454조 제2항은 당해 규정에 명시된 범죄행위에 적용된다. 형법 제67조d 제3항에 따른 재판 및 형법 제67조d 제2항에 따른 후속재판의 준비를 위하여, 법원은 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다시 중대한 위법행위를 할 것이 예상되는지 여부에 관한 감정인의 기명 소견서를 원용하여야 한다. 변호인이 없는 유죄판결을 받은 자를 위하여 법원은 제4문의 절차를 위해 변호인을 임명한다.

④형법 제67조e에 따른 심사의 경우 법원은 정신병원수용(제63조) 집행 후 매 5년마다 감정인의 소견서를 받아야 한다. 감정인은 수용집행의 범위 내에서 수용된 자의 치료와 관련을 맺은 자이거나 수용 중인 정신

병원에서 근무하는 자이어서는 안 된다. 감정인에게는 수용된 자에 관한 병원의 환자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454조 제2항을 준용한다. 수용된 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법원은 제1항의 절차를 위해 변호인을 선임해 주어야 한다.

⑤정신병원 수용을 명령한 경우에는 제455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금단치료소 또는 보호감호소 수용이 명령되었고 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이들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게 보호감호처분이 명하여진 경우에는 제456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⑥제462조는 형법 제67조 제3항과 제5항 제2문, 제67조a와 제67조c 제2항, 제67조d 제5, 6항, 제67조g, 제67조h와 제69조a 제7항 및 제70조a와 제70조b에 따른 판결에도 적용한다. 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불법을 저지를 현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형법 제67조h 제1항 제1, 제2문에 따른 보안처분을 명령하고 즉시 집행될 수 있다고 선언해야 한다.

⑦제462조a 제1항의 적용과 관련하여 형법 제67조c 제1항, 제67조d 제2항 내지 제6항, 제68조f의 경우에 대한 보호관찰은 잔형의 집행유예와 동일하다.

제463조a(감독청의 권한과 관할) ①감독청(형법 제68조a)은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태도와 지시사항의 이행여부를 감독하기 위하여 모든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선서를 필요로 하는 신문을 제외하고, 모든 종류의 수사를 스스로 수행하거나, 자신의 관할범위 내의 다른 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거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감독청의 장은 그의 위치에 대한 수배(제131조a 제1항)를 명할 수 있다.

②감독청은 보호관찰기간 동안 또는 단기간에 걸쳐 인적 사항의 확인이 허용된 경찰의 통제를 계기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를 관찰하기 위해 수배를 명할 수 있다. 제163조e 제2항을 준용한다. 이러한 명령은 감독청의 장이 행한다. 이 처분이 계속 필요한지 여부에 관하여는 최소한 매년 심사하여야 한다.

③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충분한 양해사유가 없이 형법 제68조b 제1항 제1문 7호 또는 11호의 규정에 따라 주어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출석명령이 가능하다는 점에 대해서 소환 시에 고지받은 경우, 감독청의 신청에 따라 법원은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게 법원 출석을 명할 수 있다. 제1심 법원에 관할이 있는 한, 재판장에게 당해 결정의 권한이 있다.

④감독청은 형법 제68조b 제1항 제1문 12호에 따른 지시사항과 관련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의해 동반되는 기술적 수단을 통해 자동적으로 확보되는, 해당자의 소재지에 관한 데이터 및 데이터조사에 대한 어떤 침해가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조사하고 저장하며,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주거 내에서는 그의 소재지에 관한 데이터를 넘어 여타의 사정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조사되지 않도록 보장한다. 다음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가 아닌 한,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해당하는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다.

1. 형법 제68조b 제1항 제1문 1호, 2호 또는 12호에 따른 지시사항의 위반을 확인하기 위한 경우

2. 형법 제68조b 제1항 제1문 1호, 2호 또는 12호에 따른 지시사항의 위반에 연계될 수 있는 행장감독 처분을 수행하기 위한 경우
3. 형법 제68조b 제1항 제1문 1호, 2호 또는 12호에 따른 지시사항의 위반을 처벌하기 위한 경우
4. 생명, 신체의 완결성, 개인의 자유 또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현재의 현저한 위난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
5. 형법 제66조 제3항 제1문에 언급한 종류의 범죄행위를 소추하기 위한 경우

제2문에 따른 목적구속을 준수하기 위해 형법 제68조b 제1항 제1문 1호 또는 2호와 결부하여 제1문 1호에 따른 위반을 확인하기 위한 데이터는 자동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권한이 없는 자가 이러한 데이터를 취득하지 않도록 특별히 안전장치를 강구해야 한다. 감독청은 데이터의 조사와 처리를 경찰기관과 경찰공무원에 의해 수행되도록 할 수 있으며, 경찰기관과 경찰공무원은 감독청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제1문에 언급된 데이터는 그것이 제2문에 언급된 목적에 사용되지 않는 한, 데이터 조사가 이루어진 후 늦어도 2개월 내에 삭제되어야 한다. 데이터에 접근할 때에는 언제나 최소한 그 시점, 접근대상인 데이터 및 데이터에 접근한 자를 문서로 작성하여야 하며, 이에 관해서는 제488조 제3항 제5문을 준용한다.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주거 내에서 그의 소재지에 관한 데이터를 넘어 여타의 사정에 대해서도 데이터가 조사된 경우에는 이 데이터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이 사실을 인지한 즉시 당해 데이터를 삭제하여야 한다. 그러한 사실의 인지 및 삭제는 문서로 기록해야 한다.

⑤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주소지 보호관찰소에 토지관할이 있다. 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본 법의 효력범위 내에 주소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 그의 통상적 거소가 소재한 지역의 보호관찰소에 토지관할이 있으며, 이러한 거소가 알려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의 마지막 주소 또는 마지막 통상적 거소의 소재지 보호관찰소에 토지관할이 있다.

제463조b(운전면허증의 압수) ①형법 제44조 제2항 제2문 및 제3문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관청에 보관하도록 한 경우 이를 자발적으로 제출하지 않는 때에는 운전면허증을 압수하여야 한다.

②외국 운전면허증의 경우에는 운전금지 또는 운전면허의 취소 및 정지(형법 제44조 제2항 제4문, 제69조b 제2항)를 기재하기 위하여 이를 압수할 수 있다.

③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운전면허증을 직접 소지하지 않고 있는 경우 집행기관의 신청에 기하여 지방법원에서 운전면허증의 소재에 관해 선서를 통해 보증을 행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883조 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제463조c(판결의 공고) ①유죄판결의 공고가 명하여진 경우에는 권한이 있는 자에게 그 재판을 송달하여야 한다.

②고소인 또는 고소인을 대신한 고소권자가 확정판결의 송달 후 1개월 이내에 공고를 요구한 경우에만 제1항에 의한 명령을 집행한다.

③출판업자 또는 정기간행물의 편집책임자가 상기의 공고를 출판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집행기관의 신청에 기하여 법원은 25,000

유로 한도의 강제금 부과 또는 6주 이내의 강제구금을 통하여 의무의 이행을 강제한다. 강제금의 경우에는 이를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다. 제462조를 준용한다.

④방송을 통한 공고와 관련하여 방송프로그램 편성책임자가 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3항을 준용한다.

제463조d(사법보조공무원) 제453조 내지 제461조에 의한 재판의 준비를 위하여 법원이나 집행기관은 사법보조공무원을 이용할 수 있으며, 보호관찰관이 임명되지 않은 이상 특히 형집행유예의 취소 또는 잔형의 유예의 취소에 관한 재판에 앞서 사법보조공무원의 이용을 고려한다.

제 2 장 소송비용

제464조(비용에 관한 재판) ①모든 판결, 모든 약식명령 그리고 조사를 중지하는 모든 재판은 소송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를 정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판결 또는 절차를 종결하는 결정을 통해 누가 필요적 경비를 부담하는지에 관하여 재판한다.

③비용과 필요적 경비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허용되나, 제1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주요 재판에 대한 항고인의 불복이 적법하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항고를 허용하지 않는다. 항고법원은 불복대상인 재판의 근거가 되었던 사실 확인에 구속된다. 재판이 비용과 필요적 경비에 관한 것인 이상, 그 판결에 대하여 즉시항고 및 기타 항소나

상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항소나 상고를 처리하는 항소법원 또는 상고법원이 즉시항고에 관한 재판의 관할권을 갖는다.

제464조a(절차의 비용; 필요적 경비) ①소송비용은 수수료 및 국고의 체당금이다. 또한 공소준비에 의해 발생한 비용 및 범죄행위의 법률효과의 집행비용도 소송비용에 속한다. 확정판결로써 종결된 절차의 재심청구 비용에는 재심절차의 준비(제364조a 및 제364조b)를 위하여 발생한 비용으로서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청구에 의하여 유발된 비용도 포함된다.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비도 관계인의 필요적 경비에 속한다.

1. 증인에 대한 보상에 적용하는 규정에 따른 필요적 시간손실에 대한 보상 및
2. 민사소송법 제91조 제2항에 의해 지불해야 하는 변호인에 대한 수수료 및 경비

제464조b(비용의 확정) 한 관계인이 다른 관계인에게 지불해야 하는 비용과 경비는 관계인의 신청에 기하여 제1심 법원이 확정한다. 신청에는 확정된 비용과 경비에 대하여 확정신청의 제출일로부터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자, 절차 및 결정의 집행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한다.

제464조c(통역 또는 번역자 임명으로 발생한 비용) 독일어에 능숙하지 못하거나 농아자인 피고인을 위하여 통역 또는 번역자가 관여한 경우,

피고인의 유책한 해태 또는 여타의 방식으로 유책하고 불필요하게 경비가 야기된 이상, 이로 인해 발생한 경비는 피고인에게 부과하며, 제467조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명시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464조d(경비의 분배) 국고의 체당금 및 관계인의 필요적 경비는 그 비율에 따라 할당할 수 있다.

제465조(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비용부담의무) ①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내려지거나 보안처분이 명해진 범죄행위로 인한 절차에 의해 비용이 발생한 경우 그 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피고인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하거나 법원이 형을 면제한 경우도 본 조항에서 의미하는 유죄판결에 해당한다.

②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또는 유리한 사정을 밝히기 위해 조사를 통해 별도의 경비가 발생하고, 책임을 묻거나 면하게 하는 일정 상황의 해명을 위한 조사를 통하여 특별 경비가 발생하고 이러한 조사의 결과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 이를 피고인에게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은 그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한다. 피고인이 하나의 범죄행위 가운데 분리 가능한 일부로 인하여 또는 수개의 법률위반 가운데 개별위반으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제1문을 적용한다. 제1문과 제2문은 피고인의 필요적 경비에 대해서도 준용한다.

③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판결의 확정력 발생 이전에 사망한 경우 그 유산으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수 없다.

제466조(공동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책임) 동일한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형을 선고 받았거나 보안처분이 명하여진 공동피고인은 연대채무자로서 경비에 대한 책임을 진다. 국선변호인이나 통역의 활동, 집행, 임시수용 또는 미결구금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및 공동피고인 가운데 1인만을 대상으로 행한 조사활동으로 발생한 경비에 대하여는 제1문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467조(무죄판결의 경우 비용과 경비) ①피고인에게 무죄판결이 내려지는 경우, 피고인에 대한 공판절차의 개시를 기각하는 경우 또는 피고인에 대한 절차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체당금과 피고인의 필요적 경비는 국고가 부담한다.

②피고인의 유책한 해태로 인하여 유발된 소송비용은 피고인에게 부과한다. 유책한 해태로 인하여 피의자에게 발생한 경비는 국고가 부담하지 않는다.

③피의자가 자수를 통해 마치 자신이 유책한 범죄행위를 행한 것처럼 기망함으로써 공소제기를 유발한 때에는 피고인의 필요적 경비는 국고가 부담하지 않는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피고인의 필요적 경비를 국고에 부담시키는 것을 배제할 수 있다.

1. 피의자가 비록 자신의 죄를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본질적 사항과 관련하여 진실에 반하여 또는 추후의 설명과 모순되게 스스로를 불리하게 만들었거나 자신의 책임을 면하게 하는 유리한 사정에 대해 침묵함으로써 공소제기를 유발한 경우 또는

2. 절차상의 장애만을 이유로 범죄행위에 대한 유죄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경우

④법원의 재량에 비추어 절차의 중지를 허용하는 규정에 따라 절차를 중지한 경우 법원은 피고인의 필요적 경비를 국고에 부담시키지 않을 수 있다.

⑤선행된 잠정적 절차중지(제153조a) 이후 절차가 종국적으로 중지된 경우 피고인의 필요적 경비는 국고에 부과하지 않는다.

제467조a(공소취하 및 절차중지의 경우 국고의 비용) ①검사가 공소를 취하하고 절차를 중지시킨 경우 공소가 제기되었던 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기하여 피고인에게 발생한 필요적 경비를 국고에 부담시켜야 한다. 제467조 제2항 내지 제5항을 준용한다.

②제1항 제1문의 경우 보조관계인(제431조 제1항 제1문, 제442조, 제444조 제1항 제1문)에게 발생한 필요적 경비를 법원은 검사 또는 보조관계인의 신청에 기하여 국고나 다른 관계인에게 부과할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재판에는 불복할 수 없다.

제468조(무죄선고) 쌍방 모욕과 관련하여 일방 또는 쌍방에 무죄선고가 내려지는 경우일지라도 일방 또는 쌍방에 대한 비용부담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469조(고발인의 비용부담의무) ①재판 외라 할지라도 고의 또는 경솔하게 진실이 아닌 고발로 인하여 소송이 유발된 경우 법원은 고발인을 청문한

이후 소송비용과 피의자에게 발생한 필요적 경비를 고발인에게 부과하여야 한다. 보조관계인(제431조 제1항 제1문, 제442조, 제444조 제1항 제1문)에게 발생한 필요적 경비도 고발인에게 부과할 수 있다.

②사건을 처리하는 법원이 아직 없는 경우 공판절차의 개시에 관한 관할을 가질 수 있는 법원이 검사의 신청에 기하여 재판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재판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제470조(고소 취하의 경우 비용) 고소를 요건으로 하는 절차가 취소에 의해 중지된 경우 비용 및 피의자와 보조관계인(제431조 제1항 제1문, 제442조, 제444조 제1항 제1문)에게 발생한 필요적 경비는 고소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피의자나 보조관계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이들에게 보조관계인이 이를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고에 상기 비용을 부과할 수 있다.

제471조(사인소추절차의 비용) ①사인소추절차에서는 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사인소추인에게 발생한 필요적 경비까지 지불하여야 한다.

②피고인에 대한 소가 기각된 경우, 피고인에게 무죄판결이 내려진 경우 또는 절차가 중지된 경우, 소송비용 및 피고인에게 발생한 필요적 경비는 사인소추인이 부담한다.

③법원은 소송비용과 필요적 경비를 관계인들에게 적절히 분배하거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무에 부합하는 재량에 따라 관계인 가운데 1인에게 부과할 수 있다.

1. 법원이 사인소추인의 신청의 일부만을 인용한 경우

2. 법원이 제383조 제2항(제390조 제5항)에 따른 경미성을 이유로 절차를 중지한 경우
3. 반소가 제기된 경우

④수인의 사인소추인은 연대채무자로서 책임을 진다. 사인소추인에게 발생한 필요적 경비에 대한 수인의 피고인의 책임도 이와 동일하다.

제472조(보조기소비용) ①보조기소인에 대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이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보조기소인에게 발생한 필요적 경비는 피고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피고인에게 이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부당하게 보이는 경우에는 당해 비용부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제할 수 있다.

②법원이 재량으로 절차를 중지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절차가 중지된 경우 법원은 제1항에서 서술하고 있는 필요적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고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으며, 이는 특별한 사유로 비추어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선행된 잠정적 절차중지(제153조a) 이후 법원이 절차를 종국적으로 중지시킨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보조기소인으로 참여할 권한이 있는 자가 제406조g에 따른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한 필요적 경비에 대해서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제377조 제2항에 따라 검사가 사인소추인으로부터 그 소추를 인수한 경우에 발생한 사인소추인의 필요적 경비도 동일하다.

④제471조 제4항 제2문을 준용한다.

제472조a(병합절차) ①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청구권의 승인신청을 인용한 경우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발생한 특별비용 및 피해자의 필요적 경비도 부담하여야 한다.

②법원이 당해 신청에 관한 재판을 배제하는 경우, 청구권의 일부가 피해자에게 승인되지 않는 경우 또는 피해자가 신청을 취하하는 경우, 발생한 법원경비 및 관계인에게 발생한 필요적 경비를 부담해야 하는 자는 법원이 의무에 부합하는 재량에 따라 판단한다. 법원경비를 관계인에게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게 보이는 때에는 이를 국고가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제472조b(부수형에 관련된 비용) ①추징, 몰수, 몰수유예, 파기, 폐기 또는 불법상태의 제거 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는 보조관계인에게 자신의 참여로 인하여 발생한 특별비용을 부과하도록 할 수 있다. 보조관계인에게 발생한 필요적 경비는 피고인에게 부과할 수 있고, 독립절차에서는 다른 보조관계인에게도 부과할 수 있으나 이는 이러한 비용부담이 정당한 경우에 한한다.

②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과태료가 확정된 경우, 이들은 제456조와 제466조에 따라 소송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제1항 제1문에 서술된 부수형 명령 또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부과된 과태료의 확정을 배제하는 경우 보조관계인에게 발생한 필요적 경비를 국고 또는 다른 관계인이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제473조(상소에서의 비용과 경비) ①취하하였거나 패소한 상소로 발생한 비용은 이를 제기한 자가 부담한다. 피고인이 상소를 제기하여 패소하였거나 상소를 취하한 경우, 이로 인하여 보조기소인 또는 보조기소인으로 참여할 권한이 있는 자가 제406조g에 따라 자신의 권한을 행사

함으로써 발생한 필요적 경비는 피고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문의 경우 보조기소인이 단독으로 상소를 제기하였거나 수행한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한 피고인의 필요적 경비는 보조기소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406조a 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즉시항고가 그 절차의 진행을 종결시키는 결정에 의하여 더 이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었을 때에 참여자의 상소비용과 필요적 경비에 대해서는 제472조a 제2항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경우 검사가 피고인 또는 보조관계인(제431조 제1항 제1문, 제442조, 제444조 제1항 제1문)을 위하여 상소를 제기한 때에는 이들에게 발생한 필요적 경비는 국고가 부담하여야 한다. 피고인 또는 보조관계인을 위하여 검사가 제기한 상소에서 승소한 때에도 동일하다.

③피고인 또는 다른 관계인이 특정 불복사항에 한정하여 상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때에는 관계인의 필요적 경비는 국고가 부담하여야 한다.

④상소가 일부 승소한 경우 법원은 그 수수료를 경감하여 주어야 하며, 관계인이 이를 부담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그 발생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고가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관계인의 필요적 경비에 대해서도 이를 준용한다.

⑤운전면허의 일시 정지(제111조a 제1항) 또는 운전면허증의 유치, 보전, 압수(형법 제69조a 제6항)의 지속기간으로 인하여 형법 제69조 제1항 또는 제69조b 제1항에 따른 명령의 요건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당해 명령이 유지되지 못한다면 상소가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본다.

⑥다음의 신청으로 유발된 비용과 필요적 경비에 대해서는 제1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한다.

1. 확정판결을 통하여 종결된 절차의 재심청구
2. 사후절차의 신청(제439조)

⑦원상태의 회복으로 인한 비용은 그것이 상대방의 근거 없는 방해로 인하여 비롯된 것이 아닌 경우에는 회복신청자가 부담한다.

제473조a(수사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특별 재판의 비용) 수사처분 또는 그 집행의 적법성을 다투는 특별한 재판이 당사자의 신청에 기하여 진행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비용 및 관계인의 필요적 경비를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재판하여야 한다. 수사처분이나 집행이 위법한 것으로 드러나는 경우에는 국고가 부담하며, 그렇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부담한다. 제304조 제3항과 제464조 제3항 제1문을 준용한다.

제 8 편 절차 전반에 요구되는 목적을 위한 정보의 교부 및 기록열람과 기타 정보이용, 데이터에 대한 규정들, 개별 주를 포괄하는 검사의 소송등록부

제 1 장 절차 전반에 요구되는 목적을 위한 정보의 교부 및 기록열람과 기타 정보이용

제474조(사법기관 및 여타 공공기관을 위한 정보제공과 기록열람) ①법원과 검찰 그리고 기타 사법기관은 사법절차의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②또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에게 소송기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정보의 제공이 범죄행위와 관련된 권리관계들을 확정 또는 관철하거나 보장하는 데 필요한 경우
2. 이 밖에 형사절차로부터 개인관련 정보를 기관에게 직권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정보의 전달 이후 추가적인 개인관련 정보의 전달이 그 기관의 과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보안처분의 준비를 위하여 정보가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조치 이후에 특별한 규정에 따라 직권으로 당해 기관에게 형사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

국가정보기관에 대한 정보제공은 연방헌법보호법 제18조, 군사비밀기관법 제10조, 연방정보기관법 제8조 및 해당되는 각 주의 법률규정에 따른다.

③제2항의 요건 하에서 정보제공에 과도한 비용이 소요될 우려가 있거나, 기록을 열람하고자 하는 기관이 정보를 제공받는 것으로 그 과제를 수행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이유를 제시하는 때에는 기록의 열람을 허용할 수 있다.

④제1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사법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증거물도 열람할 수 있다.

⑤제1항과 제3항의 경우 열람을 위해 기록을 송부할 수 있다.

⑥의회 위원회에 기록열람권을 허용하고 있는 주법률의 규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475조(사인을 위한 정보제공 및 기록열람) ①제406조e의 규정에 관계없이, 사인이나 기타 기관을 위해 변호인은 그 정당한 이익이 있음을 소명하는 경우, 법원에 제출되었거나 공소제기를 할 때에 법원에 제출될 기록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기록과 직접 관련된 당사자가 정보제공을 허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이 있는 때에는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

②제1항의 요건 하에서 정보제공에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거나 기록을 열람하고자 하는 자가 정보를 제공받는 것으로 그 정당한 이익을 실현하는 데 충분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점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기록의 열람을 허용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요건 하에서 사법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증거물의 열람도 허용된다. 다른 중대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의 신청에 기하여 증거물 이외의 기록은 변호인의 사무실이나 주거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변호인

에게 교부할 수 있다. 이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④제1항의 요건 하에서는 사인이나 기타 기관도 기록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476조(연구목적을 위한 개인관련 정보의 전달) ①기록 가운데에서 개인관련 정보는 대학 또는 기타 연구 목적의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제공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허용된다.

1. 특정한 학문적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2. 개인관련 내용을 익명으로 처리한 정보를 사용하게 되면 연구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익명처리에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3. 특정 연구에 대한 공적 이익이 정보전달의 배제에 대한 당사자의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보다 현저히 중대한 경우

제1항 3호의 비교형량에서 공공의 이익을 고려할 때에는 연구내용의 학문적 필요성을 특히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이를 통해 특정 연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고, 자료제공에 지나친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 경우, 정보의 전달은 자료제공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 밖의 경우에는 기록열람을 허용한다. 기록은 열람을 위해 송부될 수 있다.

③개인관련 정보는 공직자, 공무담당에 대해 특별한 의무를 부담하는 자 또는 비밀준수의 의무가 있는 자들에게만 전달될 수 있다. 비밀준수의무가 있는 자의 범위에 대해서는 제1조 제2항, 제3항, 제4항의 2호를 준용한다.

④개인관련 정보는 특정 연구를 위해서만 이용이 허용되며, 이 경우에만

전달될 수 있다. 여타의 연구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정보제공을 명령한 기관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⑤정보는 권한 없는 제3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보호해야 한다. 학문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은 해당 정보가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행정업무나 영업목적을 달성하는 데 이용되지 않도록 정보가 공간과 조직의 측면에서 확실히 분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연구 목적에 비추어 가능하다면 즉시 개인관련 정보를 익명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이러한 익명처리가 가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정 개인이나 특정될 수 있는 개인의 신상 또는 사실관계들에 대한 개별적인 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 표지들은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러한 표지들은 오로지 연구목적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개별적인 내용들과 함께 처리할 수 있다.

⑦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개인관련 정보를 취득한 자는 동시대의 사건에 관한 연구결과를 서술하는 데에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개인관련 정보를 포함한 연구결과를 발간할 수 있다. 당해 발간은 정보를 전달한 기관의 동의를 요한다.

⑧정보를 전달받은 자가 공공기관 이외의 기관인 경우에는 그 정보를 다른 데이터로 만들거나 다른 데이터로부터 정보를 만드는 정보처리를 하지 않는 한, 연방정보보호법 제3장의 규정에 따라 이용될 수 있다.

제477조(정보전달의 허용) ①정보전달은 기록 사본의 교부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②기록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 또는 기록의 열람이 이를 전달

함으로써 형사절차의 목적 그리고 다른 형사절차 내에서의 조사목적에 위해가 되는 때 또는 특히 연방법 및 그에 상응하는 주법의 적용규정에 저촉되는 때에는 이를 허용되지 아니한다. 본 법에 따라 특정한 범죄 혐의가 있는 때에 한해 취해지는 처분이 있는 경우, 그와 같은 처분을 근거로 하여 요구되는 개인관련 정보는 처분대상인 당사자의 동의가 없이도 다른 형사절차의 증거로 삼을 목적 또는 그 범죄를 해명할 목적에 비추어 본 법에 그와 같은 처분이 허용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범죄행위의 규명을 위해서 필요한 때에 한하여 이용될 수 있다. 이 밖에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제2문에 규정된 처분에 의해 이를 위해 필요한 개인관련 정보를 처분대상 당사자들의 동의가 없이 이용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
2. 연방헌법보호법 제18조에 따라 그 제공이 허용되는 경우
3. 제476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제100조d 제5항, 제100조i 제2항 제2문과 제108조 제2항 내지 제3항은 이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③다음의 절차에서 공공기관 아닌 자에 대한 정보제공이나 기록열람은 오로지 정보의 접근에 대한 이익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고 이전의 피의자가 정보제공의 거부에 대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갖지 않는 때에만 허용된다.

1. 피고인이 무죄판결을 받는 경우, 공판개시가 기각되는 경우 또는 절차가 중지되는 경우
2. 유죄판결이 기관의 행장증명서에 기록되지 아니한 경우, 결정이 확정력을 갖게 된 이후 2년 이상 경과한 경우

④정보제공의 허용 여부에 대한 책임은 공공기관이거나 변호사인 경우에 한하여 정보수취인이 부담한다. 이 경우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은 정보제공 허용에 대한 추가적인 심사를 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아니하는 한, 정보제공 신청이 정보수취인의 과제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한다.

⑤제474조 내지 제475조에 따라 요구되는 개인관련 정보는 그 정보 제공과 기록열람이 허용되는 목적에 한하여 이용될 수 있다. 정보제공 및 기록열람이 허용되는 동시에 제475조의 경우 정보제공이나 기록 열람을 할 수 있는 기관의 승인을 거치는 때에는 다른 목적을 위해서도 이용될 수 있다. 변호사의 개입 없이 정보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목적에 구속된다는 사정을 지적하여야 한다.

제478조(정보제공과 기록열람에 관한 결정; 부속기록) ①준비절차 및 확정 판결 이후의 절차에서 정보제공과 기록열람 여부에 대해서는 검사가 이를 결정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수소법원의 재판장이 결정한다. 검사는 공소제기 후에도 정보를 제공할 권한이 있다. 제475조에 해당하는 경우 검사는 수사를 이행하였거나 이행하고 있는 경찰기관에 대하여 정보 제공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경찰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경찰기관 상호간에 개인관련 정보를 교부하거나 기록을 열람하는 것은 제1항에 따른 결정이 없이도 허용된다.

②기록에 부수된 내용으로서 기록의 일부가 아닌 정보는 자료 신청인이 그 기록을 취급하는 기관의 동의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때에만 제공될 수 있으며, 이는 기록열람의 경우에도 같다.

③제475조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검사의 결정에 대해서는 제162조에 따른 관할법원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구할 수 있다. 제297조 내지 제300조, 제302조, 제306조 내지 제309조, 제311조a와 제473조a를 준용한다.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수사가 종결되지 않는 한 불복할 수 없다. 결정의 근거는 이를 밝힘으로써 조사목적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밝히지 아니한다.

제479조(직권에 의한 정보의 제공) ①형사절차에 관련된 개인관련 정보는 이를 제공하는 기관의 관점에서 볼 때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형사소추의 목적을 위하여 형사소추기관과 형사법원에게 그리고 질서위반범의 소추를 위한 관할기관과 법원에게 제공될 수 있다.

②형사절차에 관련된 개인관련 정보는 이를 제공하는 기관의 관점에서 볼 때 다음과 같은 필요가 있는 경우에 직권으로 제공될 수 있다.

1. 형법 제11조 제1항 8호의 의미의 형벌 또는 보안처분의 집행 또는 소년법원법에 따른 교육처분 또는 수용처분의 집행 및 이행
2. 자유박탈적 보안처분의 집행
3. 특히 보호관찰부 집행유예의 결정 또는 그 취소의 결정, 과태료 또는 사면의 결정

③제477조 제1항, 제2항과 제5항, 제478조 제1항, 제2항을 준용하며, 정보제공의 허용 여부에 대한 책임은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이 부담한다.

제480조(특별규정의 유지) 형사절차에 관련된 개인관련 정보의 제공을 명령하거나 허용하는 내용의 특별법 규정들은 이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481조(경찰에 의한 개인관련 정보의 이용) ①경찰은 경찰법에 따른 방식으로 형사절차에 관련된 개인관련 정보를 이용하는 것이 허용된다. 경찰이 형사절차로부터 개인관련 정보를 형사절차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목적 또한 경찰법에 명시된 내용에 한정된다. 제1문과 제2문은 경찰이 전적으로 사적인 권리보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이러한 정보의 이용은 연방의 특별법 또는 그에 상응하는 주법의 이용규정들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482조(담당 경찰기관에 대한 검사의 통지) ①검사는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기관에게 사건 기록번호를 통지한다.

②제1항의 경우 검사는 경찰에게 결정의 형식, 결정하는 기관 또는 결정의 일시와 방법을 통지하여 절차의 결과를 알린다. 통지의 등본을 연방중앙등록부에 송부하는 것이 허용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판결 또는 결정 및 결정이유의 사본도 송부할 수 있다.

③신원미상인 자에 대한 절차 및 교통사고 형사사건에서는 형법 제142조, 제315조 내지 제315조c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한, 직권으로 제2항에 따른 절차의 결과에 대한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④불복이 이루어진 판결을 송부할 때에는 누가 상소를 제기했는지 기재한다.

제 2 장 데이터에 대한 규정

제483조(형사절차의 목적을 위한 정보처리) ①법원, 집행기관을 포함한 형사소추기관, 보호관찰관, 행장감독을 담당하는 감독청 또는 사법보조공무원은 형사절차의 목적에 필요한 경우 한하여 개인관련 정보를 데이터로 저장, 변경 및 이용할 수 있다.

②정보는 다른 형사절차, 국제 형사사법공조 및 사면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③어떤 정보에 경찰이 경찰법에 따라 저장할 수 있는 정보들이 함께 저장된 경우, 개인관련 정보의 처리와 이용 및 당사자의 권리에 대해서는 저장을 담당하는 기관에 적용되는 법을 기준으로 삼는다.

제484조(장래의 형사절차를 위한 정보의 이용) ①형사소추기관은 장래의 형사절차에 이용할 목적으로 다음의 사항을 정보 데이터로 저장, 변경, 이용할 수 있다.

1. 피의자의 개인관련 정보 및 필요한 경우 기타 신상파악에 적합한 표지
2. 관할기관 및 기록번호
3. 범죄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표지, 특히 범행시간, 범행장소 및 유무형의 피해정도
4. 구체적 행위비난 및 해당 법률규정의 제시
5. 검사와 법원이 이행한 절차의 개시와 종결 및 해당 법률규정의 제시

②피고인 또는 행위관련자에 대한 여타의 개인관련 정보는, 행위방법이나 행위과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 또는 행위관련자들의 인격이나 기타의 내용들이 형사절차를 계속 진행해 나아가는 데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근거가 있는 때에는 데이터로 저장, 변경, 이용할 수 있다. 피고인에 대해 무죄의 확정판결이 이루어진 경우 또는 피고인에 대한 공판 개시가 불복할 수 없는 이유로 인해 기각되거나 절차가 종국적으로 중지된 경우, 그것이 당사자가 행위자가 아니거나 위법하게 행위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에 따른 결과일 때에는 제1문에서의 저장, 변경, 이용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장래의 형사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2항에 따라 저장될 수 있는 정보의 종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연방법무부와 주정부가 그 업무의 범위 내에서 법규명령을 통해 확정한다. 그러나 단지 일시적으로만 데이터로 유지되거나 저장 후 3개월 내에 삭제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정부는 법규명령을 통해 관할 장관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④장래의 형사절차를 목적으로 경찰의 데이터로 저장되었거나 저장될 개인관련 정보의 이용은 하나의 형사절차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찰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485조(기록의 정리) 법원, 집행기관을 포함한 형사소추기관, 보호관찰관, 행장감독을 담당하는 감독청 내지 법원의 사무보조는 기록정리업무의 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정보들 가운데 개인관련 정보를 저장, 변경 및 이용할 수 있다. 제484조에 기재된 목적에 따른 이용도

그 규정에 따라 저장이 허용된 경우라면 가능하다. 제483조 제3항을 준용한다.

제486조(공동데이터) ①개인관련 정보는 제483조 내지 485조에서 언급하고 있는 기관들이 공동으로 이용 가능한 데이터로 저장할 수 있다.

②각 주 전역에 걸쳐 공동으로 이용되는 데이터와 관련하여서는 연방정보법 제8조에 규정된 당사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준용한다.

제487조(저장된 정보의 제공) ①제483조 내지 제485조에 따라 저장된 정보는 당해 규정들에서 언급하고 있는 목적에 따라 사면절차 또는 국제형사사법공조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기관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477조 제2항과 제485조 제3항을 준용한다.

②이 밖에 본 법의 규정에 따라 기록열람 또는 정보제공이 허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정보제공이 가능하다. 제479, 480, 481조 제1항 제2문에 따른 통지도 이와 동일하다.

③정보제공의 허용 여부에 대한 책임은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이 부담한다. 수취인의 신청에 기하여 정보가 제공된 때에는 신청인이 책임을 부담한다. 이 경우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은 정보제공 허용 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심사를 해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아니하는 한, 정보제공의 신청이 그 정보수취인의 과제 범위 내에 있는가 여부만을 심사한다.

④제483 내지 제485조에 따라 저장된 정보는 연구의 목적을 위해서도 제공될 수 있다. 제476조를 준용한다.

⑤형사절차에 관련된 정보의 전달을 명령하거나 허용하는 특별 법률 규정은 이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⑥정보는 그것이 제공되는 목적에 부합한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다른 목적을 위해 이용하는 것은 그러한 목적에 따를 때에도 정보제공이 가능했던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제488조(자동화된 정보전달) ①자동장치에 의한 정보인출절차 또는 조회 및 교부절차는 이와 같은 정보제공의 방식이 당사자의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고려할 때 정보제공이 여러 차례 반복되어야 하고 특별히 긴급하다는 측면에 비추어 적절한 경우에 한하여 제487조 제1항에 따른 제공을 위하여 제483조 제1항에 명시된 기관에게 허용한다. 관계 기관은 정보의 보호와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상태에 부합하는 조치를 취하여 특히 정보의 신뢰성과 안정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공중이 접근가능한 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기술적인 상황에 부합하는 보안차단장치를 이용하여야 한다.

②자동화된 정보인출절차의 설비와 관련된 결정에 대해서는 연방정보보호법 제10조 제2항을 준용한다. 이를 위해 정보의 저장과 인출을 담당하는 기관은 해당 관할의 연방 및 주정부부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정보의 저장을 담당하는 기관은 이러한 결정내용을 공공기관이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는지를 통제하는 관할기관에 송부한다.

③정보의 개별 인출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책임은 정보의

수취인이 부담한다. 정보저장을 담당하는 기관은 정보인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보인출의 허용 여부를 심사한다. 정보저장을 담당하는 기관은 개인관련 정보의 전달이 적어도 적절한 표본조사를 통해 심사되고 그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담당기관은 10회의 인출 가운데 1회에 대해서는 최소한 인출시각, 인출되는 정보, 인출기관 표시 그리고 정보수취인의 기록표시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이렇게 문서화된 정보는 오로지 정보인출의 허용 여부에 대한 통제를 위해서만 이용할 수 있으며, 12개월 후에는 삭제하여야 한다.

제489조(저장된 정보의 정정, 삭제 및 차단) ①개인관련 정보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②개인관련 정보는 그 저장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개별사안에서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 정보에 대한 접근이 제483조, 제484조, 제485조의 각 경우의 목적에 비추어 필요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삭제하여야 한다. 또한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관련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1. 제483조에 따라 저장된 정보가 절차의 종결과 함께 제484조, 제485조의 규정에 따라 그 저장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484조에 따라 저장된 정보가 제4항에 의한 심사를 통해 그 정보에 대한 접근이 제484조에 규정된 목적에 비추어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하고 그 저장이 제485조에 따라 더 이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3. 제485조에 따라 저장된 정보가 더 이상 그 기록관리를 위해 저장할 필요가 없는 경우

③검사에 의하여 절차가 종결된 경우 또는 공소가 제기된 이후 법원에 의하여 절차가 종결된 경우는 절차의 종결로 간주한다. 형사처벌이나 그 밖의 제재가 부과된 경우, 그 집행의 종결이나 면제가 절차종결의 기준이 된다. 절차가 중지되고 그 중지가 다시 형사소추를 하는 것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효의 도래와 더불어 절차가 종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④정보의 저장을 담당하는 기관은 확정된 기간이 경과한 이후 제484조에 따라 저장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구체적인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행위 당시 만18세 이상인 피의자에 대해서는 10년
2. 청소년에 대해서는 5년
3. 무죄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불복할 수 없는 사유에 의해 공소가 개시되지 아니한 경우와 종국적으로 절차가 중단된 경우에는 3년
4. 제484조 제1항에 따라 저장된 자로서, 행위 시에 형사미성년자였던 경우에는 2년

⑤정보를 저장하는 기관은 제490조에 따른 설비명령에서 법규정보다 더 짧은 심사기간을 확정할 수 있다.

⑥추가적인 절차를 위하여 개인의 정보가 저장된 경우, 그 모든 기재내용과 관련하여 삭제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당해 정보를 삭제하지 아니한다. 제2항 제1문은 이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⑦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하는 대신 이를 차단한다.

1. 당사자들의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이 침해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
2. 정보가 진행 중인 연구에 필요한 경우 또는
3. 저장된 특별한 방식으로 인해 그 삭제가 불가능하거나 삭제에 과도한 비용이 소요될 때

개인관련 정보는 또한 그것이 오로지 정보의 보안과 정보보호 통제의 목적에 따라 저장된 때에는 이에 접근할 수 없도록 차단한다. 차단된 정보는 오로지 삭제를 저지하는 목적을 위해서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증거와 관련하여 현재의 곤궁한 상태를 제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차단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⑧저장을 담당하는 기관이 오류가 있거나 삭제 또는 차단되어야 할 개인관련 정보가 제공되었음을 확인한 경우, 당사자의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에 비추어 볼 때 필요하다면 그 정보수취인에게 정보의 정정, 삭제 또는 차단을 통지한다.

⑨기록보관법상의 특별규정이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하는 대신 국가기록보관소에 저장매체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90조(자동화된 데이터에 대한 설비명령) 저장을 담당하는 기관은 설비명령을 통해 자동화된 데이터 각각에 대하여 최소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정하여야 한다.

1. 데이터의 표식
2. 데이터저장의 법적 근거와 목적
3. 정보가 데이터로 처리된 대상인 인적 범위

4. 처리되어야 할 정보의 종류
5. 처리되어야 할 정보의 취득 및 교부
6. 데이터에서 처리되는 정보가 어떠한 절차에 따라 어떠한 수취인에게 전달되는가에 관련된 요건
7. 심사기간 및 차단기간

이는 일시적으로만 보관되고 입력 후 3개월 이내에 삭제되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91조(당사자에 대한 정보제공) ①본 법에 정보제공의 허용 또는 불허가 특별히 규정된 경우 이외에는 연방정보보호법 제19조에 따라 당사자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정보제공을 신청한 시점이 검사가 절차를 개시한지 6개월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절차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아니한다. 검사는 개별사안에서 수사상의 난점이나 수사범위로 인하여 비밀을 보장할 필요성이 존속하는 때에는 제2항의 기간을 24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그 밖의 기간 연장에 관해서는 고등검찰청장이, 연방검찰청 관할인 때에는 연방검찰청장이 결정한다. 제3문과 제4문에 따른 결정내용과 결정이유는 문서로 기록하여야 한다. 절차가 신청자에 대해 진행되는 것인가 여부와 관계없이 제2문 내지 제5문의 규정내용을 신청자에게 지적하여야 한다.

②공동으로 이용되는 데이터와 관련하여 당사자가 이를 저장한 기관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된 각 저장기관에게 정보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정보의 제공 여부에 관해서는 해당기관이 정보를 입력하였던 기관과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 3 장 개별 주를 포괄하는 검사의 소송등록부

제492조(소송등록부의 범위; 정보의 이용) ①중앙검찰청의 소송등록부는 연방사법부(등록청)가 담당한다.

②등록부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1. 피의자의 신상정보 및 필요한 경우 기타 신상파악에 적합한 표지
2. 관할기관 및 기록번호
3. 범죄행위의 구체적 표지, 특히 범행시간, 범행장소 및 유무형의 피해정도
4. 법률규정 제시를 전제로 한 행위의 법적 평가
5. 구체적 행위비난 및 해당 법률규정의 제시
6. 검사와 법원이 이행한 절차의 개시와 종결 및 해당 법률규정의 제시

이 정보는 형사절차를 위해서만 저장 및 변경할 수 있다.

③제2항 제2문에 기재된 목적에 해당하는 경우에 검찰은 등록할 정보를 등록청에 통지한다. 형사절차의 목적을 위한 경우에만 소송등록부상의 정보를 형사소추기관에 제공하는 것이 허용된다. 무기법 제5조 제5항 제1문 2호와 폭발물관련법 제8조a 제5항 제1문 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하며, 등록내용에 대한 정보제공은 그로 인해 조사의 목적이 침해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 개인관련 정보를 소송등록부에 등록하도록 전달한 검사의 동의에 의해 가능하다.

④연방헌법보호법 제18조 제3항의 기준에 따라 군사적 방어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및 연방정보기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과 관련하여 제2항 제1문 1호와 2호에 규정된 정보는 신청에 기하여 연방과 개별주의 헌법보호기관 및 군사방어청과 연방정보국에 대해서도 제공할 수 있다. 연방헌법보호법 제18조 제5항 제2문을 준용한다.

④a 정보전달 또는 정보신청이 어떠한 정보에 대한 것인지 등록청이 분명하게 구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청 대상인 개인에 대한 정보와 더불어 그와 유사한 개인의 정보내용들을 정보신청기관에게 함께 전달해주어야 한다. 이 경우 신청기관은 신원이 확인된 이후에는 대상자와 무관한 모든 정보를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신원 일치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제공된 모든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제494조 제4항에 따른 법령제정에서, 하나의 정보인출 근거에 따라 전달될 수 있는 정보기록의 수는 신상의 확인에 필요한 정도에 국한되어야 한다.

⑤정보전달의 허용 여부에 관한 책임은 수취인이 부담한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등록청이 정보전달의 허용 여부를 심사한다.

⑥정보는 제3항 제3문과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형사절차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제493조(자동화된 정보 인출절차) ①정보를 원거리로 전달하는 데에 장애가 있는 경우 또는 특별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인출절차 또는 자동화된 신청 및 정보제공절차의 방식에 따라서 전화나 팩시밀리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관계기관은 당시의 기술적인 조건에 적합한 방식에 따라 정보보호 및 정보의 안전성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특히 정보의 신뢰성과 보안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고, 일반인이 접근가능한 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기술적인 조건에 적합한 방식에 따라 보안차단절차를 이용하여야 한다.

②정보의 자동인출절차의 설비를 위한 확정과 관련해서는 연방정보보호법

제10조 제2항을 적용한다. 등록청은 상기의 확정을 정보보호를 위한 연방특별감사인에게 전달한다.

③개별적인 정보의 자동화 인출의 허용 여부에 대한 책임은 수취인이 부담한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등록청이 그 인출의 허용 여부에 대해 심사한다. 등록기관은 10회의 정보인출 가운데 1회에 대해서는 최소한 인출일시, 인출시각, 인출되는 정보, 인출기관 표시 그리고 정보수취인의 기록표시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이렇게 문서화된 정보는 오로지 정보인출의 허용 여부에 대한 통제를 위해서만 이용할 수 있으며, 6개월 후에는 삭제하여야 한다.

④제2항과 제3항은 자동화된 정보청구 및 정보전달절차에도 준용한다.

제494조(정보의 정정; 삭제; 수취인에 대한 통지; 설비명령) ①정보가 부정확한 경우에는 이를 정정해야 한다. 관할기관은 등록청에게 즉시 그 오류를 통지하여야 하며, 정보의 정확성과 업데이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②다음의 경우에는 정보를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1. 정보의 저장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2. 연방등록부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정보가 제공된 형사절차에서 연방중앙등록법 제20조에 따른 통지의무가 있는 법원의 재판이 있었거나 형사소추기관의 처분이 있었음이 판명된 경우

피고인에 대한 무죄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피고인에 대한 공판절차의 개시가 불복할 수 없는 이유에 의해 기각된 경우 또는 절차가 종국적으로 중지된 경우, 절차 종료 이후 2년이 경과하면 정보를 삭제하여야

하지만, 삭제기한이 경과하기 이전에 소송등록부에 기입하기 위한 추가적인 절차에 대해 정보가 통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모든 내용에 대해서 삭제요건이 존재하게 될 때까지 정보를 계속 저장한다. 검사는 등록청에 대하여 제2문에 따른 삭제요건의 발생 또는 삭제기한의 개시를 즉시 통지한다.

③제489조 제7, 8항이 준용된다.

④연방법무부는 연방상원이 동의하는 법규명령을 통해 특히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을 정한다.

1. 처리되어야 할 정보의 종류
2. 처리되어야 할 정보의 교부
3. 데이터에서 처리되는 정보가 어떠한 절차에 따라 어떠한 수취인에게 전달되는가에 관련된 요건
4. 자동화된 인출절차의 설비
5. 연방정보보호법 제9조에 따라 필요한 기술적, 조직적 조치

제495조(정보제공에 관한 결정) 연방정보보호법 제19조에 따라 소송등록부에 관련된 정보를 당사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해서는 제491조 제1항, 제2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한다. 정보제공에 대해서는 개인관련 정보를 소송등록부에 등록하도록 전달한 검사의 동의하에 등록청이 결정한다. 소송등록부에 관련된 정보가 공공기관에게 제공되어 당사자가 그 기관을 통해 해당 정보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정보의 제공 여부는 개인관련 정보를 소송등록부에 등록하도록 전달한 검사의 동의하에 당해 공공기관이 결정한다.

독일 형사소송법 원문

Strafprozeßordnung (StPO)

StPO

Ausfertigungsdatum: 12.09.1950

Stand: Neugefasst durch Bek. v. 7.4.1987 I 1074, 1319;
zuletzt geändert durch Art. 2 Abs. 30 G v. 22.12.2011 I 3044

Übersicht

Erstes Buch

Allgemeine Vorschriften

Erster Abschnitt
Sachliche Zuständigkeit der Gerichte §§ 1 bis 6a

Zweiter Abschnitt
Gerichtsstand §§ 7 bis 21

Dritter Abschnitt
Ausschließung und Ablehnung der Gerichtspersonen §§ 22 bis 32

Vierter Abschnitt
Gerichtliche Entscheidungen und Kommunikation zwischen den eteiligten §§ 33 bis 41a

Fünfter Abschnitt
Fristen und Wiedereinsetzung in den vorigen Stand §§ 42 bis 47

Sechster Abschnitt
Zeugen §§ 48 bis 71

Siebenter Abschnitt
Sachverständige und Augenschein §§ 72 bis 93

Achter Abschnitt
Beschlagnahme, Überwachung des Fernmeldeverkehrs, Rasterfahndung, Einsatz technischer Mittel, Einsatz Verdeckter Ermittler und Durchsuchung §§ 94 bis 111p

Neunter Abschnitt
Verhaftung und vorläufige Festnahme §§ 112 bis 130
9a. Abschnitt
Weitere Maßnahmen zur Sicherstellung der Strafverfolgung und Strafvollstreckung §§ 131 bis 132
9b. Abschnitt
Vorläufiges Berufsverbot § 132a
Zehnter Abschnitt
Vernehmung des Beschuldigten §§ 133 bis 136a
Elfter Abschnitt
Verteidigung §§ 137 bis 150

Zweites Buch
Verfahren im ersten Rechtszug
Erster Abschnitt
Öffentliche Klage §§ 151 bis 157
Zweiter Abschnitt
Vorbereitung der öffentlichen Klage §§ 158 bis 177
Dritter Abschnitt
(weggefallen) §§ 178 bis 197
Vierter Abschnitt
Entscheidung über die Eröffnung des Hauptverfahrens §§ 198 bis 211
Fünfter Abschnitt
Vorbereitung der Hauptverhandlung §§ 212 bis 255a
Sechster Abschnitt
Hauptverhandlung §§ 226 bis 275
Siebenter Abschnitt
Entscheidung über die im Urteil vorbehaltene oder die nachträgliche Anordnung der Sicherungsverwahrung § 275a

Achter Abschnitt
Verfahren gegen Abwesende §§ 276 bis 295

Drittes Buch
Rechtsmittel
Erster Abschnitt
Allgemeine Vorschriften §§ 296 bis 303
Zweiter Abschnitt
Beschwerde §§ 304 bis 311a
Dritter Abschnitt
Berufung §§ 312 bis 332
Vierter Abschnitt
Revision §§ 333 bis 358

Viertes Buch
Wiederaufnahme eines durch rechtskräftiges Urteilabgeschlossenen Verfahrens
§§ 359 bis 373a
Fünftes Buch
Beteiligung des Verletzten am Verfahren
Erster Abschnitt
Privatklage §§ 374 bis 394
Zweiter Abschnitt
Nebenklage §§ 395 bis 402
Dritter Abschnitt
Entschädigung des Verletzten §§ 403 bis 406c
Vierter Abschnitt
Sonstige Befugnisse des Verletzten §§ 406d bis 406h

Sechstes Buch

Besondere Arten des Verfahrens

Erster Abschnitt

Verfahren bei Strafbefehlen §§ 407 bis 412

Zweiter Abschnitt

Sicherungsverfahren §§ 413 bis 429

Dritter Abschnitt

Verfahren bei Einziehungen und Vermögensbeschlagnahmen §§ 430 bis 443

Vierter Abschnitt

Verfahren bei Festsetzung von Geldbuße gegen juristische Personen und Personenvereinigungen §§ 444 bis 448

Siebentes Buch

Strafvollstreckung und Kosten des Verfahrens

Erster Abschnitt

Strafvollstreckung §§ 449 bis 463d

Zweiter Abschnitt

Kosten des Verfahrens §§ 464 bis 473a

Achtes Buch

Erteilung von Auskünften und Akteneinsicht, sonstige Verwendung von Informationen für verfahrensübergreifende Zwecke, Dateiregelungen, länderübergreifendes staatsanwaltschaftliches Verfahrensregister §§ 474 bis 495

Erster Abschnitt

Erteilung von Auskünften und Akteneinsicht, sonstige Verwendung von Informationen für verfahrensübergreifende Zwecke §§ 474 bis 482

Zweiter Abschnitt

Dateiregelungen §§ 483 bis 491

Dritter Abschnitt

Länderübergreifendes staatsanwaltliches Verfahrensregister §§ 492 bis 495

Erstes Buch
Allgemeine Vorschriften

Erster Abschnitt
Sachliche Zuständigkeit der Gerichte

§ 1

Die sachliche Zuständigkeit der Gerichte wird durch das Gesetz über die Gerichtsverfassung bestimmt.

§ 2

(1) Zusammenhängende Strafsachen, die einzeln zur Zuständigkeit von Gerichten verschiedener Ordnung gehören würden, können verbunden bei dem Gericht anhängig gemacht werden, dem die höhere Zuständigkeit beiwohnt. Zusammenhängende Strafsachen, von denen einzelne zur Zuständigkeit besonderer Strafkammern nach § 74 Abs. 2 sowie den §§ 74a und 74c des Gerichtsverfassungsgesetzes gehören würden, können verbunden bei der Strafkammer anhängig gemacht werden, der nach § 74e des Gerichtsverfassungsgesetzes der Vorrang zukommt.

(2) Aus Gründen der Zweckmäßigkeit kann durch Beschluß dieses Gerichts die Trennung der verbundenen Strafsachen angeordnet werden.

§ 3

Ein Zusammenhang ist vorhanden, wenn eine Person mehrerer Straftaten beschuldigt wird oder wenn bei einer Tat mehrere Personen als Täter, Teilnehmer oder der Begünstigung, Strafvereitelung oder Hehlerei beschuldigt werden.

§ 4

(1) Eine Verbindung zusammenhängender oder eine Trennung verbundener Strafsachen kann auch nach Eröffnung des Hauptverfahrens auf Antrag der Staatsanwaltschaft oder des Angeklagten oder von Amts wegen durch gerichtlichen Beschluß angeordnet werden.

(2) Zuständig für den Beschluß ist das Gericht höherer Ordnung, wenn die übrigen Gerichte zu seinem Bezirk gehören. Fehlt ein solches Gericht, so entscheidet das gemeinschaftliche obere Gericht.

§ 5

Für die Dauer der Verbindung ist der Straffall, der zur Zuständigkeit des Gerichts höherer Ordnung gehört, für das Verfahren maßgebend.

§ 6

Das Gericht hat seine sachliche Zuständigkeit in jeder Lage des Verfahrens von Amts wegen zu prüfen.

§ 6a

Die Zuständigkeit besonderer Strafkammern nach den Vorschriften des Gerichtsverfassungsgesetzes (§ 74 Abs. 2, §§ 74a, 74c des Gerichtsverfassungsgesetzes) prüft das Gericht bis zur Eröffnung des Hauptverfahrens von Amts wegen. Danach darf es seine Unzuständigkeit nur auf Einwand des Angeklagten beachten. Der Angeklagte kann den Einwand nur bis zum Beginn seiner Vernehmung zur Sache in der Hauptverhandlung geltend machen.

Zweiter Abschnitt, Gerichtsstand

§ 7

(1) Der Gerichtsstand ist bei dem Gericht begründet, in dessen Bezirk die Straftat begangen ist.

(2) Wird die Straftat durch den Inhalt einer im Geltungsbereich dieses Bundesgesetzes erschienenen Druckschrift verwirklicht, so ist als das nach Absatz 1 zuständige Gericht nur das Gericht anzusehen, in dessen Bezirk die Druckschrift erschienen ist. Jedoch ist in den Fällen der Beleidigung, sofern die Verfolgung im Wege der Privatklage stattfindet, auch das Gericht, in dessen Bezirk die Druckschrift verbreitet worden ist, zuständig, wenn in diesem Bezirk die beleidigte Person ihren Wohnsitz oder gewöhnlichen Aufenthalt hat.

§ 8

(1) Der Gerichtsstand ist auch bei dem Gericht begründet, in dessen Bezirk der Angeschuldigte zur Zeit der Erhebung der Klage seinen Wohnsitz hat.

(2) Hat der Angeschuldigte keinen Wohnsitz im Geltungsbereich dieses Bundesgesetzes, so wird der Gerichtsstand auch durch den gewöhnlichen Aufenthaltsort und, wenn ein solcher nicht bekannt ist, durch den letzten Wohnsitz bestimmt.

§ 9

Der Gerichtsstand ist auch bei dem Gericht begründet, in dessen Bezirk der Beschuldigte ergriffen worden ist.

§ 10

(1) Ist die Straftat auf einem Schiff, das berechtigt ist, die Bundesflagge zu führen, außerhalb des Geltungsbereichs dieses Gesetzes begangen, so ist das Gericht zuständig, in dessen Bezirk der Heimathafen oder der Hafen im Geltungsbereich dieses Gesetzes liegt, den das Schiff nach der Tat zuerst erreicht.

(2) Absatz 1 gilt entsprechend für Luftfahrzeuge, die berechtigt sind, das Staatszugehörigkeitszei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zu führen.

§ 10a

Ist für eine Straftat, die außerhalb des Geltungsbereichs dieses Gesetzes im Bereich des Meeres begangen wird, ein Gerichtsstand nicht begründet, so ist Hamburg Gerichtsstand; zuständiges Amtsgericht ist das Amtsgericht Hamburg.

§ 11

(1) Deutsche, die das Recht der Exterritorialität genießen, sowie die im Ausland angestellten Beamten des Bundes oder eines deutschen Landes behalten hinsichtlich des Gerichtsstandes den Wohnsitz, den sie im Inland hatten. Wenn sie einen solchen Wohnsitz nicht hatten, so gilt der Sitz der Bundesregierung als ihr Wohnsitz.

(2) Auf Wahlkonsuln sind diese Vorschriften nicht anzuwenden.

§ 12

(1) Unter mehreren nach den Vorschriften der §§ 7 bis 11 zuständigen Gerichten gebührt dem der Vorzug, das die Untersuchung zuerst eröffnet hat.

(2) Jedoch kann die Untersuchung und Entscheidung einem anderen der zuständigen Gerichte durch das gemeinschaftliche obere Gericht übertragen werden.

§ 13

(1) Für zusammenhängende Strafsachen, die einzeln nach den Vorschriften der §§ 7 bis 11 zur Zuständigkeit verschiedener Gerichte gehören würden, ist ein Gerichtsstand bei jedem Gericht begründet, das für eine der Strafsachen zuständig ist.

(2) Sind mehrere zusammenhängende Strafsachen bei verschiedenen Gerichten anhängig gemacht worden, so können sie sämtlich oder zum Teil durch eine den Anträgen der Staatsanwaltschaft entsprechende Vereinbarung dieser Gerichte bei einem unter ihnen verbunden werden. Kommt eine solche Vereinbarung nicht zustande, so entscheidet, wenn die Staatsanwaltschaft oder ein Angeschuldigter hierauf anträgt, das gemeinschaftliche obere Gericht darüber, ob und bei welchem Gericht die Verbindung einzutreten hat.

(3) In gleicher Weise kann die Verbindung wieder aufgehoben werden.

§ 13a

Fehlt es im Geltungsbereich dieses Bundesgesetzes an einem zuständigen Gericht oder ist dieses nicht ermittelt, so bestimmt der Bundesgerichtshof das zuständige Gericht.

§ 14

Besteht zwischen mehreren Gerichten Streit über die Zuständigkeit, so bestimmt das gemeinschaftliche obere Gericht das Gericht, das sich der Untersuchung und Entscheidung zu unterziehen hat.

§ 15

Ist das an sich zuständige Gericht in einem einzelnen Falle an der Ausübung des Richteramtes rechtlich oder tatsächlich verhindert oder ist von der Verhandlung vor diesem Gericht eine Gefährdung der öffentlichen Sicherheit zu besorgen, so hat das zunächst obere Gericht die Untersuchung und Entscheidung dem gleichstehenden Gericht eines anderen Bezirks zu übertragen.

§ 16

Das Gericht prüft seine örtliche Zuständigkeit bis zur Eröffnung des Hauptverfahrens von Amts wegen. Danach darf es seine Unzuständigkeit nur auf Einwand des Angeklagten aussprechen. Der Angeklagte kann den Einwand nur bis zum Beginn seiner Vernehmung zur Sache in der Hauptverhandlung geltend machen.

§§ 17 und 18 (weggefallen)

§ 19

Haben mehrere Gerichte, von denen eines das zuständige ist, durch Entscheidungen, die nicht mehr anfechtbar sind, ihre Unzuständigkeit ausgesprochen, so bezeichnet das gemeinschaftliche obere Gericht das zuständige Gericht.

§ 20

Die einzelnen Untersuchungshandlungen eines unzuständigen Gerichts sind nicht schon dieser Unzuständigkeit wegen ungültig.

§ 21

Ein unzuständiges Gericht hat sich den innerhalb seines Bezirks vorzunehmenden Untersuchungshandlungen zu unterziehen, bei denen Gefahr im Verzug ist.

Dritter Abschnitt
Ausschließung und Ablehnung der Gerichtspersonen

§ 22

Ein Richter ist von der Ausübung des Richteramtes kraft Gesetzes ausgeschlossen,

1. wenn er selbst durch die Straftat verletzt ist;
2. wenn er Ehegatte, Lebenspartner, Vormund oder Betreuer des Beschuldigten oder des Verletzten ist oder gewesen ist;
3. wenn er mit dem Beschuldigten oder mit dem Verletzten in gerader Linie verwandt oder verschwägert, in der Seitenlinie bis zum dritten Grad verwandt oder bis zum zweiten Grad verschwägert ist oder war;
4. wenn er in der Sache als Beamter der Staatsanwaltschaft, als Polizeibeamter, als Anwalt des Verletzten oder als Verteidiger tätig gewesen ist;
5. wenn er in der Sache als Zeuge oder Sachverständiger vernommen ist.

§ 23

(1) Ein Richter, der bei einer durch ein Rechtsmittel angefochtenen Entscheidung mitgewirkt hat, ist von der Mitwirkung bei der Entscheidung in einem höheren Rechtszug kraft Gesetzes ausgeschlossen.

(2) Ein Richter, der bei einer durch einen Antrag auf Wiederaufnahme des Verfahrens angefochtenen Entscheidung mitgewirkt hat, ist von der Mitwirkung bei Entscheidungen im Wiederaufnahmeverfahren kraft Gesetzes ausgeschlossen. Ist die angefochtene Entscheidung in einem höheren Rechtszug ergangen, so ist auch der Richter ausgeschlossen, der an der ihr zugrunde liegenden Entscheidung in einem unteren Rechtszug mitgewirkt hat. Die Sätze 1 und 2 gelten entsprechend für die Mitwirkung bei Entscheidungen zur Vorbereitung eines Wiederaufnahmeverfahrens.

§ 24

(1) Ein Richter kann sowohl in den Fällen, in denen er von der Ausübung des Richteramtes

kraft Gesetzes ausgeschlossen ist, als auch wegen Besorgnis der Befangenheit abgelehnt werden.

(2) Wegen Besorgnis der Befangenheit findet die Ablehnung statt, wenn ein Grund vorliegt, der geeignet ist, Mißtrauen gegen die Unparteilichkeit eines Richters zu rechtfertigen.

(3) Das Ablehnungsrecht steht der Staatsanwaltschaft, dem Privatkläger und dem Beschuldigten zu. Den zur Ablehnung Berechtigten sind auf Verlangen die zur Mitwirkung bei der Entscheidung berufenen Gerichtspersonen namhaft zu machen.

§ 25

(1) Die Ablehnung eines erkennenden Richters wegen Besorgnis der Befangenheit ist bis zum Beginn der Vernehmung des ersten Angeklagten über seine persönlichen Verhältnisse, in der Hauptverhandlung über die Berufung oder die Revision bis zum Beginn des Vortrags des Berichterstatters, zulässig. Alle Ablehnungsgründe sind gleichzeitig vorzubringen.

(2) Nach diesem Zeitpunkt darf ein Richter nur abgelehnt werden, wenn

1. die Umstände, auf welche die Ablehnung gestützt wird, erst später eingetreten oder dem zur Ablehnung Berechtigten erst später bekanntgeworden sind und
2. die Ablehnung unverzüglich geltend gemacht wird.

Nach dem letzten Wort des Angeklagten ist die Ablehnung nicht mehr zulässig.

§ 26

(1) Das Ablehnungsgesuch ist bei dem Gericht, dem der Richter angehört, anzubringen; es kann vor der Geschäftsstelle zu Protokoll erklärt werden. § 257a findet keine Anwendung.

(2) Der Ablehnungsgrund und in den Fällen des § 25 Abs. 2 die Voraussetzungen des rechtzeitigen Vorbringens sind glaubhaft zu machen. Der Eid ist als Mittel der Glaubhaftmachung ausgeschlossen. Zur Glaubhaftmachung kann auf das Zeugnis des abgelehnten Richters Bezug genommen werden.

(3) Der abgelehnte Richter hat sich über den Ablehnungsgrund dienstlich zu äußern.

§ 26a

(1) Das Gericht verwirft die Ablehnung eines Richters als unzulässig, wenn
   1. die Ablehnung verspätet ist,
   2. ein Grund zur Ablehnung oder ein Mittel zur Glaubhaftmachung nicht angegeben wird oder
   3. durch die Ablehnung offensichtlich das Verfahren nur verschleppt oder nur verfahrensfremde Zwecke verfolgt werden sollen.

(2) Das Gericht entscheidet über die Verwerfung nach Absatz 1, ohne daß der abgelehnte Richter ausscheidet. Im Falle des Absatzes 1 Nr. 3 bedarf es eines einstimmigen Beschlusses und der Angabe der Umstände, welche den Verwerfungsgrund ergeben. Wird ein beauftragter oder ein ersuchter Richter, ein Richter im vorbereitenden Verfahren oder ein Strafrichter abgelehnt, so entscheidet er selbst darüber, ob die Ablehnung als unzulässig zu verwerfen ist.

§ 27

(1) Wird die Ablehnung nicht als unzulässig verworfen, so entscheidet über das Ablehnungsgesuch das Gericht, dem der Abgelehnte angehört, ohne dessen Mitwirkung.

(2) Wird ein richterliches Mitglied der erkennenden Strafkammer abgelehnt, so entscheidet die Strafkammer in der für Entscheidungen außerhalb der Hauptverhandlung vorgeschriebenen Besetzung.

(3) Wird ein Richter beim Amtsgericht abgelehnt, so entscheidet ein anderer Richter dieses Gerichts. Einer Entscheidung bedarf es nicht, wenn der Abgelehnte das Ablehnungsgesuch für begründet hält.

(4) Wird das zur Entscheidung berufene Gericht durch Ausscheiden des abgelehnten Mitglieds beschlußunfähig, so entscheidet das zunächst obere Gericht.

§ 28

(1) Der Beschluß, durch den die Ablehnung für begründet erklärt wird, ist nicht anfechtbar.

(2) Gegen den Beschluß, durch den die Ablehnung als unzulässig verworfen oder als unbegründet zurückgewiesen wird, ist sofortige Beschwerde zulässig. Betrifft die Entscheidung einen erkennenden Richter, so kann sie nur zusammen mit dem Urteil angefochten werden.

§ 29

(1) Ein abgelehnter Richter hat vor Erledigung des Ablehnungsgesuchs nur solche Handlungen vorzunehmen, die keinen Aufschub gestatten.

(2) Wird ein Richter während der Hauptverhandlung abgelehnt und würde die Entscheidung über die Ablehnung(§§ 26a, 27) eine Unterbrechung der Hauptverhandlung erfordern, so kann diese so lange fortgesetzt werden, bis eine Entscheidung über die Ablehnung ohne Verzögerung der Hauptverhandlung möglich ist; über die Ablehnung ist spätestens bis zum Beginn des übernächsten Verhandlungstages und stets vor Beginn der Schlußvorträge zu entscheiden. Wird die Ablehnung für begründet erklärt und muß die Hauptverhandlung nicht deshalb ausgesetzt werden, so ist ihr nach der Anbringung des Ablehnungsgesuchs liegender Teil zu wiederholen; dies gilt nicht für solche Handlungen, die keinen Aufschub gestatten. Nach Anbringung des Ablehnungsgesuchs dürfen Entscheidungen, die auch außerhalb der Hauptverhandlung ergehen können, unter Mitwirkung des Abgelehnten nur getroffen werden, wenn sie keinen Aufschub gestatten.

§ 30

Das für die Erledigung eines Ablehnungsgesuchs zuständige Gericht hat auch dann zu entscheiden, wenn ein solches Gesuch nicht angebracht ist, ein Richter aber von einem Verhältnis Anzeige macht, das seine Ablehnung rechtfertigen könnte, oder wenn aus anderer Veranlassung Zweifel darüber entstehen, ob ein Richter kraft Gesetzes ausgeschlossen ist.

§ 31

(1) Die Vorschriften dieses Abschnitts gelten für Schöffen sowie für Urkundsbeamte der Geschäftsstelle und andere als Protokollführer zugezogene Personen entsprechend.

(2) Die Entscheidung trifft der Vorsitzende. Bei der großen Strafkammer und beim Schwurgericht entscheiden die richterlichen Mitglieder. Ist der Protokollführer einem Richter beigegeben, so entscheidet dieser über die Ablehnung oder Ausschließung.

§ 32 (weggefallen)

Vierter Abschnitt
Gerichtliche Entscheidungen und Kommunikation zwischen den Beteiligten

§ 33

(1) Eine Entscheidung des Gerichts, die im Laufe einer Hauptverhandlung ergeht, wird nach Anhörung der Beteiligten erlassen.

(2) Eine Entscheidung des Gerichts, die außerhalb einer Hauptverhandlung ergeht, wird nach schriftlicher oder mündlicher Erklärung der Staatsanwaltschaft erlassen.

(3) Bei einer in Absatz 2 bezeichneten Entscheidung ist ein anderer Beteiligter zu hören, bevor zu seinem Nachteil Tatsachen oder Beweisergebnisse, zu denen er noch nicht gehört worden ist, verwertet werden.

(4) Bei Anordnung der Untersuchungshaft, der Beschlagnahme oder anderer Maßnahmen ist Absatz 3 nicht anzuwenden, wenn die vorherige Anhörung den Zweck der Anordnung gefährden würde. Vorschriften, welche die Anhörung der Beteiligten besonders regeln, werden durch Absatz 3 nicht berührt.

§ 33a

Hat das Gericht in einem Beschluss den Anspruch eines Beteiligten auf rechtliches Gehör in entscheidungserheblicher Weise verletzt und steht ihm gegen den Beschluss keine Beschwerde und kein anderer Rechtsbehelf zu, versetzt es, sofern der Beteiligte dadurch noch beschwert ist, von Amts wegen oder auf Antrag insoweit das Verfahren durch Beschluss in die Lage zurück, die vor dem Erlass der Entscheidung bestand. § 47 gilt entsprechend.

§ 34

Die durch ein Rechtsmittel anfechtbaren Entscheidungen sowie die, durch welche ein Antrag abgelehnt wird, sind mit Gründen zu versehen.

§ 34a

Führt nach rechtzeitiger Einlegung eines Rechtsmittels ein Beschluß unmittelbar die Rechtskraft der angefochtenen Entscheidung herbei, so gilt die Rechtskraft als mit Ablauf des Tages der Beschlußfassung eingetreten.

§ 35

(1) Entscheidungen, die in Anwesenheit der davon betroffenen Person ergehen, werden ihr durch Verkündung bekanntgemacht. Auf Verlangen ist ihr eine Abschrift zu erteilen.
(2) Andere Entscheidungen werden durch Zustellung bekanntgemacht. Wird durch die Bekanntmachung der Entscheidung keine Frist in Lauf gesetzt, so genügt formlose Mitteilung.
(3) Dem nicht auf freiem Fuß Befindlichen ist das zugestellte Schriftstück auf Verlangen vorzulesen.

§ 35a

Bei der Bekanntmachung einer Entscheidung, die durch ein befristetes Rechtsmittel angefochten werden kann, ist der Betroffene über die Möglichkeiten der Anfechtung und die dafür vorgeschriebenen Fristen und Formen zu belehren. Ist gegen ein Urteil Berufung zulässig, so ist der Angeklagte auch über die Rechtsfolgen des § 40 Abs. 3 und der §§ 329, 330 zu belehren. Ist einem Urteil eine Verständigung (§ 257c) vorausgegangen, ist der Betroffene auch darüber zu belehren, dass er in jedem Fall frei in seiner Entscheidung ist, ein Rechtsmittel einzulegen.

§ 36

(1) Die Zustellung von Entscheidungen ordnet der Vorsitzende an. Die Geschäftsstelle sorgt

dafür, daß die Zustellung bewirkt wird.

(2) Entscheidungen, die der Vollstreckung bedürfen, sind der Staatsanwaltschaft zu übergeben, die das Erforderliche veranlaßt. Dies gilt nicht für Entscheidungen, welche die Ordnung in den Sitzungen betreffen.

§ 37

(1) Für das Verfahren bei Zustellungen gelten die Vorschriften der Zivilprozeßordnung entsprechend.

(2) Wird die für einen Beteiligten bestimmte Zustellung an mehrere Empfangsberechtigte bewirkt, so richtet sich die Berechnung einer Frist nach der zuletzt bewirkten Zustellung.

§ 38

Die bei dem Strafverfahren beteiligten Personen, denen die Befugnis beigelegt ist, Zeugen und Sachverständige unmittelbar zu laden, haben mit der Zustellung der Ladung den Gerichtsvollzieher zu beauftragen.

§ 39 (weggefallen)

§ 40

(1) Kann eine Zustellung an einen Beschuldigten, dem eine Ladung zur Hauptverhandlung noch nicht zugestellt war, nicht in der vorgeschriebenen Weise im Inland bewirkt werden und erscheint die Befolgung der für Zustellungen im Ausland bestehenden Vorschriften unausführbar oder voraussichtlich erfolglos, so ist die öffentliche Zustellung zulässig. Die Zustellung gilt als erfolgt, wenn seit dem Aushang der Benachrichtigung zwei Wochen vergangen sind.

(2) War die Ladung zur Hauptverhandlung dem Angeklagten schon vorher zugestellt, dann ist die öffentliche Zustellung an ihn zulässig, wenn sie nicht in der vorgeschriebenen Weise im Inland bewirkt werden kann.

(3) Die öffentliche Zustellung ist im Verfahren über eine vom Angeklagten eingelegte

Berufung bereits zulässig, wenn eine Zustellung nicht unter einer Anschrift möglich ist, unter der letztmals zugestellt wurde oder die der Angeklagte zuletzt angegeben hat.

§ 41

Zustellungen an die Staatsanwaltschaft erfolgen durch Vorlegung der Urschrift des zuzustellenden Schriftstücks. Wenn mit der Zustellung der Lauf einer Frist beginnt, so ist der Tag der Vorlegung von der Staatsanwaltschaft auf der Urschrift zu vermerken.

§ 41a

(1) An das Gericht oder die Staatsanwaltschaft gerichtete Erklärungen, Anträge oder deren Begründung, die nach diesem Gesetz ausdrücklich schriftlich abzufassen oder zu unterzeichnen sind, können als elektronisches Dokument eingereicht werden, wenn dieses mit einer qualifizierten elektronischen Signatur nach dem Signaturgesetz versehen und für die Bearbeitung durch das Gericht oder die Staatsanwaltschaft geeignet ist. In der Rechtsverordnung nach Absatz 2 kann neben der qualifizierten elektronischen Signatur auch ein anderes sicheres Verfahren zugelassen werden, das die Authentizität und die Integrität des übermittelten elektronischen Dokuments sicherstellt. Ein elektronisches Dokument ist eingegangen, sobald die für den Empfang bestimmte Einrichtung des Gerichts oder der Staatsanwaltschaft es aufgezeichnet hat. Ist ein übermitteltes elektronisches Dokument zur Bearbeitung nicht geeignet, ist dies dem Absender unter Angabe der geltenden technischen Rahmenbedingungen unverzüglich mitzuteilen. Von dem elektronischen Dokument ist unverzüglich ein Aktenausdruck zu fertigen.

(2) Die Bundesregierung und die Landesregierungen bestimmen für ihren Bereich durch Rechtsverordnung den Zeitpunkt, von dem an elektronische Dokumente bei den Gerichten und Staatsanwaltschaften eingereicht werden können, sowie die für die Bearbeitung der Dokumente geeignete Form. Die Landesregierungen können die Ermächtigung durch Rechtsverordnung auf die Landesjustizverwaltungen übertragen. Die Zulassung der elektronischen Form kann auf einzelne Gerichte oder Staatsanwaltschaften oder Verfahren beschränkt werden.

Fünfter Abschnitt
Fristen und Wiedereinsetzung in den vorigen Stand

§ 42

Bei der Berechnung einer Frist, die nach Tagen bestimmt ist, wird der Tag nicht mitgerechnet, auf den der Zeitpunkt oder das Ereignis fällt, nach dem der Anfang der Frist sich richten soll.

§ 43

(1) Eine Frist, die nach Wochen oder Monaten bestimmt ist, endet mit Ablauf des Tages der letzten Woche oder des letzten Monats, der durch seine Benennung oder Zahl dem Tag entspricht, an dem die Frist begonnen hat; fehlt dieser Tag in dem letzten Monat, so endet die Frist mit dem Ablauf des letzten Tages dieses Monats.

(2) Fällt das Ende einer Frist auf einen Sonntag, einen allgemeinen Feiertag oder einen Sonnabend, so endet die Frist mit Ablauf des nächsten Werktages.

§ 44

War jemand ohne Verschulden verhindert, eine Frist einzuhalten, so ist ihm auf Antrag Wiedereinsetzung in den vorigen Stand zu gewähren. Die Versäumung einer Rechtsmittelfrist ist als unverschuldet anzusehen, wenn die Belehrung nach den § 35a Satz 1 und 2, § 319 Abs. 2 Satz 3 oder nach § 346 Abs. 2 Satz 3 unterblieben ist.

§ 45

(1) Der Antrag auf Wiedereinsetzung in den vorigen Stand ist binnen einer Woche nach Wegfall des Hindernisses bei dem Gericht zu stellen, bei dem die Frist wahrzunehmen gewesen wäre. Zur Wahrung der Frist genügt es, wenn der Antrag rechtzeitig bei dem Gericht gestellt wird, das über den Antrag entscheidet.

(2) Die Tatsachen zur Begründung des Antrags sind bei der Antragstellung oder im Verfahren über den Antrag glaubhaft zu machen. Innerhalb der Antragsfrist ist die versäumte Handlung nachzuholen. Ist dies geschehen, so kann Wiedereinsetzung auch ohne Antrag gewährt werden.

§ 46

(1) Über den Antrag entscheidet das Gericht, das bei rechtzeitiger Handlung zur Entscheidung in der Sache selbst berufen gewesen wäre.

(2) Die dem Antrag stattgebende Entscheidung unterliegt keiner Anfechtung.

(3) Gegen die den Antrag verwerfende Entscheidung ist sofortige Beschwerde zulässig.

§ 47

(1) Durch den Antrag auf Wiedereinsetzung in den vorigen Stand wird die Vollstreckung einer gerichtlichen Entscheidung nicht gehemmt.

(2) Das Gericht kann jedoch einen Aufschub der Vollstreckung anordnen.

(3) Durchbricht die Wiedereinsetzung die Rechtskraft einer gerichtlichen Entscheidung, werden Haft- und Unterbringungsbefehle sowie sonstige Anordnungen, die zum Zeitpunkt des Eintritts der Rechtskraft bestanden haben, wieder wirksam. Bei einem Haft- oder Unterbringungsbefehl ordnet das die Wiedereinsetzung gewährende Gericht dessen Aufhebung an, wenn sich ohne weiteres ergibt, dass dessen Voraussetzungen nicht mehr vorliegen. Anderenfalls hat das nach § 126 Abs. 2 zuständige Gericht unverzüglich eine Haftprüfung durchzuführen.

Sechster Abschnitt
Zeugen

§ 48

(1) Zeugen sind verpflichtet, zu dem zu ihrer Vernehmung bestimmten Termin vor dem Richter zu erscheinen. Sie haben die Pflicht auszusagen, wenn keine im Gesetz zugelassene Ausnahme vorliegt.

(2) Die Ladung der Zeugen geschieht unter Hinweis auf verfahrensrechtliche Bestimmungen, die dem Interesse des Zeugen dienen, auf vorhandene Möglichkeiten der Zeugenbetreuung und auf die gesetzlichen Folgen des Ausbleibens.

§ 49

Der Bundespräsident ist in seiner Wohnung zu vernehmen. Zur Hauptverhandlung wird er nicht geladen. Das Protokoll über seine gerichtliche Vernehmung ist in der Hauptverhandlung zu verlesen.

§ 50

(1) Die Mitglieder des Bundestages, des Bundesrates, eines Landtages oder einer zweiten Kammer sind während ihres Aufenthaltes am Sitz der Versammlung dort zu vernehmen.

(2) Die Mitglieder der Bundesregierung oder einer Landesregierung sind an ihrem Amtssitz oder, wenn sie sich außerhalb ihres Amtssitzes aufhalten, an ihrem Aufenthaltsort zu vernehmen.

(3) Zu einer Abweichung von den vorstehenden Vorschriften bedarf es für die Mitglieder eines in Absatz 1 genannten Organs der Genehmigung dieses Organs, für die Mitglieder der Bundesregierung der Genehmigung der Bundesregierung, für die Mitglieder einer Landesregierung der Genehmigung der Landesregierung.

(4) Die Mitglieder der in Absatz 1 genannten Organe der Gesetzgebung und die Mitglieder der Bundesregierung oder einer Landesregierung werden, wenn sie außerhalb der Hauptverhandlung vernommen worden sind, zu dieser nicht geladen. Das Protokoll über ihre richterliche Vernehmung ist in der Hauptverhandlung zu verlesen.

§ 51

(1) Einem ordnungsgemäß geladenen Zeugen, der nicht erscheint, werden die durch das Ausbleiben verursachten Kosten auferlegt. Zugleich wird gegen ihn ein Ordnungsgeld und für den Fall, daß dieses nicht beigetrieben werden kann, Ordnungshaft festgesetzt. Auch ist die zwangsweise Vorführung des Zeugen zulässig; § 135 gilt entsprechend. Im Falle wiederholten Ausbleibens kann das Ordnungsmittel noch einmal festgesetzt werden.

(2) Die Auferlegung der Kosten und die Festsetzung eines Ordnungsmittels unterbleiben, wenn das Ausbleiben des Zeugen rechtzeitig genügend entschuldigt wird. Erfolgt die Entschuldigung nach Satz 1 nicht rechtzeitig, so unterbleibt die Auferlegung der Kosten

und die Festsetzung eines Ordnungsmittels nur dann, wenn glaubhaft gemacht wird, daß den Zeugen an der Verspätung der Entschuldigung kein Verschulden trifft. Wird der Zeuge nachträglich genügend entschuldigt, so werden die getroffenen Anordnungen unter den Voraussetzungen des Satzes 2 aufgehoben.

(3) Die Befugnis zu diesen Maßregeln steht auch dem Richter im Vorverfahren sowie dem beauftragten und ersuchten Richter zu.

§ 52

(1) Zur Verweigerung des Zeugnisses sind berechtigt

1. der Verlobte des Beschuldigten oder die Person, mit der der Beschuldigte ein Versprechen eingegangen ist, eine Lebenspartnerschaft zu begründen;
2. der Ehegatte des Beschuldigten, auch wenn die Ehe nicht mehr besteht;
2a. der Lebenspartner des Beschuldigten, auch wenn die Lebenspartnerschaft nicht mehr besteht;
3. wer mit dem Beschuldigten in gerader Linie verwandt oder verschwägert, in der Seitenlinie bis zum dritten Grad verwandt oder bis zum zweiten Grad verschwägert ist oder war.

(2) Haben Minderjährige wegen mangelnder Verstandesreife oder haben Minderjährige oder Betreute wegen einer psychischen Krankheit oder einer geistigen oder seelischen Behinderung von der Bedeutung des Zeugnisverweigerungsrechts keine genügende Vorstellung, so dürfen sie nur vernommen werden, wenn sie zur Aussage bereit sind und auch ihr gesetzlicher Vertreter der Vernehmung zustimmt. Ist der gesetzliche Vertreter selbst Beschuldigter, so kann er über die Ausübung des Zeugnisverweigerungsrechts nicht entscheiden; das gleiche gilt für den nicht beschuldigten Elternteil, wenn die gesetzliche Vertretung beiden Eltern zusteht.

(3) Die zur Verweigerung des Zeugnisses berechtigten Personen, in den Fällen des Absatzes 2 auch deren zur Entscheidung über die Ausübung des Zeugnisverweigerungsrechts befugte Vertreter, sind vor jeder Vernehmung über ihr Recht zu belehren. Sie können den Verzicht auf dieses Recht auch während der Vernehmung widerrufen.

§ 53

(1) Zur Verweigerung des Zeugnisses sind ferner berechtigt

1. Geistliche über das, was ihnen in ihrer Eigenschaft als Seelsorger anvertraut worden oder bekanntgeworden ist;
2. Verteidiger des Beschuldigten über das, was ihnen in dieser Eigenschaft anvertraut worden oder bekanntgeworden ist;
3. Rechtsanwälte, Patentanwälte, Notare, Wirtschaftsprüfer, vereidigte Buchprüfer, Steuerberater und Steuerbevollmächtigte, Ärzte, Zahnärzte, Psychologische Psychotherapeuten, Kinder- und Jugendlichenpsychotherapeuten, Apotheker und Hebammen über das, was ihnen in dieser Eigenschaft anvertraut worden oder bekanntgeworden ist, Rechtsanwälten stehen dabei sonstige Mitglieder einer Rechtsanwaltskammer gleich;

3a. Mitglieder oder Beauftragte einer anerkannten Beratungsstelle nach den §§ 3 und 8 des Schwangerschaftskonfliktgesetzes über das, was ihnen in dieser Eigenschaft anvertraut worden oder bekanntgeworden ist;

3b. Berater für Fragen der Betäubungsmittelabhängigkeit in einer Beratungsstelle, die eine Behörde oder eine Körperschaft, Anstalt oder Stiftung des öffentlichen Rechts anerkannt oder bei sich eingerichtet hat, über das, was ihnen in dieser Eigenschaft anvertraut worden oder bekanntgeworden ist;

4. Mitglieder des Deutschen Bundestages, der Bundesversammlung,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au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oder eines Landtages über Personen, die ihnen in ihrer Eigenschaft als Mitglieder dieser Organe oder denen sie in dieser Eigenschaft Tatsachen anvertraut haben, sowie über diese Tatsachen selbst;
5. Personen, die bei der Vorbereitung, Herstellung oder Verbreitung von Druckwerken, Rundfunksendungen, Filmberichten oder der Unterrichtung oder Meinungsbildung dienenden Informations- und Kommunikationsdiensten berufsmäßig mitwirken oder mitgewirkt haben.

Die in Satz 1 Nr. 5 genannten Personen dürfen das Zeugnis verweigern über die Person des Verfassers oder Einsenders von Beiträgen und Unterlagen oder des sonstigen Informanten sowie über die ihnen im Hinblick auf ihre Tätigkeit gemachten Mitteilungen,

über deren Inhalt sowie über den Inhalt selbst erarbeiteter Materialien und den Gegenstand berufsbezogener Wahrnehmungen. Dies gilt nur, soweit es sich um Beiträge, Unterlagen, Mitteilungen und Materialien für den redaktionellen Teil oder redaktionell aufbereitete Informations- und Kommunikationsdienste handelt.

(2) Die in Absatz 1 Satz 1 Nr. 2 bis 3b Genannten dürfen das Zeugnis nicht verweigern, wenn sie von der Verpflichtung zur Verschwiegenheit entbunden sind. Die Berechtigung zur Zeugnisverweigerung der in Absatz 1 Satz 1 Nr. 5 Genannten über den Inhalt selbst erarbeiteter Materialien und den Gegenstand entsprechender Wahrnehmungen entfällt, wenn die Aussage zur Aufklärung eines Verbrechens beitragen soll oder wenn Gegenstand der Untersuchung

1. eine Straftat des Friedensverrats und der Gefährdung des demokratischen Rechtsstaats oder des Landesverrats und der Gefährdung der äußeren Sicherheit (§§ 80a, 85, 87, 88, 95, auch in Verbindung mit § 97b, §§ 97a, 98 bis 100a des Strafgesetzbuches),
2. eine Straftat gegen die sexuelle Selbstbestimmung nach den §§ 174 bis 176, 179 des Strafgesetzbuches oder
3. eine Geldwäsche, eine Verschleierung unrechtmäßig erlangter Vermögenswerte nach § 261 Abs. 1 bis 4 des Strafgesetzbuches

ist und die Erforschung des Sachverhalts oder die Ermittlung des Aufenthaltsortes des Beschuldigten auf andere Weise aussichtslos oder wesentlich erschwert wäre. Der Zeuge kann jedoch auch in diesen Fällen die Aussage verweigern, soweit sie zur Offenbarung der Person des Verfassers oder Einsenders von Beiträgen und Unterlagen oder des sonstigen Informanten oder der ihm im Hinblick auf seine Tätigkeit nach Absatz 1 Satz 1 Nr. 5 gemachten Mitteilungen oder deren Inhalts führen würde.

Fußnote

die anerkannten Beratungsstellen nach § 218b Abs. 2 Nr. 1 StGB stehen den anerkannten Beratungsstellen nach § 3 des G über die Aufklärung, Verhütung, Familienplanung und Beratung gleich gem. BVerfGE v. 4.8.1992 I 1585 - 2 BvQ 16/92 u. a. -;

§ 53a

(1) Den in § 53 Abs. 1 Satz 1 Nr. 1 bis 4 Genannten stehen ihre Gehilfen und die Personen gleich, die zur Vorbereitung auf den Beruf an der berufsmäßigen Tätigkeit teilnehmen. Über die Ausübung des Rechtes dieser Hilfspersonen, das Zeugnis zu verweigern, entscheiden die in § 53 Abs. 1 Satz 1 Nr. 1 bis 4 Genannten, es sei denn, daß diese Entscheidung in absehbarer Zeit nicht herbeigeführt werden kann.

(2) Die Entbindung von der Verpflichtung zur Verschwiegenheit (§ 53 Abs. 2 Satz 1) gilt auch für die Hilfspersonen.

§ 54

(1) Für die Vernehmung von Richtern, Beamten und anderen Personen des öffentlichen Dienstes als Zeugen über Umstände, auf die sich ihre Pflicht zur Amtsverschwiegenheit bezieht, und für die Genehmigung zur Aussage gelten die besonderen beamtenrechtlichen Vorschriften.

(2) Für die Mitglieder des Bundestages, eines Landtages, der Bundes- oder einer Landesregierung sowie für die Angestellten einer Fraktion des Bundestages und eines Landtages gelten die für sie maßgebenden besonderen Vorschriften.

(3) Der Bundespräsident kann das Zeugnis verweigern, wenn die Ablegung des Zeugnisses dem Wohl des Bundes oder eines deutschen Landes Nachteile bereiten würde.

(4) Diese Vorschriften gelten auch, wenn die vorgenannten Personen nicht mehr im öffentlichen Dienst oder Angestellte einer Fraktion sind oder ihre Mandate beendet sind, soweit es sich um Tatsachen handelt, die sich während ihrer Dienst-, Beschäftigungs- oder Mandatszeit ereignet haben oder ihnen während ihrer Dienst-, Beschäftigungs- oder Mandatszeit zur Kenntnis gelangt sind.

§ 55

(1) Jeder Zeuge kann die Auskunft auf solche Fragen verweigern, deren Beantwortung ihm selbst oder einem der in § 52 Abs. 1 bezeichneten Angehörigen die Gefahr zuziehen würde, wegen einer Straftat oder einer Ordnungswidrigkeit verfolgt zu werden.

(2) Der Zeuge ist über sein Recht zur Verweigerung der Auskunft zu belehren.

§ 56

Die Tatsache, auf die der Zeuge die Verweigerung des Zeugnisses in den Fällen der §§ 52, 53 und 55 stützt, ist auf Verlangen glaubhaft zu machen. Es genügt die eidliche Versicherung des Zeugen.

§ 57

Vor der Vernehmung werden die Zeugen zur Wahrheit ermahnt und über die strafrechtlichen Folgen einer unrichtigen oder unvollständigen Aussage belehrt. Auf die Möglichkeit der Vereidigung werden sie hingewiesen. Im Fall der Vereidigung sind sie über die Bedeutung des Eides und darüber zu belehren, dass der Eid mit oder ohne religiöse Beteuerung geleistet werden kann.

§ 58

(1) Die Zeugen sind einzeln und in Abwesenheit der später zu hörenden Zeugen zu vernehmen.

(2) Eine Gegenüberstellung mit anderen Zeugen oder mit dem Beschuldigten im Vorverfahren ist zulässig, wenn es für das weitere Verfahren geboten erscheint.

§ 58a

(1) Die Vernehmung eines Zeugen kann auf Bild-Ton-Träger aufgezeichnet werden. Sie soll aufgezeichnet werden, wenn

1. dies bei Personen unter 18 Jahren, die durch die Straftat verletzt sind, zur Wahrung ihrer schutzwürdigen Interessen geboten ist oder
2. zu besorgen ist, dass der Zeuge in der Hauptverhandlung nicht vernommen werden kann und die Aufzeichnung zur Erforschung der Wahrheit erforderlich ist.

(2) Die Verwendung der Bild-Ton-Aufzeichnung ist nur für Zwecke der Strafverfolgung und nur insoweit zulässig, als dies zur Erforschung der Wahrheit erforderlich ist. § 101 Abs.

8 gilt entsprechend. Die §§ 147, 406e sind entsprechend anzuwenden, mit der Maßgabe, dass den zur Akteneinsicht Berechtigten Kopien der Aufzeichnung überlassen werden können. Die Kopien dürfen weder vervielfältigt noch weitergegeben werden. Sie sind an die Staatsanwaltschaft herauszugeben, sobald kein berechtigtes Interesse an der weiteren Verwendung besteht. Die Überlassung der Aufzeichnung oder die Herausgabe von Kopien an andere als die vorbezeichneten Stellen bedarf der Einwilligung des Zeugen.

(3) Widerspricht der Zeuge der Überlassung einer Kopie der Aufzeichnung seiner Vernehmung nach Absatz 2 Satz 3, so tritt an deren Stelle die Überlassung einer Übertragung der Aufzeichnung in ein schriftliches Protokoll an die zur Akteneinsicht Berechtigten nach Maßgabe der §§ 147, 406e. Wer die Übertragung hergestellt hat, versieht die eigene Unterschrift mit dem Zusatz, dass die Richtigkeit der Übertragung bestätigt wird. Das Recht zur Besichtigung der Aufzeichnung nach Maßgabe der §§ 147, 406e bleibt unberührt. Der Zeuge ist auf sein Widerspruchsrecht nach Satz 1 hinzuweisen.

§ 59

(1) Zeugen werden nur vereidigt, wenn es das Gericht wegen der ausschlaggebenden Bedeutung der Aussage oder zur Herbeiführung einer wahren Aussage nach seinem Ermessen für notwendig hält. Der Grund dafür, dass der Zeuge vereidigt wird, braucht im Protokoll nicht angegeben zu werden, es sei denn, der Zeuge wird außerhalb der Hauptverhandlung vernommen.

(2) Die Vereidigung der Zeugen erfolgt einzeln und nach ihrer Vernehmung. Soweit nichts anderes bestimmt ist, findet sie in der Hauptverhandlung statt.

§ 60

Von der Vereidigung ist abzusehen

1. bei Personen, die zur Zeit der Vernehmung das 18. Lebensjahr noch nicht vollendet haben oder die wegen mangelnder Verstandesreife oder wegen einer psychischen Krankheit oder einer geistigen oder seelischen Behinderung vom Wesen und der Bedeutung des Eides keine genügende Vorstellung haben;

2. bei Personen, die der Tat, welche den Gegenstand der Untersuchung bildet, oder der Beteiligung an ihr oder der Begünstigung, Strafvereitelung oder Hehlerei verdächtig oder deswegen bereits verurteilt sind.

§ 61

Die in § 52 Abs. 1 bezeichneten Angehörigen des Beschuldigten haben das Recht, die Beeidigung des Zeugnisses zu verweigern; darüber sind sie zu belehren.

§ 62

Im vorbereitenden Verfahren ist die Vereidigung zulässig, wenn

1. Gefahr im Verzug ist oder
2. der Zeuge voraussichtlich am Erscheinen in der Hauptverhandlung verhindert sein wird

und die Voraussetzungen des § 59 Abs. 1 vorliegen.

§ 63

Wird ein Zeuge durch einen beauftragten oder ersuchten Richter vernommen, muss die Vereidigung, soweit sie zulässig ist, erfolgen, wenn es in dem Auftrag oder in dem Ersuchen des Gerichts verlangt wird.

§ 64

(1) Der Eid mit religiöser Beteuerung wird in der Weise geleistet, dass der Richter an den Zeugen die Worte richtet: “Sie schwören bei Gott dem Allmächtigen und Allwissenden, dass Sie nach bestem Wissen die reine Wahrheit gesagt und nichts verschwiegen haben” und der Zeuge hierauf die Worte spricht: “Ich schwöre es, so wahr mir Gott helfe”.

(2) Der Eid ohne religiöse Beteuerung wird in der Weise geleistet, dass der Richter an den Zeugen die Worte richtet: “Sie schwören, dass Sie nach bestem Wissen die reine Wahrheit gesagt und nichts verschwiegen haben”
und der Zeuge hierauf die Worte spricht: “Ich schwöre es”.

(3) Gibt ein Zeuge an, dass er als Mitglied einer Religions- oder Bekenntnisgemeinschaft eine

Beteuerungsformel dieser Gemeinschaft verwenden wolle, so kann er diese dem Eid anfügen.

(4) Der Schwörende soll bei der Eidesleistung die rechte Hand erheben.

§ 65

(1) Gibt ein Zeuge an, dass er aus Glaubens- oder Gewissensgründen keinen Eid leisten wolle, so hat er die Wahrheit der Aussage zu bekräftigen. Die Bekräftigung steht dem Eid gleich; hierauf ist der Zeuge hinzuweisen.

(2) Die Wahrheit der Aussage wird in der Weise bekräftigt, dass der Richter an den Zeugen die Worte richtet: “Sie bekräftigen im Bewusstsein Ihrer Verantwortung vor Gericht, dass Sie nach bestem Wissen die reine Wahrheit gesagt und nichts verschwiegen haben” und der Zeuge hierauf spricht: “Ja”.

(3) § 64 Abs. 3 gilt entsprechend.

§ 66

(1) Eine hör- oder sprachbehinderte Person leistet den Eid nach ihrer Wahl mittels Nachsprechens der Eidesformel, mittels Abschreibens und Unterschreibens der Eidesformel oder mit Hilfe einer die Verständigung ermöglichenden Person, die vom Gericht hinzuzuziehen ist. Das Gericht hat die geeigneten technischen Hilfsmittel bereitzustellen. Die hör- oder sprachbehinderte Person ist auf ihr Wahlrecht hinzuweisen.

(2) Das Gericht kann eine schriftliche Eidesleistung verlangen oder die Hinzuziehung einer die Verständigung ermöglichenden Person anordnen, wenn die hör- oder sprachbehinderte Person von ihrem Wahlrecht nach Absatz 1 keinen Gebrauch gemacht hat oder eine Eidesleistung in der nach Absatz 1 gewählten Form nicht oder nur mit unverhältnismäßigem Aufwand möglich ist.

(3) Die §§ 64 und 65 gelten entsprechend.

§ 67

Wird der Zeuge, nachdem er eidlich vernommen worden ist, in demselben Vorverfahren oder

in demselben Hauptverfahren nochmals vernommen, so kann der Richter statt der nochmaligen Vereidigung den Zeugen die Richtigkeit seiner Aussage unter Berufung auf den früher geleisteten Eid versichern lassen.

§ 68

(1) Die Vernehmung beginnt damit, dass der Zeuge über Vornamen, Nachnamen, Geburtsnamen, Alter, Beruf und Wohnort befragt wird. Ein Zeuge, der Wahrnehmungen in amtlicher Eigenschaft gemacht hat, kann statt des Wohnortes den Dienstort angeben.

(2) Einem Zeugen soll zudem gestattet werden, statt des Wohnortes seinen Geschäfts- oder Dienstort oder eine andere ladungsfähige Anschrift anzugeben, wenn ein begründeter Anlass zu der Besorgnis besteht, dass durch die Angabe des Wohnortes Rechtsgüter des Zeugen oder einer anderen Person gefährdet werden oder dass auf Zeugen oder eine andere Person in unlauterer Weise eingewirkt werden wird. In der Hauptverhandlung soll der Vorsitzende dem Zeugen bei Vorliegen der Voraussetzungen des Satzes 1 gestatten, seinen Wohnort nicht anzugeben.

(3) Besteht ein begründeter Anlass zu der Besorgnis, dass durch die Offenbarung der Identität oder des Wohnoder Aufenthaltsortes des Zeugen Leben, Leib oder Freiheit des Zeugen oder einer anderen Person gefährdet wird, so kann ihm gestattet werden, Angaben zur Person nicht oder nur über eine frühere Identität zu machen. Er hat jedoch in der Hauptverhandlung auf Befragen anzugeben, in welcher Eigenschaft ihm die Tatsachen, die er bekundet, bekannt geworden sind.

(4) Liegen Anhaltspunkte dafür vor, dass die Voraussetzungen der Absätze 2 oder 3 vorliegen, ist der Zeuge auf die dort vorgesehenen Befugnisse hinzuweisen. Im Fall des Absatzes 2 soll der Zeuge bei der Benennung einer ladungsfähigen Anschrift unterstützt werden. Die Unterlagen, die die Feststellung des Wohnortes oder der Identität des Zeugen gewährleisten, werden bei der Staatsanwaltschaft verwahrt. Zu den Akten sind sie erst zu nehmen, wenn die Besorgnis der Gefährdung entfällt.

(5) Die Absätze 2 bis 4 gelten auch nach Abschluss der Zeugenvernehmung. Soweit dem Zeugen gestattet wurde, Daten nicht anzugeben, ist bei Auskünften aus und Einsichtnahmen

in Akten sicherzustellen, dass diese Daten anderen Personen nicht bekannt werden, es sei denn, dass eine Gefährdung im Sinne der Absätze 2 und 3 ausgeschlossen erscheint.

§ 68a

(1) Fragen nach Tatsachen, die dem Zeugen oder einer Person, die im Sinne des § 52 Abs. 1 sein Angehöriger ist, zur Unehre gereichen können oder deren persönlichen Lebensbereich betreffen, sollen nur gestellt werden, wenn es unerläßlich ist.

(2) Fragen nach Umständen, die die Glaubwürdigkeit des Zeugen in der vorliegenden Sache betreffen, insbesondere nach seinen Beziehungen zu dem Beschuldigten oder der verletzten Person, sind zu stellen, soweit dies erforderlich ist. Der Zeuge soll nach Vorstrafen nur gefragt werden, wenn ihre Feststellung notwendig ist, um über das Vorliegen der Voraussetzungen des § 60 Nr. 2 zu entscheiden oder um seine Glaubwürdigkeit zu beurteilen.

§ 68b

(1) Zeugen können sich eines anwaltlichen Beistands bedienen. Einem zur Vernehmung des Zeugen erschienenen anwaltlichen Beistand ist die Anwesenheit gestattet. Er kann von der Vernehmung ausgeschlossen werden, wenn bestimmte Tatsachen die Annahme rechtfertigen, dass seine Anwesenheit die geordnete Beweiserhebung nicht nur unwesentlich beeinträchtigen würde. Dies wird in der Regel der Fall sein, wenn aufgrund bestimmter Tatsachen anzunehmen ist, dass

1. der Beistand an der zu untersuchenden Tat oder an einer mit ihr im Zusammenhang stehenden Begünstigung, Strafvereitelung oder Hehlerei beteiligt ist,
2. das Aussageverhalten des Zeugen dadurch beeinflusst wird, dass der Beistand nicht nur den Interessen des Zeugen verpflichtet erscheint, oder
3. der Beistand die bei der Vernehmung erlangten Erkenntnisse für Verdunkelungshandlungen im Sinne des § 112 Absatz 2 Nummer 3 nutzt oder in einer den Untersuchungszweck gefährdenden Weise weitergibt.

(2) Einem Zeugen, der bei seiner Vernehmung keinen anwaltlichen Beistand hat und dessen

schutzwürdigen Interessen nicht auf andere Weise Rechnung getragen werden kann, ist für deren Dauer ein solcher beizuordnen, wenn besondere Umstände vorliegen, aus denen sich ergibt, dass der Zeuge seine Befugnisse bei seiner Vernehmung nicht selbst wahrnehmen kann. § 142 Absatz 1 gilt entsprechend.

(3) Entscheidungen nach Absatz 1 Satz 3 und Absatz 2 Satz 1 sind unanfechtbar. Ihre Gründe sind aktenkundig zu machen, soweit dies den Untersuchungszweck nicht gefährdet.

§ 69

(1) Der Zeuge ist zu veranlassen, das, was ihm von dem Gegenstand seiner Vernehmung bekannt ist, im Zusammenhang anzugeben. Vor seiner Vernehmung ist dem Zeugen der Gegenstand der Untersuchung und die Person des Beschuldigten, sofern ein solcher vorhanden ist, zu bezeichnen.

(2) Zur Aufklärung und zur Vervollständigung der Aussage sowie zur Erforschung des Grundes, auf dem das Wissen des Zeugen beruht, sind nötigenfalls weitere Fragen zu stellen.

(3) Die Vorschrift des § 136a gilt für die Vernehmung des Zeugen entsprechend.

§ 70

(1) Wird das Zeugnis oder die Eidesleistung ohne gesetzlichen Grund verweigert, so werden dem Zeugen die durch die Weigerung verursachten Kosten auferlegt. Zugleich wird gegen ihn ein Ordnungsgeld und für den Fall, daß dieses nicht beigetrieben werden kann, Ordnungshaft festgesetzt.

(2) Auch kann zur Erzwingung des Zeugnisses die Haft angeordnet werden, jedoch nicht über die Zeit der Beendigung des Verfahrens in dem Rechtszug, auch nicht über die Zeit von sechs Monaten hinaus.

(3) Die Befugnis zu diesen Maßregeln steht auch dem Richter im Vorverfahren sowie dem beauftragten und ersuchten Richter zu.

(4) Sind die Maßregeln erschöpft, so können sie in demselben oder in einem anderen Verfahren, das dieselbe Tat zum Gegenstand hat, nicht wiederholt werden.

§ 71

Der Zeuge wird nach dem Justizvergütungs- und -entschädigungsgesetz entschädigt.

Siebenter Abschnitt
Sachverständige und Augenschein

§ 72

Auf Sachverständige ist der sechste Abschnitt über Zeugen entsprechend anzuwenden, soweit nicht in den nachfolgenden Paragraphen abweichende Vorschriften getroffen sind.

§ 73

(1) Die Auswahl der zuzuziehenden Sachverständigen und die Bestimmung ihrer Anzahl erfolgt durch den Richter. Er soll mit diesen eine Absprache treffen, innerhalb welcher Frist die Gutachten erstattet werden können.

(2) Sind für gewisse Arten von Gutachten Sachverständige öffentlich bestellt, so sollen andere Personen nur dann gewählt werden, wenn besondere Umstände es fordern.

§ 74

(1) Ein Sachverständiger kann aus denselben Gründen, die zur Ablehnung eines Richters berechtigen, abgelehnt werden. Ein Ablehnungsgrund kann jedoch nicht daraus entnommen werden, daß der Sachverständige als Zeuge vernommen worden ist.

(2) Das Ablehnungsrecht steht der Staatsanwaltschaft, dem Privatkläger und dem Beschuldigten zu. Die ernannten Sachverständigen sind den zur Ablehnung Berechtigten namhaft zu machen, wenn nicht besondere Umstände entgegenstehen.

(3) Der Ablehnungsgrund ist glaubhaft zu machen; der Eid ist als Mittel der Glaubhaftmachung ausgeschlossen.

§ 75

(1) Der zum Sachverständigen Ernannte hat der Ernennung Folge zu leisten, wenn er zur

Erstattung von Gutachten der erforderten Art öffentlich bestellt ist oder wenn er die Wissenschaft, die Kunst oder das Gewerbe, deren Kenntnis Voraussetzung der Begutachtung ist, öffentlich zum Erwerb ausübt oder wenn er zu ihrer Ausübung öffentlich bestellt oder ermächtigt ist.

(2) Zur Erstattung des Gutachtens ist auch der verpflichtet, welcher sich hierzu vor Gericht bereit erklärt hat.

§ 76

(1) Dieselben Gründe, die einen Zeugen berechtigen, das Zeugnis zu verweigern, berechtigen einen Sachverständigen zur Verweigerung des Gutachtens. Auch aus anderen Gründen kann ein Sachverständiger von der Verpflichtung zur Erstattung des Gutachtens entbunden werden.

(2) Für die Vernehmung von Richtern, Beamten und anderen Personen des öffentlichen Dienstes als Sachverständige gelten die besonderen beamtenrechtlichen Vorschriften. Für die Mitglieder der Bundes- oder einer Landesregierung gelten die für sie maßgebenden besonderen Vorschriften.

§ 77

(1) Im Falle des Nichterscheinens oder der Weigerung eines zur Erstattung des Gutachtens verpflichteten Sachverständigen wird diesem auferlegt, die dadurch verursachten Kosten zu ersetzen. Zugleich wird gegen ihn ein Ordnungsgeld festgesetzt. Im Falle wiederholten Ungehorsams kann neben der Auferlegung der Kosten das Ordnungsgeld noch einmal festgesetzt werden.

(2) Weigert sich ein zur Erstattung des Gutachtens verpflichteter Sachverständiger, nach § 73 Abs. 1 Satz 2 eine angemessene Frist abzusprechen, oder versäumt er die abgesprochene Frist, so kann gegen ihn ein Ordnungsgeld festgesetzt werden. Der Festsetzung des Ordnungsgeldes muß eine Androhung unter Setzung einer Nachfrist vorausgehen. Im Falle wiederholter Fristversäumnis kann das Ordnungsgeld noch einmal festgesetzt werden.

§ 78

Der Richter hat, soweit ihm dies erforderlich erscheint, die Tätigkeit der Sachverständigen zu leiten.

§ 79

(1) Der Sachverständige kann nach dem Ermessen des Gerichts vereidigt werden.

(2) Der Eid ist nach Erstattung des Gutachtens zu leisten; er geht dahin, daß der Sachverständige das Gutachten unparteiisch und nach bestem Wissen und Gewissen erstattet habe.

(3) Ist der Sachverständige für die Erstattung von Gutachten der betreffenden Art im allgemeinen vereidigt, so genügt die Berufung auf den geleisteten Eid.

§ 80

(1) Dem Sachverständigen kann auf sein Verlangen zur Vorbereitung des Gutachtens durch Vernehmung von Zeugen oder des Beschuldigten weitere Aufklärung verschafft werden.

(2) Zu demselben Zweck kann ihm gestattet werden, die Akten einzusehen, der Vernehmung von Zeugen oder des Beschuldigten beizuwohnen und an sie unmittelbar Fragen zu stellen.

§ 80a

Ist damit zu rechnen, daß die Unterbringung des Beschuldigten in einem psychiatrischen Krankenhaus, einer Entziehungsanstalt oder in der Sicherungsverwahrung angeordnet werden wird, so soll schon im Vorverfahren einem Sachverständigen Gelegenheit zur Vorbereitung des in der Hauptverhandlung zu erstattenden Gutachtens gegeben werden.

§ 81

(1) Zur Vorbereitung eines Gutachtens über den psychischen Zustand des Beschuldigten kann das Gericht nach Anhörung eines Sachverständigen und des Verteidigers anordnen, daß der Beschuldigte in ein öffentliches psychiatrisches Krankenhaus gebracht und dort beobachtet wird.

(2) Das Gericht trifft die Anordnung nach Absatz 1 nur, wenn der Beschuldigte der Tat dringend verdächtig ist. Das Gericht darf diese Anordnung nicht treffen, wenn sie zu der Bedeutung der Sache und der zu erwartenden Strafe oder Maßregel der Besserung und Sicherung außer Verhältnis steht.

(3) Im vorbereitenden Verfahren entscheidet das Gericht, das für die Eröffnung des Hauptverfahrens zuständig wäre.

(4) Gegen den Beschluß ist sofortige Beschwerde zulässig. Sie hat aufschiebende Wirkung.

(5) Die Unterbringung in einem psychiatrischen Krankenhaus nach Absatz 1 darf die Dauer von insgesamt sechs Wochen nicht überschreiten.

§ 81a

(1) Eine körperliche Untersuchung des Beschuldigten darf zur Feststellung von Tatsachen angeordnet werden, die für das Verfahren von Bedeutung sind. Zu diesem Zweck sind Entnahmen von Blutproben und andere körperliche Eingriffe, die von einem Arzt nach den Regeln der ärztlichen Kunst zu Untersuchungszwecken vorgenommen werden, ohne Einwilligung des Beschuldigten zulässig, wenn kein Nachteil für seine Gesundheit zu befürchten ist.

(2) Die Anordnung steht dem Richter, bei Gefährdung des Untersuchungserfolges durch Verzögerung auch der Staatsanwaltschaft und ihren Ermittlungspersonen (§ 152 des Gerichtsverfassungsgesetzes) zu.

(3) Dem Beschuldigten entnommene Blutproben oder sonstige Körperzellen dürfen nur für Zwecke des der Entnahme zugrundeliegenden oder eines anderen anhängigen Strafverfahrens verwendet werden; sie sind unverzüglich zu vernichten, sobald sie hierfür nicht mehr erforderlich sind.

§ 81b

Soweit es für die Zwecke der Durchführung des Strafverfahrens oder für die Zwecke des Erkennungsdienstes notwendig ist, dürfen Lichtbilder und Fingerabdrücke des Beschuldigten auch gegen seinen Willen aufgenommen und Messungen und ähnliche Maßnahmen an ihm

vorgenommen werden.

§ 81c

(1) Andere Personen als Beschuldigte dürfen, wenn sie als Zeugen in Betracht kommen, ohne ihre Einwilligung nur untersucht werden, soweit zur Erforschung der Wahrheit festgestellt werden muß, ob sich an ihrem Körper eine bestimmte Spur oder Folge einer Straftat befindet.

(2) Bei anderen Personen als Beschuldigten sind Untersuchungen zur Feststellung der Abstammung und die Entnahme von Blutproben ohne Einwilligung des zu Untersuchenden zulässig, wenn kein Nachteil für seine Gesundheit zu befürchten und die Maßnahme zur Erforschung der Wahrheit unerläßlich ist. Die Untersuchungen und die Entnahme von Blutproben dürfen stets nur von einem Arzt vorgenommen werden.

(3) Untersuchungen oder Entnahmen von Blutproben können aus den gleichen Gründen wie das Zeugnis verweigert werden. Haben Minderjährige wegen mangelnder Verstandesreife oder haben Minderjährige oder Betreute wegen einer psychischen Krankheit oder einer geistigen oder seelischen Behinderung von der Bedeutung ihres Weigerungsrechts keine genügende Vorstellung, so entscheidet der gesetzliche Vertreter; § 52 Abs. 2 Satz 2 und Abs. 3 gilt entsprechend. Ist der gesetzliche Vertreter von der Entscheidung ausgeschlossen (§ 52 Abs. 2 Satz 2) oder aus sonstigen Gründen an einer rechtzeitigen Entscheidung gehindert und erscheint die sofortige Untersuchung oder Entnahme von Blutproben zur Beweissicherung erforderlich, so sind diese Maßnahmen nur auf besondere Anordnung des Gerichts und, wenn dieses nicht rechtzeitig erreichbar ist, der Staatsanwaltschaft zulässig. Der die Maßnahmen anordnende Beschluß ist unanfechtbar. Die nach Satz 3 erhobenen Beweise dürfen im weiteren Verfahren nur mit Einwilligung des hierzu befugten gesetzlichen Vertreters verwertet werden.

(4) Maßnahmen nach den Absätzen 1 und 2 sind unzulässig, wenn sie dem Betroffenen bei Würdigung aller Umstände nicht zugemutet werden können.

(5) Die Anordnung steht dem Gericht, bei Gefährdung des Untersuchungserfolges durch Verzögerung auch der Staatsanwaltschaft und ihren Ermittlungspersonen (§ 152 des

Gerichtsverfassungsgesetzes) zu; Absatz 3 Satz 3 bleibt unberührt. § 81a Abs. 3 gilt entsprechend.

(6) Bei Weigerung des Betroffenen gilt die Vorschrift des § 70 entsprechend. Unmittelbarer Zwang darf nur auf besondere Anordnung des Richters angewandt werden. Die Anordnung setzt voraus, daß der Betroffene trotz Festsetzung eines Ordnungsgeldes bei der Weigerung beharrt oder daß Gefahr im Verzuge ist.

§ 81d

(1) Kann die körperliche Untersuchung das Schamgefühl verletzen, so wird sie von einer Person gleichen Geschlechts oder von einer Ärztin oder einem Arzt vorgenommen. Bei berechtigtem Interesse soll dem Wunsch, die Untersuchung einer Person oder einem Arzt bestimmten Geschlechts zu übertragen, entsprochen werden. Auf Verlangen der betroffenen Person soll eine Person des Vertrauens zugelassen werden. Die betroffene Person ist auf die Regelungen der Sätze 2 und 3 hinzuweisen.

(2) Diese Vorschrift gilt auch dann, wenn die betroffene Person in die Untersuchung einwilligt.

§ 81e

(1) An dem durch Maßnahmen nach § 81a Abs. 1 erlangten Material dürfen auch molekulargenetische Untersuchungen durchgeführt werden, soweit sie zur Feststellung der Abstammung oder der Tatsache, ob aufgefundenes Spurenmaterial von dem Beschuldigten oder dem Verletzten stammt, erforderlich sind; hierbei darf auch das Geschlecht der Person bestimmt werden. Untersuchungen nach Satz 1 sind auch zulässig für entsprechende Feststellungen an dem durch Maßnahmen nach § 81c erlangten Material. Feststellungen über andere als die in Satz 1 bezeichneten Tatsachen dürfen nicht erfolgen; hierauf gerichtete Untersuchungen sind unzulässig.

(2) Nach Absatz 1 zulässige Untersuchungen dürfen auch an aufgefundenem, sichergestelltem oder beschlagnahmtem Spurenmaterial durchgeführt werden. Absatz 1 Satz 3 und § 81a Abs. 3 erster Halbsatz gelten entsprechend.

§ 81f

(1) Untersuchungen nach § 81e Abs. 1 dürfen ohne schriftliche Einwilligung der betroffenen Person nur durch das Gericht, bei Gefahr im Verzug auch durch die Staatsanwaltschaft und ihre Ermittlungspersonen (§ 152 des Gerichtsverfassungsgesetzes) angeordnet werden. Die einwilligende Person ist darüber zu belehren, für welchen Zweck die zu erhebenden Daten verwendet werden.

(2) Mit der Untersuchung nach § 81e sind in der schriftlichen Anordnung Sachverständige zu beauftragen, die öffentlich bestellt oder nach dem Verpflichtungsgesetz verpflichtet oder Amtsträger sind, die der ermittlungsführenden Behörde nicht angehören oder einer Organisationseinheit dieser Behörde angehören, die von der ermittlungsführenden Dienststelle organisatorisch und sachlich getrennt ist. Diese haben durch technische und organisatorische Maßnahmen zu gewährleisten, daß unzulässige molekulargenetische Untersuchungen und unbefugte Kenntnisnahme Dritter ausgeschlossen sind. Dem Sachverständigen ist das Untersuchungsmaterial ohne Mitteilung des Namens, der Anschrift und des Geburtstages und - monats des Betroffenen zu übergeben. Ist der Sachverständige eine nichtöffentliche Stelle, gilt § 38 des Bundesdatenschutzgesetzes mit der Maßgabe, daß die Aufsichtsbehörde die Ausführung der Vorschriften über den Datenschutz auch überwacht, wenn ihr keine hinreichenden Anhaltspunkte für eine Verletzung dieser Vorschriften vorliegen und der Sachverständige die personenbezogenen Daten nicht in Dateien automatisiert verarbeitet.

§ 81g

(1) Ist der Beschuldigte einer Straftat von erheblicher Bedeutung oder einer Straftat gegen die sexuelle Selbstbestimmung verdächtig, dürfen ihm zur Identitätsfeststellung in künftigen Strafverfahren Körperzellen entnommen und zur Feststellung des DNA-Identifizierungsmusters sowie des Geschlechts molekulargenetisch untersucht werden, wenn wegen der Art oder Ausführung der Tat, der Persönlichkeit des Beschuldigten oder sonstiger Erkenntnisse Grund zu der Annahme besteht, dass gegen ihn künftig Strafverfahren wegen einer Straftat von erheblicher Bedeutung zu führen sind. Die wiederholte Begehung sonstiger Straftaten

kann im Unrechtsgehalt einer Straftat von erheblicher Bedeutung gleichstehen.

(2) Die entnommenen Körperzellen dürfen nur für die in Absatz 1 genannte molekulargenetische Untersuchung verwendet werden; sie sind unverzüglich zu vernichten, sobald sie hierfür nicht mehr erforderlich sind. Bei der Untersuchung dürfen andere Feststellungen als diejenigen, die zur Ermittlung des DNA-Identifizierungsmusters sowie des Geschlechts erforderlich sind, nicht getroffen werden; hierauf gerichtete Untersuchungen sind unzulässig.

(3) Die Entnahme der Körperzellen darf ohne schriftliche Einwilligung des Beschuldigten nur durch das Gericht, bei Gefahr im Verzug auch durch die Staatsanwaltschaft und ihre Ermittlungspersonen (§ 152 des Gerichtsverfassungsgesetzes) angeordnet werden. Die molekulargenetische Untersuchung der Körperzellen darf ohne schriftliche Einwilligung des Beschuldigten nur durch das Gericht angeordnet werden. Die einwilligende Person ist darüber zu belehren, für welchen Zweck die zu erhebenden Daten verwendet werden. § 81f Abs. 2 gilt entsprechend. In der schriftlichen Begründung des Gerichts sind einzelfallbezogen darzulegen

1. die für die Beurteilung der Erheblichkeit der Straftat bestimmenden Tatsachen,
2. die Erkenntnisse, auf Grund derer Grund zu der Annahme besteht, dass gegen den Beschuldigten künftig Strafverfahren zu führen sein werden, sowie
3. die Abwägung der jeweils maßgeblichen Umstände.

(4) Die Absätze 1 bis 3 gelten entsprechend, wenn die betroffene Person wegen der Tat rechtskräftig verurteilt oder nur wegen

1. erwiesener oder nicht auszuschließender Schuldunfähigkeit,
2. auf Geisteskrankheit beruhender Verhandlungsunfähigkeit oder
3. fehlender oder nicht auszuschließender fehlender Verantwortlichkeit (§ 3 des Jugendgerichtsgesetzes)

nicht verurteilt worden ist und die entsprechende Eintragung im Bundeszentralregister oder Erziehungsregister noch nicht getilgt ist.

(5) Die erhobenen Daten dürfen beim Bundeskriminalamt gespeichert und nach Maßgabe des Bundeskriminalamtgesetzes verwendet werden. Das Gleiche gilt

1. unter den in Absatz 1 genannten Voraussetzungen für die nach § 81e Abs. 1 erhobenen Daten eines Beschuldigten sowie
2. für die nach § 81e Abs. 2 erhobenen Daten.

Die Daten dürfen nur für Zwecke eines Strafverfahrens, der Gefahrenabwehr und der internationalen Rechtshilfe hierfür übermittelt werden. Im Fall des Satzes 2 Nr. 1 ist der Beschuldigte unverzüglich von der Speicherung zu benachrichtigen und darauf hinzuweisen, dass er die gerichtliche Entscheidung beantragen kann.

§ 81h

(1) Begründen bestimmte Tatsachen den Verdacht, dass ein Verbrechen gegen das Leben, die körperliche Unversehrtheit, die persönliche Freiheit oder die sexuelle Selbstbestimmung begangen worden ist, dürfen Personen, die bestimmte, auf den Täter vermutlich zutreffende Prüfungsmerkmale erfüllen, mit ihrer schriftlichen Einwilligung

1. Körperzellen entnommen,
2. diese zur Feststellung des DNA-Identifizierungsmusters und des Geschlechts molekulargenetisch untersucht und
3. die festgestellten DNA-Identifizierungsmuster mit den DNA-Identifizierungsmustern von Spurenmaterial automatisiert abgeglichen werden,

soweit dies zur Feststellung erforderlich ist, ob das Spurenmaterial von diesen Personen stammt, und die Maßnahme insbesondere im Hinblick auf die Anzahl der von ihr betroffenen Personen nicht außer Verhältnis zur Schwere der Tat steht.

(2) Eine Maßnahme nach Absatz 1 bedarf der gerichtlichen Anordnung. Diese ergeht schriftlich. Sie muss die betroffenen Personen anhand bestimmter Prüfungsmerkmale bezeichnen und ist zu begründen. Einer vorherigen Anhörung der betroffenen Personen bedarf es nicht. Die Entscheidung, mit der die Maßnahme angeordnet wird, ist nicht anfechtbar.

(3) Für die Durchführung der Maßnahme gelten § 81f Abs. 2 und § 81g Abs. 2 entsprechend. Soweit die Aufzeichnungen über die durch die Maßnahme festgestellten DNA-Identifizierungsmuster zur Aufklärung des Verbrechens nicht mehr erforderlich sind, sind sie unverzüglich zu löschen.

Die Löschung ist zu dokumentieren.

(4) Die betroffenen Personen sind schriftlich darüber zu belehren, dass die Maßnahme nur mit ihrer Einwilligung durchgeführt werden darf. Hierbei sind sie auch darauf hinzuweisen, dass

1. die entnommenen Körperzellen ausschließlich für die Untersuchung nach Absatz 1 verwendet und unverzüglich vernichtet werden, sobald sie hierfür nicht mehr erforderlich sind, und
2. die festgestellten DNA-Identifizierungsmuster nicht zur Identitätsfeststellung in künftigen Strafverfahren beim Bundeskriminalamt gespeichert werden.

§ 82

Im Vorverfahren hängt es von der Anordnung des Richters ab, ob die Sachverständigen ihr Gutachten schriftlich oder mündlich zu erstatten haben.

§ 83

(1) Der Richter kann eine neue Begutachtung durch dieselben oder durch andere Sachverständige anordnen, wenn er das Gutachten für ungenügend erachtet.

(2) Der Richter kann die Begutachtung durch einen anderen Sachverständigen anordnen, wenn ein Sachverständiger nach Erstattung des Gutachtens mit Erfolg abgelehnt ist.

(3) In wichtigeren Fällen kann das Gutachten einer Fachbehörde eingeholt werden.

§ 84

Der Sachverständige erhält eine Vergütung nach dem Justizvergütungs- und -entschädigungsgesetz.

§ 85

Soweit zum Beweis vergangener Tatsachen oder Zustände, zu deren Wahrnehmung eine besondere Sachkunde erforderlich war, sachkundige Personen zu vernehmen sind, gelten die Vorschriften über den Zeugenbeweis.

§ 86

Findet die Einnahme eines richterlichen Augenscheins statt, so ist im Protokoll der vorgefundene Sachbestand festzustellen und darüber Auskunft zu geben, welche Spuren oder Merkmale, deren Vorhandensein nach der besonderen Beschaffenheit des Falles vermutet werden konnte, gefehlt haben.

§ 87

(1) Die Leichenschau wird von der Staatsanwaltschaft, auf Antrag der Staatsanwaltschaft auch vom Richter, unter Zuziehung eines Arztes vorgenommen. Ein Arzt wird nicht zugezogen, wenn dies zur Aufklärung des Sachverhalts offensichtlich entbehrlich ist.

(2) Die Leichenöffnung wird von zwei Ärzten vorgenommen. Einer der Ärzte muß Gerichtsarzt oder Leiter eines öffentlichen gerichtsmedizinischen oder pathologischen Instituts oder ein von diesem beauftragter Arzt des Instituts mit gerichtsmedizinischen Fachkenntnissen sein. Dem Arzt, welcher den Verstorbenen in der dem Tod unmittelbar vorausgegangenen Krankheit behandelt hat, ist die Leichenöffnung nicht zu übertragen. Er kann jedoch aufgefordert werden, der Leichenöffnung beizuwohnen, um aus der Krankheitsgeschichte Aufschlüsse zu geben. Die Staatsanwaltschaft kann an der Leichenöffnung teilnehmen. Auf ihren Antrag findet die Leichenöffnung im Beisein des Richters statt.

(3) Zur Besichtigung oder Öffnung einer schon beerdigten Leiche ist ihre Ausgrabung statthaft.

(4) Die Leichenöffnung und die Ausgrabung einer beerdigten Leiche werden vom Richter angeordnet; die Staatsanwaltschaft ist zu der Anordnung befugt, wenn der Untersuchungserfolg durch Verzögerung gefährdet würde. Wird die Ausgrabung angeordnet, so ist zugleich die Benachrichtigung eines Angehörigen des Toten anzuordnen, wenn der Angehörige ohne besondere Schwierigkeiten ermittelt werden kann und der Untersuchungszweck durch die Benachrichtigung nicht gefährdet wird.

§ 88

(1) Vor der Leichenöffnung soll die Identität des Verstorbenen festgestellt werden. Zu diesem

Zweck können insbesondere Personen, die den Verstorbenen gekannt haben, befragt und Maßnahmen erkennungsdienstlicher Art durchgeführt werden. Zur Feststellung der Identität und des Geschlechts sind die Entnahme von Körperzellen und deren molekulargenetische Untersuchung zulässig; für die molekulargenetische Untersuchung gilt § 81f Abs. 2 entsprechend.

(2) Ist ein Beschuldigter vorhanden, so soll ihm die Leiche zur Anerkennung vorgezeigt werden.

§ 89

Die Leichenöffnung muß sich, soweit der Zustand der Leiche dies gestattet, stets auf die Öffnung der Kopf-, Brust- und Bauchhöhle erstrecken.

§ 90

Bei Öffnung der Leiche eines neugeborenen Kindes ist die Untersuchung insbesondere auch darauf zu richten, ob es nach oder während der Geburt gelebt hat und ob es reif oder wenigstens fähig gewesen ist, das Leben außerhalb des Mutterleibes fortzusetzen.

§ 91

(1) Liegt der Verdacht einer Vergiftung vor, so ist die Untersuchung der in der Leiche oder sonst gefundenen verdächtigen Stoffe durch einen Chemiker oder durch eine für solche Untersuchungen bestehende Fachbehörde vorzunehmen.

(2) Es kann angeordnet werden, daß diese Untersuchung unter Mitwirkung oder Leitung eines Arztes stattzufinden hat.

§ 92

(1) Liegt der Verdacht einer Geld- oder Wertzeichenfälschung vor, so sind das Geld oder die Wertzeichen erforderlichenfalls der Behörde vorzulegen, von der echtes Geld oder echte Wertzeichen dieser Art in Umlauf gesetzt werden. Das Gutachten dieser Behörde ist über die Unechtheit oder Verfälschung sowie darüber einzuholen, in welcher Art die Fälschung mutmaßlich begangen worden ist.

(2) Handelt es sich um Geld oder Wertzeichen eines fremden Währungsgebietes, so kann an Stelle des Gutachtens der Behörde des fremden Währungsgebietes das einer deutschen erfordert werden.

§ 93

Zur Ermittlung der Echtheit oder Unechtheit eines Schriftstücks sowie zur Ermittlung seines Urhebers kann eine Schriftvergleichung unter Zuziehung von Sachverständigen vorgenommen werden.

Achter Abschnitt
Beschlagnahme, Überwachung des Fernmeldeverkehrs, Rasterfahndung, Einsatz technischer Mittel, Einsatz Verdeckter Ermittler und Durchsuchung

§ 94

(1) Gegenstände, die als Beweismittel für die Untersuchung von Bedeutung sein können, sind in Verwahrung zu nehmen oder in anderer Weise sicherzustellen.

(2) Befinden sich die Gegenstände in dem Gewahrsam einer Person und werden sie nicht freiwillig herausgegeben, so bedarf es der Beschlagnahme.

(3) Die Absätze 1 und 2 gelten auch für Führerscheine, die der Einziehung unterliegen.

§ 95

(1) Wer einen Gegenstand der vorbezeichneten Art in seinem Gewahrsam hat, ist verpflichtet, ihn auf Erfordern vorzulegen und auszuliefern.

(2) Im Falle der Weigerung können gegen ihn die in § 70 bestimmten Ordnungs- und Zwangsmittel festgesetzt werden. Das gilt nicht bei Personen, die zur Verweigerung des Zeugnisses berechtigt sind.

§ 96

Die Vorlegung oder Auslieferung von Akten oder anderen in amtlicher Verwahrung

befindlichen Schriftstücken durch Behörden und öffentliche Beamte darf nicht gefordert werden, wenn deren oberste Dienstbehörde erklärt, daß das Bekanntwerden des Inhalts dieser Akten oder Schriftstücke dem Wohl des Bundes oder eines deutschen Landes Nachteile bereiten würde. Satz 1 gilt entsprechend für Akten und sonstige Schriftstücke, die sich im Gewahrsam eines Mitglieds des Bundestages oder eines Landtages beziehungsweise eines Angestellten einer Fraktion des Bundestages oder eines Landtages befinden, wenn die für die Erteilung einer Aussagegenehmigung zuständige Stelle eine solche Erklärung abgegeben hat.

§ 97

(1) Der Beschlagnahme unterliegen nicht

1. schriftliche Mitteilungen zwischen dem Beschuldigten und den Personen, die nach § 52 oder § 53 Abs. 1 Satz 1 Nr. 1 bis 3b das Zeugnis verweigern dürfen;
2. Aufzeichnungen, welche die in § 53 Abs. 1 Satz 1 Nr. 1 bis 3b Genannten über die ihnen vom Beschuldigten anvertrauten Mitteilungen oder über andere Umstände gemacht haben, auf die sich das Zeugnisverweigerungsrecht erstreckt;
3. andere Gegenstände einschließlich der ärztlichen Untersuchungsbefunde, auf die sich das Zeugnisverweigerungsrecht der in § 53 Abs. 1 Satz 1 Nr. 1 bis 3b Genannten erstreckt.

(2) Diese Beschränkungen gelten nur, wenn die Gegenstände im Gewahrsam der zur Verweigerung des Zeugnisses Berechtigten sind, es sei denn, es handelt sich um eine elektronische Gesundheitskarte im Sinne des § 291a des Fünften Buches Sozialgesetzbuch. Der Beschlagnahme unterliegen auch nicht Gegenstände, auf die sich das Zeugnisverweigerungsrecht der Ärzte, Zahnärzte, Psychologischen Psychotherapeuten, Kinderund Jugendlichenpsychotherapeuten, Apotheker und Hebammen erstreckt, wenn sie im Gewahrsam einer Krankenanstalt oder eines Dienstleisters, der für die Genannten personenbezogene Daten erhebt, verarbeitet oder nutzt, sind, sowie Gegenstände, auf die sich das Zeugnisverweigerungsrecht der in § 53 Abs. 1 Satz 1 Nr. 3a und 3b genannten Personen erstreckt, wenn sie im Gewahrsam der in dieser Vorschrift bezeichneten Beratungsstelle sind. Die Beschränkungen der Beschlagnahme gelten nicht, wenn

bestimmte Tatsachen den Verdacht begründen, dass die zeugnisverweigerungsberechtigte Person an der Tat oder an einer Begünstigung, Strafvereitelung oder Hehlerei beteiligt ist, oder wenn es sich um Gegenstände handelt, die durch eine Straftat hervorgebracht oder zur Begehung einer Straftat gebraucht oder bestimmt sind oder die aus einer Straftat herrühren.

(3) Die Absätze 1 und 2 sind entsprechend anzuwenden, soweit die Hilfspersonen (§ 53a) der in § 53 Abs. 1 Satz 1 Nr. 1 bis 3b Genannten das Zeugnis verweigern dürfen.

(4) Soweit das Zeugnisverweigerungsrecht der in § 53 Abs. 1 Satz 1 Nr. 4 genannten Personen reicht, ist die Beschlagnahme von Gegenständen unzulässig. Dieser Beschlagnahmeschutz erstreckt sich auch auf Gegenstände, die von den in § 53 Abs. 1 Satz 1 Nr. 4 genannten Personen ihren Hilfspersonen (§ 53a) anvertraut sind. Satz 1 gilt entsprechend, soweit die Hilfspersonen (§ 53a) der in § 53 Abs. 1 Satz 1 Nr. 4 genannten Personen das Zeugnis verweigern dürften.

(5) Soweit das Zeugnisverweigerungsrecht der in § 53 Abs. 1 Satz 1 Nr. 5 genannten Personen reicht, ist die Beschlagnahme von Schriftstücken, Ton-, Bild- und Datenträgern, Abbildungen und anderen Darstellungen, die sich im Gewahrsam dieser Personen oder der Redaktion, des Verlages, der Druckerei oder der Rundfunkanstalt befinden, unzulässig. Absatz 2 Satz 3 und § 160a Abs. 4 Satz 2 gelten entsprechend; die Beschlagnahme ist jedoch auch in diesen Fällen nur zulässig, wenn sie unter Berücksichtigung der Grundrechte aus Artikel 5 Abs. 1 Satz 2 des Grundgesetzes nicht außer Verhältnis zur Bedeutung der Sache steht und die Erforschung des Sachverhaltes oder die Ermittlung des Aufenthaltsortes des Täters auf andere Weise aussichtslos oder wesentlich erschwert wäre.

§ 98

(1) Beschlagnahmen dürfen nur durch das Gericht, bei Gefahr im Verzug auch durch die Staatsanwaltschaft und ihre Ermittlungspersonen (§ 152 des Gerichtsverfassungsgesetzes) angeordnet werden. Die Beschlagnahme nach § 97 Abs. 5 Satz 2 in den Räumen einer Redaktion, eines Verlages, einer Druckerei oder einer Rundfunkanstalt darf nur durch das Gericht angeordnet werden.

(2) Der Beamte, der einen Gegenstand ohne gerichtliche Anordnung beschlagnahmt hat, soll binnen drei Tagen die gerichtliche Bestätigung beantragen, wenn bei der Beschlagnahme weder der davon Betroffene noch ein erwachsener Angehöriger anwesend war oder wenn der Betroffene und im Falle seiner Abwesenheit ein erwachsener Angehöriger des Betroffenen gegen die Beschlagnahme ausdrücklichen Widerspruch erhoben hat. Der Betroffene kann jederzeit die gerichtliche Entscheidung beantragen. Die Zuständigkeit des Gerichts bestimmt sich nach § 162. Der Betroffene kann den Antrag auch bei dem Amtsgericht einreichen, in dessen Bezirk die Beschlagnahme stattgefunden hat; dieses leitet den Antrag dem zuständigen Gericht zu. Der Betroffene ist über seine Rechte zu belehren.

(3) Ist nach erhobener öffentlicher Klage die Beschlagnahme durch die Staatsanwaltschaft oder eine ihrer Ermittlungspersonen erfolgt, so ist binnen drei Tagen dem Gericht von der Beschlagnahme Anzeige zu machen; die beschlagnahmten Gegenstände sind ihm zur Verfügung zu stellen.

(4) Wird eine Beschlagnahme in einem Dienstgebäude oder einer nicht allgemein zugänglichen Einrichtung oder Anlage der Bundeswehr erforderlich, so wird die vorgesetzte Dienststelle der Bundeswehr um ihre Durchführung ersucht. Die ersuchende Stelle ist zur Mitwirkung berechtigt. Des Ersuchens bedarf es nicht, wenn die Beschlagnahme in Räumen vorzunehmen ist, die ausschließlich von anderen Personen als Soldaten bewohnt werden.

§ 98a

(1) Liegen zureichende tatsächliche Anhaltspunkte dafür vor, daß eine Straftat von erheblicher Bedeutung

1. auf dem Gebiet des unerlaubten Betäubungsmittel- oder Waffenverkehrs, der Geld- oder Wertzeichenfälschung,
2. auf dem Gebiet des Staatsschutzes (§§ 74a, 120 des Gerichtsverfassungsgesetzes),
3. auf dem Gebiet der gemeingefährlichen Straftaten,
4. gegen Leib oder Leben, die sexuelle Selbstbestimmung oder die persönliche Freiheit,
5. gewerbs- oder gewohnheitsmäßig oder
6. von einem Bandenmitglied oder in anderer Weise organisiert

begangen worden ist, so dürfen, unbeschadet §§ 94, 110, 161, personenbezogene Daten von Personen, die bestimmte, auf den Täter vermutlich zutreffende Prüfungsmerkmale erfüllen, mit anderen Daten maschinell abgeglichen werden, um Nichtverdächtige auszuschließen oder Personen festzustellen, die weitere für die Ermittlungen bedeutsame Prüfungsmerkmale erfüllen. Die Maßnahme darf nur angeordnet werden, wenn die Erforschung des Sachverhalts oder die Ermittlung des Aufenthaltsortes des Täters auf andere Weise erheblich weniger erfolgversprechend oder wesentlich erschwert wäre.

(2) Zu dem in Absatz 1 bezeichneten Zweck hat die speichernde Stelle die für den Abgleich erforderlichen Daten aus den Datenbeständen auszusondern und den Strafverfolgungsbehörden zu übermitteln.

(3) Soweit die zu übermittelnden Daten von anderen Daten nur mit unverhältnismäßigem Aufwand getrennt werden können, sind auf Anordnung auch die anderen Daten zu übermitteln. Ihre Nutzung ist nicht zulässig.

(4) Auf Anforderung der Staatsanwaltschaft hat die speichernde Stelle die Stelle, die den Abgleich durchführt, zu unterstützen.

(5) § 95 Abs. 2 gilt entsprechend.

§ 98b

(1) Der Abgleich und die Übermittlung der Daten dürfen nur durch das Gericht, bei Gefahr im Verzug auch durch die Staatsanwaltschaft angeordnet werden. Hat die Staatsanwaltschaft die Anordnung getroffen, so beantragt sie unverzüglich die gerichtliche Bestätigung. Die Anordnung tritt außer Kraft, wenn sie nicht binnen drei Werktagen vom Gericht bestätigt wird. Die Anordnung ergeht schriftlich. Sie muß den zur Übermittlung Verpflichteten bezeichnen und ist auf die Daten und Prüfungsmerkmale zu beschränken, die für den Einzelfall benötigt werden. Die Übermittlung von Daten, deren Verwendung besondere bundesgesetzliche oder entsprechende landesgesetzliche Verwendungsregelungen entgegenstehen, darf nicht angeordnet werden. Die §§ 96, 97, 98 Abs. 1 Satz 2 gelten entsprechend.

(2) Ordnungs- und Zwangsmittel (§ 95 Abs. 2) dürfen nur durch das Gericht, bei Gefahr im Verzug auch durch die Staatsanwaltschaft angeordnet werden; die Festsetzung von Haft

bleibt dem Gericht vorbehalten.

(3) Sind die Daten auf Datenträgern übermittelt worden, so sind diese nach Beendigung des Abgleichs unverzüglich zurückzugeben. Personenbezogene Daten, die auf andere Datenträger übertragen wurden, sind unverzüglich zu löschen, sobald sie für das Strafverfahren nicht mehr benötigt werden.

(4) Nach Beendigung einer Maßnahme nach § 98a ist die Stelle zu unterrichten, die für die Kontrolle der Einhaltung der Vorschriften über den Datenschutz bei öffentlichen Stellen zuständig ist.

§ 98c

Zur Aufklärung einer Straftat oder zur Ermittlung des Aufenthaltsortes einer Person, nach der für Zwecke eines Strafverfahrens gefahndet wird, dürfen personenbezogene Daten aus einem Strafverfahren mit anderen zur Strafverfolgung oder Strafvollstreckung oder zur Gefahrenabwehr gespeicherten Daten maschinell abgeglichen werden. Entgegenstehende besondere bundesgesetzliche oder entsprechende landesgesetzliche Verwendungsregelungen bleiben unberührt.

§ 99

Zulässig ist die Beschlagnahme der an den Beschuldigten gerichteten Postsendungen und Telegramme, die sich im Gewahrsam von Personen oder Unternehmen befinden, die geschäftsmäßig Post- oder Telekommunikationsdienste erbringen oder daran mitwirken. Ebenso ist eine Beschlagnahme von Postsendungen und Telegrammen zulässig, bei denen aus vorliegenden Tatsachen zu schließen ist, daß sie von dem Beschuldigten herrühren oder für ihn bestimmt sind und daß ihr Inhalt für die Untersuchung Bedeutung hat.

§ 100

(1) Zu der Beschlagnahme (§ 99) ist nur das Gericht, bei Gefahr im Verzug auch die Staatsanwaltschaft befugt.

(2) Die von der Staatsanwaltschaft verfügte Beschlagnahme tritt, auch wenn sie eine

Auslieferung noch nicht zur Folge gehabt hat, außer Kraft, wenn sie nicht binnen drei Werktagen gerichtlich bestätigt wird.

(3) Die Öffnung der ausgelieferten Postsendungen steht dem Gericht zu. Es kann diese Befugnis der Staatsanwaltschaft übertragen, soweit dies erforderlich ist, um den Untersuchungserfolg nicht durch Verzögerung zu gefährden. Die Übertragung ist nicht anfechtbar; sie kann jederzeit widerrufen werden. Solange eine Anordnung nach Satz 2 nicht ergangen ist, legt die Staatsanwaltschaft die ihr ausgelieferten Postsendungen sofort, und zwar verschlossene Postsendungen ungeöffnet, dem Gericht vor.

(4) Über eine von der Staatsanwaltschaft verfügte Beschlagnahme entscheidet das nach § 98 zuständige Gericht. Über die Öffnung einer ausgelieferten Postsendung entscheidet das Gericht, das die Beschlagnahme angeordnet oder bestätigt hat.

(5) Postsendungen, deren Öffnung nicht angeordnet worden ist, sind unverzüglich an den vorgesehenen Empfänger weiterzuleiten. Dasselbe gilt, soweit nach der Öffnung die Zurückbehaltung nicht erforderlich ist.

(6) Der Teil einer zurückbehaltenen Postsendung, dessen Vorenthaltung nicht mit Rücksicht auf die Untersuchung geboten erscheint, ist dem vorgesehenen Empfänger abschriftlich mitzuteilen.

§ 100a

(1) Auch ohne Wissen der Betroffenen darf die Telekommunikation überwacht und aufgezeichnet werden, wenn

1. bestimmte Tatsachen den Verdacht begründen, dass jemand als Täter oder Teilnehmer eine in Absatz 2 bezeichnete schwere Straftat begangen, in Fällen, in denen der Versuch strafbar ist, zu begehen versucht, oder durch eine Straftat vorbereitet hat,
2. die Tat auch im Einzelfall schwer wiegt und
3. die Erforschung des Sachverhalts oder die Ermittlung des Aufenthaltsortes des Beschuldigten auf andere Weise wesentlich erschwert oder aussichtslos wäre.

(2) Schwere Straftaten im Sinne des Absatzes 1 Nr. 1 sind:

1. aus dem Strafgesetzbuch:

a) Straftaten des Friedensverrats, des Hochverrats und der Gefährdung des demokratischen Rechtsstaates sowie des Landesverrats und der Gefährdung der äußeren Sicherheit nach den §§ 80 bis 82, 84 bis 86, 87 bis 89a, 94 bis 100a,

b) Abgeordnetenbestechung nach § 108e,

c) Straftaten gegen die Landesverteidigung nach den §§ 109d bis 109h,

d) Straftaten gegen die öffentliche Ordnung nach den §§ 129 bis 130,

e) Geld- und Wertzeichenfälschung nach den §§ 146 und 151, jeweils auch in Verbindung mit § 152, sowie nach § 152a Abs. 3 und § 152b Abs. 1 bis 4,

f) Straftaten gegen die sexuelle Selbstbestimmung in den Fällen der §§ 176a, 176b, 177 Abs. 2 Nr. 2 und des § 179 Abs. 5 Nr. 2,

g) Verbreitung, Erwerb und Besitz kinder- und jugendpornographischer Schriften nach § 184b Abs. 1 bis 3, § 184c Abs. 3,

h) Mord und Totschlag nach den §§ 211 und 212,

I) Straftaten gegen die persönliche Freiheit nach den §§ 232 bis 233a, 234, 234a, 239a und 239b,

j) Bandendiebstahl nach § 244 Abs. 1 Nr. 2 und schwerer Bandendiebstahl nach § 244a,

k) Straftaten des Raubes und der Erpressung nach den §§ 249 bis 255,

l) gewerbsmäßige Hehlerei, Bandenhehlerei und gewerbsmäßige Bandenhehlerei nach den §§ 260 und 260a,

m) Geldwäsche und Verschleierung unrechtmäßig erlangter Vermögenswerte nach § 261 Abs. 1, 2 und 4,

n) Betrug und Computerbetrug unter den in § 263 Abs. 3 Satz 2 genannten Voraussetzungen und im Falle des § 263 Abs. 5, jeweils auch in Verbindung mit § 263a Abs. 2,

o) Subventionsbetrug unter den in § 264 Abs. 2 Satz 2 genannten Voraussetzungen und im Falle des §264 Abs. 3 in Verbindung mit § 263 Abs. 5,

p) Straftaten der Urkundenfälschung unter den in § 267 Abs. 3 Satz 2 genannten Voraussetzungen und im Fall des § 267 Abs. 4, jeweils auch in Verbindung mit § 268 Abs. 5 oder § 269 Abs. 3, sowie nach § 275 Abs. 2 und § 276 Abs. 2,

q) Bankrott unter den in § 283a Satz 2 genannten Voraussetzungen,

r) Straftaten gegen den Wettbewerb nach § 298 und, unter den in § 300 Satz 2 genannten Voraussetzungen, nach § 299,

s) gemeingefährliche Straftaten in den Fällen der §§ 306 bis 306c, 307 Abs. 1 bis 3, des § 308 Abs. 1 bis 3, des § 309 Abs. 1 bis 4, des § 310 Abs. 1, der §§ 313, 314, 315 Abs. 3, des § 315b Abs. 3 sowie der §§ 316a und 316c,

t) Bestechlichkeit und Bestechung nach den §§ 332 und 334,

2. aus der Abgabenordnung:

a) Steuerhinterziehung unter den in § 370 Abs. 3 Satz 2 Nr. 5 genannten Voraussetzungen,

b) gewerbsmäßiger, gewaltsamer und bandenmäßiger Schmuggel nach § 373,

c) Steuerhehlerei im Falle des § 374 Abs. 2,

3. aus dem Arzneimittelgesetz: Straftaten nach § 95 Abs. 1 Nr. 2a unter den in § 95 Abs. 3 Satz 2 Nr. 2 Buchstabe b genannten Voraussetzungen,

4. aus dem Asylverfahrensgesetz:

a) Verleitung zur missbräuchlichen Asylantragstellung nach § 84 Abs. 3,

b) gewerbs- und bandenmäßige Verleitung zur missbräuchlichen Asylantragstellung nach § 84a,

5. aus dem Aufenthaltsgesetz:

a) Einschleusen von Ausländern nach § 96 Abs. 2,

b) Einschleusen mit Todesfolge und gewerbs- und bandenmäßiges Einschleusen nach § 97,

6. aus dem Außenwirtschaftsgesetz: Straftaten nach § 34 Abs. 1 bis 6,

7. aus dem Betäubungsmittelgesetz:

a) Straftaten nach einer in § 29 Abs. 3 Satz 2 Nr. 1 in Bezug genommenen Vorschrift unter den dort genannten Voraussetzungen,

b) Straftaten nach den §§ 29a, 30 Abs. 1 Nr. 1, 2 und 4 sowie den §§ 30a und 30b,

8. aus dem Grundstoffüberwachungsgesetz: Straftaten nach § 19 Abs. 1 unter den in § 19 Abs. 3 Satz 2 genannten Voraussetzungen,

9. aus dem Gesetz über die Kontrolle von Kriegswaffen:

a) Straftaten nach § 19 Abs. 1 bis 3 und § 20 Abs. 1 und 2 sowie § 20a Abs. 1 bis 3, jeweils auch in Verbindung mit § 21,

b) Straftaten nach § 22a Abs. 1 bis 3,

10. aus dem Völkerstrafgesetzbuch:

a) Völkermord nach § 6,

b) Verbrechen gegen die Menschlichkeit nach § 7,

c) Kriegsverbrechen nach den §§ 8 bis 12,

11. aus dem Waffengesetz:

a) Straftaten nach § 51 Abs. 1 bis 3,

b) Straftaten nach § 52 Abs. 1 Nr. 1 und 2 Buchstabe c und d sowie Abs. 5 und 6.

(3) Die Anordnung darf sich nur gegen den Beschuldigten oder gegen Personen richten, von denen auf Grund bestimmter Tatsachen anzunehmen ist, dass sie für den Beschuldigten bestimmte oder von ihm herrührende Mitteilungen entgegennehmen oder weitergeben oder dass der Beschuldigte ihren Anschluss benutzt.

(4) Liegen tatsächliche Anhaltspunkte für die Annahme vor, dass durch eine Maßnahme nach Absatz 1 allein Erkenntnisse aus dem Kernbereich privater Lebensgestaltung erlangt würden, ist die Maßnahme unzulässig.

Erkenntnisse aus dem Kernbereich privater Lebensgestaltung, die durch eine Maßnahme nach Absatz 1 erlangt wurden, dürfen nicht verwertet werden. Aufzeichnungen hierüber sind unverzüglich zu löschen. Die Tatsache ihrer Erlangung und Löschung ist aktenkundig zu machen.

§ 100b

(1) Maßnahmen nach § 100a dürfen nur auf Antrag der Staatsanwaltschaft durch das Gericht angeordnet werden. Bei Gefahr im Verzug kann die Anordnung auch durch die Staatsanwaltschaft getroffen werden. Soweit die Anordnung der Staatsanwaltschaft nicht binnen drei Werktagen von dem Gericht bestätigt wird, tritt sie außer Kraft. Die Anordnung ist auf höchstens drei Monate zu befristen. Eine Verlängerung um jeweils nicht mehr als drei Monate ist zulässig, soweit die Voraussetzungen der Anordnung unter

Berücksichtigung der gewonnenen Ermittlungsergebnisse fortbestehen.

(2) Die Anordnung ergeht schriftlich. In ihrer Entscheidungsformel sind anzugeben:

1. soweit möglich, der Name und die Anschrift des Betroffenen, gegen den sich die Maßnahme richtet,
2. die Rufnummer oder eine andere Kennung des zu überwachenden Anschlusses oder des Endgerätes, sofern sich nicht aus bestimmten Tatsachen ergibt, dass diese zugleich einem anderen Endgerät zugeordnet ist,
3. Art, Umfang und Dauer der Maßnahme unter Benennung des Endzeitpunktes.

(3) Auf Grund der Anordnung hat jeder, der Telekommunikationsdienste erbringt oder daran mitwirkt, dem Gericht, der Staatsanwaltschaft und ihren im Polizeidienst tätigen Ermittlungspersonen (§ 152 des Gerichtsverfassungsgesetzes) die Maßnahmen nach § 100a zu ermöglichen und die erforderlichen Auskünfte unverzüglich zu erteilen. Ob und in welchem Umfang hierfür Vorkehrungen zu treffen sind, bestimmt sich nach dem Telekommunikationsgesetz und der Telekommunikations-Überwachungsverordnung. § 95 Abs. 2 gilt entsprechend.

(4) Liegen die Voraussetzungen der Anordnung nicht mehr vor, so sind die auf Grund der Anordnung ergriffenen Maßnahmen unverzüglich zu beenden. Nach Beendigung der Maßnahme ist das anordnende Gericht über deren Ergebnisse zu unterrichten.

(5) Die Länder und der Generalbundesanwalt berichten dem Bundesamt für Justiz kalenderjährlich jeweils bis zum 30. Juni des dem Berichtsjahr folgenden Jahres über in ihrem Zuständigkeitsbereich angeordnete Maßnahmen nach § 100a. Das Bundesamt für Justiz erstellt eine Übersicht zu den im Berichtsjahr bundesweit angeordneten Maßnahmen und veröffentlicht diese im Internet.[1)]

(6) In den Berichten nach Absatz 5 sind anzugeben:

1. die Anzahl der Verfahren, in denen Maßnahmen nach § 100a Abs. 1 angeordnet worden sind;
2. die Anzahl der Überwachungsanordnungen nach § 100a Abs. 1, unterschieden nach

---

1) Amtlicher Hinweis: Die Internetadresse des Bundesamtes für Justiz lautet: www.bundesjustizamt.de

a) Erst- und Verlängerungsanordnungen sowie

b) Festnetz-, Mobilfunk- und Internettelekommunikation;

3. die jeweils zugrunde liegende Anlassstraftat nach Maßgabe der Unterteilung in § 100a Abs. 2.

§ 100c

(1) Auch ohne Wissen der Betroffenen darf das in einer Wohnung nichtöffentlich gesprochene Wort mit technischen Mitteln abgehört und aufgezeichnet werden, wenn

1. bestimmte Tatsachen den Verdacht begründen, dass jemand als Täter oder Teilnehmer eine in Absatz 2 bezeichnete besonders schwere Straftat begangen oder in Fällen, in denen der Versuch strafbar ist, zu begehen versucht hat,
2. die Tat auch im Einzelfall besonders schwer wiegt,
3. auf Grund tatsächlicher Anhaltspunkte anzunehmen ist, dass durch die Überwachung Äußerungen des Beschuldigten erfasst werden, die für die Erforschung des Sachverhalts oder die Ermittlung des Aufenthaltsortes eines Mitbeschuldigten von Bedeutung sind, und
4. die Erforschung des Sachverhalts oder die Ermittlung des Aufenthaltsortes eines Mitbeschuldigten auf andere Weise unverhältnismäßig erschwert oder aussichtslos wäre.

(2) Besonders schwere Straftaten im Sinne des Absatzes 1 Nr. 1 sind:

1. aus dem Strafgesetzbuch:
   a) Straftaten des Friedensverrats, des Hochverrats und der Gefährdung des demokratischen Rechtsstaates sowie des Landesverrats und der Gefährdung der äußeren Sicherheit nach den §§ 80, 81, 82, 89a, nach den §§ 94, 95 Abs. 3 und § 96 Abs. 1, jeweils auch in Verbindung mit § 97b, sowie nach den §§ 97a, 98 Abs. 1 Satz 2, § 99 Abs. 2 und den §§ 100, 100a Abs. 4,
   b) Bildung krimineller Vereinigungen nach § 129 Abs. 1 in Verbindung mit Abs. 4 Halbsatz 2 und Bildung terroristischer Vereinigungen nach § 129a Abs. 1, 2, 4, 5 Satz 1 Alternative 1, jeweils auch in Verbindung mit § 129b Abs. 1,
   c) Geld- und Wertzeichenfälschung nach den §§ 146 und 151, jeweils auch in

Verbindung mit § 152, sowie nach § 152a Abs. 3 und § 152b Abs. 1 bis 4,

d) Straftaten gegen die sexuelle Selbstbestimmung in den Fällen des § 176a Abs. 2 Nr. 2 oder Abs. 3, § 177 Abs. 2 Nr. 2 oder § 179 Abs. 5 Nr. 2,

e) Verbreitung, Erwerb und Besitz kinderpornografischer Schriften in den Fällen des § 184b Abs. 3,

f) Mord und Totschlag nach den §§ 211, 212,

g) Straftaten gegen die persönliche Freiheit in den Fällen der §§ 234, 234a Abs. 1, 2, §§ 239a, 239b und Menschenhandel zum Zweck der sexuellen Ausbeutung und zum Zweck der Ausbeutung der Arbeitskraft nach § 232 Abs. 3, Abs. 4 oder Abs. 5, § 233 Abs. 3, jeweils soweit es sich um Verbrechen handelt,

h) Bandendiebstahl nach § 244 Abs. 1 Nr. 2 und schwerer Bandendiebstahl nach § 244a,

i) schwerer Raub und Raub mit Todesfolge nach § 250 Abs. 1 oder Abs. 2, § 251,

j) räuberische Erpressung nach § 255 und besonders schwerer Fall einer Erpressung nach § 253 unter den in § 253 Abs. 4 Satz 2 genannten Voraussetzungen,

k) gewerbsmäßige Hehlerei, Bandenhehlerei und gewerbsmäßige Bandenhehlerei nach den §§ 260, 260a,

l) besonders schwerer Fall der Geldwäsche, Verschleierung unrechtmäßig erlangter Vermögenswerte nach § 261 unter den in § 261 Abs. 4 Satz 2 genannten Voraussetzungen,

m) besonders schwerer Fall der Bestechlichkeit und Bestechung nach § 335 Abs. 1 unter den in § 335 Abs. 2 Nr. 1 bis 3 genannten Voraussetzungen,

2. aus dem Asylverfahrensgesetz:

a) Verleitung zur missbräuchlichen Asylantragstellung nach § 84 Abs. 3,

b) gewerbs- und bandenmäßige Verleitung zur missbräuchlichen Asylantragstellung nach § 84a Abs. 1,

3. aus dem Aufenthaltsgesetz:

a) Einschleusen von Ausländern nach § 96 Abs. 2,

b) Einschleusen mit Todesfolge oder gewerbs- und bandenmäßiges Einschleusen nach § 97,

4. aus dem Betäubungsmittelgesetz:

a) besonders schwerer Fall einer Straftat nach § 29 Abs. 1 Satz 1 Nr. 1, 5, 6, 10, 11 oder 13, Abs. 3 unter der in § 29 Abs. 3 Satz 2 Nr. 1 genannten Voraussetzung,

b) eine Straftat nach den §§ 29a, 30 Abs. 1 Nr. 1, 2, 4, § 30a,

5. aus dem Gesetz über die Kontrolle von Kriegswaffen:

a) eine Straftat nach § 19 Abs. 2 oder § 20 Abs. 1, jeweils auch in Verbindung mit § 21,

b) besonders schwerer Fall einer Straftat nach § 22a Abs. 1 in Verbindung mit Abs. 2,

6. aus dem Völkerstrafgesetzbuch:

a) Völkermord nach § 6,

b) Verbrechen gegen die Menschlichkeit nach § 7,

c) Kriegsverbrechen nach den §§ 8 bis 12,

7. aus dem Waffengesetz:

a) besonders schwerer Fall einer Straftat nach § 51 Abs. 1 in Verbindung mit Abs. 2,

b) besonders schwerer Fall einer Straftat nach § 52 Abs. 1 Nr. 1 in Verbindung mit Abs. 5.

(3) Die Maßnahme darf sich nur gegen den Beschuldigten richten und nur in Wohnungen des Beschuldigten durchgeführt werden. In Wohnungen anderer Personen ist die Maßnahme nur zulässig, wenn auf Grund bestimmter Tatsachen anzunehmen ist, dass

1. der in der Anordnung nach § 100d Abs. 2 bezeichnete Beschuldigte sich dort aufhält und

2. die Maßnahme in Wohnungen des Beschuldigten allein nicht zur Erforschung des Sachverhalts oder zur Ermittlung des Aufenthaltsortes eines Mitbeschuldigten führen wird.

Die Maßnahme darf auch durchgeführt werden, wenn andere Personen unvermeidbar betroffen werden.

(4) Die Maßnahme darf nur angeordnet werden, soweit auf Grund tatsächlicher Anhaltspunkte, insbesondere zu der Art der zu überwachenden Räumlichkeiten und dem Verhältnis der zu überwachenden Personen zueinander, anzunehmen ist, dass durch die Überwachung Äußerungen, die dem Kernbereich privater Lebensgestaltung zuzurechnen sind, nicht erfasst werden. Gespräche in Betriebs- oder Geschäftsräumen sind in der Regel nicht dem

Kernbereich privater Lebensgestaltung zuzurechnen. Das Gleiche gilt für Gespräche über begangene Straftaten und Äußerungen, mittels derer Straftaten begangen werden.

(5) Das Abhören und Aufzeichnen ist unverzüglich zu unterbrechen, soweit sich während der Überwachung Anhaltspunkte dafür ergeben, dass Äußerungen, die dem Kernbereich privater Lebensgestaltung zuzurechnen sind, erfasst werden. Aufzeichnungen über solche Äußerungen sind unverzüglich zu löschen. Erkenntnisse über solche Äußerungen dürfen nicht verwertet werden. Die Tatsache der Erfassung der Daten und ihrer Löschung ist zu dokumentieren. Ist eine Maßnahme nach Satz 1 unterbrochen worden, so darf sie unter den in Absatz 4 genannten Voraussetzungen fortgeführt werden. Im Zweifel ist über die Unterbrechung oder Fortführung der Maßnahme unverzüglich eine Entscheidung des Gerichts herbeizuführen; § 100d Abs. 4 gilt entsprechend.

(6) In den Fällen des § 53 ist eine Maßnahme nach Absatz 1 unzulässig; ergibt sich während oder nach Durchführung der Maßnahme, dass ein Fall des § 53 vorliegt, gilt Absatz 5 Satz 2 bis 4 entsprechend. In den Fällen der §§ 52 und 53a dürfen aus einer Maßnahme nach Absatz 1 gewonnene Erkenntnisse nur verwertet werden, wenn dies unter Berücksichtigung der Bedeutung des zugrunde liegenden Vertrauensverhältnisses nicht außer Verhältnis zum Interesse an der Erforschung des Sachverhalts oder der Ermittlung des Aufenthaltsortes eines Beschuldigten steht. § 160a Abs. 4 gilt entsprechend.

(7) Soweit ein Verwertungsverbot nach Absatz 5 in Betracht kommt, hat die Staatsanwaltschaft unverzüglich eine Entscheidung des anordnenden Gerichts über die Verwertbarkeit der erlangten Erkenntnisse herbeizuführen. Soweit das Gericht eine Verwertbarkeit verneint, ist dies für das weitere Verfahren bindend.

§ 100d

(1) Maßnahmen nach § 100c dürfen nur auf Antrag der Staatsanwaltschaft durch die in § 74a Abs. 4 des Gerichtsverfassungsgesetzes genannte Kammer des Landgerichts angeordnet werden, in dessen Bezirk die Staatsanwaltschaft ihren Sitz hat. Bei Gefahr im Verzug kann diese Anordnung auch durch den Vorsitzenden getroffen werden. Dessen Anordnung tritt außer Kraft, wenn sie nicht binnen drei Werktagen von der Strafkammer bestätigt wird.

Die Anordnung ist auf höchstens einen Monat zu befristen. Eine Verlängerung um jeweils nicht mehr als einen Monat ist zulässig, soweit die Voraussetzungen unter Berücksichtigung der gewonnenen Ermittlungsergebnisse fortbestehen. Ist die Dauer der Anordnung auf insgesamt sechs Monate verlängert worden, so entscheidet über weitere Verlängerungen das Oberlandesgericht.

(2) Die Anordnung ergeht schriftlich. In der Anordnung sind anzugeben:

1. soweit möglich, der Name und die Anschrift des Beschuldigten, gegen den sich die Maßnahme richtet,
2. der Tatvorwurf, auf Grund dessen die Maßnahme angeordnet wird,
3. die zu überwachende Wohnung oder die zu überwachenden Wohnräume,
4. Art, Umfang und Dauer der Maßnahme,
5. die Art der durch die Maßnahme zu erhebenden Informationen und ihre Bedeutung für das Verfahren.

(3) In der Begründung der Anordnung oder Verlängerung sind deren Voraussetzungen und die wesentlichen Abwägungsgesichtspunkte darzulegen. Insbesondere sind einzelfallbezogen anzugeben:

1. die bestimmten Tatsachen, die den Verdacht begründen,
2. die wesentlichen Erwägungen zur Erforderlichkeit und Verhältnismäßigkeit der Maßnahme,
3. die tatsächlichen Anhaltspunkte im Sinne des § 100c Abs. 4 Satz 1.

(4) Das anordnende Gericht ist über den Verlauf und die Ergebnisse der Maßnahme zu unterrichten. Liegen die Voraussetzungen der Anordnung nicht mehr vor, so hat das Gericht den Abbruch der Maßnahme anzuordnen, sofern der Abbruch nicht bereits durch die Staatsanwaltschaft veranlasst wurde. Die Anordnung des Abbruchs der Maßnahme kann auch durch den Vorsitzenden erfolgen.

(5) Personenbezogene Daten aus einer akustischen Wohnraumüberwachung dürfen für andere Zwecke nach folgenden Maßgaben verwendet werden:

1. Die durch eine Maßnahme nach § 100c erlangten verwertbaren personenbezogenen Daten dürfen in anderen Strafverfahren ohne Einwilligung der insoweit überwachten Personen nur zur Aufklärung einer Straftat, auf Grund derer die Maßnahme nach §

100c angeordnet werden könnte, oder zur Ermittlung des Aufenthalts der einer solchen Straftat beschuldigten Person verwendet werden.

2. Die Verwendung der durch eine Maßnahme nach § 100c erlangten personenbezogenen Daten, auch solcher nach § 100c Abs. 6 Satz 1 Halbsatz 2, zu Zwecken der Gefahrenabwehr ist nur zur Abwehr einer im Einzelfall bestehenden Lebensgefahr oder einer dringenden Gefahr für Leib oder Freiheit einer Person oder Gegenstände von bedeutendem Wert, die der Versorgung der Bevölkerung dienen, von kulturell herausragendem Wert oder in § 305 des Strafgesetzbuches genannt sind, zulässig. Die durch eine Maßnahme nach § 100c erlangten und verwertbaren personenbezogenen Daten dürfen auch zur Abwehr einer im Einzelfall bestehenden dringenden Gefahr für sonstige bedeutende Vermögenswerte verwendet werden. Sind die Daten zur Abwehr der Gefahr oder für eine vorgerichtliche oder gerichtliche Überprüfung der zur Gefahrenabwehr getroffenen Maßnahmen nicht mehr erforderlich, so sind Aufzeichnungen über diese Daten von der für die Gefahrenabwehr zuständigen Stelle unverzüglich zu löschen. Die Löschung ist aktenkundig zu machen. Soweit die Löschung lediglich für eine etwaige vorgerichtliche oder gerichtliche Überprüfung zurückgestellt ist, dürfen die Daten nur für diesen Zweck verwendet werden; für eine Verwendung zu anderen Zwecken sind sie zu sperren.
3. Sind verwertbare personenbezogene Daten durch eine entsprechende polizeirechtliche Maßnahme erlangt worden, dürfen sie in einem Strafverfahren ohne Einwilligung der insoweit überwachten Personen nur zur Aufklärung einer Straftat, auf Grund derer die Maßnahme nach § 100c angeordnet werden könnte, oder zur Ermittlung des Aufenthalts der einer solchen Straftat beschuldigten Person verwendet werden.

§ 100e

(1) Für die nach § 100c angeordneten Maßnahmen gilt § 100b Abs. 5 entsprechend. Vor der Veröffentlichung im Internet berichtet die Bundesregierung dem Deutschen Bundestag über die im jeweils vorangegangenen Kalenderjahr nach § 100c angeordneten Maßnahmen.

(2) In den Berichten nach Absatz 1 sind anzugeben:

1. die Anzahl der Verfahren, in denen Maßnahmen nach § 100c Abs. 1 angeordnet worden sind;
2. die jeweils zugrunde liegende Anlassstraftat nach Maßgabe der Unterteilung in § 100c Abs. 2;
3. ob das Verfahren einen Bezug zur Verfolgung organisierter Kriminalität aufweist;
4. die Anzahl der überwachten Objekte je Verfahren nach Privatwohnungen und sonstigen Wohnungen sowie nach Wohnungen des Beschuldigten und Wohnungen dritter Personen;
5. die Anzahl der überwachten Personen je Verfahren nach Beschuldigten und nichtbeschuldigten Personen;
6. die Dauer der einzelnen Überwachung nach Dauer der Anordnung, Dauer der Verlängerung und Abhördauer;
7. wie häufig eine Maßnahme nach § 100c Abs. 5, § 100d Abs. 4 unterbrochen oder abgebrochen worden ist;
8. ob eine Benachrichtigung der Betroffenen (§ 101 Abs. 4 bis 6) erfolgt ist oder aus welchen Gründen von einer Benachrichtigung abgesehen worden ist;
9. ob die Überwachung Ergebnisse erbracht hat, die für das Verfahren relevant sind oder voraussichtlich relevant sein werden;
10. ob die Überwachung Ergebnisse erbracht hat, die für andere Strafverfahren relevant sind oder voraussichtlich relevant sein werden;
11. wenn die Überwachung keine relevanten Ergebnisse erbracht hat: die Gründe hierfür, differenziert nach technischen Gründen und sonstigen Gründen;
12. die Kosten der Maßnahme, differenziert nach Kosten für Übersetzungsdienste und sonstigen Kosten.

§ 100f

(1) Auch ohne Wissen der Betroffenen darf außerhalb von Wohnungen das nichtöffentlich gesprochene Wort mit technischen Mitteln abgehört und aufgezeichnet werden, wenn bestimmte Tatsachen den Verdacht begründen, dass jemand als Täter oder Teilnehmer eine

in § 100a Abs. 2 bezeichnete, auch im Einzelfall schwerwiegende Straftat begangen oder in Fällen, in denen der Versuch strafbar ist, zu begehen versucht hat, und die Erforschung des Sachverhalts oder die Ermittlung des Aufenthaltsortes eines Beschuldigten auf andere Weise aussichtslos oder wesentlich erschwert wäre.

(2) Die Maßnahme darf sich nur gegen einen Beschuldigten richten. Gegen andere Personen darf die Maßnahme nur angeordnet werden, wenn auf Grund bestimmter Tatsachen anzunehmen ist, dass sie mit einem Beschuldigten in Verbindung stehen oder eine solche Verbindung hergestellt wird, die Maßnahme zur Erforschung des Sachverhalts oder zur Ermittlung des Aufenthaltsortes eines Beschuldigten führen wird und dies auf andere Weise aussichtslos oder wesentlich erschwert wäre.

(3) Die Maßnahme darf auch durchgeführt werden, wenn Dritte unvermeidbar betroffen werden.

(4) § 100b Abs. 1, 4 Satz 1 und § 100d Abs. 2 gelten entsprechend.

§ 100g

(1) Begründen bestimmte Tatsachen den Verdacht, dass jemand als Täter oder Teilnehmer

1. eine Straftat von auch im Einzelfall erheblicher Bedeutung, insbesondere eine in § 100a Abs. 2 bezeichnete Straftat, begangen hat, in Fällen, in denen der Versuch strafbar ist, zu begehen versucht hat oder durch eine Straftat vorbereitet hat oder
2. eine Straftat mittels Telekommunikation begangen hat, so dürfen auch ohne Wissen des Betroffenen Verkehrsdaten (§ 96 Abs. 1, § 113a des Telekommunikationsgesetzes) erhoben werden, soweit dies für die Erforschung des Sachverhalts oder die Ermittlung des Aufenthaltsortes des Beschuldigten erforderlich ist. Im Falle des Satzes 1 Nr. 2 ist die Maßnahme nur zulässig,

wenn die Erforschung des Sachverhalts oder die Ermittlung des Aufenthaltsortes des Beschuldigten auf andere Weise aussichtslos wäre und die Erhebung der Daten in einem angemessenen Verhältnis zur Bedeutung der Sache steht. Die Erhebung von Standortdaten in Echtzeit ist nur im Falle des Satzes 1 Nr. 1 zulässig.

(2) § 100a Abs. 3 und § 100b Abs. 1 bis 4 Satz 1 gelten entsprechend. Abweichend von §

100b Abs. 2 Satz 2 Nr. 2 genügt im Falle einer Straftat von erheblicher Bedeutung eine räumlich und zeitlich hinreichend bestimmte Bezeichnung der Telekommunikation, wenn die Erforschung des Sachverhalts oder die Ermittlung des Aufenthaltsortes des Beschuldigten auf andere Weise aussichtslos oder wesentlich erschwert wäre.

(3) Erfolgt die Erhebung von Verkehrsdaten nicht beim Telekommunikationsdiensteanbieter, bestimmt sie sich nach Abschluss des Kommunikationsvorgangs nach den allgemeinen Vorschriften.

(4) Über Maßnahmen nach Absatz 1 ist entsprechend § 100b Abs. 5 jährlich eine Übersicht zu erstellen, in der anzugeben sind:

1. die Anzahl der Verfahren, in denen Maßnahmen nach Absatz 1 durchgeführt worden sind;
2. die Anzahl der Anordnungen von Maßnahmen nach Absatz 1, unterschieden nach Erst- und Verlängerungsanordnungen;
3. die jeweils zugrunde liegende Anlassstraftat, unterschieden nach Absatz 1 Satz 1 Nr. 1 und 2;
4. die Anzahl der zurückliegenden Monate, für die Verkehrsdaten nach Absatz 1 abgefragt wurden, bemessen ab dem Zeitpunkt der Anordnung;
5. die Anzahl der Maßnahmen, die ergebnislos geblieben sind, weil die abgefragten Daten ganz oder teilweise nicht verfügbar waren.

§ 100h

(1) Auch ohne Wissen der Betroffenen dürfen außerhalb von Wohnungen

1. Bildaufnahmen hergestellt werden,
2. sonstige besondere für Observationszwecke bestimmte technische Mittel verwendet werden, wenn die Erforschung des Sachverhalts oder die Ermittlung des Aufenthaltsortes eines Beschuldigten auf andere Weise weniger erfolgversprechend oder erschwert wäre. Eine Maßnahme nach Satz 1 Nr. 2 ist nur zulässig, wenn Gegenstand der Untersuchung eine Straftat von erheblicher Bedeutung ist.

(2) Die Maßnahmen dürfen sich nur gegen einen Beschuldigten richten. Gegen andere Personen sind

1. Maßnahmen nach Absatz 1 Nr. 1 nur zulässig, wenn die Erforschung des Sachverhalts oder die Ermittlung des Aufenthaltsortes eines Beschuldigten auf andere Weise erheblich weniger erfolgversprechend oder wesentlich erschwert wäre,
2. Maßnahmen nach Absatz 1 Nr. 2 nur zulässig, wenn auf Grund bestimmter Tatsachen anzunehmen ist, dass sie mit einem Beschuldigten in Verbindung stehen oder eine solche Verbindung hergestellt wird, die Maßnahme zur Erforschung des Sachverhalts oder zur Ermittlung des Aufenthaltsortes eines Beschuldigten führen wird und dies auf andere Weise aussichtslos oder wesentlich erschwert wäre.

(3) Die Maßnahmen dürfen auch durchgeführt werden, wenn Dritte unvermeidbar mitbetroffen werden.

§ 100i

(1) Begründen bestimmte Tatsachen den Verdacht, dass jemand als Täter oder Teilnehmer eine Straftat von auch im Einzelfall erheblicher Bedeutung, insbesondere eine in § 100a Abs. 2 bezeichnete Straftat, begangen hat, in Fällen, in denen der Versuch strafbar ist, zu begehen versucht hat oder durch eine Straftat vorbereitet hat, so dürfen durch technische Mittel

1. die Gerätenummer eines Mobilfunkendgerätes und die Kartennummer der darin verwendeten Karte sowie
2. der Standort eines Mobilfunkendgerätes

ermittelt werden, soweit dies für die Erforschung des Sachverhalts oder die Ermittlung des Aufenthaltsortes des Beschuldigten erforderlich ist.

(2) Personenbezogene Daten Dritter dürfen anlässlich solcher Maßnahmen nur erhoben werden, wenn dies aus technischen Gründen zur Erreichung des Zwecks nach Absatz 1 unvermeidbar ist. Über den Datenabgleich zur Ermittlung der gesuchten Geräte- und Kartennummer hinaus dürfen sie nicht verwendet werden und sind nach Beendigung der Maßnahme unverzüglich zu löschen.

(3) § 100a Abs. 3 und § 100b Abs. 1 Satz 1 bis 3, Abs. 2 Satz 1 und Abs. 4 Satz 1 gelten entsprechend. Die Anordnung ist auf höchstens sechs Monate zu befristen. Eine

Verlängerung um jeweils nicht mehr als sechs weitere Monate ist zulässig, soweit die in Absatz 1 bezeichneten Voraussetzungen fortbestehen.

§ 101

(1) Für Maßnahmen nach den §§ 98a, 99, 100a, 100c bis 100i, 110a, 163d bis 163f gelten, soweit nichts anderes bestimmt ist, die nachstehenden Regelungen.

(2) Entscheidungen und sonstige Unterlagen über Maßnahmen nach den §§ 100c, 100f, 100h Abs. 1 Nr. 2 und § 110a werden bei der Staatsanwaltschaft verwahrt. Zu den Akten sind sie erst zu nehmen, wenn die Voraussetzungen für eine Benachrichtigung nach Absatz 5 erfüllt sind.

(3) Personenbezogene Daten, die durch Maßnahmen nach Absatz 1 erhoben wurden, sind entsprechend zu kennzeichnen. Nach einer Übermittlung an eine andere Stelle ist die Kennzeichnung durch diese aufrechtzuerhalten.

(4) Von den in Absatz 1 genannten Maßnahmen sind im Falle

1. des § 98a die betroffenen Personen, gegen die nach Auswertung der Daten weitere Ermittlungen geführt wurden,
2. des § 99 der Absender und der Adressat der Postsendung,
3. des § 100a die Beteiligten der überwachten Telekommunikation,
4. des § 100c
   a) der Beschuldigte, gegen den sich die Maßnahme richtete,
   b) sonstige überwachte Personen,
   c) Personen, die die überwachte Wohnung zur Zeit der Durchführung der Maßnahme innehatten oder bewohnten,
5. des § 100f die Zielperson sowie die erheblich mitbetroffenen Personen,
6. des § 100g die Beteiligten der betroffenen Telekommunikation,
7. des § 100h Abs. 1 die Zielperson sowie die erheblich mitbetroffenen Personen,
8. des § 100i die Zielperson,
9. des § 110a
   a) die Zielperson,

b) die erheblich mitbetroffenen Personen,

c) die Personen, deren nicht allgemein zugängliche Wohnung der Verdeckte Ermittler betreten hat,

10. des § 163d die betroffenen Personen, gegen die nach Auswertung der Daten weitere Ermittlungen geführt wurden,

11. des § 163e die Zielperson und die Person, deren personenbezogene Daten gemeldet worden sind,

12. des § 163f die Zielperson sowie die erheblich mitbetroffenen Personen

zu benachrichtigen. Dabei ist auf die Möglichkeit nachträglichen Rechtsschutzes nach Absatz 7 und die dafür vorgesehene Frist hinzuweisen. Die Benachrichtigung unterbleibt, wenn ihr überwiegende schutzwürdige Belange einer betroffenen Person entgegenstehen. Zudem kann die Benachrichtigung einer in Satz 1 Nr. 2, 3 und 6 bezeichneten Person, gegen die sich die Maßnahme nicht gerichtet hat, unterbleiben, wenn diese von der Maßnahme nur unerheblich betroffen wurde und anzunehmen ist, dass sie kein Interesse an einer Benachrichtigung hat. Nachforschungen zur Feststellung der Identität einer in Satz 1 bezeichneten Person sind nur vorzunehmen, wenn dies unter Berücksichtigung der Eingriffsintensität der Maßnahme gegenüber dieser Person, des Aufwands für die Feststellung ihrer Identität sowie der daraus für diese oder andere Personen folgenden Beeinträchtigungen geboten ist.

(5) Die Benachrichtigung erfolgt, sobald dies ohne Gefährdung des Untersuchungszwecks, des Lebens, der körperlichen Unversehrtheit und der persönlichen Freiheit einer Person und von bedeutenden Vermögenswerten, im Fall des § 110a auch der Möglichkeit der weiteren Verwendung des Verdeckten Ermittlers möglich ist. Wird die Benachrichtigung nach Satz 1 zurückgestellt, sind die Gründe aktenkundig zu machen.

(6) Erfolgt die nach Absatz 5 zurückgestellte Benachrichtigung nicht binnen zwölf Monaten nach Beendigung der Maßnahme, bedürfen weitere Zurückstellungen der gerichtlichen Zustimmung. Das Gericht bestimmt die Dauer weiterer Zurückstellungen. Es kann dem endgültigen Absehen von der Benachrichtigung zustimmen, wenn die Voraussetzungen für eine Benachrichtigung mit an Sicherheit grenzender Wahrscheinlichkeit auch in Zukunft

nicht eintreten werden. Sind mehrere Maßnahmen in einem engen zeitlichen Zusammenhang durchgeführt worden, so beginnt die in Satz 1 genannte Frist mit der Beendigung der letzten Maßnahme. Im Fall des § 100c beträgt die in Satz 1 genannte Frist sechs Monate.

(7) Gerichtliche Entscheidungen nach Absatz 6 trifft das für die Anordnung der Maßnahme zuständige Gericht, im Übrigen das Gericht am Sitz der zuständigen Staatsanwaltschaft. Die in Absatz 4 Satz 1 genannten Personen können bei dem nach Satz 1 zuständigen Gericht auch nach Beendigung der Maßnahme bis zu zwei Wochen nach ihrer Benachrichtigung die Überprüfung der Rechtmäßigkeit der Maßnahme sowie der Art und Weise ihres Vollzugs beantragen. Gegen die Entscheidung ist die sofortige Beschwerde statthaft. Ist die öffentliche Klage erhoben und der Angeklagte benachrichtigt worden, entscheidet über den Antrag das mit der Sache befasste Gericht in der das Verfahren abschließenden Entscheidung.

(8) Sind die durch die Maßnahme erlangten personenbezogenen Daten zur Strafverfolgung und für eine etwaige gerichtliche Überprüfung der Maßnahme nicht mehr erforderlich, so sind sie unverzüglich zu löschen. Die Löschung ist aktenkundig zu machen. Soweit die Löschung lediglich für eine etwaige gerichtliche Überprüfung der Maßnahme zurückgestellt ist, dürfen die Daten ohne Einwilligung der Betroffenen nur zu diesem Zweck verwendet werden; sie sind entsprechend zu sperren.

§ 102

Bei dem, welcher als Täter oder Teilnehmer einer Straftat oder der Begünstigung, Strafvereitelung oder Hehlerei verdächtig ist, kann eine Durchsuchung der Wohnung und anderer Räume sowie seiner Person und der ihm gehörenden Sachen sowohl zum Zweck seiner Ergreifung als auch dann vorgenommen werden, wenn zu vermuten ist, daß die Durchsuchung zur Auffindung von Beweismitteln führen werde.

§ 103

(1) Bei anderen Personen sind Durchsuchungen nur zur Ergreifung des Beschuldigten oder zur Verfolgung von Spuren einer Straftat oder zur Beschlagnahme bestimmter Gegenstände

und nur dann zulässig, wenn Tatsachen vorliegen, aus denen zu schließen ist, daß die gesuchte Person, Spur oder Sache sich in den zu durchsuchenden Räumen befindet. Zum Zwecke der Ergreifung eines Beschuldigten, der dringend verdächtig ist, eine Straftat nach § 89a des Strafgesetzbuchs oder nach § 129a, auch in Verbindung mit § 129b Abs. 1, des Strafgesetzbuches oder eine der in dieser Vorschrift bezeichneten Straftaten begangen zu haben, ist eine Durchsuchung von Wohnungen und anderen Räumen auch zulässig, wenn diese sich in einem Gebäude befinden, von dem auf Grund von Tatsachen anzunehmen ist, daß sich der Beschuldigte in ihm aufhält.

(2) Die Beschränkungen des Absatzes 1 Satz 1 gelten nicht für Räume, in denen der Beschuldigte ergriffen worden ist oder die er während der Verfolgung betreten hat.

§ 104

(1) Zur Nachtzeit dürfen die Wohnung, die Geschäftsräume und das befriedete Besitztum nur bei Verfolgung auf frischer Tat oder bei Gefahr im Verzug oder dann durchsucht werden, wenn es sich um die Wiederergreifung eines entwichenen Gefangenen handelt.

(2) Diese Beschränkung gilt nicht für Räume, die zur Nachtzeit jedermann zugänglich oder die der Polizei als Herbergen oder Versammlungsorte bestrafter Personen, als Niederlagen von Sachen, die mittels Straftaten erlangt sind, oder als Schlupfwinkel des Glücksspiels, des unerlaubten Betäubungsmittel- und Waffenhandels oder der Prostitution bekannt sind.

(3) Die Nachtzeit umfaßt in dem Zeitraum vom ersten April bis dreißigsten September die Stunden von neun Uhr abends bis vier Uhr morgens und in dem Zeitraum vom ersten Oktober bis einunddreißigsten März die Stunden von neun Uhr abends bis sechs Uhr morgens.

§ 105

(1) Durchsuchungen dürfen nur durch den Richter, bei Gefahr im Verzug auch durch die Staatsanwaltschaft und ihre Ermittlungspersonen (§ 152 des Gerichtsverfassungsgesetzes) angeordnet werden. Durchsuchungen nach § 103 Abs. 1 Satz 2 ordnet der Richter an; die Staatsanwaltschaft ist hierzu befugt, wenn Gefahr im Verzug ist.

(2) Wenn eine Durchsuchung der Wohnung, der Geschäftsräume oder des befriedeten Besitztums ohne Beisein des Richters oder des Staatsanwalts stattfindet, so sind, wenn möglich, ein Gemeindebeamter oder zwei Mitglieder der Gemeinde, in deren Bezirk die Durchsuchung erfolgt, zuzuziehen. Die als Gemeindemitglieder zugezogenen Personen dürfen nicht Polizeibeamte oder Ermittlungspersonen der Staatsanwaltschaft sein.

(3) Wird eine Durchsuchung in einem Dienstgebäude oder einer nicht allgemein zugänglichen Einrichtung oder Anlage der Bundeswehr erforderlich, so wird die vorgesetzte Dienststelle der Bundeswehr um ihre Durchführung ersucht. Die ersuchende Stelle ist zur Mitwirkung berechtigt. Des Ersuchens bedarf es nicht, wenn die Durchsuchung von Räumen vorzunehmen ist, die ausschließlich von anderen Personen als Soldaten bewohnt werden.

§ 106

(1) Der Inhaber der zu durchsuchenden Räume oder Gegenstände darf der Durchsuchung beiwohnen. Ist er abwesend, so ist, wenn möglich, sein Vertreter oder ein erwachsener Angehöriger, Hausgenosse oder Nachbar zuzuziehen.

(2) Dem Inhaber oder der in dessen Abwesenheit zugezogenen Person ist in den Fällen des § 103 Abs. 1 der Zweck der Durchsuchung vor deren Beginn bekanntzumachen. Diese Vorschrift gilt nicht für die Inhaber der in § 104 Abs. 2 bezeichneten Räume.

§ 107

Dem von der Durchsuchung Betroffenen ist nach deren Beendigung auf Verlangen eine schriftliche Mitteilung zu machen, die den Grund der Durchsuchung (§§ 102, 103) sowie im Falle des § 102 die Straftat bezeichnen muß. Auch ist ihm auf Verlangen ein Verzeichnis der in Verwahrung oder in Beschlag genommenen Gegenstände, falls aber nichts Verdächtiges gefunden wird, eine Bescheinigung hierüber zu geben.

§ 108

(1) Werden bei Gelegenheit einer Durchsuchung Gegenstände gefunden, die zwar in keiner Beziehung zu der Untersuchung stehen, aber auf die Verübung einer anderen Straftat

hindeuten, so sind sie einstweilen in Beschlag zu nehmen. Der Staatsanwaltschaft ist hiervon Kenntnis zu geben. Satz 1 findet keine Anwendung, soweit eine Durchsuchung nach § 103 Abs. 1 Satz 2 stattfindet.

(2) Werden bei einem Arzt Gegenstände im Sinne von Absatz 1 Satz 1 gefunden, die den Schwangerschaftsabbruch einer Patientin betreffen, ist ihre Verwertung zu Beweiszwecken in einem Strafverfahren gegen die Patientin wegen einer Straftat nach § 218 des Strafgesetzbuches unzulässig.

(3) Werden bei einer in § 53 Abs. 1 Satz 1 Nr. 5 genannten Person Gegenstände im Sinne von Absatz 1 Satz 1 gefunden, auf die sich das Zeugnisverweigerungsrecht der genannten Person erstreckt, ist die Verwertung des Gegenstandes zu Beweiszwecken in einem Strafverfahren nur insoweit zulässig, als Gegenstand dieses Strafverfahrens eine Straftat ist, die im Höchstmaß mit mindestens fünf Jahren Freiheitsstrafe bedroht ist und bei der es sich nicht um eine Straftat nach § 353b des Strafgesetzbuches handelt.

§ 109

Die in Verwahrung oder in Beschlag genommenen Gegenstände sind genau zu verzeichnen und zur Verhütung von Verwechslungen durch amtliche Siegel oder in sonst geeigneter Weise kenntlich zu machen.

§ 110

(1) Die Durchsicht der Papiere des von der Durchsuchung Betroffenen steht der Staatsanwaltschaft und auf deren Anordnung ihren Ermittlungspersonen (§ 152 des Gerichtsverfassungsgesetzes) zu.

(2) Im Übrigen sind Beamte zur Durchsicht der aufgefundenen Papiere nur dann befugt, wenn der Inhaber die Durchsicht genehmigt. Andernfalls haben sie die Papiere, deren Durchsicht sie für geboten erachten, in einem Umschlag, der in Gegenwart des Inhabers mit dem Amtssiegel zu verschließen ist, an die Staatsanwaltschaft abzuliefern.

(3) Die Durchsicht eines elektronischen Speichermediums bei dem von der Durchsuchung Betroffenen darf auch auf hiervon räumlich getrennte Speichermedien, soweit auf sie von dem Speichermedium aus zugegriffen werden kann, erstreckt werden, wenn andernfalls der

Verlust der gesuchten Daten zu besorgen ist. Daten, die für die Untersuchung von Bedeutung sein können, dürfen gesichert werden; § 98 Abs. 2 gilt entsprechend.

§ 110a

(1) Verdeckte Ermittler dürfen zur Aufklärung von Straftaten eingesetzt werden, wenn zureichende tatsächliche Anhaltspunkte dafür vorliegen, daß eine Straftat von erheblicher Bedeutung

1. auf dem Gebiet des unerlaubten Betäubungsmittel- oder Waffenverkehrs, der Geld- oder Wertzeichenfälschung,
2. auf dem Gebiet des Staatsschutzes (§§ 74a, 120 des Gerichtsverfassungsgesetzes),
3. gewerbs- oder gewohnheitsmäßig oder
4. von einem Bandenmitglied oder in anderer Weise organisiert

begangen worden ist. Zur Aufklärung von Verbrechen dürfen Verdeckte Ermittler auch eingesetzt werden, soweit auf Grund bestimmter Tatsachen die Gefahr der Wiederholung besteht. Der Einsatz ist nur zulässig, soweit die Aufklärung auf andere Weise aussichtslos oder wesentlich erschwert wäre. Zur Aufklärung von Verbrechen dürfen Verdeckte Ermittler außerdem eingesetzt werden, wenn die besondere Bedeutung der Tat den Einsatz gebietet und andere Maßnahmen aussichtslos wären.

(2) Verdeckte Ermittler sind Beamte des Polizeidienstes, die unter einer ihnen verliehenen, auf Dauer angelegten, veränderten Identität (Legende) ermitteln. Sie dürfen unter der Legende am Rechtsverkehr teilnehmen.

(3) Soweit es für den Aufbau oder die Aufrechterhaltung der Legende unerläßlich ist, dürfen entsprechende Urkunden hergestellt, verändert und gebraucht werden.

§ 110b

(1) Der Einsatz eines Verdeckten Ermittlers ist erst nach Zustimmung der Staatsanwaltschaft zulässig. Besteht Gefahr im Verzug und kann die Entscheidung der Staatsanwaltschaft nicht rechtzeitig eingeholt werden, so ist sie unverzüglich herbeizuführen; die Maßnahme ist zu beenden, wenn nicht die Staatsanwaltschaft binnen drei Werktagen zustimmt. Die

Zustimmung ist schriftlich zu erteilen und zu befristen. Eine Verlängerung ist zulässig, solange die Voraussetzungen für den Einsatz fortbestehen.

(2) Einsätze,

1. die sich gegen einen bestimmten Beschuldigten richten oder

2. bei denen der Verdeckte Ermittler eine Wohnung betritt, die nicht allgemein zugänglich ist,

bedürfen der Zustimmung des Gerichts. Bei Gefahr im Verzug genügt die Zustimmung der Staatsanwaltschaft. Kann die Entscheidung der Staatsanwaltschaft nicht rechtzeitig eingeholt werden, so ist sie unverzüglich herbeizuführen. Die Maßnahme ist zu beenden, wenn nicht das Gericht binnen drei Werktagen zustimmt. Absatz 1 Satz 3 und 4 gilt entsprechend.

(3) Die Identität des Verdeckten Ermittlers kann auch nach Beendigung des Einsatzes geheimgehalten werden. Die Staatsanwaltschaft und das Gericht, die für die Entscheidung über die Zustimmung zu dem Einsatz zuständig sind, können verlangen, daß die Identität ihnen gegenüber offenbart wird. Im übrigen ist in einem Strafverfahren die Geheimhaltung der Identität nach Maßgabe des § 96 zulässig, insbesondere dann, wenn Anlaß zu der Besorgnis besteht, daß die Offenbarung Leben, Leib oder Freiheit des Verdeckten Ermittlers oder einer anderen Person oder die Möglichkeit der weiteren Verwendung des Verdeckten Ermittlers gefährden würde.

§ 110c

Verdeckte Ermittler dürfen unter Verwendung ihrer Legende eine Wohnung mit dem Einverständnis des Berechtigten betreten. Das Einverständnis darf nicht durch ein über die Nutzung der Legende hinausgehendes Vortäuschen eines Zutrittsrechts herbeigeführt werden. Im übrigen richten sich die Befugnisse des Verdeckten Ermittlers nach diesem Gesetz und anderen Rechtsvorschriften.

§ 110d (weggefallen)

§ 110e (weggefallen)

§ 111

(1) Begründen bestimmte Tatsachen den Verdacht, daß eine Straftat nach § 89a des Strafgesetzbuchs oder nach § 129a, auch in Verbindung mit § 129b Abs. 1, des Strafgesetzbuches, eine der in dieser Vorschrift bezeichneten Straftaten oder eine Straftat nach § 250 Abs. 1 Nr. 1 des Strafgesetzbuches begangen worden ist, so können auf öffentlichen Straßen und Plätzen und an anderen öffentlich zugänglichen Orten Kontrollstellen eingerichtet werden, wenn Tatsachen die Annahme rechtfertigen, daß diese Maßnahme zur Ergreifung des Täters oder zur Sicherstellung von Beweismitteln führen kann, die der Aufklärung der Straftat dienen können. An einer Kontrollstelle ist jedermann verpflichtet, seine Identität feststellen und sich sowie mitgeführte Sachen durchsuchen zu lassen.

(2) Die Anordnung, eine Kontrollstelle einzurichten, trifft der Richter; die Staatsanwaltschaft und ihre Ermittlungspersonen (§ 152 des Gerichtsverfassungsgesetzes) sind hierzu befugt, wenn Gefahr im Verzug ist.

(3) Für die Durchsuchung und die Feststellung der Identität nach Absatz 1 gelten § 106 Abs. 2 Satz 1, § 107 Satz 2 erster Halbsatz, die §§ 108, 109, 110 Abs. 1 und 2 sowie die §§ 163b und 163c entsprechend.

§ 111a

(1) Sind dringende Gründe für die Annahme vorhanden, daß die Fahrerlaubnis entzogen werden wird (§ 69 des Strafgesetzbuches), so kann der Richter dem Beschuldigten durch Beschluß die Fahrerlaubnis vorläufig entziehen. Von der vorläufigen Entziehung können bestimmte Arten von Kraftfahrzeugen ausgenommen werden, wenn besondere Umstände die Annahme rechtfertigen, daß der Zweck der Maßnahme dadurch nicht gefährdet wird.

(2) Die vorläufige Entziehung der Fahrerlaubnis ist aufzuheben, wenn ihr Grund weggefallen ist oder wenn das Gericht im Urteil die Fahrerlaubnis nicht entzieht.

(3) Die vorläufige Entziehung der Fahrerlaubnis wirkt zugleich als Anordnung oder Bestätigung der Beschlagnahme des von einer deutschen Behörde ausgestellten Führerscheins. Dies gilt auch, wenn der Führerschein von einer Behörde eines Mitgliedstaates der

Europäischen Union oder eines anderen Vertragsstaates des Abkommens über den Europäischen Wirtschaftsraum ausgestellt worden ist, sofern der Inhaber seinen ordentlichen Wohnsitz im Inland hat.

(4) Ist ein Führerschein beschlagnahmt, weil er nach § 69 Abs. 3 Satz 2 des Strafgesetzbuches eingezogen werden kann, und bedarf es einer richterlichen Entscheidung über die Beschlagnahme, so tritt an deren Stelle die Entscheidung über die vorläufige Entziehung der Fahrerlaubnis.

(5) Ein Führerschein, der in Verwahrung genommen, sichergestellt oder beschlagnahmt ist, weil er nach § 69 Abs. 3 Satz 2 des Strafgesetzbuches eingezogen werden kann, ist dem Beschuldigten zurückzugeben, wenn der Richter die vorläufige Entziehung der Fahrerlaubnis wegen Fehlens der in Absatz 1 bezeichneten Voraussetzungen ablehnt, wenn er sie aufhebt oder wenn das Gericht im Urteil die Fahrerlaubnis nicht entzieht. Wird jedoch im Urteil ein Fahrverbot nach § 44 des Strafgesetzbuches verhängt, so kann die Rückgabe des Führerscheins aufgeschoben werden, wenn der Beschuldigte nicht widerspricht.

(6) In anderen als in Absatz 3 Satz 2 genannten ausländischen Führerscheinen ist die vorläufige Entziehung der Fahrerlaubnis zu vermerken. Bis zur Eintragung dieses Vermerkes kann der Führerschein beschlagnahmt werden(§ 94 Abs. 3, § 98).

§ 111b

(1) Gegenstände können durch Beschlagnahme nach § 111c sichergestellt werden, wenn Gründe für die Annahme vorhanden sind, daß die Voraussetzungen für ihren Verfall oder ihre Einziehung vorliegen. § 94 Abs. 3 bleibt unberührt.

(2) Sind Gründe für die Annahme vorhanden, daß die Voraussetzungen des Verfalls von Wertersatz oder der Einziehung von Wertersatz vorliegen, kann zu deren Sicherung nach § 111d der dingliche Arrest angeordnet werden.

(3) Liegen dringende Gründe nicht vor, so hebt das Gericht die Anordnung der in Absatz 1 Satz 1 und Absatz 2 genannten Maßnahmen spätestens nach sechs Monaten auf. Begründen bestimmte Tatsachen den Tatverdacht und reicht die in Satz 1 bezeichnete Frist

wegen der besonderen Schwierigkeit oder des besonderen Umfangs der Ermittlungen oder wegen eines anderen wichtigen Grundes nicht aus, so kann das Gericht auf Antrag der Staatsanwaltschaft die Maßnahme verlängern, wenn die genannten Gründe ihre Fortdauer rechtfertigen. Ohne Vorliegen dringender Gründe darf die Maßnahme über zwölf Monate hinaus nicht aufrechterhalten werden.

(4) Die §§ 102 bis 110 gelten entsprechend.

(5) Die Absätze 1 bis 4 gelten entsprechend, soweit der Verfall nur deshalb nicht angeordnet werden kann, weil die Voraussetzungen des § 73 Abs. 1 Satz 2 des Strafgesetzbuches vorliegen.

§ 111c

(1) Die Beschlagnahme einer beweglichen Sache wird in den Fällen des § 111b dadurch bewirkt, daß die Sache in Gewahrsam genommen oder die Beschlagnahme durch Siegel oder in anderer Weise kenntlich gemacht wird.

(2) Die Beschlagnahme eines Grundstückes oder eines Rechtes, das den Vorschriften über die Zwangsvollstreckung in das unbewegliche Vermögen unterliegt, wird dadurch bewirkt, daß ein Vermerk über die Beschlagnahme in das Grundbuch eingetragen wird. Die Vorschriften des Gesetzes über die Zwangsversteigerung und die Zwangsverwaltung über den Umfang der Beschlagnahme bei der Zwangsversteigerung gelten entsprechend.

(3) Die Beschlagnahme einer Forderung oder eines anderen Vermögensrechtes, das nicht den Vorschriften über die Zwangsvollstreckung in das unbewegliche Vermögen unterliegt, wird durch Pfändung bewirkt. Die Vorschriften der Zivilprozeßordnung über die Zwangsvollstreckung in Forderungen und andere Vermögensrechte sind insoweit sinngemäß anzuwenden. Mit der Beschlagnahme ist die Aufforderung zur Abgabe der in § 840 Abs. 1 der Zivilprozeßordnung bezeichneten Erklärungen zu verbinden.

(4) Die Beschlagnahme von Schiffen, Schiffsbauwerken und Luftfahrzeugen wird nach Absatz 1 bewirkt. Bei solchen Schiffen, Schiffsbauwerken und Luftfahrzeugen, die im Schiffsregister, Schiffsbauregister oder Register für Pfandrechte an Luftfahrzeugen eingetragen sind, ist die Beschlagnahme im Register einzutragen. Nicht eingetragene, aber eintragungsfähige

Schiffsbauwerke oder Luftfahrzeuge können zu diesem Zweck zur Eintragung angemeldet werden; die Vorschriften, die bei der Anmeldung durch eine Person, die auf Grund eines vollstreckbaren Titels eine Eintragung in das Register verlangen kann, anzuwenden sind, gelten hierbei entsprechend.

(5) Die Beschlagnahme eines Gegenstandes nach den Absätzen 1 bis 4 hat die Wirkung eines Veräußerungsverbotes im Sinne des § 136 des Bürgerlichen Gesetzbuches; das Verbot umfaßt auch andere Verfügungen als Veräußerungen.

(6) Eine beschlagnahmte bewegliche Sache kann dem Betroffenen

1. gegen sofortige Erlegung des Wertes zurückgegeben oder
2. unter dem Vorbehalt jederzeitigen Widerrufs zur vorläufigen weiteren Benutzung bis zum Abschluß des Verfahrens überlassen

werden. Der nach Satz 1 Nr. 1 erlegte Betrag tritt an die Stelle der Sache. Die Maßnahme nach Satz 1 Nr. 2 kann davon abhängig gemacht werden, daß der Betroffene Sicherheit leistet oder bestimmte Auflagen erfüllt.

§ 111d

(1) Wegen des Verfalls oder der Einziehung von Wertersatz, wegen einer Geldstrafe oder der voraussichtlich entstehenden Kosten des Strafverfahrens kann der dingliche Arrest angeordnet werden. Wegen einer Geldstrafe und der voraussichtlich entstehenden Kosten darf der Arrest erst angeordnet werden, wenn gegen den Beschuldigten ein auf Strafe lautendes Urteil ergangen ist. Zur Sicherung der Vollstreckungskosten sowie geringfügiger Beträge ergeht kein Arrest.

(2) Die §§ 917 und 920 Abs. 1 sowie die §§ 923, 928, 930 bis 932 und 934 Abs. 1 der Zivilprozeßordnung gelten sinngemäß.

(3) Ist der Arrest wegen einer Geldstrafe oder der voraussichtlich entstehenden Kosten angeordnet worden, so ist eine Vollziehungsmaßnahme auf Antrag des Beschuldigten aufzuheben, soweit der Beschuldigte den Pfandgegenstand zur Aufbringung der Kosten seiner Verteidigung, seines Unterhalts oder des Unterhalts seiner Familie benötigt.

§ 111e

(1) Zu der Anordnung der Beschlagnahme (§ 111c) und des Arrestes (§ 111d) ist nur das Gericht, bei Gefahr im Verzug auch die Staatsanwaltschaft befugt. Zur Anordnung der Beschlagnahme einer beweglichen Sache(§ 111c Abs. 1) sind bei Gefahr im Verzuge auch die Ermittlungspersonen der Staatsanwaltschaft (§ 152 des Gerichtsverfassungsgesetzes) befugt.

(2) Hat die Staatsanwaltschaft die Beschlagnahme oder den Arrest angeordnet, so beantragt sie innerhalb einer Woche die gerichtliche Bestätigung der Anordnung. Dies gilt nicht, wenn die Beschlagnahme einer beweglichen Sache angeordnet ist. Der Betroffene kann in allen Fällen jederzeit die Entscheidung des Gerichts beantragen.

(3) Der Vollzug der Beschlagnahme und des Arrestes ist dem durch die Tat Verletzten, soweit er bekannt ist oder im Verlauf des Verfahrens bekannt wird, unverzüglich durch die Staatsanwaltschaft mitzuteilen.

(4) Die Mitteilung kann durch einmalige Bekanntmachung im elektronischen Bundesanzeiger erfolgen, wenn eine Mitteilung gegenüber jedem einzelnen Verletzten mit unverhältnismäßigem Aufwand verbunden wäre oder wenn zu vermuten ist, dass noch unbekannten Verletzten aus der Tat Ansprüche erwachsen sind. Zusätzlich kann die Mitteilung auch in anderer geeigneter Weise veröffentlicht werden. Personendaten dürfen nur veröffentlicht werden, soweit ihre Angabe unerlässlich ist, um den Verletzten zur Durchsetzung ihrer Ansprüche den Zugriff auf die gesicherten Vermögenswerte zu ermöglichen. Nach Beendigung der Sicherungsmaßnahmen veranlasst die Staatsanwaltschaft die Löschung der im elektronischen Bundesanzeiger vorgenommenen Veröffentlichung.

§ 111f

(1) Die Durchführung der Beschlagnahme (§ 111c) obliegt der Staatsanwaltschaft, bei beweglichen Sachen (§ 111c Abs. 1) auch deren Ermittlungspersonen. § 98 Abs. 4 gilt entsprechend.

(2) Die erforderlichen Eintragungen in das Grundbuch sowie in die in § 111c Abs. 4 genannten Register werden auf Ersuchen der Staatsanwaltschaft oder des Gerichts bewirkt, welches die Beschlagnahme angeordnet hat. Entsprechendes gilt für die in § 111c Abs. 4

erwähnten Anmeldungen.

(3) Soweit ein Arrest nach den Vorschriften über die Pfändung in bewegliche Sachen zu vollziehen ist, kann dies durch die in § 2 der Justizbeitreibungsordnung bezeichnete Behörde, den Gerichtsvollzieher, die Staatsanwaltschaft oder durch deren Ermittlungspersonen (§ 152 des Gerichtsverfassungsgesetzes) bewirkt werden. Absatz 2 gilt entsprechend. Für die Anordnung der Pfändung eines eingetragenen Schiffes oder Schiffsbauwerkes sowie für die Pfändung einer Forderung aufgrund des Arrestes gemäß § 111d ist die Staatsanwaltschaft oder auf deren Antrag das Gericht, das den Arrest angeordnet hat, zuständig.

(4) Für die Zustellung gilt § 37 Abs. 1 mit der Maßgabe, dass auch die Ermittlungspersonen der Staatsanwaltschaft (§ 152 des Gerichtsverfassungsgesetzes) mit der Ausführung beauftragt werden können.

(5) Gegen Maßnahmen, die in Vollziehung der Beschlagnahme oder des Arrestes getroffen werden, kann der Betroffene jederzeit die Entscheidung des Gerichts beantragen.

§ 111g

(1) Die Beschlagnahme eines Gegenstandes nach § 111c und die Vollziehung des Arrestes nach § 111d wirken nicht gegen eine Verfügung des Verletzten, die auf Grund eines aus der Straftat erwachsenen Anspruches im Wege der Zwangsvollstreckung oder der Arrestvollziehung erfolgt.

(2) Die Zwangsvollstreckung oder Arrestvollziehung nach Absatz 1 bedarf der Zulassung durch das Gericht, das für die Anordnung der Beschlagnahme (§ 111c) oder des Arrestes (§ 111d) zuständig ist. Die Entscheidung ergeht durch Beschluß, der von der Staatsanwaltschaft, dem Beschuldigten und dem Verletzten mit sofortiger Beschwerde angefochten werden kann. Die Zulassung ist zu versagen, wenn der Verletzte nicht glaubhaft macht, daß der Anspruch aus der Straftat erwachsen ist. § 294 der Zivilprozeßordnung ist anzuwenden.

(3) Das Veräußerungsverbot nach § 111c Abs. 5 gilt vom Zeitpunkt der Beschlagnahme an auch zugunsten von Verletzten, die während der Dauer der Beschlagnahme in den beschlagnahmten Gegenstand die Zwangsvollstreckung betreiben oder den Arrest

vollziehen. Die Eintragung des Veräußerungsverbotes im Grundbuch zugunsten des Staates gilt für die Anwendung des § 892 Abs. 1 Satz 2 des Bürgerlichen Gesetzbuches auch als Eintragung zugunsten solcher Verletzter, die während der Dauer der Beschlagnahme als Begünstigte aus dem Veräußerungsverbot in das Grundbuch eingetragen werden. Der Nachweis, daß der Anspruch aus der Straftat erwachsen ist, kann gegenüber dem Grundbuchamt durch Vorlage des Zulassungsbeschlusses geführt werden. Die Sätze 2 und 3 gelten sinngemäß für das Veräußerungsverbot bei den in § 111c Abs. 4 genannten Schiffen, Schiffsbauwerken und Luftfahrzeugen. Die Wirksamkeit des Veräußerungsverbotes zugunsten des Verletzten wird durch die Aufhebung der Beschlagnahme nicht berührt. Die Sätze 1 und 5 gelten entsprechend für die Wirkung des Pfandrechts, das durch die Vollziehung eines Arrestes (§ 111d) in das bewegliche Vermögen entstanden ist.

(4) Unterliegt der Gegenstand, der beschlagnahmt oder aufgrund des Arrestes gepfändet worden ist, aus anderen als den in § 73 Abs. 1 Satz 2 des Strafgesetzbuches bezeichneten Gründen nicht dem Verfall oder ist die Zulassung zu Unrecht erfolgt, so ist der Verletzte Dritten zum Ersatz des Schadens verpflichtet, der ihnen dadurch entsteht, daß das Veräußerungsverbot nach Absatz 3 zu seinen Gunsten gilt.

(5) Die Absätze 1 bis 4 gelten entsprechend, wenn der Verfall eines Gegenstandes angeordnet, die Anordnung aber noch nicht rechtskräftig ist. Sie gelten nicht, wenn der Gegenstand der Einziehung unterliegt.

§ 111h

(1) Betreibt der Verletzte wegen eines aus der Straftat erwachsenen Anspruches die Zwangsvollstreckung oder vollzieht er einen Arrest in ein Grundstück, in welches ein Arrest nach § 111d vollzogen ist, so kann er verlangen, daß die durch den Vollzug dieses Arrestes begründete Sicherungshypothek hinter seinem Recht im Rang zurücktritt. Der dem vortretenden Recht eingeräumte Rang geht nicht dadurch verloren, daß der Arrest aufgehoben wird. Die Zustimmung des Eigentümers zur Rangänderung ist nicht erforderlich. Im übrigen ist § 880 des Bürgerlichen Gesetzbuches sinngemäß anzuwenden.

(2) Die Rangänderung bedarf der Zulassung durch den Richter, der für den Arrest (§ 111d)

zuständig ist. § 111g Abs. 2 Satz 2 bis 4 und Abs. 3 Satz 3 ist entsprechend anzuwenden.

(3) Ist die Zulassung zu Unrecht erfolgt, so ist der Verletzte Dritten zum Ersatz des Schadens verpflichtet, der ihnen durch die Rangänderung entsteht.

(4) Die Absätze 1 bis 3 gelten entsprechend, wenn der Arrest nach § 111d in ein Schiff, Schiffsbauwerk oder Luftfahrzeug im Sinne des § 111c Abs. 4 Satz 2 vollzogen ist.

§ 111i

(1) Das Gericht kann anordnen, dass die Beschlagnahme nach § 111c oder der Arrest nach § 111d für die Dauer von höchstens drei Monaten aufrechterhalten wird, soweit das Verfahren nach den §§ 430 und 442 Abs. 1 auf die anderen Rechtsfolgen beschränkt worden ist und die sofortige Aufhebung gegenüber dem Verletzten unbillig wäre.

(2) Hat das Gericht lediglich deshalb nicht auf Verfall erkannt, weil Ansprüche eines Verletzten im Sinne des § 73 Abs. 1 Satz 2 des Strafgesetzbuchs entgegenstehen, kann es dies im Urteil feststellen. In diesem Fall hat es das Erlangte zu bezeichnen. Liegen insoweit die Voraussetzungen des § 73a des Strafgesetzbuchs vor, stellt es im Urteil den Geldbetrag fest, der dem Wert des Erlangten entspricht. Soweit

1. der Verletzte bereits im Wege der Zwangsvollstreckung oder der Arrestvollziehung verfügt hat,
2. der Verletzte nachweislich aus Vermögen befriedigt wurde, das nicht beschlagnahmt oder im Wege der Arrestvollziehung gepfändet worden ist, oder
3. dem Verletzten die erlangte Sache nach § 111k herausgegeben worden ist,

ist dies im Rahmen der nach den Sätzen 2 und 3 zu treffenden Feststellungen in Abzug zu bringen.

(3) Soweit das Gericht nach Absatz 2 verfährt, hält es die Beschlagnahme (§ 111c) des im Sinne des Absatzes 2 Satz 2 und 4 Erlangten sowie den dinglichen Arrest (§ 111d) bis zur Höhe des nach Absatz 2 Satz 3 und 4 festgestellten Betrages durch Beschluss für drei Jahre aufrecht. Die Frist beginnt mit Rechtskraft des Urteils. Sichergestellte Vermögenswerte soll es bezeichnen. § 917 der Zivilprozessordnung ist nicht anzuwenden. Soweit der Verletzte innerhalb der Frist nachweislich aus Vermögen befriedigt wird, das nicht

beschlagnahmt oder im Wege der Arrestvollziehung gepfändet worden ist, hebt das Gericht die Beschlagnahme (§ 111c) oder den dinglichen Arrest (§ 111d) auf Antrag des Betroffenen auf.

(4) Die Anordnung nach Absatz 3 sowie der Eintritt der Rechtskraft sind dem durch die Tat Verletzten unverzüglich durch das Gericht mitzuteilen. Die Mitteilung ist zu verbinden mit dem Hinweis auf die in Absatz 5 genannten Folgen und auf die Möglichkeit, Ansprüche im Wege der Zwangsvollstreckung oder Arrestvollziehung durchzusetzen. § 111e Abs. 4 Satz 1 bis 3 gilt entsprechend.

(5) Mit Ablauf der in Absatz 3 genannten Frist erwirbt der Staat die nach Absatz 2 bezeichneten Vermögenswerte entsprechend § 73e Abs. 1 des Strafgesetzbuchs sowie einen Zahlungsanspruch in Höhe des nach Absatz 2 festgestellten Betrages, soweit nicht

1. der Verletzte zwischenzeitlich wegen seiner Ansprüche im Wege der Zwangsvollstreckung oder der Arrestvollziehung verfügt hat,
2. der Verletzte nachweislich aus Vermögen befriedigt worden ist, das nicht beschlagnahmt oder im Wege der Arrestvollziehung gepfändet worden war,
3. zwischenzeitlich Sachen nach § 111k an den Verletzten herausgegeben oder hinterlegt worden sind oder
4. Sachen nach § 111k an den Verletzten herauszugeben gewesen wären und dieser die Herausgabe vor Ablauf der in Absatz 3 genannten Frist beantragt hat.

Zugleich kann der Staat das durch die Vollziehung des dinglichen Arrestes begründete Pfandrecht nach den Vorschriften des Achten Buches der Zivilprozessordnung verwerten. Der Erlös sowie hinterlegtes Geld fallen dem Staat zu. Mit der Verwertung erlischt der nach Satz 1 entstandene Zahlungsanspruch auch insoweit, als der Verwertungserlös hinter der Höhe des Anspruchs zurückbleibt.

(6) Das Gericht des ersten Rechtszugs stellt den Eintritt und den Umfang des staatlichen Rechtserwerbs nach Absatz 5 Satz 1 durch Beschluss fest. § 111l Abs. 4 gilt entsprechend. Der Beschluss kann mit der sofortigen Beschwerde angefochten werden. Nach Rechtskraft des Beschlusses veranlasst das Gericht die Löschung der im elektronischen Bundesanzeiger nach Absatz 4 vorgenommenen Veröffentlichungen.

(7) Soweit der Verurteilte oder der von der Beschlagnahme oder dem dinglichen Arrest Betroffene die hierdurch gesicherten Ansprüche des Verletzten nach Ablauf der in Absatz 3 genannten Frist befriedigt, kann er bis zur Höhe des dem Staat zugeflossenen Verwertungserlöses Ausgleich verlangen. Der Ausgleich ist ausgeschlossen,
   1. soweit der Zahlungsanspruch des Staates nach Absatz 5 Satz 1 unter Anrechnung des vom Staat vereinnahmten Erlöses entgegensteht oder
   2. wenn seit dem Ablauf der in Absatz 3 genannten Frist drei Jahre verstrichen sind.

(8) In den Fällen des § 76a Abs. 1 oder 3 des Strafgesetzbuchs sind die Absätze 2 bis 7 auf das Verfahren nach den §§ 440 und 441 in Verbindung mit § 442 Abs. 1 entsprechend anzuwenden.

§ 111k

Wird eine bewegliche Sache, die nach § 94 beschlagnahmt oder sonst sichergestellt oder nach § 111c Abs. 1 beschlagnahmt worden ist, für Zwecke des Strafverfahrens nicht mehr benötigt, so soll sie dem Verletzten, dem sie durch die Straftat entzogen worden ist, herausgegeben werden, wenn er bekannt ist und Ansprüche Dritter nicht entgegenstehen. § 111f Abs. 5 ist anzuwenden. Die Staatsanwaltschaft kann die Entscheidung des Gerichts herbeiführen, wenn das Recht des Verletzten nicht offenkundig ist.

§ 111l

(1) Vermögenswerte, die nach § 111c beschlagnahmt oder aufgrund eines Arrestes (§ 111d) gepfändet worden sind, dürfen vor der Rechtskraft des Urteils veräußert werden, wenn ihr Verderb oder eine wesentliche Minderung ihres Wertes droht oder ihre Aufbewahrung, Pflege oder Erhaltung mit unverhältnismäßigen Kosten oder Schwierigkeiten verbunden ist. In den Fällen des § 111i Abs. 2 können Vermögenswerte, die aufgrund eines Arrestes (§ 111d) gepfändet worden sind, nach Rechtskraft des Urteils veräußert werden, wenn dies zweckmäßig erscheint. Der Erlös tritt an deren Stelle.

(2) Im vorbereitenden Verfahren und nach Rechtskraft des Urteils wird die Notveräußerung durch die Staatsanwaltschaft angeordnet. Ihren Ermittlungspersonen (§ 152 des

Gerichtsverfassungsgesetzes) steht diese Befugnis zu, wenn der Gegenstand zu verderben droht, bevor die Entscheidung der Staatsanwaltschaft herbeigeführt werden kann.

(3) Nach Erhebung der öffentlichen Klage trifft die Anordnung das mit der Hauptsache befaßte Gericht. Der Staatsanwaltschaft steht diese Befugnis zu, wenn der Gegenstand zu verderben droht, bevor die Entscheidung des Gerichts herbeigeführt werden kann; Absatz 2 Satz 2 gilt entsprechend.

(4) Der Beschuldigte, der Eigentümer und andere, denen Rechte an der Sache zustehen, sollen vor der Anordnung gehört werden. Die Anordnung sowie Zeit und Ort der Veräußerung sind ihnen, soweit dies ausführbar erscheint, mitzuteilen.

(5) Die Notveräußerung wird nach den Vorschriften der Zivilprozeßordnung über die Verwertung einer gepfändeten Sache durchgeführt. An die Stelle des Vollstreckungsgerichts (§ 764 der Zivilprozeßordnung) tritt in den Fällen der Absätze 2 und 3 Satz 2 die Staatsanwaltschaft, in den Fällen des Absatzes 3 Satz 1 das mit der Hauptsache befaßte Gericht. Die nach § 825 der Zivilprozeßordnung zulässige Verwertung kann von Amts wegen oder auf Antrag der in Absatz 4 genannten Personen, im Falle des Absatzes 3 Satz 1 auch auf Antrag der Staatsanwaltschaft, gleichzeitig mit der Notveräußerung oder nachträglich angeordnet werden. Wenn dies zweckmäßig erscheint, kann die Notveräußerung auf andere Weise und durch eine andere Person als den Gerichtsvollzieher erfolgen.

(6) Gegen Anordnungen der Staatsanwaltschaft oder ihrer Ermittlungspersonen kann der Betroffene gerichtliche Entscheidung durch das nach § 162 zuständige Gericht beantragen. Die §§ 297 bis 300, 302, 306 bis 309, 311a und 473a gelten entsprechend. Das Gericht, in dringenden Fällen der Vorsitzende, kann die Aussetzung der Veräußerung anordnen.

§ 111m

(1) Die Beschlagnahme eines Druckwerks, einer sonstigen Schrift oder eines Gegenstandes im Sinne des § 74d des Strafgesetzbuches darf nach § 111b Abs. 1 nicht angeordnet werden, wenn ihre nachteiligen Folgen, insbesondere die Gefährdung des öffentlichen Interesses an unverzögerter Verbreitung offenbar außer Verhältnis zu der Bedeutung der Sache stehen.

(2) Ausscheidbare Teile der Schrift, die nichts Strafbares enthalten, sind von der Beschlagnahme auszuschließen. Die Beschlagnahme kann in der Anordnung weiter beschränkt werden.
(3) In der Anordnung der Beschlagnahme sind die Stellen der Schrift, die zur Beschlagnahme Anlaß geben, zu bezeichnen.
(4) Die Beschlagnahme kann dadurch abgewendet werden, daß der Betroffene den Teil der Schrift, der zur Beschlagnahme Anlaß gibt, von der Vervielfältigung oder der Verbreitung ausschließt.

§ 111n

(1) Die Beschlagnahme eines periodischen Druckwerks oder eines ihm gleichstehenden Gegenstandes im Sinne des § 74d des Strafgesetzbuches darf nur durch den Richter angeordnet werden. Die Beschlagnahme eines anderen Druckwerks oder eines sonstigen Gegenstandes im Sinne des § 74d des Strafgesetzbuches kann bei Gefahr im Verzug auch durch die Staatsanwaltschaft angeordnet werden. Die Anordnung der Staatsanwaltschaft tritt außer Kraft, wenn sie nicht binnen drei Tagen von dem Richter bestätigt wird.
(2) Die Beschlagnahme ist aufzuheben, wenn nicht binnen zwei Monaten die öffentliche Klage erhoben oder die selbständige Einziehung beantragt ist. Reicht die in Satz 1 bezeichnete Frist wegen des besonderen Umfanges der Ermittlungen nicht aus, so kann das Gericht auf Antrag der Staatsanwaltschaft die Frist um weitere zwei Monate verlängern. Der Antrag kann einmal wiederholt werden.
(3) Solange weder die öffentliche Klage erhoben noch die selbständige Einziehung beantragt worden ist, ist die Beschlagnahme aufzuheben, wenn die Staatsanwaltschaft es beantragt.

§ 111o

(1) Sind Gründe für die Annahme vorhanden, daß die Voraussetzungen für die Verhängung einer Vermögensstrafe vorliegen, so kann wegen dieser der dingliche Arrest angeordnet werden.
(2) Die §§ 917, 928, 930 bis 932, 934 Abs. 1 der Zivilprozeßordnung gelten sinngemäß. In der Arrestanordnung ist ein Geldbetrag festzustellen, durch dessen Hinterlegung die

Vollziehung des Arrestes gehemmt und der Schuldner zu dem Antrag auf Aufhebung des vollzogenen Arrestes berechtigt wird. Die Höhe des Betrages bestimmt sich nach den Umständen des Einzelfalles, namentlich nach der voraussichtlichen Höhe der Vermögensstrafe. Diese kann geschätzt werden. Das Gesuch auf Erlaß des Arrestes soll die für die Feststellung des Geldbetrages erforderlichen Tatsachen enthalten.

(3) Zu der Anordnung des Arrestes wegen einer Vermögensstrafe ist nur der Richter, bei Gefahr im Verzuge auch die Staatsanwaltschaft befugt. Hat die Staatsanwaltschaft die Anordnung getroffen, so beantragt sie innerhalb einer Woche die richterliche Bestätigung der Anordnung. Der Beschuldigte kann jederzeit die richterliche Entscheidung beantragen.

(4) Soweit wegen einer Vermögensstrafe die Vollziehung des Arrestes in bewegliche Sachen zu bewirken ist, gilt § 111f Abs. 1 entsprechend.

(5) Im übrigen finden § 111b Abs. 3, § 111e Abs. 3 und 4, § 111f Abs. 2 und 3 Satz 2 und 3 sowie die §§ 111g und 111h Anwendung.

§ 111p

(1) Unter den Voraussetzungen des § 111o Abs. 1 kann das Vermögen des Beschuldigten mit Beschlag belegt werden, wenn die Vollstreckung der zu erwartenden Vermögensstrafe im Hinblick auf Art oder Umfang des Vermögens oder aus sonstigen Gründen durch eine Arrestanordnung nach § 111o nicht gesichert erscheint.

(2) Die Beschlagnahme ist auf einzelne Vermögensbestandteile zu beschränken, wenn dies nach den Umständen, namentlich nach der zu erwartenden Höhe der Vermögensstrafe, ausreicht, um deren Vollstreckung sicherzustellen.

(3) Mit der Anordnung der Vermögensbeschlagnahme verliert der Beschuldigte das Recht, das in Beschlag genommene Vermögen zu verwalten und darüber unter Lebenden zu verfügen. In der Anordnung ist die Stunde der Beschlagnahme anzugeben.

(4) § 111b Abs. 3, § 111o Abs. 3, §§ 291, 292 Abs. 2, § 293 gelten entsprechend.

(5) Der Vermögensverwalter hat der Staatsanwaltschaft und dem Gericht über alle im Rahmen der Verwaltung des Vermögens erlangten Erkenntnisse, die dem Zweck der Beschlagnahme dienen können, Mitteilung zu machen.

Neunter Abschnitt
Verhaftung und vorläufige Festnahme

§ 112

(1) Die Untersuchungshaft darf gegen den Beschuldigten angeordnet werden, wenn er der Tat dringend verdächtig ist und ein Haftgrund besteht. Sie darf nicht angeordnet werden, wenn sie zu der Bedeutung der Sache und der zu erwartenden Strafe oder Maßregel der Besserung und Sicherung außer Verhältnis steht.

(2) Ein Haftgrund besteht, wenn auf Grund bestimmter Tatsachen

1. festgestellt wird, daß der Beschuldigte flüchtig ist oder sich verborgen hält,
2. bei Würdigung der Umstände des Einzelfalles die Gefahr besteht, daß der Beschuldigte sich dem Strafverfahren entziehen werde (Fluchtgefahr), oder
3. das Verhalten des Beschuldigten den dringenden Verdacht begründet, er werde
   a) Beweismittel vernichten, verändern, beiseite schaffen, unterdrücken oder fälschen oder
   b) auf Mitbeschuldigte, Zeugen oder Sachverständige in unlauterer Weise einwirken oder
   c) andere zu solchem Verhalten veranlassen,

   und wenn deshalb die Gefahr droht, daß die Ermittlung der Wahrheit erschwert werde(Verdunkelungsgefahr).

(3) Gegen den Beschuldigten, der einer Straftat nach § 6 Abs. 1 Nr. 1 des Völkerstrafgesetzbuches oder § 129a Abs. 1 oder Abs. 2, auch in Verbindung mit § 129b Abs. 1, oder nach den §§ 211, 212, 226, 306b oder 306c des Strafgesetzbuches oder, soweit durch die Tat Leib oder Leben eines anderen gefährdet worden ist, nach § 308 Abs. 1 bis 3 des Strafgesetzbuches dringend verdächtig ist, darf die Untersuchungshaft auch angeordnet werden, wenn ein Haftgrund nach Absatz 2 nicht besteht.

§ 112a

(1) Ein Haftgrund besteht auch, wenn der Beschuldigte dringend verdächtig ist,

1. eine Straftat nach den §§ 174, 174a, 176 bis 179 oder nach § 238 Abs. 2 und 3 des Strafgesetzbuches oder

2. wiederholt oder fortgesetzt eine die Rechtsordnung schwerwiegend beeinträchtigende Straftat nach § 89a, nach § 125a, nach den §§ 224 bis 227, nach den §§ 243, 244, 249 bis 255, 260, nach § 263, nach den §§ 306 bis 306c oder § 316a des Strafgesetzbuches oder nach § 29 Abs. 1 Nr. 1, 4, 10 oder Abs. 3, § 29a Abs. 1, § 30 Abs. 1, § 30a Abs. 1 des Betäubungsmittelgesetzes

begangen zu haben, und bestimmte Tatsachen die Gefahr begründen, daß er vor rechtskräftiger Aburteilung weitere erhebliche Straftaten gleicher Art begehen oder die Straftat fortsetzen werde, die Haft zur Abwendung der drohenden Gefahr erforderlich und in den Fällen der Nummer 2 eine Freiheitsstrafe von mehr als einem Jahr zu erwarten ist. In die Beurteilung des dringenden Verdachts einer Tatbegehung im Sinne des Satzes 1 Nummer 2 sind auch solche Taten einzubeziehen, die Gegenstand anderer, auch rechtskräftig abgeschlossener, Verfahren sind oder waren.

(2) Absatz 1 findet keine Anwendung, wenn die Voraussetzungen für den Erlaß eines Haftbefehls nach § 112 vorliegen und die Voraussetzungen für die Aussetzung des Vollzugs des Haftbefehls nach § 116 Abs. 1, 2 nicht gegeben sind.

§ 113

(1) Ist die Tat nur mit Freiheitsstrafe bis zu sechs Monaten oder mit Geldstrafe bis zu einhundertachtzig Tagessätzen bedroht, so darf die Untersuchungshaft wegen Verdunkelungsgefahr nicht angeordnet werden.

(2) In diesen Fällen darf die Untersuchungshaft wegen Fluchtgefahr nur angeordnet werden, wenn der Beschuldigte

1. sich dem Verfahren bereits einmal entzogen hatte oder Anstalten zur Flucht getroffen hat,
2. im Geltungsbereich dieses Gesetzes keinen festen Wohnsitz oder Aufenthalt hat oder
3. sich über seine Person nicht ausweisen kann.

§ 114

(1) Die Untersuchungshaft wird durch schriftlichen Haftbefehl des Richters angeordnet.

(2) In dem Haftbefehl sind anzuführen

1. der Beschuldigte,
2. die Tat, deren er dringend verdächtig ist, Zeit und Ort ihrer Begehung, die gesetzlichen Merkmale der Straftat und die anzuwendenden Strafvorschriften,
3. der Haftgrund sowie
4. die Tatsachen, aus denen sich der dringende Tatverdacht und der Haftgrund ergibt, soweit nicht dadurch die Staatssicherheit gefährdet wird.

(3) Wenn die Anwendung des § 112 Abs. 1 Satz 2 naheliegt oder der Beschuldigte sich auf diese Vorschrift beruft, sind die Gründe dafür anzugeben, daß sie nicht angewandt wurde.

§ 114a

Dem Beschuldigten ist bei der Verhaftung eine Abschrift des Haftbefehls auszuhändigen; beherrscht er die deutsche Sprache nicht hinreichend, erhält er zudem eine Übersetzung in einer für ihn verständlichen Sprache. Ist die Aushändigung einer Abschrift und einer etwaigen Übersetzung nicht möglich, ist ihm unverzüglich in einer für ihn verständlichen Sprache mitzuteilen, welches die Gründe für die Verhaftung sind und welche Beschuldigungen gegen ihn erhoben werden. In diesem Fall ist die Aushändigung der Abschrift des Haftbefehls sowie einer etwaigen Übersetzung unverzüglich nachzuholen.

§ 114b

(1) Der verhaftete Beschuldigte ist unverzüglich und schriftlich in einer für ihn verständlichen Sprache über seine Rechte zu belehren. Ist eine schriftliche Belehrung erkennbar nicht ausreichend, hat zudem eine mündliche Belehrung zu erfolgen. Entsprechend ist zu verfahren, wenn eine schriftliche Belehrung nicht möglich ist; sie soll jedoch nachgeholt werden, sofern dies in zumutbarer Weise möglich ist. Der Beschuldigte soll schriftlich bestätigen, dass er belehrt wurde; falls er sich weigert, ist dies zu dokumentieren.

(2) In der Belehrung nach Absatz 1 ist der Beschuldigte darauf hinzuweisen, dass er

1. unverzüglich, spätestens am Tag nach der Ergreifung, dem Gericht vorzuführen ist, das ihn zu vernehmen und über seine weitere Inhaftierung zu entscheiden hat,
2. das Recht hat, sich zur Beschuldigung zu äußern oder nicht zur Sache auszusagen,

3. zu seiner Entlastung einzelne Beweiserhebungen beantragen kann,
4. jederzeit, auch schon vor seiner Vernehmung, einen von ihm zu wählenden Verteidiger befragen kann,
5. das Recht hat, die Untersuchung durch einen Arzt oder eine Ärztin seiner Wahl zu verlangen und
6. einen Angehörigen oder eine Person seines Vertrauens benachrichtigen kann, soweit der Zweck der Untersuchung dadurch nicht gefährdet wird.

Ein Beschuldigter, der der deutschen Sprache nicht hinreichend mächtig ist, ist darauf hinzuweisen, dass er im Verfahren die unentgeltliche Hinzuziehung eines Dolmetschers verlangen kann. Ein ausländischer Staatsangehöriger ist darüber zu belehren, dass er die Unterrichtung der konsularischen Vertretung seines Heimatstaates verlangen und dieser Mitteilungen zukommen lassen kann.

§ 114c

(1) Einem verhafteten Beschuldigten ist unverzüglich Gelegenheit zu geben, einen Angehörigen oder eine Person seines Vertrauens zu benachrichtigen, sofern der Zweck der Untersuchung dadurch nicht gefährdet wird.

(2) Wird gegen einen verhafteten Beschuldigten nach der Vorführung vor das Gericht Haft vollzogen, hat das Gericht die unverzügliche Benachrichtigung eines seiner Angehörigen oder einer Person seines Vertrauens anzuordnen. Die gleiche Pflicht besteht bei jeder weiteren Entscheidung über die Fortdauer der Haft.

§ 114d

(1) Das Gericht übermittelt der für den Beschuldigten zuständigen Vollzugsanstalt mit dem Aufnahmeersuchen eine Abschrift des Haftbefehls. Darüber hinaus teilt es ihr mit

1. die das Verfahren führende Staatsanwaltschaft und das nach § 126 zuständige Gericht,
2. die Personen, die nach § 114c benachrichtigt worden sind,
3. Entscheidungen und sonstige Maßnahmen nach § 119 Abs. 1 und 2,
4. weitere im Verfahren ergehende Entscheidungen, soweit dies für die Erfüllung der

Aufgaben der Vollzugsanstalt erforderlich ist,

5. Hauptverhandlungstermine und sich aus ihnen ergebende Erkenntnisse, die für die Erfüllung der Aufgaben der Vollzugsanstalt erforderlich sind,
6. den Zeitpunkt der Rechtskraft des Urteils sowie
7. andere Daten zur Person des Beschuldigten, die für die Erfüllung der Aufgaben der Vollzugsanstalt erforderlich sind, insbesondere solche über seine Persönlichkeit und weitere relevante Strafverfahren.

Die Sätze 1 und 2 gelten bei Änderungen der mitgeteilten Tatsachen entsprechend. Mitteilungen unterbleiben, soweit die Tatsachen der Vollzugsanstalt bereits anderweitig bekannt geworden sind.

(2) Die Staatsanwaltschaft unterstützt das Gericht bei der Erfüllung seiner Aufgaben nach Absatz 1 und teilt der Vollzugsanstalt von Amts wegen insbesondere Daten nach Absatz 1 Satz 2 Nr. 7 sowie von ihr getroffene Entscheidungen und sonstige Maßnahmen nach § 119 Abs. 1 und 2 mit. Zudem übermittelt die Staatsanwaltschaft der Vollzugsanstalt eine Ausfertigung der Anklageschrift und teilt dem nach § 126 Abs. 1 zuständigen Gericht die Anklageerhebung mit.

§ 114e

Die Vollzugsanstalt übermittelt dem Gericht und der Staatsanwaltschaft von Amts wegen beim Vollzug der Untersuchungshaft erlangte Erkenntnisse, soweit diese aus Sicht der Vollzugsanstalt für die Erfüllung der Aufgaben der Empfänger von Bedeutung sind und diesen nicht bereits anderweitig bekannt geworden sind. Sonstige Befugnisse der Vollzugsanstalt, dem Gericht und der Staatsanwaltschaft Erkenntnisse mitzuteilen, bleiben unberührt.

§ 115

(1) Wird der Beschuldigte auf Grund des Haftbefehls ergriffen, so ist er unverzüglich dem zuständigen Gericht vorzuführen.

(2) Das Gericht hat den Beschuldigten unverzüglich nach der Vorführung, spätestens am nächsten Tage, über den Gegenstand der Beschuldigung zu vernehmen.

(3) Bei der Vernehmung ist der Beschuldigte auf die ihn belastenden Umstände und sein Recht hinzuweisen, sich zur Beschuldigung zu äußern oder nicht zur Sache auszusagen. Ihm ist Gelegenheit zu geben, die Verdachts- und Haftgründe zu entkräften und die Tatsachen geltend zu machen, die zu seinen Gunsten sprechen.

(4) Wird die Haft aufrechterhalten, so ist der Beschuldigte über das Recht der Beschwerde und die anderen Rechtsbehelfe (§ 117 Abs. 1, 2, § 118 Abs. 1, 2, § 119 Abs. 5, § 119a Abs. 1) zu belehren. § 304 Abs. 4 und 5 bleibt unberührt.

§ 115a

(1) Kann der Beschuldigte nicht spätestens am Tag nach der Ergreifung dem zuständigen Gericht vorgeführt werden, so ist er unverzüglich, spätestens am Tage nach der Ergreifung, dem nächsten Amtsgericht vorzuführen.

(2) Das Gericht hat den Beschuldigten unverzüglich nach der Vorführung, spätestens am nächsten Tage, zu vernehmen. Bei der Vernehmung wird, soweit möglich, § 115 Abs. 3 angewandt. Ergibt sich bei der Vernehmung, dass der Haftbefehl aufgehoben, seine Aufhebung durch die Staatsanwaltschaft beantragt (§ 120 Abs. 3) oder der Ergriffene nicht die in dem Haftbefehl bezeichnete Person ist, so ist der Ergriffene freizulassen. Erhebt dieser sonst gegen den Haftbefehl oder dessen Vollzug Einwendungen, die nicht offensichtlich unbegründet sind, oder hat das Gericht Bedenken gegen die Aufrechterhaltung der Haft, so teilt es diese dem zuständigen Gericht und der zuständigen Staatsanwaltschaft unverzüglich und auf dem nach den Umständen angezeigten schnellsten Wege mit; das zuständige Gericht prüft unverzüglich, ob der Haftbefehl aufzuheben oder außer Vollzug zu setzen ist.

(3) Wird der Beschuldigte nicht freigelassen, so ist er auf sein Verlangen dem zuständigen Gericht zur Vernehmung nach § 115 vorzuführen. Der Beschuldigte ist auf dieses Recht hinzuweisen und gemäß § 115 Abs. 4 zu belehren.

§ 116

(1) Der Richter setzt den Vollzug eines Haftbefehls, der lediglich wegen Fluchtgefahr

gerechtfertigt ist, aus, wenn weniger einschneidende Maßnahmen die Erwartung hinreichend begründen, daß der Zweck der Untersuchungshaft auch durch sie erreicht werden kann. In Betracht kommen namentlich

1. die Anweisung, sich zu bestimmten Zeiten bei dem Richter, der Strafverfolgungsbehörde oder einer von ihnen bestimmten Dienststelle zu melden,
2. die Anweisung, den Wohn- oder Aufenthaltsort oder einen bestimmten Bereich nicht ohne Erlaubnis des Richters oder der Strafverfolgungsbehörde zu verlassen,
3. die Anweisung, die Wohnung nur unter Aufsicht einer bestimmten Person zu verlassen,
4. die Leistung einer angemessenen Sicherheit durch den Beschuldigten oder einen anderen.

(2) Der Richter kann auch den Vollzug eines Haftbefehls, der wegen Verdunkelungsgefahr gerechtfertigt ist, aussetzen, wenn weniger einschneidende Maßnahmen die Erwartung hinreichend begründen, daß sie die Verdunkelungsgefahr erheblich vermindern werden. In Betracht kommt namentlich die Anweisung, mit Mitbeschuldigten, Zeugen oder Sachverständigen keine Verbindung aufzunehmen.

(3) Der Richter kann den Vollzug eines Haftbefehls, der nach § 112a erlassen worden ist, aussetzen, wenn die Erwartung hinreichend begründet ist, daß der Beschuldigte bestimmte Anweisungen befolgen und daß dadurch der Zweck der Haft erreicht wird.

(4) Der Richter ordnet in den Fällen der Absätze 1 bis 3 den Vollzug des Haftbefehls an, wenn

1. der Beschuldigte den ihm auferlegten Pflichten oder Beschränkungen gröblich zuwiderhandelt,
2. der Beschuldigte Anstalten zur Flucht trifft, auf ordnungsgemäße Ladung ohne genügende Entschuldigung ausbleibt oder sich auf andere Weise zeigt, daß das in ihn gesetzte Vertrauen nicht gerechtfertigt war, oder
3. neu hervorgetretene Umstände die Verhaftung erforderlich machen.

§ 116a

(1) Die Sicherheit ist durch Hinterlegung in barem Geld, in Wertpapieren, durch Pfandbestellung oder durch Bürgschaft geeigneter Personen zu leisten. Davon abweichende Regelungen in einer auf Grund des Gesetzes über den Zahlungsverkehr mit Gerichten und

Justizbehörden erlassenen Rechtsverordnung bleiben unberührt.

(2) Der Richter setzt Höhe und Art der Sicherheit nach freiem Ermessen fest.

(3) Der Beschuldigte, der die Aussetzung des Vollzugs des Haftbefehls gegen Sicherheitsleistung beantragt und nicht im Geltungsbereich dieses Gesetzes wohnt, ist verpflichtet, eine im Bezirk des zuständigen Gerichts wohnende Person zum Empfang von Zustellungen zu bevollmächtigen.

§ 116b

Die Vollstreckung der Untersuchungshaft geht der Vollstreckung der Auslieferungshaft, der vorläufigen Auslieferungshaft, der Abschiebungshaft und der Zurückweisungshaft vor. Die Vollstreckung anderer freiheitsentziehender Maßnahmen geht der Vollstreckung von Untersuchungshaft vor, es sei denn, das Gericht trifft eine abweichende Entscheidung, weil der Zweck der Untersuchungshaft dies erfordert.

§ 117

(1) Solange der Beschuldigte in Untersuchungshaft ist, kann er jederzeit die gerichtliche Prüfung beantragen, ob der Haftbefehl aufzuheben oder dessen Vollzug nach § 116 auszusetzen ist (Haftprüfung).

(2) Neben dem Antrag auf Haftprüfung ist die Beschwerde unzulässig. Das Recht der Beschwerde gegen die Entscheidung, die auf den Antrag ergeht, wird dadurch nicht berührt.

(3) Der Richter kann einzelne Ermittlungen anordnen, die für die künftige Entscheidung über die Aufrechterhaltung der Untersuchungshaft von Bedeutung sind, und nach Durchführung dieser Ermittlungen eine neue Prüfung vornehmen.

(4) (weggefallen)

(5) (weggefallen)

§ 118

(1) Bei der Haftprüfung wird auf Antrag des Beschuldigten oder nach dem Ermessen des

Gerichts von Amts wegen nach mündlicher Verhandlung entschieden.

(2) Ist gegen den Haftbefehl Beschwerde eingelegt, so kann auch im Beschwerdeverfahren auf Antrag des Beschuldigten oder von Amts wegen nach mündlicher Verhandlung entschieden werden.

(3) Ist die Untersuchungshaft nach mündlicher Verhandlung aufrechterhalten worden, so hat der Beschuldigte einen Anspruch auf eine weitere mündliche Verhandlung nur, wenn die Untersuchungshaft mindestens drei Monate und seit der letzten mündlichen Verhandlung mindestens zwei Monate gedauert hat.

(4) Ein Anspruch auf mündliche Verhandlung besteht nicht, solange die Hauptverhandlung andauert oder wenn ein Urteil ergangen ist, das auf eine Freiheitsstrafe oder eine freiheitsentziehende Maßregel der Besserung und Sicherung erkennt.

(5) Die mündliche Verhandlung ist unverzüglich durchzuführen; sie darf ohne Zustimmung des Beschuldigten nicht über zwei Wochen nach dem Eingang des Antrags anberaumt werden.

§ 118a

(1) Von Ort und Zeit der mündlichen Verhandlung sind die Staatsanwaltschaft sowie der Beschuldigte und der Verteidiger zu benachrichtigen.

(2) Der Beschuldigte ist zu der Verhandlung vorzuführen, es sei denn, daß er auf die Anwesenheit in der Verhandlung verzichtet hat oder daß der Vorführung weite Entfernung oder Krankheit des Beschuldigten oder andere nicht zu beseitigende Hindernisse entgegenstehen. Wird der Beschuldigte zur mündlichen Verhandlung nicht vorgeführt, so muß ein Verteidiger seine Rechte in der Verhandlung wahrnehmen. In diesem Falle ist ihm für die mündliche Verhandlung ein Verteidiger zu bestellen, wenn er noch keinen Verteidiger hat. Die §§ 142, 143 und 145 gelten entsprechend.

(3) In der mündlichen Verhandlung sind die anwesenden Beteiligten zu hören. Art und Umfang der Beweisaufnahme bestimmt das Gericht. Über die Verhandlung ist eine Niederschrift aufzunehmen; die §§ 271 bis 273 gelten entsprechend.

(4) Die Entscheidung ist am Schluß der mündlichen Verhandlung zu verkünden. Ist dies nicht

möglich, so ist die Entscheidung spätestens binnen einer Woche zu erlassen.

§ 118b

Für den Antrag auf Haftprüfung (§ 117 Abs. 1) und den Antrag auf mündliche Verhandlung gelten die §§ 297 bis 300 und 302 Abs. 2 entsprechend.

§ 119

(1) Soweit dies zur Abwehr einer Flucht-, Verdunkelungs- oder Wiederholungsgefahr (§§ 112, 112a) erforderlich ist, können einem inhaftierten Beschuldigten Beschränkungen auferlegt werden. Insbesondere kann angeordnet werden, dass

1. der Empfang von Besuchen und die Telekommunikation der Erlaubnis bedürfen,
2. Besuche, Telekommunikation sowie der Schrift- und Paketverkehr zu überwachen sind,
3. die Übergabe von Gegenständen bei Besuchen der Erlaubnis bedarf,
4. der Beschuldigte von einzelnen oder allen anderen Inhaftierten getrennt wird,
5. die gemeinsame Unterbringung und der gemeinsame Aufenthalt mit anderen Inhaftierten eingeschränkt oder ausgeschlossen werden.

Die Anordnungen trifft das Gericht. Kann dessen Anordnung nicht rechtzeitig herbeigeführt werden, kann die Staatsanwaltschaft oder die Vollzugsanstalt eine vorläufige Anordnung treffen. Die Anordnung ist dem Gericht binnen drei Werktagen zur Genehmigung vorzulegen, es sei denn, sie hat sich zwischenzeitlich erledigt. Der Beschuldigte ist über Anordnungen in Kenntnis zu setzen. Die Anordnung nach Satz 2 Nr. 2 schließt die Ermächtigung ein, Besuche und Telekommunikation abzubrechen sowie Schreiben und Pakete anzuhalten.

(2) Die Ausführung der Anordnungen obliegt der anordnenden Stelle. Das Gericht kann die Ausführung von Anordnungen widerruflich auf die Staatsanwaltschaft übertragen, die sich bei der Ausführung der Hilfe durch ihre Ermittlungspersonen und die Vollzugsanstalt bedienen kann. Die Übertragung ist unanfechtbar.

(3) Ist die Überwachung der Telekommunikation nach Absatz 1 Satz 2 Nr. 2 angeordnet, ist die beabsichtigte Überwachung den Gesprächspartnern des Beschuldigten unmittelbar nach

Herstellung der Verbindung mitzuteilen. Die Mitteilung kann durch den Beschuldigten selbst erfolgen. Der Beschuldigte ist rechtzeitig vor Beginn der Telekommunikation über die Mitteilungspflicht zu unterrichten.

(4) Die §§ 148, 148a bleiben unberührt. Sie gelten entsprechend für den Verkehr des Beschuldigten mit

1. der für ihn zuständigen Bewährungshilfe,
2. der für ihn zuständigen Führungsaufsichtsstelle,
3. der für ihn zuständigen Gerichtshilfe,
4. den Volksvertretungen des Bundes und der Länder,
5. dem Bundesverfassungsgericht und dem für ihn zuständigen Landesverfassungsgericht,
6. dem für ihn zuständigen Bürgerbeauftragten eines Landes,
7. dem Bundesbeauftragten für den Datenschutz und die Informationsfreiheit, den für die Kontrolle der Einhaltung der Vorschriften über den Datenschutz in den Ländern zuständigen Stellen der Länder und den Aufsichtsbehörden nach § 38 des Bundesdatenschutzgesetzes,
8. dem Europäischen Parlament,
9. dem Europäischen Gerichtshof für Menschenrechte,
10. dem Europäischen Gerichtshof,
11. dem Europäischen Datenschutzbeauftragten,
12. dem Europäischen Bürgerbeauftragten,
13. dem Europäischen Ausschuss zur Verhütung von Folter und unmenschlicher oder erniedrigender Behandlung oder Strafe,
14. der Europäischen Kommission gegen Rassismus und Intoleranz,
15. dem Menschenrechtsausschuss der Vereinten Nationen,
16. den Ausschüssen der Vereinten Nationen für die Beseitigung der Rassendiskriminierung und für die Beseitigung der Diskriminierung der Frau,
17. dem Ausschuss der Vereinten Nationen gegen Folter, dem zugehörigen Unterausschuss zur Verhütung von Folter und den entsprechenden Nationalen Präventionsmechanismen,
18. den in § 53 Abs. 1 Satz 1 Nr. 1 und 4 genannten Personen in Bezug auf die dort

bezeichneten Inhalte,

19. soweit das Gericht nichts anderes anordnet,
    a) den Beiräten bei den Justizvollzugsanstalten und
    b) der konsularischen Vertretung seines Heimatstaates.

    Die Maßnahmen, die erforderlich sind, um das Vorliegen der Voraussetzungen nach den Sätzen 1 und 2 festzustellen, trifft die nach Absatz 2 zuständige Stelle.

(5) Gegen nach dieser Vorschrift ergangene Entscheidungen oder sonstige Maßnahmen kann gerichtliche Entscheidung beantragt werden, soweit nicht das Rechtsmittel der Beschwerde statthaft ist. Der Antrag hat keine aufschiebende Wirkung. Das Gericht kann jedoch vorläufige Anordnungen treffen.

(6) Die Absätze 1 bis 5 gelten auch, wenn gegen einen Beschuldigten, gegen den Untersuchungshaft angeordnet ist, eine andere freiheitsentziehende Maßnahme vollstreckt wird (§ 116b). Die Zuständigkeit des Gerichts bestimmt sich auch in diesem Fall nach § 126.

§ 119a

(1) Gegen eine behördliche Entscheidung oder Maßnahme im Untersuchungshaftvollzug kann gerichtliche Entscheidung beantragt werden. Eine gerichtliche Entscheidung kann zudem beantragt werden, wenn eine im Untersuchungshaftvollzug beantragte behördliche Entscheidung nicht innerhalb von drei Wochen ergangen ist.

(2) Der Antrag auf gerichtliche Entscheidung hat keine aufschiebende Wirkung. Das Gericht kann jedoch vorläufige Anordnungen treffen.

(3) Gegen die Entscheidung des Gerichts kann auch die für die vollzugliche Entscheidung oder Maßnahme zuständige Stelle Beschwerde erheben.

§ 120

(1) Der Haftbefehl ist aufzuheben, sobald die Voraussetzungen der Untersuchungshaft nicht mehr vorliegen oder sich ergibt, daß die weitere Untersuchungshaft zu der Bedeutung der Sache und der zu erwartenden Strafe oder Maßregel der Besserung und Sicherung außer

Verhältnis stehen würde. Er ist namentlich aufzuheben, wenn der Beschuldigte freigesprochen oder die Eröffnung des Hauptverfahrens abgelehnt oder das Verfahren nicht bloß vorläufig eingestellt wird.

(2) Durch die Einlegung eines Rechtsmittels darf die Freilassung des Beschuldigten nicht aufgehalten werden.

(3) Der Haftbefehl ist auch aufzuheben, wenn die Staatsanwaltschaft es vor Erhebung der öffentlichen Klage beantragt. Gleichzeitig mit dem Antrag kann die Staatsanwaltschaft die Freilassung des Beschuldigten anordnen.

§ 121

(1) Solange kein Urteil ergangen ist, das auf Freiheitsstrafe oder eine freiheitsentziehende Maßregel der Besserung und Sicherung erkennt, darf der Vollzug der Untersuchungshaft wegen derselben Tat über sechs Monate hinaus nur aufrechterhalten werden, wenn die besondere Schwierigkeit oder der besondere Umfang der Ermittlungen oder ein anderer wichtiger Grund das Urteil noch nicht zulassen und die Fortdauer der Haft rechtfertigen.

(2) In den Fällen des Absatzes 1 ist der Haftbefehl nach Ablauf der sechs Monate aufzuheben, wenn nicht der Vollzug des Haftbefehls nach § 116 ausgesetzt wird oder das Oberlandesgericht die Fortdauer der Untersuchungshaft anordnet.

(3) Werden die Akten dem Oberlandesgericht vor Ablauf der in Absatz 2 bezeichneten Frist vorgelegt, so ruht der Fristenlauf bis zu dessen Entscheidung. Hat die Hauptverhandlung begonnen, bevor die Frist abgelaufen ist, so ruht der Fristenlauf auch bis zur Verkündung des Urteils. Wird die Hauptverhandlung ausgesetzt und werden die Akten unverzüglich nach der Aussetzung dem Oberlandesgericht vorgelegt, so ruht der Fristenlauf ebenfalls bis zu dessen Entscheidung.

(4) In den Sachen, in denen eine Strafkammer nach § 74a des Gerichtsverfassungsgesetzes zuständig ist, entscheidet das nach § 120 des Gerichtsverfassungsgesetzes zuständige Oberlandesgericht. In den Sachen, in denen ein Oberlandesgericht nach § 120 des Gerichtsverfassungsgesetzes zuständig ist, tritt an dessen Stelle der Bundesgerichtshof.

§ 122

(1) In den Fällen des § 121 legt das zuständige Gericht die Akten durch Vermittlung der Staatsanwaltschaft dem Oberlandesgericht zur Entscheidung vor, wenn es die Fortdauer der Untersuchungshaft für erforderlich hält oder die Staatsanwaltschaft es beantragt.

(2) Vor der Entscheidung sind der Beschuldigte und der Verteidiger zu hören. Das Oberlandesgericht kann über die Fortdauer der Untersuchungshaft nach mündlicher Verhandlung entscheiden; geschieht dies, so gilt § 118a entsprechend.

(3) Ordnet das Oberlandesgericht die Fortdauer der Untersuchungshaft an, so gilt § 114 Abs. 2 Nr. 4 entsprechend. Für die weitere Haftprüfung (§ 117 Abs. 1) ist das Oberlandesgericht zuständig, bis ein Urteil ergeht, das auf Freiheitsstrafe oder eine freiheitsentziehende Maßregel der Besserung und Sicherung erkennt. Es kann die Haftprüfung dem Gericht, das nach den allgemeinen Vorschriften dafür zuständig ist, für die Zeit von jeweils höchstens drei Monaten übertragen. In den Fällen des § 118 Abs. 1 entscheidet das Oberlandesgericht über einen Antrag auf mündliche Verhandlung nach seinem Ermessen.

(4) Die Prüfung der Voraussetzungen nach § 121 Abs. 1 ist auch im weiteren Verfahren dem Oberlandesgericht vorbehalten. Die Prüfung muß jeweils spätestens nach drei Monaten wiederholt werden.

(5) Das Oberlandesgericht kann den Vollzug des Haftbefehls nach § 116 aussetzen.

(6) Sind in derselben Sache mehrere Beschuldigte in Untersuchungshaft, so kann das Oberlandesgericht über die Fortdauer der Untersuchungshaft auch solcher Beschuldigter entscheiden, für die es nach § 121 und den vorstehenden Vorschriften noch nicht zuständig wäre.

(7) Ist der Bundesgerichtshof zur Entscheidung zuständig, so tritt dieser an die Stelle des Oberlandesgerichts.

§ 122a

In den Fällen des § 121 Abs. 1 darf der Vollzug der Haft nicht länger als ein Jahr aufrechterhalten werden, wenn sie auf den Haftgrund des § 112a gestützt ist.

§ 123

(1) Eine Maßnahme, die der Aussetzung des Haftvollzugs dient (§ 116), ist aufzuheben, wenn
1. der Haftbefehl aufgehoben wird oder
2. die Untersuchungshaft oder die erkannte Freiheitsstrafe oder freiheitsentziehende Maßregel der Besserung und Sicherung vollzogen wird.

(2) Unter denselben Voraussetzungen wird eine noch nicht verfallene Sicherheit frei.

(3) Wer für den Beschuldigten Sicherheit geleistet hat, kann deren Freigabe dadurch erlangen, daß er entweder binnen einer vom Gericht zu bestimmenden Frist die Gestellung des Beschuldigten bewirkt oder die Tatsachen, die den Verdacht einer vom Beschuldigten beabsichtigten Flucht begründen, so rechtzeitig mitteilt, daß der Beschuldigte verhaftet werden kann.

§ 124

(1) Eine noch nicht frei gewordene Sicherheit verfällt der Staatskasse, wenn der Beschuldigte sich der Untersuchung oder dem Antritt der erkannten Freiheitsstrafe oder freiheitsentziehenden Maßregel der Besserung und Sicherung entzieht.

(2) Vor der Entscheidung sind der Beschuldigte sowie derjenige, welcher für den Beschuldigten Sicherheit geleistet hat, zu einer Erklärung aufzufordern. Gegen die Entscheidung steht ihnen nur die sofortige Beschwerde zu. Vor der Entscheidung über die Beschwerde ist ihnen und der Staatsanwaltschaft Gelegenheit zur mündlichen Begründung ihrer Anträge sowie zur Erörterung über durchgeführte Ermittlungen zu geben.

(3) Die den Verfall aussprechende Entscheidung hat gegen denjenigen, welcher für den Beschuldigten Sicherheit geleistet hat, die Wirkungen eines von dem Zivilrichter erlassenen, für vorläufig vollstreckbar erklärten Endurteils und nach Ablauf der Beschwerdefrist die Wirkungen eines rechtskräftigen Zivilendurteils.

§ 125

(1) Vor Erhebung der öffentlichen Klage erläßt der Richter bei dem Amtsgericht, in dessen Bezirk ein Gerichtsstand begründet ist oder der Beschuldigte sich aufhält, auf Antrag der

Staatsanwaltschaft oder, wenn ein Staatsanwalt nicht erreichbar und Gefahr im Verzug ist, von Amts wegen den Haftbefehl.

(2) Nach Erhebung der öffentlichen Klage erläßt den Haftbefehl das Gericht, das mit der Sache befaßt ist, und, wenn Revision eingelegt ist, das Gericht, dessen Urteil angefochten ist. In dringenden Fällen kann auch der Vorsitzende den Haftbefehl erlassen.

§ 126

(1) Vor Erhebung der öffentlichen Klage ist für die weiteren gerichtlichen Entscheidungen und Maßnahmen, die sich auf die Untersuchungshaft, die Aussetzung ihres Vollzugs (§ 116), ihre Vollstreckung (§ 116b) sowie auf Anträge nach § 119a beziehen, das Gericht zuständig, das den Haftbefehl erlassen hat. Hat das Beschwerdegericht den Haftbefehl erlassen, so ist das Gericht zuständig, das die vorangegangene Entscheidung getroffen hat. Wird das vorbereitende Verfahren an einem anderen Ort geführt oder die Untersuchungshaft an einem anderen Ort vollzogen, so kann das Gericht seine Zuständigkeit auf Antrag der Staatsanwaltschaft auf das für diesen Ort zuständige Amtsgericht übertragen. Ist der Ort in mehrere Gerichtsbezirke geteilt, so bestimmt die Landesregierung durch Rechtsverordnung das zuständige Amtsgericht. Die Landesregierung kann diese Ermächtigung auf die Landesjustizverwaltung übertragen.

(2) Nach Erhebung der öffentlichen Klage ist das Gericht zuständig, das mit der Sache befaßt ist. Während des Revisionsverfahrens ist das Gericht zuständig, dessen Urteil angefochten ist. Einzelne Maßnahmen, insbesondere nach § 119, ordnet der Vorsitzende an. In dringenden Fällen kann er auch den Haftbefehl aufheben oder den Vollzug aussetzen (§ 116), wenn die Staatsanwaltschaft zustimmt; andernfalls ist unverzüglich die Entscheidung des Gerichts herbeizuführen.

(3) Das Revisionsgericht kann den Haftbefehl aufheben, wenn es das angefochtene Urteil aufhebt und sich bei dieser Entscheidung ohne weiteres ergibt, daß die Voraussetzungen des § 120 Abs. 1 vorliegen.

(4) Die §§ 121 und 122 bleiben unberührt.

§ 126a

(1) Sind dringende Gründe für die Annahme vorhanden, daß jemand eine rechtswidrige Tat im Zustand der Schuldunfähigkeit oder verminderten Schuldfähigkeit (§§ 20, 21 des Strafgesetzbuches) begangen hat und daß seine Unterbringung in einem psychiatrischen Krankenhaus oder einer Entziehungsanstalt angeordnet werden wird, so kann das Gericht durch Unterbringungsbefehl die einstweilige Unterbringung in einer dieser Anstalten anordnen, wenn die öffentliche Sicherheit es erfordert.

(2) Für die einstweilige Unterbringung gelten die §§ 114 bis 115a, 116 Abs. 3 und 4, §§ 117 bis 119a, 123, 125 und 126 entsprechend. Die §§ 121, 122 gelten entsprechend mit der Maßgabe, dass das Oberlandesgericht prüft, ob die Voraussetzungen der einstweiligen Unterbringung weiterhin vorliegen.

(3) Der Unterbringungsbefehl ist aufzuheben, wenn die Voraussetzungen der einstweiligen Unterbringung nicht mehr vorliegen oder wenn das Gericht im Urteil die Unterbringung in einem psychiatrischen Krankenhaus oder einer Entziehungsanstalt nicht anordnet. Durch die Einlegung eines Rechtsmittels darf die Freilassung nicht aufgehalten werden. § 120 Abs. 3 gilt entsprechend.

(4) Hat der Untergebrachte einen gesetzlichen Vertreter oder einen Bevollmächtigten im Sinne des § 1906 Abs. 5 des Bürgerlichen Gesetzbuches, so sind Entscheidungen nach Absatz 1 bis 3 auch diesem bekannt zu geben.

§ 127

(1) Wird jemand auf frischer Tat betroffen oder verfolgt, so ist, wenn er der Flucht verdächtig ist oder seine Identität nicht sofort festgestellt werden kann, jedermann befugt, ihn auch ohne richterliche Anordnung vorläufig festzunehmen. Die Feststellung der Identität einer Person durch die Staatsanwaltschaft oder die Beamten des Polizeidienstes bestimmt sich nach § 163b Abs. 1.

(2) Die Staatsanwaltschaft und die Beamten des Polizeidienstes sind bei Gefahr im Verzug auch dann zur vorläufigen Festnahme befugt, wenn die Voraussetzungen eines Haftbefehls oder eines Unterbringungsbefehls vorliegen.

(3) Ist eine Straftat nur auf Antrag verfolgbar, so ist die vorläufige Festnahme auch dann zulässig, wenn ein Antrag noch nicht gestellt ist. Dies gilt entsprechend, wenn eine Straftat nur mit Ermächtigung oder auf Strafverlangen verfolgbar ist.

(4) Für die vorläufige Festnahme durch die Staatsanwaltschaft und die Beamten des Polizeidienstes gelten die §§ 114a bis 114c entsprechend.

§ 127a

(1) Hat der Beschuldigte im Geltungsbereich dieses Gesetzes keinen festen Wohnsitz oder Aufenthalt und liegen die Voraussetzungen eines Haftbefehls nur wegen Fluchtgefahr vor, so kann davon abgesehen werden, seine Festnahme anzuordnen oder aufrechtzuerhalten, wenn

1. nicht damit zu rechnen ist, daß wegen der Tat eine Freiheitsstrafe verhängt oder eine freiheitsentziehende Maßregel der Besserung und Sicherung angeordnet wird und
2. der Beschuldigte eine angemessene Sicherheit für die zu erwartende Geldstrafe und die Kosten des Verfahrens leistet.

(2) § 116a Abs. 1 und 3 gilt entsprechend.

§ 127b

(1) Die Staatsanwaltschaft und die Beamten des Polizeidienstes sind zur vorläufigen Festnahme eines auf frischer Tat Betroffenen oder Verfolgten auch dann befugt, wenn

1. eine unverzügliche Entscheidung im beschleunigten Verfahren wahrscheinlich ist und
2. auf Grund bestimmter Tatsachen zu befürchten ist, daß der Festgenommene der Hauptverhandlung fernbleiben wird.

Die §§ 114a bis 114c gelten entsprechend.

(2) Ein Haftbefehl (§ 128 Abs. 2 Satz 2) darf aus den Gründen des Absatzes 1 gegen den der Tat dringend Verdächtigen nur ergehen, wenn die Durchführung der Hauptverhandlung binnen einer Woche nach der Festnahme zu erwarten ist. Der Haftbefehl ist auf höchstens eine Woche ab dem Tage der Festnahme zu befristen.

(3) Über den Erlaß des Haftbefehls soll der für die Durchführung des beschleunigten

Verfahrens zuständige Richter entscheiden.

§ 128

(1) Der Festgenommene ist, sofern er nicht wieder in Freiheit gesetzt wird, unverzüglich, spätestens am Tage nach der Festnahme, dem Richter bei dem Amtsgericht, in dessen Bezirk er festgenommen worden ist, vorzuführen. Der Richter vernimmt den Vorgeführten gemäß § 115 Abs. 3.

(2) Hält der Richter die Festnahme nicht für gerechtfertigt oder ihre Gründe für beseitigt, so ordnet er die Freilassung an. Andernfalls erläßt er auf Antrag der Staatsanwaltschaft oder, wenn ein Staatsanwalt nicht erreichbar ist, von Amts wegen einen Haftbefehl oder einen Unterbringungsbefehl. § 115 Abs. 4 gilt entsprechend.

§ 129

Ist gegen den Festgenommenen bereits die öffentliche Klage erhoben, so ist er entweder sofort oder auf Verfügung des Richters, dem er zunächst vorgeführt worden ist, dem zuständigen Gericht vorzuführen; dieses hat spätestens am Tage nach der Festnahme über Freilassung, Verhaftung oder einstweilige Unterbringung des Festgenommenen zu entscheiden.

§ 130

Wird wegen Verdachts einer Straftat, die nur auf Antrag verfolgbar ist, ein Haftbefehl erlassen, bevor der Antrag gestellt ist, so ist der Antragsberechtigte, von mehreren wenigstens einer, sofort von dem Erlaß des Haftbefehls in Kenntnis zu setzen und davon zu unterrichten, daß der Haftbefehl aufgehoben werden wird, wenn der Antrag nicht innerhalb einer vom Richter zu bestimmenden Frist, die eine Woche nicht überschreiten soll, gestellt wird.

Wird innerhalb der Frist Strafantrag nicht gestellt, so ist der Haftbefehl aufzuheben. Dies gilt entsprechend, wenn eine Straftat nur mit Ermächtigung oder auf Strafverlangen verfolgbar ist. § 120 Abs. 3 ist anzuwenden. 9a. Abschnitt Weitere Maßnahmen zur Sicherstellung der Strafverfolgung und Strafvollstreckung

§ 131

(1) Auf Grund eines Haftbefehls oder eines Unterbringungsbefehls können der Richter oder die Staatsanwaltschaft und, wenn Gefahr im Verzug ist, ihre Ermittlungspersonen (§ 152 des Gerichtsverfassungsgesetzes) die Ausschreibung zur Festnahme veranlassen.

(2) Liegen die Voraussetzungen eines Haftbefehls oder Unterbringungsbefehls vor, dessen Erlass nicht ohne Gefährdung des Fahndungserfolges abgewartet werden kann, so können die Staatsanwaltschaft und ihre Ermittlungspersonen (§ 152 des Gerichtsverfassungsgesetzes) Maßnahmen nach Absatz 1 veranlassen, wenn dies zur vorläufigen Festnahme erforderlich ist. Die Entscheidung über den Erlass des Haft- oder Unterbringungsbefehls ist unverzüglich, spätestens binnen einer Woche herbeizuführen.

(3) Bei einer Straftat von erheblicher Bedeutung können in den Fällen der Absätze 1 und 2 der Richter und die Staatsanwaltschaft auch Öffentlichkeitsfahndungen veranlassen, wenn andere Formen der Aufenthaltsermittlung erheblich weniger Erfolg versprechend oder wesentlich erschwert wären. Unter den gleichen Voraussetzungen steht diese Befugnis bei Gefahr im Verzug und wenn der Richter oder die Staatsanwaltschaft nicht rechtzeitig erreichbar ist auch den Ermittlungspersonen der Staatsanwaltschaft (§ 152 des Gerichtsverfassungsgesetzes) zu. In den Fällen des Satzes 2 ist die Entscheidung der Staatsanwaltschaft unverzüglich herbeizuführen. Die Anordnung tritt außer Kraft, wenn diese Bestätigung nicht binnen 24 Stunden erfolgt.

(4) Der Beschuldigte ist möglichst genau zu bezeichnen und soweit erforderlich zu beschreiben; eine Abbildung darf beigefügt werden. Die Tat, derer er verdächtig ist, Ort und Zeit ihrer Begehung sowie Umstände, die für die Ergreifung von Bedeutung sein können, können angegeben werden.

(5) Die §§ 115 und 115a gelten entsprechend.

§ 131a

(1) Die Ausschreibung zur Aufenthaltsermittlung eines Beschuldigten oder eines Zeugen darf angeordnet werden, wenn sein Aufenthalt nicht bekannt ist.

(2) Absatz 1 gilt auch für Ausschreibungen des Beschuldigten, soweit sie zur Sicherstellung

eines Führerscheins, zur erkennungsdienstlichen Behandlung, zur Anfertigung einer DNA-Analyse oder zur Feststellung seiner Identität erforderlich sind.

(3) Auf Grund einer Ausschreibung zur Aufenthaltsermittlung eines Beschuldigten oder Zeugen darf bei einer Straftat von erheblicher Bedeutung auch eine Öffentlichkeitsfahndung angeordnet werden, wenn der Beschuldigte der Begehung der Straftat dringend verdächtig ist und die Aufenthaltsermittlung auf andere Weise erheblich weniger Erfolg versprechend oder wesentlich erschwert wäre.

(4) § 131 Abs. 4 gilt entsprechend. Bei der Aufenthaltsermittlung eines Zeugen ist erkennbar zu machen, dass die gesuchte Person nicht Beschuldigter ist. Die Öffentlichkeitsfahndung nach einem Zeugen unterbleibt, wenn überwiegende schutzwürdige Interessen des Zeugen entgegenstehen. Abbildungen des Zeugen dürfen nur erfolgen, soweit die Aufenthaltsermittlung auf andere Weise aussichtslos oder wesentlich erschwert wäre.

(5) Ausschreibungen nach den Absätzen 1 und 2 dürfen in allen Fahndungshilfsmitteln der Strafverfolgungsbehörden vorgenommen werden.

§ 131b

(1) Die Veröffentlichung von Abbildungen eines Beschuldigten, der einer Straftat von erheblicher Bedeutung verdächtig ist, ist auch zulässig, wenn die Aufklärung einer Straftat, insbesondere die Feststellung der Identität eines unbekannten Täters auf andere Weise erheblich weniger Erfolg versprechend oder wesentlich erschwert wäre.

(2) Die Veröffentlichung von Abbildungen eines Zeugen und Hinweise auf das der Veröffentlichung zugrunde liegende Strafverfahren sind auch zulässig, wenn die Aufklärung einer Straftat von erheblicher Bedeutung, insbesondere die Feststellung der Identität des Zeugen, auf andere Weise aussichtslos oder wesentlich erschwert wäre. Die Veröffentlichung muss erkennbar machen, dass die abgebildete Person nicht Beschuldigter ist.

(3) § 131 Abs. 4 Satz 1 erster Halbsatz und Satz 2 gilt entsprechend.

§ 131c

(1) Fahndungen nach § 131a Abs. 3 und § 131b dürfen nur durch den Richter, bei Gefahr im

Verzug auch durch die Staatsanwaltschaft und ihre Ermittlungspersonen (§ 152 des Gerichtsverfassungsgesetzes) angeordnet werden. Fahndungen nach § 131a Abs. 1 und 2 bedürfen der Anordnung durch die Staatsanwaltschaft; bei Gefahr im Verzug dürfen sie auch durch ihre Ermittlungspersonen (§ 152 des Gerichtsverfassungsgesetzes) angeordnet werden.

(2) In Fällen andauernder Veröffentlichung in elektronischen Medien sowie bei wiederholter Veröffentlichung im Fernsehen oder in periodischen Druckwerken tritt die Anordnung der Staatsanwaltschaft und ihrer Ermittlungspersonen (§ 152 des Gerichtsverfassungsgesetzes) nach Absatz 1 Satz 1 außer Kraft, wenn sie nicht binnen einer Woche von dem Richter bestätigt wird. Im Übrigen treten Fahndungsanordnungen der Ermittlungspersonen der Staatsanwaltschaft (§ 152 des Gerichtsverfassungsgesetzes) außer Kraft, wenn sie nicht binnen einer Woche von der Staatsanwaltschaft bestätigt werden.

§ 132

(1) Hat der Beschuldigte, der einer Straftat dringend verdächtig ist, im Geltungsbereich dieses Gesetzes keinen festen Wohnsitz oder Aufenthalt, liegen aber die Voraussetzungen eines Haftbefehls nicht vor, so kann, um die Durchführung des Strafverfahrens sicherzustellen, angeordnet werden, daß der Beschuldigte

1. eine angemessene Sicherheit für die zu erwartende Geldstrafe und die Kosten des Verfahrens leistet und
2. eine im Bezirk des zuständigen Gerichts wohnende Person zum Empfang von Zustellungen bevollmächtigt.

§ 116a Abs. 1 gilt entsprechend.

(2) Die Anordnung dürfen nur der Richter, bei Gefahr im Verzuge auch die Staatsanwaltschaft und ihre Ermittlungspersonen (§ 152 des Gerichtsverfassungsgesetzes) treffen.

(3) Befolgt der Beschuldigte die Anordnung nicht, so können Beförderungsmittel und andere Sachen, die der Beschuldigte mit sich führt und die ihm gehören, beschlagnahmt werden. Die §§ 94 und 98 gelten entsprechend.

9b. Abschnitt
Vorläufiges Berufsverbot

§ 132a

(1) Sind dringende Gründe für die Annahme vorhanden, daß ein Berufsverbot angeordnet werden wird (§ 70 des Strafgesetzbuches), so kann der Richter dem Beschuldigten durch Beschluß die Ausübung des Berufs, Berufszweiges, Gewerbes oder Gewerbezweiges vorläufig verbieten. § 70 Abs. 3 des Strafgesetzbuches gilt entsprechend.

(2) Das vorläufige Berufsverbot ist aufzuheben, wenn sein Grund weggefallen ist oder wenn das Gericht im Urteil das Berufsverbot nicht anordnet.

Zehnter Abschnitt
Vernehmung des Beschuldigten

§ 133

(1) Der Beschuldigte ist zur Vernehmung schriftlich zu laden.

(2) Die Ladung kann unter der Androhung geschehen, daß im Falle des Ausbleibens seine Vorführung erfolgen werde.

§ 134

(1) Die sofortige Vorführung des Beschuldigten kann verfügt werden, wenn Gründe vorliegen, die den Erlaß eines Haftbefehls rechtfertigen würden.

(2) In dem Vorführungsbefehl ist der Beschuldigte genau zu bezeichnen und die ihm zur Last gelegte Straftat sowie der Grund der Vorführung anzugeben.

§ 135

Der Beschuldigte ist unverzüglich dem Richter vorzuführen und von diesem zu vernehmen. Er darf auf Grund des Vorführungsbefehls nicht länger festgehalten werden als bis zum Ende des Tages, der dem Beginn der Vorführung folgt.

§ 136

(1) Bei Beginn der ersten Vernehmung ist dem Beschuldigten zu eröffnen, welche Tat ihm zu Last gelegt wird und welche Strafvorschriften in Betracht kommen. Er ist darauf hinzuweisen, daß es ihm nach dem Gesetz freistehe, sich zu der Beschuldigung zu äußern oder nicht zur Sache auszusagen und jederzeit, auch schon vor seiner Vernehmung, einen von ihm zu wählenden Verteidiger zu befragen. Er ist ferner darüber zu belehren, daß er zu seiner Entlastung einzelne Beweiserhebungen beantragen kann. In geeigneten Fällen soll der Beschuldigte auch darauf, dass er sich schriftlich äußern kann, sowie auf die Möglichkeit eines Täter-Opfer-Ausgleichs hingewiesen werden.

(2) Die Vernehmung soll dem Beschuldigten Gelegenheit geben, die gegen ihn vorliegenden Verdachtsgründe zu beseitigen und die zu seinen Gunsten sprechenden Tatsachen geltend zu machen.

(3) Bei der ersten Vernehmung des Beschuldigten ist zugleich auf die Ermittlung seiner persönlichen Verhältnisse Bedacht zu nehmen.

§ 136a

(1) Die Freiheit der Willensentschließung und der Willensbetätigung des Beschuldigten darf nicht beeinträchtigt werden durch Mißhandlung, durch Ermüdung, durch körperlichen Eingriff, durch Verabreichung von Mitteln, durch Quälerei, durch Täuschung oder durch Hypnose. Zwang darf nur angewandt werden, soweit das Strafverfahrensrecht dies zuläßt. Die Drohung mit einer nach seinen Vorschriften unzulässigen Maßnahme und das Versprechen eines gesetzlich nicht vorgesehenen Vorteils sind verboten.

(2) Maßnahmen, die das Erinnerungsvermögen oder die Einsichtsfähigkeit des Beschuldigten beeinträchtigen, sind nicht gestattet.

(3) Das Verbot der Absätze 1 und 2 gilt ohne Rücksicht auf die Einwilligung des Beschuldigten. Aussagen, die unter Verletzung dieses Verbots zustande gekommen sind, dürfen auch dann nicht verwertet werden, wenn der Beschuldigte der Verwertung zustimmt.

Elfter Abschnitt
Verteidigung

§ 137

(1) Der Beschuldigte kann sich in jeder Lage des Verfahrens des Beistandes eines Verteidigers bedienen. Die Zahl der gewählten Verteidiger darf drei nicht übersteigen.

(2) Hat der Beschuldigte einen gesetzlichen Vertreter, so kann auch dieser selbständig einen Verteidiger wählen. Absatz 1 Satz 2 gilt entsprechend.

§ 138

(1) Zu Verteidigern können Rechtsanwälte sowie die Rechtslehrer an deutschen Hochschulen im Sinne des Hochschulrahmengesetzes mit Befähigung zum Richteramt gewählt werden.

(2) Andere Personen können nur mit Genehmigung des Gerichts gewählt werden. Gehört die gewählte Person im Fall der notwendigen Verteidigung nicht zu den Personen, die zu Verteidigern bestellt werden dürfen, kann sie zudem nur in Gemeinschaft mit einer solchen als Wahlverteidiger zugelassen werden.

(3) Können sich Zeugen, Privatkläger, Nebenkläger, Nebenklagebefugte und Verletzte eines Rechtsanwalts als Beistand bedienen oder sich durch einen solchen vertreten lassen, können sie nach Maßgabe der Absätze 1 und 2 Satz 1 auch die übrigen dort genannten Personen wählen.

§ 138a

(1) Ein Verteidiger ist von der Mitwirkung in einem Verfahren auszuschließen, wenn er dringend oder in einem die Eröffnung des Hauptverfahrens rechtfertigenden Grade verdächtig ist, daß er

1. an der Tat, die den Gegenstand der Untersuchung bildet, beteiligt ist,
2. den Verkehr mit dem nicht auf freiem Fuß befindlichen Beschuldigten dazu mißbraucht, Straftaten zu begehen oder die Sicherheit einer Vollzugsanstalt erheblich zu gefährden, oder

3. eine Handlung begangen hat, die für den Fall der Verurteilung des Beschuldigten Begünstigung, Strafvereitelung oder Hehlerei wäre.

(2) Von der Mitwirkung in einem Verfahren, das eine Straftat nach § 129a, auch in Verbindung mit § 129b Abs. 1, des Strafgesetzbuches zum Gegenstand hat, ist ein Verteidiger auch auszuschließen, wenn bestimmte Tatsachen den Verdacht begründen, daß er eine der in Absatz 1 Nr. 1 und 2 bezeichneten Handlungen begangen hat oder begeht.

(3) Die Ausschließung ist aufzuheben,

1. sobald ihre Voraussetzungen nicht mehr vorliegen, jedoch nicht allein deshalb, weil der Beschuldigte auf freien Fuß gesetzt worden ist,
2. wenn der Verteidiger in einem wegen des Sachverhalts, der zur Ausschließung geführt hat, eröffneten Hauptverfahren freigesprochen oder wenn in einem Urteil des Ehren- oder Berufsgerichts eine schuldhafte Verletzung der Berufspflichten im Hinblick auf diesen Sachverhalt nicht festgestellt wird,
3. wenn nicht spätestens ein Jahr nach der Ausschließung wegen des Sachverhalts, der zur Ausschließung geführt hat, das Hauptverfahren im Strafverfahren oder im ehren- oder berufsgerichtlichen Verfahren eröffnet oder ein Strafbefehl erlassen worden ist.

Eine Ausschließung, die nach Nummer 3 aufzuheben ist, kann befristet, längstens jedoch insgesamt für die Dauer eines weiteren Jahres, aufrechterhalten werden, wenn die besondere Schwierigkeit oder der besondere Umfang der Sache oder ein anderer wichtiger Grund die Entscheidung über die Eröffnung des Hauptverfahrens noch nicht zuläßt.

(4) Solange ein Verteidiger ausgeschlossen ist, kann er den Beschuldigten auch in anderen gesetzlich geordneten Verfahren nicht verteidigen. In sonstigen Angelegenheiten darf er den Beschuldigten, der sich nicht auf freiem Fuß befindet, nicht aufsuchen.

(5) Andere Beschuldigte kann ein Verteidiger, solange er ausgeschlossen ist, in demselben Verfahren nicht verteidigen, in anderen Verfahren dann nicht, wenn diese eine Straftat nach § 129a, auch in Verbindung mit § 129b Abs. 1, des Strafgesetzbuches zum Gegenstand haben und die Ausschließung in einem Verfahren erfolgt ist, das ebenfalls eine solche Straftat zum Gegenstand hat. Absatz 4 gilt entsprechend.

§ 138b

Von der Mitwirkung in einem Verfahren, das eine der in § 74a Abs. 1 Nr. 3 und § 120 Abs. 1 Nr. 3 des Gerichtsverfassungsgesetzes genannten Straftaten oder die Nichterfüllung der Pflichten nach § 138 des Strafgesetzbuches hinsichtlich der Straftaten des Landesverrates oder einer Gefährdung der äußeren Sicherheit nach den §§ 94 bis 96, 97a und 100 des Strafgesetzbuches zum Gegenstand hat, ist ein Verteidiger auch dann auszuschließen, wenn auf Grund bestimmter Tatsachen die Annahme begründet ist, daß seine Mitwirkung eine Gefahr für die Sicherheit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herbeiführen würde. § 138a Abs. 3 Satz 1 Nr. 1 gilt entsprechend.

§ 138c

(1) Die Entscheidungen nach den §§ 138a und 138b trifft das Oberlandesgericht. Werden im vorbereitenden Verfahren die Ermittlungen vom Generalbundesanwalt geführt oder ist das Verfahren vor dem Bundesgerichtshof anhängig, so entscheidet der Bundesgerichtshof. Ist das Verfahren vor einem Senat eines Oberlandesgerichtes oder des Bundesgerichtshofes anhängig, so entscheidet ein anderer Senat.

(2) Das nach Absatz 1 zuständige Gericht entscheidet nach Erhebung der öffentlichen Klage bis zum rechtskräftigen Abschluß des Verfahrens auf Vorlage des Gerichts, bei dem das Verfahren anhängig ist, sonst auf Antrag der Staatsanwaltschaft. Die Vorlage erfolgt auf Antrag der Staatsanwaltschaft oder von Amts wegen durch Vermittlung der Staatsanwaltschaft. Soll ein Verteidiger ausgeschlossen werden, der Mitglied einer Rechtsanwaltskammer ist, so ist eine Abschrift des Antrages der Staatsanwaltschaft nach Satz 1 oder die Vorlage des Gerichts dem Vorstand der zuständigen Rechtsanwaltskammer mitzuteilen. Dieser kann sich im Verfahren äußern.

(3) Das Gericht, bei dem das Verfahren anhängig ist, kann anordnen, daß die Rechte des Verteidigers aus den §§ 147 und 148 bis zur Entscheidung des nach Absatz 1 zuständigen Gerichts über die Ausschließung ruhen; es kann das Ruhen dieser Rechte auch für die in § 138a Abs. 4 und 5 bezeichneten Fälle anordnen. Vor Erhebung der öffentlichen Klage und nach rechtskräftigem Abschluß des Verfahrens trifft die Anordnung nach Satz 1 das

Gericht, das über die Ausschließung des Verteidigers zu entscheiden hat. Die Anordnung ergeht durch unanfechtbaren Beschluß. Für die Dauer der Anordnung hat das Gericht zur Wahrnehmung der Rechte aus den §§ 147 und 148 einen anderen Verteidiger zu bestellen. § 142 gilt entsprechend.

(4) Legt das Gericht, bei dem das Verfahren anhängig ist, gemäß Absatz 2 während der Hauptverhandlung vor, so hat es zugleich mit der Vorlage die Hauptverhandlung bis zur Entscheidung durch das nach Absatz 1 zuständige Gericht zu unterbrechen oder auszusetzen. Die Hauptverhandlung kann bis zu dreißig Tagen unterbrochen werden.

(5) Scheidet der Verteidiger aus eigenem Entschluß oder auf Veranlassung des Beschuldigten von der Mitwirkung in einem Verfahren aus, nachdem gemäß Absatz 2 der Antrag auf Ausschließung gegen ihn gestellt oder die Sache dem zur Entscheidung zuständigen Gericht vorgelegt worden ist, so kann dieses Gericht das Ausschließungsverfahren weiterführen mit dem Ziel der Feststellung, ob die Mitwirkung des ausgeschiedenen Verteidigers in dem Verfahren zulässig ist. Die Feststellung der Unzulässigkeit steht im Sinne der §§ 138a, 138b, 138d der Ausschließung gleich.

(6) Ist der Verteidiger von der Mitwirkung in dem Verfahren ausgeschlossen worden, so können ihm die durch die Aussetzung verursachten Kosten auferlegt werden. Die Entscheidung hierüber trifft das Gericht, bei dem das Verfahren anhängig ist.

§ 138d

(1) Über die Ausschließung des Verteidigers wird nach mündlicher Verhandlung entschieden.

(2) Der Verteidiger ist zu dem Termin der mündlichen Verhandlung zu laden. Die Ladungsfrist beträgt eine Woche; sie kann auf drei Tage verkürzt werden. Die Staatsanwaltschaft, der Beschuldigte und in den Fällen des § 138c Abs. 2 Satz 3 der Vorstand der Rechtsanwaltskammer sind von dem Termin zur mündlichen Verhandlung zu benachrichtigen.

(3) Die mündliche Verhandlung kann ohne den Verteidiger durchgeführt werden, wenn er ordnungsgemäß geladen und in der Ladung darauf hingewiesen worden ist, daß in seiner Abwesenheit verhandelt werden kann.

(4) In der mündlichen Verhandlung sind die anwesenden Beteiligten zu hören. Den Umfang

der Beweisaufnahme bestimmt das Gericht nach pflichtgemäßem Ermessen. Über die Verhandlung ist eine Niederschrift aufzunehmen; die §§ 271 bis 273 gelten entsprechend.

(5) Die Entscheidung ist am Schluß der mündlichen Verhandlung zu verkünden. Ist dies nicht möglich, so ist die Entscheidung spätestens binnen einer Woche zu erlassen.

(6) Gegen die Entscheidung, durch die ein Verteidiger aus den in § 138a genannten Gründen ausgeschlossen wird oder die einen Fall des § 138b betrifft, ist sofortige Beschwerde zulässig. Dem Vorstand der Rechtsanwaltskammer steht ein Beschwerderecht nicht zu. Eine die Ausschließung des Verteidigers nach § 138a ablehnende Entscheidung ist nicht anfechtbar.

§ 139

Der als Verteidiger gewählte Rechtsanwalt kann mit Zustimmung dessen, der ihn gewählt hat, die Verteidigung einem Rechtskundigen, der die erste Prüfung für den Justizdienst bestanden hat und darin seit mindestens einem Jahr und drei Monaten beschäftigt ist, übertragen.

§ 140

(1) Die Mitwirkung eines Verteidigers ist notwendig, wenn

1. die Hauptverhandlung im ersten Rechtszug vor dem Oberlandesgericht oder dem Landgericht stattfindet;
2. dem Beschuldigten ein Verbrechen zur Last gelegt wird;
3. das Verfahren zu einem Berufsverbot führen kann;
4. gegen einen Beschuldigten Untersuchungshaft nach den §§ 112, 112a oder einstweilige Unterbringung nach § 126a oder § 275a Absatz 6 vollstreckt wird;
5. der Beschuldigte sich mindestens drei Monate auf Grund richterlicher Anordnung oder mit richterlicher Genehmigung in einer Anstalt befunden hat und nicht mindestens zwei Wochen vor Beginn der Hauptverhandlung entlassen wird;
6. zur Vorbereitung eines Gutachtens über den psychischen Zustand des Beschuldigten seine Unterbringung nach § 81 in Frage kommt;
7. ein Sicherungsverfahren durchgeführt wird;

8. der bisherige Verteidiger durch eine Entscheidung von der Mitwirkung in dem Verfahren ausgeschlossen ist.

(2) In anderen Fällen bestellt der Vorsitzende auf Antrag oder von Amts wegen einen Verteidiger, wenn wegen der Schwere der Tat oder wegen der Schwierigkeit der Sach- oder Rechtslage die Mitwirkung eines Verteidigers geboten erscheint oder wenn ersichtlich ist, daß sich der Beschuldigte nicht selbst verteidigen kann, namentlich, weil dem Verletzten nach den §§ 397a und 406g Abs. 3 und 4 ein Rechtsanwalt beigeordnet worden ist. Dem Antrag eines hör- oder sprachbehinderten Beschuldigten ist zu entsprechen.

(3) Die Bestellung eines Verteidigers nach Absatz 1 Nr. 5 kann aufgehoben werden, wenn der Beschuldigte mindestens zwei Wochen vor Beginn der Hauptverhandlung aus der Anstalt entlassen wird. Die Bestellung des Verteidigers nach Absatz 1 Nr. 4 bleibt unter den in Absatz 1 Nr. 5 bezeichneten Voraussetzungen für das weitere Verfahren wirksam, wenn nicht ein anderer Verteidiger bestellt wird.

§ 141

(1) In den Fällen des § 140 Abs. 1 Nr. 1 bis 3, 5 bis 8 und Abs. 2 wird dem Angeschuldigten, der noch keinen Verteidiger hat, ein Verteidiger bestellt, sobald er gemäß § 201 zur Erklärung über die Anklageschrift aufgefordert worden ist.

(2) Ergibt sich erst später, daß ein Verteidiger notwendig ist, so wird er sofort bestellt.

(3) Der Verteidiger kann auch schon während des Vorverfahrens bestellt werden. Die Staatsanwaltschaft beantragt dies, wenn nach ihrer Auffassung in dem gerichtlichen Verfahren die Mitwirkung eines Verteidigers nach § 140 Abs. 1 oder 2 notwendig sein wird. Nach dem Abschluß der Ermittlungen (§ 169a) ist er auf Antrag der Staatsanwaltschaft zu bestellen. Im Fall des § 140 Abs. 1 Nr. 4 wird der Verteidiger unverzüglich nach Beginn der Vollstreckung bestellt.

(4) Über die Bestellung entscheidet der Vorsitzende des Gerichts, das für das Hauptverfahren zuständig oder bei dem das Verfahren anhängig ist; im Fall des § 140 Abs. 1 Nr. 4 entscheidet das nach § 126 oder § 275a Absatz 6 zuständige Gericht.

§ 142

(1) Vor der Bestellung eines Verteidigers soll dem Beschuldigten Gelegenheit gegeben werden, innerhalb einer zu bestimmenden Frist einen Verteidiger seiner Wahl zu bezeichnen. Der Vorsitzende bestellt diesen, wenn dem kein wichtiger Grund entgegensteht.

(2) In den Fällen des § 140 Abs. 1 Nr. 2 und 5 sowie des § 140 Abs. 2 können auch Rechtskundige, welche die vorgeschriebene erste Prüfung für den Justizdienst bestanden haben und darin seit mindestens einem Jahr und drei Monaten beschäftigt sind, für den ersten Rechtszug als Verteidiger bestellt werden, jedoch nicht bei dem Gericht, dessen Richter sie zur Ausbildung überwiesen sind.

§ 143

Die Bestellung ist zurückzunehmen, wenn demnächst ein anderer Verteidiger gewählt wird und dieser die Wahl annimmt.

§ 144 (weggefallen)

§ 145

(1) Wenn in einem Falle, in dem die Verteidigung notwendig ist, der Verteidiger in der Hauptverhandlung ausbleibt, sich unzeitig entfernt oder sich weigert, die Verteidigung zu führen, so hat der Vorsitzende dem Angeklagten sogleich einen anderen Verteidiger zu bestellen. Das Gericht kann jedoch auch eine Aussetzung der Verhandlung beschließen.

(2) Wird der notwendige Verteidiger gemäß § 141 Abs. 2 erst im Laufe der Hauptverhandlung bestellt, so kann das Gericht eine Aussetzung der Verhandlung beschließen.

(3) Erklärt der neu bestellte Verteidiger, daß ihm die zur Vorbereitung der Verteidigung erforderliche Zeit nicht verbleiben würde, so ist die Verhandlung zu unterbrechen oder auszusetzen.

(4) Wird durch die Schuld des Verteidigers eine Aussetzung erforderlich, so sind ihm die hierdurch verursachten Kosten aufzuerlegen.

§ 145a

(1) Der gewählte Verteidiger, dessen Vollmacht sich bei den Akten befindet, sowie der bestellte Verteidiger gelten als ermächtigt, Zustellungen und sonstige Mitteilungen für den Beschuldigten in Empfang zu nehmen.

(2) Eine Ladung des Beschuldigten darf an den Verteidiger nur zugestellt werden, wenn er in einer bei den Akten befindlichen Vollmacht ausdrücklich zur Empfangnahme von Ladungen ermächtigt ist. § 116a Abs. 3 bleibt unberührt.

(3) Wird eine Entscheidung dem Verteidiger nach Absatz 1 zugestellt, so wird der Beschuldigte hiervon unterrichtet; zugleich erhält er formlos eine Abschrift der Entscheidung. Wird eine Entscheidung dem Beschuldigten zugestellt, so wird der Verteidiger hiervon zugleich unterrichtet, auch wenn eine schriftliche Vollmacht bei den Akten nicht vorliegt; dabei erhält er formlos eine Abschrift der Entscheidung.

§ 146

Ein Verteidiger kann nicht gleichzeitig mehrere derselben Tat Beschuldigte verteidigen. In einem Verfahren kann er auch nicht gleichzeitig mehrere verschiedener Taten Beschuldigte verteidigen.

§ 146a

(1) Ist jemand als Verteidiger gewählt worden, obwohl die Voraussetzungen des § 137 Abs. 1 Satz 2 oder des § 146 vorliegen, so ist er als Verteidiger zurückzuweisen, sobald dies erkennbar wird; gleiches gilt, wenn die Voraussetzungen des § 146 nach der Wahl eintreten. Zeigen in den Fällen des § 137 Abs. 1 Satz 2 mehrere Verteidiger gleichzeitig ihre Wahl an und wird dadurch die Höchstzahl der wählbaren Verteidiger überschritten, so sind sie alle zurückzuweisen. Über die Zurückweisung entscheidet das Gericht, bei dem das Verfahren anhängig ist oder das für das Hauptverfahren zuständig wäre.

(2) Handlungen, die ein Verteidiger vor der Zurückweisung vorgenommen hat, sind nicht deshalb unwirksam, weil die Voraussetzungen des § 137 Abs. 1 Satz 2 oder des § 146 vorlagen.

§ 147

(1) Der Verteidiger ist befugt, die Akten, die dem Gericht vorliegen oder diesem im Falle der Erhebung der Anklage vorzulegen wären, einzusehen sowie amtlich verwahrte Beweisstücke zu besichtigen.

(2) Ist der Abschluss der Ermittlungen noch nicht in den Akten vermerkt, kann dem Verteidiger die Einsicht in die Akten oder einzelne Aktenteile sowie die Besichtigung von amtlich verwahrten Beweisgegenständen versagt werden, soweit dies den Untersuchungszweck gefährden kann. Liegen die Voraussetzungen von Satz 1 vor und befindet sich der Beschuldigte in Untersuchungshaft oder ist diese im Fall der vorläufigen Festnahme beantragt, sind dem Verteidiger die für die Beurteilung der Rechtmäßigkeit der Freiheitsentziehung wesentlichen Informationen in geeigneter Weise zugänglich zu machen; in der Regel ist insoweit Akteneinsicht zu gewähren.

(3) Die Einsicht in die Niederschriften über die Vernehmung des Beschuldigten und über solche richterlichen Untersuchungshandlungen, bei denen dem Verteidiger die Anwesenheit gestattet worden ist oder hätte gestattet werden müssen, sowie in die Gutachten von Sachverständigen darf dem Verteidiger in keiner Lage des Verfahrens versagt werden.

(4) Auf Antrag sollen dem Verteidiger, soweit nicht wichtige Gründe entgegenstehen, die Akten mit Ausnahme der Beweisstücke zur Einsichtnahme in seine Geschäftsräume oder in seine Wohnung mitgegeben werden. Die Entscheidung ist nicht anfechtbar.

(5) Über die Gewährung der Akteneinsicht entscheidet im vorbereitenden Verfahren und nach rechtskräftigem Abschluss des Verfahrens die Staatsanwaltschaft, im Übrigen der Vorsitzende des mit der Sache befassten Gerichts. Versagt die Staatsanwaltschaft die Akteneinsicht, nachdem sie den Abschluss der Ermittlungen in den Akten vermerkt hat, versagt sie die Einsicht nach Absatz 3 oder befindet sich der Beschuldigte nicht auf freiem Fuß, so kann gerichtliche Entscheidung durch das nach § 162 zuständige Gericht beantragt werden. Die §§ 297 bis 300, 302, 306 bis 309, 311a und 473a gelten entsprechend. Diese Entscheidungen werden nicht mit Gründen versehen, soweit durch deren Offenlegung der Untersuchungszweck gefährdet werden könnte.

(6) Ist der Grund für die Versagung der Akteneinsicht nicht vorher entfallen, so hebt die

Staatsanwaltschaft die Anordnung spätestens mit dem Abschluß der Ermittlungen auf. Dem Verteidiger ist Mitteilung zu machen, sobald das Recht zur Akteneinsicht wieder uneingeschränkt besteht.

(7) Dem Beschuldigten, der keinen Verteidiger hat, sind auf seinen Antrag Auskünfte und Abschriften aus den Akten zu erteilen, soweit dies zu einer angemessenen Verteidigung erforderlich ist, der Untersuchungszweck, auch in einem anderen Strafverfahren, nicht gefährdet werden kann und nicht überwiegende schutzwürdige Interessen Dritter entgegenstehen. Absatz 2 Satz 2 erster Halbsatz, Absatz 5 und § 477 Abs. 5 gelten entsprechend.

§ 148

(1) Dem Beschuldigten ist, auch wenn er sich nicht auf freiem Fuß befindet, schriftlicher und mündlicher Verkehr mit dem Verteidiger gestattet.

(2) Ist ein nicht auf freiem Fuß befindlicher Beschuldigter einer Tat nach § 129a, auch in Verbindung mit § 129b Abs. 1, des Strafgesetzbuches dringend verdächtig, soll das Gericht anordnen, dass im Verkehr mit Verteidigern Schriftstücke und andere Gegenstände zurückzuweisen sind, sofern sich der Absender nicht damit einverstanden erklärt, dass sie zunächst dem nach § 148a zuständigen Gericht vorgelegt werden. Besteht kein Haftbefehl wegen einer Straftat nach § 129a, auch in Verbindung mit § 129b Abs. 1, des Strafgesetzbuches, trifft die Entscheidung das Gericht, das für den Erlass eines Haftbefehls zuständig wäre. Ist der schriftliche Verkehr nach Satz 1 zu überwachen, sind für Gespräche mit Verteidigern Vorrichtungen vorzusehen, die die Übergabe von Schriftstücken und anderen Gegenständen ausschließen.

§ 148a

(1) Für die Durchführung von Überwachungsmaßnahmen nach § 148 Abs. 2 ist der Richter bei dem Amtsgericht zuständig, in dessen Bezirk die Vollzugsanstalt liegt. Ist eine Anzeige nach § 138 des Strafgesetzbuches zu erstatten, so sind Schriftstücke oder andere Gegenstände, aus denen sich die Verpflichtung zur Anzeige ergibt, vorläufig in

Verwahrung zu nehmen; die Vorschriften über die Beschlagnahme bleiben unberührt.

(2) Der Richter, der mit Überwachungsmaßnahmen betraut ist, darf mit dem Gegenstand der Untersuchung weder befaßt sein noch befaßt werden. Der Richter hat über Kenntnisse, die er bei der Überwachung erlangt, Verschwiegenheit zu bewahren; § 138 des Strafgesetzbuches bleibt unberührt.

§ 149

(1) Der Ehegatte oder Lebenspartner eines Angeklagten ist in der Hauptverhandlung als Beistand zuzulassen und auf sein Verlangen zu hören. Zeit und Ort der Hauptverhandlung sollen ihm rechtzeitig mitgeteilt werden.

(2) Dasselbe gilt von dem gesetzlichen Vertreter eines Angeklagten.

(3) Im Vorverfahren unterliegt die Zulassung solcher Beistände dem richterlichen Ermessen.

§ 150 (weggefallen)

Zweites Buch
Verfahren im ersten Rechtszug

Erster Abschnitt
Öffentliche Klage

§ 151

Die Eröffnung einer gerichtlichen Untersuchung ist durch die Erhebung einer Klage bedingt.

§ 152

(1) Zur Erhebung der öffentlichen Klage ist die Staatsanwaltschaft berufen.

(2) Sie ist, soweit nicht gesetzlich ein anderes bestimmt ist, verpflichtet, wegen aller

verfolgbaren Straftaten einzuschreiten, sofern zureichende tatsächliche Anhaltspunkte vorliegen.

§ 152a

Landesgesetzliche Vorschriften über die Voraussetzungen, unter denen gegen Mitglieder eines Organs der Gesetzgebung eine Strafverfolgung eingeleitet oder fortgesetzt werden kann, sind auch für die anderen Länder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n Bund wirksam.

§ 153

(1) Hat das Verfahren ein Vergehen zum Gegenstand, so kann die Staatsanwaltschaft mit Zustimmung des für die Eröffnung des Hauptverfahrens zuständigen Gerichts von der Verfolgung absehen, wenn die Schuld des Täters als gering anzusehen wäre und kein öffentliches Interesse an der Verfolgung besteht. Der Zustimmung des Gerichtes bedarf es nicht bei einem Vergehen, das nicht mit einer im Mindestmaß erhöhten Strafe bedroht ist und bei dem die durch die Tat verursachten Folgen gering sind.

(2) Ist die Klage bereits erhoben, so kann das Gericht in jeder Lage des Verfahrens unter den Voraussetzungen des Absatzes 1 mit Zustimmung der Staatsanwaltschaft und des Angeschuldigten das Verfahren einstellen. Der Zustimmung des Angeschuldigten bedarf es nicht, wenn die Hauptverhandlung aus den in § 205 angeführten Gründen nicht durchgeführt werden kann oder in den Fällen des § 231 Abs. 2 und der §§ 232 und 233 in seiner Abwesenheit durchgeführt wird. Die Entscheidung ergeht durch Beschluß. Der Beschluß ist nicht anfechtbar.

§ 153a

(1) Mit Zustimmung des für die Eröffnung des Hauptverfahrens zuständigen Gerichts und des Beschuldigten kann die Staatsanwaltschaft bei einem Vergehen vorläufig von der Erhebung der öffentlichen Klage absehen und zugleich dem Beschuldigten Auflagen und Weisungen erteilen, wenn diese geeignet sind, das öffentliche Interesse an der Strafverfolgung zu beseitigen, und die Schwere der Schuld nicht entgegensteht. Als Auflagen oder Weisungen

kommen insbesondere in Betracht,

1. zur Wiedergutmachung des durch die Tat verursachten Schadens eine bestimmte Leistung zu erbringen,
2. einen Geldbetrag zugunsten einer gemeinnützigen Einrichtung oder der Staatskasse zu zahlen,
3. sonst gemeinnützige Leistungen zu erbringen,
4. Unterhaltspflichten in einer bestimmten Höhe nachzukommen,
5. sich ernsthaft zu bemühen, einen Ausgleich mit dem Verletzten zu erreichen (Täter-Opfer-Ausgleich) und dabei seine Tat ganz oder zum überwiegenden Teil wieder gut zu machen oder deren Wiedergutmachung zu erstreben, oder
6. an einem Aufbauseminar nach § 2b Abs. 2 Satz 2 oder § 4 Abs. 8 Satz 4 des Straßenverkehrsgesetzes teilzunehmen.

Zur Erfüllung der Auflagen und Weisungen setzt die Staatsanwaltschaft dem Beschuldigten eine Frist, die in den Fällen des Satzes 2 Nr. 1 bis 3, 5 und 6 höchstens sechs Monate, in den Fällen des Satzes 2 Nr. 4 höchstens ein Jahr beträgt. Die Staatsanwaltschaft kann Auflagen und Weisungen nachträglich aufheben und die Frist einmal für die Dauer von drei Monaten verlängern; mit Zustimmung des Beschuldigten kann sie auch Auflagen und Weisungen nachträglich auferlegen und ändern. Erfüllt der Beschuldigte die Auflagen und Weisungen, so kann die Tat nicht mehr als Vergehen verfolgt werden. Erfüllt der Beschuldigte die Auflagen und Weisungen nicht, so werden Leistungen, die er zu ihrer Erfüllung erbracht hat, nicht erstattet. § 153 Abs. 1 Satz 2 gilt in den Fällen des Satzes 2 Nr. 1 bis 5 entsprechend.

(2) Ist die Klage bereits erhoben, so kann das Gericht mit Zustimmung der Staatsanwaltschaft und des Angeschuldigten das Verfahren bis zum Ende der Hauptverhandlung, in der die tatsächlichen Feststellungen letztmals geprüft werden können, vorläufig einstellen und zugleich dem Angeschuldigten die in Absatz 1 Satz 1 und 2 bezeichneten Auflagen und Weisungen erteilen. Absatz 1 Satz 3 bis 6 gilt entsprechend. Die Entscheidung nach Satz 1 ergeht durch Beschluß. Der Beschluß ist nicht anfechtbar. Satz 4 gilt auch für eine Feststellung, daß gemäß Satz 1 erteilte Auflagen und Weisungen erfüllt worden sind.

(3) Während des Laufes der für die Erfüllung der Auflagen und Weisungen gesetzten Frist ruht die Verjährung.

§ 153b

(1) Liegen die Voraussetzungen vor, unter denen das Gericht von Strafe absehen könnte, so kann die Staatsanwaltschaft mit Zustimmung des Gerichts, das für die Hauptverhandlung zuständig wäre, von der Erhebung der öffentlichen Klage absehen.

(2) Ist die Klage bereits erhoben, so kann das Gericht bis zum Beginn der Hauptverhandlung mit Zustimmung der Staatsanwaltschaft und des Angeschuldigten das Verfahren einstellen.

§ 153c

(1) Die Staatsanwaltschaft kann von der Verfolgung von Straftaten absehen,

1. die außerhalb des räumlichen Geltungsbereichs dieses Gesetzes begangen sind oder die ein Teilnehmer an einer außerhalb des räumlichen Geltungsbereichs dieses Gesetzes begangenen Handlung in diesem Bereich begangen hat,
2. die ein Ausländer im Inland auf einem ausländischen Schiff oder Luftfahrzeug begangen hat,
3. wenn in den Fällen der §§ 129 und 129a, jeweils auch in Verbindung mit § 129b Abs. 1, des Strafgesetzbuches die Vereinigung nicht oder nicht überwiegend im Inland besteht und die im Inland begangenen Beteiligungshandlungen von untergeordneter Bedeutung sind oder sich auf die bloße Mitgliedschaft beschränken.

Für Taten, die nach dem Völkerstrafgesetzbuch strafbar sind, gilt § 153f.

(2) Die Staatsanwaltschaft kann von der Verfolgung einer Tat absehen, wenn wegen der Tat im Ausland schon eine Strafe gegen den Beschuldigten vollstreckt worden ist und die im Inland zu erwartende Strafe nach Anrechnung der ausländischen nicht ins Gewicht fiele oder der Beschuldigte wegen der Tat im Ausland rechtskräftig freigesprochen worden ist.

(3) Die Staatsanwaltschaft kann auch von der Verfolgung von Straftaten absehen, die im räumlichen Geltungsbereich dieses Gesetzes durch eine außerhalb dieses Bereichs ausgeübte Tätigkeit begangen sind, wenn die Durchführung des Verfahrens die Gefahr

eines schweren Nachteils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herbeiführen würde oder wenn der Verfolgung sonstige überwiegende öffentliche Interessen entgegenstehen.

(4) Ist die Klage bereits erhoben, so kann die Staatsanwaltschaft in den Fällen des Absatzes 1 Nr. 1, 2 und des Absatzes 3 die Klage in jeder Lage des Verfahrens zurücknehmen und das Verfahren einstellen, wenn die Durchführung des Verfahrens die Gefahr eines schweren Nachteils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herbeiführen würde oder wenn der Verfolgung sonstige überwiegende öffentliche Interessen entgegenstehen.

(5) Hat das Verfahren Straftaten der in § 74a Abs. 1 Nr. 2 bis 6 und § 120 Abs. 1 Nr. 2 bis 7 des Gerichtsverfassungsgesetzes bezeichneten Art zum Gegenstand, so stehen diese Befugnisse dem Generalbundesanwalt zu.

§ 153d

(1) Der Generalbundesanwalt kann von der Verfolgung von Straftaten der in § 74a Abs. 1 Nr. 2 bis 6 und in § 120 Abs. 1 Nr. 2 bis 7 des Gerichtsverfassungsgesetzes bezeichneten Art absehen, wenn die Durchführung des Verfahrens die Gefahr eines schweren Nachteils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herbeiführen würde oder wenn der Verfolgung sonstige überwiegende öffentliche Interessen entgegenstehen.

(2) Ist die Klage bereits erhoben, so kann der Generalbundesanwalt unter den in Absatz 1 bezeichneten Voraussetzungen die Klage in jeder Lage des Verfahrens zurücknehmen und das Verfahren einstellen.

§ 153e

(1) Hat das Verfahren Straftaten der in § 74a Abs. 1 Nr. 2 bis 4 und in § 120 Abs. 1 Nr. 2 bis 7 des Gerichtsverfassungsgesetzes bezeichneten Art zum Gegenstand, so kann der Generalbundesanwalt mit Zustimmung des nach § 120 des Gerichtsverfassungsgesetzes zuständigen Oberlandesgerichts von der Verfolgung einer solchen Tat absehen, wenn der Täter nach der Tat, bevor ihm deren Entdeckung bekanntgeworden ist, dazu beigetragen hat, eine Gefahr für den Bestand oder die Sicherheit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oder die verfassungsmäßige Ordnung abzuwenden. Dasselbe gilt, wenn der Täter einen solchen

Beitrag dadurch geleistet hat, daß er nach der Tat sein mit ihr zusammenhängendes Wissen über Bestrebungen des Hochverrats, der Gefährdung des demokratischen Rechtsstaates oder des Landesverrats und der Gefährdung der äußeren Sicherheit einer Dienststelle offenbart hat.

(2) Ist die Klage bereits erhoben, so kann das nach § 120 des Gerichtsverfassungsgesetzes zuständige Oberlandesgericht mit Zustimmung des Generalbundesanwalts das Verfahren unter den in Absatz 1 bezeichneten Voraussetzungen einstellen.

§ 153f

(1) Die Staatsanwaltschaft kann von der Verfolgung einer Tat, die nach den §§ 6 bis 14 des Völkerstrafgesetzbuches strafbar ist, in den Fällen des § 153c Abs. 1 Nr. 1 und 2 absehen, wenn sich der Beschuldigte nicht im Inland aufhält und ein solcher Aufenthalt auch nicht zu erwarten ist. Ist in den Fällen des § 153c Abs. 1 Nr. 1 der Beschuldigte Deutscher, so gilt dies jedoch nur dann, wenn die Tat vor einem internationalen Gerichtshof oder durch einen Staat, auf dessen Gebiet die Tat begangen oder dessen Angehöriger durch die Tat verletzt wurde, verfolgt wird.

(2) Die Staatsanwaltschaft kann insbesondere von der Verfolgung einer Tat, die nach den §§ 6 bis 14 des Völkerstrafgesetzbuches strafbar ist, in den Fällen des § 153c Abs. 1 Nr. 1 und 2 absehen, wenn

1. kein Tatverdacht gegen einen Deutschen besteht,
2. die Tat nicht gegen einen Deutschen begangen wurde,
3. kein Tatverdächtiger sich im Inland aufhält und ein solcher Aufenthalt auch nicht zu erwarten ist und
4. die Tat vor einem internationalen Gerichtshof oder durch einen Staat, auf dessen Gebiet die Tat begangen wurde, dessen Angehöriger der Tat verdächtig ist oder dessen Angehöriger durch die Tat verletzt wurde, verfolgt wird.

Dasselbe gilt, wenn sich ein wegen einer im Ausland begangenen Tat beschuldigter Ausländer im Inland aufhält, aber die Voraussetzungen nach Satz 1 Nr. 2 und 4 erfüllt sind und die Überstellung an einen internationalen Gerichtshof oder die Auslieferung an

den verfolgenden Staat zulässig und beabsichtigt ist.

(3) Ist in den Fällen des Absatzes 1 oder 2 die öffentliche Klage bereits erhoben, so kann die Staatsanwaltschaft die Klage in jeder Lage des Verfahrens zurücknehmen und das Verfahren einstellen.

§ 154

(1) Die Staatsanwaltschaft kann von der Verfolgung einer Tat absehen,

1. wenn die Strafe oder die Maßregel der Besserung und Sicherung, zu der die Verfolgung führen kann, neben einer Strafe oder Maßregel der Besserung und Sicherung, die gegen den Beschuldigten wegen einer anderen Tat rechtskräftig verhängt worden ist oder die er wegen einer anderen Tat zu erwarten hat, nicht beträchtlich ins Gewicht fällt oder
2. darüber hinaus, wenn ein Urteil wegen dieser Tat in angemessener Frist nicht zu erwarten ist und wenn eine Strafe oder Maßregel der Besserung und Sicherung, die gegen den Beschuldigten rechtskräftig verhängt worden ist oder die er wegen einer anderen Tat zu erwarten hat, zur Einwirkung auf den Täter und zur Verteidigung der Rechtsordnung ausreichend erscheint.

(2) Ist die öffentliche Klage bereits erhoben, so kann das Gericht auf Antrag der Staatsanwaltschaft das Verfahren in jeder Lage vorläufig einstellen.

(3) Ist das Verfahren mit Rücksicht auf eine wegen einer anderen Tat bereits rechtskräftig erkannten Strafe oder Maßregel der Besserung und Sicherung vorläufig eingestellt worden, so kann es, falls nicht inzwischen Verjährung eingetreten ist, wieder aufgenommen werden, wenn die rechtskräftig erkannte Strafe oder Maßregel der Besserung und Sicherung nachträglich wegfällt.

(4) Ist das Verfahren mit Rücksicht auf eine wegen einer anderen Tat zu erwartende Strafe oder Maßregel der Besserung und Sicherung vorläufig eingestellt worden, so kann es, falls nicht inzwischen Verjährung eingetreten ist, binnen drei Monaten nach Rechtskraft des wegen der anderen Tat ergehenden Urteils wieder aufgenommen werden.

(5) Hat das Gericht das Verfahren vorläufig eingestellt, so bedarf es zur Wiederaufnahme eines Gerichtsbeschlusses.

§ 154a

(1) Fallen einzelne abtrennbare Teile einer Tat oder einzelne von mehreren Gesetzesverletzungen, die durch dieselbe Tat begangen worden sind,

1. für die zu erwartende Strafe oder Maßregel der Besserung und Sicherung oder
2. neben einer Strafe oder Maßregel der Besserung und Sicherung, die gegen den Beschuldigten wegen einer anderen Tat rechtskräftig verhängt worden ist oder die er wegen einer anderen Tat zu erwarten hat,

nicht beträchtlich ins Gewicht, so kann die Verfolgung auf die übrigen Teile der Tat oder die übrigen Gesetzesverletzungen beschränkt werden. § 154 Abs. 1 Nr. 2 gilt entsprechend. Die Beschränkung ist aktenkundig zu machen.

(2) Nach Einreichung der Anklageschrift kann das Gericht in jeder Lage des Verfahrens mit Zustimmung der Staatsanwaltschaft die Beschränkung vornehmen.

(3) Das Gericht kann in jeder Lage des Verfahrens ausgeschiedene Teile einer Tat oder Gesetzesverletzungen in das Verfahren wieder einbeziehen. Einem Antrag der Staatsanwaltschaft auf Einbeziehung ist zu entsprechen. Werden ausgeschiedene Teile einer Tat wieder einbezogen, so ist § 265 Abs. 4 entsprechend anzuwenden.

§ 154b

(1) Von der Erhebung der öffentlichen Klage kann abgesehen werden, wenn der Beschuldigte wegen der Tat einer ausländischen Regierung ausgeliefert wird.

(2) Dasselbe gilt, wenn er wegen einer anderen Tat einer ausländischen Regierung ausgeliefert oder an einen internationalen Strafgerichtshof überstellt wird und die Strafe oder die Maßregel der Besserung und Sicherung, zu der die inländische Verfolgung führen kann, neben der Strafe oder der Maßregel der Besserung und Sicherung, die gegen ihn im Ausland rechtskräftig verhängt worden ist oder die er im Ausland zu erwarten hat, nicht ins Gewicht fällt.

(3) Von der Erhebung der öffentlichen Klage kann auch abgesehen werden, wenn der Beschuldigte aus dem Geltungsbereich dieses Bundesgesetzes ausgewiesen wird.

(4) Ist in den Fällen der Absätze 1 bis 3 die öffentliche Klage bereits erhoben, so stellt das

Gericht auf Antrag der Staatsanwaltschaft das Verfahren vorläufig ein. § 154 Abs. 3 bis 5 gilt mit der Maßgabe entsprechend, daß die Frist in Absatz 4 ein Jahr beträgt.

§ 154c

(1) Ist eine Nötigung oder Erpressung (§§ 240, 253 des Strafgesetzbuches) durch die Drohung begangen worden, eine Straftat zu offenbaren, so kann die Staatsanwaltschaft von der Verfolgung der Tat, deren Offenbarung angedroht worden ist, absehen, wenn nicht wegen der Schwere der Tat eine Sühne unerläßlich ist.

(2) Zeigt das Opfer einer Nötigung oder Erpressung (§§ 240, 253 des Strafgesetzbuches) diese an (§ 158) und wird hierdurch bedingt ein vom Opfer begangenes Vergehen bekannt, so kann die Staatsanwaltschaft von der Verfolgung des Vergehens absehen, wenn nicht wegen der Schwere der Tat eine Sühne unerlässlich ist.

§ 154d

Hängt die Erhebung der öffentlichen Klage wegen eines Vergehens von der Beurteilung einer Frage ab, die nach bürgerlichem Recht oder nach Verwaltungsrecht zu beurteilen ist, so kann die Staatsanwaltschaft zur Austragung der Frage im bürgerlichen Streitverfahren oder im Verwaltungsstreitverfahren eine Frist bestimmen. Hiervon ist der Anzeigende zu benachrichtigen. Nach fruchtlosem Ablauf der Frist kann die Staatsanwaltschaft das Verfahren einstellen.

§ 154e

(1) Von der Erhebung der öffentlichen Klage wegen einer falschen Verdächtigung oder Beleidigung (§§ 164, 185 bis 188 des Strafgesetzbuches) soll abgesehen werden, solange wegen der angezeigten oder behaupteten Handlung ein Straf- oder Disziplinarverfahren anhängig ist.

(2) Ist die öffentliche Klage oder eine Privatklage bereits erhoben, so stellt das Gericht das Verfahren bis zum Abschluß des Straf- oder Disziplinarverfahrens wegen der angezeigten oder behaupteten Handlung ein.

(3) Bis zum Abschluß des Straf- oder Disziplinarverfahrens wegen der angezeigten oder behaupteten Handlung ruht die Verjährung der Verfolgung der falschen Verdächtigung oder Beleidigung.

§ 154f

Steht der Eröffnung oder Durchführung des Hauptverfahrens für längere Zeit die Abwesenheit des Beschuldigten oder ein anderes in seiner Person liegendes Hindernis entgegen und ist die öffentliche Klage noch nicht erhoben, so kann die Staatsanwaltschaft das Verfahren vorläufig einstellen, nachdem sie den Sachverhalt so weit wie möglich aufgeklärt und die Beweise so weit wie nötig gesichert hat.

§ 155

(1) Die Untersuchung und Entscheidung erstreckt sich nur auf die in der Klage bezeichnete Tat und auf die durch die Klage beschuldigten Personen.

(2) Innerhalb dieser Grenzen sind die Gerichte zu einer selbständigen Tätigkeit berechtigt und verpflichtet; insbesondere sind sie bei Anwendung des Strafgesetzes an die gestellten Anträge nicht gebunden.

§ 155a

Die Staatsanwaltschaft und das Gericht sollen in jedem Stadium des Verfahrens die Möglichkeiten prüfen, einen Ausgleich zwischen Beschuldigtem und Verletztem zu erreichen. In geeigneten Fällen sollen sie darauf hinwirken. Gegen den ausdrücklichen Willen des Verletzten darf die Eignung nicht angenommen werden.

§ 155b

(1) Die Staatsanwaltschaft und das Gericht können zum Zweck des Täter-Opfer-Ausgleichs oder der Schadenswiedergutmachung einer von ihnen mit der Durchführung beauftragten Stelle von Amts wegen oder auf deren Antrag die hierfür erforderlichen personenbezogenen Daten übermitteln. Die Akten können der beauftragten Stelle zur

Einsichtnahme auch übersandt werden, soweit die Erteilung von Auskünften einen unverhältnismäßigen Aufwand erfordern würde. Eine nicht-öffentliche Stelle ist darauf hinzuweisen, dass sie die übermittelten Daten nur für Zwecke des Täter-Opfer-Ausgleichs oder der Schadenswiedergutmachung verwenden darf.

(2) Die beauftragte Stelle darf die nach Absatz 1 übermittelten personenbezogenen Daten nur verarbeiten und nutzen, soweit dies für die Durchführung des Täter-Opfer-Ausgleichs oder der Schadenswiedergutmachung erforderlich ist und schutzwürdige Interessen des Betroffenen nicht entgegenstehen. Sie darf personenbezogene Daten nur erheben sowie die erhobenen Daten verarbeiten und nutzen, soweit der Betroffene eingewilligt hat und dies für die Durchführung des Täter-Opfer-Ausgleichs oder der Schadenswiedergutmachung erforderlich ist. Nach Abschluss ihrer Tätigkeit berichtet sie in dem erforderlichen Umfang der Staatsanwaltschaft oder dem Gericht.

(3) Ist die beauftragte Stelle eine nicht-öffentliche Stelle, finden die Vorschriften des Dritten Abschnitts des Bundesdatenschutzgesetzes auch Anwendung, wenn die Daten nicht in oder aus Dateien verarbeitet werden.

(4) Die Unterlagen mit den in Absatz 2 Satz 1 und 2 bezeichneten personenbezogenen Daten sind von der beauftragten Stelle nach Ablauf eines Jahres seit Abschluss des Strafverfahrens zu vernichten. Die Staatsanwaltschaft oder das Gericht teilt der beauftragten Stelle unverzüglich von Amts wegen den Zeitpunkt des Verfahrensabschlusses mit.

§ 156

Die öffentliche Klage kann nach Eröffnung des Hauptverfahrens nicht zurückgenommen werden.

§ 157

Im Sinne dieses Gesetzes ist

Angeschuldigter der Beschuldigte, gegen den die öffentliche Klage erhoben ist, Angeklagter der Beschuldigte oder Angeschuldigte, gegen den die Eröffnung des Hauptverfahrens beschlossen ist.

Zweiter Abschnitt
Vorbereitung der öffentlichen Klage

§ 158

(1) Die Anzeige einer Straftat und der Strafantrag können bei der Staatsanwaltschaft, den Behörden und Beamten des Polizeidienstes und den Amtsgerichten mündlich oder schriftlich angebracht werden. Die mündliche Anzeige ist zu beurkunden.

(2) Bei Straftaten, deren Verfolgung nur auf Antrag eintritt, muß der Antrag bei einem Gericht oder der Staatsanwaltschaft schriftlich oder zu Protokoll, bei einer anderen Behörde schriftlich angebracht werden.

(3) Zeigt ein im Inland wohnhafter Verletzter eine in einem anderen Mitgliedstaat der Europäischen Union begangene Straftat an, so übermittelt die Staatsanwaltschaft die Anzeige auf Antrag des Verletzten an die zuständige Strafverfolgungsbehörde des anderen Mitgliedstaats, wenn für die Tat das deutsche Strafrecht nicht gilt oder von der Verfolgung der Tat nach § 153c Absatz 1 Satz 1 Nummer 1, auch in Verbindung mit § 153f, abgesehen wird. Von der Übermittlung kann abgesehen werden, wenn

1. die Tat und die für ihre Verfolgung wesentlichen Umstände der zuständigen ausländischen Behörde bereits bekannt sind oder
2. der Unrechtsgehalt der Tat gering ist und der verletzten Person die Anzeige im Ausland möglich gewesen wäre.

§ 159

(1) Sind Anhaltspunkte dafür vorhanden, daß jemand eines nicht natürlichen Todes gestorben ist, oder wird der Leichnam eines Unbekannten gefunden, so sind die Polizei- und Gemeindebehörden zur sofortigen Anzeige an die Staatsanwaltschaft oder an das Amtsgericht verpflichtet.

(2) Zur Bestattung ist die schriftliche Genehmigung der Staatsanwaltschaft erforderlich.

§ 160

(1) Sobald die Staatsanwaltschaft durch eine Anzeige oder auf anderem Wege von dem Verdacht einer Straftat Kenntnis erhält, hat sie zu ihrer Entschließung darüber, ob die öffentliche Klage zu erheben ist, den Sachverhalt zu erforschen.

(2) Die Staatsanwaltschaft hat nicht nur die zur Belastung, sondern auch die zur Entlastung dienenden Umstände zu ermitteln und für die Erhebung der Beweise Sorge zu tragen, deren Verlust zu besorgen ist.

(3) Die Ermittlungen der Staatsanwaltschaft sollen sich auch auf die Umstände erstrecken, die für die Bestimmung der Rechtsfolgen der Tat von Bedeutung sind. Dazu kann sie sich der Gerichtshilfe bedienen.

(4) Eine Maßnahme ist unzulässig, soweit besondere bundesgesetzliche oder entsprechende landesgesetzliche Verwendungsregelungen entgegenstehen.

§ 160a

(1) Eine Ermittlungsmaßnahme, die sich gegen eine in § 53 Absatz 1 Satz 1 Nummer 1, 2 oder Nummer 4 genannte Person, einen Rechtsanwalt, eine nach § 206 der Bundesrechtsanwaltsordnung in eine Rechtsanwaltskammer aufgenommene Person oder einen Kammerrechtsbeistand richtet und voraussichtlich Erkenntnisse erbringen würde, über die diese das Zeugnis verweigern dürfte, ist unzulässig. Dennoch erlangte Erkenntnisse dürfen nicht verwendet werden. Aufzeichnungen hierüber sind unverzüglich zu löschen. Die Tatsache ihrer Erlangung und der Löschung der Aufzeichnungen ist aktenkundig zu machen.Die Sätze 2 bis 4 gelten entsprechend, wenn durch eine Ermittlungsmaßnahme, die sich nicht gegen eine in Satz 1 in Bezug genommene Person richtet, von dieser Person Erkenntnisse erlangt werden, über die sie das Zeugnis verweigern dürfte.

(2) Soweit durch eine Ermittlungsmaßnahme eine in § 53 Abs. 1 Satz 1 Nr. 3 bis 3b oder Nr. 5 genannte Person betroffen wäre und dadurch voraussichtlich Erkenntnisse erlangt würden, über die diese Person das Zeugnis verweigern dürfte, ist dies im Rahmen der Prüfung der Verhältnismäßigkeit besonders zu berücksichtigen; betrifft das Verfahren keine Straftat von erheblicher Bedeutung, ist in der Regel nicht von einem Überwiegen des

Strafverfolgungsinteresses auszugehen. Soweit geboten, ist die Maßnahme zu unterlassen oder, soweit dies nach der Art der Maßnahme möglich ist, zu beschränken. Für die Verwertung von Erkenntnissen zu Beweiszwecken gilt Satz 1 entsprechend.Die Sätze 1 bis 3 gelten nicht für Rechtsanwälte, nach § 206 der Bundesrechtsanwaltsordnung in eine Rechtsanwaltskammer aufgenommene Personen und Kammerrechtsbeistände.

(3) Die Absätze 1 und 2 sind entsprechend anzuwenden, soweit die in § 53a Genannten das Zeugnis verweigern dürften.

(4) Die Absätze 1 bis 3 sind nicht anzuwenden, wenn bestimmte Tatsachen den Verdacht begründen, dass die zeugnisverweigerungsberechtigte Person an der Tat oder an einer Begünstigung, Strafvereitelung oder Hehlerei beteiligt ist. Ist die Tat nur auf Antrag oder nur mit Ermächtigung verfolgbar, ist Satz 1 in den Fällen des § 53 Abs. 1 Satz 1 Nr. 5 anzuwenden, sobald und soweit der Strafantrag gestellt oder die Ermächtigung erteilt ist.

(5) Die §§ 97 und 100c Abs. 6 bleiben unberührt.

§ 160b

Die Staatsanwaltschaft kann den Stand des Verfahrens mit den Verfahrensbeteiligten erörtern, soweit dies geeignet erscheint, das Verfahren zu fördern. Der wesentliche Inhalt dieser Erörterung ist aktenkundig zu machen.

§ 161

(1) Zu dem in § 160 Abs. 1 bis 3 bezeichneten Zweck ist die Staatsanwaltschaft befugt, von allen Behörden Auskunft zu verlangen und Ermittlungen jeder Art entweder selbst vorzunehmen oder durch die Behörden und Beamten des Polizeidienstes vornehmen zu lassen, soweit nicht andere gesetzliche Vorschriften ihre Befugnisse besonders regeln. Die Behörden und Beamten des Polizeidienstes sind verpflichtet, dem Ersuchen oder Auftrag der Staatsanwaltschaft zu genügen, und in diesem Falle befugt, von allen Behörden Auskunft zu verlangen.

(2) Ist eine Maßnahme nach diesem Gesetz nur bei Verdacht bestimmter Straftaten zulässig, so dürfen die auf Grund einer entsprechenden Maßnahme nach anderen Gesetzen erlangten

personenbezogenen Daten ohne Einwilligung der von der Maßnahme betroffenen Personen zu Beweiszwecken im Strafverfahren nur zur Aufklärung solcher Straftaten verwendet werden, zu deren Aufklärung eine solche Maßnahme nach diesem Gesetz hätte angeordnet werden dürfen. § 100d Abs. 5 Nr. 3 bleibt unberührt.

(3) In oder aus einer Wohnung erlangte personenbezogene Daten aus einem Einsatz technischer Mittel zur Eigensicherung im Zuge nicht offener Ermittlungen auf polizeirechtlicher Grundlage dürfen unter Beachtung des Grundsatzes der Verhältnismäßigkeit zu Beweiszwecken nur verwendet werden (Artikel 13 Abs. 5 des Grundgesetzes), wenn das Amtsgericht (§ 162 Abs. 1), in dessen Bezirk die anordnende Stelle ihren Sitz hat, die Rechtmäßigkeit der Maßnahme festgestellt hat; bei Gefahr im Verzug ist die richterliche Entscheidung unverzüglich nachzuholen.

§ 161a

(1) Zeugen und Sachverständige sind verpflichtet, auf Ladung vor der Staatsanwaltschaft zu erscheinen und zur Sache auszusagen oder ihr Gutachten zu erstatten. Soweit nichts anderes bestimmt ist, gelten die Vorschriften des sechsten und siebenten Abschnitts des ersten Buches über Zeugen und Sachverständige entsprechend. Die eidliche Vernehmung bleibt dem Richter vorbehalten.

(2) Bei unberechtigtem Ausbleiben oder unberechtigter Weigerung eines Zeugen oder Sachverständigen steht die Befugnis zu den in den §§ 51, 70 und 77 vorgesehenen Maßregeln der Staatsanwaltschaft zu. Jedoch bleibt die Festsetzung der Haft dem nach § 162 zuständigen Gericht vorbehalten.

(3) Gegen Entscheidungen der Staatsanwaltschaft nach Absatz 2 Satz 1 kann gerichtliche Entscheidung durch das nach § 162 zuständige Gericht beantragt werden. Gleiches gilt, wenn die Staatsanwaltschaft Entscheidungen im Sinne des § 68b getroffen hat. Die §§ 297 bis 300, 302, 306 bis 309, 311a und 473a gelten jeweils entsprechend. Gerichtliche Entscheidungen nach den Sätzen 1 und 2 sind unanfechtbar.

(4) Ersucht eine Staatsanwaltschaft eine andere Staatsanwaltschaft um die Vernehmung eines Zeugen oder Sachverständigen, so stehen die Befugnisse nach Absatz 2 Satz 1 auch der

ersuchten Staatsanwaltschaft zu.

§ 162

(1) Erachtet die Staatsanwaltschaft die Vornahme einer gerichtlichen Untersuchungshandlung für erforderlich, so stellt sie ihre Anträge vor Erhebung der öffentlichen Klage bei dem Amtsgericht, in dessen Bezirk sie oder ihre den Antrag stellende Zweigstelle ihren Sitz hat. Hält sie daneben den Erlass eines Haft- oder Unterbringungsbefehls für erforderlich, so kann sie, unbeschadet der §§ 125, 126a, auch einen solchen Antrag bei dem in Satz 1 bezeichneten Gericht stellen. Für gerichtliche Vernehmungen und Augenscheinnahmen ist das Amtsgericht zuständig, in dessen Bezirk diese Untersuchungshandlungen vorzunehmen sind, wenn die Staatsanwaltschaft dies zur Beschleunigung des Verfahrens oder zur Vermeidung von Belastungen Betroffener dort beantragt.

(2) Das Gericht hat zu prüfen, ob die beantragte Handlung nach den Umständen des Falles gesetzlich zulässig ist.

(3) Nach Erhebung der öffentlichen Klage ist das Gericht zuständig, das mit der Sache befasst ist. Während des Revisionsverfahrens ist das Gericht zuständig, dessen Urteil angefochten ist. Nach rechtskräftigem Abschluss des Verfahrens gelten die Absätze 1 und 2 entsprechend. Nach einem Antrag auf Wiederaufnahme ist das für die Entscheidungen im Wiederaufnahmeverfahren zuständige Gericht zuständig.

§ 163

(1) Die Behörden und Beamten des Polizeidienstes haben Straftaten zu erforschen und alle keinen Aufschub gestattenden Anordnungen zu treffen, um die Verdunkelung der Sache zu verhüten. Zu diesem Zweck sind sie befugt, alle Behörden um Auskunft zu ersuchen, bei Gefahr im Verzug auch, die Auskunft zu verlangen, sowie Ermittlungen jeder Art vorzunehmen, soweit nicht andere gesetzliche Vorschriften ihre Befugnisse besonders regeln.

(2) Die Behörden und Beamten des Polizeidienstes übersenden ihre Verhandlungen ohne Verzug der Staatsanwaltschaft. Erscheint die schleunige Vornahme richterlicher

Untersuchungshandlungen erforderlich, so kann die Übersendung unmittelbar an das Amtsgericht erfolgen.

(3) Bei der Vernehmung eines Zeugen durch Beamte des Polizeidienstes sind § 52 Absatz 3, § 55 Absatz 2, § 57 Satz 1 und die §§ 58, 58a, 68 bis 69 entsprechend anzuwenden. Über eine Gestattung nach § 68 Absatz 3 Satz 1 und über die Beiordnung eines Zeugenbeistands entscheidet die Staatsanwaltschaft; im Übrigen trifft die erforderlichen Entscheidungen die die Vernehmung leitende Person. Bei Entscheidungen durch Beamte des Polizeidienstes nach § 68b Absatz 1 Satz 3 gilt § 161a Absatz 3 Satz 2 bis 4 entsprechend. Für die Belehrung des Sachverständigen durch Beamte des Polizeidienstes gelten § 52 Absatz 3 und § 55 Absatz 2 entsprechend. In den Fällen des § 81c Absatz 3 Satz 1 und 2 gilt § 52 Absatz 3 auch bei Untersuchungen durch Beamte des Polizeidienstes sinngemäß.

§ 163a

(1) Der Beschuldigte ist spätestens vor dem Abschluß der Ermittlungen zu vernehmen, es sei denn, daß das Verfahren zur Einstellung führt. In einfachen Sachen genügt es, daß ihm Gelegenheit gegeben wird, sich schriftlich zu äußern.

(2) Beantragt der Beschuldigte zu seiner Entlastung die Aufnahme von Beweisen, so sind sie zu erheben, wenn sie von Bedeutung sind.

(3) Der Beschuldigte ist verpflichtet, auf Ladung vor der Staatsanwaltschaft zu erscheinen. Die §§ 133 bis 136a und 168c Abs. 1 und 5 gelten entsprechend. Über die Rechtmäßigkeit der Vorführung entscheidet auf Antrag des Beschuldigten das nach § 162 zuständige Gericht. Die §§ 297 bis 300, 302, 306 bis 309, 311a und 473a gelten entsprechend. Die Entscheidung des Gerichts ist unanfechtbar.

(4) Bei der ersten Vernehmung des Beschuldigten durch Beamte des Polizeidienstes ist dem Beschuldigten zu eröffnen, welche Tat ihm zur Last gelegt wird. Im übrigen sind bei der Vernehmung des Beschuldigten durch Beamte des Polizeidienstes § 136 Abs. 1 Satz 2 bis 4, Abs. 2, 3 und § 136a anzuwenden.

(5) (weggefallen)

§ 163b

(1) Ist jemand einer Straftat verdächtig, so können die Staatsanwaltschaft und die Beamten des Polizeidienstes die zur Feststellung seiner Identität erforderlichen Maßnahmen treffen; § 163a Abs. 4 Satz 1 gilt entsprechend. Der Verdächtige darf festgehalten werden, wenn die Identität sonst nicht oder nur unter erheblichen Schwierigkeiten festgestellt werden kann. Unter den Voraussetzungen von Satz 2 sind auch die Durchsuchung der Person des Verdächtigen und der von ihm mitgeführten Sachen sowie die Durchführung erkennungsdienstlicher Maßnahmen zulässig.

(2) Wenn und soweit dies zur Aufklärung einer Straftat geboten ist, kann auch die Identität einer Person festgestellt werden, die einer Straftat nicht verdächtig ist; § 69 Abs. 1 Satz 2 gilt entsprechend. Maßnahmen der in Absatz 1 Satz 2 bezeichneten Art dürfen nicht getroffen werden, wenn sie zur Bedeutung der Sache außer Verhältnis stehen; Maßnahmen der in Absatz 1 Satz 3 bezeichneten Art dürfen nicht gegen den Willen der betroffenen Person getroffen werden.

§ 163c

(1) Eine von einer Maßnahme nach § 163b betroffene Person darf in keinem Fall länger als zur Feststellung ihrer Identität unerläßlich festgehalten werden. Die festgehaltene Person ist unverzüglich dem Richter bei dem Amtsgericht, in dessen Bezirk sie ergriffen worden ist, zum Zwecke der Entscheidung über Zulässigkeit und Fortdauer der Freiheitsentziehung vorzuführen, es sei denn, daß die Herbeiführung der richterlichen Entscheidung voraussichtlich längere Zeit in Anspruch nehmen würde, als zur Feststellung der Identität notwendig wäre. Die §§ 114a bis 114c gelten entsprechend.

(2) Eine Freiheitsentziehung zum Zwecke der Feststellung der Identität darf die Dauer von insgesamt zwölf Stunden nicht überschreiten.

(3) Ist die Identität festgestellt, so sind in den Fällen des § 163b Abs. 2 die im Zusammenhang mit der Feststellung angefallenen Unterlagen zu vernichten.

§ 163d

(1) Begründen bestimmte Tatsachen den Verdacht, daß

1. eine der in § 111 bezeichneten Straftaten oder

2. eine der in § 100a Abs. 2 Nr. 6 bis 9 und 11 bezeichneten Straftaten

begangen worden ist, so dürfen die anläßlich einer grenzpolizeilichen Kontrolle, im Falle der Nummer 1 auch die bei einer Personenkontrolle nach § 111 anfallenden Daten über die Identität von Personen sowie Umstände, die für die Aufklärung der Straftat oder für die Ergreifung des Täters von Bedeutung sein können, in einer Datei gespeichert werden, wenn Tatsachen die Annahme rechtfertigen, daß die Auswertung der Daten zur Ergreifung des Täters oder zur Aufklärung der Straftat führen kann und die Maßnahme nicht außer Verhältnis zur Bedeutung der Sache steht. Dies gilt auch, wenn im Falle des Satzes 1 Pässe und Personalausweise automatisch gelesen werden. Die Übermittlung der Daten ist nur an Strafverfolgungsbehörden zulässig.

(2) Maßnahmen der in Absatz 1 bezeichneten Art dürfen nur durch den Richter, bei Gefahr im Verzug auch durch die Staatsanwaltschaft und ihre Ermittlungspersonen (§ 152 des Gerichtsverfassungsgesetzes) angeordnet werden. Hat die Staatsanwaltschaft oder eine ihrer Ermittlungspersonen die Anordnung getroffen, so beantragt die Staatsanwaltschaft unverzüglich die richterliche Bestätigung der Anordnung. § 100b Abs. 1 Satz 3 gilt entsprechend.

(3) Die Anordnung ergeht schriftlich. Sie muß die Personen, deren Daten gespeichert werden sollen, nach bestimmten Merkmalen oder Eigenschaften so genau bezeichnen, wie dies nach der zur Zeit der Anordnung vorhandenen Kenntnis von dem oder den Tatverdächtigen möglich ist. Art und Dauer der Maßnahmen sind festzulegen. Die Anordnung ist räumlich zu begrenzen und auf höchstens drei Monate zu befristen. Eine einmalige Verlängerung um nicht mehr als drei weitere Monate ist zulässig, soweit die in Absatz 1 bezeichneten Voraussetzungen fortbestehen.

(4) Liegen die Voraussetzungen für den Erlaß der Anordnung nicht mehr vor oder ist der Zweck der sich aus der Anordnung ergebenden Maßnahmen erreicht, so sind diese unverzüglich zu beenden. Die durch die Maßnahmen erlangten personenbezogenen Daten sind unverzüglich zu löschen, sobald sie für das Strafverfahren nicht oder nicht mehr

benötigt werden; eine Speicherung, die die Laufzeit der Maßnahmen (Absatz 3) um mehr als drei Monate überschreitet, ist unzulässig. Über die Löschung ist die Staatsanwaltschaft zu unterrichten.

(5) (weggefallen)

§ 163e

(1) Die Ausschreibung zur Beobachtung anläßlich von polizeilichen Kontrollen, die die Feststellung der Personalien zulassen, kann angeordnet werden, wenn zureichende tatsächliche Anhaltspunkte dafür vorliegen, daß eine Straftat von erheblicher Bedeutung begangen wurde. Die Anordnung darf sich nur gegen den Beschuldigten richten und nur dann getroffen werden, wenn die Erforschung des Sachverhalts oder die Ermittlung des Aufenthaltsortes des Täters auf andere Weise erheblich weniger erfolgversprechend oder wesentlich erschwert wäre. Gegen andere Personen ist die Maßnahme zulässig, wenn auf Grund bestimmter Tatsachen anzunehmen ist, daß sie mit dem Täter in Verbindung stehen oder eine solche Verbindung hergestellt wird, daß die Maßnahme zur Erforschung des Sachverhalts oder zur Ermittlung des Aufenthaltsortes des Täters führen wird und dies auf andere Weise erheblich weniger erfolgversprechend oder wesentlich erschwert wäre.

(2) Das Kennzeichen eines Kraftfahrzeuges, die Identifizierungsnummer oder äußere Kennzeichnung eines Wasserfahrzeuges, Luftfahrzeuges oder eines Containers kann ausgeschrieben werden, wenn das Fahrzeug auf eine nach Absatz 1 ausgeschriebene Person zugelassen ist oder das Fahrzeug oder der Container von ihr oder einer bisher namentlich nicht bekannten Person genutzt wird, die einer Straftat von erheblicher Bedeutung verdächtig ist.

(3) Im Falle eines Antreffens können auch personenbezogene Daten eines Begleiters der ausgeschriebenen Person, des Führers eines nach Absatz 2 ausgeschriebenen Fahrzeuges oder des Nutzers eines nach Absatz 2 ausgeschriebenen Containers gemeldet werden.

(4) Die Ausschreibung zur polizeilichen Beobachtung darf nur durch das Gericht angeordnet werden. Bei Gefahr im Verzug kann die Anordnung auch durch die Staatsanwaltschaft getroffen werden. Hat die Staatsanwaltschaft die Anordnung getroffen, so beantragt sie

unverzüglich die gerichtliche Bestätigung der Anordnung. § 100b Abs. 1 Satz 3 gilt entsprechend. Die Anordnung ist auf höchstens ein Jahr zu befristen. Eine Verlängerung um jeweils nicht mehr als drei Monate ist zulässig, soweit die Voraussetzungen der Anordnung fortbestehen.

§ 163f

(1) Liegen zureichende tatsächliche Anhaltspunkte dafür vor, dass eine Straftat von erheblicher Bedeutung begangen worden ist, so darf eine planmäßig angelegte Beobachtung des Beschuldigten angeordnet werden, die

1. durchgehend länger als 24 Stunden dauern oder
2. an mehr als zwei Tagen stattfinden

soll (längerfristige Observation).

Die Maßnahme darf nur angeordnet werden, wenn die Erforschung des Sachverhalts oder die Ermittlung des Aufenthaltsortes des Täters auf andere Weise erheblich weniger Erfolg versprechend oder wesentlich erschwert wäre. Gegen andere Personen ist die Maßnahme zulässig, wenn auf Grund bestimmter Tatsachen anzunehmen ist, dass sie mit dem Täter in Verbindung stehen oder eine solche Verbindung hergestellt wird, dass die Maßnahme zur Erforschung des Sachverhalts oder zur Ermittlung des Aufenthaltsortes des Täters führen wird und dies auf andere Weise erheblich weniger Erfolg versprechend oder wesentlich erschwert wäre.

(2) Die Maßnahme darf auch durchgeführt werden, wenn Dritte unvermeidbar betroffen werden.

(3) Die Maßnahme darf nur durch das Gericht, bei Gefahr im Verzug auch durch die Staatsanwaltschaft und ihre Ermittlungspersonen (§ 152 des Gerichtsverfassungsgesetzes) angeordnet werden. Die Anordnung der Staatsanwaltschaft oder ihrer Ermittlungspersonen tritt außer Kraft, wenn sie nicht binnen drei Werktagen von dem Gericht bestätigt wird. § 100b Abs. 1 Satz 4 und 5, Abs. 2 Satz 1 gilt entsprechend.

(4) (weggefallen)

§ 164

Bei Amtshandlungen an Ort und Stelle ist der Beamte, der sie leitet, befugt, Personen, die seine amtliche Tätigkeit vorsätzlich stören oder sich den von ihm innerhalb seiner Zuständigkeit getroffenen Anordnungen widersetzen, festnehmen und bis zur Beendigung seiner Amtsverrichtungen, jedoch nicht über den nächstfolgenden Tag hinaus, festhalten zu lassen.

§ 165

Bei Gefahr im Verzug kann der Richter die erforderlichen Untersuchungshandlungen auch ohne Antrag vornehmen, wenn ein Staatsanwalt nicht erreichbar ist.

§ 166

(1) Wird der Beschuldigte von dem Richter vernommen und beantragt er bei dieser Vernehmung zu seiner Entlastung einzelne Beweiserhebungen, so hat der Richter diese, soweit er sie für erheblich erachtet, vorzunehmen, wenn der Verlust der Beweise zu besorgen ist oder die Beweiserhebung die Freilassung des Beschuldigten begründen kann.

(2) Der Richter kann, wenn die Beweiserhebung in einem anderen Amtsbezirk vorzunehmen ist, den Richter des letzteren um ihre Vornahme ersuchen.

§ 167

In den Fällen der §§ 165 und 166 gebührt der Staatsanwaltschaft die weitere Verfügung.

§ 168

Über jede richterliche Untersuchungshandlung ist ein Protokoll aufzunehmen. Für die Protokollführung ist ein Urkundsbeamter der Geschäftsstelle zuzuziehen; hiervon kann der Richter absehen, wenn er die Zuziehung eines Protokollführers nicht für erforderlich hält. In dringenden Fällen kann der Richter eine von ihm zu vereidigende Person als Protokollführer zuziehen.

§ 168a

(1) Das Protokoll muß Ort und Tag der Verhandlung sowie die Namen der mitwirkenden und beteiligten Personen angeben und ersehen lassen, ob die wesentlichen Förmlichkeiten des Verfahrens beachtet sind. § 68 Abs. 2, 3 bleibt unberührt.

(2) Der Inhalt des Protokolls kann in einer gebräuchlichen Kurzschrift, mit einer Kurzschriftmaschine, mit einem Tonaufnahmegerät oder durch verständliche Abkürzungen vorläufig aufgezeichnet werden. Das Protokoll ist in diesem Fall unverzüglich nach Beendigung der Verhandlung herzustellen. Die vorläufigen Aufzeichnungen sind zu den Akten zu nehmen oder, wenn sie sich nicht dazu eignen, bei der Geschäftsstelle mit den Akten aufzubewahren. Tonaufzeichnungen können gelöscht werden, wenn das Verfahren rechtskräftig abgeschlossen oder sonst beendet ist.

(3) Das Protokoll ist den bei der Verhandlung beteiligten Personen, soweit es sie betrifft, zur Genehmigung vorzulesen oder zur Durchsicht vorzulegen. Die Genehmigung ist zu vermerken. Das Protokoll ist von den Beteiligten zu unterschreiben oder es ist darin anzugeben, weshalb die Unterschrift unterblieben ist. Ist der Inhalt des Protokolls nur vorläufig aufgezeichnet worden, so genügt es, wenn die Aufzeichnungen vorgelesen oder abgespielt werden. In dem Protokoll ist zu vermerken, daß dies geschehen und die Genehmigung erteilt ist oder welche Einwendungen erhoben worden sind. Das Vorlesen oder die Vorlage zur Durchsicht oder das Abspielen kann unterbleiben, wenn die beteiligten Personen, soweit es sie betrifft, nach der Aufzeichnung darauf verzichten; in dem Protokoll ist zu vermerken, daß der Verzicht ausgesprochen worden ist.

(4) Das Protokoll ist von dem Richter sowie dem Protokollführer zu unterschreiben. Ist der Inhalt des Protokolls ohne Zuziehung eines Protokollführers ganz oder teilweise mit einem Tonaufnahmegerät vorläufig aufgezeichnet worden, so unterschreiben der Richter und derjenige, der das Protokoll hergestellt hat. Letzterer versieht seine Unterschrift mit dem Zusatz, daß er die Richtigkeit der Übertragung bestätigt. Der Nachweis der Unrichtigkeit der Übertragung ist zulässig.

§ 168b

(1) Das Ergebnis staatsanwaltschaftlicher Untersuchungshandlungen ist aktenkundig zu machen.

(2) Über die Vernehmung des Beschuldigten, der Zeugen und Sachverständigen soll ein Protokoll nach den §§ 168 und 168a aufgenommen werden, soweit dies ohne erhebliche Verzögerung der Ermittlungen geschehen kann.

§ 168c

(1) Bei der richterlichen Vernehmung des Beschuldigten ist der Staatsanwaltschaft und dem Verteidiger die Anwesenheit gestattet.

(2) Bei der richterlichen Vernehmung eines Zeugen oder Sachverständigen ist der Staatsanwaltschaft, dem Beschuldigten und dem Verteidiger die Anwesenheit gestattet.

(3) Der Richter kann einen Beschuldigten von der Anwesenheit bei der Verhandlung ausschließen, wenn dessen Anwesenheit den Untersuchungszweck gefährden würde. Dies gilt namentlich dann, wenn zu befürchten ist, daß ein Zeuge in Gegenwart des Beschuldigten nicht die Wahrheit sagen werde.

(4) Hat ein nicht in Freiheit befindlicher Beschuldigter einen Verteidiger, so steht ihm ein Anspruch auf Anwesenheit nur bei solchen Terminen zu, die an der Gerichtsstelle des Ortes abgehalten werden, wo er in Haft ist.

(5) Von den Terminen sind die zur Anwesenheit Berechtigten vorher zu benachrichtigen. Die Benachrichtigung unterbleibt, wenn sie den Untersuchungserfolg gefährden würde. Auf die Verlegung eines Termins wegen Verhinderung haben die zur Anwesenheit Berechtigten keinen Anspruch.

§ 168d

(1) Bei der Einnahme eines richterlichen Augenscheins ist der Staatsanwaltschaft, dem Beschuldigten und dem Verteidiger die Anwesenheit bei der Verhandlung gestattet. § 168c Abs. 3 Satz 1, Abs. 4 und 5 gilt entsprechend.

(2) Werden bei der Einnahme eines richterlichen Augenscheins Sachverständige zugezogen, so kann der Beschuldigte beantragen, daß die von ihm für die Hauptverhandlung vorzuschlagenden

Sachverständigen zu dem Termin geladen werden, und, wenn der Richter den Antrag ablehnt, sie selbst laden lassen. Den vom Beschuldigten benannten Sachverständigen ist die Teilnahme am Augenschein und an den erforderlichen Untersuchungen insoweit gestattet, als dadurch die Tätigkeit der vom Richter bestellten Sachverständigen nicht behindert wird.

§ 168e

Besteht die dringende Gefahr eines schwerwiegenden Nachteils für das Wohl des Zeugen, wenn er in Gegenwart der Anwesenheitsberechtigten vernommen wird, und kann sie nicht in anderer Weise abgewendet werden, so soll der Richter die Vernehmung von den Anwesenheitsberechtigten getrennt durchführen. Die Vernehmung wird diesen zeitgleich in Bild und Ton übertragen. Die Mitwirkungsbefugnisse der Anwesenheitsberechtigten bleiben im übrigen unberührt. Die §§ 58a und 241a finden entsprechende Anwendung. Die Entscheidung nach Satz 1 ist unanfechtbar.

§ 169

(1) In Sachen, die nach § 120 des Gerichtsverfassungsgesetzes zur Zuständigkeit des Oberlandesgerichts im ersten Rechtszug gehören, können die im vorbereitenden Verfahren dem Richter beim Amtsgericht obliegenden Geschäfte auch durch Ermittlungsrichter dieses Oberlandesgerichts wahrgenommen werden. Führt der Generalbundesanwalt die Ermittlungen, so sind an deren Stelle Ermittlungsrichter des Bundesgerichtshofes zuständig.

(2) Der für eine Sache zuständige Ermittlungsrichter des Oberlandesgerichts kann Untersuchungshandlungen auch dann anordnen, wenn sie nicht im Bezirk dieses Gerichts vorzunehmen sind.

§ 169a

Erwägt die Staatsanwaltschaft, die öffentliche Klage zu erheben, so vermerkt sie den Abschluß der Ermittlungen in den Akten.

§ 170

(1) Bieten die Ermittlungen genügenden Anlaß zur Erhebung der öffentlichen Klage, so erhebt

die Staatsanwaltschaft sie durch Einreichung einer Anklageschrift bei dem zuständigen Gericht.

(2) Andernfalls stellt die Staatsanwaltschaft das Verfahren ein. Hiervon setzt sie den Beschuldigten in Kenntnis, wenn er als solcher vernommen worden ist oder ein Haftbefehl gegen ihn erlassen war; dasselbe gilt, wenn er um einen Bescheid gebeten hat oder wenn ein besonderes Interesse an der Bekanntgabe ersichtlich ist.

§ 171

Gibt die Staatsanwaltschaft einem Antrag auf Erhebung der öffentlichen Klage keine Folge oder verfügt sie nach dem Abschluß der Ermittlungen die Einstellung des Verfahrens, so hat sie den Antragsteller unter Angabe der Gründe zu bescheiden. In dem Bescheid ist der Antragsteller, der zugleich der Verletzte ist, über die Möglichkeit der Anfechtung und die dafür vorgesehene Frist (§ 172 Abs. 1) zu belehren.

§ 172

(1) Ist der Antragsteller zugleich der Verletzte, so steht ihm gegen den Bescheid nach § 171 binnen zwei Wochen nach der Bekanntmachung die Beschwerde an den vorgesetzten Beamten der Staatsanwaltschaft zu. Durch die Einlegung der Beschwerde bei der Staatsanwaltschaft wird die Frist gewahrt. Sie läuft nicht, wenn die Belehrung nach § 171 Satz 2 unterblieben ist.

(2) Gegen den ablehnenden Bescheid des vorgesetzten Beamten der Staatsanwaltschaft kann der Antragsteller binnen einem Monat nach der Bekanntmachung gerichtliche Entscheidung beantragen. Hierüber und über die dafür vorgesehene Form ist er zu belehren; die Frist läuft nicht, wenn die Belehrung unterblieben ist. Der Antrag ist nicht zulässig, wenn das Verfahren ausschließlich eine Straftat zum Gegenstand hat, die vom Verletzten im Wege der Privatklage verfolgt werden kann, oder wenn die Staatsanwaltschaft nach § 153 Abs. 1, § 153a Abs. 1 Satz 1, 7 oder § 153b Abs. 1 von der Verfolgung der Tat abgesehen hat; dasselbe gilt in den Fällen der §§ 153c bis 154 Abs. 1 sowie der §§ 154b und 154c.

(3) Der Antrag auf gerichtliche Entscheidung muß die Tatsachen, welche die Erhebung der öffentlichen Klage begründen sollen, und die Beweismittel angeben. Er muß von einem

Rechtsanwalt unterzeichnet sein; für die Prozeßkostenhilfe gelten dieselben Vorschriften wie in bürgerlichen Rechtsstreitigkeiten. Der Antrag ist bei dem für die Entscheidung zuständigen Gericht einzureichen.

(4) Zur Entscheidung über den Antrag ist das Oberlandesgericht zuständig. § 120 des Gerichtsverfassungsgesetzes ist sinngemäß anzuwenden.

§ 173

(1) Auf Verlangen des Gerichts hat ihm die Staatsanwaltschaft die bisher von ihr geführten Verhandlungen vorzulegen.

(2) Das Gericht kann den Antrag unter Bestimmung einer Frist dem Beschuldigten zur Erklärung mitteilen.

(3) Das Gericht kann zur Vorbereitung seiner Entscheidung Ermittlungen anordnen und mit ihrer Vornahme einen beauftragten oder ersuchten Richter betrauen.

§ 174

(1) Ergibt sich kein genügender Anlaß zur Erhebung der öffentlichen Klage, so verwirft das Gericht den Antrag und setzt den Antragsteller, die Staatsanwaltschaft und den Beschuldigten von der Verwerfung in Kenntnis.

(2) Ist der Antrag verworfen, so kann die öffentliche Klage nur auf Grund neuer Tatsachen oder Beweismittel erhoben werden.

§ 175

Erachtet das Gericht nach Anhörung des Beschuldigten den Antrag für begründet, so beschließt es die Erhebung der öffentlichen Klage. Die Durchführung dieses Beschlusses liegt der Staatsanwaltschaft ob.

§ 176

(1) Durch Beschluß des Gerichts kann dem Antragsteller vor der Entscheidung über den Antrag die Leistung einer Sicherheit für die Kosten auferlegt werden, die durch das

Verfahren über den Antrag voraussichtlich der Staatskasse und dem Beschuldigten erwachsen. Die Sicherheitsleistung ist durch Hinterlegung in barem Geld oder in Wertpapieren zu bewirken. Davon abweichende Regelungen in einer auf Grund des Gesetzes über den Zahlungsverkehr mit Gerichten und Justizbehörden erlassenen Rechtsverordnung bleiben unberührt. Die Höhe der zu leistenden Sicherheit wird vom Gericht nach freiem Ermessen festgesetzt. Es hat zugleich eine Frist zu bestimmen, binnen welcher die Sicherheit zu leisten ist.

(2) Wird die Sicherheit in der bestimmten Frist nicht geleistet, so hat das Gericht den Antrag für zurückgenommen zu erklären.

§ 177

Die durch das Verfahren über den Antrag veranlaßten Kosten sind in den Fällen der §§ 174 und 176 Abs. 2 dem Antragsteller aufzuerlegen.

Dritter Abschnitt
(weggefallen)

§§ 178 bis 197 (weggefallen)

Vierter Abschnitt
Entscheidung über die Eröffnung des Hauptverfahrens

§ 198 (weggefallen)

§ 199

(1) Das für die Hauptverhandlung zuständige Gericht entscheidet darüber, ob das Hauptverfahren zu eröffnen oder das Verfahren vorläufig einzustellen ist.

(2) Die Anklageschrift enthält den Antrag, das Hauptverfahren zu eröffnen. Mit ihr werden die Akten dem Gericht vorgelegt.

§ 200

(1) Die Anklageschrift hat den Angeschuldigten, die Tat, die ihm zur Last gelegt wird, Zeit und Ort ihrer Begehung, die gesetzlichen Merkmale der Straftat und die anzuwendenden Strafvorschriften zu bezeichnen (Anklagesatz). In ihr sind ferner die Beweismittel, das Gericht, vor dem die Hauptverhandlung stattfinden soll, und der Verteidiger anzugeben. Bei der Benennung von Zeugen ist deren Wohn- oder Aufenthaltsort anzugeben, wobei es jedoch der Angabe der vollständigen Anschrift nicht bedarf. In den Fällen des § 68 Absatz 1 Satz 2, Absatz 2 Satz 1 genügt die Angabe des Namens des Zeugen. Wird ein Zeuge benannt, dessen Identität ganz oder teilweise nicht offenbart werden soll, so ist dies anzugeben; für die Geheimhaltung des Wohn- oder Aufenthaltsortes des Zeugen gilt dies entsprechend.

(2) In der Anklageschrift wird auch das wesentliche Ergebnis der Ermittlungen dargestellt. Davon kann abgesehen werden, wenn Anklage beim Strafrichter erhoben wird.

§ 201

(1) Der Vorsitzende des Gerichts teilt die Anklageschrift dem Angeschuldigten mit und fordert ihn zugleich auf, innerhalb einer zu bestimmenden Frist zu erklären, ob er die Vornahme einzelner Beweiserhebungen vor der Entscheidung über die Eröffnung des Hauptverfahrens beantragen oder Einwendungen gegen die Eröffnung des Hauptverfahrens vorbringen wolle. Die Anklageschrift ist auch dem Nebenkläger und dem Nebenklagebefugten, der dies beantragt hat, zu übersenden; § 145a Absatz 1 und 3 gilt entsprechend.

(2) Über Anträge und Einwendungen beschließt das Gericht. Die Entscheidung ist unanfechtbar.

§ 202

Bevor das Gericht über die Eröffnung des Hauptverfahrens entscheidet, kann es zur besseren Aufklärung der Sache einzelne Beweiserhebungen anordnen. Der Beschluß ist nicht anfechtbar.

§ 202a

Erwägt das Gericht die Eröffnung des Hauptverfahrens, kann es den Stand des Verfahrens mit

den Verfahrensbeteiligten erörtern, soweit dies geeignet erscheint, das Verfahren zu fördern. Der wesentliche Inhalt dieser Erörterung ist aktenkundig zu machen.

§ 203

Das Gericht beschließt die Eröffnung des Hauptverfahrens, wenn nach den Ergebnissen des vorbereitenden Verfahrens der Angeschuldigte einer Straftat hinreichend verdächtig erscheint.

§ 204

(1) Beschließt das Gericht, das Hauptverfahren nicht zu eröffnen, so muß aus dem Beschluß hervorgehen, ob er auf tatsächlichen oder auf Rechtsgründen beruht.
(2) Der Beschluß ist dem Angeschuldigten bekanntzumachen.

§ 205

Steht der Hauptverhandlung für längere Zeit die Abwesenheit des Angeschuldigten oder ein anderes in seiner Person liegendes Hindernis entgegen, so kann das Gericht das Verfahren durch Beschluß vorläufig einstellen. Der Vorsitzende sichert, soweit nötig, die Beweise.

§ 206

Das Gericht ist bei der Beschlußfassung an die Anträge der Staatsanwaltschaft nicht gebunden.

§ 206a

(1) Stellt sich nach Eröffnung des Hauptverfahrens ein Verfahrenshindernis heraus, so kann das Gericht außerhalb der Hauptverhandlung das Verfahren durch Beschluß einstellen.
(2) Der Beschluß ist mit sofortiger Beschwerde anfechtbar.

§ 206b

Wird ein Strafgesetz, das bei Beendigung der Tat gilt, vor der Entscheidung geändert und hat ein gerichtlich anhängiges Strafverfahren eine Tat zum Gegenstand, die nach dem bisherigen Recht strafbar war, nach dem neuen Recht aber nicht mehr strafbar ist, so stellt das Gericht

außerhalb der Hauptverhandlung das Verfahren durch Beschluß ein. Der Beschluß ist mit sofortiger Beschwerde anfechtbar.

§ 207

(1) In dem Beschluß, durch den das Hauptverfahren eröffnet wird, läßt das Gericht die Anklage zur Hauptverhandlung zu und bezeichnet das Gericht, vor dem die Hauptverhandlung stattfinden soll.

(2) Das Gericht legt in dem Beschluß dar, mit welchen Änderungen es die Anklage zur Hauptverhandlung zuläßt, wenn

1. wegen mehrerer Taten Anklage erhoben ist und wegen einzelner von ihnen die Eröffnung des Hauptverfahrens abgelehnt wird,
2. die Verfolgung nach § 154a auf einzelne abtrennbare Teile einer Tat beschränkt wird oder solche Teile in das Verfahren wieder einbezogen werden,
3. die Tat rechtlich abweichend von der Anklageschrift gewürdigt wird oder
4. die Verfolgung nach § 154a auf einzelne von mehreren Gesetzesverletzungen, die durch dieselbe Straftat begangen worden sind, beschränkt wird oder solche Gesetzesverletzungen in das Verfahren wieder einbezogen werden.

(3) In den Fällen des Absatzes 2 Nr. 1 und 2 reicht die Staatsanwaltschaft eine dem Beschluß entsprechende neue Anklageschrift ein. Von der Darstellung des wesentlichen Ergebnisses der Ermittlungen kann abgesehen werden.

(4) Das Gericht beschließt zugleich von Amts wegen über die Anordnung oder Fortdauer der Untersuchungshaft oder der einstweiligen Unterbringung.

§ 208 (weggefallen)

§ 209

(1) Hält das Gericht, bei dem die Anklage eingereicht ist, die Zuständigkeit eines Gerichts niedrigerer Ordnung in seinem Bezirk für begründet, so eröffnet es das Hauptverfahren vor diesem Gericht.

(2) Hält das Gericht, bei dem die Anklage eingereicht ist, die Zuständigkeit eines Gerichts höherer Ordnung, zu dessen Bezirk es gehört, für begründet, so legt es die Akten durch Vermittlung der Staatsanwaltschaft diesem zur Entscheidung vor.

§ 209a

Im Sinne des § 4 Abs. 2, des § 209 sowie des § 210 Abs. 2 stehen

1. die besonderen Strafkammern nach § 74 Abs. 2 sowie den §§ 74a und 74c des Gerichtsverfassungsgesetzes für ihren Bezirk gegenüber den allgemeinen Strafkammern und untereinander in der in § 74e des Gerichtsverfassungsgesetzes bezeichneten Rangfolge und
2. die Jugendgerichte für die Entscheidung, ob Sachen
   a) nach § 33 Abs. 1, § 103 Abs. 2 Satz 1 und § 107 des Jugendgerichtsgesetzes oder
   b) als Jugendschutzsachen (§ 26 Abs. 1 Satz 1, § 74b Satz 1 des Gerichtsverfassungsgesetzes)

   vor die Jugendgerichte gehören, gegenüber den für allgemeine Strafsachen zuständigen Gerichten gleicher Ordnung

   Gerichten höherer Ordnung gleich.

§ 210

(1) Der Beschluß, durch den das Hauptverfahren eröffnet worden ist, kann von dem Angeklagten nicht angefochten werden.

(2) Gegen den Beschluß, durch den die Eröffnung des Hauptverfahrens abgelehnt oder abweichend von dem Antrag der Staatsanwaltschaft die Verweisung an ein Gericht niederer Ordnung ausgesprochen worden ist, steht der Staatsanwaltschaft sofortige Beschwerde zu.

(3) Gibt das Beschwerdegericht der Beschwerde statt, so kann es zugleich bestimmen, daß die Hauptverhandlung vor einer anderen Kammer des Gerichts, das den Beschluß nach Absatz 2 erlassen hat, oder vor einem zu demselben Land gehörenden benachbarten Gericht gleicher Ordnung stattzufinden hat. In Verfahren, in denen ein Oberlandesgericht im ersten Rechtszug entschieden hat, kann der Bundesgerichtshof bestimmen, daß die Hauptverhandlung vor einem anderen Senat dieses Gerichts stattzufinden hat.

§ 211

Ist die Eröffnung des Hauptverfahrens durch einen nicht mehr anfechtbaren Beschluß abgelehnt, so kann die Klage nur auf Grund neuer Tatsachen oder Beweismittel wieder aufgenommen werden.

Fünfter Abschnitt
Vorbereitung der Hauptverhandlung

§ 212

Nach Eröffnung des Hauptverfahrens gilt § 202a entsprechend.

§§ 212a und 212b (weggefallen)

§ 213

Der Termin zur Hauptverhandlung wird von dem Vorsitzenden des Gerichts anberaumt.

§ 214

(1) Die zur Hauptverhandlung erforderlichen Ladungen ordnet der Vorsitzende an. Zugleich veranlasst er die nach § 397 Absatz 2 Satz 3 und § 406g Absatz 1 Satz 4, Absatz 2 Satz 2 erforderlichen Benachrichtigungen vom Termin; § 406d Absatz 3 gilt entsprechend. Die Geschäftsstelle sorgt dafür, dass die Ladungen bewirkt und die Mitteilungen versandt werden.

(2) Ist anzunehmen, daß sich die Hauptverhandlung auf längere Zeit erstreckt, so soll der Vorsitzende die Ladung sämtlicher oder einzelner Zeugen und Sachverständigen zu einem späteren Zeitpunkt als dem Beginn der Hauptverhandlung anordnen.

(3) Der Staatsanwaltschaft steht das Recht der unmittelbaren Ladung weiterer Personen zu.

(4) Die Staatsanwaltschaft bewirkt die Herbeischaffung der als Beweismittel dienenden Gegenstände. Diese kann auch vom Gericht bewirkt werden.

§ 215

Der Beschluß über die Eröffnung des Hauptverfahrens ist dem Angeklagten spätestens mit der Ladung zuzustellen. Entsprechendes gilt in den Fällen des § 207 Abs. 3 für die nachgereichte Anklageschrift.

§ 216

(1) Die Ladung eines auf freiem Fuß befindlichen Angeklagten geschieht schriftlich unter der Warnung, daß im Falle seines unentschuldigten Ausbleibens seine Verhaftung oder Vorführung erfolgen werde. Die Warnung kann in den Fällen des § 232 unterbleiben.

(2) Der nicht auf freiem Fuß befindliche Angeklagte wird durch Bekanntmachung des Termins zur Hauptverhandlung gemäß § 35 geladen. Dabei ist der Angeklagte zu befragen, ob und welche Anträge er zu seiner Verteidigung für die Hauptverhandlung zu stellen habe.

§ 217

(1) Zwischen der Zustellung der Ladung (§ 216) und dem Tag der Hauptverhandlung muß eine Frist von mindestens einer Woche liegen.

(2) Ist die Frist nicht eingehalten worden, so kann der Angeklagte bis zum Beginn seiner Vernehmung zur Sache die Aussetzung der Verhandlung verlangen.

(3) Der Angeklagte kann auf die Einhaltung der Frist verzichten.

§ 218

Neben dem Angeklagten ist der bestellte Verteidiger stets, der gewählte Verteidiger dann zu laden, wenn die Wahl dem Gericht angezeigt worden ist. § 217 gilt entsprechend.

§ 219

(1) Verlangt der Angeklagte die Ladung von Zeugen oder Sachverständigen oder die Herbeischaffung anderer Beweismittel zur Hauptverhandlung, so hat er unter Angabe der Tatsachen, über die der Beweis erhoben werden soll, seine Anträge bei dem Vorsitzenden des Gerichts zu stellen. Die hierauf ergehende Verfügung ist ihm bekanntzumachen.

(2) Beweisanträge des Angeklagten sind, soweit ihnen stattgegeben ist, der Staatsanwaltschaft mitzuteilen.

§ 220

(1) Lehnt der Vorsitzende den Antrag auf Ladung einer Person ab, so kann der Angeklagte sie unmittelbar laden lassen. Hierzu ist er auch ohne vorgängigen Antrag befugt.

(2) Eine unmittelbar geladene Person ist nur dann zum Erscheinen verpflichtet, wenn ihr bei der Ladung die gesetzliche Entschädigung für Reisekosten und Versäumnis bar dargeboten oder deren Hinterlegung bei der Geschäftsstelle nachgewiesen wird.

(3) Ergibt sich in der Hauptverhandlung, daß die Vernehmung einer unmittelbar geladenen Person zur Aufklärung der Sache dienlich war, so hat das Gericht auf Antrag anzuordnen, daß ihr die gesetzliche Entschädigung aus der Staatskasse zu gewähren ist.

§ 221

Der Vorsitzende des Gerichts kann auch von Amts wegen die Herbeischaffung weiterer als Beweismittel dienender Gegenstände anordnen.

§ 222

(1) Das Gericht hat die geladenen Zeugen und Sachverständigen der Staatsanwaltschaft und dem Angeklagten rechtzeitig namhaft zu machen und ihren Wohn- oder Aufenthaltsort anzugeben. Macht die Staatsanwaltschaft von ihrem Recht nach § 214 Abs. 3 Gebrauch, so hat sie die geladenen Zeugen und Sachverständigen dem Gericht und dem Angeklagten rechtzeitig namhaft zu machen und deren Wohn- oder Aufenthaltsort anzugeben. § 200 Abs. 1 Satz 3 bis 5 gilt sinngemäß.

(2) Der Angeklagte hat die von ihm unmittelbar geladenen oder zur Hauptverhandlung zu stellenden Zeugen und Sachverständigen rechtzeitig dem Gericht und der Staatsanwaltschaft namhaft zu machen und ihren Wohn- oder Aufenthaltsort anzugeben.

§ 222a

(1) Findet die Hauptverhandlung im ersten Rechtszug vor dem Landgericht oder dem Oberlandesgericht statt, so ist spätestens zu Beginn der Hauptverhandlung die Besetzung des Gerichts unter Hervorhebung des Vorsitzenden und hinzugezogener Ergänzungsrichter und Ergänzungsschöffen mitzuteilen. Die Besetzung kann auf Anordnung des Vorsitzenden schon vor der Hauptverhandlung mitgeteilt werden; für den Angeklagten ist die Mitteilung an seinen Verteidiger zu richten. Ändert sich die mitgeteilte Besetzung, so ist dies spätestens zu Beginn der Hauptverhandlung mitzuteilen.

(2) Ist die Mitteilung der Besetzung oder einer Besetzungsänderung später als eine Woche vor Beginn der Hauptverhandlung zugegangen, so kann das Gericht auf Antrag des Angeklagten, des Verteidigers oder der Staatsanwaltschaft die Hauptverhandlung zur Prüfung der Besetzung unterbrechen, wenn dies spätestens bis zum Beginn der Vernehmung des ersten Angeklagten zur Sache verlangt wird.

(3) In die für die Besetzung maßgebenden Unterlagen kann für den Angeklagten nur sein Verteidiger oder ein Rechtsanwalt, für den Nebenkläger nur ein Rechtsanwalt Einsicht nehmen.

§ 222b

(1) Ist die Besetzung des Gerichts nach § 222a mitgeteilt worden, so kann der Einwand, daß das Gericht vorschriftswidrig besetzt sei, nur bis zum Beginn der Vernehmung des ersten Angeklagten zur Sache in der Hauptverhandlung geltend gemacht werden. Die Tatsachen, aus denen sich die vorschriftswidrige Besetzung ergeben soll, sind dabei anzugeben. Alle Beanstandungen sind gleichzeitig vorzubringen. Außerhalb der Hauptverhandlung ist der Einwand schriftlich geltend zu machen; § 345 Abs. 2 und für den Nebenkläger § 390 Abs. 2 gelten entsprechend.

(2) Über den Einwand entscheidet das Gericht in der für Entscheidungen außerhalb der Hauptverhandlung vorgeschriebenen Besetzung. Hält es den Einwand für begründet, so stellt es fest, daß es nicht vorschriftsmäßig besetzt ist. Führt ein Einwand zu einer Änderung der Besetzung, so ist auf die neue Besetzung § 222a nicht anzuwenden.

§ 223

(1) Wenn dem Erscheinen eines Zeugen oder Sachverständigen in der Hauptverhandlung für eine längere oder ungewisse Zeit Krankheit oder Gebrechlichkeit oder andere nicht zu beseitigende Hindernisse entgegenstehen, so kann das Gericht seine Vernehmung durch einen beauftragten oder ersuchten Richter anordnen.

(2) Dasselbe gilt, wenn einem Zeugen oder Sachverständigen das Erscheinen wegen großer Entfernung nicht zugemutet werden kann.

(3) (weggefallen)

§ 224

(1) Von den zum Zweck dieser Vernehmung anberaumten Terminen sind die Staatsanwaltschaft, der Angeklagte und der Verteidiger vorher zu benachrichtigen; ihrer Anwesenheit bei der Vernehmung bedarf es nicht. Die Benachrichtigung unterbleibt, wenn sie den Untersuchungserfolg gefährden würde. Das aufgenommene Protokoll ist der Staatsanwaltschaft und dem Verteidiger vorzulegen.

(2) Hat ein nicht in Freiheit befindlicher Angeklagter einen Verteidiger, so steht ihm ein Anspruch auf Anwesenheit nur bei solchen Terminen zu, die an der Gerichtsstelle des Ortes abgehalten werden, wo er in Haft ist.

§ 225

Ist zur Vorbereitung der Hauptverhandlung noch ein richterlicher Augenschein einzunehmen, so sind die Vorschriften des § 224 anzuwenden.

§ 225a

(1) Hält ein Gericht vor Beginn einer Hauptverhandlung die sachliche Zuständigkeit eines Gerichts höherer Ordnung für begründet, so legt es die Akten durch Vermittlung der Staatsanwaltschaft diesem vor; § 209a Nr. 2 Buchstabe a gilt entsprechend. Das Gericht, dem die Sache vorgelegt worden ist, entscheidet durch Beschluß darüber, ob es die Sache übernimmt.

(2) Werden die Akten von einem Strafrichter oder einem Schöffengericht einem Gericht höherer Ordnung vorgelegt, so kann der Angeklagte innerhalb einer bei der Vorlage zu bestimmenden Frist die Vornahme einzelner Beweiserhebungen beantragen. Über den Antrag entscheidet der Vorsitzende des Gerichts, dem die Sache vorgelegt worden ist.

(3) In dem Übernahmebeschluß sind der Angeklagte und das Gericht, vor dem die Hauptverhandlung stattfinden soll, zu bezeichnen. § 207 Abs. 2 Nr. 2 bis 4, Abs. 3 und 4 gilt entsprechend. Die Anfechtbarkeit des Beschlusses bestimmt sich nach § 210.

(4) Nach den Absätzen 1 bis 3 ist auch zu verfahren, wenn das Gericht vor Beginn der Hauptverhandlung einen Einwand des Angeklagten nach § 6a für begründet hält und eine besondere Strafkammer zuständig wäre, der nach § 74e des Gerichtsverfassungsgesetzes der Vorrang zukommt. Kommt dem Gericht, das die Zuständigkeit einer anderen Strafkammer für begründet hält, vor dieser nach § 74e des Gerichtsverfassungsgesetzes der Vorrang zu, so verweist es die Sache an diese mit bindender Wirkung; die Anfechtbarkeit des Verweisungsbeschlusses bestimmt sich nach § 210.

Sechster Abschnitt
Hauptverhandlung

§ 226

(1) Die Hauptverhandlung erfolgt in ununterbrochener Gegenwart der zur Urteilsfindung berufenen Personen sowie der Staatsanwaltschaft und eines Urkundsbeamten der Geschäftsstelle.

(2) Der Strafrichter kann in der Hauptverhandlung von der Hinzuziehung eines Urkundsbeamten der Geschäftsstelle absehen. Die Entscheidung ist unanfechtbar.

§ 227

Es können mehrere Beamte der Staatsanwaltschaft und mehrere Verteidiger in der Hauptverhandlung mitwirken und ihre Verrichtungen unter sich teilen.

§ 228

(1) Über die Aussetzung einer Hauptverhandlung oder deren Unterbrechung nach § 229 Abs. 2 entscheidet das Gericht. Kürzere Unterbrechungen ordnet der Vorsitzende an.

(2) Eine Verhinderung des Verteidigers gibt, unbeschadet der Vorschrift des § 145, dem Angeklagten kein Recht, die Aussetzung der Verhandlung zu verlangen.

(3) Ist die Frist des § 217 Abs. 1 nicht eingehalten worden, so soll der Vorsitzende den Angeklagten mit der Befugnis, Aussetzung der Verhandlung zu verlangen, bekanntmachen.

§ 229

(1) Eine Hauptverhandlung darf bis zu drei Wochen unterbrochen werden.

(2) Eine Hauptverhandlung darf auch bis zu einem Monat unterbrochen werden, wenn sie davor jeweils an mindestens zehn Tagen stattgefunden hat.

(3) Kann ein Angeklagter oder eine zur Urteilsfindung berufene Person zu einer Hauptverhandlung, die bereits an mindestens zehn Tagen stattgefunden hat, wegen Krankheit nicht erscheinen, so ist der Lauf der in den Absätzen 1 und 2 genannten Fristen während der Dauer der Verhinderung, längstens jedoch für sechs Wochen, gehemmt; diese Fristen enden frühestens zehn Tage nach Ablauf der Hemmung. Beginn und Ende der Hemmung stellt das Gericht durch unanfechtbaren Beschluß fest.

(4) Wird die Hauptverhandlung nicht spätestens am Tage nach Ablauf der in den vorstehenden Absätzen bezeichneten Frist fortgesetzt, so ist mit ihr von neuem zu beginnen. Ist der Tag nach Ablauf der Frist ein Sonntag, ein allgemeiner Feiertag oder ein Sonnabend, so kann die Hauptverhandlung am nächsten Werktag fortgesetzt werden.

§ 230

(1) Gegen einen ausgebliebenen Angeklagten findet eine Hauptverhandlung nicht statt.

(2) Ist das Ausbleiben des Angeklagten nicht genügend entschuldigt, so ist die Vorführung anzuordnen oder ein Haftbefehl zu erlassen.

§ 231

(1) Der erschienene Angeklagte darf sich aus der Verhandlung nicht entfernen. Der Vorsitzende kann die geeigneten Maßregeln treffen, um die Entfernung zu verhindern; auch kann er den Angeklagten während einer Unterbrechung der Verhandlung in Gewahrsam halten lassen.

(2) Entfernt der Angeklagte sich dennoch oder bleibt er bei der Fortsetzung einer unterbrochenen Hauptverhandlung aus, so kann diese in seiner Abwesenheit zu Ende geführt werden, wenn er über die Anklage schon vernommen war und das Gericht seine fernere Anwesenheit nicht für erforderlich erachtet.

§ 231a

(1) Hat sich der Angeklagte vorsätzlich und schuldhaft in einen seine Verhandlungsfähigkeit ausschließenden Zustand versetzt und verhindert er dadurch wissentlich die ordnungsmäßige Durchführung oder Fortsetzung der Hauptverhandlung in seiner Gegenwart, so wird die Hauptverhandlung, wenn er noch nicht über die Anklage vernommen war, in seiner Abwesenheit durchgeführt oder fortgesetzt, soweit das Gericht seine Anwesenheit nicht für unerläßlich hält. Nach Satz 1 ist nur zu verfahren, wenn der Angeklagte nach Eröffnung des Hauptverfahrens Gelegenheit gehabt hat, sich vor dem Gericht oder einem beauftragten Richter zur Anklage zu äußern.

(2) Sobald der Angeklagte wieder verhandlungsfähig ist, hat ihn der Vorsitzende, solange mit der Verkündung des Urteils noch nicht begonnen worden ist, von dem wesentlichen Inhalt dessen zu unterrichten, was in seiner Abwesenheit verhandelt worden ist.

(3) Die Verhandlung in Abwesenheit des Angeklagten nach Absatz 1 beschließt das Gericht nach Anhörung eines Arztes als Sachverständigen. Der Beschluß kann bereits vor Beginn der Hauptverhandlung gefaßt werden. Gegen den Beschluß ist sofortige Beschwerde zulässig; sie hat aufschiebende Wirkung. Eine bereits begonnene Hauptverhandlung ist bis zur Entscheidung über die sofortige Beschwerde zu unterbrechen; die Unterbrechung darf, auch wenn die Voraussetzungen des § 229 Abs. 2 nicht vorliegen, bis zu dreißig Tagen dauern.

(4) Dem Angeklagten, der keinen Verteidiger hat, ist ein Verteidiger zu bestellen, sobald eine Verhandlung ohne den Angeklagten nach Absatz 1 in Betracht kommt.

§ 231b

(1) Wird der Angeklagte wegen ordnungswidrigen Benehmens aus dem Sitzungszimmer entfernt oder zur Haft abgeführt (§ 177 des Gerichtsverfassungsgesetzes), so kann in seiner Abwesenheit verhandelt werden, wenn das Gericht seine fernere Anwesenheit nicht für unerläßlich hält und solange zu befürchten ist, daß die Anwesenheit des Angeklagten den Ablauf der Hauptverhandlung in schwerwiegender Weise beeinträchtigen würde. Dem Angeklagten ist in jedem Fall Gelegenheit zu geben, sich zur Anklage zu äußern.

(2) Sobald der Angeklagte wieder vorgelassen ist, ist nach § 231a Abs. 2 zu verfahren.

§ 231c

Findet die Hauptverhandlung gegen mehrere Angeklagte statt, so kann durch Gerichtsbeschluß einzelnen Angeklagten, im Falle der notwendigen Verteidigung auch ihren Verteidigern, auf Antrag gestattet werden, sich während einzelner Teile der Verhandlung zu entfernen, wenn sie von diesen Verhandlungsteilen nicht betroffen sind. In dem Beschluß sind die Verhandlungsteile zu bezeichnen, für die die Erlaubnis gilt. Die Erlaubnis kann jederzeit widerrufen werden.

§ 232

(1) Die Hauptverhandlung kann ohne den Angeklagten durchgeführt werden, wenn er ordnungsgemäß geladen und in der Ladung darauf hingewiesen worden ist, daß in seiner Abwesenheit verhandelt werden kann, und wenn nur Geldstrafe bis zu einhundertachtzig Tagessätzen, Verwarnung mit Strafvorbehalt, Fahrverbot, Verfall, Einziehung, Vernichtung oder Unbrauchbarmachung, allein oder nebeneinander, zu erwarten ist. Eine höhere Strafe oder eine Maßregel der Besserung und Sicherung darf in diesem Verfahren nicht verhängt werden. Die Entziehung der Fahrerlaubnis ist zulässig, wenn der Angeklagte in der Ladung auf diese Möglichkeit hingewiesen worden ist.

(2) Auf Grund einer Ladung durch öffentliche Bekanntmachung findet die Hauptverhandlung ohne den Angeklagten nicht statt.

(3) Die Niederschrift über eine richterliche Vernehmung des Angeklagten wird in der

Hauptverhandlung verlesen.

(4) Das in Abwesenheit des Angeklagten ergehende Urteil muß ihm mit den Urteilsgründen durch Übergabe zugestellt werden, wenn es nicht nach § 145a Abs. 1 dem Verteidiger zugestellt wird.

§ 233

(1) Der Angeklagte kann auf seinen Antrag von der Verpflichtung zum Erscheinen in der Hauptverhandlung entbunden werden, wenn nur Freiheitsstrafe bis zu sechs Monaten, Geldstrafe bis zu einhundertachtzig Tagessätzen, Verwarnung mit Strafvorbehalt, Fahrverbot, Verfall, Einziehung, Vernichtung oder Unbrauchbarmachung, allein oder nebeneinander, zu erwarten ist. Eine höhere Strafe oder eine Maßregel der Besserung und Sicherung darf in seiner Abwesenheit nicht verhängt werden. Die Entziehung der Fahrerlaubnis ist zulässig.

(2) Wird der Angeklagte von der Verpflichtung zum Erscheinen in der Hauptverhandlung entbunden, so muß er durch einen beauftragten oder ersuchten Richter über die Anklage vernommen werden. Dabei wird er über die bei Verhandlung in seiner Abwesenheit zulässigen Rechtsfolgen belehrt sowie befragt, ob er seinen Antrag auf Befreiung vom Erscheinen in der Hauptverhandlung aufrechterhalte.

(3) Von dem zum Zweck der Vernehmung anberaumten Termin sind die Staatsanwaltschaft und der Verteidiger zu benachrichtigen; ihrer Anwesenheit bei der Vernehmung bedarf es nicht. Das Protokoll über die Vernehmung ist in der Hauptverhandlung zu verlesen.

§ 234

Soweit die Hauptverhandlung ohne Anwesenheit des Angeklagten stattfinden kann, ist er befugt, sich durch einen mit schriftlicher Vollmacht versehenen Verteidiger vertreten zu lassen.

§ 234a

Findet die Hauptverhandlung ohne Anwesenheit des Angeklagten statt, so genügt es, wenn die nach § 265 Abs. 1 und 2 erforderlichen Hinweise dem Verteidiger gegeben werden; das Einverständnis des Angeklagten nach § 245 Abs. 1 Satz 2 und nach § 251 Abs. 1 Nr. 1, Abs.

2 Nr. 3 ist nicht erforderlich, wenn ein Verteidiger an der Hauptverhandlung teilnimmt.

§ 235

Hat die Hauptverhandlung gemäß § 232 ohne den Angeklagten stattgefunden, so kann er gegen das Urteil binnen einer Woche nach seiner Zustellung die Wiedereinsetzung in den vorigen Stand unter den gleichen Voraussetzungen wie gegen die Versäumung einer Frist nachsuchen; hat er von der Ladung zur Hauptverhandlung keine Kenntnis erlangt, so kann er stets die Wiedereinsetzung in den vorigen Stand beanspruchen. Hierüber ist der Angeklagte bei der Zustellung des Urteils zu belehren.

§ 236

Das Gericht ist stets befugt, das persönliche Erscheinen des Angeklagten anzuordnen und durch einen Vorführungsbefehl oder Haftbefehl zu erzwingen.

§ 237

Das Gericht kann im Falle eines Zusammenhangs zwischen mehreren bei ihm anhängigen Strafsachen ihre Verbindung zum Zwecke gleichzeitiger Verhandlung anordnen, auch wenn dieser Zusammenhang nicht der in § 3 bezeichnete ist.

§ 238

(1) Die Leitung der Verhandlung, die Vernehmung des Angeklagten und die Aufnahme des Beweises erfolgt durch den Vorsitzenden.

(2) Wird eine auf die Sachleitung bezügliche Anordnung des Vorsitzenden von einer bei der Verhandlung beteiligten Person als unzulässig beanstandet, so entscheidet das Gericht.

§ 239

(1) Die Vernehmung der von der Staatsanwaltschaft und dem Angeklagten benannten Zeugen und Sachverständigen ist der Staatsanwaltschaft und dem Verteidiger auf deren übereinstimmenden Antrag von dem Vorsitzenden zu überlassen. Bei den von der

Staatsanwaltschaft benannten Zeugen und Sachverständigen hat diese, bei den von dem Angeklagten benannten der Verteidiger in erster Reihe das Recht zur Vernehmung.

(2) Der Vorsitzende hat auch nach dieser Vernehmung die ihm zur weiteren Aufklärung der Sache erforderlich scheinenden Fragen an die Zeugen und Sachverständigen zu richten.

§ 240

(1) Der Vorsitzende hat den beisitzenden Richtern auf Verlangen zu gestatten, Fragen an den Angeklagten, die Zeugen und die Sachverständigen zu stellen.

(2) Dasselbe hat der Vorsitzende der Staatsanwaltschaft, dem Angeklagten und dem Verteidiger sowie den Schöffen zu gestatten. Die unmittelbare Befragung eines Angeklagten durch einen Mitangeklagten ist unzulässig.

§ 241

(1) Dem, welcher im Falle des § 239 Abs. 1 die Befugnis der Vernehmung mißbraucht, kann sie von dem Vorsitzenden entzogen werden.

(2) In den Fällen des § 239 Abs. 1 und des § 240 Abs. 2 kann der Vorsitzende ungeeignete oder nicht zur Sache gehörende Fragen zurückweisen.

§ 241a

(1) Die Vernehmung von Zeugen unter 18 Jahren wird allein von dem Vorsitzenden durchgeführt.

(2) Die in § 240 Abs. 1 und Abs. 2 Satz 1 bezeichneten Personen können verlangen, daß der Vorsitzende den Zeugen weitere Fragen stellt. Der Vorsitzende kann diesen Personen eine unmittelbare Befragung der Zeugen gestatten, wenn nach pflichtgemäßem Ermessen ein Nachteil für das Wohl der Zeugen nicht zu befürchten ist.

(3) § 241 Abs. 2 gilt entsprechend.

§ 242

Zweifel über die Zulässigkeit einer Frage entscheidet in allen Fällen das Gericht.

§ 243

(1) Die Hauptverhandlung beginnt mit dem Aufruf der Sache. Der Vorsitzende stellt fest, ob der Angeklagte und der Verteidiger anwesend und die Beweismittel herbeigeschafft, insbesondere die geladenen Zeugen und Sachverständigen erschienen sind.

(2) Die Zeugen verlassen den Sitzungssaal. Der Vorsitzende vernimmt den Angeklagten über seine persönlichen Verhältnisse.

(3) Darauf verliest der Staatsanwalt den Anklagesatz. Dabei legt er in den Fällen des § 207 Abs. 3 die neue Anklageschrift zugrunde. In den Fällen des § 207 Abs. 2 Nr. 3 trägt der Staatsanwalt den Anklagesatz mit der dem Eröffnungsbeschluß zugrunde liegenden rechtlichen Würdigung vor; außerdem kann er seine abweichende Rechtsauffassung äußern. In den Fällen des § 207 Abs. 2 Nr. 4 berücksichtigt er die Änderungen, die das Gericht bei der Zulassung der Anklage zur Hauptverhandlung beschlossen hat.

(4) Der Vorsitzende teilt mit, ob Erörterungen nach den §§ 202a, 212 stattgefunden haben, wenn deren Gegenstand die Möglichkeit einer Verständigung (§ 257c) gewesen ist und wenn ja, deren wesentlichen Inhalt. Diese Pflicht gilt auch im weiteren Verlauf der Hauptverhandlung, soweit sich Änderungen gegenüber der Mitteilung zu Beginn der Hauptverhandlung ergeben haben.

(5) Sodann wird der Angeklagte darauf hingewiesen, daß es ihm freistehe, sich zu der Anklage zu äußern oder nicht zur Sache auszusagen. Ist der Angeklagte zur Äußerung bereit, so wird er nach Maßgabe des § 136 Abs. 2 zur Sache vernommen. Vorstrafen des Angeklagten sollen nur insoweit festgestellt werden, als sie für die Entscheidung von Bedeutung sind. Wann sie festgestellt werden, bestimmt der Vorsitzende.

§ 244

(1) Nach der Vernehmung des Angeklagten folgt die Beweisaufnahme.

(2) Das Gericht hat zur Erforschung der Wahrheit die Beweisaufnahme von Amts wegen auf alle Tatsachen und Beweismittel zu erstrecken, die für die Entscheidung von Bedeutung sind.

(3) Ein Beweisantrag ist abzulehnen, wenn die Erhebung des Beweises unzulässig ist. Im

übrigen darf ein Beweisantrag nur abgelehnt werden, wenn eine Beweiserhebung wegen Offenkundigkeit überflüssig ist, wenn die Tatsache, die bewiesen werden soll, für die Entscheidung ohne Bedeutung oder schon erwiesen ist, wenn das Beweismittel völlig ungeeignet oder wenn es unerreichbar ist, wenn der Antrag zum Zweck der Prozeßverschleppung gestellt ist oder wenn eine erhebliche Behauptung, die zur Entlastung des Angeklagten bewiesen werden soll, so behandelt werden kann, als wäre die behauptete Tatsache wahr.

(4) Ein Beweisantrag auf Vernehmung eines Sachverständigen kann, soweit nichts anderes bestimmt ist, auch abgelehnt werden, wenn das Gericht selbst die erforderliche Sachkunde besitzt. Die Anhörung eines weiteren Sachverständigen kann auch dann abgelehnt werden, wenn durch das frühere Gutachten das Gegenteil der behaupteten Tatsache bereits erwiesen ist; dies gilt nicht, wenn die Sachkunde des früheren Gutachters zweifelhaft ist, wenn sein Gutachten von unzutreffenden tatsächlichen Voraussetzungen ausgeht, wenn das Gutachten Widersprüche enthält oder wenn der neue Sachverständige über Forschungsmittel verfügt, die denen eines früheren Gutachters überlegen erscheinen.

(5) Ein Beweisantrag auf Einnahme eines Augenscheins kann abgelehnt werden, wenn der Augenschein nach dem pflichtgemäßen Ermessen des Gerichts zur Erforschung der Wahrheit nicht erforderlich ist. Unter derselben Voraussetzung kann auch ein Beweisantrag auf Vernehmung eines Zeugen abgelehnt werden, dessen Ladung im Ausland zu bewirken wäre.

(6) Die Ablehnung eines Beweisantrages bedarf eines Gerichtsbeschlusses.

§ 245

(1) Die Beweisaufnahme ist auf alle vom Gericht vorgeladenen und auch erschienenen Zeugen und Sachverständigen sowie auf die sonstigen nach § 214 Abs. 4 vom Gericht oder der Staatsanwaltschaft herbeigeschafften Beweismittel zu erstrecken, es sei denn, daß die Beweiserhebung unzulässig ist. Von der Erhebung einzelner Beweise kann abgesehen werden, wenn die Staatsanwaltschaft, der Verteidiger und der Angeklagte damit einverstanden sind.

(2) Zu einer Erstreckung der Beweisaufnahme auf die vom Angeklagten oder der Staatsanwaltschaft vorgeladenen und auch erschienenen Zeugen und Sachverständigen sowie auf die sonstigen herbeigeschafften Beweismittel ist das Gericht nur verpflichtet, wenn ein Beweisantrag gestellt wird. Der Antrag ist abzulehnen, wenn die Beweiserhebung unzulässig ist. Im übrigen darf er nur abgelehnt werden, wenn die Tatsache, die bewiesen werden soll, schon erwiesen oder offenkundig ist, wenn zwischen ihr und dem Gegenstand der Urteilsfindung kein Zusammenhang besteht, wenn das Beweismittel völlig ungeeignet ist oder wenn der Antrag zum Zwecke der Prozeßverschleppung gestellt ist.

§ 246

(1) Eine Beweiserhebung darf nicht deshalb abgelehnt werden, weil das Beweismittel oder die zu beweisende Tatsache zu spät vorgebracht worden sei.

(2) Ist jedoch ein zu vernehmender Zeuge oder Sachverständiger dem Gegner des Antragstellers so spät namhaft gemacht oder eine zu beweisende Tatsache so spät vorgebracht worden, daß es dem Gegner an der zur Einziehung von Erkundigungen erforderlichen Zeit gefehlt hat, so kann er bis zum Schluß der Beweisaufnahme die Aussetzung der Hauptverhandlung zum Zweck der Erkundigung beantragen.

(3) Dieselbe Befugnis haben die Staatsanwaltschaft und der Angeklagte bei den auf Anordnung des Vorsitzenden oder des Gerichts geladenen Zeugen oder Sachverständigen.

(4) Über die Anträge entscheidet das Gericht nach freiem Ermessen.

§ 246a

Kommt in Betracht, dass die Unterbringung des Angeklagten in einem psychiatrischen Krankenhaus oder in der Sicherungsverwahrung angeordnet oder vorbehalten werden wird, so ist in der Hauptverhandlung ein Sachverständiger über den Zustand des Angeklagten und die Behandlungsaussichten zu vernehmen. Gleiches gilt, wenn das Gericht erwägt, die Unterbringung des Angeklagten in einer Entziehungsanstalt anzuordnen. Hat der Sachverständige den Angeklagten nicht schon früher untersucht, so soll ihm dazu vor der Hauptverhandlung Gelegenheit gegeben werden.

§ 247

Das Gericht kann anordnen, daß sich der Angeklagte während einer Vernehmung aus dem Sitzungszimmer entfernt, wenn zu befürchten ist, ein Mitangeklagter oder ein Zeuge werde bei seiner Vernehmung in Gegenwart des Angeklagten die Wahrheit nicht sagen. Das gleiche gilt, wenn bei der Vernehmung einer Person unter 18 Jahren als Zeuge in Gegenwart des Angeklagten ein erheblicher Nachteil für das Wohl des Zeugen zu befürchten ist oder wenn bei einer Vernehmung einer anderen Person als Zeuge in Gegenwart des Angeklagten die dringende Gefahr eines schwerwiegenden Nachteils für ihre Gesundheit besteht. Die Entfernung des Angeklagten kann für die Dauer von Erörterungen über den Zustand des Angeklagten und die Behandlungsaussichten angeordnet werden, wenn ein erheblicher Nachteil für seine Gesundheit zu befürchten ist. Der Vorsitzende hat den Angeklagten, sobald dieser wieder anwesend ist, von dem wesentlichen Inhalt dessen zu unterrichten, was während seiner Abwesenheit ausgesagt oder sonst verhandelt worden ist.

§ 247a

Besteht die dringende Gefahr eines schwerwiegenden Nachteils für das Wohl des Zeugen, wenn er in Gegenwart der in der Hauptverhandlung Anwesenden vernommen wird, so kann das Gericht anordnen, daß der Zeuge sich während der Vernehmung an einem anderen Ort aufhält; eine solche Anordnung ist auch unter den Voraussetzungen des § 251 Abs. 2 zulässig, soweit dies zur Erforschung der Wahrheit erforderlich ist. Die Entscheidung ist unanfechtbar. Die Aussage wird zeitgleich in Bild und Ton in das Sitzungszimmer übertragen. Sie soll aufgezeichnet werden, wenn zu besorgen ist, daß der Zeuge in einer weiteren Hauptverhandlung nicht vernommen werden kann und die Aufzeichnung zur Erforschung der Wahrheit erforderlich ist. § 58a Abs. 2 findet entsprechende Anwendung.

§ 248

Die vernommenen Zeugen und Sachverständigen dürfen sich nur mit Genehmigung oder auf Anweisung des Vorsitzenden von der Gerichtsstelle entfernen. Die Staatsanwaltschaft und der Angeklagte sind vorher zu hören.

§ 249

(1) Urkunden und andere als Beweismittel dienende Schriftstücke werden in der Hauptverhandlung verlesen. Dies gilt insbesondere von früher ergangenen Strafurteilen, von Straflisten und von Auszügen aus Kirchenbüchern und Personenstandsregistern und findet auch Anwendung auf Protokolle über die Einnahme des richterlichen Augenscheins.

(2) Von der Verlesung kann, außer in den Fällen der §§ 253 und 254, abgesehen werden, wenn die Richter und Schöffen vom Wortlaut der Urkunde oder des Schriftstücks Kenntnis genommen haben und die übrigen Beteiligten hierzu Gelegenheit hatten. Widerspricht der Staatsanwalt, der Angeklagte oder der Verteidiger unverzüglich der Anordnung des Vorsitzenden, nach Satz 1 zu verfahren, so entscheidet das Gericht. Die Anordnung des Vorsitzenden, die Feststellungen über die Kenntnisnahme und die Gelegenheit hierzu und der Widerspruch sind in das Protokoll aufzunehmen.

§ 250

Beruht der Beweis einer Tatsache auf der Wahrnehmung einer Person, so ist diese in der Hauptverhandlung zu vernehmen. Die Vernehmung darf nicht durch Verlesung des über eine frühere Vernehmung aufgenommenen Protokolls oder einer schriftlichen Erklärung ersetzt werden.

§ 251

(1) Die Vernehmung eines Zeugen, Sachverständigen oder Mitbeschuldigten kann durch die Verlesung einer Niederschrift über eine Vernehmung oder einer Urkunde, die eine von ihm stammende schriftliche Erklärung enthält, ersetzt werden,

1. wenn der Angeklagte einen Verteidiger hat und der Staatsanwalt, der Verteidiger und der Angeklagte damit einverstanden sind;
2. wenn der Zeuge, Sachverständige oder Mitbeschuldigte verstorben ist oder aus einem anderen Grunde in absehbarer Zeit gerichtlich nicht vernommen werden kann;
3. soweit die Niederschrift oder Urkunde das Vorliegen oder die Höhe eines Vermögensschadens betrifft.

(2) Die Vernehmung eines Zeugen, Sachverständigen oder Mitbeschuldigten darf durch die Verlesung der Niederschrift über seine frühere richterliche Vernehmung auch ersetzt werden, wenn

1. dem Erscheinen des Zeugen, Sachverständigen oder Mitbeschuldigten in der Hauptverhandlung für eine längere oder ungewisse Zeit Krankheit, Gebrechlichkeit oder andere nicht zu beseitigende Hindernisse entgegenstehen;
2. dem Zeugen oder Sachverständigen das Erscheinen in der Hauptverhandlung wegen großer Entfernung unter Berücksichtigung der Bedeutung seiner Aussage nicht zugemutet werden kann;
3. der Staatsanwalt, der Verteidiger und der Angeklagte mit der Verlesung einverstanden sind.

(3) Soll die Verlesung anderen Zwecken als unmittelbar der Urteilsfindung, insbesondere zur Vorbereitung der Entscheidung darüber dienen, ob die Ladung und Vernehmung einer Person erfolgen sollen, so dürfen Vernehmungsniederschriften, Urkunden und andere als Beweismittel dienende Schriftstücke auch sonst verlesen werden.

(4) In den Fällen der Absätze 1 und 2 beschließt das Gericht, ob die Verlesung angeordnet wird. Der Grund der Verlesung wird bekanntgegeben. Wird die Niederschrift über eine richterliche Vernehmung verlesen, so wird festgestellt, ob der Vernommene vereidigt worden ist. Die Vereidigung wird nachgeholt, wenn sie dem Gericht notwendig erscheint und noch ausführbar ist.

§ 252

Die Aussage eines vor der Hauptverhandlung vernommenen Zeugen, der erst in der Hauptverhandlung von seinem Recht, das Zeugnis zu verweigern, Gebrauch macht, darf nicht verlesen werden.

§ 253

(1) Erklärt ein Zeuge oder Sachverständiger, daß er sich einer Tatsache nicht mehr erinnere, so kann der hierauf bezügliche Teil des Protokolls über seine frühere Vernehmung zur Unterstützung seines Gedächtnisses verlesen werden.

(2) Dasselbe kann geschehen, wenn ein in der Vernehmung hervortretender Widerspruch mit der früheren Aussage nicht auf andere Weise ohne Unterbrechung der Hauptverhandlung festgestellt oder behoben werden kann.

§ 254

(1) Erklärungen des Angeklagten, die in einem richterlichen Protokoll enthalten sind, können zum Zweck der Beweisaufnahme über ein Geständnis verlesen werden.

(2) Dasselbe kann geschehen, wenn ein in der Vernehmung hervortretender Widerspruch mit der früheren Aussage nicht auf andere Weise ohne Unterbrechung der Hauptverhandlung festgestellt oder behoben werden kann.

§ 255

In den Fällen der §§ 253 und 254 ist die Verlesung und ihr Grund auf Antrag der Staatsanwaltschaft oder des Angeklagten im Protokoll zu erwähnen.

§ 255a

(1) Für die Vorführung der Bild-Ton-Aufzeichnung einer Zeugenvernehmung gelten die Vorschriften zur Verlesung einer Niederschrift über eine Vernehmung gemäß §§ 251, 252, 253 und 255 entsprechend.

(2) In Verfahren wegen Straftaten gegen die sexuelle Selbstbestimmung (§§ 174 bis 184g des Strafgesetzbuches) oder gegen das Leben (§§ 211 bis 222 des Strafgesetzbuches), wegen Misshandlung von Schutzbefohlenen (§ 225 des Strafgesetzbuches) oder wegen Straftaten gegen die persönliche Freiheit nach den §§ 232 bis 233a des Strafgesetzbuches kann die Vernehmung eines Zeugen unter 18 Jahren durch die Vorführung der Bild-Ton-Aufzeichnung seiner früheren richterlichen Vernehmung ersetzt werden, wenn der Angeklagte und sein Verteidiger Gelegenheit hatten, an dieser mitzuwirken. Eine ergänzende Vernehmung des Zeugen ist zulässig.

§ 256

(1) Verlesen werden können

1. die ein Zeugnis oder ein Gutachten enthaltenden Erklärungen
   a) öffentlicher Behörden,
   b) der Sachverständigen, die für die Erstellung von Gutachten der betreffenden Art allgemein vereidigt sind, sowie
   c) der Ärzte eines gerichtsärztlichen Dienstes mit Ausschluss von Leumundszeugnissen,
2. ärztliche Atteste über Körperverletzungen, die nicht zu den schweren gehören,
3. ärztliche Berichte zur Entnahme von Blutproben,
4. Gutachten über die Auswertung eines Fahrtschreibers, die Bestimmung der Blutgruppe oder des Blutalkoholgehalts einschließlich seiner Rückrechnung und
5. Protokolle sowie in einer Urkunde enthaltene Erklärungen der Strafverfolgungsbehörden über Ermittlungshandlungen, soweit diese nicht eine Vernehmung zum Gegenstand haben.

(2) Ist das Gutachten einer kollegialen Fachbehörde eingeholt worden, so kann das Gericht die Behörde ersuchen, eines ihrer Mitglieder mit der Vertretung des Gutachtens in der Hauptverhandlung zu beauftragen und dem Gericht zu bezeichnen.

§ 257

(1) Nach der Vernehmung eines jeden Mitangeklagten und nach jeder einzelnen Beweiserhebung soll der Angeklagte befragt werden, ob er dazu etwas zu erklären habe.

(2) Auf Verlangen ist auch dem Staatsanwalt und dem Verteidiger nach der Vernehmung des Angeklagten und nach jeder einzelnen Beweiserhebung Gelegenheit zu geben, sich dazu zu erklären.

(3) Die Erklärungen dürfen den Schlußvortrag nicht vorwegnehmen.

§ 257a

Das Gericht kann den Verfahrensbeteiligten aufgeben, Anträge und Anregungen zu Verfahrensfragen schriftlich zu stellen. Dies gilt nicht für die in § 258 bezeichneten Anträge. § 249 findet entsprechende Anwendung.

§ 257b

Das Gericht kann in der Hauptverhandlung den Stand des Verfahrens mit den Verfahrensbeteiligten erörtern, soweit dies geeignet erscheint, das Verfahren zu fördern.

§ 257c

(1) Das Gericht kann sich in geeigneten Fällen mit den Verfahrensbeteiligten nach Maßgabe der folgenden Absätze über den weiteren Fortgang und das Ergebnis des Verfahrens verständigen. § 244 Absatz 2 bleibt unberührt.

(2) Gegenstand dieser Verständigung dürfen nur die Rechtsfolgen sein, die Inhalt des Urteils und der dazugehörigen Beschlüsse sein können, sonstige verfahrensbezogene Maßnahmen im zugrundeliegenden Erkenntnisverfahren sowie das Prozessverhalten der Verfahrensbeteiligten. Bestandteil jeder Verständigung soll ein Geständnis sein. Der Schuldspruch sowie Maßregeln der Besserung und Sicherung dürfen nicht Gegenstand einer Verständigung sein.

(3) Das Gericht gibt bekannt, welchen Inhalt die Verständigung haben könnte. Es kann dabei unter freier Würdigung aller Umstände des Falles sowie der allgemeinen Strafzumessungserwägungen auch eine Oberund Untergrenze der Strafe angeben. Die Verfahrensbeteiligten erhalten Gelegenheit zur Stellungnahme. Die Verständigung kommt zustande, wenn Angeklagter und Staatsanwaltschaft dem Vorschlag des Gerichtes zustimmen.

(4) Die Bindung des Gerichtes an eine Verständigung entfällt, wenn rechtlich oder tatsächlich bedeutsame Umstände übersehen worden sind oder sich neu ergeben haben und das Gericht deswegen zu der Überzeugung gelangt, dass der in Aussicht gestellte Strafrahmen nicht mehr tat- oder schuldangemessen ist. Gleiches gilt, wenn das weitere Prozessverhalten des Angeklagten nicht dem Verhalten entspricht, das der Prognose des Gerichtes zugrunde gelegt worden ist. Das Geständnis des Angeklagten darf in diesen Fällen nicht verwertet werden. Das Gericht hat eine Abweichung unverzüglich mitzuteilen.

(5) Der Angeklagte ist über die Voraussetzungen und Folgen einer Abweichung des Gerichtes von dem in Aussicht gestellten Ergebnis nach Absatz 4 zu belehren.

§ 258

(1) Nach dem Schluß der Beweisaufnahme erhalten der Staatsanwalt und sodann der Angeklagte zu ihren Ausführungen und Anträgen das Wort.

(2) Dem Staatsanwalt steht das Recht der Erwiderung zu; dem Angeklagten gebührt das letzte Wort.

(3) Der Angeklagte ist, auch wenn ein Verteidiger für ihn gesprochen hat, zu befragen, ob er selbst noch etwas zu seiner Verteidigung anzuführen habe.

§ 259

(1) Einem der Gerichtssprache nicht mächtigen Angeklagten müssen aus den Schlußvorträgen mindestens die Anträge des Staatsanwalts und des Verteidigers durch den Dolmetscher bekanntgemacht werden.

(2) Dasselbe gilt nach Maßgabe des § 186 des Gerichtsverfassungsgesetzes für einen hör- oder sprachbehinderten Angeklagten.

§ 260

(1) Die Hauptverhandlung schließt mit der auf die Beratung folgenden Verkündung des Urteils.

(2) Wird ein Berufsverbot angeordnet, so ist im Urteil der Beruf, der Berufszweig, das Gewerbe oder der Gewerbezweig, dessen Ausübung verboten wird, genau zu bezeichnen.

(3) Die Einstellung des Verfahrens ist im Urteil auszusprechen, wenn ein Verfahrenshindernis besteht.

(4) Die Urteilsformel gibt die rechtliche Bezeichnung der Tat an, deren der Angeklagte schuldig gesprochen wird. Hat ein Straftatbestand eine gesetzliche Überschrift, so soll diese zur rechtlichen Bezeichnung der Tat verwendet werden. Wird eine Geldstrafe verhängt, so sind Zahl und Höhe der Tagessätze in die Urteilsformel aufzunehmen. Wird die Entscheidung über die Sicherungsverwahrung vorbehalten, die Strafe oder Maßregel der Besserung und Sicherung zur Bewährung ausgesetzt, der Angeklagte mit Strafvorbehalt verwarnt oder von Strafe abgesehen, so ist dies in der Urteilsformel zum Ausdruck zu bringen. Im übrigen unterliegt die Fassung der Urteilsformel dem Ermessen des Gerichts.

(5) Nach der Urteilsformel werden die angewendeten Vorschriften nach Paragraph, Absatz, Nummer, Buchstabe und mit der Bezeichnung des Gesetzes aufgeführt. Ist bei einer Verurteilung, durch die auf Freiheitsstrafe oder Gesamtfreiheitsstrafe von nicht mehr als zwei Jahren erkannt wird, die Tat oder der ihrer Bedeutung nach überwiegende Teil der Taten auf Grund einer Betäubungsmittelabhängigkeit begangen worden, so ist außerdem § 17 Abs. 2 des Bundeszentralregistergesetzes anzuführen.

§ 261

Über das Ergebnis der Beweisaufnahme entscheidet das Gericht nach seiner freien, aus dem Inbegriff der Verhandlung geschöpften Überzeugung.

§ 262

(1) Hängt die Strafbarkeit einer Handlung von der Beurteilung eines bürgerlichen Rechtsverhältnisses ab, so entscheidet das Strafgericht auch über dieses nach den für das Verfahren und den Beweis in Strafsachen geltenden Vorschriften.

(2) Das Gericht ist jedoch befugt, die Untersuchung auszusetzen und einem der Beteiligten zur Erhebung der Zivilklage eine Frist zu bestimmen oder das Urteil des Zivilgerichts abzuwarten.

§ 263

(1) Zu jeder dem Angeklagten nachteiligen Entscheidung über die Schuldfrage und die Rechtsfolgen der Tat ist eine Mehrheit von zwei Dritteln der Stimmen erforderlich.

(2) Die Schuldfrage umfaßt auch solche vom Strafgesetz besonders vorgesehene Umstände, welche die Strafbarkeit ausschließen, vermindern oder erhöhen.

(3) Die Schuldfrage umfaßt nicht die Voraussetzungen der Verjährung.

§ 264

(1) Gegenstand der Urteilsfindung ist die in der Anklage bezeichnete Tat, wie sie sich nach dem Ergebnis der Verhandlung darstellt.

(2) Das Gericht ist an die Beurteilung der Tat, die dem Beschluß über die Eröffnung des Hauptverfahrens zugrunde liegt, nicht gebunden.

§ 265

(1) Der Angeklagte darf nicht auf Grund eines anderen als des in der gerichtlich zugelassenen Anklage angeführten Strafgesetzes verurteilt werden, ohne daß er zuvor auf die Veränderung des rechtlichen Gesichtspunktes besonders hingewiesen und ihm Gelegenheit zur Verteidigung gegeben worden ist.

(2) Ebenso ist zu verfahren, wenn sich erst in der Verhandlung vom Strafgesetz besonders vorgesehene Umstände ergeben, welche die Strafbarkeit erhöhen oder die Anordnung einer Maßregel der Besserung und Sicherung rechtfertigen.

(3) Bestreitet der Angeklagte unter der Behauptung, auf die Verteidigung nicht genügend vorbereitet zu sein, neu hervorgetretene Umstände, welche die Anwendung eines schwereren Strafgesetzes gegen den Angeklagten zulassen als des in der gerichtlich zugelassenen Anklage angeführten oder die zu den im zweiten Absatz bezeichneten gehören, so ist auf seinen Antrag die Hauptverhandlung auszusetzen.

(4) Auch sonst hat das Gericht auf Antrag oder von Amts wegen die Hauptverhandlung auszusetzen, falls dies infolge der veränderten Sachlage zur genügenden Vorbereitung der Anklage oder der Verteidigung angemessen erscheint.

§ 265a

Kommen Auflagen oder Weisungen (§§ 56b, 56c, 59a Abs. 2 des Strafgesetzbuches) in Betracht, so ist der Angeklagte in geeigneten Fällen zu befragen, ob er sich zu Leistungen erbietet, die der Genugtuung für das begangene Unrecht dienen, oder Zusagen für seine künftige Lebensführung macht. Kommt die Weisung in Betracht, sich einer Heilbehandlung oder einer Entziehungskur zu unterziehen oder in einem geeigneten Heim oder einer geeigneten Anstalt Aufenthalt zu nehmen, so ist er zu befragen, ob er hierzu seine Einwilligung gibt.

§ 266

(1) Erstreckt der Staatsanwalt in der Hauptverhandlung die Anklage auf weitere Straftaten des Angeklagten, so kann das Gericht sie durch Beschluß in das Verfahren einbeziehen, wenn es für sie zuständig ist und der Angeklagte zustimmt.

(2) Die Nachtragsanklage kann mündlich erhoben werden. Ihr Inhalt entspricht dem § 200 Abs. 1. Sie wird in die Sitzungsniederschrift aufgenommen. Der Vorsitzende gibt dem Angeklagten Gelegenheit, sich zu verteidigen.

(3) Die Verhandlung wird unterbrochen, wenn es der Vorsitzende für erforderlich hält oder wenn der Angeklagte es beantragt und sein Antrag nicht offenbar mutwillig oder nur zur Verzögerung des Verfahrens gestellt ist. Auf das Recht, die Unterbrechung zu beantragen, wird der Angeklagte hingewiesen.

§ 267

(1) Wird der Angeklagte verurteilt, so müssen die Urteilsgründe die für erwiesen erachteten Tatsachen angeben, in denen die gesetzlichen Merkmale der Straftat gefunden werden. Soweit der Beweis aus anderen Tatsachen gefolgert wird, sollen auch diese Tatsachen angegeben werden. Auf Abbildungen, die sich bei den Akten befinden, kann hierbei wegen der Einzelheiten verwiesen werden.

(2) Waren in der Verhandlung vom Strafgesetz besonders vorgesehene Umstände behauptet worden, welche die Strafbarkeit ausschließen, vermindern oder erhöhen, so müssen die Urteilsgründe sich darüber aussprechen, ob diese Umstände für festgestellt oder für nicht festgestellt erachtet werden.

(3) Die Gründe des Strafurteils müssen ferner das zur Anwendung gebrachte Strafgesetz bezeichnen und die Umstände anführen, die für die Zumessung der Strafe bestimmend gewesen sind. Macht das Strafgesetz Milderungen von dem Vorliegen minder schwerer Fälle abhängig, so müssen die Urteilsgründe ergeben, weshalb diese Umstände angenommen oder einem in der Verhandlung gestellten Antrag entgegen verneint werden; dies gilt entsprechend für die Verhängung einer Freiheitsstrafe in den Fällen des § 47 des Strafgesetzbuches. Die Urteilsgründe müssen auch ergeben, weshalb ein besonders

schwerer Fall nicht angenommen wird, wenn die Voraussetzungen erfüllt sind, unter denen nach dem Strafgesetz in der Regel ein solcher Fall vorliegt; liegen diese Voraussetzungen nicht vor, wird aber gleichwohl ein besonders schwerer Fall angenommen, so gilt Satz 2 entsprechend. Die Urteilsgründe müssen ferner ergeben, weshalb die Strafe zur Bewährung ausgesetzt oder einem in der Verhandlung gestellten Antrag entgegen nicht ausgesetzt worden ist; dies gilt entsprechend für die Verwarnung mit Strafvorbehalt und das Absehen von Strafe. Ist dem Urteil eine Verständigung (§ 257c) vorausgegangen, ist auch dies in den Urteilsgründen anzugeben.

(4) Verzichten alle zur Anfechtung Berechtigten auf Rechtsmittel oder wird innerhalb der Frist kein Rechtsmittel eingelegt, so müssen die erwiesenen Tatsachen, in denen die gesetzlichen Merkmale der Straftat gefunden werden, und das angewendete Strafgesetz angegeben werden; bei Urteilen, die nur auf Geldstrafe lauten oder neben einer Geldstrafe ein Fahrverbot oder die Entziehung der Fahrerlaubnis und damit zusammen die Einziehung des Führerscheins anordnen, oder bei Verwarnungen mit Strafvorbehalt kann hierbei auf den zugelassenen Anklagesatz, auf die Anklage gemäß § 418 Abs. 3 Satz 2 oder den Strafbefehl sowie den Strafbefehlsantrag verwiesen werden. Absatz 3 Satz 5 gilt entsprechend. Den weiteren Inhalt der Urteilsgründe bestimmt das Gericht unter Berücksichtigung der Umstände des Einzelfalls nach seinem Ermessen. Die Urteilsgründe können innerhalb der in § 275 Abs. 1 Satz 2 vorgesehenen Frist ergänzt werden, wenn gegen die Versäumung der Frist zur Einlegung des Rechtsmittels Wiedereinsetzung in den vorigen Stand gewährt wird.

(5) Wird der Angeklagte freigesprochen, so müssen die Urteilsgründe ergeben, ob der Angeklagte für nicht überführt oder ob und aus welchen Gründen die für erwiesen angenommene Tat für nicht strafbar erachtet worden ist. Verzichten alle zur Anfechtung Berechtigten auf Rechtsmittel oder wird innerhalb der Frist kein Rechtsmittel eingelegt, so braucht nur angegeben zu werden, ob die dem Angeklagten zur Last gelegte Straftat aus tatsächlichen oder rechtlichen Gründen nicht festgestellt worden ist. Absatz 4 Satz 3 ist anzuwenden.

(6) Die Urteilsgründe müssen auch ergeben, weshalb eine Maßregel der Besserung und

Sicherung angeordnet, eine Entscheidung über die Sicherungsverwahrung vorbehalten oder einem in der Verhandlung gestellten Antrag entgegen nicht angeordnet oder nicht vorbehalten worden ist. Ist die Fahrerlaubnis nicht entzogen oder eine Sperre nach § 69a Abs. 1 Satz 3 des Strafgesetzbuches nicht angeordnet worden, obwohl dies nach der Art der Straftat in Betracht kam, so müssen die Urteilsgründe stets ergeben, weshalb die Maßregel nicht angeordnet worden ist.

§ 268

(1) Das Urteil ergeht im Namen des Volkes.

(2) Das Urteil wird durch Verlesung der Urteilsformel und Eröffnung der Urteilsgründe verkündet. Die Eröffnung der Urteilsgründe geschieht durch Verlesung oder durch mündliche Mitteilung ihres wesentlichen Inhalts. Die Verlesung der Urteilsformel hat in jedem Falle der Mitteilung der Urteilsgründe voranzugehen.

(3) Das Urteil soll am Schluß der Verhandlung verkündet werden. Es muß spätestens am elften Tage danach verkündet werden, andernfalls mit der Hauptverhandlung von neuem zu beginnen ist. § 229 Abs. 3 und Abs. 4 Satz 2 gilt entsprechend.

(4) War die Verkündung des Urteils ausgesetzt, so sind die Urteilsgründe tunlichst vorher schriftlich festzustellen.

§ 268a

(1) Wird in dem Urteil die Strafe zur Bewährung ausgesetzt oder der Angeklagte mit Strafvorbehalt verwarnt, so trifft das Gericht die in den §§ 56a bis 56d und 59a des Strafgesetzbuches bezeichneten Entscheidungen durch Beschluß; dieser ist mit dem Urteil zu verkünden.

(2) Absatz 1 gilt entsprechend, wenn in dem Urteil eine Maßregel der Besserung und Sicherung zur Bewährung ausgesetzt oder neben der Strafe Führungsaufsicht angeordnet wird und das Gericht Entscheidungen nach den §§ 68a bis 68c des Strafgesetzbuches trifft.

(3) Der Vorsitzende belehrt den Angeklagten über die Bedeutung der Aussetzung der Strafe oder Maßregel zur Bewährung, der Verwarnung mit Strafvorbehalt oder der

Führungsaufsicht, über die Dauer der Bewährungszeit oder der Führungsaufsicht, über die Auflagen und Weisungen sowie über die Möglichkeit des Widerrufs der Aussetzung oder der Verurteilung zu der vorbehaltenen Strafe (§ 56f Abs. 1, §§ 59b, 67g Abs. 1 des Strafgesetzbuches). Erteilt das Gericht dem Angeklagten Weisungen nach § 68b Abs. 1 des Strafgesetzbuches, so belehrt der Vorsitzende ihn auch über die Möglichkeit einer Bestrafung nach § 145a des Strafgesetzbuches. Die Belehrung ist in der Regel im Anschluß an die Verkündung des Beschlusses nach den Absätzen 1 oder 2 zu erteilen. Wird die Unterbringung in einem psychiatrischen Krankenhaus zur Bewährung ausgesetzt, so kann der Vorsitzende von der Belehrung über die Möglichkeit des Widerrufs der Aussetzung absehen.

§ 268b

Bei der Urteilsfällung ist zugleich von Amts wegen über die Fortdauer der Untersuchungshaft oder einstweiligen Unterbringung zu entscheiden. Der Beschluß ist mit dem Urteil zu verkünden.

§ 268c

Wird in dem Urteil ein Fahrverbot angeordnet, so belehrt der Vorsitzende den Angeklagten über den Beginn der Verbotsfrist (§ 44 Abs. 3 Satz 1 des Strafgesetzbuches). Die Belehrung wird im Anschluß an die Urteilsverkündung erteilt. Ergeht das Urteil in Abwesenheit des Angeklagten, so ist er schriftlich zu belehren.

§ 268d

Ist in dem Urteil die Anordnung der Sicherungsverwahrung nach § 66a Absatz 1 oder 2 des Strafgesetzbuches vorbehalten, so belehrt der Vorsitzende den Angeklagten über die Bedeutung des Vorbehalts sowie über den Zeitraum, auf den sich der Vorbehalt erstreckt.

§ 269

Das Gericht darf sich nicht für unzuständig erklären, weil die Sache vor ein Gericht niederer Ordnung gehöre.

§ 270

(1) Hält ein Gericht nach Beginn einer Hauptverhandlung die sachliche Zuständigkeit eines Gerichts höherer Ordnung für begründet, so verweist es die Sache durch Beschluß an das zuständige Gericht; § 209a Nr. 2 Buchstabe a gilt entsprechend. Ebenso ist zu verfahren, wenn das Gericht einen rechtzeitig geltend gemachten Einwand des Angeklagten nach § 6a für begründet hält.

(2) In dem Beschluß bezeichnet das Gericht den Angeklagten und die Tat gemäß § 200 Abs. 1 Satz 1.

(3) Der Beschluß hat die Wirkung eines das Hauptverfahren eröffnenden Beschlusses. Seine Anfechtbarkeit bestimmt sich nach § 210.

(4) Ist der Verweisungsbeschluß von einem Strafrichter oder einem Schöffengericht ergangen, so kann der Angeklagte innerhalb einer bei der Bekanntmachung des Beschlusses zu bestimmenden Frist die Vornahme einzelner Beweiserhebungen vor der Hauptverhandlung beantragen. Über den Antrag entscheidet der Vorsitzende des Gerichts, an das die Sache verwiesen worden ist.

§ 271

(1) Über die Hauptverhandlung ist ein Protokoll aufzunehmen und von dem Vorsitzenden und dem Urkundsbeamten der Geschäftsstelle, soweit dieser in der Hauptverhandlung anwesend war, zu unterschreiben. Der Tag der Fertigstellung ist darin anzugeben.

(2) Ist der Vorsitzende verhindert, so unterschreibt für ihn der älteste beisitzende Richter. Ist der Vorsitzende das einzige richterliche Mitglied des Gerichts, so genügt bei seiner Verhinderung die Unterschrift des Urkundsbeamten der Geschäftsstelle.

§ 272

Das Protokoll über die Hauptverhandlung enthält

1. den Ort und den Tag der Verhandlung;
2. die Namen der Richter und Schöffen, des Beamten der Staatsanwaltschaft, des Urkundsbeamten der Geschäftsstelle und des zugezogenen Dolmetschers;

3. die Bezeichnung der Straftat nach der Anklage;
4. die Namen der Angeklagten, ihrer Verteidiger, der Privatkläger, Nebenkläger, Verletzten, die Ansprüche aus der Straftat geltend machen, der sonstigen Nebenbeteiligten, gesetzlichen Vertreter, Bevollmächtigten und Beistände;
5. die Angabe, daß öffentlich verhandelt oder die Öffentlichkeit ausgeschlossen ist.

§ 273

(1) Das Protokoll muß den Gang und die Ergebnisse der Hauptverhandlung im wesentlichen wiedergeben und die Beachtung aller wesentlichen Förmlichkeiten ersichtlich machen, auch die Bezeichnung der verlesenen Schriftstücke oder derjenigen, von deren Verlesung nach § 249 Abs. 2 abgesehen worden ist, sowie die im Laufe der Verhandlung gestellten Anträge, die ergangenen Entscheidungen und die Urteilsformel enthalten. In das Protokoll muss auch der wesentliche Ablauf und Inhalt einer Erörterung nach § 257b aufgenommen werden. (1a) Das Protokoll muss auch den wesentlichen Ablauf und Inhalt sowie das Ergebnis einer Verständigung nach § 257c wiedergeben. Gleiches gilt für die Beachtung der in § 243 Absatz 4, § 257c Absatz 4 Satz 4 und Absatz 5 vorgeschriebenen Mitteilungen und Belehrungen. Hat eine Verständigung nicht stattgefunden, ist auch dies im Protokoll zu vermerken.

(2) Aus der Hauptverhandlung vor dem Strafrichter und dem Schöffengericht sind außerdem die wesentlichen Ergebnisse der Vernehmungen in das Protokoll aufzunehmen; dies gilt nicht, wenn alle zur Anfechtung Berechtigten auf Rechtsmittel verzichten oder innerhalb der Frist kein Rechtsmittel eingelegt wird. Der Vorsitzende kann anordnen, dass anstelle der Aufnahme der wesentlichen Vernehmungsergebnisse in das Protokoll einzelne Vernehmungen im Zusammenhang auf Tonträger aufgezeichnet werden. Der Tonträger ist zu den Akten zu nehmen oder bei der Geschäftsstelle mit den Akten aufzubewahren. § 58a Abs. 2 Satz 1 und 3 bis 6 gilt entsprechend.

(3) Kommt es auf die Feststellung eines Vorgangs in der Hauptverhandlung oder des Wortlauts einer Aussage oder einer Äußerung an, so hat der Vorsitzende von Amts wegen oder auf Antrag einer an der Verhandlung beteiligten Person die vollständige

Niederschreibung und Verlesung anzuordnen. Lehnt der Vorsitzende die Anordnung ab, so entscheidet auf Antrag einer an der Verhandlung beteiligten Person das Gericht. In dem Protokoll ist zu vermerken, daß die Verlesung geschehen und die Genehmigung erfolgt ist oder welche Einwendungen erhoben worden sind.

(4) Bevor das Protokoll fertiggestellt ist, darf das Urteil nicht zugestellt werden.

§ 274

Die Beobachtung der für die Hauptverhandlung vorgeschriebenen Förmlichkeiten kann nur durch das Protokoll bewiesen werden. Gegen den diese Förmlichkeiten betreffenden Inhalt des Protokolls ist nur der Nachweis der Fälschung zulässig.

§ 275

(1) Ist das Urteil mit den Gründen nicht bereits vollständig in das Protokoll aufgenommen worden, so ist es unverzüglich zu den Akten zu bringen. Dies muß spätestens fünf Wochen nach der Verkündung geschehen; diese Frist verlängert sich, wenn die Hauptverhandlung länger als drei Tage gedauert hat, um zwei Wochen, und wenn die Hauptverhandlung länger als zehn Tage gedauert hat, für jeden begonnenen Abschnitt von zehn Hauptverhandlungstagen um weitere zwei Wochen. Nach Ablauf der Frist dürfen die Urteilsgründe nicht mehr geändert werden. Die Frist darf nur überschritten werden, wenn und solange das Gericht durch einen im Einzelfall nicht voraussehbaren unabwendbaren Umstand an ihrer Einhaltung gehindert worden ist. Der Zeitpunkt des Eingangs und einer Änderung der Gründe ist von der Geschäftsstelle zu vermerken.

(2) Das Urteil ist von den Richtern, die bei der Entscheidung mitgewirkt haben, zu unterschreiben. Ist ein Richter verhindert, seine Unterschrift beizufügen, so wird dies unter der Angabe des Verhinderungsgrundes von dem Vorsitzenden und bei dessen Verhinderung von dem ältesten beisitzenden Richter unter dem Urteil vermerkt. Der Unterschrift der Schöffen bedarf es nicht.

(3) Die Bezeichnung des Tages der Sitzung sowie die Namen der Richter, der Schöffen, des Beamten der Staatsanwaltschaft, des Verteidigers und des Urkundsbeamten der Geschäftsstelle,

die an der Sitzung teilgenommen haben, sind in das Urteil aufzunehmen.

(4) Die Ausfertigungen und Auszüge der Urteile sind von dem Urkundsbeamten der Geschäftsstelle zu unterschreiben und mit dem Gerichtssiegel zu versehen.

Siebenter Abschnitt
Entscheidung über die im Urteil vorbehaltene oder die nachträgliche Anordnung der Sicherungsverwahrung

§ 275a

(1) Ist im Urteil die Anordnung der Sicherungsverwahrung vorbehalten (§ 66a des Strafgesetzbuches), übersendet die Vollstreckungsbehörde die Akten rechtzeitig an die Staatsanwaltschaft des zuständigen Gerichts. Diese übergibt die Akten so rechtzeitig dem Vorsitzenden des Gerichts, dass eine Entscheidung bis zu dem in Absatz 5 genannten Zeitpunkt ergehen kann. Ist die Unterbringung in einem psychiatrischen Krankenhaus gemäß § 67d Absatz 6 Satz 1 des Strafgesetzbuches für erledigt erklärt worden, übersendet die Vollstreckungsbehörde die Akten unverzüglich an die Staatsanwaltschaft des Gerichts, das für eine nachträgliche Anordnung der Sicherungsverwahrung (§ 66b des Strafgesetzbuches) zuständig ist. Beabsichtigt diese, eine nachträgliche Anordnung der Sicherungsverwahrung zu beantragen, teilt sie dies der betroffenen Person mit. Die Staatsanwaltschaft soll den Antrag auf nachträgliche Anordnung der Sicherungsverwahrung unverzüglich stellen und ihn zusammen mit den Akten dem Vorsitzenden des Gerichts übergeben.

(2) Für die Vorbereitung und die Durchführung der Hauptverhandlung gelten die §§ 213 bis 275 entsprechend, soweit nachfolgend nichts anderes geregelt ist.

(3) Nachdem die Hauptverhandlung nach Maßgabe des § 243 Abs. 1 begonnen hat, hält ein Berichterstatter in Abwesenheit der Zeugen einen Vortrag über die Ergebnisse des bisherigen Verfahrens. Der Vorsitzende verliest das frühere Urteil, soweit es für die Entscheidung über die vorbehaltene oder die nachträgliche Anordnung der Sicherungsverwahrung von Bedeutung ist. Sodann erfolgt die Vernehmung des Verurteilten und die Beweisaufnahme.

(4) Das Gericht holt vor der Entscheidung das Gutachten eines Sachverständigen ein. Ist über

die nachträgliche Anordnung der Sicherungsverwahrung zu entscheiden, müssen die Gutachten von zwei Sachverständigen eingeholt werden. Die Gutachter dürfen im Rahmen des Strafvollzugs oder des Vollzugs der Unterbringung nicht mit der Behandlung des Verurteilten befasst gewesen sein.

(5) Das Gericht soll über die vorbehaltene Anordnung der Sicherungsverwahrung spätestens sechs Monate vor der vollständigen Vollstreckung der Freiheitsstrafe entscheiden.

(6) Sind dringende Gründe für die Annahme vorhanden, dass die nachträgliche Sicherungsverwahrung angeordnet wird, so kann das Gericht bis zur Rechtskraft des Urteils einen Unterbringungsbefehl erlassen. Für den Erlass des Unterbringungsbefehls ist das für die Entscheidung nach § 67d Absatz 6 des Strafgesetzbuches zuständige Gericht so lange zuständig, bis der Antrag auf Anordnung der nachträglichen Sicherungsverwahrung bei dem für diese Entscheidung zuständigen Gericht eingeht. In den Fällen des § 66a des Strafgesetzbuches kann das Gericht bis zur Rechtskraft des Urteils einen Unterbringungsbefehl erlassen, wenn es im ersten Rechtszug bis zu dem in § 66a Absatz 3 Satz 1 des Strafgesetzbuches bestimmten Zeitpunkt die vorbehaltene Sicherungsverwahrung angeordnet hat. Die §§ 114 bis 115a, 117 bis 119a und 126a Abs. 3 gelten entsprechend.

Achter Abschnitt
Verfahren gegen Abwesende

§ 276

Ein Beschuldigter gilt als abwesend, wenn sein Aufenthalt unbekannt ist oder wenn er sich im Ausland aufhält und seine Gestellung vor das zuständige Gericht nicht ausführbar oder nicht angemessen erscheint.

§§ 277 bis 284 (weggefallen)

§ 285

(1) Gegen einen Abwesenden findet keine Hauptverhandlung statt. Das gegen einen

Abwesenden eingeleitete Verfahren hat die Aufgabe, für den Fall seiner künftigen Gestellung die Beweise zu sichern.

(2) Für dieses Verfahren gelten die Vorschriften der §§ 286 bis 294.

§ 286

Für den Angeklagten kann ein Verteidiger auftreten. Auch Angehörige des Angeklagten sind, auch ohne Vollmacht, als Vertreter zuzulassen.

§ 287

(1) Dem abwesenden Beschuldigten steht ein Anspruch auf Benachrichtigung über den Fortgang des Verfahrens nicht zu.

(2) Der Richter ist jedoch befugt, einem Abwesenden, dessen Aufenthalt bekannt ist, Benachrichtigungen zugehen zu lassen.

§ 288

Der Abwesende, dessen Aufenthalt unbekannt ist, kann in einem oder mehreren öffentlichen Blättern zum Erscheinen vor Gericht oder zur Anzeige seines Aufenthaltsortes aufgefordert werden.

§ 289

Stellt sich erst nach Eröffnung des Hauptverfahrens die Abwesenheit des Angeklagten heraus, so erfolgen die noch erforderlichen Beweisaufnahmen durch einen beauftragten oder ersuchten Richter.

§ 290

(1) Liegen gegen den Abwesenden, gegen den die öffentliche Klage erhoben ist, Verdachtsgründe vor, die den Erlaß eines Haftbefehls rechtfertigen würden, so kann sein im Geltungsbereich dieses Bundesgesetzes befindliches Vermögen durch Beschluß des Gerichts mit Beschlag belegt werden.

(2) Wegen Straftaten, die nur mit Freiheitsstrafe bis zu sechs Monaten oder mit Geldstrafe bis zu einhundertachtzig Tagessätzen bedroht sind, findet keine Vermögensbeschlagnahme statt.

§ 291

Der die Beschlagnahme verhängende Beschluß ist im elektronischen Bundesanzeiger bekanntzumachen und kann nach dem Ermessen des Gerichts auch auf andere geeignete Weise veröffentlicht werden.

§ 292

(1) Mit dem Zeitpunkt der ersten Bekanntmachung im elektronischen Bundesanzeiger verliert der Angeschuldigte das Recht, über das in Beschlag genommene Vermögen unter Lebenden zu verfügen.

(2) Der die Beschlagnahme verhängende Beschluß ist der Behörde mitzuteilen, die für die Einleitung einer Pflegschaft über Abwesende zuständig ist. Diese Behörde hat eine Pflegschaft einzuleiten.

§ 293

(1) Die Beschlagnahme ist aufzuheben, wenn ihre Gründe weggefallen sind.

(2) Die Aufhebung der Beschlagnahme ist auf dieselbe Weise bekannt zu machen, wie die Bekanntmachung der Beschlagnahme. Ist die Veröffentlichung nach § 291 im elektronischen Bundesanzeiger erfolgt, ist zudem deren Löschung zu veranlassen; die Veröffentlichung der Aufhebung der Beschlagnahme im elektronischen Bundesanzeiger ist nach Ablauf von einem Monat zu löschen.

§ 294

(1) Für das nach Erhebung der öffentlichen Klage eintretende Verfahren gelten im übrigen die Vorschriften über die Eröffnung des Hauptverfahrens entsprechend.

(2) In dem nach Beendigung dieses Verfahrens ergehenden Beschluß (§ 199) ist zugleich über die Fortdauer oder Aufhebung der Beschlagnahme zu entscheiden.

§ 295

(1) Das Gericht kann einem abwesenden Beschuldigten sicheres Geleit erteilen; es kann diese

Erteilung an Bedingungen knüpfen.

(2) Das sichere Geleit gewährt Befreiung von der Untersuchungshaft, jedoch nur wegen der Straftat, für die es erteilt ist.

(3) Es erlischt, wenn ein auf Freiheitsstrafe lautendes Urteil ergeht oder wenn der Beschuldigte Anstalten zur Flucht trifft oder wenn er die Bedingungen nicht erfüllt, unter denen ihm das sichere Geleit erteilt worden ist.

Drittes Buch
Rechtsmittel

Erster Abschnitt
Allgemeine Vorschriften

§ 296

(1) Die zulässigen Rechtsmittel gegen gerichtliche Entscheidungen stehen sowohl der Staatsanwaltschaft als dem Beschuldigten zu.

(2) Die Staatsanwaltschaft kann von ihnen auch zugunsten des Beschuldigten Gebrauch machen.

§ 297

Für den Beschuldigten kann der Verteidiger, jedoch nicht gegen dessen ausdrücklichen Willen, Rechtsmittel einlegen.

§ 298

(1) Der gesetzliche Vertreter eines Beschuldigten kann binnen der für den Beschuldigten laufenden Frist selbständig von den zulässigen Rechtsmitteln Gebrauch machen.

(2) Auf ein solches Rechtsmittel und auf das Verfahren sind die für die Rechtsmittel des Beschuldigten geltenden Vorschriften entsprechend anzuwenden.

§ 299

(1) Der nicht auf freiem Fuß befindliche Beschuldigte kann die Erklärungen, die sich auf Rechtsmittel beziehen, zu Protokoll der Geschäftsstelle des Amtsgerichts geben, in dessen Bezirk die Anstalt liegt, wo er auf behördliche Anordnung verwahrt wird.

(2) Zur Wahrung einer Frist genügt es, wenn innerhalb der Frist das Protokoll aufgenommen wird.

§ 300

Ein Irrtum in der Bezeichnung des zulässigen Rechtsmittels ist unschädlich.

§ 301

Jedes von der Staatsanwaltschaft eingelegte Rechtsmittel hat die Wirkung, daß die angefochtene Entscheidung auch zugunsten des Beschuldigten abgeändert oder aufgehoben werden kann.

§ 302

(1) Die Zurücknahme eines Rechtsmittels sowie der Verzicht auf die Einlegung eines Rechtsmittels können auch vor Ablauf der Frist zu seiner Einlegung wirksam erfolgen. Ist dem Urteil eine Verständigung (§ 257c) vorausgegangen, ist ein Verzicht ausgeschlossen. Ein von der Staatsanwaltschaft zugunsten des Beschuldigten eingelegtes Rechtsmittel kann ohne dessen Zustimmung nicht zurückgenommen werden.

(2) Der Verteidiger bedarf zur Zurücknahme einer ausdrücklichen Ermächtigung.

§ 303

Wenn die Entscheidung über das Rechtsmittel auf Grund mündlicher Verhandlung stattzufinden hat, so kann die Zurücknahme nach Beginn der Hauptverhandlung nur mit Zustimmung des Gegners erfolgen. Die Zurücknahme eines Rechtsmittels des Angeklagten bedarf jedoch nicht der Zustimmung des Nebenklägers.

Zweiter Abschnitt
Beschwerde

§ 304

(1) Die Beschwerde ist gegen alle von den Gerichten im ersten Rechtszug oder im Berufungsverfahren erlassenen Beschlüsse und gegen die Verfügungen des Vorsitzenden, des Richters im Vorverfahren und eines beauftragten oder ersuchten Richters zulässig, soweit das Gesetz sie nicht ausdrücklich einer Anfechtung entzieht.

(2) Auch Zeugen, Sachverständige und andere Personen können gegen Beschlüsse und Verfügungen, durch die sie betroffen werden, Beschwerde erheben.

(3) Gegen Entscheidungen über Kosten oder notwendige Auslagen ist die Beschwerde nur zulässig, wenn der Wert des Beschwerdegegenstands 200 Euro übersteigt.

(4) Gegen Beschlüsse und Verfügungen des Bundesgerichtshofes ist keine Beschwerde zulässig. Dasselbe gilt für Beschlüsse und Verfügungen der Oberlandesgerichte; in Sachen, in denen die Oberlandesgerichte im ersten Rechtszug zuständig sind, ist jedoch die Beschwerde zulässig gegen Beschlüsse und Verfügungen, welche

1. die Verhaftung, einstweilige Unterbringung, Unterbringung zur Beobachtung, Beschlagnahme, Durchsuchung oder die in § 101 Abs. 1 bezeichneten Maßnahmen betreffen,
2. die Eröffnung des Hauptverfahrens ablehnen oder das Verfahren wegen eines Verfahrenshindernisses einstellen,
3. die Hauptverhandlung in Abwesenheit des Angeklagten (§ 231a) anordnen oder die Verweisung an ein Gericht niederer Ordnung aussprechen,
4. die Akteneinsicht betreffen oder
5. den Widerruf der Strafaussetzung, den Widerruf des Straferlasses und die Verurteilung zu der vorbehaltenen Strafe (§ 453 Abs. 2 Satz 3), die Anordnung vorläufiger Maßnahmen zur Sicherung des Widerrufs (§ 453c), die Aussetzung des Strafrestes und deren Widerruf (§ 454 Abs. 3 und 4), die Wiederaufnahme des Verfahrens (§ 372 Satz 1) oder den Verfall, die Einziehung oder die Unbrauchbarmachung nach den §§ 440, 441 Abs. 2 und § 442 betreffen; § 138d Abs. 6 bleibt unberührt.

(5) Gegen Verfügungen des Ermittlungsrichters des Bundesgerichtshofes und des Oberlandesgerichts (§ 169 Abs. 1) ist die Beschwerde nur zulässig, wenn sie die Verhaftung, einstweilige Unterbringung, Beschlagnahme, Durchsuchung oder die in § 101 Abs. 1 bezeichneten Maßnahmen betreffen.

§ 305

Entscheidungen der erkennenden Gerichte, die der Urteilsfällung vorausgehen, unterliegen nicht der Beschwerde. Ausgenommen sind Entscheidungen über Verhaftungen, die einstweilige Unterbringung, Beschlagnahmen, die vorläufige Entziehung der Fahrerlaubnis, das vorläufige Berufsverbot oder die Festsetzung von Ordnungs- oder Zwangsmitteln sowie alle Entscheidungen, durch die dritte Personen betroffen werden.

§ 305a

(1) Gegen den Beschluß nach § 268a Abs. 1, 2 ist Beschwerde zulässig. Sie kann nur darauf gestützt werden, daß eine getroffene Anordnung gesetzwidrig ist.

(2) Wird gegen den Beschluß Beschwerde und gegen das Urteil eine zulässige Revision eingelegt, so ist das Revisionsgericht auch zur Entscheidung über die Beschwerde zuständig.

§ 306

(1) Die Beschwerde wird bei dem Gericht, von dem oder von dessen Vorsitzenden die angefochtene Entscheidung erlassen ist, zu Protokoll der Geschäftsstelle oder schriftlich eingelegt.

(2) Erachtet das Gericht oder der Vorsitzende, dessen Entscheidung angefochten wird, die Beschwerde für begründet, so haben sie ihr abzuhelfen; andernfalls ist die Beschwerde sofort, spätestens vor Ablauf von drei Tagen, dem Beschwerdegericht vorzulegen.

(3) Diese Vorschriften gelten auch für die Entscheidungen des Richters im Vorverfahren und des beauftragten oder ersuchten Richters.

§ 307

(1) Durch Einlegung der Beschwerde wird der Vollzug der angefochtenen Entscheidung nicht

gehemmt.

(2) Jedoch kann das Gericht, der Vorsitzende oder der Richter, dessen Entscheidung angefochten wird, sowie auch das Beschwerdegericht anordnen, daß die Vollziehung der angefochtenen Entscheidung auszusetzen ist.

§ 308

(1) Das Beschwerdegericht darf die angefochtene Entscheidung nicht zum Nachteil des Gegners des Beschwerdeführers ändern, ohne daß diesem die Beschwerde zur Gegenerklärung mitgeteilt worden ist. Dies gilt nicht in den Fällen des § 33 Abs. 4 Satz 1.

(2) Das Beschwerdegericht kann Ermittlungen anordnen oder selbst vornehmen.

§ 309

(1) Die Entscheidung über die Beschwerde ergeht ohne mündliche Verhandlung, in geeigneten Fällen nach Anhörung der Staatsanwaltschaft.

(2) Wird die Beschwerde für begründet erachtet, so erläßt das Beschwerdegericht zugleich die in der Sache erforderliche Entscheidung.

§ 310

(1) Beschlüsse, die von dem Landgericht oder von dem nach § 120 Abs. 3 des Gerichtsverfassungsgesetzes zuständigen Oberlandesgericht auf die Beschwerde hin erlassen worden sind, können durch weitere Beschwerde angefochten werden, wenn sie

1. eine Verhaftung,
2. eine einstweilige Unterbringung oder
3. eine Anordnung des dinglichen Arrestes nach § 111b Abs. 2 in Verbindung mit § 111d über einen Betrag von mehr als 20.000 Euro

betreffen.

(2) Im übrigen findet eine weitere Anfechtung der auf eine Beschwerde ergangenen Entscheidungen nicht statt.

§ 311

(1) Für die Fälle der sofortigen Beschwerde gelten die nachfolgenden besonderen Vorschriften.

(2) Die Beschwerde ist binnen einer Woche einzulegen; die Frist beginnt mit der Bekanntmachung (§ 35) der Entscheidung.

(3) Das Gericht ist zu einer Abänderung seiner durch Beschwerde angefochtenen Entscheidung nicht befugt. Es hilft jedoch der Beschwerde ab, wenn es zum Nachteil des Beschwerdeführers Tatsachen oder Beweisergebnisse verwertet hat, zu denen dieser noch nicht gehört worden ist, und es auf Grund des nachträglichen Vorbringens die Beschwerde für begründet erachtet.

§ 311a

(1) Hat das Beschwerdegericht einer Beschwerde ohne Anhörung des Gegners des Beschwerdeführers stattgegeben und kann seine Entscheidung nicht angefochten werden, so hat es diesen, sofern der ihm dadurch entstandene Nachteil noch besteht, von Amts wegen oder auf Antrag nachträglich zu hören und auf einen Antrag zu entscheiden. Das Beschwerdegericht kann seine Entscheidung auch ohne Antrag ändern.

(2) Für das Verfahren gelten die §§ 307, 308 Abs. 2 und § 309 Abs. 2 entsprechend.

Dritter Abschnitt
Berufung

§ 312

Gegen die Urteile des Strafrichters und des Schöffengerichts ist Berufung zulässig.

§ 313

(1) Ist der Angeklagte zu einer Geldstrafe von nicht mehr als fünfzehn Tagessätzen verurteilt worden, beträgt im Falle einer Verwarnung die vorbehaltene Strafe nicht mehr als fünfzehn Tagessätze oder ist eine Verurteilung zu einer Geldbuße erfolgt, so ist die Berufung nur zulässig, wenn sie angenommen wird. Das gleiche gilt, wenn der Angeklagte

freigesprochen oder das Verfahren eingestellt worden ist und die Staatsanwaltschaft eine Geldstrafe von nicht mehr als dreißig Tagessätzen beantragt hatte.

(2) Die Berufung wird angenommen, wenn sie nicht offensichtlich unbegründet ist. Andernfalls wird die Berufung als unzulässig verworfen.

(3) Die Berufung gegen ein auf Geldbuße, Freispruch oder Einstellung wegen einer Ordnungswidrigkeit lautendes Urteil ist stets anzunehmen, wenn die Rechtsbeschwerde nach § 79 Abs. 1 des Gesetzes über Ordnungswidrigkeiten zulässig oder nach § 80 Abs. 1 und 2 des Gesetzes über Ordnungswidrigkeiten zuzulassen wäre. Im übrigen findet Absatz 2 Anwendung.

§ 314

(1) Die Berufung muß bei dem Gericht des ersten Rechtszuges binnen einer Woche nach Verkündung des Urteils zu Protokoll der Geschäftsstelle oder schriftlich eingelegt werden.

(2) Hat die Verkündung des Urteils nicht in Anwesenheit des Angeklagten stattgefunden, so beginnt für diesen die Frist mit der Zustellung, sofern nicht in den Fällen der §§ 234, 387 Abs. 1, § 411 Abs. 2 und § 434 Abs. 1 Satz 1 die Verkündung in Anwesenheit des mit schriftlicher Vollmacht versehenen Verteidigers stattgefunden hat.

§ 315

(1) Der Beginn der Frist zur Einlegung der Berufung wird dadurch nicht ausgeschlossen, daß gegen ein auf Ausbleiben des Angeklagten ergangenes Urteil eine Wiedereinsetzung in den vorigen Stand nachgesucht werden kann.

(2) Stellt der Angeklagte einen Antrag auf Wiedereinsetzung in den vorigen Stand, so wird die Berufung dadurch gewahrt, daß sie sofort für den Fall der Verwerfung jenes Antrags rechtzeitig eingelegt wird. Die weitere Verfügung in bezug auf die Berufung bleibt dann bis zur Erledigung des Antrags auf Wiedereinsetzung in den vorigen Stand ausgesetzt.

(3) Die Einlegung der Berufung ohne Verbindung mit dem Antrag auf Wiedereinsetzung in den vorigen Stand gilt als Verzicht auf die letztere.

§ 316

(1) Durch rechtzeitige Einlegung der Berufung wird die Rechtskraft des Urteils, soweit es angefochten ist, gehemmt.

(2) Dem Beschwerdeführer, dem das Urteil mit den Gründen noch nicht zugestellt war, ist es nach Einlegung der Berufung sofort zuzustellen.

§ 317

Die Berufung kann binnen einer weiteren Woche nach Ablauf der Frist zur Einlegung des Rechtsmittels oder, wenn zu dieser Zeit das Urteil noch nicht zugestellt war, nach dessen Zustellung bei dem Gericht des ersten Rechtszuges zu Protokoll der Geschäftsstelle oder in einer Beschwerdeschrift gerechtfertigt werden.

§ 318

Die Berufung kann auf bestimmte Beschwerdepunkte beschränkt werden. Ist dies nicht geschehen oder eine Rechtfertigung überhaupt nicht erfolgt, so gilt der ganze Inhalt des Urteils als angefochten.

§ 319

(1) Ist die Berufung verspätet eingelegt, so hat das Gericht des ersten Rechtszuges das Rechtsmittel als unzulässig zu verwerfen.

(2) Der Beschwerdeführer kann binnen einer Woche nach Zustellung des Beschlusses auf die Entscheidung des Berufungsgerichts antragen. In diesem Falle sind die Akten an das Berufungsgericht einzusenden; die Vollstreckung des Urteils wird jedoch hierdurch nicht gehemmt. Die Vorschrift des § 35a gilt entsprechend.

§ 320

Ist die Berufung rechtzeitig eingelegt, so hat nach Ablauf der Frist zur Rechtfertigung die Geschäftsstelle ohne Rücksicht darauf, ob eine Rechtfertigung stattgefunden hat oder nicht, die Akten der Staatsanwaltschaft vorzulegen. Diese stellt, wenn die Berufung von ihr eingelegt ist,

dem Angeklagten die Schriftstücke über Einlegung und Rechtfertigung der Berufung zu.

§ 321

Die Staatsanwaltschaft übersendet die Akten an die Staatsanwaltschaft bei dem Berufungsgericht. Diese übergibt die Akten binnen einer Woche dem Vorsitzenden des Gerichts.

§ 322

(1) Erachtet das Berufungsgericht die Vorschriften über die Einlegung der Berufung nicht für beobachtet, so kann es das Rechtsmittel durch Beschluß als unzulässig verwerfen. Andernfalls entscheidet es darüber durch Urteil; § 322a bleibt unberührt.
(2) Der Beschluß kann mit sofortiger Beschwerde angefochten werden.

§ 322a

Über die Annahme einer Berufung (§ 313) entscheidet das Berufungsgericht durch Beschluß. Die Entscheidung ist unanfechtbar. Der Beschluß, mit dem die Berufung angenommen wird, bedarf keiner Begründung.

§ 323

(1) Für die Vorbereitung der Hauptverhandlung gelten die Vorschriften der §§ 214 und 216 bis 225. In der Ladung ist der Angeklagte auf die Folgen des Ausbleibens ausdrücklich hinzuweisen.
(2) Die Ladung der im ersten Rechtszug vernommenen Zeugen und Sachverständigen kann nur dann unterbleiben, wenn ihre wiederholte Vernehmung zur Aufklärung der Sache nicht erforderlich erscheint. Sofern es erforderlich erscheint, ordnet das Berufungsgericht die Übertragung eines Tonbandmitschnitts einer Vernehmung gemäß § 273 Abs. 2 Satz 2 in ein schriftliches Protokoll an. Wer die Übertragung hergestellt hat, versieht die eigene Unterschrift mit dem Zusatz, dass die Richtigkeit der Übertragung bestätigt wird. Der Staatsanwaltschaft, dem Verteidiger und dem Angeklagten ist eine Abschrift des schriftlichen Protokolls zu erteilen. Der Nachweis der Unrichtigkeit der Übertragung ist

zulässig. Das schriftliche Protokoll kann nach Maßgabe des § 325 verlesen werden.

(3) Neue Beweismittel sind zulässig.

(4) Bei der Auswahl der zu ladenden Zeugen und Sachverständigen ist auf die von dem Angeklagten zur Rechtfertigung der Berufung benannten Personen Rücksicht zu nehmen.

§ 324

(1) Nachdem die Hauptverhandlung nach Vorschrift des § 243 Abs. 1 begonnen hat, hält ein Berichterstatter in Abwesenheit der Zeugen einen Vortrag über die Ergebnisse des bisherigen Verfahrens. Das Urteil des ersten Rechtszuges ist zu verlesen, soweit es für die Berufung von Bedeutung ist; von der Verlesung der Urteilsgründe kann abgesehen werden, soweit die Staatsanwaltschaft, der Verteidiger und der Angeklagte darauf verzichten.

(2) Sodann erfolgt die Vernehmung des Angeklagten und die Beweisaufnahme.

§ 325

Bei der Berichterstattung und der Beweisaufnahme können Schriftstücke verlesen werden; Protokolle über Aussagen der in der Hauptverhandlung des ersten Rechtszuges vernommenen Zeugen und Sachverständigen dürfen, abgesehen von den Fällen der §§ 251 und 253, ohne die Zustimmung der Staatsanwaltschaft und des Angeklagten nicht verlesen werden, wenn die wiederholte Vorladung der Zeugen oder Sachverständigen erfolgt ist oder von dem Angeklagten rechtzeitig vor der Hauptverhandlung beantragt worden war.

§ 326

Nach dem Schluß der Beweisaufnahme werden die Staatsanwaltschaft sowie der Angeklagte und sein Verteidiger mit ihren Ausführungen und Anträgen, und zwar der Beschwerdeführer zuerst, gehört. Dem Angeklagten gebührt das letzte Wort.

§ 327

Der Prüfung des Gerichts unterliegt das Urteil nur, soweit es angefochten ist.

§ 328

(1) Soweit die Berufung für begründet befunden wird, hat das Berufungsgericht unter Aufhebung des Urteils in der Sache selbst zu erkennen.

(2) Hat das Gericht des ersten Rechtszuges mit Unrecht seine Zuständigkeit angenommen, so hat das Berufungsgericht unter Aufhebung des Urteils die Sache an das zuständige Gericht zu verweisen.

§ 329

(1) Ist bei Beginn einer Hauptverhandlung weder der Angeklagte noch in den Fällen, in denen dies zulässig ist, ein Vertreter des Angeklagten erschienen und das Ausbleiben nicht genügend entschuldigt, so hat das Gericht eine Berufung des Angeklagten ohne Verhandlung zur Sache zu verwerfen. Dies gilt nicht, wenn das Berufungsgericht erneut verhandelt, nachdem die Sache vom Revisionsgericht zurückverwiesen worden ist. Ist die Verurteilung wegen einzelner von mehreren Taten weggefallen, so ist bei der Verwerfung der Berufung der Inhalt des aufrechterhaltenen Urteils klarzustellen; die erkannten Strafen können vom Berufungsgericht auf eine neue Gesamtstrafe zurückgeführt werden.

(2) Unter den Voraussetzungen des Absatzes 1 Satz 1 kann auf eine Berufung der Staatsanwaltschaft auch ohne den Angeklagten verhandelt werden. Eine Berufung der Staatsanwaltschaft kann in diesen Fällen auch ohne Zustimmung des Angeklagten zurückgenommen werden, es sei denn, daß die Voraussetzungen des Absatzes 1 Satz 2 vorliegen.

(3) Der Angeklagte kann binnen einer Woche nach der Zustellung des Urteils die Wiedereinsetzung in den vorigen Stand unter den in den §§ 44 und 45 bezeichneten Voraussetzungen beanspruchen.

(4) Sofern nicht nach Absatz 1 oder 2 verfahren wird, ist die Vorführung oder Verhaftung des Angeklagten anzuordnen. Hiervon ist abzusehen, wenn zu erwarten ist, daß er in der neu anzuberaumenden Hauptverhandlung ohne Zwangsmaßnahmen erscheinen wird.

§ 330

(1) Ist von dem gesetzlichen Vertreter die Berufung eingelegt worden, so hat das Gericht auch

den Angeklagten zu der Hauptverhandlung vorzuladen und kann ihn bei seinem Ausbleiben zwangsweise vorführen lassen.

(2) Bleibt allein der gesetzliche Vertreter in der Hauptverhandlung aus, so ist ohne ihn zu verhandeln. Ist weder der gesetzliche Vertreter noch der Angeklagte bei Beginn einer Hauptverhandlung erschienen, so gilt § 329 Abs. 1 entsprechend; ist lediglich der Angeklagte nicht erschienen, so gilt § 329 Abs. 2 Satz 1 entsprechend.

§ 331

(1) Das Urteil darf in Art und Höhe der Rechtsfolgen der Tat nicht zum Nachteil des Angeklagten geändert werden, wenn lediglich der Angeklagte, zu seinen Gunsten die Staatsanwaltschaft oder sein gesetzlicher Vertreter Berufung eingelegt hat.

(2) Diese Vorschrift steht der Anordnung der Unterbringung in einem psychiatrischen Krankenhaus oder einer Entziehungsanstalt nicht entgegen.

§ 332

Im übrigen gelten die im sechsten Abschnitt des zweiten Buches über die Hauptverhandlung gegebenen Vorschriften.

Vierter Abschnitt
Revision

§ 333

Gegen die Urteile der Strafkammern und der Schwurgerichte sowie gegen die im ersten Rechtszug ergangenen Urteile der Oberlandesgerichte ist Revision zulässig.

§ 334 (weggefallen)

§ 335

(1) Ein Urteil, gegen das Berufung zulässig ist, kann statt mit Berufung mit Revision

angefochten werden.

(2) Über die Revision entscheidet das Gericht, das zur Entscheidung berufen wäre, wenn die Revision nach durchgeführter Berufung eingelegt worden wäre.

(3) Legt gegen das Urteil ein Beteiligter Revision und ein anderer Berufung ein, so wird, solange die Berufung nicht zurückgenommen oder als unzulässig verworfen ist, die rechtzeitig und in der vorgeschriebenen Form eingelegte Revision als Berufung behandelt. Die Revisionsanträge und deren Begründung sind gleichwohl in der vorgeschriebenen Form und Frist anzubringen und dem Gegner zuzustellen (§§ 344 bis 347). Gegen das Berufungsurteil ist Revision nach den allgemein geltenden Vorschriften zulässig.

§ 336

Der Beurteilung des Revisionsgerichts unterliegen auch die Entscheidungen, die dem Urteil vorausgegangen sind, sofern es auf ihnen beruht. Dies gilt nicht für Entscheidungen, die ausdrücklich für unanfechtbar erklärt oder mit der sofortigen Beschwerde anfechtbar sind.

§ 337

(1) Die Revision kann nur darauf gestützt werden, daß das Urteil auf einer Verletzung des Gesetzes beruhe.

(2) Das Gesetz ist verletzt, wenn eine Rechtsnorm nicht oder nicht richtig angewendet worden ist.

§ 338

Ein Urteil ist stets als auf einer Verletzung des Gesetzes beruhend anzusehen,

1. wenn das erkennende Gericht nicht vorschriftsmäßig besetzt war; war nach § 222a die Mitteilung der Besetzung vorgeschrieben, so kann die Revision auf die vorschriftswidrige Besetzung nur gestützt werden, soweit
   a) die Vorschriften über die Mitteilung verletzt worden sind,
   b) der rechtzeitig und in der vorgeschriebenen Form geltend gemachte Einwand der vorschriftswidrigen Besetzung übergangen oder zurückgewiesen worden ist,
   c) die Hauptverhandlung nicht nach § 222a Abs. 2 zur Prüfung der Besetzung unterbrochen

worden ist oder

d) das Gericht in einer Besetzung entschieden hat, deren Vorschriftswidrigkeit es nach § 222b Abs. 2 Satz 2 festgestellt hat;

2. wenn bei dem Urteil ein Richter oder Schöffe mitgewirkt hat, der von der Ausübung des Richteramtes kraft Gesetzes ausgeschlossen war;
3. wenn bei dem Urteil ein Richter oder Schöffe mitgewirkt hat, nachdem er wegen Besorgnis der Befangenheit abgelehnt war und das Ablehnungsgesuch entweder für begründet erklärt war oder mit Unrecht verworfen worden ist;
4. wenn das Gericht seine Zuständigkeit mit Unrecht angenommen hat;
5. wenn die Hauptverhandlung in Abwesenheit der Staatsanwaltschaft oder einer Person, deren Anwesenheit das Gesetz vorschreibt, stattgefunden hat;
6. wenn das Urteil auf Grund einer mündlichen Verhandlung ergangen ist, bei der die Vorschriften über die Öffentlichkeit des Verfahrens verletzt sind;
7. wenn das Urteil keine Entscheidungsgründe enthält oder diese nicht innerhalb des sich aus § 275 Abs. 1 Satz 2 und 4 ergebenden Zeitraums zu den Akten gebracht worden sind;
8. wenn die Verteidigung in einem für die Entscheidung wesentlichen Punkt durch einen Beschluß des Gerichts unzulässig beschränkt worden ist.

§ 339

Die Verletzung von Rechtsnormen, die lediglich zugunsten des Angeklagten gegeben sind, kann von der Staatsanwaltschaft nicht zu dem Zweck geltend gemacht werden, um eine Aufhebung des Urteils zum Nachteil des Angeklagten herbeizuführen.

§ 340 (weggefallen)

§ 341

(1) Die Revision muß bei dem Gericht, dessen Urteil angefochten wird, binnen einer Woche nach Verkündung des Urteils zu Protokoll der Geschäftsstelle oder schriftlich eingelegt werden.

(2) Hat die Verkündung des Urteils nicht in Anwesenheit des Angeklagten stattgefunden, so beginnt für diesen die Frist mit der Zustellung, sofern nicht in den Fällen der §§ 234, 387 Abs. 1, § 411 Abs. 2 und § 434 Abs. 1 Satz 1 die Verkündung in Anwesenheit des mit schriftlicher Vollmacht versehenen Verteidigers stattgefunden hat.

§ 342

(1) Der Beginn der Frist zur Einlegung der Revision wird dadurch nicht ausgeschlossen, daß gegen ein auf Ausbleiben des Angeklagten ergangenes Urteil eine Wiedereinsetzung in den vorigen Stand nachgesucht werden kann.

(2) Stellt der Angeklagte einen Antrag auf Wiedereinsetzung in den vorigen Stand, so wird die Revision dadurch gewahrt, daß sie sofort für den Fall der Verwerfung jenes Antrags rechtzeitig eingelegt und begründet wird. Die weitere Verfügung in bezug auf die Revision bleibt dann bis zur Erledigung des Antrags auf Wiedereinsetzung in den vorigen Stand ausgesetzt.

(3) Die Einlegung der Revision ohne Verbindung mit dem Antrag auf Wiedereinsetzung in den vorigen Stand gilt als Verzicht auf die letztere.

§ 343

(1) Durch rechtzeitige Einlegung der Revision wird die Rechtskraft des Urteils, soweit es angefochten ist, gehemmt.

(2) Dem Beschwerdeführer, dem das Urteil mit den Gründen noch nicht zugestellt war, ist es nach Einlegung der Revision zuzustellen.

§ 344

(1) Der Beschwerdeführer hat die Erklärung abzugeben, inwieweit er das Urteil anfechte und dessen Aufhebung beantrage (Revisionsanträge), und die Anträge zu begründen.

(2) Aus der Begründung muß hervorgehen, ob das Urteil wegen Verletzung einer Rechtsnorm über das Verfahren oder wegen Verletzung einer anderen Rechtsnorm angefochten wird. Ersterenfalls müssen die den Mangel enthaltenden Tatsachen angegeben werden.

§ 345

(1) Die Revisionsanträge und ihre Begründung sind spätestens binnen eines Monats nach Ablauf der Frist zur Einlegung des Rechtsmittels bei dem Gericht, dessen Urteil angefochten wird, anzubringen. War zu dieser Zeit das Urteil noch nicht zugestellt, so beginnt die Frist mit der Zustellung.

(2) Seitens des Angeklagten kann dies nur in einer von dem Verteidiger oder einem Rechtsanwalt unterzeichneten Schrift oder zu Protokoll der Geschäftsstelle geschehen.

§ 346

(1) Ist die Revision verspätet eingelegt oder sind die Revisionsanträge nicht rechtzeitig oder nicht in der in § 345 Abs. 2 vorgeschriebenen Form angebracht worden, so hat das Gericht, dessen Urteil angefochten wird, das Rechtsmittel durch Beschluß als unzulässig zu verwerfen.

(2) Der Beschwerdeführer kann binnen einer Woche nach Zustellung des Beschlusses auf die Entscheidung des Revisionsgerichts antragen. In diesem Falle sind die Akten an das Revisionsgericht einzusenden; die Vollstreckung des Urteils wird jedoch hierdurch nicht gehemmt. Die Vorschrift des § 35a gilt entsprechend.

§ 347

(1) Ist die Revision rechtzeitig eingelegt und sind die Revisionsanträge rechtzeitig und in der vorgeschriebenen Form angebracht, so ist die Revisionsschrift dem Gegner des Beschwerdeführers zuzustellen. Diesem steht frei, binnen einer Woche eine schriftliche Gegenerklärung einzureichen. Der Angeklagte kann letztere auch zu Protokoll der Geschäftsstelle abgeben.

(2) Nach Eingang der Gegenerklärung oder nach Ablauf der Frist sendet die Staatsanwaltschaft die Akten an das Revisionsgericht.

§ 348

(1) Findet das Gericht, an das die Akten gesandt sind, daß die Verhandlung und Entscheidung

über das Rechtsmittel zur Zuständigkeit eines anderen Gerichts gehört, so hat es durch Beschluß seine Unzuständigkeit auszusprechen.

(2) Dieser Beschluß, in dem das zuständige Revisionsgericht zu bezeichnen ist, unterliegt keiner Anfechtung und ist für das in ihm bezeichnete Gericht bindend.

(3) Die Abgabe der Akten erfolgt durch die Staatsanwaltschaft.

§ 349

(1) Erachtet das Revisionsgericht die Vorschriften über die Einlegung der Revision oder die über die Anbringung der Revisionsanträge nicht für beobachtet, so kann es das Rechtsmittel durch Beschluß als unzulässig verwerfen.

(2) Das Revisionsgericht kann auf einen Antrag der Staatsanwaltschaft, der zu begründen ist, auch dann durch Beschluß entscheiden, wenn es die Revision einstimmig für offensichtlich unbegründet erachtet.

(3) Die Staatsanwaltschaft teilt den Antrag nach Absatz 2 mit den Gründen dem Beschwerdeführer mit. Der Beschwerdeführer kann binnen zwei Wochen eine schriftliche Gegenerklärung beim Revisionsgericht einreichen.

(4) Erachtet das Revisionsgericht die zugunsten des Angeklagten eingelegte Revision einstimmig für begründet, so kann es das angefochtene Urteil durch Beschluß aufheben.

(5) Wendet das Revisionsgericht Absatz 1, 2 oder 4 nicht an, so entscheidet es über das Rechtsmittel durch Urteil.

§ 350

(1) Dem Angeklagten und dem Verteidiger sind Ort und Zeit der Hauptverhandlung mitzuteilen. Ist die Mitteilung an den Angeklagten nicht ausführbar, so genügt die Benachrichtigung des Verteidigers.

(2) Der Angeklagte kann in der Hauptverhandlung erscheinen oder sich durch einen mit schriftlicher Vollmacht versehenen Verteidiger vertreten lassen. Der Angeklagte, der nicht auf freiem Fuße ist, hat keinen Anspruch auf Anwesenheit.

(3) Hat der Angeklagte, der nicht auf freiem Fuße ist, keinen Verteidiger gewählt, so wird

ihm, falls er zu der Hauptverhandlung nicht vorgeführt wird, auf seinen Antrag vom Vorsitzenden ein Verteidiger für die Hauptverhandlung bestellt. Der Antrag ist binnen einer Woche zu stellen, nachdem dem Angeklagten der Termin für die Hauptverhandlung unter Hinweis auf sein Recht, die Bestellung eines Verteidigers zu beantragen, mitgeteilt worden ist.

§ 351

(1) Die Hauptverhandlung beginnt mit dem Vortrag eines Berichterstatters.

(2) Hierauf werden die Staatsanwaltschaft sowie der Angeklagte und sein Verteidiger mit ihren Ausführungen und Anträgen, und zwar der Beschwerdeführer zuerst, gehört. Dem Angeklagten gebührt das letzte Wort.

§ 352

(1) Der Prüfung des Revisionsgerichts unterliegen nur die gestellten Revisionsanträge und, soweit die Revision auf Mängel des Verfahrens gestützt wird, nur die Tatsachen, die bei Anbringung der Revisionsanträge bezeichnet worden sind.

(2) Eine weitere Begründung der Revisionsanträge als die in § 344 Abs. 2 vorgeschriebene ist nicht erforderlich und, wenn sie unrichtig ist, unschädlich.

§ 353

(1) Soweit die Revision für begründet erachtet wird, ist das angefochtene Urteil aufzuheben.

(2) Gleichzeitig sind die dem Urteil zugrunde liegenden Feststellungen aufzuheben, sofern sie durch die Gesetzesverletzung betroffen werden, wegen deren das Urteil aufgehoben wird.

§ 354

(1) Erfolgt die Aufhebung des Urteils nur wegen Gesetzesverletzung bei Anwendung des Gesetzes auf die dem Urteil zugrunde liegenden Feststellungen, so hat das Revisionsgericht in der Sache selbst zu entscheiden, sofern ohne weitere tatsächliche Erörterungen nur auf Freisprechung oder auf Einstellung oder auf eine absolut bestimmte Strafe zu erkennen ist

oder das Revisionsgericht in Übereinstimmung mit dem Antrag der Staatsanwaltschaft die gesetzlich niedrigste Strafe oder das Absehen von Strafe für angemessen erachtet.

(1a) Wegen einer Gesetzesverletzung nur bei Zumessung der Rechtsfolgen kann das Revisionsgericht von der Aufhebung des angefochtenen Urteils absehen, sofern die verhängte Rechtsfolge angemessen ist. Auf Antrag der Staatsanwaltschaft kann es die Rechtsfolgen angemessen herabsetzen.

(1b) Hebt das Revisionsgericht das Urteil nur wegen Gesetzesverletzung bei Bildung einer Gesamtstrafe (§§ 53, 54, 55 des Strafgesetzbuches) auf, kann dies mit der Maßgabe geschehen, dass eine nachträgliche gerichtliche Entscheidung über die Gesamtstrafe nach den §§ 460, 462 zu treffen ist. Entscheidet das Revisionsgericht nach Absatz 1 oder Absatz 1a hinsichtlich einer Einzelstrafe selbst, gilt Satz 1 entsprechend. Die Absätze 1 und 1a bleiben im Übrigen unberührt.

(2) In anderen Fällen ist die Sache an eine andere Abteilung oder Kammer des Gerichtes, dessen Urteil aufgehoben wird, oder an ein zu demselben Land gehörendes anderes Gericht gleicher Ordnung zurückzuverweisen. In Verfahren, in denen ein Oberlandesgericht im ersten Rechtszug entschieden hat, ist die Sache an einen anderen Senat dieses Gerichts zurückzuverweisen.

(3) Die Zurückverweisung kann an ein Gericht niederer Ordnung erfolgen, wenn die noch in Frage kommende strafbare Handlung zu dessen Zuständigkeit gehört.

§ 354a

Das Revisionsgericht hat auch dann nach § 354 zu verfahren, wenn es das Urteil aufhebt, weil zur Zeit der Entscheidung des Revisionsgerichts ein anderes Gesetz gilt als zur Zeit des Erlasses der angefochtenen Entscheidung.

§ 355

Wird ein Urteil aufgehoben, weil das Gericht des vorangehenden Rechtszuges sich mit Unrecht für zuständig erachtet hat, so verweist das Revisionsgericht gleichzeitig die Sache an das zuständige Gericht.

§ 356

Die Verkündung des Urteils erfolgt nach Maßgabe des § 268.

§ 356a

Hat das Gericht bei einer Revisionsentscheidung den Anspruch eines Beteiligten auf rechtliches Gehör in entscheidungserheblicher Weise verletzt, versetzt es insoweit auf Antrag das Verfahren durch Beschluss in die Lage zurück, die vor dem Erlass der Entscheidung bestand. Der Antrag ist binnen einer Woche nach Kenntnis von der Verletzung des rechtlichen Gehörs schriftlich oder zu Protokoll der Geschäftsstelle beim Revisionsgericht zu stellen und zu begründen. Der Zeitpunkt der Kenntniserlangung ist glaubhaft zu machen. § 47 gilt entsprechend.

§ 357

Erfolgt zugunsten eines Angeklagten die Aufhebung des Urteils wegen Gesetzesverletzung bei Anwendung des Strafgesetzes und erstreckt sich das Urteil, soweit es aufgehoben wird, noch auf andere Angeklagte, die nicht Revision eingelegt haben, so ist zu erkennen, als ob sie gleichfalls Revision eingelegt hätten. § 47 Abs. 3 gilt entsprechend.

§ 358

(1) Das Gericht, an das die Sache zur anderweiten Verhandlung und Entscheidung verwiesen ist, hat die rechtliche Beurteilung, die der Aufhebung des Urteils zugrunde gelegt ist, auch seiner Entscheidung zugrunde zu legen.

(2) Das angefochtene Urteil darf in Art und Höhe der Rechtsfolgen der Tat nicht zum Nachteil des Angeklagten geändert werden, wenn lediglich der Angeklagte, zu seinen Gunsten die Staatsanwaltschaft oder sein gesetzlicher Vertreter Revision eingelegt hat. Wird die Anordnung der Unterbringung in einem psychiatrischen Krankenhaus aufgehoben, hindert diese Vorschrift nicht, an Stelle der Unterbringung eine Strafe zu verhängen. Satz 1 steht auch nicht der Anordnung der Unterbringung in einem psychiatrischen Krankenhaus oder einer Entziehungsanstalt entgegen.

Viertes Buch
Wiederaufnahme eines durch rechtskräftiges Urteil abgeschlossenen Verfahrens

§ 359

Die Wiederaufnahme eines durch rechtskräftiges Urteil abgeschlossenen Verfahrens zugunsten des Verurteilten ist zulässig,

1. wenn eine in der Hauptverhandlung zu seinen Ungunsten als echt vorgebrachte Urkunde unecht oder verfälscht war;
2. wenn der Zeuge oder Sachverständige sich bei einem zuungunsten des Verurteilten abgelegten Zeugnis oder abgegebenen Gutachten einer vorsätzlichen oder fahrlässigen Verletzung der Eidespflicht oder einer vorsätzlichen falschen uneidlichen Aussage schuldig gemacht hat;
3. wenn bei dem Urteil ein Richter oder Schöffe mitgewirkt hat, der sich in Beziehung auf die Sache einer strafbaren Verletzung seiner Amtspflichten schuldig gemacht hat, sofern die Verletzung nicht vom Verurteilten selbst veranlaßt ist;
4. wenn ein zivilgerichtliches Urteil, auf welches das Strafurteil gegründet ist, durch ein anderes rechtskräftig gewordenes Urteil aufgehoben ist;
5. wenn neue Tatsachen oder Beweismittel beigebracht sind, die allein oder in Verbindung mit den früher erhobenen Beweisen die Freisprechung des Angeklagten oder in Anwendung eines milderen Strafgesetzes eine geringere Bestrafung oder eine wesentlich andere Entscheidung über eine Maßregel der Besserung und Sicherung zu begründen geeignet sind,
6. wenn der Europäische Gerichtshof für Menschenrechte eine Verletzung der Europäischen Konvention zum Schutze der Menschenrechte und Grundfreiheiten oder ihrer Protokolle festgestellt hat und das Urteil auf dieser Verletzung beruht.

§ 360

(1) Durch den Antrag auf Wiederaufnahme des Verfahrens wird die Vollstreckung des Urteils nicht gehemmt.

(2) Das Gericht kann jedoch einen Aufschub sowie eine Unterbrechung der Vollstreckung anordnen.

§ 361

(1) Der Antrag auf Wiederaufnahme des Verfahrens wird weder durch die erfolgte Strafvollstreckung noch durch den Tod des Verurteilten ausgeschlossen.

(2) Im Falle des Todes sind der Ehegatte, der Lebenspartner, die Verwandten auf- und absteigender Linie sowie die Geschwister des Verstorbenen zu dem Antrag befugt.

§ 362

Die Wiederaufnahme eines durch rechtskräftiges Urteil abgeschlossenen Verfahrens zuungunsten des Angeklagten ist zulässig,

1. wenn eine in der Hauptverhandlung zu seinen Gunsten als echt vorgebrachte Urkunde unecht oder verfälscht war;
2. wenn der Zeuge oder Sachverständige sich bei einem zugunsten des Angeklagten abgelegten Zeugnis oder abgegebenen Gutachten einer vorsätzlichen oder fahrlässigen Verletzung der Eidespflicht oder einer vorsätzlichen falschen uneidlichen Aussage schuldig gemacht hat;
3. wenn bei dem Urteil ein Richter oder Schöffe mitgewirkt hat, der sich in Beziehung auf die Sache einer strafbaren Verletzung seiner Amtspflichten schuldig gemacht hat;
4. wenn von dem Freigesprochenen vor Gericht oder außergerichtlich ein glaubwürdiges Geständnis der Straftat abgelegt wird.

§ 363

(1) Eine Wiederaufnahme des Verfahrens zu dem Zweck, eine andere Strafbemessung auf Grund desselben Strafgesetzes herbeizuführen, ist nicht zulässig.

(2) Eine Wiederaufnahme des Verfahrens zu dem Zweck, eine Milderung der Strafe wegen verminderter Schuldfähigkeit (§ 21 des Strafgesetzbuches) herbeizuführen, ist gleichfalls ausgeschlossen.

§ 364

Ein Antrag auf Wiederaufnahme des Verfahrens, der auf die Behauptung einer Straftat gegründet werden soll, ist nur dann zulässig, wenn wegen dieser Tat eine rechtskräftige Verurteilung ergangen ist oder wenn die Einleitung oder Durchführung eines Strafverfahrens aus anderen Gründen als wegen Mangels an Beweis nicht erfolgen kann. Dies gilt nicht im Falle des § 359 Nr. 5.

§ 364a

Das für die Entscheidungen im Wiederaufnahmeverfahren zuständige Gericht bestellt dem Verurteilten, der keinen Verteidiger hat, auf Antrag einen Verteidiger für das Wiederaufnahmeverfahren, wenn wegen der Schwierigkeit der Sach- oder Rechtslage die Mitwirkung eines Verteidigers geboten erscheint.

§ 364b

(1) Das für die Entscheidungen im Wiederaufnahmeverfahren zuständige Gericht bestellt dem Verurteilten, der keinen Verteidiger hat, auf Antrag einen Verteidiger schon für die Vorbereitung eines Wiederaufnahmeverfahrens, wenn

1. hinreichende tatsächliche Anhaltspunkte dafür vorliegen, daß bestimmte Nachforschungen zu Tatsachen oder Beweismitteln führen, welche die Zulässigkeit eines Antrags auf Wiederaufnahme des Verfahrens begründen können,
2. wegen der Schwierigkeit der Sach- oder Rechtslage die Mitwirkung eines Verteidigers geboten erscheint und
3. der Verurteilte außerstande ist, ohne Beeinträchtigung des für ihn und seine Familie notwendigen Unterhalts auf eigene Kosten einen Verteidiger zu beauftragen.

Ist dem Verurteilten bereits ein Verteidiger bestellt, so stellt das Gericht auf Antrag durch Beschluß fest, daß die Voraussetzungen der Nummern 1 bis 3 des Satzes 1 vorliegen.

(2) Für das Verfahren zur Feststellung der Voraussetzungen des Absatzes 1 Satz 1 Nr. 3 gelten § 117 Abs. 2 bis 4 und § 118 Abs. 2 Satz 1, 2 und 4 der Zivilprozeßordnung entsprechend.

§ 365

Die allgemeinen Vorschriften über Rechtsmittel gelten auch für den Antrag auf Wiederaufnahme des Verfahrens.

§ 366

(1) In dem Antrag müssen der gesetzliche Grund der Wiederaufnahme des Verfahrens sowie die Beweismittel angegeben werden.

(2) Von dem Angeklagten und den in § 361 Abs. 2 bezeichneten Personen kann der Antrag nur mittels einer von dem Verteidiger oder einem Rechtsanwalt unterzeichneten Schrift oder zu Protokoll der Geschäftsstelle angebracht werden.

§ 367

(1) Die Zuständigkeit des Gerichts für die Entscheidungen im Wiederaufnahmeverfahren und über den Antrag zur Vorbereitung eines Wiederaufnahmeverfahrens richtet sich nach den besonderen Vorschriften des Gerichtsverfassungsgesetzes. Der Verurteilte kann Anträge nach den §§ 364a und 364b oder einen Antrag auf Zulassung der Wiederaufnahme des Verfahrens auch bei dem Gericht einreichen, dessen Urteil angefochten wird; dieses leitet den Antrag dem zuständigen Gericht zu.

(2) Die Entscheidungen über Anträge nach den §§ 364a und 364b und den Antrag auf Zulassung der Wiederaufnahme des Verfahrens ergehen ohne mündliche Verhandlung.

§ 368

(1) Ist der Antrag nicht in der vorgeschriebenen Form angebracht oder ist darin kein gesetzlicher Grund der Wiederaufnahme geltend gemacht oder kein geeignetes Beweismittel angeführt, so ist der Antrag als unzulässig zu verwerfen.

(2) Andernfalls ist er dem Gegner des Antragstellers unter Bestimmung einer Frist zur Erklärung zuzustellen.

§ 369

(1) Wird der Antrag für zulässig befunden, so beauftragt das Gericht mit der Aufnahme der angetretenen Beweise, soweit dies erforderlich ist, einen Richter.

(2) Dem Ermessen des Gerichts bleibt es überlassen, ob die Zeugen und Sachverständigen eidlich vernommen werden sollen.

(3) Bei der Vernehmung eines Zeugen oder Sachverständigen und bei der Einnahme eines richterlichen Augenscheins ist der Staatsanwaltschaft, dem Angeklagten und dem Verteidiger die Anwesenheit zu gestatten. § 168c Abs. 3, § 224 Abs. 1 und § 225 gelten entsprechend. Befindet sich der Angeklagte nicht auf freiem Fuß, so hat er keinen Anspruch auf Anwesenheit, wenn der Termin nicht an der Gerichtsstelle des Ortes abgehalten wird, wo er sich in Haft befindet, und seine Mitwirkung der mit der Beweiserhebung bezweckten Klärung nicht dienlich ist.

(4) Nach Schluß der Beweisaufnahme sind die Staatsanwaltschaft und der Angeklagte unter Bestimmung einer Frist zu weiterer Erklärung aufzufordern.

§ 370

(1) Der Antrag auf Wiederaufnahme des Verfahrens wird ohne mündliche Verhandlung als unbegründet verworfen, wenn die darin aufgestellten Behauptungen keine genügende Bestätigung gefunden haben oder wenn in den Fällen des § 359 Nr. 1 und 2 oder des § 362 Nr. 1 und 2 nach Lage der Sache die Annahme ausgeschlossen ist, daß die in diesen Vorschriften bezeichnete Handlung auf die Entscheidung Einfluß gehabt hat.

(2) Andernfalls ordnet das Gericht die Wiederaufnahme des Verfahrens und die Erneuerung der Hauptverhandlung an.

§ 371

(1) Ist der Verurteilte bereits verstorben, so hat ohne Erneuerung der Hauptverhandlung das Gericht nach Aufnahme des etwa noch erforderlichen Beweises entweder auf Freisprechung zu erkennen oder den Antrag auf Wiederaufnahme abzulehnen.

(2) Auch in anderen Fällen kann das Gericht, bei öffentlichen Klagen jedoch nur mit

Zustimmung der Staatsanwaltschaft, den Verurteilten sofort freisprechen, wenn dazu genügende Beweise bereits vorliegen.

(3) Mit der Freisprechung ist die Aufhebung des früheren Urteils zu verbinden. War lediglich auf eine Maßregel der Besserung und Sicherung erkannt, so tritt an die Stelle der Freisprechung die Aufhebung des früheren Urteils.

(4) Die Aufhebung ist auf Verlangen des Antragstellers im elektronischen Bundesanzeiger bekannt zu machen und kann nach dem Ermessen des Gerichts auch auf andere geeignete Weise veröffentlicht werden.

§ 372

Alle Entscheidungen, die aus Anlaß eines Antrags auf Wiederaufnahme des Verfahrens von dem Gericht im ersten Rechtszug erlassen werden, können mit sofortiger Beschwerde angefochten werden. Der Beschluß, durch den das Gericht die Wiederaufnahme des Verfahrens und die Erneuerung der Hauptverhandlung anordnet, kann von der Staatsanwaltschaft nicht angefochten werden.

§ 373

(1) In der erneuten Hauptverhandlung ist entweder das frühere Urteil aufrechtzuerhalten oder unter seiner Aufhebung anderweit in der Sache zu erkennen.

(2) Das frühere Urteil darf in Art und Höhe der Rechtsfolgen der Tat nicht zum Nachteil des Verurteilten geändert werden, wenn lediglich der Verurteilte, zu seinen Gunsten die Staatsanwaltschaft oder sein gesetzlicher Vertreter die Wiederaufnahme des Verfahrens beantragt hat. Diese Vorschrift steht der Anordnung der Unterbringung in einem psychiatrischen Krankenhaus oder einer Entziehungsanstalt nicht entgegen.

§ 373a

(1) Die Wiederaufnahme eines durch rechtskräftigen Strafbefehl abgeschlossenen Verfahrens zuungunsten des Verurteilten ist auch zulässig, wenn neue Tatsachen oder Beweismittel beigebracht sind, die allein oder in Verbindung mit den früheren Beweisen geeignet sind, die Verurteilung wegen eines Verbrechens zu begründen.

(2) Im übrigen gelten für die Wiederaufnahme eines durch rechtskräftigen Strafbefehl abgeschlossenen Verfahrens die §§ 359 bis 373 entsprechend.

Fünftes Buch
Beteiligung des Verletzten am Verfahren

Erster Abschnitt
Privatklage

§ 374

(1) Im Wege der Privatklage können vom Verletzten verfolgt werden, ohne daß es einer vorgängigen Anrufung der Staatsanwaltschaft bedarf,

1. ein Hausfriedensbruch (§ 123 des Strafgesetzbuches),
2. eine Beleidigung (§§ 185 bis 189 des Strafgesetzbuches), wenn sie nicht gegen eine der in § 194 Abs. 4 des Strafgesetzbuches genannten politischen Körperschaften gerichtet ist,
3. eine Verletzung des Briefgeheimnisses (§ 202 des Strafgesetzbuches),
4. eine Körperverletzung (§§ 223 und 229 des Strafgesetzbuches),
5. eine Nachstellung (§ 238 Abs. 1 des Strafgesetzbuches) oder eine Bedrohung (§ 241 des Strafgesetzbuches),

5a. eine Bestechlichkeit oder Bestechung im geschäftlichen Verkehr (§ 299 des Strafgesetzbuches),

6. eine Sachbeschädigung (§ 303 des Strafgesetzbuches),

6a. eine Straftat nach § 323a des Strafgesetzbuches, wenn die im Rausch begangene Tat ein in den Nummern 1 bis 6 genanntes Vergehen ist,

7. eine Straftat nach den §§ 16 bis 19 des Gesetzes gegen den unlauteren Wettbewerb,
8. eine Straftat nach § 142 Abs. 1 des Patentgesetzes, § 25 Abs. 1 des Gebrauchsmustergesetzes, § 10 Abs. 1 des Halbleiterschutzgesetzes, § 39 Abs. 1 des Sortenschutzgesetzes, § 143 Abs. 1, § 143a Abs. 1 und § 144 Abs. 1 und 2 des Markengesetzes, § 51 Abs. 1 und § 65 Abs.

1 des Geschmacksmustergesetzes, den §§ 106 bis 108 sowie § 108b Abs. 1 und 2 des Urheberrechtsgesetzes und § 33 des Gesetzes betreffend das Urheberrecht an Werken der bildenden Künste und der Photographie.

(2) Die Privatklage kann auch erheben, wer neben dem Verletzten oder an seiner Stelle berechtigt ist, Strafantrag zu stellen. Die in § 77 Abs. 2 des Strafgesetzbuches genannten Personen können die Privatklage auch dann erheben, wenn der vor ihnen Berechtigte den Strafantrag gestellt hat.

(3) Hat der Verletzte einen gesetzlichen Vertreter, so wird die Befugnis zur Erhebung der Privatklage durch diesen und, wenn Körperschaften, Gesellschaften und andere Personenvereine, die als solche in bürgerlichen Rechtsstreitigkeiten klagen können, die Verletzten sind, durch dieselben Personen wahrgenommen, durch die sie in bürgerlichen Rechtsstreitigkeiten vertreten werden.

§ 375

(1) Sind wegen derselben Straftat mehrere Personen zur Privatklage berechtigt, so ist bei Ausübung dieses Rechts ein jeder von dem anderen unabhängig.

(2) Hat jedoch einer der Berechtigten die Privatklage erhoben, so steht den übrigen nur der Beitritt zu dem eingeleiteten Verfahren, und zwar in der Lage zu, in der es sich zur Zeit der Beitrittserklärung befindet.

(3) Jede in der Sache selbst ergangene Entscheidung äußert zugunsten des Beschuldigten ihre Wirkung auch gegenüber solchen Berechtigten, welche die Privatklage nicht erhoben haben.

§ 376

Die öffentliche Klage wird wegen der in § 374 bezeichneten Straftaten von der Staatsanwaltschaft nur dann erhoben, wenn dies im öffentlichen Interesse liegt.

§ 377

(1) Im Privatklageverfahren ist der Staatsanwalt zu einer Mitwirkung nicht verpflichtet. Das Gericht legt ihm die Akten vor, wenn es die Übernahme der Verfolgung durch ihn für

geboten hält.

(2) Auch kann die Staatsanwaltschaft in jeder Lage der Sache bis zum Eintritt der Rechtskraft des Urteils durch eine ausdrückliche Erklärung die Verfolgung übernehmen. In der Einlegung eines Rechtsmittels ist die Übernahme der Verfolgung enthalten.

§ 378

Der Privatkläger kann im Beistand eines Rechtsanwalts erscheinen oder sich durch einen mit schriftlicher Vollmacht versehenen Rechtsanwalt vertreten lassen. Im letzteren Falle können die Zustellungen an den Privatkläger mit rechtlicher Wirkung an den Anwalt erfolgen.

§ 379

(1) Der Privatkläger hat für die dem Beschuldigten voraussichtlich erwachsenden Kosten unter denselben Voraussetzungen Sicherheit zu leisten, unter denen in bürgerlichen Rechtsstreitigkeiten der Kläger auf Verlangen des Beklagten Sicherheit wegen der Prozeßkosten zu leisten hat.

(2) Die Sicherheitsleistung ist durch Hinterlegung in barem Geld oder in Wertpapieren zu bewirken. Davon abweichende Regelungen in einer auf Grund des Gesetzes über den Zahlungsverkehr mit Gerichten und Justizbehörden erlassenen Rechtsverordnung bleiben unberührt.

(3) Für die Höhe der Sicherheit und die Frist zu ihrer Leistung sowie für die Prozeßkostenhilfe gelten dieselben Vorschriften wie in bürgerlichen Rechtsstreitigkeiten.

§ 379a

(1) Zur Zahlung des Gebührenvorschusses nach § 16 Abs. 1 des Gerichtskostengesetzes soll, sofern nicht dem Privatkläger die Prozeßkostenhilfe bewilligt ist oder Gebührenfreiheit zusteht, vom Gericht eine Frist bestimmt werden; hierbei soll auf die nach Absatz 3 eintretenden Folgen hingewiesen werden.

(2) Vor Zahlung des Vorschusses soll keine gerichtliche Handlung vorgenommen werden, es sei denn, daß glaubhaft gemacht wird, daß die Verzögerung dem Privatkläger einen nicht

oder nur schwer zu ersetzenden Nachteil bringen würde.

(3) Nach fruchtlosem Ablauf der nach Absatz 1 gestellten Frist wird die Privatklage zurückgewiesen. Der Beschluß kann mit sofortiger Beschwerde angefochten werden. Er ist von dem Gericht, das ihn erlassen hat, von Amts wegen aufzuheben, wenn sich herausstellt, daß die Zahlung innerhalb der gesetzten Frist eingegangen ist.

§ 380

(1) Wegen Hausfriedensbruchs, Beleidigung, Verletzung des Briefgeheimnisses, Körperverletzung (§§ 223 und 229 des Strafgesetzbuches), Bedrohung und Sachbeschädigung ist die Erhebung der Klage erst zulässig, nachdem von einer durch die Landesjustizverwaltung zu bezeichnenden Vergleichsbehörde die Sühne erfolglos versucht worden ist. Gleiches gilt wegen einer Straftat nach § 323a des Strafgesetzbuches, wenn die im Rausch begangene Tat ein in Satz 1 genanntes Vergehen ist. Der Kläger hat die Bescheinigung hierüber mit der Klage einzureichen.

(2) Die Landesjustizverwaltung kann bestimmen, daß die Vergleichsbehörde ihre Tätigkeit von der Einzahlung eines angemessenen Kostenvorschusses abhängig machen darf.

(3) Die Vorschriften der Absätze 1 und 2 gelten nicht, wenn der amtliche Vorgesetzte nach § 194 Abs. 3 oder § 230 Abs. 2 des Strafgesetzbuches befugt ist, Strafantrag zu stellen.

(4) Wohnen die Parteien nicht in demselben Gemeindebezirk, so kann nach näherer Anordnung der Landesjustizverwaltung von einem Sühneversuch abgesehen werden.

§ 381

Die Erhebung der Klage geschieht zu Protokoll der Geschäftsstelle oder durch Einreichung einer Anklageschrift. Die Klage muß den in § 200 Abs. 1 bezeichneten Erfordernissen entsprechen. Mit der Anklageschrift sind zwei Abschriften einzureichen.

§ 382

Ist die Klage vorschriftsmäßig erhoben, so teilt das Gericht sie dem Beschuldigten unter Bestimmung einer Frist zur Erklärung mit.

§ 383

(1) Nach Eingang der Erklärung des Beschuldigten oder Ablauf der Frist entscheidet das Gericht darüber, ob das Hauptverfahren zu eröffnen oder die Klage zurückzuweisen ist, nach Maßgabe der Vorschriften, die bei einer von der Staatsanwaltschaft unmittelbar erhobenen Anklage anzuwenden sind. In dem Beschluß, durch den das Hauptverfahren eröffnet wird, bezeichnet das Gericht den Angeklagten und die Tat gemäß § 200 Abs. 1 Satz 1.

(2) Ist die Schuld des Täters gering, so kann das Gericht das Verfahren einstellen. Die Einstellung ist auch noch in der Hauptverhandlung zulässig. Der Beschluß kann mit sofortiger Beschwerde angefochten werden.

§ 384

(1) Das weitere Verfahren richtet sich nach den Vorschriften, die für das Verfahren auf erhobene öffentliche Klage gegeben sind. Jedoch dürfen Maßregeln der Besserung und Sicherung nicht angeordnet werden.

(2) § 243 ist mit der Maßgabe anzuwenden, daß der Vorsitzende den Beschluß über die Eröffnung des Hauptverfahrens verliest.

(3) Das Gericht bestimmt unbeschadet des § 244 Abs. 2 den Umfang der Beweisaufnahme.

(4) Die Vorschrift des § 265 Abs. 3 über das Recht, die Aussetzung der Hauptverhandlung zu verlangen, ist nicht anzuwenden.

(5) Vor dem Schwurgericht kann eine Privatklagesache nicht gleichzeitig mit einer auf öffentliche Klage anhängig gemachten Sache verhandelt werden.

§ 385

(1) Soweit in dem Verfahren auf erhobene öffentliche Klage die Staatsanwaltschaft zuzuziehen und zu hören ist, wird in dem Verfahren auf erhobene Privatklage der Privatkläger zugezogen und gehört. Alle Entscheidungen, die dort der Staatsanwaltschaft bekanntgemacht werden, sind hier dem Privatkläger bekanntzugeben.

(2) Zwischen der Zustellung der Ladung des Privatklägers zur Hauptverhandlung und dem Tag

der letzteren muß eine Frist von mindestens einer Woche liegen.

(3) Das Recht der Akteneinsicht kann der Privatkläger nur durch einen Anwalt ausüben. § 147 Abs. 4 und 7 sowie § 477 Abs. 5 gelten entsprechend.

(4) In den Fällen der §§ 154a und 430 ist deren Absatz 3 Satz 2 nicht anzuwenden.

(5) Im Revisionsverfahren ist ein Antrag des Privatklägers nach § 349 Abs. 2 nicht erforderlich. § 349 Abs. 3 ist nicht anzuwenden.

§ 386

(1) Der Vorsitzende des Gerichts bestimmt, welche Personen als Zeugen oder Sachverständige zur Hauptverhandlung geladen werden sollen.

(2) Dem Privatkläger wie dem Angeklagten steht das Recht der unmittelbaren Ladung zu.

§ 387

(1) In der Hauptverhandlung kann auch der Angeklagte im Beistand eines Rechtsanwalts erscheinen oder sich auf Grund einer schriftlichen Vollmacht durch einen solchen vertreten lassen.

(2) Die Vorschrift des § 139 gilt für den Anwalt des Klägers und für den des Angeklagten.

(3) Das Gericht ist befugt, das persönliche Erscheinen des Klägers sowie des Angeklagten anzuordnen, auch den Angeklagten vorführen zu lassen.

§ 388

(1) Hat der Verletzte die Privatklage erhoben, so kann der Beschuldigte bis zur Beendigung des letzten Wortes (§ 258 Abs. 2 Halbsatz 2) im ersten Rechtszug mittels einer Widerklage die Bestrafung des Klägers beantragen, wenn er von diesem gleichfalls durch eine Straftat verletzt worden ist, die im Wege der Privatklage verfolgt werden kann und mit der den Gegenstand der Klage bildenden Straftat in Zusammenhang steht.

(2) Ist der Kläger nicht der Verletzte (§ 374 Abs. 2), so kann der Beschuldigte die Widerklage gegen den Verletzten erheben. In diesem Falle bedarf es der Zustellung der

Widerklage an den Verletzten und dessen Ladung zur Hauptverhandlung, sofern die Widerklage nicht in der Hauptverhandlung in Anwesenheit des Verletzten erhoben wird.

(3) Über Klage und Widerklage ist gleichzeitig zu erkennen.

(4) Die Zurücknahme der Klage ist auf das Verfahren über die Widerklage ohne Einfluß.

§ 389

(1) Findet das Gericht nach verhandelter Sache, daß die für festgestellt zu erachtenden Tatsachen eine Straftat darstellen, auf die das in diesem Abschnitt vorgeschriebene Verfahren nicht anzuwenden ist, so hat es durch Urteil, das diese Tatsachen hervorheben muß, die Einstellung des Verfahrens auszusprechen.

(2) Die Verhandlungen sind in diesem Falle der Staatsanwaltschaft mitzuteilen.

§ 390

(1) Dem Privatkläger stehen die Rechtsmittel zu, die in dem Verfahren auf erhobene öffentliche Klage der Staatsanwaltschaft zustehen. Dasselbe gilt von dem Antrag auf Wiederaufnahme des Verfahrens in den Fällen des § 362. Die Vorschrift des § 301 ist auf das Rechtsmittel des Privatklägers anzuwenden.

(2) Revisionsanträge und Anträge auf Wiederaufnahme des durch ein rechtskräftiges Urteil abgeschlossenen Verfahrens kann der Privatkläger nur mittels einer von einem Rechtsanwalt unterzeichneten Schrift anbringen.

(3) Die in den §§ 320, 321 und 347 angeordnete Vorlage und Einsendung der Akten erfolgt wie im Verfahren auf erhobene öffentliche Klage an und durch die Staatsanwaltschaft. Die Zustellung der Berufungs- und Revisionsschriften an den Gegner des Beschwerdeführers wird durch die Geschäftsstelle bewirkt.

(4) Die Vorschrift des § 379a über die Zahlung des Gebührenvorschusses und die Folgen nicht rechtzeitiger Zahlung gilt entsprechend.

(5) Die Vorschrift des § 383 Abs. 2 Satz 1 und 2 über die Einstellung wegen Geringfügigkeit gilt auch im Berufungsverfahren. Der Beschluß ist nicht anfechtbar.

§ 391

(1) Die Privatklage kann in jeder Lage des Verfahrens zurückgenommen werden. Nach Beginn der Vernehmung des Angeklagten zur Sache in der Hauptverhandlung des ersten Rechtszuges bedarf die Zurücknahme der Zustimmung des Angeklagten.

(2) Als Zurücknahme gilt es im Verfahren des ersten Rechtszuges und, soweit der Angeklagte die Berufung eingelegt hat, im Verfahren des zweiten Rechtszuges, wenn der Privatkläger in der Hauptverhandlung weder erscheint noch durch einen Rechtsanwalt vertreten wird oder in der Hauptverhandlung oder einem anderen Termin ausbleibt, obwohl das Gericht sein persönliches Erscheinen angeordnet hatte, oder eine Frist nicht einhält, die ihm unter Androhung der Einstellung des Verfahrens gesetzt war.

(3) Soweit der Privatkläger die Berufung eingelegt hat, ist sie im Falle der vorbezeichneten Versäumungen unbeschadet der Vorschrift des § 301 sofort zu verwerfen.

(4) Der Privatkläger kann binnen einer Woche nach der Versäumung die Wiedereinsetzung in den vorigen Stand unter den in den §§ 44 und 45 bezeichneten Voraussetzungen beanspruchen.

§ 392

Die zurückgenommene Privatklage kann nicht von neuem erhoben werden.

§ 393

(1) Der Tod des Privatklägers hat die Einstellung des Verfahrens zur Folge.

(2) Die Privatklage kann jedoch nach dem Tode des Klägers von den nach § 374 Abs. 2 zur Erhebung der Privatklage Berechtigten fortgesetzt werden.

(3) Die Fortsetzung ist von dem Berechtigten bei Verlust des Rechts binnen zwei Monaten, vom Tode des Privatklägers an gerechnet, bei Gericht zu erklären.

§ 394

Die Zurücknahme der Privatklage und der Tod des Privatklägers sowie die Fortsetzung der Privatklage sind dem Beschuldigten bekanntzumachen.

Zweiter Abschnitt
Nebenklage

§ 395

(1) Der erhobenen öffentlichen Klage oder dem Antrag im Sicherungsverfahren kann sich mit der Nebenklage anschließen, wer verletzt ist durch eine rechtswidrige Tat nach

1. den §§ 174 bis 182 des Strafgesetzbuches,
2. den §§ 211 und 212 des Strafgesetzbuches, die versucht wurde,
3. den §§ 221, 223 bis 226 und 340 des Strafgesetzbuches,
4. den §§ 232 bis 238, 239 Absatz 3, §§ 239a, 239b und 240 Absatz 4 des Strafgesetzbuches,
5. § 4 des Gewaltschutzgesetzes,
6. § 142 des Patentgesetzes, § 25 des Gebrauchsmustergesetzes, § 10 des Halbleiterschutzgesetzes, § 39 des Sortenschutzgesetzes, den §§ 143 bis 144 des Markengesetzes, den §§ 51 und 65 des Geschmacksmustergesetzes, den §§ 106 bis 108b des Urheberrechtsgesetzes, § 33 des Gesetzes betreffend das Urheberrecht an Werken der bildenden Künste und der Photographie und den §§ 16 bis 19 des Gesetzes gegen den unlauteren Wettbewerb.

(2) Die gleiche Befugnis steht Personen zu,

1. deren Kinder, Eltern, Geschwister, Ehegatten oder Lebenspartner durch eine rechtswidrige Tat getötet wurden oder
2. die durch einen Antrag auf gerichtliche Entscheidung (§ 172) die Erhebung der öffentlichen Klage herbeigeführt haben.

(3) Wer durch eine andere rechtswidrige Tat, insbesondere nach den §§ 185 bis 189, 229, 244 Absatz 1 Nummer 3, §§ 249 bis 255 und 316a des Strafgesetzbuches, verletzt ist, kann sich der erhobenen öffentlichen Klage mit der Nebenklage anschließen, wenn dies aus besonderen Gründen, insbesondere wegen der schweren Folgen der Tat, zur Wahrnehmung seiner Interessen geboten erscheint.

(4) Der Anschluss ist in jeder Lage des Verfahrens zulässig. Er kann nach ergangenem Urteil auch zur Einlegung von Rechtsmitteln geschehen.

(5) Wird die Verfolgung nach § 154a beschränkt, so berührt dies nicht das Recht, sich der erhobenen öffentlichen Klage als Nebenkläger anzuschließen. Wird der Nebenkläger zum Verfahren zugelassen, entfällt eine Beschränkung nach § 154a Absatz 1 oder 2, soweit sie die Nebenklage betrifft.

§ 396

(1) Die Anschlußerklärung ist bei dem Gericht schriftlich einzureichen. Eine vor Erhebung der öffentlichen Klage bei der Staatsanwaltschaft oder dem Gericht eingegangene Anschlußerklärung wird mit der Erhebung der öffentlichen Klage wirksam. Im Verfahren bei Strafbefehlen wird der Anschluß wirksam, wenn Termin zur Hauptverhandlung anberaumt (§ 408 Abs. 3 Satz 2, § 411 Abs. 1) oder der Antrag auf Erlaß eines Strafbefehls abgelehnt worden ist.

(2) Das Gericht entscheidet über die Berechtigung zum Anschluß als Nebenkläger nach Anhörung der Staatsanwaltschaft. In den Fällen des § 395 Abs. 3 entscheidet es nach Anhörung auch des Angeschuldigten darüber, ob der Anschluß aus den dort genannten Gründen geboten ist; diese Entscheidung ist unanfechtbar.

(3) Erwägt das Gericht, das Verfahren nach § 153 Abs. 2, § 153a Abs. 2, § 153b Abs. 2 oder § 154 Abs. 2 einzustellen, so entscheidet es zunächst über die Berechtigung zum Anschluß.

§ 397

(1) Der Nebenkläger ist, auch wenn er als Zeuge vernommen werden soll, zur Anwesenheit in der Hauptverhandlung berechtigt. Er ist zur Hauptverhandlung zu laden; § 145a Absatz 2 Satz 1 und § 217 Absatz 1 und 3 gelten entsprechend. Die Befugnis zur Ablehnung eines Richters (§§ 24, 31) oder Sachverständigen (§ 74), das Fragerecht (§ 240 Absatz 2), das Recht zur Beanstandung von Anordnungen des Vorsitzenden (§ 238 Absatz 2) und von Fragen (§ 242), das Beweisantragsrecht (§ 244 Absatz 3 bis 6) sowie das Recht zur Abgabe von Erklärungen (§§ 257, 258) stehen auch dem Nebenkläger zu. Dieser ist, soweit gesetzlich nichts anderes bestimmt ist, im selben Umfang zuzuziehen und zu hören

wie die Staatsanwaltschaft. Entscheidungen, die der Staatsanwaltschaft bekannt gemacht werden, sind auch dem Nebenkläger bekannt zu geben; § 145a Absatz 1 und 3 gilt entsprechend.

(2) Der Nebenkläger kann sich des Beistands eines Rechtsanwalts bedienen oder sich durch einen solchen vertreten lassen. Der Rechtsanwalt ist zur Anwesenheit in der Hauptverhandlung berechtigt. Er ist vom Termin der Hauptverhandlung zu benachrichtigen, wenn seine Wahl dem Gericht angezeigt oder er als Beistand bestellt wurde.

§ 397a

(1) Dem Nebenkläger ist auf seinen Antrag ein Rechtsanwalt als Beistand zu bestellen, wenn er

1. durch ein Verbrechen nach den §§ 176a, 177, 179, 232 und 233 des Strafgesetzbuches verletzt ist,
2. durch eine versuchte rechtswidrige Tat nach den §§ 211 und 212 des Strafgesetzbuches verletzt oder Angehöriger eines durch eine rechtswidrige Tat Getöteten im Sinne des § 395 Absatz 2 Nummer 1 ist,
3. durch ein Verbrechen nach den §§ 226, 234 bis 235, 238 bis 239b, 249, 250, 252, 255 und 316a des Strafgesetzbuches verletzt ist, das bei ihm zu schweren körperlichen oder seelischen Schäden geführt hat oder voraussichtlich führen wird, oder
4. durch eine rechtswidrige Tat nach den §§ 174 bis 182, 221, 225, 226, 232 bis 235, 237, 238 Absatz 2 und 3, §§ 239a, 239b, 240 Absatz 4, §§ 249, 250, 252, 255 und 316a des Strafgesetzbuches verletzt ist und er bei Antragstellung das 18. Lebensjahr noch nicht vollendet hat oder seine Interessen selbst nicht ausreichend wahrnehmen kann.

(2) Liegen die Voraussetzungen für eine Bestellung nach Absatz 1 nicht vor, so ist dem Nebenkläger für die Hinzuziehung eines Rechtsanwalts auf Antrag Prozesskostenhilfe nach denselben Vorschriften wie in bürgerlichen Rechtsstreitigkeiten zu bewilligen, wenn er seine Interessen selbst nicht ausreichend wahrnehmen kann oder ihm dies nicht zuzumuten ist. § 114 Satz 1 zweiter Halbsatz und § 121 Absatz 1 bis 3 der Zivilprozessordnung sind nicht anzuwenden.

(3) Anträge nach den Absätzen 1 und 2 können schon vor der Erklärung des Anschlusses gestellt werden. Über die Bestellung des Rechtsanwalts, für die § 142 Absatz 1 entsprechend gilt, und die Bewilligung der Prozesskostenhilfe entscheidet der Vorsitzende des mit der Sache befassten Gerichts. In den Fällen des Absatzes 2 ist die Entscheidung unanfechtbar.

§ 398

(1) Der Fortgang des Verfahrens wird durch den Anschluß nicht aufgehalten.

(2) Die bereits anberaumte Hauptverhandlung sowie andere Termine finden an den bestimmten Tagen statt, auch wenn der Nebenkläger wegen Kürze der Zeit nicht mehr geladen oder benachrichtigt werden konnte.

§ 399

(1) Entscheidungen, die schon vor dem Anschluß ergangen und der Staatsanwaltschaft bekanntgemacht waren, bedürfen außer in den Fällen des § 401 Abs. 1 Satz 2 keiner Bekanntmachung an den Nebenkläger.

(2) Die Anfechtung solcher Entscheidungen steht auch dem Nebenkläger nicht mehr zu, wenn für die Staatsanwaltschaft die Frist zur Anfechtung abgelaufen ist.

§ 400

(1) Der Nebenkläger kann das Urteil nicht mit dem Ziel anfechten, daß eine andere Rechtsfolge der Tat verhängt wird oder daß der Angeklagte wegen einer Gesetzesverletzung verurteilt wird, die nicht zum Anschluß des Nebenklägers berechtigt.

(2) Dem Nebenkläger steht die sofortige Beschwerde gegen den Beschluß zu, durch den die Eröffnung des Hauptverfahrens abgelehnt oder das Verfahren nach den §§ 206a und 206b eingestellt wird, soweit er die Tat betrifft, auf Grund deren der Nebenkläger zum Anschluß befugt ist. Im übrigen ist der Beschluß, durch den das Verfahren eingestellt wird, für den Nebenkläger unanfechtbar.

§ 401

(1) Der Rechtsmittel kann sich der Nebenkläger unabhängig von der Staatsanwaltschaft bedienen. Geschieht der Anschluß nach ergangenem Urteil zur Einlegung eines Rechtsmittels, so ist dem Nebenkläger das angefochtene Urteil sofort zuzustellen. Die Frist zur Begründung des Rechtsmittels beginnt mit Ablauf der für die Staatsanwaltschaft laufenden Frist zur Einlegung des Rechtsmittels oder, wenn das Urteil dem Nebenkläger noch nicht zugestellt war, mit der Zustellung des Urteils an ihn auch dann, wenn eine Entscheidung über die Berechtigung des Nebenklägers zum Anschluß noch nicht ergangen ist.

(2) War der Nebenkläger in der Hauptverhandlung anwesend oder durch einen Anwalt vertreten, so beginnt für ihn die Frist zur Einlegung des Rechtsmittels auch dann mit der Verkündung des Urteils, wenn er bei dieser nicht mehr zugegen oder vertreten war; er kann die Wiedereinsetzung in den vorigen Stand gegen die Versäumung der Frist nicht wegen fehlender Rechtsmittelbelehrung beanspruchen. Ist der Nebenkläger in der Hauptverhandlung überhaupt nicht anwesend oder vertreten gewesen, so beginnt die Frist mit der Zustellung der Urteilsformel an ihn.

(3) Hat allein der Nebenkläger Berufung eingelegt, so ist diese, wenn bei Beginn einer Hauptverhandlung weder der Nebenkläger noch für ihn ein Rechtsanwalt erschienen ist, unbeschadet der Vorschrift des § 301 sofort zu verwerfen. Der Nebenkläger kann binnen einer Woche nach der Versäumung unter den Voraussetzungen der §§ 44 und 45 die Wiedereinsetzung in den vorigen Stand beanspruchen.

(4) Wird auf ein nur von dem Nebenkläger eingelegtes Rechtsmittel die angefochtene Entscheidung aufgehoben, so liegt der Betrieb der Sache wiederum der Staatsanwaltschaft ob.

§ 402

Die Anschlußerklärung verliert durch Widerruf sowie durch den Tod des Nebenklägers ihre Wirkung.

Dritter Abschnitt
Entschädigung des Verletzten

§ 403

Der Verletzte oder sein Erbe kann gegen den Beschuldigten einen aus der Straftat erwachsenen vermögensrechtlichen Anspruch, der zur Zuständigkeit der ordentlichen Gerichte gehört und noch nicht anderweit gerichtlich anhängig gemacht ist, im Strafverfahren geltend machen, im Verfahren vor dem Amtsgericht ohne Rücksicht auf den Wert des Streitgegenstandes.

§ 404

(1) Der Antrag, durch den der Anspruch geltend gemacht wird, kann schriftlich oder mündlich zur Niederschrift des Urkundsbeamten, in der Hauptverhandlung auch mündlich bis zum Beginn der Schlußvorträge gestellt werden. Er muß den Gegenstand und Grund des Anspruchs bestimmt bezeichnen und soll die Beweismittel enthalten. Ist der Antrag außerhalb der Hauptverhandlung gestellt, so wird er dem Beschuldigten zugestellt.

(2) Die Antragstellung hat dieselben Wirkungen wie die Erhebung der Klage im bürgerlichen Rechtsstreit. Sie treten mit Eingang des Antrages bei Gericht ein.

(3) Ist der Antrag vor Beginn der Hauptverhandlung gestellt, so wird der Antragsteller von Ort und Zeit der Hauptverhandlung benachrichtigt. Der Antragsteller, sein gesetzlicher Vertreter und der Ehegatte oder Lebenspartner des Antragsberechtigten können an der Hauptverhandlung teilnehmen.

(4) Der Antrag kann bis zur Verkündung des Urteils zurückgenommen werden.

(5) Dem Antragsteller und dem Angeschuldigten ist auf Antrag Prozeßkostenhilfe nach denselben Vorschriften wie in bürgerlichen Rechtsstreitigkeiten zu bewilligen, sobald die Klage erhoben ist. § 121 Abs. 2 der Zivilprozeßordnung gilt mit der Maßgabe, daß dem Angeschuldigten, der einen Verteidiger hat, dieser beigeordnet werden soll; dem Antragsteller, der sich im Hauptverfahren des Beistandes eines Rechtsanwalts bedient, soll dieser beigeordnet werden. Zuständig für die Entscheidung ist das mit der Sache befaßte Gericht; die Entscheidung ist nicht anfechtbar.

§ 405

(1) Auf Antrag des Verletzten oder seines Erben und des Angeklagten nimmt das Gericht einen Vergleich über die aus der Straftat erwachsenen Ansprüche in das Protokoll auf. Es soll auf übereinstimmenden Antrag der in Satz 1 Genannten einen Vergleichsvorschlag unterbreiten.

(2) Für die Entscheidung über Einwendungen gegen die Rechtswirksamkeit des Vergleichs ist das Gericht der bürgerlichen Rechtspflege zuständig, in dessen Bezirk das Strafgericht des ersten Rechtszuges seinen Sitz hat.

§ 406

(1) Das Gericht gibt dem Antrag in dem Urteil statt, mit dem der Angeklagte wegen einer Straftat schuldig gesprochen oder gegen ihn eine Maßregel der Besserung und Sicherung angeordnet wird, soweit der Antrag wegen dieser Straftat begründet ist. Die Entscheidung kann sich auf den Grund oder einen Teil des geltend gemachten Anspruchs beschränken; § 318 der Zivilprozessordnung gilt entsprechend. Das Gericht sieht von einer Entscheidung ab, wenn der Antrag unzulässig ist oder soweit er unbegründet erscheint. Im Übrigen kann das Gericht von einer Entscheidung nur absehen, wenn sich der Antrag auch unter Berücksichtigung der berechtigten Belange des Antragstellers zur Erledigung im Strafverfahren nicht eignet. Der Antrag ist insbesondere dann zur Erledigung im Strafverfahren nicht geeignet, wenn seine weitere Prüfung, auch soweit eine Entscheidung nur über den Grund oder einen Teil des Anspruchs in Betracht kommt, das Verfahren erheblich verzögern würde. Soweit der Antragsteller den Anspruch auf Zuerkennung eines Schmerzensgeldes (§ 253 Abs. 2 des Bürgerlichen Gesetzbuches) geltend macht, ist das Absehen von einer Entscheidung nur nach Satz 3 zulässig.

(2) Erkennt der Angeklagte den vom Antragsteller gegen ihn geltend gemachten Anspruch ganz oder teilweise an, ist er gemäß dem Anerkenntnis zu verurteilen.

(3) Die Entscheidung über den Antrag steht einem im bürgerlichen Rechtsstreit ergangenen Urteil gleich. Das Gericht erklärt die Entscheidung für vorläufig vollstreckbar; die §§ 708 bis 712 sowie die §§ 714 und 716 der Zivilprozessordnung gelten entsprechend. Soweit der

Anspruch nicht zuerkannt ist, kann er anderweit geltend gemacht werden. Ist über den Grund des Anspruchs rechtskräftig entschieden, so findet die Verhandlung über den Betrag nach § 304 Abs. 2 der Zivilprozeßordnung vor dem zuständigen Zivilgericht statt.

(4) Der Antragsteller erhält eine Abschrift des Urteils mit Gründen oder einen Auszug daraus.

(5) Erwägt das Gericht, von einer Entscheidung über den Antrag abzusehen, weist es die Verfahrensbeteiligten so früh wie möglich darauf hin. Sobald das Gericht nach Anhörung des Antragstellers die Voraussetzungen für eine Entscheidung über den Antrag für nicht gegeben erachtet, sieht es durch Beschluss von einer Entscheidung über den Antrag ab.

§ 406a

(1) Gegen den Beschluss, mit dem nach § 406 Abs. 5 Satz 2 von einer Entscheidung über den Antrag abgesehen wird, ist sofortige Beschwerde zulässig, wenn der Antrag vor Beginn der Hauptverhandlung gestellt worden und solange keine den Rechtszug abschließende Entscheidung ergangen ist. Im Übrigen steht dem Antragsteller ein Rechtsmittel nicht zu.

(2) Soweit das Gericht dem Antrag stattgibt, kann der Angeklagte die Entscheidung auch ohne den strafrechtlichen Teil des Urteils mit dem sonst zulässigen Rechtsmittel anfechten. In diesem Falle kann über das Rechtsmittel durch Beschluss in nichtöffentlicher Sitzung entschieden werden. Ist das zulässige Rechtsmittel die Berufung, findet auf Antrag des Angeklagten oder des Antragstellers eine mündliche Anhörung der Beteiligten statt.

(3) Die dem Antrag stattgebende Entscheidung ist aufzuheben, wenn der Angeklagte unter Aufhebung der Verurteilung wegen der Straftat, auf welche die Entscheidung über den Antrag gestützt worden ist, weder schuldig gesprochen noch gegen ihn eine Maßregel der Besserung und Sicherung angeordnet wird. Dies gilt auch, wenn das Urteil insoweit nicht angefochten ist.

§ 406b

Die Vollstreckung richtet sich nach den Vorschriften, die für die Vollstreckung von Urteilen und Prozessvergleichen in bürgerlichen Rechtsstreitigkeiten gelten. Für das Verfahren nach den §§ 323, 731, 767, 768, 887 bis 890 der Zivilprozeßordnung ist das Gericht der bürgerlichen

Rechtspflege zuständig, in dessen Bezirk das Strafgericht des ersten Rechtszuges seinen Sitz hat. Einwendungen, die den im Urteil festgestellten Anspruch selbst betreffen, sind nur insoweit zulässig, als die Gründe, auf denen sie beruhen, nach Schluß der Hauptverhandlung des ersten Rechtszuges und, wenn das Berufungsgericht entschieden hat, nach Schluß der Hauptverhandlung im Berufungsrechtszug entstanden sind.

§ 406c

(1) Den Antrag auf Wiederaufnahme des Verfahrens kann der Angeklagte darauf beschränken, eine wesentlich andere Entscheidung über den Anspruch herbeizuführen. Das Gericht entscheidet dann ohne Erneuerung der Hauptverhandlung durch Beschluß.

(2) Richtet sich der Antrag auf Wiederaufnahme des Verfahrens nur gegen den strafrechtlichen Teil des Urteils, so gilt § 406a Abs. 3 entsprechend.

Vierter Abschnitt
Sonstige Befugnisse des Verletzten

§ 406d

(1) Dem Verletzten sind auf Antrag die Einstellung des Verfahrens und der Ausgang des gerichtlichen Verfahrens mitzuteilen, soweit es ihn betrifft.

(2) Dem Verletzten ist auf Antrag mitzuteilen, ob

1. dem Verurteilten die Weisung erteilt worden ist, zu dem Verletzten keinen Kontakt aufzunehmen oder mit ihm nicht zu verkehren;
2. freiheitsentziehende Maßnahmen gegen den Beschuldigten oder den Verurteilten angeordnet oder beendet oder ob erstmalig Vollzugslockerungen oder Urlaub gewährt werden, wenn er ein berechtigtes Interesse darlegt und kein überwiegendes schutzwürdiges Interesse des Betroffenen am Ausschluss der Mitteilung vorliegt; in den in § 395 Absatz 1 Nummer 1 bis 5 genannten Fällen sowie in den Fällen des § 395 Absatz 3, in denen der Verletzte zur Nebenklage zugelassen wurde, bedarf es der Darlegung eines berechtigten Interesses nicht.

(3) Mitteilungen können unterbleiben, sofern sie nicht unter einer Anschrift möglich sind, die der Verletzte angegeben hat. Hat der Verletzte einen Rechtsanwalt als Beistand gewählt, ist ihm ein solcher beigeordnet worden oder wird er durch einen solchen vertreten, so gilt § 145a entsprechend.

§ 406e

(1) Für den Verletzten kann ein Rechtsanwalt die Akten, die dem Gericht vorliegen oder diesem im Falle der Erhebung der öffentlichen Klage vorzulegen wären, einsehen sowie amtlich verwahrte Beweisstücke besichtigen, soweit er hierfür ein berechtigtes Interesse darlegt. In den in § 395 genannten Fällen bedarf es der Darlegung eines berechtigten Interesses nicht.

(2) Die Einsicht in die Akten ist zu versagen, soweit überwiegende schutzwürdige Interessen des Beschuldigten oder anderer Personen entgegenstehen. Sie kann versagt werden, soweit der Untersuchungszweck, auch in einem anderen Strafverfahren, gefährdet erscheint. Sie kann auch versagt werden, wenn durch sie das Verfahren erheblich verzögert würde, es sei denn, dass die Staatsanwaltschaft in den in § 395 genannten Fällen den Abschluss der Ermittlungen in den Akten vermerkt hat.

(3) Auf Antrag können dem Rechtsanwalt, soweit nicht wichtige Gründe entgegenstehen, die Akten mit Ausnahme der Beweisstücke in seine Geschäftsräume oder seine Wohnung mitgegeben werden. Die Entscheidung ist nicht anfechtbar.

(4) Über die Gewährung der Akteneinsicht entscheidet im vorbereitenden Verfahren und nach rechtskräftigem Abschluß des Verfahrens die Staatsanwaltschaft, im übrigen der Vorsitzende des mit der Sache befaßten Gerichts. Gegen die Entscheidung der Staatsanwaltschaft nach Satz 1 kann gerichtliche Entscheidung durch das nach § 162 zuständige Gericht beantragt werden. Die §§ 297 bis 300, 302, 306 bis 309, 311a und 473a gelten entsprechend. Die Entscheidung des Gerichts ist unanfechtbar, solange die Ermittlungen noch nicht abgeschlossen sind. Diese Entscheidungen werden nicht mit Gründen versehen, soweit durch deren Offenlegung der Untersuchungszweck gefährdet werden könnte.

(5) Unter den Voraussetzungen des Absatzes 1 können dem Verletzten Auskünfte und Abschriften aus den Akten erteilt werden; die Absätze 2 und 4 sowie § 478 Abs. 1 Satz 3 und 4 gelten entsprechend.

(6) § 477 Abs. 5 gilt entsprechend.

§ 406f

(1) Verletzte können sich des Beistands eines Rechtsanwalts bedienen oder sich durch einen solchen vertreten lassen. Einem zur Vernehmung des Verletzten erschienenen anwaltlichen Beistand ist die Anwesenheit gestattet.

(2) Bei einer Vernehmung von Verletzten ist auf deren Antrag einer zur Vernehmung erschienenen Person ihres Vertrauens die Anwesenheit zu gestatten, es sei denn, dass dies den Untersuchungszweck gefährden könnte. Die Entscheidung trifft die die Vernehmung leitende Person; die Entscheidung ist nicht anfechtbar. Die Gründe einer Ablehnung sind aktenkundig zu machen.

§ 406g

(1) Nach § 395 zum Anschluss mit der Nebenklage Befugte können sich auch vor Erhebung der öffentlichen Klage und ohne Erklärung eines Anschlusses eines Rechtsanwalts als Beistand bedienen oder sich durch einen solchen vertreten lassen. Sie sind zur Anwesenheit in der Hauptverhandlung berechtigt, auch wenn sie als Zeugen vernommen werden sollen. Ist zweifelhaft, ob eine Person nebenklagebefugt ist, entscheidet über das Anwesenheitsrecht das Gericht nach Anhörung der Person und der Staatsanwaltschaft; die Entscheidung ist unanfechtbar. Nebenklagebefugte sind vom Termin der Hauptverhandlung zu benachrichtigen, wenn sie dies beantragt haben.

(2) Der Rechtsanwalt des Nebenklagebefugten ist zur Anwesenheit in der Hauptverhandlung berechtigt; Absatz 1 Satz 3 gilt entsprechend. Er ist vom Termin der Hauptverhandlung zu benachrichtigen, wenn seine Wahl dem Gericht angezeigt oder er als Beistand bestellt wurde. Die Sätze 1 und 2 gelten bei richterlichen Vernehmungen und der Einnahme richterlichen Augenscheins entsprechend, es sei denn, dass die Anwesenheit oder die

Benachrichtigung des Rechtsanwalts den Untersuchungszweck gefährden könnte.

(3) § 397a gilt entsprechend für

1. die Bestellung eines Rechtsanwalts und
2. die Bewilligung von Prozesskostenhilfe für die Hinzuziehung eines Rechtsanwalts.

Im vorbereitenden Verfahren entscheidet das nach § 162 zuständige Gericht.

(4) Auf Antrag dessen, der zum Anschluß als Nebenkläger berechtigt ist, kann in den Fällen des § 397a Abs. 2 einstweilen ein Rechtsanwalt als Beistand bestellt werden, wenn

1. dies aus besonderen Gründen geboten ist,
2. die Mitwirkung eines Beistands eilbedürftig ist und
3. die Bewilligung von Prozeßkostenhilfe möglich erscheint, eine rechtzeitige Entscheidung hierüber aber nicht zu erwarten ist.

Für die Bestellung gelten § 142 Abs. 1 und § 162 entsprechend. Die Bestellung endet, wenn nicht innerhalb einer vom Richter zu bestimmenden Frist ein Antrag auf Bewilligung von Prozeßkostenhilfe gestellt oder wenn die Bewilligung von Prozeßkostenhilfe abgelehnt wird.

§ 406h

Verletzte sind möglichst frühzeitig, regelmäßig schriftlich und soweit möglich in einer für sie verständlichen Sprache auf ihre aus den §§ 406d bis 406g folgenden Befugnisse und insbesondere auch darauf hinzuweisen, dass sie

1. sich unter den Voraussetzungen der §§ 395 und 396 dieses Gesetzes oder des § 80 Absatz 3 des Jugendgerichtsgesetzes der erhobenen öffentlichen Klage mit der Nebenklage anschließen und dabei nach § 397a beantragen können, dass ihnen ein anwaltlicher Beistand bestellt oder für dessen Hinzuziehung Prozesskostenhilfe bewilligt wird,
2. nach Maßgabe der §§ 403 bis 406c dieses Gesetzes und des § 81 des Jugendgerichtsgesetzes einen aus der Straftat erwachsenen vermögensrechtlichen Anspruch im Strafverfahren geltend machen können,
3. nach Maßgabe des Opferentschädigungsgesetzes einen Versorgungsanspruch geltend machen können,

4. nach Maßgabe des Gewaltschutzgesetzes den Erlass von Anordnungen gegen den Beschuldigten beantragen können sowie
5. Unterstützung und Hilfe durch Opferhilfeeinrichtungen erhalten können, etwa in Form einer Beratung oder einer psychosozialen Prozessbegleitung.

Liegen die Voraussetzungen einer bestimmten Befugnis im Einzelfall offensichtlich nicht vor, kann der betreffende Hinweis unterbleiben. Gegenüber Verletzten, die keine zustellungsfähige Anschrift angegeben haben, besteht keine Hinweispflicht. Die Sätze 1 und 3 gelten auch für Angehörige und Erben von Verletzten, soweit ihnen die entsprechenden Befugnisse zustehen.

Sechstes Buch
Besondere Arten des Verfahrens

Erster Abschnitt
Verfahren bei Strafbefehlen

§ 407

(1) Im Verfahren vor dem Strafrichter und im Verfahren, das zur Zuständigkeit des Schöffengerichts gehört, können bei Vergehen auf schriftlichen Antrag der Staatsanwaltschaft die Rechtsfolgen der Tat durch schriftlichen Strafbefehl ohne Hauptverhandlung festgesetzt werden. Die Staatsanwaltschaft stellt diesen Antrag, wenn sie nach dem Ergebnis der Ermittlungen eine Hauptverhandlung nicht für erforderlich erachtet. Der Antrag ist auf bestimmte Rechtsfolgen zu richten. Durch ihn wird die öffentliche Klage erhoben.

(2) Durch Strafbefehl dürfen nur die folgenden Rechtsfolgen der Tat, allein oder nebeneinander, festgesetzt werden:

1. Geldstrafe, Verwarnung mit Strafvorbehalt, Fahrverbot, Verfall, Einziehung, Vernichtung, Unbrauchbarmachung, Bekanntgabe der Verurteilung und Geldbuße gegen eine juristische Person oder Personenvereinigung,

2. Entziehung der Fahrerlaubnis, bei der die Sperre nicht mehr als zwei Jahre beträgt, sowie
3. Absehen von Strafe.

Hat der Angeschuldigte einen Verteidiger, so kann auch Freiheitsstrafe bis zu einem Jahr festgesetzt werden, wenn deren Vollstreckung zur Bewährung ausgesetzt wird.

(3) Der vorherigen Anhörung des Angeschuldigten durch das Gericht (§ 33 Abs. 3) bedarf es nicht.

§ 408

(1) Hält der Vorsitzende des Schöffengerichts die Zuständigkeit des Strafrichters für begründet, so gibt er die Sache durch Vermittlung der Staatsanwaltschaft an diesen ab; der Beschluß ist für den Strafrichter bindend, der Staatsanwaltschaft steht sofortige Beschwerde zu. Hält der Strafrichter die Zuständigkeit des Schöffengerichts für begründet, so legt er die Akten durch Vermittlung der Staatsanwaltschaft dessen Vorsitzenden zur Entscheidung vor.

(2) Erachtet der Richter den Angeschuldigten nicht für hinreichend verdächtig, so lehnt er den Erlaß eines Strafbefehls ab. Die Entscheidung steht dem Beschluß gleich, durch den die Eröffnung des Hauptverfahrens abgelehnt worden ist (§§ 204, 210 Abs. 2, § 211).

(3) Der Richter hat dem Antrag der Staatsanwaltschaft zu entsprechen, wenn dem Erlaß des Strafbefehls keine Bedenken entgegenstehen. Er beraumt Hauptverhandlung an, wenn er Bedenken hat, ohne eine solche zu entscheiden, oder wenn er von der rechtlichen Beurteilung im Strafbefehlsantrag abweichen oder eine andere als die beantragte Rechtsfolge festsetzen will und die Staatsanwaltschaft bei ihrem Antrag beharrt. Mit der Ladung ist dem Angeklagten eine Abschrift des Strafbefehlsantrags ohne die beantragte Rechtsfolge mitzuteilen.

§ 408a

(1) Ist das Hauptverfahren bereits eröffnet, so kann im Verfahren vor dem Strafrichter und dem Schöffengericht die Staatsanwaltschaft einen Strafbefehlsantrag stellen, wenn die Voraussetzungen des § 407 Abs. 1 Satz 1 und 2 vorliegen und wenn der Durchführung

einer Hauptverhandlung das Ausbleiben oder die Abwesenheit des Angeklagten oder ein anderer wichtiger Grund entgegensteht. In der Hauptverhandlung kann der Staatsanwalt den Antrag mündlich stellen; der wesentliche Inhalt des Strafbefehlsantrages ist in das Sitzungsprotokoll aufzunehmen. § 407 Abs. 1 Satz 4, § 408 finden keine Anwendung.

(2) Der Richter hat dem Antrag zu entsprechen, wenn die Voraussetzungen des § 408 Abs. 3 Satz 1 vorliegen. Andernfalls lehnt er den Antrag durch unanfechtbaren Beschluß ab und setzt das Hauptverfahren fort.

§ 408b

Erwägt der Richter, dem Antrag der Staatsanwaltschaft auf Erlaß eines Strafbefehls mit der in § 407 Abs. 2 Satz 2 genannten Rechtsfolge zu entsprechen, so bestellt er dem Angeschuldigten, der noch keinen Verteidiger hat, einen Verteidiger. § 141 Abs. 3 findet entsprechende Anwendung.

§ 409

(1) Der Strafbefehl enthält

1. die Angaben zur Person des Angeklagten und etwaiger Nebenbeteiligter,
2. den Namen des Verteidigers,
3. die Bezeichnung der Tat, die dem Angeklagten zur Last gelegt wird, Zeit und Ort ihrer Begehung und die Bezeichnung der gesetzlichen Merkmale der Straftat,
4. die angewendeten Vorschriften nach Paragraph, Absatz, Nummer, Buchstabe und mit der Bezeichnung des Gesetzes,
5. die Beweismittel,
6. die Festsetzung der Rechtsfolgen,
7. die Belehrung über die Möglichkeit des Einspruchs und die dafür vorgeschriebene Frist und Form sowie den Hinweis, daß der Strafbefehl rechtskräftig und vollstreckbar wird, soweit gegen ihn kein Einspruch nach § 410 eingelegt wird.

Wird gegen den Angeklagten eine Freiheitsstrafe verhängt, wird er mit Strafvorbehalt verwarnt oder wird gegen ihn ein Fahrverbot angeordnet, so ist er zugleich nach § 268a Abs. 3 oder § 268c Satz 1 zu belehren. § 111i Abs. 2 sowie § 267 Abs. 6 Satz 2 gelten

entsprechend.

(2) Der Strafbefehl wird auch dem gesetzlichen Vertreter des Angeklagten mitgeteilt.

§ 410

(1) Der Angeklagte kann gegen den Strafbefehl innerhalb von zwei Wochen nach Zustellung bei dem Gericht, das den Strafbefehl erlassen hat, schriftlich oder zu Protokoll der Geschäftsstelle Einspruch einlegen. Die §§ 297 bis 300 und § 302 Abs. 1 Satz 1, Abs. 2 gelten entsprechend.

(2) Der Einspruch kann auf bestimmte Beschwerdepunkte beschränkt werden.

(3) Soweit gegen einen Strafbefehl nicht rechtzeitig Einspruch erhoben worden ist, steht er einem rechtskräftigen Urteil gleich.

§ 411

(1) Ist der Einspruch verspätet eingelegt oder sonst unzulässig, so wird er ohne Hauptverhandlung durch Beschluß verworfen; gegen den Beschluß ist sofortige Beschwerde zulässig. Andernfalls wird Termin zur Hauptverhandlung anberaumt. Hat der Angeklagte seinen Einspruch auf die Höhe der Tagessätze einer festgesetzten Geldstrafe beschränkt, kann das Gericht mit Zustimmung des Angeklagten, des Verteidigers und der Staatsanwaltschaft ohne Hauptverhandlung durch Beschluss entscheiden; von der Festsetzung im Strafbefehl darf nicht zum Nachteil des Angeklagten abgewichen werden; gegen den Beschluss ist sofortige Beschwerde zulässig.

(2) Der Angeklagte kann sich in der Hauptverhandlung durch einen mit schriftlicher Vollmacht versehenen Verteidiger vertreten lassen. § 420 ist anzuwenden.

(3) Die Klage und der Einspruch können bis zur Verkündung des Urteils im ersten Rechtszug zurückgenommen werden. § 303 gilt entsprechend. Ist der Strafbefehl im Verfahren nach § 408a erlassen worden, so kann die Klage nicht zurückgenommen werden.

(4) Bei der Urteilsfällung ist das Gericht an den im Strafbefehl enthaltenen Ausspruch nicht gebunden, soweit Einspruch eingelegt ist.

§ 412

Ist bei Beginn einer Hauptverhandlung der Angeklagte weder erschienen noch durch einen Verteidiger vertreten und ist das Ausbleiben nicht genügend entschuldigt, so ist § 329 Abs. 1, 3 und 4 entsprechend anzuwenden. Hat der gesetzliche Vertreter Einspruch eingelegt, so ist auch § 330 entsprechend anzuwenden.

Zweiter Abschnitt
Sicherungsverfahren

§ 413

Führt die Staatsanwaltschaft das Strafverfahren wegen Schuldunfähigkeit oder Verhandlungsunfähigkeit des Täters nicht durch, so kann sie den Antrag stellen, Maßregeln der Besserung und Sicherung selbständig anzuordnen, wenn dies gesetzlich zulässig ist und die Anordnung nach dem Ergebnis der Ermittlungen zu erwarten ist (Sicherungsverfahren).

§ 414

(1) Für das Sicherungsverfahren gelten sinngemäß die Vorschriften über das Strafverfahren, soweit nichts anderes bestimmt ist.

(2) Der Antrag steht der öffentlichen Klage gleich. An die Stelle der Anklageschrift tritt eine Antragsschrift, die den Erfordernissen der Anklageschrift entsprechen muß. In der Antragsschrift ist die Maßregel der Besserung und Sicherung zu bezeichnen, deren Anordnung die Staatsanwaltschaft beantragt. Wird im Urteil eine Maßregel der Besserung und Sicherung nicht angeordnet, so ist auf Ablehnung des Antrages zu erkennen.

(3) Im Vorverfahren soll einem Sachverständigen Gelegenheit zur Vorbereitung des in der Hauptverhandlung zu erstattenden Gutachtens gegeben werden.

§ 415

(1) Ist im Sicherungsverfahren das Erscheinen des Beschuldigten vor Gericht wegen seines Zustandes unmöglich oder aus Gründen der öffentlichen Sicherheit oder Ordnung

unangebracht, so kann das Gericht die Hauptverhandlung durchführen, ohne daß der Beschuldigte zugegen ist.

(2) In diesem Falle ist der Beschuldigte vor der Hauptverhandlung durch einen beauftragten Richter unter Zuziehung eines Sachverständigen zu vernehmen. Von dem Vernehmungstermin sind die Staatsanwaltschaft, der Beschuldigte, der Verteidiger und der gesetzliche Vertreter zu benachrichtigen. Der Anwesenheit des Staatsanwalts, des Verteidigers und des gesetzlichen Vertreters bei der Vernehmung bedarf es nicht.

(3) Fordert es die Rücksicht auf den Zustand des Beschuldigten oder ist eine ordnungsgemäße Durchführung der Hauptverhandlung sonst nicht möglich, so kann das Gericht im Sicherungsverfahren nach der Vernehmung des Beschuldigten zur Sache die Hauptverhandlung durchführen, auch wenn der Beschuldigte nicht oder nur zeitweise zugegen ist.

(4) Soweit eine Hauptverhandlung ohne den Beschuldigten stattfindet, können seine früheren Erklärungen, die in einem richterlichen Protokoll enthalten sind, verlesen werden. Das Protokoll über die Vorvernehmung nach Absatz 2 Satz 1 ist zu verlesen.

(5) In der Hauptverhandlung ist ein Sachverständiger über den Zustand des Beschuldigten zu vernehmen. Hat der Sachverständige den Beschuldigten nicht schon früher untersucht, so soll ihm dazu vor der Hauptverhandlung Gelegenheit gegeben werden.

§ 416

(1) Ergibt sich im Sicherungsverfahren nach Eröffnung des Hauptverfahrens die Schuldfähigkeit des Beschuldigten und ist das Gericht für das Strafverfahren nicht zuständig, so spricht es durch Beschluß seine Unzuständigkeit aus und verweist die Sache an das zuständige Gericht. § 270 Abs. 2 und 3 gilt entsprechend.

(2) Ergibt sich im Sicherungsverfahren nach Eröffnung des Hauptverfahrens die Schuldfähigkeit des Beschuldigten und ist das Gericht auch für das Strafverfahren zuständig, so ist der Beschuldigte auf die veränderte Rechtslage hinzuweisen und ihm Gelegenheit zur Verteidigung zu geben. Behauptet er, auf die Verteidigung nicht genügend vorbereitet zu sein, so ist auf seinen Antrag die Hauptverhandlung auszusetzen. Ist auf Grund des

§ 415 in Abwesenheit des Beschuldigten verhandelt worden, so sind diejenigen Teile der Hauptverhandlung zu wiederholen, bei denen der Beschuldigte nicht zugegen war.

(3) Die Absätze 1 und 2 gelten entsprechend, wenn sich im Sicherungsverfahren nach Eröffnung des Hauptverfahrens ergibt, daß der Beschuldigte verhandlungsfähig ist und das Sicherungsverfahren wegen seiner Verhandlungsunfähigkeit durchgeführt wird. 2a. Abschnitt Beschleunigtes Verfahren

§ 417

Im Verfahren vor dem Strafrichter und dem Schöffengericht stellt die Staatsanwaltschaft schriftlich oder mündlich den Antrag auf Entscheidung im beschleunigten Verfahren, wenn die Sache auf Grund des einfachen Sachverhalts oder der klaren Beweislage zur sofortigen Verhandlung geeignet ist.

§ 418

(1) Stellt die Staatsanwaltschaft den Antrag, so wird die Hauptverhandlung sofort oder in kurzer Frist durchgeführt, ohne daß es einer Entscheidung über die Eröffnung des Hauptverfahrens bedarf. Zwischen dem Eingang des Antrags bei Gericht und dem Beginn der Hauptverhandlung sollen nicht mehr als sechs Wochen liegen.

(2) Der Beschuldigte wird nur dann geladen, wenn er sich nicht freiwillig zur Hauptverhandlung stellt oder nicht dem Gericht vorgeführt wird. Mit der Ladung wird ihm mitgeteilt, was ihm zur Last gelegt wird. Die Ladungsfrist beträgt vierundzwanzig Stunden.

(3) Der Einreichung einer Anklageschrift bedarf es nicht. Wird eine solche nicht eingereicht, so wird die Anklage bei Beginn der Hauptverhandlung mündlich erhoben und ihr wesentlicher Inhalt in das Sitzungsprotokoll aufgenommen. § 408a gilt entsprechend.

(4) Ist eine Freiheitsstrafe von mindestens sechs Monaten zu erwarten, so wird dem Beschuldigten, der noch keinen Verteidiger hat, für das beschleunigte Verfahren vor dem Amtsgericht ein Verteidiger bestellt.

§ 419

(1) Der Strafrichter oder das Schöffengericht hat dem Antrag zu entsprechen, wenn sich die Sache zur Verhandlung in diesem Verfahren eignet. Eine höhere Freiheitsstrafe als Freiheitsstrafe von einem Jahr oder eine Maßregel der Besserung und Sicherung darf in diesem Verfahren nicht verhängt werden. Die Entziehung der Fahrerlaubnis ist zulässig.

(2) Die Entscheidung im beschleunigten Verfahren kann auch in der Hauptverhandlung bis zur Verkündung des Urteils abgelehnt werden. Der Beschluß ist nicht anfechtbar.

(3) Wird die Entscheidung im beschleunigten Verfahren abgelehnt, so beschließt das Gericht die Eröffnung des Hauptverfahrens, wenn der Angeschuldigte einer Straftat hinreichend verdächtig erscheint (§ 203); wird nicht eröffnet und die Entscheidung im beschleunigten Verfahren abgelehnt, so kann von der Einreichung einer neuen Anklageschrift abgesehen werden.

§ 420

(1) Die Vernehmung eines Zeugen, Sachverständigen oder Mitbeschuldigten darf durch Verlesung von Niederschriften über eine frühere Vernehmung sowie von Urkunden, die eine von ihnen stammende schriftliche Äußerung enthalten, ersetzt werden.

(2) Erklärungen von Behörden und sonstigen Stellen über ihre dienstlichen Wahrnehmungen, Untersuchungen und Erkenntnisse sowie über diejenigen ihrer Angehörigen dürfen auch dann verlesen werden, wenn die Voraussetzungen des § 256 nicht vorliegen.

(3) Das Verfahren nach den Absätzen 1 und 2 bedarf der Zustimmung des Angeklagten, des Verteidigers und der Staatsanwaltschaft, soweit sie in der Hauptverhandlung anwesend sind.

(4) Im Verfahren vor dem Strafrichter bestimmt dieser unbeschadet des § 244 Abs. 2 den Umfang der Beweisaufnahme.

§§ 421 bis 429 (weggefallen)

Dritter Abschnitt
Verfahren bei Einziehungen und Vermögensbeschlagnahmen

§ 430

(1) Fällt die Einziehung neben der zu erwartenden Strafe oder Maßregel der Besserung und Sicherung nicht ins Gewicht oder würde das Verfahren, soweit es die Einziehung betrifft, einen unangemessenen Aufwand erfordern oder die Herbeiführung der Entscheidung über die anderen Rechtsfolgen der Tat unangemessen erschweren, so kann das Gericht mit Zustimmung der Staatsanwaltschaft in jeder Lage des Verfahrens die Verfolgung der Tat auf die anderen Rechtsfolgen beschränken.

(2) Im vorbereitenden Verfahren kann die Staatsanwaltschaft die Beschränkung vornehmen. Die Beschränkung ist aktenkundig zu machen.

(3) Das Gericht kann die Beschränkung in jeder Lage des Verfahrens wieder aufheben. Einem darauf gerichteten Antrag der Staatsanwaltschaft ist zu entsprechen. Wird die Beschränkung wieder aufgehoben, so gilt § 265 entsprechend.

§ 431

(1) Ist im Strafverfahren über die Einziehung eines Gegenstandes zu entscheiden und erscheint glaubhaft, daß

1. der Gegenstand einem anderen als dem Angeschuldigten gehört oder zusteht oder
2. ein anderer an dem Gegenstand ein sonstiges Recht hat, dessen Erlöschen im Falle der Einziehung angeordnet werden könnte (§ 74e Abs. 2 Satz 2 und 3 des Strafgesetzbuches),

so ordnet das Gericht an, daß der andere an dem Verfahren beteiligt wird, soweit es die Einziehung betrifft (Einziehungsbeteiligter). Das Gericht kann von der Anordnung absehen, wenn infolge bestimmter Tatsachen anzunehmen ist, daß die Beteiligung nicht ausführbar ist. Das Gericht kann von der Anordnung auch dann absehen, wenn eine Partei, Vereinigung oder Einrichtung außerhalb des räumlichen Geltungsbereichs dieses Gesetzes zu beteiligen wäre, die Bestrebungen gegen den Bestand oder die Sicherheit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oder gegen einen der in § 92 Abs. 2 des Strafgesetzbuches bezeichneten Verfassungsgrundsätze verfolgt, und wenn den Umständen nach anzunehmen ist, daß diese Partei, Vereinigung oder Einrichtung oder einer ihrer Mittelsmänner den Gegenstand zur Förderung ihrer Bestrebungen zur Verfügung gestellt hat; in diesem Falle genügt es, vor der Entscheidung über die Einziehung des Gegenstandes den Besitzer der Sache oder den zur Verfügung über das Recht Befugten zu hören, wenn dies ausführbar ist.

(2) Das Gericht kann anordnen, daß sich die Beteiligung nicht auf die Frage der Schuld des Angeschuldigten erstreckt, wenn

1. die Einziehung im Falle des Absatzes 1 Nr. 1 nur unter der Voraussetzung in Betracht kommt, daß der Gegenstand dem Angeschuldigten gehört oder zusteht, oder
2. der Gegenstand nach den Umständen, welche die Einziehung begründen können, dem Einziehungsbeteiligten auch auf Grund von Rechtsvorschriften außerhalb des Strafrechts ohne Entschädigung dauernd entzogen werden könnte.

(3) Ist über die Einziehung des Wertersatzes gegen eine juristische Person oder eine Personenvereinigung zu entscheiden (§ 75 in Verbindung mit § 74c des Strafgesetzbuches), so ordnet das Gericht deren Beteiligung an.

(4) Die Verfahrensbeteiligung kann bis zum Ausspruch der Einziehung und, wenn eine zulässige Berufung eingelegt ist, bis zur Beendigung der Schlußvorträge im Berufungsverfahren angeordnet werden.

(5) Der Beschluß, durch den die Verfahrensbeteiligung angeordnet wird, kann nicht angefochten werden. Wird die Verfahrensbeteiligung abgelehnt oder eine Anordnung nach Absatz 2 getroffen, so ist sofortige Beschwerde zulässig.

(6) Erklärt jemand bei Gericht oder bei der Staatsanwaltschaft schriftlich oder zu Protokoll oder bei einer anderen Behörde schriftlich, daß er gegen die Einziehung des Gegenstandes keine Einwendungen vorbringen wolle, so wird seine Verfahrensbeteiligung nicht angeordnet oder die Anordnung wieder aufgehoben.

(7) Durch die Verfahrensbeteiligung wird der Fortgang des Verfahrens nicht aufgehalten.

§ 432

(1) Ergeben sich im vorbereitenden Verfahren Anhaltspunkte dafür, daß jemand als Einziehungsbeteiligter in Betracht kommt, so ist er zu hören, wenn dies ausführbar erscheint. § 431 Abs. 1 Satz 3 gilt entsprechend.

(2) Erklärt derjenige, der als Einziehungsbeteiligter in Betracht kommt, daß er gegen die Einziehung Einwendungen vorbringen wolle, und erscheint glaubhaft, daß er ein Recht an dem Gegenstand hat, so gelten, falls er vernommen wird, die Vorschriften über die Vernehmung des Beschuldigten insoweit entsprechend, als seine Verfahrensbeteiligung in Betracht kommt.

§ 433

(1) Von der Eröffnung des Hauptverfahrens an hat der Einziehungsbeteiligte, soweit dieses Gesetz nichts anderes bestimmt, die Befugnisse, die einem Angeklagten zustehen. Im beschleunigten Verfahren gilt dies vom Beginn der Hauptverhandlung, im Strafbefehlsverfahren vom Erlaß des Strafbefehls an.

(2) Das Gericht kann zur Aufklärung des Sachverhalts das persönliche Erscheinen des Einziehungsbeteiligten anordnen. Bleibt der Einziehungsbeteiligte, dessen persönliches Erscheinen angeordnet ist, ohne genügende Entschuldigung aus, so kann das Gericht seine Vorführung anordnen, wenn er unter Hinweis auf diese Möglichkeit durch Zustellung geladen worden ist.

§ 434

(1) Der Einziehungsbeteiligte kann sich in jeder Lage des Verfahrens auf Grund einer schriftlichen Vollmacht durch einen Rechtsanwalt oder eine andere Person, die als Verteidiger gewählt werden kann, vertreten lassen. Die für die Verteidigung geltenden Vorschriften der §§ 137 bis 139, 145a bis 149 und 218 sind entsprechend anzuwenden.

(2) Das Gericht kann dem Einziehungsbeteiligten einen Rechtsanwalt oder eine andere Person, die als Verteidiger bestellt werden darf, beiordnen, wenn die Sach- oder Rechtslage schwierig ist oder wenn der Einziehungsbeteiligte seine Rechte nicht selbst wahrnehmen kann.

§ 435

(1) Dem Einziehungsbeteiligten wird der Termin zur Hauptverhandlung durch Zustellung bekanntgemacht; § 40 gilt entsprechend.

(2) Mit der Terminsnachricht wird ihm, soweit er an dem Verfahren beteiligt ist, die Anklageschrift und in den Fällen des § 207 Abs. 2 der Eröffnungsbeschluß mitgeteilt.

(3) Zugleich wird der Einziehungsbeteiligte darauf hingewiesen, daß

1. auch ohne ihn verhandelt werden kann und
2. über die Einziehung auch ihm gegenüber entschieden wird.

§ 436

(1) Bleibt der Einziehungsbeteiligte in der Hauptverhandlung trotz ordnungsgemäßer Terminsnachricht aus, so kann ohne ihn verhandelt werden. § 235 ist nicht anzuwenden.

(2) Auf Beweisanträge des Einziehungsbeteiligten zur Frage der Schuld des Angeklagten ist § 244 Abs. 3 Satz 2, Abs. 4 bis 6 nicht anzuwenden.

(3) Ordnet das Gericht die Einziehung auf Grund von Umständen an, die einer Entschädigung des Einziehungsbeteiligten entgegenstehen, so spricht es zugleich aus, daß dem Einziehungsbeteiligten eine Entschädigung nicht zusteht. Dies gilt nicht, wenn das Gericht eine Entschädigung des Einziehungsbeteiligten für geboten hält, weil es eine unbillige Härte wäre, sie zu versagen; in diesem Falle entscheidet es zugleich über die Höhe der Entschädigung (§ 74f Abs. 3 des Strafgesetzbuches). Das Gericht weist den Einziehungsbeteiligten zuvor auf die Möglichkeit einer solchen Entscheidung hin und gibt ihm Gelegenheit, sich zu äußern.

(4) War der Einziehungsbeteiligte bei der Verkündung des Urteils nicht zugegen und auch nicht vertreten, so ist ihm das Urteil zuzustellen. Das Gericht kann anordnen, daß Teile des Urteils, welche die Einziehung nicht betreffen, ausgeschieden werden.

§ 437

(1) Im Rechtsmittelverfahren erstreckt sich die Prüfung, ob die Einziehung dem Einziehungsbeteiligten gegenüber gerechtfertigt ist, auf den Schuldspruch des angefochtenen

Urteils nur, wenn der Einziehungsbeteiligte insoweit Einwendungen vorbringt und im vorausgegangenen Verfahren ohne sein Verschulden zum Schuldspruch nicht gehört worden ist. Erstreckt sich hiernach die Prüfung auch auf den Schuldspruch, so legt das Gericht die zur Schuld getroffenen Feststellungen zugrunde, soweit nicht das Vorbringen des Einziehungsbeteiligten eine erneute Prüfung erfordert.

(2) Im Berufungsverfahren gilt Absatz 1 nicht, wenn zugleich auf ein Rechtsmittel eines anderen Beteiligten über den Schuldspruch zu entscheiden ist.

(3) Im Revisionsverfahren sind die Einwendungen gegen den Schuldspruch innerhalb der Begründungsfrist vorzubringen.

(4) Wird nur die Entscheidung über die Höhe der Entschädigung angefochten, so kann über das Rechtsmittel durch Beschluß entschieden werden, wenn die Beteiligten nicht widersprechen. Das Gericht weist sie zuvor auf die Möglichkeit eines solchen Verfahrens und des Widerspruchs hin und gibt ihnen Gelegenheit, sich zu äußern.

§ 438

(1) Wird die Einziehung durch Strafbefehl angeordnet, so wird der Strafbefehl auch dem Einziehungsbeteiligten zugestellt. § 435 Abs. 3 Nr. 2 gilt entsprechend.

(2) Ist nur über den Einspruch des Einziehungsbeteiligten zu entscheiden, so gelten § 439 Abs. 3 Satz 1 und § 441 Abs. 2 und 3 entsprechend.

§ 439

(1) Ist die Einziehung eines Gegenstandes rechtskräftig angeordnet worden und macht jemand glaubhaft, daß er

1. zur Zeit der Rechtskraft der Entscheidung ein Recht an dem Gegenstand gehabt hat, das infolge der Entscheidung beeinträchtigt ist oder nicht mehr besteht, und
2. ohne sein Verschulden weder im Verfahren des ersten Rechtszuges noch im Berufungsverfahren die Rechte des Einziehungsbeteiligten hat wahrnehmen können,

so kann er in einem Nachverfahren geltend machen, daß die Einziehung ihm gegenüber nicht gerechtfertigt sei. § 360 gilt entsprechend.

(2) Das Nachverfahren ist binnen eines Monats nach Ablauf des Tages zu beantragen, an dem der Antragsteller von der rechtskräftigen Entscheidung Kenntnis erlangt hat. Der Antrag ist unzulässig, wenn seit Eintritt der Rechtskraft zwei Jahre verstrichen sind und die Vollstreckung beendet ist.

(3) Das Gericht prüft den Schuldspruch nicht nach, wenn nach den Umständen, welche die Einziehung begründet haben, im Strafverfahren eine Anordnung nach § 431 Abs. 2 zulässig gewesen wäre. Im übrigen gilt § 437 Abs. 1 entsprechend.

(4) Wird das vom Antragsteller behauptete Recht nicht erwiesen, so ist der Antrag unbegründet.

(5) Vor der Entscheidung kann das Gericht mit Zustimmung der Staatsanwaltschaft die Anordnung der Einziehung aufheben, wenn das Nachverfahren einen unangemessenen Aufwand erfordern würde.

(6) Eine Wiederaufnahme des Verfahrens nach § 359 Nr. 5 zu dem Zweck, die Einwendungen nach Absatz 1 geltend zu machen, ist ausgeschlossen.

§ 440

(1) Die Staatsanwaltschaft und der Privatkläger können den Antrag stellen, die Einziehung selbständig anzuordnen, wenn dies gesetzlich zulässig und die Anordnung nach dem Ergebnis der Ermittlungen zu erwarten ist.

(2) In dem Antrag ist der Gegenstand zu bezeichnen. Ferner ist anzugeben, welche Tatsachen die Zulässigkeit der selbständigen Einziehung begründen. Im übrigen gilt § 200 entsprechend.

(3) Die §§ 431 bis 436 und 439 gelten entsprechend.

§ 441

(1) Die Entscheidung über die Einziehung im Nachverfahren (§ 439) trifft das Gericht des ersten Rechtszuges, die Entscheidung über die selbständige Einziehung (§ 440) das Gericht, das im Falle der Strafverfolgung einer bestimmten Person zuständig wäre. Für die Entscheidung über die selbständige Einziehung ist örtlich zuständig auch das Gericht, in

dessen Bezirk der Gegenstand sichergestellt worden ist.

(2) Das Gericht entscheidet durch Beschluß, gegen den sofortige Beschwerde zulässig ist.

(3) Über einen zulässigen Antrag wird jedoch auf Grund mündlicher Verhandlung durch Urteil entschieden, wenn die Staatsanwaltschaft oder sonst ein Beteiligter es beantragt oder das Gericht es anordnet; die Vorschriften über die Hauptverhandlung gelten entsprechend. Wer gegen das Urteil eine zulässige Berufung eingelegt hat, kann gegen das Berufungsurteil nicht mehr Revision einlegen.

(4) Ist durch Urteil entschieden, so gilt § 437 Abs. 4 entsprechend.

§ 442

(1) Verfall, Vernichtung, Unbrauchbarmachung und Beseitigung eines gesetzwidrigen Zustandes stehen im Sinne der §§ 430 bis 441 der Einziehung gleich.

(2) Richtet sich der Verfall nach § 73 Abs. 3 oder § 73a des Strafgesetzbuches gegen einen anderen als den Angeschuldigten, so ordnet das Gericht an, daß der andere an dem Verfahren beteiligt wird. Er kann seine Einwendungen gegen die Anordnung des Verfalls im Nachverfahren geltend machen, wenn er ohne sein Verschulden weder im Verfahren des ersten Rechtszuges noch im Berufungsverfahren imstande war, die Rechte des Verfahrensbeteiligten wahrzunehmen. Wird unter diesen Voraussetzungen ein Nachverfahren beantragt, so sollen bis zu dessen Abschluß Vollstreckungsmaßnahmen gegen den Antragsteller unterbleiben.

§ 443

(1) Das im Geltungsbereich dieses Gesetzes befindliche Vermögen oder einzelne Vermögensgegenstände eines Beschuldigten, gegen den wegen einer Straftat nach

1. den §§ 81 bis 83 Abs. 1, § 89a, den §§ 94 oder 96 Abs. 1, den §§ 97a oder 100, den §§ 129 oder 129a, auch in Verbindung mit § 129b Abs. 1, des Strafgesetzbuches,
2. einer in § 330 Abs. 1 Satz 1 des Strafgesetzbuches in Bezug genommenen Vorschrift unter der Voraussetzung, daß der Beschuldigte verdächtig ist, vorsätzlich Leib oder Leben eines anderen oder fremde Sachen von bedeutendem Wert gefährdet zu haben,

oder unter einer der in § 330 Abs. 1 Satz 2 Nr. 1 bis 3 des Strafgesetzbuches genannten Voraussetzungen oder nach § 330 Abs. 2, § 330a Abs. 1, 2 des Strafgesetzbuches,

3. §§ 51, 52 Abs. 1 Nr. 1, 2 Buchstabe c und d, Abs. 5, 6 des Waffengesetzes, § 34 Abs. 1 bis 6 des Außenwirtschaftsgesetzes oder nach § 19 Abs. 1 bis 3, § 20 Abs. 1 oder 2, jeweils auch in Verbindung mit § 21, oder § 22a Abs. 1 bis 3 des Gesetzes über die Kontrolle von Kriegswaffen oder
4. einer in § 29 Abs. 3 Satz 2 Nr. 1 des Betäubungsmittelgesetzes in Bezug genommenen Vorschrift unter den dort genannten Voraussetzungen oder einer Straftat nach den §§ 29a, 30 Abs. 1 Nr. 1, 2, 4, § 30a oder § 30b des Betäubungsmittelgesetzes

die öffentliche Klage erhoben oder Haftbefehl erlassen worden ist, können mit Beschlag belegt werden. Die Beschlagnahme umfaßt auch das Vermögen, das dem Beschuldigten später zufällt. Die Beschlagnahme ist spätestens nach Beendigung der Hauptverhandlung des ersten Rechtszuges aufzuheben.

(2) Die Beschlagnahme wird durch den Richter angeordnet. Bei Gefahr im Verzug kann die Staatsanwaltschaft die Beschlagnahme vorläufig anordnen; die vorläufige Anordnung tritt außer Kraft, wenn sie nicht binnen drei Tagen vom Richter bestätigt wird.

(3) Die Vorschriften der §§ 291 bis 293 gelten entsprechend.

Vierter Abschnitt
Verfahren bei Festsetzung von Geldbuße gegen juristische Personen und Personenvereinigungen

§ 444

(1) Ist im Strafverfahren über die Festsetzung einer Geldbuße gegen eine juristische Person oder eine Personenvereinigung zu entscheiden (§ 30 des Gesetzes über Ordnungswidrigkeiten), so ordnet das Gericht deren Beteiligung an dem Verfahren an, soweit es die Tat betrifft. § 431 Abs. 4, 5 gilt entsprechend.

(2) Die juristische Person oder die Personenvereinigung wird zur Hauptverhandlung geladen;

bleibt ihr Vertreter ohne genügende Entschuldigung aus, so kann ohne sie verhandelt werden. Für ihre Verfahrensbeteiligung gelten im übrigen die §§ 432 bis 434, 435 Abs. 2 und 3 Nr. 1, § 436 Abs. 2 und 4, § 437 Abs. 1 bis 3, § 438 Abs. 1 und, soweit nur über ihren Einspruch zu entscheiden ist, § 441 Abs. 2 und 3 sinngemäß.

(3) Für das selbständige Verfahren gelten die §§ 440 und 441 Abs. 1 bis 3 sinngemäß. Örtlich zuständig ist auch das Gericht, in dessen Bezirk die juristische Person oder die Personenvereinigung ihren Sitz oder eine Zweigniederlassung hat.

§§ 445 bis 448 (weggefallen)

Siebentes Buch
Strafvollstreckung und Kosten des Verfahrens

Erster Abschnitt
Strafvollstreckung

§ 449

Strafurteile sind nicht vollstreckbar, bevor sie rechtskräftig geworden sind.

§ 450

(1) Auf die zu vollstreckende Freiheitsstrafe ist unverkürzt die Untersuchungshaft anzurechnen, die der Angeklagte erlitten hat, seit er auf Einlegung eines Rechtsmittels verzichtet oder das eingelegte Rechtsmittel zurückgenommen hat oder seitdem die Einlegungsfrist abgelaufen ist, ohne daß er eine Erklärung abgegeben hat.

(2) Hat nach dem Urteil eine Verwahrung, Sicherstellung oder Beschlagnahme des Führerscheins auf Grund des § 111a Abs. 5 Satz 2 fortgedauert, so ist diese Zeit unverkürzt auf das Fahrverbot (§ 44 des Strafgesetzbuches) anzurechnen.

§ 450a

(1) Auf die zu vollstreckende Freiheitsstrafe ist auch die im Ausland erlittene Freiheitsentziehung anzurechnen, die der Verurteilte in einem Auslieferungsverfahren zum Zwecke der Strafvollstreckung erlitten hat. Dies gilt auch dann, wenn der Verurteilte zugleich zum Zwecke der Strafverfolgung ausgeliefert worden ist.

(2) Bei Auslieferung zum Zwecke der Vollstreckung mehrerer Strafen ist die im Ausland erlittene Freiheitsentziehung auf die höchste Strafe, bei Strafen gleicher Höhe auf die Strafe anzurechnen, die nach der Einlieferung des Verurteilten zuerst vollstreckt wird.

(3) Das Gericht kann auf Antrag der Staatsanwaltschaft anordnen, daß die Anrechnung ganz oder zum Teil unterbleibt, wenn sie im Hinblick auf das Verhalten des Verurteilten nach dem Erlaß des Urteils, in dem die dem Urteil zugrunde liegenden tatsächlichen Feststellungen letztmalig geprüft werden konnten, nicht gerechtfertigt ist. Trifft das Gericht eine solche Anordnung, so wird die im Ausland erlittene Freiheitsentziehung, soweit ihre Dauer die Strafe nicht überschreitet, auch in einem anderen Verfahren auf die Strafe nicht angerechnet.

§ 451

(1) Die Strafvollstreckung erfolgt durch die Staatsanwaltschaft als Vollstreckungsbehörde auf Grund einer von dem Urkundsbeamten der Geschäftsstelle zu erteilenden, mit der Bescheinigung der Vollstreckbarkeit versehenen, beglaubigten Abschrift der Urteilsformel.

(2) Den Amtsanwälten steht die Strafvollstreckung nur insoweit zu, als die Landesjustizverwaltung sie ihnen übertragen hat.

(3) Die Staatsanwaltschaft, die Vollstreckungsbehörde ist, nimmt auch gegenüber der Strafvollstreckungskammer bei einem anderen Landgericht die staatsanwaltschaftlichen Aufgaben wahr. Sie kann ihre Aufgaben der für dieses Gericht zuständigen Staatsanwaltschaft übertragen, wenn dies im Interesse des Verurteilten geboten erscheint und die Staatsanwaltschaft am Ort der Strafvollstreckungskammer zustimmt.

§ 452

In Sachen, in denen im ersten Rechtszug in Ausübung von Gerichtsbarkeit des Bundes

entschieden worden ist, steht das Begnadigungsrecht dem Bund zu. In allen anderen Sachen steht es den Ländern zu.

§ 453

(1) Die nachträglichen Entscheidungen, die sich auf eine Strafaussetzung zur Bewährung oder eine Verwarnung mit Strafvorbehalt beziehen (§§ 56a bis 56g, 58, 59a, 59b des Strafgesetzbuches), trifft das Gericht ohne mündliche Verhandlung durch Beschluß. Die Staatsanwaltschaft und der Angeklagte sind zu hören. Hat das Gericht über einen Widerruf der Strafaussetzung wegen Verstoßes gegen Auflagen oder Weisungen zu entscheiden, so soll es dem Verurteilten Gelegenheit zur mündlichen Anhörung geben. Ist ein Bewährungshelfer bestellt, so unterrichtet ihn das Gericht, wenn eine Entscheidung über den Widerruf der Strafaussetzung oder den Straferlaß in Betracht kommt; über Erkenntnisse, die dem Gericht aus anderen Strafverfahren bekannt geworden sind, soll es ihn unterrichten, wenn der Zweck der Bewährungsaufsicht dies angezeigt erscheinen läßt.

(2) Gegen die Entscheidungen nach Absatz 1 ist Beschwerde zulässig. Sie kann nur darauf gestützt werden, daß eine getroffene Anordnung gesetzwidrig ist oder daß die Bewährungszeit nachträglich verlängert worden ist. Der Widerruf der Aussetzung, der Erlaß der Strafe, der Widerruf des Erlasses, die Verurteilung zu der vorbehaltenen Strafe und die Feststellung, daß es bei der Verwarnung sein Bewenden hat (§§ 56f, 56g, 59b des Strafgesetzbuches), können mit sofortiger Beschwerde angefochten werden.

§ 453a

(1) Ist der Angeklagte nicht nach § 268a Abs. 3 belehrt worden, so wird die Belehrung durch das für die Entscheidungen nach § 453 zuständige Gericht erteilt. Der Vorsitzende kann mit der Belehrung einen beauftragten oder ersuchten Richter betrauen.

(2) Die Belehrung soll außer in Fällen von geringer Bedeutung mündlich erteilt werden.

(3) Der Angeklagte soll auch über die nachträglichen Entscheidungen belehrt werden. Absatz 1 gilt entsprechend.

§ 453b

(1) Das Gericht überwacht während der Bewährungszeit die Lebensführung des Verurteilten, namentlich die Erfüllung von Auflagen und Weisungen sowie von Anerbieten und Zusagen.

(2) Die Überwachung obliegt dem für die Entscheidungen nach § 453 zuständigen Gericht.

§ 453c

(1) Sind hinreichende Gründe für die Annahme vorhanden, daß die Aussetzung widerrufen wird, so kann das Gericht bis zur Rechtskraft des Widerrufsbeschlusses, um sich der Person des Verurteilten zu versichern, vorläufige Maßnahmen treffen, notfalls, unter den Voraussetzungen des § 112 Abs. 2 Nr. 1 oder 2, oder, wenn bestimmte Tatsachen die Gefahr begründen, daß der Verurteilte erhebliche Straftaten begehen werde, einen Haftbefehl erlassen.

(2) Die auf Grund eines Haftbefehls nach Absatz 1 erlittene Haft wird auf die zu vollstreckende Freiheitsstrafe angerechnet. § 33 Abs. 4 Satz 1 sowie die §§ 114 bis 115a, 119 und 119a gelten entsprechend.

§ 454

(1) Die Entscheidung, ob die Vollstreckung des Restes einer Freiheitsstrafe zur Bewährung ausgesetzt werden soll (§§ 57 bis 58 des Strafgesetzbuches) sowie die Entscheidung, daß vor Ablauf einer bestimmten Frist ein solcher Antrag des Verurteilten unzulässig ist, trifft das Gericht ohne mündliche Verhandlung durch Beschluß. Die Staatsanwaltschaft, der Verurteilte und die Vollzugsanstalt sind zu hören. Der Verurteilte ist mündlich zu hören. Von der mündlichen Anhörung des Verurteilten kann abgesehen werden, wenn

1. die Staatsanwaltschaft und die Vollzugsanstalt die Aussetzung einer zeitigen Freiheitsstrafe befürworten und das Gericht die Aussetzung beabsichtigt,
2. der Verurteilte die Aussetzung beantragt hat, zur Zeit der Antragstellung
   a) bei zeitiger Freiheitsstrafe noch nicht die Hälfte oder weniger als zwei Monate,
   b) bei lebenslanger Freiheitsstrafe weniger als dreizehn Jahre der Strafe verbüßt hat und

das Gericht den Antrag wegen verfrühter Antragstellung ablehnt oder

3. der Antrag des Verurteilten unzulässig ist (§ 57 Abs. 7, § 57a Abs. 4 des Strafgesetzbuches).

Das Gericht entscheidet zugleich, ob eine Anrechnung nach § 43 Abs. 10 Nr. 3 des Strafvollzugsgesetzes ausgeschlossen wird.

(2) Das Gericht holt das Gutachten eines Sachverständigen über den Verurteilten ein, wenn es erwägt, die Vollstreckung des Restes

1. der lebenslangen Freiheitsstrafe auszusetzen oder
2. einer zeitigen Freiheitsstrafe von mehr als zwei Jahren wegen einer Straftat der in § 66 Abs. 3 Satz 1 des Strafgesetzbuches bezeichneten Art auszusetzen und nicht auszuschließen ist, daß Gründe der öffentlichen Sicherheit einer vorzeitigen Entlassung des Verurteilten entgegenstehen.

Das Gutachten hat sich namentlich zu der Frage zu äußern, ob bei dem Verurteilten keine Gefahr mehr besteht, daß dessen durch die Tat zutage getretene Gefährlichkeit fortbesteht. Der Sachverständige ist mündlich zu hören, wobei der Staatsanwaltschaft, dem Verurteilten, seinem Verteidiger und der Vollzugsanstalt Gelegenheit zur Mitwirkung zu geben ist. Das Gericht kann von der mündlichen Anhörung des Sachverständigen absehen, wenn der Verurteilte, sein Verteidiger und die Staatsanwaltschaft darauf verzichten.

(3) Gegen die Entscheidungen nach Absatz 1 ist sofortige Beschwerde zulässig. Die Beschwerde der Staatsanwaltschaft gegen den Beschluß, der die Aussetzung des Strafrestes anordnet, hat aufschiebende Wirkung.

(4) Im Übrigen sind § 268a Absatz 3, die §§ 268d, 453, 453a Absatz 1 und 3 sowie die §§ 453b und 453c entsprechend anzuwenden. Die Belehrung über die Aussetzung des Strafrestes wird mündlich erteilt; die Belehrung kann auch der Vollzugsanstalt übertragen werden. Die Belehrung soll unmittelbar vor der Entlassung erteilt werden.

§ 454a

(1) Beschließt das Gericht die Aussetzung der Vollstreckung des Restes einer Freiheitsstrafe mindestens drei Monate vor dem Zeitpunkt der Entlassung, so verlängert sich die

Bewährungszeit um die Zeit von der Rechtskraft der Aussetzungsentscheidung bis zur Entlassung.

(2) Das Gericht kann die Aussetzung der Vollstreckung des Restes einer Freiheitsstrafe bis zur Entlassung des Verurteilten wieder aufheben, wenn die Aussetzung aufgrund neu eingetretener oder bekanntgewordener Tatsachen unter Berücksichtigung des Sicherheitsinteresses der Allgemeinheit nicht mehr verantwortet werden kann; § 454 Abs. 1 Satz 1 und 2 sowie Abs. 3 Satz 1 gilt entsprechend. § 57 Abs. 5 des Strafgesetzbuches bleibt unberührt.

§ 454b

(1) Freiheitsstrafen und Ersatzfreiheitsstrafen sollen unmittelbar nacheinander vollstreckt werden.

(2) Sind mehrere Freiheitsstrafen oder Freiheitsstrafen und Ersatzfreiheitsstrafen nacheinander zu vollstrecken, so unterbricht die Vollstreckungsbehörde die Vollstreckung der zunächst zu vollstreckenden Freiheitsstrafe, wenn

1. unter den Voraussetzungen des § 57 Abs. 2 Nr. 1 des Strafgesetzbuches die Hälfte, mindestens jedoch sechs Monate,
2. im übrigen bei zeitiger Freiheitsstrafe zwei Drittel, mindestens jedoch zwei Monate, oder
3. bei lebenslanger Freiheitsstrafe fünfzehn Jahre

der Strafe verbüßt sind. Dies gilt nicht für Strafreste, die auf Grund Widerrufs ihrer Aussetzung vollstreckt werden. Treten die Voraussetzungen für eine Unterbrechung der zunächst zu vollstreckenden Freiheitsstrafe bereits vor Vollstreckbarkeit der später zu vollstreckenden Freiheitsstrafe ein, erfolgt die Unterbrechung rückwirkend auf den Zeitpunkt des Eintritts der Vollstreckbarkeit.

(3) Hat die Vollstreckungsbehörde die Vollstreckung nach Absatz 2 unterbrochen, so trifft das Gericht die Entscheidungen nach den §§ 57 und 57a des Strafgesetzbuches erst, wenn über die Aussetzung der Vollstreckung der Reste aller Strafen gleichzeitig entschieden werden kann.

§ 455

(1) Die Vollstreckung einer Freiheitsstrafe ist aufzuschieben, wenn der Verurteilte in Geisteskrankheit verfällt.

(2) Dasselbe gilt bei anderen Krankheiten, wenn von der Vollstreckung eine nahe Lebensgefahr für den Verurteilten zu besorgen ist.

(3) Die Strafvollstreckung kann auch dann aufgeschoben werden, wenn sich der Verurteilte in einem körperlichen Zustand befindet, bei dem eine sofortige Vollstreckung mit der Einrichtung der Strafanstalt unverträglich ist.

(4) Die Vollstreckungsbehörde kann die Vollstreckung einer Freiheitsstrafe unterbrechen, wenn

1. der Verurteilte in Geisteskrankheit verfällt,
2. wegen einer Krankheit von der Vollstreckung eine nahe Lebensgefahr für den Verurteilten zu besorgen ist oder
3. der Verurteilte sonst schwer erkrankt und die Krankheit in einer Vollzugsanstalt oder einem Anstaltskrankenhaus nicht erkannt oder behandelt werden kann

und zu erwarten ist, daß die Krankheit voraussichtlich für eine erhebliche Zeit fortbestehen wird. Die Vollstreckung darf nicht unterbrochen werden, wenn überwiegende Gründe, namentlich der öffentlichen Sicherheit, entgegenstehen.

§ 455a

(1) Die Vollstreckungsbehörde kann die Vollstreckung einer Freiheitsstrafe oder einer freiheitsentziehenden Maßregel der Besserung und Sicherung aufschieben oder ohne Einwilligung des Gefangenen unterbrechen, wenn dies aus Gründen der Vollzugsorganisation erforderlich ist und überwiegende Gründe der öffentlichen Sicherheit nicht entgegenstehen.

(2) Kann die Entscheidung der Vollstreckungsbehörde nicht rechtzeitig eingeholt werden, so kann der Anstaltsleiter die Vollstreckung unter den Voraussetzungen des Absatzes 1 ohne Einwilligung des Gefangenen vorläufig unterbrechen.

§ 456

(1) Auf Antrag des Verurteilten kann die Vollstreckung aufgeschoben werden, sofern durch die

sofortige Vollstreckung dem Verurteilten oder seiner Familie erhebliche, außerhalb des Strafzwecks liegende Nachteile erwachsen.

(2) Der Strafaufschub darf den Zeitraum von vier Monaten nicht übersteigen.

(3) Die Bewilligung kann an eine Sicherheitsleistung oder andere Bedingungen geknüpft werden.

§ 456a

(1) Die Vollstreckungsbehörde kann von der Vollstreckung einer Freiheitsstrafe, einer Ersatzfreiheitsstrafe oder einer Maßregel der Besserung und Sicherung absehen, wenn der Verurteilte wegen einer anderen Tat einer ausländischen Regierung ausgeliefert, an einen internationalen Strafgerichtshof überstellt oder wenn er aus dem Geltungsbereich dieses Bundesgesetzes ausgewiesen wird.

(2) Kehrt der Ausgelieferte, der Überstellte oder der Ausgewiesene zurück, so kann die Vollstreckung nachgeholt werden. Für die Nachholung einer Maßregel der Besserung und Sicherung gilt § 67c Abs. 2 des Strafgesetzbuches entsprechend. Die Vollstreckungsbehörde kann zugleich mit dem Absehen von der Vollstreckung die Nachholung für den Fall anordnen, dass der Ausgelieferte, Überstellte oder Ausgewiesene zurückkehrt, und hierzu einen Haftbefehl oder einen Unterbringungsbefehl erlassen sowie die erforderlichen Fahndungsmaßnahmen, insbesondere die Ausschreibung zur Festnahme, veranlassen; § 131 Abs. 4 sowie § 131a Abs. 3 gelten entsprechend. Der Verurteilte ist zu belehren.

§ 456b (weggefallen)

§ 456c

(1) Das Gericht kann bei Erlaß des Urteils auf Antrag oder mit Einwilligung des Verurteilten das Wirksamwerden des Berufsverbots durch Beschluß aufschieben, wenn das sofortige Wirksamwerden des Verbots für den Verurteilten oder seine Angehörigen eine erhebliche, außerhalb seines Zweckes liegende, durch späteres Wirksamwerden vermeidbare Härte

bedeuten würde. Hat der Verurteilte einen gesetzlichen Vertreter, so ist dessen Einwilligung erforderlich. § 462 Abs. 3 gilt entsprechend.

(2) Die Vollstreckungsbehörde kann unter denselben Voraussetzungen das Berufsverbot aussetzen.

(3) Der Aufschub und die Aussetzung können an die Leistung einer Sicherheit oder an andere Bedingungen geknüpft werden. Aufschub und Aussetzung dürfen den Zeitraum von sechs Monaten nicht übersteigen.

(4) Die Zeit des Aufschubs und der Aussetzung wird auf die für das Berufsverbot festgesetzte Frist nicht angerechnet.

§ 457

(1) § 161 gilt sinngemäß für die in diesem Abschnitt bezeichneten Zwecke.

(2) Die Vollstreckungsbehörde ist befugt, zur Vollstreckung einer Freiheitsstrafe einen Vorführungs- oder Haftbefehl zu erlassen, wenn der Verurteilte auf die an ihn ergangene Ladung zum Antritt der Strafe sich nicht gestellt hat oder der Flucht verdächtig ist. Sie kann einen Vorführungs- oder Haftbefehl auch erlassen, wenn ein Strafgefangener entweicht oder sich sonst dem Vollzug entzieht.

(3) Im übrigen hat in den Fällen des Absatzes 2 die Vollstreckungsbehörde die gleichen Befugnisse wie die Strafverfolgungsbehörde, soweit die Maßnahmen bestimmt und geeignet sind, den Verurteilten festzunehmen. Bei der Prüfung der Verhältnismäßigkeit ist auf die Dauer der noch zu vollstreckenden Freiheitsstrafe besonders Bedacht zu nehmen. Die notwendig werdenden gerichtlichen Entscheidungen trifft das Gericht des ersten Rechtszuges.

§ 458

(1) Wenn über die Auslegung eines Strafurteils oder über die Berechnung der erkannten Strafe Zweifel entstehen oder wenn Einwendungen gegen die Zulässigkeit der Strafvollstreckung erhoben werden, so ist die Entscheidung des Gerichts herbeizuführen.

(2) Das Gericht entscheidet ferner, wenn in den Fällen des § 454b Abs. 1 und 2 sowie der §§ 455, 456 und 456c Abs. 2 Einwendungen gegen die Entscheidung der

Vollstreckungsbehörde erhoben werden oder wenn die Vollstreckungsbehörde anordnet, daß an einem Ausgelieferten oder Ausgewiesenen die Vollstreckung einer Strafe oder einer Maßregel der Besserung und Sicherung nachgeholt werden soll, und Einwendungen gegen diese Anordnung erhoben werden.

(3) Der Fortgang der Vollstreckung wird hierdurch nicht gehemmt; das Gericht kann jedoch einen Aufschub oder eine Unterbrechung der Vollstreckung anordnen. In den Fällen des § 456c Abs. 2 kann das Gericht eine einstweilige Anordnung treffen.

§ 459

Für die Vollstreckung der Geldstrafe gelten die Vorschriften der Justizbeitreibungsordnung, soweit dieses Gesetz nichts anderes bestimmt.

§ 459a

(1) Nach Rechtskraft des Urteils entscheidet über die Bewilligung von Zahlungserleichterungen bei Geldstrafen (§ 42 des Strafgesetzbuches) die Vollstreckungsbehörde.

(2) Die Vollstreckungsbehörde kann eine Entscheidung über Zahlungserleichterungen nach Absatz 1 oder nach § 42 des Strafgesetzbuches nachträglich ändern oder aufheben. Dabei darf sie von einer vorausgegangenen Entscheidung zum Nachteil des Verurteilten nur auf Grund neuer Tatsachen oder Beweismittel abweichen.

(3) Entfällt die Vergünstigung nach § 42 Satz 2 des Strafgesetzbuches, die Geldstrafe in bestimmten Teilbeträgen zu zahlen, so wird dies in den Akten vermerkt. Die Vollstreckungsbehörde kann erneut eine Zahlungserleichterung bewilligen.

(4) Die Entscheidung über Zahlungserleichterungen erstreckt sich auch auf die Kosten des Verfahrens. Sie kann auch allein hinsichtlich der Kosten getroffen werden.

§ 459b

Teilbeträge werden, wenn der Verurteilte bei der Zahlung keine Bestimmung trifft, zunächst auf die Geldstrafe, dann auf die etwa angeordneten Nebenfolgen, die zu einer Geldzahlung verpflichten, und zuletzt auf die Kosten des Verfahrens angerechnet.

§ 459c

(1) Die Geldstrafe oder der Teilbetrag der Geldstrafe wird vor Ablauf von zwei Wochen nach Eintritt der Fälligkeit nur beigetrieben, wenn auf Grund bestimmter Tatsachen erkennbar ist, daß sich der Verurteilte der Zahlung entziehen will.

(2) Die Vollstreckung kann unterbleiben, wenn zu erwarten ist, daß sie in absehbarer Zeit zu keinem Erfolg führen wird.

(3) In den Nachlaß des Verurteilten darf die Geldstrafe nicht vollstreckt werden.

§ 459d

(1) Das Gericht kann anordnen, daß die Vollstreckung der Geldstrafe ganz oder zum Teil unterbleibt, wenn

1. in demselben Verfahren Freiheitsstrafe vollstreckt oder zur Bewährung ausgesetzt worden ist oder
2. in einem anderen Verfahren Freiheitsstrafe verhängt ist und die Voraussetzungen des § 55 des Strafgesetzbuches nicht vorliegen

und die Vollstreckung der Geldstrafe die Wiedereingliederung des Verurteilten erschweren kann.

(2) Das Gericht kann eine Entscheidung nach Absatz 1 auch hinsichtlich der Kosten des Verfahrens treffen.

§ 459e

(1) Die Ersatzfreiheitsstrafe wird auf Anordnung der Vollstreckungsbehörde vollstreckt.

(2) Die Anordnung setzt voraus, daß die Geldstrafe nicht eingebracht werden kann oder die Vollstreckung nach § 459c Abs. 2 unterbleibt.

(3) Wegen eines Teilbetrages, der keinem vollen Tag Freiheitsstrafe entspricht, darf die Vollstreckung der Ersatzfreiheitsstrafe nicht angeordnet werden.

(4) Die Ersatzfreiheitsstrafe wird nicht vollstreckt, soweit die Geldstrafe entrichtet oder beigetrieben wird oder die Vollstreckung nach § 459d unterbleibt. Absatz 3 gilt entsprechend.

§ 459f

Das Gericht ordnet an, daß die Vollstreckung der Ersatzfreiheitsstrafe unterbleibt, wenn die Vollstreckung für den Verurteilten eine unbillige Härte wäre.

§ 459g

(1) Ist der Verfall, die Einziehung oder die Unbrauchbarmachung einer Sache angeordnet worden, so wird die Anordnung dadurch vollstreckt, daß die Sache dem Verurteilten oder dem Verfalls- oder Einziehungsbeteiligten weggenommen wird. Für die Vollstreckung gelten die Vorschriften der Justizbeitreibungsordnung.

(2) Für die Vollstreckung von Nebenfolgen, die zu einer Geldzahlung verpflichten, gelten die §§ 459, 459a, 459c Abs. 1 und 2 und § 459d entsprechend.

§ 459h

Über Einwendungen gegen die Entscheidungen der Vollstreckungsbehörde nach den §§ 459a, 459c, 459e und 459g entscheidet das Gericht.

§ 459i

(1) Für die Vollstreckung der Vermögensstrafe (§ 43a des Strafgesetzbuches) gelten die §§ 459, 459a, 459b, 459c, 459e, 459f und 459h sinngemäß.

(2) In den Fällen der §§ 111o, 111p ist die Maßnahme erst nach Beendigung der Vollstreckung aufzuheben.

§ 460

Ist jemand durch verschiedene rechtskräftige Urteile zu Strafen verurteilt worden und sind dabei die Vorschriften über die Zuerkennung einer Gesamtstrafe (§ 55 des Strafgesetzbuches) außer Betracht geblieben, so sind die erkannten Strafen durch eine nachträgliche gerichtliche Entscheidung auf eine Gesamtstrafe zurückzuführen. Werden mehrere Vermögensstrafen auf eine Gesamtvermögensstrafe zurückgeführt, so darf diese die Höhe der verwirkten höchsten Strafe auch dann nicht unterschreiten, wenn deren

Höhe den Wert des Vermögens des Verurteilten zum Zeitpunkt der nachträglichen gerichtlichen Entscheidung übersteigt.

§ 461

(1) Ist der Verurteilte nach Beginn der Strafvollstreckung wegen Krankheit in eine von der Strafanstalt getrennte Krankenanstalt gebracht worden, so ist die Dauer des Aufenthalts in der Krankenanstalt in die Strafzeit einzurechnen, wenn nicht der Verurteilte mit der Absicht, die Strafvollstreckung zu unterbrechen, die Krankheit herbeigeführt hat.

(2) Die Staatsanwaltschaft hat im letzteren Falle eine Entscheidung des Gerichts herbeizuführen.

§ 462

(1) Die nach § 450a Abs. 3 Satz 1 und den §§ 458 bis 461 notwendig werdenden gerichtlichen Entscheidungen trifft das Gericht ohne mündliche Verhandlung durch Beschluß. Dies gilt auch für die Wiederverleihung verlorener Fähigkeiten und Rechte (§ 45b des Strafgesetzbuches), die Aufhebung des Vorbehalts der Einziehung und die nachträgliche Anordnung der Einziehung eines Gegenstandes (§ 74b Abs. 2 Satz 3 des Strafgesetzbuches), die nachträgliche Anordnung von Verfall oder Einziehung des Wertersatzes (§ 76 des Strafgesetzbuches) sowie für die Verlängerung der Verjährungsfrist (§ 79b des Strafgesetzbuches).

(2) Vor der Entscheidung sind die Staatsanwaltschaft und der Verurteilte zu hören. Das Gericht kann von der Anhörung des Verurteilten in den Fällen einer Entscheidung nach § 79b des Strafgesetzbuches absehen, wenn infolge bestimmter Tatsachen anzunehmen ist, daß die Anhörung nicht ausführbar ist.

(3) Der Beschluß ist mit sofortiger Beschwerde anfechtbar. Die sofortige Beschwerde der Staatsanwaltschaft gegen den Beschluß, der die Unterbrechung der Vollstreckung anordnet, hat aufschiebende Wirkung.

§ 462a

(1) Wird gegen den Verurteilten eine Freiheitsstrafe vollstreckt, so ist für die nach den §§ 453, 454, 454a und 462 zu treffenden Entscheidungen die Strafvollstreckungskammer zuständig, in deren Bezirk die Strafanstalt liegt, in die der Verurteilte zu dem Zeitpunkt, in dem das Gericht mit der Sache befaßt wird, aufgenommen ist. Diese Strafvollstreckungskammer bleibt auch zuständig für Entscheidungen, die zu treffen sind, nachdem die Vollstreckung einer Freiheitsstrafe unterbrochen oder die Vollstreckung des Restes der Freiheitsstrafe zur Bewährung ausgesetzt wurde. Die Strafvollstreckungskammer kann einzelne Entscheidungen nach § 462 in Verbindung mit § 458 Abs. 1 an das Gericht des ersten Rechtszuges abgeben; die Abgabe ist bindend.

(2) In anderen als den in Absatz 1 bezeichneten Fällen ist das Gericht des ersten Rechtszuges zuständig. Das Gericht kann die nach § 453 zu treffenden Entscheidungen ganz oder zum Teil an das Amtsgericht abgeben, in dessen Bezirk der Verurteilte seinen Wohnsitz oder in Ermangelung eines Wohnsitzes seinen gewöhnlichen Aufenthaltsort hat; die Abgabe ist bindend. Abweichend von Absatz 1 ist in den dort bezeichneten Fällen das Gericht des ersten Rechtszuges zuständig, wenn es die Anordnung der Sicherungsverwahrung vorbehalten hat und eine Entscheidung darüber gemäß § 66a Absatz 3 Satz 1 des Strafgesetzbuches noch möglich ist.

(3) In den Fällen des § 460 entscheidet das Gericht des ersten Rechtszuges. Waren die verschiedenen Urteile von verschiedenen Gerichten erlassen, so steht die Entscheidung dem Gericht zu, das auf die schwerste Strafart oder bei Strafen gleicher Art auf die höchste Strafe erkannt hat, und falls hiernach mehrere Gerichte zuständig sein würden, dem Gericht, dessen Urteil zuletzt ergangen ist. War das hiernach maßgebende Urteil von einem Gericht eines höheren Rechtszuges erlassen, so setzt das Gericht des ersten Rechtszuges die Gesamtstrafe fest; war eines der Urteile von einem Oberlandesgericht im ersten Rechtszuge erlassen, so setzt das Oberlandesgericht die Gesamtstrafe fest. Wäre ein Amtsgericht zur Bildung der Gesamtstrafe zuständig und reicht seine Strafgewalt nicht aus, so entscheidet die Strafkammer des ihm übergeordneten Landgerichts.

(4) Haben verschiedene Gerichte den Verurteilten in anderen als den in § 460 bezeichneten Fällen rechtskräftig zu Strafe verurteilt oder unter Strafvorbehalt verwarnt, so ist nur eines

von ihnen für die nach den §§ 453, 454, 454a und 462 zu treffenden Entscheidungen zuständig. Absatz 3 Satz 2 und 3 gilt entsprechend. In den Fällen des Absatzes 1 entscheidet die Strafvollstreckungskammer; Absatz 1 Satz 3 bleibt unberührt.

(5) An Stelle der Strafvollstreckungskammer entscheidet das Gericht des ersten Rechtszuges, wenn das Urteil von einem Oberlandesgericht im ersten Rechtszuge erlassen ist. Das Oberlandesgericht kann die nach den Absätzen 1 und 3 zu treffenden Entscheidungen ganz oder zum Teil an die Strafvollstreckungskammer abgeben. Die Abgabe ist bindend; sie kann jedoch vom Oberlandesgericht widerrufen werden.

(6) Gericht des ersten Rechtszuges ist in den Fällen des § 354 Abs. 2 und des § 355 das Gericht, an das die Sache zurückverwiesen worden ist, und in den Fällen, in denen im Wiederaufnahmeverfahren eine Entscheidung nach § 373 ergangen ist, das Gericht, das diese Entscheidung getroffen hat.

§ 463

(1) Die Vorschriften über die Strafvollstreckung gelten für die Vollstreckung von Maßregeln der Besserung und Sicherung sinngemäß, soweit nichts anderes bestimmt ist.

(2) § 453 gilt auch für die nach den §§ 68a bis 68d des Strafgesetzbuches zu treffenden Entscheidungen.

(3) § 454 Abs. 1, 3 und 4 gilt auch für die nach § 67c Abs. 1, § 67d Abs. 2 und 3, § 67e Abs. 3, den §§ 68e, 68f Abs. 2 und § 72 Abs. 3 des Strafgesetzbuches zu treffenden Entscheidungen. In den Fällen des § 68e des Strafgesetzbuches bedarf es einer mündlichen Anhörung des Verurteilten nicht. § 454 Abs. 2 findet unabhängig von den dort genannten Straftaten in den Fällen des § 67d Abs. 2 und 3, des § 67c Abs. 1 und des § 72 Abs. 3 des Strafgesetzbuches entsprechende Anwendung, soweit das Gericht über die Vollstreckung der Sicherungsverwahrung zu entscheiden hat; im Übrigen findet § 454 Abs. 2 bei den dort genannten Straftaten Anwendung. Zur Vorbereitung der Entscheidung nach § 67d Abs. 3 des Strafgesetzbuches sowie der nachfolgenden Entscheidungen nach § 67d Abs. 2 des Strafgesetzbuches hat das Gericht das Gutachten eines Sachverständigen namentlich zu der Frage einzuholen, ob von dem Verurteilten weiterhin erhebliche

rechtswidrige Taten zu erwarten sind. Dem Verurteilten, der keinen Verteidiger hat, bestellt das Gericht für das Verfahren nach Satz 4 einen Verteidiger.

(4) Im Rahmen der Überprüfungen nach § 67e des Strafgesetzbuches soll das Gericht nach jeweils fünf Jahren vollzogener Unterbringung in einem psychiatrischen Krankenhaus (§ 63) das Gutachten eines Sachverständigen einholen. Der Sachverständige darf weder im Rahmen des Vollzugs der Unterbringung mit der Behandlung der untergebrachten Person befasst gewesen sein noch in dem psychiatrischen Krankenhaus arbeiten, in dem sich die untergebrachte Person befindet. Dem Sachverständigen ist Einsicht in die Patientendaten des Krankenhauses über die untergebrachte Person zu gewähren. § 454 Abs. 2 gilt entsprechend. Der untergebrachten Person, die keinen Verteidiger hat, bestellt das Gericht für das Verfahren nach Satz 1 einen Verteidiger.

(5) § 455 Abs. 1 ist nicht anzuwenden, wenn die Unterbringung in einem psychiatrischen Krankenhaus angeordnet ist. Ist die Unterbringung in einer Entziehungsanstalt oder in der Sicherungsverwahrung angeordnet worden und verfällt der Verurteilte in Geisteskrankheit, so kann die Vollstreckung der Maßregel aufgeschoben werden. § 456 ist nicht anzuwenden, wenn die Unterbringung des Verurteilten in der Sicherungsverwahrung angeordnet ist.

(6) § 462 gilt auch für die nach § 67 Abs. 3 und Abs. 5 Satz 2, den §§ 67a und 67c Abs. 2, § 67d Abs. 5 und 6, den §§ 67g, 67h und 69a Abs. 7 sowie den §§ 70a und 70b des Strafgesetzbuches zu treffenden Entscheidungen. Das Gericht erklärt die Anordnung von Maßnahmen nach § 67h Abs. 1 Satz 1 und 2 des Strafgesetzbuchs für sofort vollziehbar, wenn erhebliche rechtswidrige Taten des Verurteilten drohen.

(7) Für die Anwendung des § 462a Abs. 1 steht die Führungsaufsicht in den Fällen des § 67c Abs. 1, des § 67d Abs. 2 bis 6 und des § 68f des Strafgesetzbuches der Aussetzung eines Strafrestes gleich.

§ 463a

(1) Die Aufsichtsstellen (§ 68a des Strafgesetzbuches) können zur Überwachung des Verhaltens des Verurteilten und der Erfüllung von Weisungen von allen öffentlichen Behörden Auskunft

verlangen und Ermittlungen jeder Art, mit Ausschluß eidlicher Vernehmungen, entweder selbst vornehmen oder durch andere Behörden im Rahmen ihrer Zuständigkeit vornehmen lassen. Ist der Aufenthalt des Verurteilten nicht bekannt, kann der Leiter der Führungsaufsichtsstelle seine Ausschreibung zur Aufenthaltsermittlung (§ 131a Abs. 1) anordnen.

(2) Die Aufsichtsstelle kann für die Dauer der Führungsaufsicht oder für eine kürzere Zeit anordnen, daß der Verurteilte zur Beobachtung anläßlich von polizeilichen Kontrollen, die die Feststellung der Personalien zulassen, ausgeschrieben wird. § 163e Abs. 2 gilt entsprechend. Die Anordnung trifft der Leiter der Führungsaufsichtsstelle. Die Erforderlichkeit der Fortdauer der Maßnahme ist mindestens jährlich zu überprüfen.

(3) Auf Antrag der Aufsichtsstelle kann das Gericht einen Vorführungsbefehl erlassen, wenn der Verurteilte einer Weisung nach § 68b Abs. 1 Satz 1 Nr. 7 oder Nr. 11 des Strafgesetzbuchs ohne genügende Entschuldigung nicht nachgekommen ist und er in der Ladung darauf hingewiesen wurde, dass in diesem Fall seine Vorführung zulässig ist. Soweit das Gericht des ersten Rechtszuges zuständig ist, entscheidet der Vorsitzende.

(4) Die Aufsichtsstelle erhebt und speichert bei einer Weisung nach § 68b Absatz 1 Satz 1 Nummer 12 des Strafgesetzbuches mit Hilfe der von der verurteilten Person mitgeführten technischen Mittel automatisiert Daten über deren Aufenthaltsort sowie über etwaige Beeinträchtigungen der Datenerhebung; soweit es technisch möglich ist, ist sicherzustellen, dass innerhalb der Wohnung der verurteilten Person keine über den Umstand ihrer Anwesenheit hinausgehenden Aufenthaltsdaten erhoben werden. Die Daten dürfen ohne Einwilligung der betroffenen Person nur verwendet werden, soweit dies erforderlich ist für die folgenden Zwecke:

1. zur Feststellung des Verstoßes gegen eine Weisung nach § 68b Absatz 1 Satz 1 Nummer 1, 2 oder 12 des Strafgesetzbuches,
2. zur Ergreifung von Maßnahmen der Führungsaufsicht, die sich an einen Verstoß gegen eine Weisung nach § 68b Absatz 1 Satz 1 Nummer 1, 2 oder 12 des Strafgesetzbuches anschließen können,

3. zur Ahndung eines Verstoßes gegen eine Weisung nach § 68b Absatz 1 Satz 1 Nummer 1, 2 oder 12 des Strafgesetzbuches,
4. zur Abwehr einer erheblichen gegenwärtigen Gefahr für das Leben, die körperliche Unversehrtheit, die persönliche Freiheit oder die sexuelle Selbstbestimmung Dritter oder
5. zur Verfolgung einer Straftat der in § 66 Absatz 3 Satz 1 des Strafgesetzbuches genannten Art.

Zur Einhaltung der Zweckbindung nach Satz 2 hat die Verarbeitung der Daten zur Feststellung von Verstößen nach Satz 2 Nummer 1 in Verbindung mit § 68b Absatz 1 Satz 1 Nummer 1 oder 2 des Strafgesetzbuches automatisiert zu erfolgen und sind die Daten gegen unbefugte Kenntnisnahme besonders zu sichern. Die Aufsichtsstelle kann die Erhebung und Verarbeitung der Daten durch die Behörden und Beamten des Polizeidienstes vornehmen lassen; diese sind verpflichtet, dem Ersuchen der Aufsichtsstelle zu genügen. Die in Satz 1 genannten Daten sind spätestens zwei Monate nach ihrer Erhebung zu löschen, soweit sie nicht für die in Satz 2 genannten Zwecke verwendet werden. Bei jedem Abruf der Daten sind zumindest der Zeitpunkt, die abgerufenen Daten und der Bearbeiter zu protokollieren; § 488 Absatz 3 Satz 5 gilt entsprechend. Werden innerhalb der Wohnung der verurteilten Person über den Umstand ihrer Anwesenheit hinausgehende Aufenthaltsdaten erhoben, dürfen diese nicht verwertet werden und sind unverzüglich nach Kenntnisnahme zu löschen. Die Tatsache ihrer Kenntnisnahme und Löschung ist zu dokumentieren.

(5) Örtlich zuständig ist die Aufsichtsstelle, in deren Bezirk der Verurteilte seinen Wohnsitz hat. Hat der Verurteilte keinen Wohnsitz im Geltungsbereich dieses Gesetzes, so ist die Aufsichtsstelle örtlich zuständig, in deren Bezirk er seinen gewöhnlichen Aufenthaltsort hat und, wenn ein solcher nicht bekannt ist, seinen letzten Wohnsitz oder gewöhnlichen Aufenthaltsort hatte.

§ 463b

(1) Ist ein Führerschein nach § 44 Abs. 2 Satz 2 und 3 des Strafgesetzbuches amtlich zu verwahren und wird er nicht freiwillig herausgegeben, so ist er zu beschlagnahmen.

(2) Ausländische Führerscheine können zur Eintragung eines Vermerks über das Fahrverbot oder über die Entziehung der Fahrerlaubnis und die Sperre (§ 44 Abs. 2 Satz 4, § 69b Abs. 2 des Strafgesetzbuches) beschlagnahmt werden.

(3) Der Verurteilte hat, wenn der Führerschein bei ihm nicht vorgefunden wird, auf Antrag der Vollstreckungsbehörde bei dem Amtsgericht eine eidesstattliche Versicherung über den Verbleib abzugeben. § 883 Abs. 2 bis 4, die §§ 899, 900 Abs. 1 und 4 sowie die §§ 901, 902, 904 bis 910 und 913 der Zivilprozeßordnung gelten entsprechend.

§ 463c

(1) Ist die öffentliche Bekanntmachung der Verurteilung angeordnet worden, so wird die Entscheidung dem Berechtigten zugestellt.

(2) Die Anordnung nach Absatz 1 wird nur vollzogen, wenn der Antragsteller oder ein an seiner Stelle Antragsberechtigter es innerhalb eines Monats nach Zustellung der rechtskräftigen Entscheidung verlangt.

(3) Kommt der Verleger oder der verantwortliche Redakteur einer periodischen Druckschrift seiner Verpflichtung nicht nach, eine solche Bekanntmachung in das Druckwerk aufzunehmen, so hält ihn das Gericht auf Antrag der Vollstreckungsbehörde durch Festsetzung eines Zwangsgeldes bis zu fünfundzwanzigtausend Euro oder von Zwangshaft bis zu sechs Wochen dazu an. Zwangsgeld kann wiederholt festgesetzt werden. § 462 gilt entsprechend.

(4) Für die Bekanntmachung im Rundfunk gilt Absatz 3 entsprechend, wenn der für die Programmgestaltung Verantwortliche seiner Verpflichtung nicht nachkommt.

§ 463d

Zur Vorbereitung der nach den §§ 453 bis 461 zu treffenden Entscheidungen kann sich das Gericht oder die Vollstreckungsbehörde der Gerichtshilfe bedienen; dies kommt insbesondere vor einer Entscheidung über den Widerruf der Strafaussetzung oder der Aussetzung des Strafrestes in Betracht, sofern nicht ein Bewährungshelfer bestellt ist.

Zweiter Abschnitt
Kosten des Verfahrens

§ 464

(1) Jedes Urteil, jeder Strafbefehl und jede eine Untersuchung einstellende Entscheidung muß darüber Bestimmung treffen, von wem die Kosten des Verfahrens zu tragen sind.

(2) Die Entscheidung darüber, wer die notwendigen Auslagen trägt, trifft das Gericht in dem Urteil oder in dem Beschluß, der das Verfahren abschließt.

(3) Gegen die Entscheidung über die Kosten und die notwendigen Auslagen ist sofortige Beschwerde zulässig; sie ist unzulässig, wenn eine Anfechtung der in Absatz 1 genannten Hauptentscheidung durch den Beschwerdeführer nicht statthaft ist. Das Beschwerdegericht ist an die tatsächlichen Feststellungen, auf denen die Entscheidung beruht, gebunden. Wird gegen das Urteil, soweit es die Entscheidung über die Kosten und die notwendigen Auslagen betrifft, sofortige Beschwerde und im übrigen Berufung oder Revision eingelegt, so ist das Berufungsoder Revisionsgericht, solange es mit der Berufung oder Revision befaßt ist, auch für die Entscheidung über die sofortige Beschwerde zuständig.

§ 464a

(1) Kosten des Verfahrens sind die Gebühren und Auslagen der Staatskasse. Zu den Kosten gehören auch die durch die Vorbereitung der öffentlichen Klage entstandenen sowie die Kosten der Vollstreckung einer Rechtsfolge der Tat. Zu den Kosten eines Antrags auf Wiederaufnahme des durch ein rechtskräftiges Urteil abgeschlossenen Verfahrens gehören auch die zur Vorbereitung eines Wiederaufnahmeverfahrens (§§ 364a und 364b) entstandenen Kosten, soweit sie durch einen Antrag des Verurteilten verursacht sind.

(2) Zu den notwendigen Auslagen eines Beteiligten gehören auch

1. die Entschädigung für eine notwendige Zeitversäumnis nach den Vorschriften, die für die Entschädigung von Zeugen gelten, und
2. die Gebühren und Auslagen eines Rechtsanwalts, soweit sie nach § 91 Abs. 2 der Zivilprozeßordnung zu erstatten sind.

Fußnote

§ 464a Abs. 2 Nr. 2: Mit dem GG nach Maßgabe der Entscheidungsformel vereinbar, BVerfGE v. 6.11.1984; 1985 I 194 - 2 BvL 16/83 -

§ 464b

Die Höhe der Kosten und Auslagen, die ein Beteiligter einem anderen Beteiligten zu erstatten hat, wird auf Antrag eines Beteiligten durch das Gericht des ersten Rechtszuges festgesetzt. Auf Antrag ist auszusprechen, dass die festgesetzten Kosten und Auslagen von der Anbringung des Festsetzungsantrags an zu verzinsen sind. Auf die Höhe des Zinssatzes, das Verfahren und auf die Vollstreckung der Entscheidung sind die Vorschriften der Zivilprozessordnung entsprechend anzuwenden.

§ 464c

Ist für einen Angeschuldigten, der der deutschen Sprache nicht mächtig, hör- oder sprachbehindert ist, ein Dolmetscher oder Übersetzer herangezogen worden, so werden die dadurch entstandenen Auslagen dem Angeschuldigten auferlegt, soweit er diese durch schuldhafte Säumnis oder in sonstiger Weise schuldhaft unnötig verursacht hat; dies ist außer im Falle des § 467 Abs. 2 ausdrücklich auszusprechen.

§ 464d

Die Auslagen der Staatskasse und die notwendigen Auslagen der Beteiligten können nach Bruchteilen verteilt werden.

§ 465

(1) Die Kosten des Verfahrens hat der Angeklagte insoweit zu tragen, als sie durch das Verfahren wegen einer Tat entstanden sind, wegen derer er verurteilt oder eine Maßregel der Besserung und Sicherung gegen ihn angeordnet wird. Eine Verurteilung im Sinne dieser Vorschrift liegt auch dann vor, wenn der Angeklagte mit Strafvorbehalt verwarnt wird oder das Gericht von Strafe absieht.

(2) Sind durch Untersuchungen zur Aufklärung bestimmter belastender oder entlastender Umstände besondere Auslagen entstanden und sind diese Untersuchungen zugunsten des Angeklagten ausgegangen, so hat das Gericht die entstandenen Auslagen teilweise oder auch ganz der Staatskasse aufzuerlegen, wenn es unbillig wäre, den Angeklagten damit zu belasten. Dies gilt namentlich dann, wenn der Angeklagte wegen einzelner abtrennbarer Teile einer Tat oder wegen einzelner von mehreren Gesetzesverletzungen nicht verurteilt wird. Die Sätze 1 und 2 gelten entsprechend für die notwendigen Auslagen des Angeklagten.

(3) Stirbt ein Verurteilter vor eingetretener Rechtskraft des Urteils, so haftet sein Nachlaß nicht für die Kosten.

§ 466

Mitangeklagte, gegen die in bezug auf dieselbe Tat auf Strafe erkannt oder eine Maßregel der Besserung und Sicherung angeordnet wird, haften für die Auslagen als Gesamtschuldner. Dies gilt nicht für die durch die Tätigkeit eines bestellten Verteidigers oder eines Dolmetschers und die durch die Vollstreckung, die einstweilige Unterbringung oder die Untersuchungshaft entstandenen Kosten sowie für Auslagen, die durch Untersuchungshandlungen, die ausschließlich gegen einen Mitangeklagten gerichtet waren, entstanden sind.

§ 467

(1) Soweit der Angeschuldigte freigesprochen, die Eröffnung des Hauptverfahrens gegen ihn abgelehnt oder das Verfahren gegen ihn eingestellt wird, fallen die Auslagen der Staatskasse und die notwendigen Auslagen des Angeschuldigten der Staatskasse zur Last.

(2) Die Kosten des Verfahrens, die der Angeschuldigte durch eine schuldhafte Säumnis verursacht hat, werden ihm auferlegt. Die ihm insoweit entstandenen Auslagen werden der Staatskasse nicht auferlegt.

(3) Die notwendigen Auslagen des Angeschuldigten werden der Staatskasse nicht auferlegt, wenn der Angeschuldigte die Erhebung der öffentlichen Klage dadurch veranlaßt hat, daß er in einer Selbstanzeige vorgetäuscht hat, die ihm zur Last gelegte Tat begangen zu

haben. Das Gericht kann davon absehen, die notwendigen Auslagen des Angeschuldigten der Staatskasse aufzuerlegen, wenn er

1. die Erhebung der öffentlichen Klage dadurch veranlaßt hat, daß er sich selbst in wesentlichen Punkten wahrheitswidrig oder im Widerspruch zu seinen späteren Erklärungen belastet oder wesentliche entlastende Umstände verschwiegen hat, obwohl er sich zur Beschuldigung geäußert hat, oder
2. wegen einer Straftat nur deshalb nicht verurteilt wird, weil ein Verfahrenshindernis besteht.

(4) Stellt das Gericht das Verfahren nach einer Vorschrift ein, die dies nach seinem Ermessen zuläßt, so kann es davon absehen, die notwendigen Auslagen des Angeschuldigten der Staatskasse aufzuerlegen.

(5) Die notwendigen Auslagen des Angeschuldigten werden der Staatskasse nicht auferlegt, wenn das Verfahren nach vorangegangener vorläufiger Einstellung (§ 153a) endgültig eingestellt wird.

Fußnote

§ 467: IdF d. Art. 2 Nr. 25 G v. 24.5.1968 I 503 mit dem GG vereinbar, BVerfGE v. 15.4.1969 I 429 - 1 BvL 20/68 -

§ 467a

(1) Nimmt die Staatsanwaltschaft die öffentliche Klage zurück und stellt sie das Verfahren ein, so hat das Gericht, bei dem die öffentliche Klage erhoben war, auf Antrag der Staatsanwaltschaft oder des Angeschuldigten die diesem erwachsenen notwendigen Auslagen der Staatskasse aufzuerlegen. § 467 Abs. 2 bis 5 gilt sinngemäß.

(2) Die einem Nebenbeteiligten (§ 431 Abs. 1 Satz 1, §§ 442, 444 Abs. 1 Satz 1) erwachsenen notwendigen Auslagen kann das Gericht in den Fällen des Absatzes 1 Satz 1 auf Antrag der Staatsanwaltschaft oder des Nebenbeteiligten der Staatskasse oder einem anderen Beteiligten auferlegen.

(3) Die Entscheidung nach den Absätzen 1 und 2 ist unanfechtbar.

§ 468

Bei wechselseitigen Beleidigungen wird die Verurteilung eines oder beider Teile in die Kosten dadurch nicht ausgeschlossen, daß einer oder beide für straffrei erklärt werden.

§ 469

(1) Ist ein, wenn auch nur außergerichtliches Verfahren durch eine vorsätzlich oder leichtfertig erstattete unwahre Anzeige veranlaßt worden, so hat das Gericht dem Anzeigenden, nachdem er gehört worden ist, die Kosten des Verfahrens und die dem Beschuldigten erwachsenen notwendigen Auslagen aufzuerlegen. Die einem Nebenbeteiligten (§ 431 Abs. 1 Satz 1, §§ 442, 444 Abs. 1 Satz 1) erwachsenen notwendigen Auslagen kann das Gericht dem Anzeigenden auferlegen.

(2) War noch kein Gericht mit der Sache befaßt, so ergeht die Entscheidung auf Antrag der Staatsanwaltschaft durch das Gericht, das für die Eröffnung des Hauptverfahrens zuständig gewesen wäre.

(3) Die Entscheidung nach den Absätzen 1 und 2 ist unanfechtbar.

§ 470

Wird das Verfahren wegen Zurücknahme des Antrags, durch den es bedingt war, eingestellt, so hat der Antragsteller die Kosten sowie die dem Beschuldigten und einem Nebenbeteiligten (§ 431 Abs. 1 Satz 1, §§ 442, 444 Abs. 1 Satz 1) erwachsenen notwendigen Auslagen zu tragen. Sie können dem Angeklagten oder einem Nebenbeteiligten auferlegt werden, soweit er sich zur Übernahme bereit erklärt, der Staatskasse, soweit es unbillig wäre, die Beteiligten damit zu belasten.

§ 471

(1) In einem Verfahren auf erhobene Privatklage hat der Verurteilte auch die dem Privatkläger erwachsenen notwendigen Auslagen zu erstatten.

(2) Wird die Klage gegen den Beschuldigten zurückgewiesen oder wird dieser freigesprochen oder wird das Verfahren eingestellt, so fallen dem Privatkläger die Kosten des Verfahrens

sowie die dem Beschuldigten erwachsenen notwendigen Auslagen zur Last.

(3) Das Gericht kann die Kosten des Verfahrens und die notwendigen Auslagen der Beteiligten angemessen verteilen oder nach pflichtgemäßem Ermessen einem der Beteiligten auferlegen, wenn

1. es den Anträgen des Privatklägers nur zum Teil entsprochen hat;
2. es das Verfahren nach § 383 Abs. 2 (§ 390 Abs. 5) wegen Geringfügigkeit eingestellt hat;
3. Widerklage erhoben worden ist.

(4) Mehrere Privatkläger haften als Gesamtschuldner. Das gleiche gilt hinsichtlich der Haftung mehrerer Beschuldigter für die dem Privatkläger erwachsenen notwendigen Auslagen.

§ 472

(1) Die dem Nebenkläger erwachsenen notwendigen Auslagen sind dem Angeklagten aufzuerlegen, wenn er wegen einer Tat verurteilt wird, die den Nebenkläger betrifft. Hiervon kann ganz oder teilweise abgesehen werden, soweit es unbillig wäre, den Angeklagten damit zu belasten.

(2) Stellt das Gericht das Verfahren nach einer Vorschrift, die dies nach seinem Ermessen zuläßt, ein, so kann es die in Absatz 1 genannten notwendigen Auslagen ganz oder teilweise dem Angeschuldigten auferlegen, soweit dies aus besonderen Gründen der Billigkeit entspricht. Stellt das Gericht das Verfahren nach vorangegangener vorläufiger Einstellung (§ 153a) endgültig ein, gilt Absatz 1 entsprechend.

(3) Die Absätze 1 und 2 gelten entsprechend für die notwendigen Auslagen, die einem zum Anschluß als Nebenkläger Berechtigten in Wahrnehmung seiner Befugnisse nach § 406g erwachsen sind. Gleiches gilt für die notwendigen Auslagen eines Privatklägers, wenn die Staatsanwaltschaft nach § 377 Abs. 2 die Verfolgung übernommen hat.

(4) § 471 Abs. 4 Satz 2 gilt entsprechend.

§ 472a

(1) Soweit dem Antrag auf Zuerkennung eines aus der Straftat erwachsenen Anspruchs stattgegeben wird, hat der Angeklagte auch die dadurch entstandenen besonderen Kosten und die notwendigen Auslagen des Verletzten zu tragen.

(2) Sieht das Gericht von der Entscheidung über den Antrag ab, wird ein Teil des Anspruchs dem Verletzten nicht zuerkannt oder nimmt der Verletzte den Antrag zurück, so entscheidet das Gericht nach pflichtgemäßem Ermessen, wer die insoweit entstandenen gerichtlichen Auslagen und die insoweit den Beteiligten erwachsenen notwendigen Auslagen trägt. Die gerichtlichen Auslagen können der Staatskasse auferlegt werden, soweit es unbillig wäre, die Beteiligten damit zu belasten.

§ 472b

(1) Wird der Verfall, die Einziehung, der Vorbehalt der Einziehung, die Vernichtung, Unbrauchbarmachung oder Beseitigung eines gesetzwidrigen Zustandes angeordnet, so können dem Nebenbeteiligten die durch seine Beteiligung erwachsenen besonderen Kosten auferlegt werden. Die dem Nebenbeteiligten erwachsenen notwendigen Auslagen können, soweit es der Billigkeit entspricht, dem Angeklagten, im selbständigen Verfahren auch einem anderen Nebenbeteiligten auferlegt werden.

(2) Wird eine Geldbuße gegen eine juristische Person oder eine Personenvereinigung festgesetzt, so hat diese die Kosten des Verfahrens entsprechend den §§ 465, 466 zu tragen.

(3) Wird von der Anordnung einer der in Absatz 1 Satz 1 bezeichneten Nebenfolgen oder der Festsetzung einer Geldbuße gegen eine juristische Person oder eine Personenvereinigung abgesehen, so können die dem Nebenbeteiligten erwachsenen notwendigen Auslagen der Staatskasse oder einem anderen Beteiligten auferlegt werden.

§ 473

(1) Die Kosten eines zurückgenommenen oder erfolglos eingelegten Rechtsmittels treffen den, der es eingelegt hat. Hat der Beschuldigte das Rechtsmittel erfolglos eingelegt oder zurückgenommen, so sind ihm die dadurch dem Nebenkläger oder dem zum Anschluß als Nebenkläger Berechtigten in Wahrnehmung seiner Befugnisse nach § 406g erwachsenen notwendigen Auslagen aufzuerlegen. Hat im Falle des Satzes 1 allein der Nebenkläger ein Rechtsmittel eingelegt oder durchgeführt, so sind ihm die dadurch erwachsenen notwendigen

Auslagen des Beschuldigten aufzuerlegen. Für die Kosten des Rechtsmittels und die notwendigen Auslagen der Beteiligten gilt § 472a Abs. 2 entsprechend, wenn eine zulässig erhobene sofortige Beschwerde nach § 406a Abs. 1 Satz 1 durch eine den Rechtszug abschließende Entscheidung unzulässig geworden ist.

(2) Hat im Falle des Absatzes 1 die Staatsanwaltschaft das Rechtsmittel zuungunsten des Beschuldigten oder eines Nebenbeteiligten (§ 431 Abs. 1 Satz 1, §§ 442, 444 Abs. 1 Satz 1) eingelegt, so sind die ihm erwachsenen notwendigen Auslagen der Staatskasse aufzuerlegen. Dasselbe gilt, wenn das von der Staatsanwaltschaft zugunsten des Beschuldigten oder eines Nebenbeteiligten eingelegte Rechtsmittel Erfolg hat.

(3) Hat der Beschuldigte oder ein anderer Beteiligter das Rechtsmittel auf bestimmte Beschwerdepunkte beschränkt und hat ein solches Rechtsmittel Erfolg, so sind die notwendigen Auslagen des Beteiligten der Staatskasse aufzuerlegen.

(4) Hat das Rechtsmittel teilweise Erfolg, so hat das Gericht die Gebühr zu ermäßigen und die entstandenen Auslagen teilweise oder auch ganz der Staatskasse aufzuerlegen, soweit es unbillig wäre, die Beteiligten damit zu belasten. Dies gilt entsprechend für die notwendigen Auslagen der Beteiligten.

(5) Ein Rechtsmittel gilt als erfolglos, soweit eine Anordnung nach § 69 Abs. 1 oder § 69b Abs. 1 des Strafgesetzbuches nur deshalb nicht aufrechterhalten wird, weil ihre Voraussetzungen wegen der Dauer einer vorläufigen Entziehung der Fahrerlaubnis (§ 111a Abs. 1) oder einer Verwahrung, Sicherstellung oder Beschlagnahme des Führerscheins (§ 69a Abs. 6 des Strafgesetzbuches) nicht mehr vorliegen.

(6) Die Absätze 1 bis 4 gelten entsprechend für die Kosten und die notwendigen Auslagen, die durch einen Antrag

1. auf Wiederaufnahme des durch ein rechtskräftiges Urteil abgeschlossenen Verfahrens oder
2. auf ein Nachverfahren (§ 439)

verursacht worden sind.

(7) Die Kosten der Wiedereinsetzung in den vorigen Stand fallen dem Antragsteller zur Last, soweit sie nicht durch einen unbegründeten Widerspruch des Gegners entstanden sind.

§ 473a

Hat das Gericht auf Antrag des Betroffenen in einer gesonderten Entscheidung über die Rechtmäßigkeit einer Ermittlungsmaßnahme oder ihres Vollzuges zu befinden, bestimmt es zugleich, von wem die Kosten und die notwendigen Auslagen der Beteiligten zu tragen sind. Diese sind, soweit die Maßnahme oder ihr Vollzug für rechtswidrig erklärt wird, der Staatskasse, im Übrigen dem Antragsteller aufzuerlegen. § 304 Absatz 3 und § 464 Absatz 3 Satz 1 gelten entsprechend.

Achtes Buch
Erteilung von Auskünften und Akteneinsicht, sonstige Verwendung von Daten für verfahrensübergreifende Zwecke, Dateiregelungen, länderübergreifendes staatsanwaltschaftliches Verfahrensregister

Erster Abschnitt
Erteilung von Auskünften und Akteneinsicht, sonstige Verwendung von Daten für verfahrensübergreifende Zwecke

§ 474

(1) Gerichte, Staatsanwaltschaften und andere Justizbehörden erhalten Akteneinsicht, wenn dies für Zwecke der Rechtspflege erforderlich ist.

(2) Im Übrigen sind Auskünfte aus Akten an öffentliche Stellen zulässig, soweit

1. die Auskünfte zur Feststellung, Durchsetzung oder zur Abwehr von Rechtsansprüchen im Zusammenhang mit der Straftat erforderlich sind,
2. diesen Stellen in sonstigen Fällen auf Grund einer besonderen Vorschrift von Amts wegen personenbezogene Daten aus Strafverfahren übermittelt werden dürfen oder soweit nach einer Übermittlung von Amts wegen die Übermittlung weiterer personenbezogener Daten zur Aufgabenerfüllung erforderlich ist oder
3. die Auskünfte zur Vorbereitung von Maßnahmen erforderlich sind, nach deren Erlass

auf Grund einer besonderen Vorschrift von Amts wegen personenbezogene Daten aus Strafverfahren an diese Stellen übermittelt werden dürfen.

Die Erteilung von Auskünften an die Nachrichtendienste richtet sich nach § 18 des Bundesverfassungsschutzgesetzes, § 10 des MAD-Gesetzes und § 8 des BND-Gesetzes sowie den entsprechenden landesrechtlichen Vorschriften.

(3) Unter den Voraussetzungen des Absatzes 2 kann Akteneinsicht gewährt werden, wenn die Erteilung von Auskünften einen unverhältnismäßigen Aufwand erfordern würde oder die Akteneinsicht begehrende Stelle unter Angabe von Gründen erklärt, dass die Erteilung einer Auskunft zur Erfüllung ihrer Aufgabe nicht ausreichen würde.

(4) Unter den Voraussetzungen der Absätze 1 oder 3 können amtlich verwahrte Beweisstücke besichtigt werden.

(5) Akten können in den Fällen der Absätze 1 und 3 zur Einsichtnahme übersandt werden.

(6) Landesgesetzliche Regelungen, die parlamentarischen Ausschüssen ein Recht auf Akteneinsicht einräumen, bleiben unberührt.

§ 475

(1) Für eine Privatperson und für sonstige Stellen kann, unbeschadet der Vorschrift des § 406e, ein Rechtsanwalt Auskünfte aus Akten erhalten, die dem Gericht vorliegen oder diesem im Falle der Erhebung der öffentlichen Klage vorzulegen wären, soweit er hierfür ein berechtigtes Interesse darlegt. Auskünfte sind zu versagen, wenn der hiervon Betroffene ein schutzwürdiges Interesse an der Versagung hat.

(2) Unter den Voraussetzungen des Absatzes 1 kann Akteneinsicht gewährt werden, wenn die Erteilung von Auskünften einen unverhältnismäßigen Aufwand erfordern oder nach Darlegung dessen, der Akteneinsicht begehrt, zur Wahrnehmung des berechtigen Interesses nicht ausreichen würde.

(3) Unter den Voraussetzungen des Absatzes 2 können amtlich verwahrte Beweisstücke besichtigt werden. Auf Antrag können dem Rechtsanwalt, soweit Akteneinsicht gewährt wird und nicht wichtige Gründe entgegenstehen, die Akten mit Ausnahme der Beweisstücke in seine Geschäftsräume oder seine Wohnung mitgegeben werden. Die

Entscheidung ist nicht anfechtbar.

(4) Unter den Voraussetzungen des Absatzes 1 können auch Privatpersonen und sonstigen Stellen Auskünfte aus den Akten erteilt werden.

§ 476

(1) Die Übermittlung personenbezogener Daten in Akten an Hochschulen, andere Einrichtungen, die wissenschaftliche Forschung betreiben, und öffentliche Stellen ist zulässig, soweit

1. dies für die Durchführung bestimmter wissenschaftlicher Forschungsarbeiten erforderlich ist,
2. eine Nutzung anonymisierter Daten zu diesem Zweck nicht möglich oder die Anonymisierung mit einem unverhältnismäßigen Aufwand verbunden ist und
3. das öffentliche Interesse an der Forschungsarbeit das schutzwürdige Interesse des Betroffenen an dem Ausschluss der Übermittlung erheblich überwiegt.

Bei der Abwägung nach Satz 1 Nr. 3 ist im Rahmen des öffentlichen Interesses das wissenschaftliche Interesse an dem Forschungsvorhaben besonders zu berücksichtigen.

(2) Die Übermittlung der Daten erfolgt durch Erteilung von Auskünften, wenn hierdurch der Zweck der Forschungsarbeit erreicht werden kann und die Erteilung keinen unverhältnismäßigen Aufwand erfordert. Andernfalls kann auch Akteneinsicht gewährt werden. Die Akten können zur Einsichtnahme übersandt werden.

(3) Personenbezogene Daten werden nur an solche Personen übermittelt, die Amtsträger oder für den öffentlichen Dienst besonders Verpflichtete sind oder die zur Geheimhaltung verpflichtet worden sind. § 1 Abs. 2, 3 und 4 Nr. 2 des Verpflichtungsgesetzes findet auf die Verpflichtung zur Geheimhaltung entsprechende Anwendung.

(4) Die personenbezogenen Daten dürfen nur für die Forschungsarbeit verwendet werden, für die sie übermittelt worden sind. Die Verwendung für andere Forschungsarbeiten oder die Weitergabe richtet sich nach den Absätzen 1 bis 3 und bedarf der Zustimmung der Stelle, die die Übermittlung der Daten angeordnet hat.

(5) Die Daten sind gegen unbefugte Kenntnisnahme durch Dritte zu schützen. Die

wissenschaftliche Forschung betreibende Stelle hat dafür zu sorgen, dass die Verwendung der personenbezogenen Daten räumlich und organisatorisch getrennt von der Erfüllung solcher Verwaltungsaufgaben oder Geschäftszwecke erfolgt, für die diese Daten gleichfalls von Bedeutung sein können.

(6) Sobald der Forschungszweck es erlaubt, sind die personenbezogenen Daten zu anonymisieren. Solange dies noch nicht möglich ist, sind die Merkmale gesondert aufzubewahren, mit denen Einzelangaben über persönliche oder sachliche Verhältnisse einer bestimmten oder bestimmbaren Person zugeordnet werden können. Sie dürfen mit den Einzelangaben nur zusammengeführt werden, soweit der Forschungszweck dies erfordert.

(7) Wer nach den Absätzen 1 bis 3 personenbezogene Daten erhalten hat, darf diese nur veröffentlichen, wenn dies für die Darstellung von Forschungsergebnissen über Ereignisse der Zeitgeschichte unerlässlich ist. Die Veröffentlichung bedarf der Zustimmung der Stelle, die die Daten übermittelt hat.

(8) Ist der Empfänger eine nichtöffentliche Stelle, finden die Vorschriften des Dritten Abschnitts des Bundesdatenschutzgesetzes auch Anwendung, wenn die Daten nicht in oder aus Dateien verarbeitet werden.

§ 477

(1) Auskünfte können auch durch Überlassung von Abschriften aus den Akten erteilt werden.

(2) Auskünfte aus Akten und Akteneinsicht sind zu versagen, wenn der Übermittlung Zwecke des Strafverfahrens, auch die Gefährdung des Untersuchungszwecks in einem anderen Strafverfahren, oder besondere bundesgesetzliche oder entsprechende landesgesetzliche Verwendungsregelungen entgegenstehen. Ist eine Maßnahme nach diesem Gesetz nur bei Verdacht bestimmter Straftaten zulässig, so dürfen die auf Grund einer solchen Maßnahme erlangten personenbezogenen Daten ohne Einwilligung der von der Maßnahme betroffenen Personen zu Beweiszwecken in anderen Strafverfahren nur zur Aufklärung solcher Straftaten verwendet werden, zu deren Aufklärung eine solche Maßnahme nach diesem Gesetz hätte angeordnet werden dürfen. Darüber hinaus dürfen personenbezogene Daten, die durch eine Maßnahme der in Satz 2 bezeichneten Art erlangt worden sind, ohne

Einwilligung der von der Maßnahme betroffenen Personen nur verwendet werden

1. zur Abwehr einer erheblichen Gefahr für die öffentliche Sicherheit,
2. für die Zwecke, für die eine Übermittlung nach § 18 des Bundesverfassungsschutzgesetzes zulässig ist, sowie
3. nach Maßgabe des § 476.

§ 100d Abs. 5, § 100i Abs. 2 Satz 2 und § 108 Abs. 2 und 3 bleiben unberührt.

(3) In Verfahren, in denen

1. der Angeklagte freigesprochen, die Eröffnung des Hauptverfahrens abgelehnt oder das Verfahren eingestellt wurde oder
2. die Verurteilung nicht in ein Führungszeugnis für Behörden aufgenommen wird und seit der Rechtskraft der Entscheidung mehr als zwei Jahre verstrichen sind,

dürfen Auskünfte aus den Akten und Akteneinsicht an nichtöffentliche Stellen nur gewährt werden, wenn ein rechtliches Interesse an der Kenntnis der Information glaubhaft gemacht ist und der frühere Beschuldigte kein schutzwürdiges Interesse an der Versagung hat.

(4) Die Verantwortung für die Zulässigkeit der Übermittlung trägt der Empfänger, soweit dieser eine öffentliche Stelle oder ein Rechtsanwalt ist. Die übermittelnde Stelle prüft in diesem Falle nur, ob das Übermittlungsersuchen im Rahmen der Aufgaben des Empfängers liegt, es sei denn, dass besonderer Anlass zu einer weitergehenden Prüfung der Zulässigkeit der Übermittlung besteht.

(5) Die nach den §§ 474, 475 erlangten personenbezogenen Daten dürfen nur zu dem Zweck verwendet werden, für den die Auskunft oder Akteneinsicht gewährt wurde. Eine Verwendung für andere Zwecke ist zulässig, wenn dafür Auskunft oder Akteneinsicht gewährt werden dürfte und im Falle des § 475 die Stelle, die Auskunft oder Akteneinsicht gewährt hat, zustimmt. Wird eine Auskunft ohne Einschaltung eines Rechtsanwalts erteilt, so ist auf die Zweckbindung hinzuweisen.

§ 478

(1) Über die Erteilung von Auskünften und die Akteneinsicht entscheidet im vorbereitenden Verfahren und nach rechtskräftigem Abschluss des Verfahrens die Staatsanwaltschaft, im

Übrigen der Vorsitzende des mit der Sache befassten Gerichts. Die Staatsanwaltschaft ist auch nach Erhebung der öffentlichen Klage befugt, Auskünfte zu erteilen. Die Staatsanwaltschaft kann die Behörden des Polizeidienstes, die die Ermittlungen geführt haben oder führen, ermächtigen, in den Fällen des § 475 Akteneinsicht und Auskünfte zu erteilen. Gegen deren Entscheidung kann die Entscheidung der Staatsanwaltschaft eingeholt werden. Die Übermittlung personenbezogener Daten zwischen Behörden des Polizeidienstes oder eine entsprechende Akteneinsicht ist ohne Entscheidung nach Satz 1 zulässig.

(2) Aus beigezogenen Akten, die nicht Aktenbestandteil sind, dürfen Auskünfte nur erteilt werden, wenn der Antragsteller die Zustimmung der Stelle nachweist, um deren Akten es sich handelt; Gleiches gilt für die Akteneinsicht.

(3) In den Fällen des § 475 kann gegen die Entscheidung der Staatsanwaltschaft nach Absatz 1 gerichtliche Entscheidung durch das nach § 162 zuständige Gericht beantragt werden. Die §§ 297 bis 300, 302, 306 bis 309, 311a und 473a gelten entsprechend. Die Entscheidung des Gerichts ist unanfechtbar, solange die Ermittlungen noch nicht abgeschlossen sind. Diese Entscheidungen werden nicht mit Gründen versehen, soweit durch deren Offenlegung der Untersuchungszweck gefährdet werden könnte.

§ 479

(1) Von Amts wegen dürfen personenbezogene Daten aus Strafverfahren Strafverfolgungsbehörden und Strafgerichten für Zwecke der Strafverfolgung sowie den zuständigen Behörden und Gerichten für Zwecke der Verfolgung von Ordnungswidrigkeiten übermittelt werden, soweit diese Daten aus der Sicht der übermittelnden Stelle hierfür erforderlich sind.

(2) Die Übermittlung personenbezogener Daten von Amts wegen aus einem Strafverfahren ist auch zulässig, wenn die Kenntnis der Daten aus der Sicht der übermittelnden Stelle erforderlich ist für

1. die Vollstreckung von Strafen oder von Maßnahmen im Sinne des § 11 Abs. 1 Nr. 8 des Strafgesetzbuches oder die Vollstreckung oder Durchführung von Erziehungsmaßregeln oder Zuchtmitteln im Sinne des Jugendgerichtsgesetzes,
2. den Vollzug von freiheitsentziehenden Maßnahmen,

3. Entscheidungen in Strafsachen, insbesondere über die Strafaussetzung zur Bewährung oder deren Widerruf, in Bußgeld- oder Gnadensachen.

(3) § 477 Abs. 1, 2 und 5 sowie § 478 Abs. 1 und 2 gelten entsprechend; die Verantwortung für die Zulässigkeit der Übermittlung trägt die übermittelnde Stelle.

§ 480

Besondere gesetzliche Bestimmungen, die die Übermittlung personenbezogener Daten aus Strafverfahren anordnen oder erlauben, bleiben unberührt.

§ 481

(1) Die Polizeibehörden dürfen nach Maßgabe der Polizeigesetze personenbezogene Daten aus Strafverfahren verwenden. Zu den dort genannten Zwecken dürfen Strafverfolgungsbehörden an Polizeibehörden personenbezogene Daten aus Strafverfahren übermitteln. Die Sätze 1 und 2 gelten nicht in den Fällen, in denen die Polizei ausschließlich zum Schutz privater Rechte tätig wird.

(2) Die Verwendung ist unzulässig, soweit besondere bundesgesetzliche oder entsprechende landesgesetzliche Verwendungsregelungen entgegenstehen.

§ 482

(1) Die Staatsanwaltschaft teilt der Polizeibehörde, die mit der Angelegenheit befasst war, ihr Aktenzeichen mit.

(2) Sie unterrichtet die Polizeibehörde in den Fällen des Absatzes 1 über den Ausgang des Verfahrens durch Mitteilung der Entscheidungsformel, der entscheidenden Stelle sowie des Datums und der Art der Entscheidung. Die Übersendung eines Abdrucks der Mitteilung zum Bundeszentralregister ist zulässig, im Falle des Erforderns auch des Urteils oder einer mit Gründen versehenen Einstellungsentscheidung.

(3) In Verfahren gegen Unbekannt sowie bei Verkehrsstrafsachen, soweit sie nicht unter die §§ 142, 315 bis 315c des Strafgesetzbuches fallen, wird der Ausgang des Verfahrens nach Absatz 2 von Amts wegen nicht mitgeteilt.

(4) Wird ein Urteil übersandt, das angefochten worden ist, so ist anzugeben, wer Rechtsmittel eingelegt hat.

Zweiter Abschnitt
Dateiregelungen

§ 483

(1) Gerichte, Strafverfolgungsbehörden einschließlich Vollstreckungsbehörden, Bewährungshelfer, Aufsichtsstellen bei Führungsaufsicht und die Gerichtshilfe dürfen personenbezogene Daten in Dateien speichern, verändern und nutzen, soweit dies für Zwecke des Strafverfahrens erforderlich ist.

(2) Die Daten dürfen auch für andere Strafverfahren, die internationale Rechtshilfe in Strafsachen und Gnadensachen genutzt werden.

(3) Erfolgt in einer Datei der Polizei die Speicherung zusammen mit Daten, deren Speicherung sich nach den Polizeigesetzen richtet, so ist für die Verarbeitung und Nutzung personenbezogener Daten und die Rechte der Betroffenen das für die speichernde Stelle geltende Recht maßgeblich.

§ 484

(1) Strafverfolgungsbehörden dürfen für Zwecke künftiger Strafverfahren

1. die Personendaten des Beschuldigten und, soweit erforderlich, andere zur Identifizierung geeignete Merkmale,
2. die zuständige Stelle und das Aktenzeichen,
3. die nähere Bezeichnung der Straftaten, insbesondere die Tatzeiten, die Tatorte und die Höhe etwaiger Schäden,
4. die Tatvorwürfe durch Angabe der gesetzlichen Vorschriften,
5. die Einleitung des Verfahrens sowie die Verfahrenserledigungen bei der Staatsanwaltschaft und bei Gericht nebst Angabe der gesetzlichen Vorschriften

in Dateien speichern, verändern und nutzen.

(2) Weitere personenbezogene Daten von Beschuldigten und Tatbeteiligten dürfen sie in Dateien nur speichern, verändern und nutzen, soweit dies erforderlich ist, weil wegen der Art oder Ausführung der Tat, der Persönlichkeit des Beschuldigten oder Tatbeteiligten oder sonstiger Erkenntnisse Grund zu der Annahme besteht, dass weitere Strafverfahren gegen den Beschuldigten zu führen sind. Wird der Beschuldigte rechtskräftig freigesprochen, die Eröffnung des Hauptverfahrens gegen ihn unanfechtbar abgelehnt oder das Verfahren nicht nur vorläufig eingestellt, so ist die Speicherung, Veränderung und Nutzung nach Satz 1 unzulässig, wenn sich aus den Gründen der Entscheidung ergibt, dass der Betroffene die Tat nicht oder nicht rechtswidrig begangen hat.

(3) Das Bundesministerium der Justiz und die Landesregierungen bestimmen für ihren jeweiligen Geschäftsbereich durch Rechtsverordnung das Nähere über die Art der Daten, die nach Absatz 2 für Zwecke künftiger Strafverfahren gespeichert werden dürfen. Dies gilt nicht für Daten in Dateien, die nur vorübergehend vorgehalten und innerhalb von drei Monaten nach ihrer Erstellung gelöscht werden. Die Landesregierungen können die Ermächtigung durch Rechtsverordnung auf die zuständigen Landesministerien übertragen.

(4) Die Verwendung personenbezogener Daten, die für Zwecke künftiger Strafverfahren in Dateien der Polizei gespeichert sind oder werden, richtet sich, ausgenommen die Verwendung für Zwecke eines Strafverfahrens, nach den Polizeigesetzen.

§ 485

Gerichte, Strafverfolgungsbehörden einschließlich Vollstreckungsbehörden, Bewährungshelfer, Aufsichtsstellen bei Führungsaufsicht und die Gerichtshilfe dürfen personenbezogene Daten in Dateien speichern, verändern und nutzen, soweit dies für Zwecke der Vorgangsverwaltung erforderlich ist. Eine Nutzung für die in § 483 bezeichneten Zwecke ist zulässig. Eine Nutzung für die in § 484 bezeichneten Zwecke ist zulässig, soweit die Speicherung auch nach dieser Vorschrift zulässig wäre. § 483 Abs. 3 ist entsprechend anwendbar.

§ 486

(1) Die personenbezogenen Daten können für die in den §§ 483 bis 485 genannten Stellen in

gemeinsamen Dateien gespeichert werden.

(2) Bei länderübergreifenden gemeinsamen Dateien gilt für Schadenersatzansprüche eines Betroffenen § 8 des Bundesdatenschutzgesetzes entsprechend.

§ 487

(1) Die nach den §§ 483 bis 485 gespeicherten Daten dürfen den zuständigen Stellen übermittelt werden, soweit dies für die in diesen Vorschriften genannten Zwecke, für Zwecke eines Gnadenverfahrens oder der internationalen Rechtshilfe in Strafsachen erforderlich ist. § 477 Abs. 2 und § 485 Satz 3 gelten entsprechend.

(2) Außerdem kann Auskunft aus einer Datei erteilt werden, soweit nach den Vorschriften dieses Gesetzes Akteneinsicht oder Auskunft aus den Akten gewährt werden könnte. Entsprechendes gilt für Mitteilungen nach den §§ 479, 480 und 481 Abs. 1 Satz 2.

(3) Die Verantwortung für die Zulässigkeit der Übermittlung trägt die übermittelnde Stelle. Erfolgt die Übermittlung auf Ersuchen des Empfängers, trägt dieser die Verantwortung. In diesem Falle prüft die übermittelnde Stelle nur, ob das Übermittlungsersuchen im Rahmen der Aufgaben des Empfängers liegt, es sei denn, dass besonderer Anlass zu einer weitergehenden Prüfung der Zulässigkeit der Übermittlung besteht.

(4) Die nach den §§ 483 bis 485 gespeicherten Daten dürfen auch für wissenschaftliche Zwecke übermittelt werden. § 476 gilt entsprechend.

(5) Besondere gesetzliche Bestimmungen, die die Übermittlung von Daten aus einem Strafverfahren anordnen oder erlauben, bleiben unberührt.

(6) Die Daten dürfen nur zu dem Zweck verwendet werden, für den sie übermittelt worden sind. Eine Verwendung für andere Zwecke ist zulässig, soweit die Daten auch dafür hätten übermittelt werden dürfen.

§ 488

(1) Die Einrichtung eines automatisierten Abrufverfahrens oder eines automatisierten Anfrage- und Auskunftsverfahrens ist für Übermittlungen nach § 487 Abs. 1 zwischen den in § 483 Abs. 1 genannten Stellen zulässig, soweit diese Form der Datenübermittlung unter

Berücksichtigung der schutzwürdigen Interessen der Betroffenen wegen der Vielzahl der Übermittlungen oder wegen ihrer besonderen Eilbedürftigkeit angemessen ist. Die beteiligten Stellen haben zu gewährleisten, dass dem jeweiligen Stand der Technik entsprechende Maßnahmen zur Sicherstellung von Datenschutz und Datensicherheit getroffen werden, die insbesondere die Vertraulichkeit und Unversehrtheit der Daten gewährleisten; im Falle der Nutzung allgemein zugänglicher Netze sind dem jeweiligen Stand der Technik entsprechende Verschlüsselungsverfahren anzuwenden.

(2) Für die Festlegung zur Einrichtung eines automatisierten Abrufverfahrens gilt § 10 Abs. 2 des Bundesdatenschutzgesetzes entsprechend. Diese bedarf der Zustimmung der für die speichernde und die abrufende Stelle jeweils zuständigen Bundes- und Landesministerien. Die speichernde Stelle übersendet die Festlegungen der Stelle, die für die Kontrolle der Einhaltung der Vorschriften über den Datenschutz bei öffentlichen Stellen zuständig ist.

(3) Die Verantwortung für die Zulässigkeit des einzelnen Abrufs trägt der Empfänger. Die speichernde Stelle prüft die Zulässigkeit der Abrufe nur, wenn dazu Anlass besteht. Die speichernde Stelle hat zu gewährleisten, dass die Übermittlung personenbezogener Daten zumindest durch geeignete Stichprobenverfahren festgestellt und überprüft werden kann. Sie soll bei jedem zehnten Abruf zumindest den Zeitpunkt, die abgerufenen Daten, die Kennung der abrufenden Stelle und das Aktenzeichen des Empfängers protokollieren. Die Protokolldaten dürfen nur für die Kontrolle der Zulässigkeit der Abrufe verwendet werden und sind nach zwölf Monaten zu löschen.

§ 489

(1) Personenbezogene Daten in Dateien sind zu berichtigen, wenn sie unrichtig sind.

(2) Sie sind zu löschen, wenn ihre Speicherung unzulässig ist oder sich aus Anlass einer Einzelfallbearbeitung ergibt, dass die Kenntnis der Daten für die in den §§ 483, 484, 485 jeweils bezeichneten Zwecke nicht mehr erforderlich ist. Es sind ferner zu löschen

1. nach § 483 gespeicherte Daten mit der Erledigung des Verfahrens, soweit ihre Speicherung nicht nach den §§ 484, 485 zulässig ist,
2. nach § 484 gespeicherte Daten, soweit die Prüfung nach Absatz 4 ergibt, dass die

Kenntnis der Daten für den in § 484 bezeichneten Zweck nicht mehr erforderlich ist und ihre Speicherung nicht nach § 485 zulässig ist,

3. nach § 485 gespeicherte Daten, sobald ihre Speicherung zur Vorgangsverwaltung nicht mehr erforderlich ist.

(3) Als Erledigung des Verfahrens gilt die Erledigung bei der Staatsanwaltschaft oder, sofern die öffentliche Klage erhoben wurde, bei Gericht. Ist eine Strafe oder eine sonstige Sanktion angeordnet worden, ist der Abschluss der Vollstreckung oder der Erlass maßgeblich. Wird das Verfahren eingestellt und hindert die Einstellung die Wiederaufnahme der Verfolgung nicht, so ist das Verfahren mit Eintritt der Verjährung als erledigt anzusehen.

(4) Die speichernde Stelle prüft nach festgesetzten Fristen, ob nach § 484 gespeicherte Daten zu löschen sind. Die Frist beträgt

1. bei Beschuldigten, die zur Zeit der Tat das achtzehnte Lebensjahr vollendet hatten, zehn Jahre,
2. bei Jugendlichen fünf Jahre,
3. in den Fällen des rechtskräftigen Freispruchs, der unanfechtbaren Ablehnung der Eröffnung des Hauptverfahrens und der nicht nur vorläufigen Verfahrenseinstellung drei Jahre,
4. bei nach § 484 Abs. 1 gespeicherten Personen, die zur Tatzeit nicht strafmündig waren, zwei Jahre.

(5) Die speichernde Stelle kann in der Errichtungsanordnung nach § 490 kürzere Prüffristen festlegen.

(6) Werden die Daten einer Person für ein weiteres Verfahren in der Datei gespeichert, so unterbleibt die Löschung, bis für alle Eintragungen die Löschungsvoraussetzungen vorliegen. Absatz 2 Satz 1 bleibt unberührt.

(7) An die Stelle einer Löschung tritt eine Sperrung, soweit

1. Grund zu der Annahme besteht, dass schutzwürdige Interessen einer betroffenen Person beeinträchtigt würden,
2. die Daten für laufende Forschungsarbeiten benötigt werden oder
3. eine Löschung wegen der besonderen Art der Speicherung nicht oder nur mit unverhältnismäßigem Aufwand möglich ist.

Personenbezogene Daten sind ferner zu sperren, soweit sie nur zu Zwecken der Datensicherung oder der Datenschutzkontrolle gespeichert sind. Gesperrte Daten dürfen nur für den Zweck verwendet werden, für den die Löschung unterblieben ist. Sie dürfen auch verwendet werden, soweit dies zur Behebung einer bestehenden Beweisnot unerlässlich ist.

(8) Stellt die speichernde Stelle fest, dass unrichtige, zu löschende oder zu sperrende personenbezogene Daten übermittelt worden sind, so ist dem Empfänger die Berichtigung, Löschung oder Sperrung mitzuteilen, wenn dies zur Wahrung schutzwürdiger Interessen des Betroffenen erforderlich ist.

(9) Anstelle der Löschung der Daten sind die Datenträger an ein Staatsarchiv abzugeben, soweit besondere archivrechtliche Regelungen dies vorsehen.

§ 490

Die speichernde Stelle legt für jede automatisierte Datei in einer Errichtungsanordnung mindestens fest:

1. die Bezeichnung der Datei,
2. die Rechtsgrundlage und den Zweck der Datei,
3. den Personenkreis, über den Daten in der Datei verarbeitet werden,
4. die Art der zu verarbeitenden Daten,
5. die Anlieferung oder Eingabe der zu verarbeitenden Daten,
6. die Voraussetzungen, unter denen in der Datei verarbeitete Daten an welche Empfänger und in welchem Verfahren übermittelt werden,
7. Prüffristen und Speicherungsdauer.

Dies gilt nicht für Dateien, die nur vorübergehend vorgehalten und innerhalb von drei Monaten nach ihrer Erstellung gelöscht werden.

§ 491

(1) Dem Betroffenen ist, soweit die Erteilung oder Versagung von Auskünften in diesem Gesetz nicht besonders geregelt ist, entsprechend § 19 des Bundesdatenschutzgesetzes Auskunft zu erteilen. Auskunft über Verfahren, bei denen die Einleitung des Verfahrens

bei der Staatsanwaltschaft im Zeitpunkt der Beantragung der Auskunft noch nicht mehr als sechs Monate zurückliegt, wird nicht erteilt. Die Staatsanwaltschaft kann die Frist des Satzes 2 auf bis zu 24 Monate verlängern, wenn wegen der Schwierigkeit oder des Umfangs der Ermittlungen im Einzelfall ein Geheimhaltungsbedürfnis fortbesteht. Über eine darüber hinausgehende Verlängerung der Frist entscheidet der Generalstaatsanwalt, in Verfahren der Generalbundesanwaltschaft der Generalbundesanwalt. Die Entscheidungen nach den Sätzen 3 und 4 und die Gründe hierfür sind zu dokumentieren. Der Antragsteller ist unabhängig davon, ob Verfahren gegen ihn geführt werden oder nicht, auf die Regelung in den Sätzen 2 bis 5 hinzuweisen.

(2) Ist der Betroffene bei einer gemeinsamen Datei nicht in der Lage, die speichernde Stelle festzustellen, so kann er sich an jede beteiligte speicherungsberechtigte Stelle wenden. Über die Erteilung einer Auskunft entscheidet diese im Einvernehmen mit der Stelle, die die Daten eingegeben hat.

Dritter Abschnitt
Länderübergreifendes staatsanwaltschaftliches Verfahrensregister

§ 492

(1) Das Bundesamt für Justiz (Registerbehörde) führt ein zentrales staatsanwaltschaftliches Verfahrensregister.

(2) In das Register sind

1. die Personendaten des Beschuldigten und, soweit erforderlich, andere zur Identifizierung geeignete Merkmale,
2. die zuständige Stelle und das Aktenzeichen,
3. die nähere Bezeichnung der Straftaten, insbesondere die Tatzeiten, die Tatorte und die Höhe etwaiger Schäden,
4. die Tatvorwürfe durch Angabe der gesetzlichen Vorschriften,
5. die Einleitung des Verfahrens sowie die Verfahrenserledigungen bei der Staatsanwaltschaft und bei Gericht nebst Angabe der gesetzlichen Vorschriften

einzutragen. Die Daten dürfen nur für Strafverfahren gespeichert und verändert werden.

(3) Die Staatsanwaltschaften teilen die einzutragenden Daten der Registerbehörde zu dem in Absatz 2 Satz 2 genannten Zweck mit. Auskünfte aus dem Verfahrensregister dürfen nur Strafverfolgungsbehörden für Zwecke eines Strafverfahrens erteilt werden. § 5 Abs. 5 Satz 1 Nr. 2 des Waffengesetzes und § 8a Absatz 5 Satz 1 Nummer 2 des Sprengstoffgesetzes bleiben unberührt; die Auskunft über die Eintragung wird insoweit im Einvernehmen mit der Staatsanwaltschaft, die die personenbezogenen Daten zur Eintragung in das Verfahrensregister mitgeteilt hat, erteilt, wenn hiervon eine Gefährdung des Untersuchungszwecks nicht zu besorgen ist.

(4) Die in Absatz 2 Satz 1 Nr. 1 und 2 genannten Daten dürfen nach Maßgabe des § 18 Abs. 3 des Bundesverfassungsschutzgesetzes, auch in Verbindung mit § 10 Abs. 2 des Gesetzes über den Militärischen Abschirmdienst und § 8 Abs. 3 des Gesetzes über den Bundesnachrichtendienst, auf Ersuchen auch an die Verfassungsschutzbehörden des Bundes und der Länder, das Amt für den Militärischen Abschirmdienst und den Bundesnachrichtendienst übermittelt werden. § 18 Abs. 5 Satz 2 des Bundesverfassungsschutzgesetzes gilt entsprechend.

(4a) Kann die Registerbehörde eine Mitteilung oder ein Ersuchen einem Datensatz nicht eindeutig zuordnen, übermittelt sie an die ersuchende Stelle zur Identitätsfeststellung Datensätze zu Personen mit ähnlichen Personalien. Nach erfolgter Identifizierung hat die ersuchende Stelle alle Daten, die sich nicht auf den Betroffenen beziehen, unverzüglich zu löschen. Ist eine Identifizierung nicht möglich, sind alle übermittelten Daten zu löschen. In der Rechtsverordnung nach § 494 Abs. 4 ist die Anzahl der Datensätze, die auf Grund eines Abrufs übermittelt werden dürfen, auf das für eine Identifizierung notwendige Maß zu begrenzen.

(5) Die Verantwortung für die Zulässigkeit der Übermittlung trägt der Empfänger. Die Registerbehörde prüft die Zulässigkeit der Übermittlung nur, wenn besonderer Anlaß hierzu besteht.

(6) Die Daten dürfen unbeschadet des Absatzes 3 Satz 3 und des Absatzes 4 nur in Strafverfahren verwendet werden.

§ 493

(1) Die Übermittlung der Daten erfolgt im Wege eines automatisierten Abrufverfahrens oder eines automatisierten Anfrage- und Auskunftsverfahrens, im Falle einer Störung der Datenfernübertragung oder bei außergewöhnlicher Dringlichkeit telefonisch oder durch Telefax. Die beteiligten Stellen haben zu gewährleisten, dass dem jeweiligen Stand der Technik entsprechende Maßnahmen zur Sicherstellung von Datenschutz und Datensicherheit getroffen werden, die insbesondere die Vertraulichkeit und Unversehrtheit der Daten gewährleisten; im Falle der Nutzung allgemein zugänglicher Netze sind dem jeweiligen Stand der Technik entsprechende Verschlüsselungsverfahren anzuwenden.

(2) Für die Festlegungen zur Einrichtung eines automatisierten Abrufverfahrens findet § 10 Abs. 2 des Bundesdatenschutzgesetzes Anwendung. Die Registerbehörde übersendet die Festlegungen dem Bundesbeauftragten für den Datenschutz.

(3) Die Verantwortung für die Zulässigkeit des einzelnen automatisierten Abrufs trägt der Empfänger. Die Registerbehörde prüft die Zulässigkeit der Abrufe nur, wenn dazu Anlaß besteht. Sie hat bei jedem zehnten Abruf zumindest den Zeitpunkt, die abgerufenen Daten, die Kennung der abrufenden Stelle und das Aktenzeichen des Empfängers zu protokollieren. Die Protokolldaten dürfen nur für die Kontrolle der Zulässigkeit der Abrufe verwendet werden und sind nach sechs Monaten zu löschen.

(4) Die Absätze 2 und 3 gelten für das automatisierte Anfrage- und Auskunftsverfahren entsprechend.

§ 494

(1) Die Daten sind zu berichtigen, wenn sie unrichtig sind. Die zuständige Stelle teilt der Registerbehörde die Unrichtigkeit unverzüglich mit; sie trägt die Verantwortung für die Richtigkeit und die Aktualität der Daten.

(2) Die Daten sind zu löschen,

1. wenn ihre Speicherung unzulässig ist oder
2. sobald sich aus dem Bundeszentralregister ergibt, daß in dem Strafverfahren, aus dem die Daten übermittelt worden sind, eine nach § 20 des Bundeszentralregistergesetzes mitteilungspflichtige gerichtliche Entscheidung oder Verfügung der Strafverfolgungsbehörde

ergangen ist.

Wird der Beschuldigte rechtskräftig freigesprochen, die Eröffnung des Hauptverfahrens gegen ihn unanfechtbar abgelehnt oder das Verfahren nicht nur vorläufig eingestellt, so sind die Daten zwei Jahre nach der Erledigung des Verfahrens zu löschen, es sei denn, vor Eintritt der Löschungsfrist wird ein weiteres Verfahren zur Eintragung in das Verfahrensregister mitgeteilt. In diesem Fall bleiben die Daten gespeichert, bis für alle Eintragungen die Löschungsvoraussetzungen vorliegen. Die Staatsanwaltschaft teilt der Registerbehörde unverzüglich den Eintritt der Löschungsvoraussetzungen oder den Beginn der Löschungsfrist nach Satz 2 mit.

(3) § 489 Abs. 7 und 8 gilt entsprechend.

(4) Das Bundesministerium der Justiz bestimmt durch Rechtsverordnung mit Zustimmung des Bundesrates die näheren Einzelheiten, insbesondere

1. die Art der zu verarbeitenden Daten,
2. die Anlieferung der zu verarbeitenden Daten,
3. die Voraussetzungen, unter denen in der Datei verarbeitete Daten an welche Empfänger und in welchem Verfahren übermittelt werden,
4. die Einrichtung eines automatisierten Abrufverfahrens,
5. die nach § 9 des Bundesdatenschutzgesetzes erforderlichen technischen und organisatorischen Maßnahmen.

§ 495

Dem Betroffenen ist entsprechend § 19 des Bundesdatenschutzgesetzes Auskunft aus dem Verfahrensregister zu erteilen; § 491 Abs. 1 Satz 2 bis 6 gilt entsprechend. Über die Erteilung einer Auskunft entscheidet die Registerbehörde im Einvernehmen mit der Staatsanwaltschaft, die die personenbezogenen Daten zur Eintragung in das Verfahrensregister mitgeteilt hat. Soweit eine Auskunft aus dem Verfahrensregister an eine öffentliche Stelle erteilt wurde und der Betroffene von dieser Stelle Auskunft über die so erhobenen Daten begehrt, entscheidet hierüber diese Stelle im Einvernehmen mit der Staatsanwaltschaft, die die personenbezogenen Daten zur Eintragung in das Verfahrensregister mitgeteilt hat.